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0377-10

2009년도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농림수산식품자료실



0018567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0377-10

2009년도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이용자를 위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09.11.28.)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연차
보고서(제1편부터 제3편)와 수산업 연차보고서
(제4편)를 합본하여 발간함

목 차

제 1 편

2008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제1장 > 경제동향	3
제1절 국내외 경제 동향	3
1. 국내경제 동향	3
가. 경제성장	3
나. 물가와 금리	7
다. 고용과 임금	9
라. 경상수지	10
2. 해외경제 동향	12
가. 경제성장	12
나. 고용 및 물가	12
다. 교역 및 경상수지	13
라. 국제금리 및 환율	13
제2절 농업·농촌경제 동향	15
1. 농업구조	15
가.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15
나. 농경지	16
2. 농가경제	19
가. 소득 동향	19
나. 가계지출 동향	23

다. 처분가능소득 및 잉여	25
라. 농가자산 동향	26
마. 농가부채 동향	26
바. 전업농가/겸업농가의 주요지표	27
사. 주·부업별 지표	28
아. 영농형태별 주요지표	29
자. 경지규모별 주요지표	29
차. 경영주 연령별 주요지표	30
카. 지역별 주요지표	31
3.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31
가. 개 황	31
나.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32
다.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35
4. 농림업 부가가치	37
5. 농업생산성	37
6. 농산물 생산비 및 경영비	39

제2장 > 국내 농식품 수급동향 41

제1절 국내 주요농산물 수급동향	41
1. 식량작물	41
2. 원예·특용작물	44
가. 채소류	44
나. 과실류	45
다. 화훼류	45
라. 특용작물	47
마. 인삼류	49
3. 축산물과 사료작물	49

가. 축산물	49
나. 사료작물	53
제2절 식품 수급동향	55
1. 식품 소비와 식생활의 변화	55
가. 식품비 지출구조의 변화	55
나. 소득계층별 소비지출액 비교	57
다. 식품영양소 수요구조의 변화	58
2. 식품 수요현황	60
가. 1인당 식품공급 현황	60
나. 식품자급률 수준	63
다. 식품 및 영양공급량의 국제비교	64
3. 식품산업 동향	67
가. 식품제조업	67
나. 외식산업	70
제3절 농식품 교역동향	73
1. 농식품 수출입동향	73
가. 수출동향	73
나. 수입동향	75
2. 농식품 남북교역 동향	77
가. 농식품 교역규모	77
나. 농식품 교역동향	77
제3장 > 국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80
제1절 국제 곡물수급과 가격동향	80
1. 국제곡물 수급동향	80
가. 개 요	80

나. 쌀	80
다. 밀	80
라. 옥수수	81
마. 대두	81
2. 국제곡물 가격동향	83
가. 쌀 값 동향	83
나. 밀 값 동향	84
다. 옥수수 값 동향	84
라. 콩 값 동향	85
제2절 주요국가의 농업동향 및 양자간 통상협력	86
1. 주요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86
가. 미국	86
나. 중국	92
다. 일본	96
라.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	100
2. 양자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통상협력	108
가. 미국	109
나. 일본	110
다. 중국	111
라. 캐나다	113
마. 유럽연합	114
바. 중남미 국가	116
사. 아시아·아프리카 국가	117
제3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부문 국제기구 활동	118
1. WTO 활동	118
가. DDA협상 출범에서 홍콩각료회의까지의 추진경과(2001~2005) ..	118
나. 홍콩각료회의 이후 세부원칙안 협상 추진경과(2006~2008) ..	120

2. OECD 활동	122
가. OECD 농업·농촌 및 식품분야 활동 개요	122
나. OECD 중기농업전망	123
다. OECD 회원국 농업·농촌·식품 정책 평가	127
라. OECD 농업위원회 및 관련 작업반 활동	129
3. FAO 활동	130
가. 개 요	130
나. 주요활동	131
다. 우리나라와의 관계	132
4. ASEAN+3 농림수산식품장관회의	135
5. 기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부문 국제기구 활동	139
가. 세계식량계획(WFP)	139
나.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139
다. 아프리카·아시아농촌개발기구(AARDO)	140
6. 농업·환경·무역 연계 논의동향	141
가. OECD 농업환경 합동작업반	141
나. WTO 무역환경위원회 회의	142
다. 다자간 국제환경협약 논의	143
7. WTO/SPS협정 이행관련 논의동향	145
8. 국제농업협력사업	146

제1장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농정추진

기반 강화	151
제1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운영	151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점검·조정	151
제2절 2008년도 예산 중점투자분야 및 자원 확보	155
1. 2008년 예산편성 기본방향 및 규모	155
가. 예산편성 기본방향	155
나. 예산규모	156
2. 농어촌발전특별세 운용	158
제3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사업평가 및 투융자 효율성 제고	158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투융자 현황	158
2. 농업 투융자사업의 평가실시	161
가. 농림사업 성과평가 실시	161
나. 농림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162
다. 지방자치단체 농정 업무평가	162
제4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행정쇄신·조직 개편 및 법령제도 개선	163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행정규제 완화	163
2. 농정조직의 개편	166
가. 신 정부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시 농림수산식품부 발족	166
나. 식품산업 진흥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	166
다.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 소요정원 확보 추진	167

3. 농림분야 법률개정 등 제도개선	167
가. 정부 단독 제출 국회통과 법률	168
나. 의원 단독 발의 국회통과 법률	174
다. 정부 제출 및 의원 동시 발의 국회통과 법률	181
제5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기관 개혁	183
1. 농업협동조합	183
가. 농협개혁 추진	183
나. 일선조합 구조조정 추진	184
2. 한국농어촌공사	186
3. 농수산물유통공사(aT)	188
4. 한국마사회	191
제6절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활동상황	193
1. 농어업특위의 현황	193
2. 2008년도 농어업특위 운영현황	196
가. 본위원회	196
나. 분과위원회	197
제2장 > 2008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시책 추진	199
제1절 친환경농업 식품산업 적극 추진	199
1. 친환경농업의 기반 마련	199
2. 고부가가치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판로확대	200
3. 토양개량사업 추진	201
4. 사료·녹비작물 재배확대	202
가. 사료작물 재배확대	202
나. 녹비작물 재배확대	202
5. 환경친화적 축산기반 구축	203

가. 가축분뇨의 자원화	203
6. 식품산업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205
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205
나.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 추진	206
다. 국가 식품클러스터 조성 추진	209
라. 한식세계화	212
마.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 추진	213
제2절 고품질·안전 농식품 공급	215
1. 우수농산물(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생산기반 조성	215
2. 축산물위생·안전성 수준 제고	216
가. 축산물위생관리 제도개선	216
나.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를 위한 HACCP 제도 추진	217
다. 축산물 수거검사 실시	218
라. 국내 축산물의 잔류물질 검사	219
3. 농산물 안전성 제고 및 표시관리 강화	219
가. 농산물 안전성 제고	219
나. 농림수산물 LMO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220
다. 원산지 표시관리 강화	221
라. 농산물 안전성 강화로 소비자의 안전 식생활 보장	222
4. 가축방역·검역 강화	223
5. 동물보호·복지대책 추진	225
제3절 농업구조의 체질개선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	226
1. 농업구조의 체질개선	226
가. 영농규모화사업 추진	226
나. 경영이양직불제 운영	227
2. 농업생산기반 정비 지속 추진	229

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229
나. 받기반정비사업	230
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32
라. 배수개선사업	233
마.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34
바. 농촌용수 개발사업	234
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및 간척사업	235
아.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	236
3. 농업전문인력 육성	237
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237
나. 농업법인 육성	240
다. 신지식 농업인 육성	244
라. 농업인 교육훈련	245
마. 여성농업인 육성	248
바. 농업벤처 육성	254
사.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256
제4절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258
1. 농업관측제도 기능 강화	258
2. 마케팅지향형 산지유통 혁신	262
가. 공동마케팅조직 등 산지유통주체 육성	262
나.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지속 추진	265
3. 농산물 물류혁신 및 도매시장 운영효율화	266
4. 축산물시장 차별화	268
제5절 농·축산물 수출확대 및 수입관리	269
1. 농·축산물 수출확대 대책	269
가. 수출여건 및 수출현황	269
나. 선진국형 수출 인프라 조성	270

다. 새로운 수출성장동력 확충 및 해외마케팅 전개	270
2. 수입관리 대책	271
가. 시장접근물량의 적절한 수입관리 추진	271
나. 관련법상 탄력관세의 적극 활용	272
다. 동·식물 검역기능 강화	272
제6절 생산자 주도의 농식품 수급조절 강화	273
1. 쌀 협상비준에 따른 쌀산업 국내대책 추진	273
가. 쌀산업발전대책 추진	273
나. 공공비축제 도입 및 정착	274
다. RPC 경영혁신	275
라. 고품질쌀 생산·유통 촉진	277
마.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278
2. 채소·과실류 수급조절능력 강화	279
가. 채소류	279
나. 과일류	281
3. 양돈·양계 수급안정 지원 및 소비홍보 추진	281
4. 가축개량 활성화	283
5. 우유수급 안정대책	286
제7절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추진	289
1.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제 확충	289
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289
나. 친환경농업직불제	291
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293
라. 경관보전직불제 본 사업 실시	294
2. 금융부담 경감과 경영위험 관리강화	296
가. 농가부채 경감대책 추진	296
나.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298

다. 가축공제 운영 내실화	300
라. 재해지원 현실화 추진실적	301
제8절 다양한 농외소득원 확충	301
1.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	301
2. 농공단지 조성	304
3. 향토산업육성 추진	305
4.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	306
5.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307
6.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308
제9절 농촌 활력 증진 및 생활여건 개선	309
1. 농촌의 기초생활환경 개선	309
가.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	309
나. 전원마을 조성사업	310
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311
라.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지원	312
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313
3. 농촌 교육·의료 등 생활여건 개선	315
가. 농업인 복지지원 개선	315
나.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316
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추진	316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확대	317
가.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 구축	317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컨텐츠 확충	318
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강화	319
제10절 농정제도 개혁	321
1. 농지제도 개선	321

2. 농지은행제도 정착 촉진	322
제11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통상대응과 남북협력 추진	324
1. WTO/DDA 협상 대응	324
가. DDA 농산물협상 동향	324
나. DDA 비농산물협상 동향	325
다. DDA 농산물협상 대응	327
라. DDA 비농산물협상 대응	328
2. FTA 농업협상 대책	328
가. 한·미 FTA 협상분야	328
나. 한·EU FTA 협상분야	330
다. 한·아세안 FTA 협상대응	331
라. 한·캐나다 FTA 협상대응	333
마. 한·인도 CEPA 협상대응	333
3.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및 보완	334
가. 추진경과	334
나. 대책의 보완	337
4. 남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협력	338
가. 정부부문	338
나. 민간부문	338

제1장 > 2009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시책방향	343
제1절 2009년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목표	343
제2절 2009년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시책방향	344
1. 협동조합 및 공공기관 개혁	344
2. 농식품 R&D 개편 및 녹색성장 기반조성	345
3. 유통구조 개혁	345
4. 농식품 수출 확대	345
5. 해외농림어업 개발 및 자원확보	346
6. 식품산업 육성	346
7. 농어가 경영안정	346
8. 농어촌 생활 및 복지여건 개선	347
9. 위기극복 및 경제살리기	347
제3절 2009년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부문 예산규모	348
1. 2009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부문 예산편성 방향	348
2. 2009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분야 예산규모	350
제4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시책 추진체계 개선	352
1. 농업·농촌 및 식품사업 사업투·융자 평가 및 효율성 제고 ...	352
가.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352
나. 농림수산사업 성과평가 추진	354
다. 지방자치단체 농정업무평가 시책	357
2. 농식품행정 효율성 제고 및 규제개혁	358
가. 농식품행정 효율성 제고	358
나. 농림수산식품행정 규제완화	359

3. 농림수산물식품부 조직 및 직제제정 추진	362
--------------------------------	-----

제2장 > 2009년도 주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시책

제1절 쌀산업 구조 개편

1. 새로운 양정제도의 정착	364
가. 공공비축제	365
나.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	366
2. 쌀 전업농 육성	367
3. 쌀종합처리장(RPC) 경영혁신	369
가. RPC 경쟁체제 도입	369
나. RPC 건조·저장시설 확충	370
다. 쌀 수탁판매사업 추진	370
라.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371
4.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	371

제2절 농업·농촌 전문인력 양성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372
2. 제2차 농업경영체 활성화방안	374
가. 성장단계별 농업법인 양성 인프라 구축	374
나. 농업법인 투자 유치 및 자금 지원 개선	375
다. 우수 인적 자원 양성 및 유입 촉진	375
3.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376
4. 농업벤처 육성	377
5. 농업교육훈련	378
가. 추진방향	378
나. 주요정책 내용	378
6. 여성농업인 육성	380
가.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촉진	380

나.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382
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	384
라. 여성농업인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385
마. 농촌여성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386
제3절 소비자 지향의 고품질·안전 농식품 공급	388
1. 농산물 안전성 제고	388
가. 우수농산물관리(GAP)제도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조기 정착유도	388
나.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로 부적합품 시장유통 방지	389
다. 농림수산물 LMO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	389
2. 축산물 위생·안전성 관리 강화	390
3.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	391
4. 가축방역·검역 강화	394
5. 가축개량 추진	396
가. 한우개량	396
나. 젃소개량	396
다. 돼지개량	397
라. 닭개량 등	397
6. 가축방역·검역 강화	398
7. 우유 수급안정 대책	403
8. 친환경농업 육성	404
9. 동물보호·복지대책 추진	406
제4절 선진국형 농산물 유통혁신	406
1. 마케팅지향형 산지유통 주체 육성	406
2. 소비자 물류혁신 및 도매시장 운영효율화	409
3. 농식품 수출확대	411

4.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412
5. 시·군 유통회사 설립·운영 지원	413
6.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414
가. 추진배경 및 방향	414
나. 추진여건 조성	415
다. 품목별 대표조직 설립 본격화	416
제5절 식품산업 육성	417
1. 식품산업육성 기반 마련	417
2. 한식세계화	419
3. 동북아 식품시장 허브 역할,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421
4. 전통·발효식품 산업 육성	423
가. 전통·발효식품 산업	423
나. 천일염 산업육성	424
다. 전통주 산업	424
5.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426
제6절 농가소득 및 농업경영 안정제도 강화	428
1. 직접지불제 확충	428
가. 직접지불제 확충 방향	428
나. 쌀소득등보전직불제	429
다. 경영이양직불제	434
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434
마.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435
바. 경관보전직불제	436
사.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도상연습 실시계획 마련	437
2. 재난대비 경영안정장치 강화	438
가.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438
나. 재해농가 지원확충	439

다. 가축공제 운영 내실화	440
라. 농업인 안전공제 추진	441
3. 농업경영회생지원제도 구축	442
가. 농가부채경감대책 추진	442
나.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제도 개선	444
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추진	444
4. 농업정책금융 지원제도 개선	445
가. 추진현황	445
나. 추진계획	447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부문 세제지원	448
가. 추진현황	448
나. 추진계획	451
제7절 농촌 복지 및 지역개발 본격 추진	452
1.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추진	452
2.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 시책 추진	454
가. 도입	454
나. 전원마을조성사업	455
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456
라. 농어촌뉴타운 조성 시범사업 실시	456
3. 농촌형 복지시책 확충	458
가. 사회안전망 확충	458
나.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459
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459
라.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정	459
마.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 추진	461
4.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	461
5. 귀농·귀촌 종합대책 추진	464

가. 개요	464
6. 쾌적한 친환경적 농촌개발	467
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467
나.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468
다.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468
라.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469
마.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지원	470
7. 농어촌자원의 산업화	471
가. 농어촌산업육성 방향	471
나.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	472
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472
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확대	473
가.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 구축	473
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보컨텐츠 확충	474
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강화	475
9. 농업생산기반 확충	476
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476
나. 받기반정비사업	477
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478
라. 수리시설 개·보수	478
마. 배수개선 사업 등 기타 기반정비사업	479
바. 농촌용수개발사업	480
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및 간척사업	481
제8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제도 개혁	483
1. 농지제도 개선	483
2. 농지은행 활성화 추진	484
3. 협동조합 개혁	485

가. 농협 개혁 추진	485
나. 일선조합 구조조정 추진	486
4. 광역클러스터 사업추진	487
5.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493
제9절 DDA·FTA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협상대응	494
1. WTO/DDA 협상대응	494
가. DDA 농산물 협상동향 및 대응	494
나. DDA 비농산물 협상동향 및 대응	496
2. FTA 농업협상 대책	498
가. 한·미 FTA 협상분야	498
나. 한·EU FTA 협상분야	501
다. 한·아세안 FTA 협상분야	511
라. 한·캐나다 FTA 협상분야	511
마. 한·인도 CEPA 협상분야	512
바. 한·GCC FTA 협상분야	514
사. 한·호주 FTA 협상분야	515
아. 한·뉴질랜드 FTA 협상분야	516
3. OECD 활동계획	516
4. FAO 활동	518
가. 개요	518
나. 주요활동	519
다. 우리나라와의 관계	520
5. ASEAN+3 농림장관회의	523
6. 기타 농업관련 국제기구	526
가.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526
나. 아프리카·아시아농촌개발기구(AARDO)	528
7. 양자 농업협력약정 체결	528

8. 남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협력 활성화	530
가. 북한의 식량수급 현황	530
나. 남북 농업교류 및 지원현황	531
다. 남북 농업협력 활성화 방안	535
9. 해외농업개발사업	536
가. 도입 배경 및 필요성	536
나. 과거 사례분석 및 시사점	537
다. 주요 내용	539
제10절 농식품분야 미래성장동력 확충	542
1. 농식품부문 저탄소 녹색성장대책 추진	542
가. 기후변화가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	542
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체계 정비	542
다. 농림수산식품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	543
2. 농림수산식품 분야 R&D 추진체계 개편	544
가. 현황 및 문제점	544
나. R&D 효율화를 위한 추진체계 개편	546
다. R&D 추진체계 개편의 기대효과	548
3. 농림기술개발사업	548
가. 사업개요	548
나. 연구과제 관리현황	549
다. 기술수요조사를 통한 기획과제 발굴	550
라. 완료과제의 성과활용현황	551
4. 농림바이오기술산업화지원사업 추진	552
5. 신성장동력 “고부가 식품산업” 추진	553
가. 추진배경	553
나. 세부추진전략	554
6. 농어업분야 민간투자 기반 확충	555

가. 정부차원의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555
나.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추진	557
제11절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추진	559
1.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출범 배경	559
2. 위원회 구성·운영	560
3. 위원회 활동성과 및 향후 계획	560
4.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출범 의의	563

제1장 > 2008년도 수산업 동향	567
제1절 세계 수산업 동향	567
1. 수산물 생산	567
2. 수산물 교역	568
제2절 우리나라 수산업 동향	571
1. 어업 구조	571
가. 어가인구	571
나. 어업 총생산	574
다. 어선등록 현황	575
라. 이용어장	578
마. 어업 경영체	583
2. 어가 경제	589
가. 어가소득	589
나. 어가 가계지출	591
다. 어가자산	592
라. 어가부채	592
3. 수산물 생산	593
가. 생산동향	593
나. 연근해어업	594
다. 양식어업	599
라. 내수면어업	602
마. 원양어업	603
4. 수산물 수출·입	604

가. 수 출	604
나. 수 입	608
5. 수산물 수급 및 가격	612
가. 수 급	612
나. 소 비	612
다. 가 격	613
6. 어업 및 어장환경	614
가. 어 황	614
나. 자원동향	616
다. 연안어장 환경변화	617

제2장 > 2008년도 수산시책 추진실적 619

제1절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어업관리체제 구축	619
1. 자율관리어업	619
2. 수산자원 조성	621
가. 인공어초시설	621
나. 종묘방류	622
다. 바다목장 조성	625
라. 총 허용어획량제도	626
마. 수산자원관리수면	627
3. 양식어업 육성	628
가. 양식어장 개발	628
나. 환경친화형 양식기반 시설 확충	628
4. 내수면어업 개발	630
5. 어장정화	631
6. 적조대책	631
7.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	633

제2절 신 해양질서에 맞는 연근해어업 재편	635
1. 어업구조조정 및 재편	635
2. 자원관리형 어업생산구조 정착	636
가.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추진	636
나. 연근해 오징어채낚기 집어등 광력기준 하향 조정	636
3. 어업질서확립	637
가. 연근해어업 여건변화와 신 어업질서 확립	637
나. 안전조업 지도	639
다. 어업정보통신국 운영	640
라. 어업질서확립 지도·홍보 강화	641
제3절 수산물 유통개혁과 가공산업 육성	642
1. 수산물 가격안정	642
가. 정부 비축사업	642
나. 민간 가격안정사업	643
다. 수급 및 가격관리 강화	643
2. 유통구조 개선	643
가. 유통시설 확충	643
나. 유통기능 강화	644
3. 수산물 검사·검역	649
가. 수산물검사 강화	649
나. 검사기능의 강화	651
다. 수산동물 검역확대	651
라. 수산동물 검역기능 강화	652
4. 수산물 수출·입 대책	655
가. 수입 개방에 따른 합리적인 수입 관리대책	655
나. 수산물 수출 진흥대책	655

5.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657
가. 가공제품 생산	657
나. 가공산업 지원	658
다. 수산물 품질인증제도 추진	659
제4절 지역 특성에 맞는 어촌어항 개발	661
1. 어촌개발	661
가. 어촌종합개발	661
나. 어촌관광 활성화	664
2. 어항시설 확충	669
가. 어항개발의 개요	669
나. 어항개발 현황	670
다. 어촌을 살기 좋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개발	672
3. 어선기관 대체 및 장비·설비 현대화	672
제5절 어업협력 강화 및 원양어업 육성	673
1. 국제 어업협력 강화	673
가. 연안국과의 어업협력	673
나. 국제 수산기구와의 협력	682
다. 남북수산협력 추진	688
2. 해외어장의 지속적 확보 및 경쟁력 제고	690
가. 기존 어장의 확보	690
나.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	694
다. 해외 신어장 개발	695
라. 연료비 절감을 위한 모델시스템 연구개발	697

제6절 어업인력 육성과 수산기술의 개발·보급	698
1. 어업인력 육성	698
2. 어업인 정보화교육 및 어촌정보화 인프라 구축	699
3. 어촌지역 개발 전문인력 양성	700
4.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로드맵 마련	701
5. 해양환경 연구	702
가. 해양변동 연구	702
나. 해양환경 오염 연구	703
다. 적조대책 연구	703
라. 해파리 대량발생 연구	705
6. 어업자원 조사연구	706
가. 연근해 어업자원 조사연구	706
나. 원양 어업자원 조사연구	707
7. 수산공학기술 개발	707
가. 환경친화적 어구·어법 개발	707
나. 자원관리형 어업기술 개발	708
다. 어업자동화 시스템 기술 개발	709
라. 인공어초에 관한 종합연구	710
8. 양식기술 개발 연구	712
가. 양식기술 및 관리시스템 개발	712
나. 해역별 양식어장의 지속적 이용 및 관리기술 연구	713
다. 고부가 양식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연구	714
라. 양식생물 질병방제기술 개발	715
마. 첨단 생물공학기술의 양식 실용화	716
바. 친환경적 내수면 양식기술개발 및 관리기술 개발	719
9. 수산식품 위생관리기술 개발	720
가.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위생조사	720

나. 수산식품 위생안전 위해관리 연구	720
다. 수산물 고부가가치 산업화 연구	721
10. 수산기술 지도·보급	722
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기술 보급	722
나. 선진어업경영기반 구축	723
11. 수산특정연구개발	723
제7절 어업인 지원 강화	727
1. 수산자금 공급 확대	727
가. 영어자금	727
나. 수협 자체자금	728
2. 어업인 부담 경감	730
가. 어가부채경감대책 추진	730
나. 각종 이차보전	731
다.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	732
3. 수산 관련 세제 개선	733
가. 수산세제 지원 연장	733
나. 수산세제 지원대상 확대	733
4. 수산발전기금 조성·운동	734
5. 어업인정책보험 운영	739
6. 허베이 스피리트 피해어업인 지원단 운영	740
가. 유류오염사고 개요	740
나. 정부 조치 및 지원	742
다. IOPC Fund 측과의 업무추진 현황	745
라. 국제협약과 국내법에 의한 보상 체계	746
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747

제8절 수산업협동조합 개혁 추진	748
1. 일선수협 구조조정	748
가. 일선수협 경영평가 실시	748
나. 부실수협 구조조정	748
다. 일선수협 경영개선자금 지원	749
라. 부실책임조사 실시	749
2. 수협중앙회 경영정상화 추진	750
가. 수협중앙회 경영개선자금 지원	750
나. 신용사업부문의 「BLUE I 0708」 2차년도 운동 전개 ...	750
3. 수협 혁신방안 수립 추진	751

제3장 > 2009년도 수산시책 754

제1절 기본방향	754
1. 수산업의 여건변화	754
2. 중점 추진시책	756
3. 新수산 정책 추진	759

제2절 수산자원 회복 및 자율관리어업 본격 추진	762
1. 수산자원회복 계획	762
가. 수산자원회복계획 단계별 이행	762
나. 총 허용어획량제도 확대	764
다. 인공어초 시설	765
라. 종묘방류 어종의 다양화	767
마. 바다목장 조성	767
2. 자율관리어업	768
3. 낚시 관리 및 육성	770

제3절 연근해 어업 구조개편 및 어업질서확립	771
1.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771
가. 연근해어선 감척	771
나. 연근해어업의 통·폐합 등	773
2. 자원관리형 어업생산구조 정착	773
가.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추진	773
나. 연근해어업 체질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774
다. 연근해어업 총조사 실시	774
라. 어구와 어법에 대한 기준 마련	775
마. 해역별 어업조정제도 마련	775
바. 어업허가 신청시기 일실한 자 구제제도 마련	776
사. 한시어업 제도 도입	777
아. 수산업법 위반시 양벌규정 완화	777
자. 허가어선의 정기적 정비제도 마련	777
차. 어업허가 지위승계시 행정처분 승계 근거 마련	778
3. 불법어업 근절	778
가. 어업질서의 선진화 구현	778
나. 첨단 어업지도선 및 장비 확충	779
다. 어업지도단속체제 개편 및 역량강화	779
라.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 확대 등 어업인 참여 유도	780
제4절 합리적인 수산업·어업인 경영지원 대책 마련	781
1. 시장개방 피해 특별대책 마련	781
가. 수산업 구조조정 본격화	781
나.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	782
다. 수산가공·유통산업의 육성	782
라. 어촌을 살기 좋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개발	783

다. 수산보전제도 도입	784
2. 수산업 경영자금 지원 확대	785
가. 영어자금 공급 및 어업인 금융부담 완화	785
나. 수산발전기금의 생산적 운용	787
3. 수산경영구조 선진화	788
가. 일선수협의 지속적인 경영정상화 추진	788
나. 수협중앙회의 지속적인 경영정상화 추진	789
다. 수협 선진화 추진	791
4. 어업보험 확충	792
가. 어업인 정책보험 확대	792
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사업 확대	793
5.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피해어업인 지원	794
가. 유류오염사고 현황	794
나. 정부조치 및 지원 계획	794
다. IOPC Fund측과의 협의 추진	795

제5절 살기 좋은 어촌모델 개발 기반 구축	796
1. 어촌종합개발사업체계 개편	796
2. 어촌관광 S/W 지원 강화	797
3. 어항시설 확충	798
가. 국가어항	798
나.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	799
4. 어촌어항 관광개발	799
가. 어촌어항관광 조성사업	799
나. 어촌체험마을 조성	800

제6절 어촌전문인력 양성 및 어업인 삶의 질 향상	800
1. 수산경영 전문인력 양성	800
가. 어업인후계자 육성	800
나. 수산계고교 특성화 사업 지원	801
다. 한국농수산대학 내 수산양식학과 설치 운영	801
2. 어촌지역 개발 전문인력 양성	802
3.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로드맵 마련	802
4. 수산직불제 도입기반 마련	803
제7절 안전한 수산물 생산관리체제 강화	805
1. 국내 수산물 위생관리기반 구축	805
2.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 강화	806
3. 수출·입 수산동식물 검역기반 구축	808
제8절 친환경 양식 확대 및 수급조절 기능 강화	809
1. 친환경 양식 생산	809
2. 수급조절 강화	811
3. 어장환경 개선	813
4. 내수면 어업 육성	814
제9절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체계 개선	815
1.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815
2.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816
3. 수산물 가격안정	818
가. 가격안정 사업	818
나. 수급 및 가격관리 강화	819

제10절 국제협상 활동 강화 및 해외수산자원 확보	820
1. WTO-DDA 및 FTA 수산분야 협상대응	820
가. WTO-DDA 수산분야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	820
나. FTA 수산분야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	823
2. 국제 수산기구 및 양국간 협력 강화	826
가. 국제수산기구 협력	826
나. 양국간 어업협력 강화	827
3. 남북수산협력 사업 추진	831
4. 원양어업 육성	832
가. 원양어업의 경쟁력 강화	832
나. 해외어장의 지속적 확보	833
다. 원양업체 경영 지원	834
라. 노후 원양어선 신조 대체	834
마. 해외 신 어장 개발	835
5. 수산물 수출 진흥 및 수입관리	836
가. 수산물 수출 진흥	836
나. 합리적인 수입수산물 관리	838

제 1 편

2008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 제 1 장 경제동향
- 제 2 장 국내 농식품 수급동향
- 제 3 장 국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제1장 경제 동향

제1절 국내외 경제 동향

1. 국내경제 동향

가. 경제성장

2008년 우리 경제는 세계적인 금융불안이 실물경제로 확산되면서 제조업, 서비스업, 농림어업 성장 증가폭이 감소하였고, 경상수지도 적자로 전환되면서 전년대비 2.2% 성장에 그쳤다. 특히 제조업과 전기가스 수도사업, 금융보험업 등에서는 증가세가 유지된 반면, 건설업은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표 1-1-1>

경제활동 부문별 실질경제성장률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P	
GDP	4.0	7.2	2.8	4.6	4.0	5.2	5.1	2.2	
경제활동 동별	건설업	5.4	3.5	8.8	2.0	△0.3	2.2	2.6	△2.4
	농림어업	1.6	△2.2	△5.4	9.1	1.3	1.5	4.0	5.5
	제조업	2.4	8.7	5.4	10.0	6.2	8.1	7.2	3.1
	서비스업	4.7	7.7	1.7	2.4	3.5	4.4	5.1	2.5
광업제조업 재고지수	83.9	83.3	88.4	96.7	101.6	111.0	117.2	125.7	
제조업평균가동율	93.9	97.7	97.6	100.4	100.0	100.3	100.4	96.8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1) 산업별 생산활동

2008년 농림어업은 전년대비 5.5% 성장하였다. 이 중 농업은 전년대비 6.4% 증가하였으며, 어업은 천해양식어업과 원양어업은 감소하였으나,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의 호조로 전년대비 1.5% 증가하였다. 광업은 연탄 및 모래·자갈 생산이 증가하여 1.3% 증가하였다.

<표 1-1-2>

산업별 성장률(2005년 기준)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간	1/4	2/4	3/4	4/4
농 립 어 업	9.1	1.3	1.5	4.0	5.5	7.4	4.4	4.2	6.4
광 업	△0.4	△0.4	△0.1	4.1	1.3	1.9	△2.8	2.7	4.1
제 조 업	10.0	6.2	8.1	7.2	3.1	9.1	8.4	5.6	△9.1
전기 가스 수도사업	6.9	7.4	4.1	3.8	5.1	8.3	3.9	6.2	1.4
건 설 업	8.8	△0.3	2.2	2.6	△2.4	0.8	△1.5	△1.0	△6.3
서 비 스 업	2.4	3.5	4.4	5.1	2.5	4.4	3.3	2.6	△0.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0.1	2.1	4.0	5.2	1.3	3.5	2.8	3.6	△4.2
운수창고 및 통신업	6.3	2.7	5.1	5.5	3.5	6.2	4.9	4.2	△1.2
금 융 보 험 업	△0.1	5.7	4.2	10.8	4.1	9.6	3.3	2.3	1.6
부동산 및 임대업	1.8	3.4	2.2	1.4	1.3	1.5	2.6	1.7	△0.4
국 내 총 생 산	4.6	4.0	5.2	5.1	2.2	5.5	4.3	3.1	△3.4
국 민 총 소 득	3.7	2.0	3.9	4.8	△0.8	3.3	2.3	△2.7	△5.4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제조업은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전년대비 3.1% 성장에 그쳐 상승폭이 둔화되었다. 이는 자동차, 섬유,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등의 생산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은 전년대비 5.1% 증가하여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이는 가스 및 열공급업, 수도업 등의 증가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건설업은 전년대비 2.4% 감소하여 부진하였다. 이는 주거용 건물건설, 비주거용 건물건설 등이 크게 감소하면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서비스업은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운수 및 보관업 등 대부분 서비스업에서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2.5% 성장하였다.

2)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의류 및 신발 등의 지출은 감소하였으나, 의료 및 보건, 오락 문화등의 소비지출이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1.6% 증가하였다. 민간소비는 전년대비 0.9% 증가에 그쳤으나, 정부소비는 전년대비 4.2% 증가하였다.

<표 1-1-3>

소 비 동 향(2005년 기준)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간	1/4	2/4	3/4	4/4
소 비 지 출	1.0	4.6	5.1	5.1	1.6	3.9	2.6	2.0	△1.9
민간소비지출	0.3	4.6	4.7	5.1	0.9	4.0	2.3	1.4	△3.9
정부소비지출	3.8	4.3	6.6	5.4	4.2	3.6	4.0	4.5	4.7

자료 : 한국은행.

3) 저축 및 투자

2008년 총저축률은 전년대비 0.1% 포인트 하락한 30.7%를 기록하였다. 민간총저축률은 전년대비 1.1% 포인트 상승하였으며 정부총저축률은 전년보다 1.2% 하락한 9.4%를 기록하였다.

2008년 총투자율은 31.2%로 전년보다 1.7% 포인트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재원자립도는 전년대비 6.2% 포인트 하락하여 외부자금 유입이 많았음을 나타냈다.

<표 1-1-4>

총저축률 및 총투자율 추이(2005년 기준)

(단위 :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p
총 저 축 률	34.0	32.1	30.8	30.8	30.7
민 간	24.3	22.2	20.8	20.2	21.3
일 반 정 부	9.8	9.8	10.0	10.6	9.4
국 내 총 투 자 율	29.9	29.8	29.7	29.5	31.2
투 자 재 원 자 립 도	113.7	107.6	103.8	104.6	98.4

자료 : 한국은행.

총고정자본 형성은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감소로 전년대비 1.7% 감소하였다. 이는 운수장비와 토목건설 부문은 증가하였으나, 기계류와 건물건설 부문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표 1-1-5>

투자지출 동향(2005년 기준)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간	1/4	2/4	3/4	4/4
총고정자본형성	2.1	1.9	3.4	4.2	△1.7	△1.6	0.1	0.1	△6.5
건 설 투 자	1.3	△0.4	0.5	1.4	△2.1	△2.5	△0.3	0.1	△3.0
설 비 투 자	3.8	5.3	8.2	9.3	△2.0	△0.4	0.4	0.2	△14.2

자료 : 한국은행.

나. 물가와 금리

(1) 물가

2008년 소비자물가는 농수축산물, 공업제품, 서비스 등의 가격 상승으로 전년대비 4.7% 상승하였으며, 특히 석유류와 개인서비스가 물가상승을 주도하였다. 분기별로는 1/4분기 중 전년 동기대비 3.8%의 상승률을 보였고 2/4분기 4.8%, 3/4분기 5.5%, 4/4분기 4.5% 상승하였다. 부류별로는 농축수산물은 전년대비 0.5% 상승에 그쳤으나, 공업제품 7.8%, 서비스 3.7% 상승하여 물가 상승을 주도하였다. 생활물가지수가 전년대비 5.4% 상승하였으며 신선식품지수는 5.8% 하락한 반면,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지수는 4.2% 상승하였다.

<표 1-1-6>

물 가 동 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간	1/4	2/4	3/4	4/4
소 비 자 물 가	3.6	2.8	2.2	2.5	4.7	3.8	4.8	5.5	4.5
농 축 수 산 물	8.9	1.9	△0.1	1.9	0.5	0.0	0.7	1.3	△0.1
공 업 제 품	2.6	3.7	2.0	2.0	7.8	5.9	8.6	10.2	6.7
서 비 스	3.1	2.4	2.7	2.9	3.7	3.3	3.6	4.0	4.0
생 산 자 물 가	6.1	2.1	0.9	1.4	8.6	5.1	9.0	12.1	8.0
농 립 수 산 품	12.1	△3.7	△2.5	2.8	1.1	△0.3	0.0	0.5	4.2
공 산 품	7.6	6.7	0.2	0.8	11.9	6.6	12.7	17.3	11.2
전 력 · 수 도 · 가 스	0.9	1.2	7.4	3.5	4.2	5.0	4.7	3.4	3.7
서 비 스	2.9	1.2	2.2	2.3	2.5	2.4	2.5	3.2	2.1

주 : 연간은 연평균 기준 전년대비
 자료 : 한국은행.

수출물가는 전년대비 21.8% 상승하여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분이 제품에 반영되고 환율도 상승함에 따라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금속제품, 운송장비제품 등이 오르면서 전년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수입물가는 전년대비 36.2% 상승하여 수출물가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과 환율 상승의 영향 등으로 원자재, 중간재, 자본재 및 소비재가 모두 올랐기 때문이다.

<표 1-1-7>

수출입 물가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간	1/4	2/4	3/4	4/4
수 출 물 가	6.2	△6.7	△8.2	△2.1	21.8	8.9	21.6	24.8	31.7
수 입 물 가	10.2	2.9	0.9	4.5	36.2	23.9	41.6	45.3	33.6

자료 : 한국은행.

(2) 금리

2008년 국고채 및 회사채 유통수익률 등 장기시장금리는 금융시장 불안과, 세계의 경제지표 악화 등으로 상승하였다. 단기금리인 CD 유통수익률과 콜금리도 전년의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표 1-1-8>

시중실세금리

(단위 : 연%)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회사채유통수익률(3년) 장외,AA-등급	5.43	4.73	4.68	5.17	5.70	7.02
CD유통수익률(3개월)	4.31	3.79	3.65	4.48	5.16	5.49
무담보콜금리(1일)	3.98	3.62	3.32	4.18	4.77	4.78

자료 : 한국은행.

다. 고용과 임금

(1) 고용

2008년 경제활동인구는 2,434만 7천명으로 전년대비 0.5% 증가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1.5%로 전년대비 0.3%p 하락하였다.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은 증가하였으나, 농림업, 제조업, 건설업 등의 취업자는 감소하였다. 실업자는 76만 9천명으로 전년대비 1.8%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3.2%로 전년과 비슷하였다.

<표 1-1-9>

고 용 동 향

(단위 : 천명,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증감률
경제활동인구	23,417	23,743	23,978	24,216	24,347	0.5
경제활동참가율	62.1	62.0	61.9	61.8	61.5	△0.3p
취 업 자	22,557	22,856	23,151	23,433	23,577	0.6
농 립 업	1,824	1,813	1,781	1,723	1,686	△2.1
제 조 업	4,177	4,130	4,057	4,014	3,963	△1.3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6,542	16,897	17,298	17,679	17,906	1.3
건 설 업	1,818	1,813	1,833	1,849	1,812	△2.0
실 업 자	860	887	827	783	769	△1.8
실 업 률	3.7	3.7	3.5	3.2	3.2	0.0p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2) 임금

2008년도 근로자 명목임금(상용근로자 기준)은 연중 4.7% 올라 전년보다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산업별로 광업, 통신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의 명목임금이 상승하였다. 제조업 노동생산성 지수는 전년대비 1.2% 증가하여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표 1-1-10>

임금상승률 및 노동생산성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명 목 임 금	9.2	6.0	6.6	5.7	5.6	4.7
실 질 임 금	5.5	2.3	3.8	3.4	2.9	0.0
제 조 업 노 동 생 산 성	4.9	10.8	7.1	12.7	6.7	1.2

주 :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한 수치임.
 자료 : 통계청.

라. 경상수지

<표 1-1-11>

경 상 수 지

(단위 : 억달러)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경 상 수 지	54	119	282	150	54	59	△64
상 품 수 지	148	220	376	327	279	282	60
수 출	1,634	1,973	2,577	2,890	3,318	3,790	4,334
수 입	1,486	1,753	2,201	2,563	3,039	3,509	4,274
서 비 스 수 지	△82	△74	△80	△137	△190	△198	△167
소 득 수 지	4	3	11	△16	5	10	51
경 상 이 전 수 지	△16	△29	△24	△25	△41	△35	△8

자료 : 한국은행.

2008년 경상수지는 전년의 59억 달러 흑자에서 64억 달러 적자로 전환되었다. 이는 연중 유가 급등에 따른 원유 수입액 증가로 대중동 적자가 전년보다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상품수지는 전년에 비해 흑자규모가 크게

축소된 반면, 서비스 수지의 적자 폭은 감소하였다. 소득수지는 금료 및 임금수지, 투자소득수지 등이 개선되면서 전년보다 흑자 폭이 확대되었다.

(1) 상품수지

2008년중 지역별 상품수지는 중동과 일본에 대해서는 적자를 보인 반면, 동남아, EU, 중국, 중남미, 미국 등에 대해서는 흑자를 나타내 60억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2) 서비스 수지

서비스 수지는 중국과 중남미를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를 보였으며 적자 규모는 EU 85.7억 달러, 미국 78.8억 달러, 동남아 31.0억 달러, 중동 7.9억 달러, 일본 1.7억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소득수지

2008년중 우리나라의 소득수지는 EU, 일본, 동남아 등에서는 적자를 나타냈으나, 미국, 중동, 중국, 중남미에 대해서는 흑자를 보여 51억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4) 경상이전수지

우리나라의 경상이전수지는 일본, EU, 미국, 중남미에 대해서는 흑자를 보인 반면, 중국, 동남아, 중동에 대해서는 적자를 보여 7.7억 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5) 환율

2008년도 1/4분기 원화의 대미달러화 환율(기말기준)은 940에서, 2/4분기 1,046원, 3/4분기 1,207원, 4/4분기 1,259.5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2. 해외 경제동향

가. 경제성장

<표 1-1-12>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세 계	2.9	3.6	4.9	4.5	5.1	5.2	3.0
선 진 국	1.7	1.9	3.2	2.6	3.0	2.7	0.6
미 국	1.8	2.5	3.6	3.1	2.7	2.1	0.4
일 본	0.3	1.4	2.7	1.9	2.0	2.3	△0.7
E U	1.4	1.5	2.7	2.2	3.4	3.1	1.0
개 도 국	4.8	6.2	7.5	7.1	7.9	8.3	6.0
한 국	7.2	2.8	4.6	4.0	5.2	5.1	2.2
중 국	9.1	10.0	10.1	10.4	11.6	13.0	9.0

자료 : 한국은행, IMF.

2008년 세계경제는 금융불안이 실물경제로 확산되면서 전년보다 낮은 3% 성장에 그쳤다. 미국경제는 주택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주요기업의 부실로 고용·소비 등 실물 지표도 악화되면서 0.4% 성장에 그쳤다. 일본은 미국경제 둔화가 수출 및 생산에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반전되었으며, EU도 1.0% 성장에 그쳤다. 중국경제도 세계 경기 침체의 여파로 전년대비 9.0% 성장에 그쳐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나. 고용 및 물가

2008년중 선진국의 고용사정은 세계적인 금융불안이 소비부문 및 실물부문으로 확대되면서 고용지표는 악화되었다. 2008년 미국의 실업률은 5.8%로 전년대비 1.2%p 상승하였으며, 일본은 4.0%로 전년대비 0.1%p 상승하

였다. 유로지역도 7.6%로 전년대비 0.1%p, 중국은 4.2%로 전년대비 0.2%p 상승하였다(한국은행).

2008년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215.3으로 전년대비 3.9% 상승하였으며, 일본은 101.7로 전년대비 1.4%, 유로지역은 107.8로 전년대비 3.3% 상승하였다(한국은행).

다. 교역 및 경상수지

<표 1-1-13>

주요국 경상수지

(단위 : 십억달러)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p
미 국	△459	△523	△631	△749	△804	△727	△706
일 본	112	136	172	166	171	210	157
중 국	35	46	69	161	253	372	426
유 로 지 역	55	39	80	16	△1	27	△138

자료 : 한국은행.

2008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7천 6십억 달러로 전년보다 규모는 줄었으나, 만성적인 적자가 지속되었다. 일본은 수출과 수입이 각각 12.3%, 23.0% 증가해 흑자 폭이 감소했으며 유로지역 경상수지는 1천 3백8십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라. 국제금리 및 환율

2008년 미국 금리는 서브프라임 부실로 인한 저금리 정책 기조로 인해 2007년보다 크게 하락하였다. 일본의 기준금리는 2008년 10월까지 0.5~0.6%를 유지하였으나, 11월 이후 0.4%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유로지역은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10월까지 4.0~5.0%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1월 이후 4.0% 이하로 하락하였다.

<표1-1-14>

주요국 단기금리 추이

(단위 :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미 국 ¹⁾	1.67	1.12	1.34	3.20	4.97	4.95	1.75
일 본 ²⁾	0.00	0.01	0.01	0.00	0.24	0.58	0.55
유 로 지 역 ³⁾	3.32	2.33	2.11	2.18	3.08	4.28	4.64

주 : 1)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 2) FB(3개월) 3) EURIBOR(3개월).
 자료 : 한국금융연구원.

2008년 미 달러화는 금융불안과 세계적인 달러 약세 전망 및 세계 경제의 침체로 주요 통화에 대해 약세를 나타냈다. 엔/달러 환율은 미국의 신용위기에 대한 불안심리 고조와 그에 따른 증시 폭락세가 지속되면서 엔화 강세가 시현되었으며, 달러/유로 환율은 유럽 국가들의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동유럽 국가들의 금융위기 고조로 유로화 약세추세가 나타났다.

<표 1-1-15>

주요국 통화의 환율추이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미 달 러 / 유 로	1.048	1.255	1.363	1.184	1.315	1.472	1.413
일 본 엔 / 미 달 러	118.5	107.0	103.1	117.8	118.9	112.6	90.2

주 : 기말기준
 자료 : 한국은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배성, 전문연구원 송성환)

제2절 농업·농촌경제 동향

1. 농업구조

가.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2008년 12월 1일 현재 농가수는 1,212천 가구로 전년의 1,231천 가구보다 19천 가구(1.5%) 감소하였으며, 농가인구는 3,187천명으로 전년의 3,274천명보다 87천명(2.7%)이 감소하였다.

가구원이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농가는 전체 농가의 58.3%인 707천 가구로 전년의 755천 가구(61.4%)보다 가구수는 48천 가구가 감소하였으나, 비중은 3.1%p 감소하였다. 가구원이 농업과 농업이외의 일을 함께하는 겸업농가는 전체농가의 41.7%인 505천 가구로 전년의 476천 가구(38.6%)보다 29천 가구가 증가하였다.

농가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연령층이 60대인 경영주가 32.8%(397천명), 70세 이상 경영주는 30.5%(370천명)에 이르며, 전체농가에서 60세이상 고령층의 경영주가 차지하는 비중(63.3%)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60세미만 경영주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전체인구(48,607천명)중에서 농가인구(3,187천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6.6%로 전년보다 0.2%p 감소하였으며, 고령화율을 나타내는 65세이상 농가인구 비중은 33.3%로 2007년 32.1%보다 높아져 전국(2007 : 9.9% → 2008 : 10.3%)에 비해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농가인구를 성별로 보면 남자가 1,542천명(48.4%), 여자가 1,645천명(51.6%)으로 여자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16>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구 분	단위	1995	2000	2005	2007	2008	2007대비		
							증감	증감률(%)	
농 가 호 수	천호	1,501	1,383	1,273	1,231	1,212	△19	△1.5	
농 가 인 구 (총인구비중)	천명 (%)	4,851 (10.9)	4,031 (8.6)	3,434 (7.1)	3,274 (6.8)	3,187 (6.6)	△87	△2.7	
호당농가인구	명	3.23	2.91	2.70	2.66	2.63	△0.03	△1.1	
연령별 농가인구	50세이상 (구성비)	천명 (%)	2,122 (43.7)	2,009 (49.9)	1,952 (56.8)	1,967 (60.1)	1,970 (61.7)	3	0.2
	50세미만 (구성비)	천명 (%)	2,729 (56.3)	2,022 (50.1)	1,482 (43.2)	1,307 (39.9)	1,217 (38.3)	△90	△6.9
성별 농가인구	남 자 (구성비)	천명 (%)	2,373 (48.9)	1,971 (48.9)	1,677 (48.8)	1,590 (48.6)	1,542 (48.4)	△48	△3.0
	여 자 (구성비)	천명 (%)	2,478 (51.1)	2,060 (51.1)	1,757 (51.2)	1,684 (51.4)	1,645 (51.6)	△39	△2.3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나. 농경지

농경지 면적은 도시화에 따라 건물건축, 공공시설 등 타용도 전환면적이 증가하여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말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23천ha 줄어든 1,759천ha로, 이 가운데 논 면적은 1,046천ha로 전년에 비하여 24천ha 감소하였으며, 밭면적은 713천ha로 1천ha가 증가하였다.

경지면적의 변동요인을 살펴보면 건물·건축(9.8천ha), 공공시설(5.2천ha), 기타사유(13.4천ha)로 인하여 총 28.4천ha의 경지가 감소한 반면, 개간(4.6천ha), 복구 등(0.9천ha)으로 총 5.6천ha 경지가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22.8천ha가 감소하였다.

2008년의 경지이용면적은 1,834천ha로 전년보다 22천ha가 감소하였고, 경지이용률은 전년의 103.1%에서 107.1%로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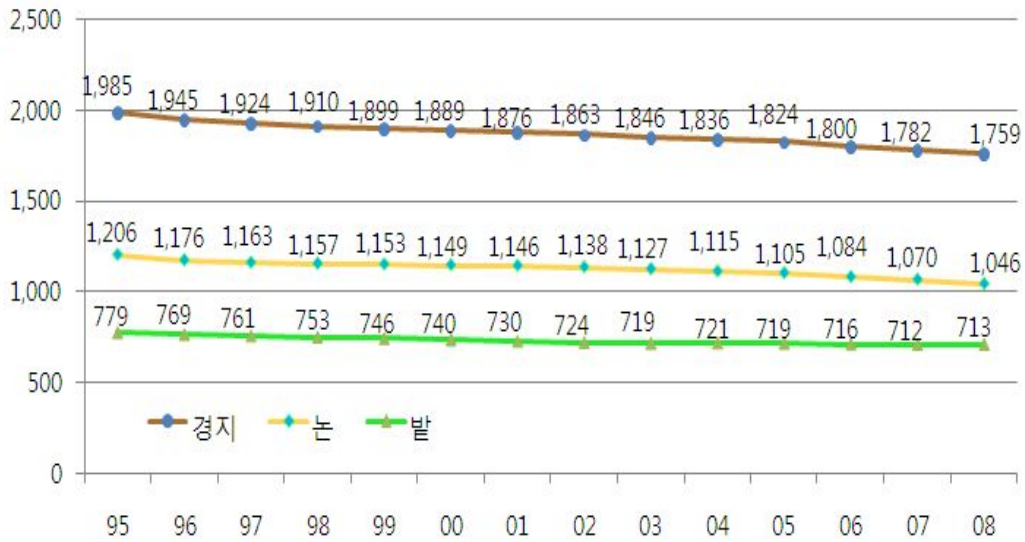
경지 이용면적 중 식량작물은 1,143천ha로 전년보다 18천ha 감소, 채소는 223천ha로 1천ha 증가, 과수는 149천ha로 1천ha 증가하였다.

한편 휴경면적은 38.0천ha로 전년보다 0.8천ha 증가하였고, 전체 경지면적 중 휴경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0.1%p 증가한 2.2%로 나타났다.

<표 1-1-17>

경지면적 변동추이

(단위 : 천ha)



자료 : 통계청 경지면적통계

<표 1-1-18>

농경지 사유별 증감내역

(단위 : 천ha)

연도별	증 가				감 소				증 감 면 적
	계	개 간	간 척	기 타	계	건 물 건축	공 시 공 설	기타	
2000	9.0	5.6	1.0	2.4	19.1	5.3	5.2	8.6	△10.1
2001	7.6	4.3	1.0	2.3	20.3	5.6	5.5	9.2	△12.7
2002	4.5	3.3	0.3	0.9	18.0	6.4	4.4	7.2	△13.5
2003	3.2	2.3	0.0	0.9	19.9	7.9	4.8	7.1	△16.6
2004	8.2	7.2	0.3	0.6	18.6	6.7	5.7	6.2	△10.4
2005	1.7	1.0	0.4	0.3	13.3	5.2	3.5	4.6	△11.6
2006	4.5	4.2	0.0	0.4	28.1	9.8	6.3	12.0	△23.6
2007	4.3	3.4	0.6	0.4	23.2	10.2	4.1	8.9	△18.9
2008	5.6	4.6	0.4	0.5	28.4	9.8	5.2	13.4	△22.8

자료 : 통계청 경지면적통계

<표 1-1-19>

농경지 이용현황

(단위 : 천ha)

구 분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7대비	
							증감	증감률(%)
경지이용면적	2,197	2,098	1,921	1,860	1,856	1,834	△22	△1.2
식량작물	1,346	1,318	1,234	1,178	1,161	1,143	△18	△1.6
(미곡)	(1,056)	(1,072)	(980)	(955)	(950)	(936)	(△14)	(△1.5)
(맥류)	(90)	(68)	(61)	(58)	(56)	(56)	(0)	(0.0)
(두류 등)	(200)	(177)	(193)	(165)	(155)	(151)	(△4)	(△2.6)
경제작물	851	780	689	682	694	691	△3	△0.4
(채소)	(322)	(296)	(240)	(234)	(222)	(223)	(1)	(0.5)
(과수)	(172)	(169)	(150)	(147)	(148)	(149)	(1)	(0.7)
(기타) ¹⁾	(357)	(315)	(299)	(301)	(324)	(319)	(△5)	(△1.5)
경지면적	1,985	1,889	1,824	1,800	1,782	1,759	△2.3	△1.3
경지이용률(%)	108.1	110.5	104.7	102.0	103.1	107.1	4.0	3.9
(논)	(104.1)	(106.3)	(102.9)	(102.5)	(104.7)	(107.9)	(3.2)	(3.1)
(밭)	(114.7)	(116.9)	(107.3)	(101.2)	(100.6)	(105.9)	(5.3)	(5.5)

주 1) 특·약용작물, 병발, 관상수 심은 밭, 묘포, 기타를 뜻함.

자료 : 통계청 경지면적통계

<표 1-1-20>

휴경면적

(단위 : 천ha)

구 분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7대비	
							증감	증감률(%)
휴경면적	64.6	16.8	44.2	46.4	37.2	38.0	0.8	2.2
논	33.5	4.3	24.1	20.3	14.8	14.3	△0.5	△3.4
밭	31.1	12.5	20.1	26.1	22.5	23.7	1.2	5.3
휴경률(%)	3.2	0.9	2.4	2.5	2.1	2.2	-	-

자료 : 통계청 경지면적통계

(정책통계담당관실 사무관 김규섭)

2. 농가경제

가. 소득 동향

(1) 농가소득

2008년도 농가의 평균소득은 연간 30,523천원으로서 전년(31,967천원)에 비해 4.5%(1,444천원) 감소하였다. 농업소득은 전년대비 7.2% 감소하고, 비경상소득 또한 23.2%로 비교적 크게 감소하고,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은 각각 2.3%, 6.7% 씩 소폭 증가하였다.

<표 1-1-21>

농 가 소 득

(단위 : 천원, %)

구 분	1995	2004	2005	2006	2007	2008	2007대비	
							증감	증감률(%)
농 가 소 득 ¹⁾	21,803	29,001	30,503	32,303	31,967	30,523	△1,444	△4.5
경 상 소 득	21,803	24,600	25,778	27,015	26,462	26,296	△166	△0.6
○ 농 업 소 득	10,469	12,050	11,815	12,092	10,406	9,654	△752	△7.2
○ 농 외 소 득	6,931	9,544	9,884	10,037	11,097	11,353	256	2.3
○ 이 전 소 득	4,403	3,006	4,078	4,886	4,959	5,289	330	6.7
비경상소득 ²⁾	-	4,401	4,725	5,289	5,506	4,227	△1,279	△23.2

주 1) 농가소득=경상소득(농업소득+농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

2) 비경상소득은 우발적인 사유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경조수입, 퇴직일시금, 사고보상금 등이 있다.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농업의존도)은 31.6%로 나타났으며, 전년에 비해 1.0%p 감소하였다.

<표 1-1-22>

농가소득 구성비

(단위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농 가 소 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 상 소 득	81.9	84.8	84.5	83.6	82.8	86.2
○ 농 업 소 득	39.3	41.6	38.7	37.4	32.6	31.6
○ 농 외 소 득	35.0	32.9	32.4	31.1	34.7	37.2
○ 이 전 소 득	7.6	10.4	13.4	15.1	15.5	17.3
비경상소득	18.1	15.2	15.5	16.4	17.2	18.0
< 일 본 >						
○ 농 업 소 득	25.4	24.8	24.6	24.6	24.7	-

주 1) 농업의존도는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임.

2) 일본은 2003년 조사체계개편(경영주 부부 및 농업관련 세대원 중심으로 파악)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일본 농림수산성 농업경영통계

(2) 농업소득

농업총수입은 감소하고 농업경영비는 증가하여 농업소득은 9,654천원으로 전년(10,406천원)에 비해 7.2%(752천원) 감소하였다.

<표 1-1-23>

농업소득

(단위 : 천원, %)

구 분	1995	2004	2005	2006	2007	2008	2007대비	
							증감	증감률(%)
농 업 소 득 (농업소득률)	10,469 (65.4)	12,050 (45.3)	11,815 (44.6)	12,092 (44.3)	10,406 (39.9)	9,654 (37.4)	△752	△7.2
○ 농업총수입	16,012	26,623	26,496	27,322	26,102	25,843	△259	△1.0
○ 농업경영비	5,543	14,572	14,681	15,231	15,696	16,189	493	3.1

주 : 농업소득 = 농업총수입-농업경영비, 농업소득률 = (농업소득/농업총수입)×100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농업총수입은 25,843천원으로 전년(26,102천원)에 비해 1.0%(259천원) 감소하였다. 채소는 15.6% 감소하고, 축산과 과수는 각각 3.7%, 6.5% 증가하였다.

<표 1-1-24>

농업총수입

(단위 : 천원, %)

구분	1995	2004	2005	2006	2007	2008	2007대비	
							증감	증감률(%)
농업총수입	16,012	26,623	26,496	27,322	26,102	25,843	△259	△1.0
○미곡수입	5,450	8,653	7,264	7,578	7,296	7,364	68	0.9
○축산수입	3,981	5,021	6,386	6,403	5,145	5,336	191	3.7
○채소수입	3,386	6,538	6,388	6,758	6,817	5,755	△1,062	△15.6
○과수수입	1,542	2,964	2,945	2,915	3,192	3,398	206	6.5
○기타수입 ¹⁾	1,653	3,447	3,513	3,668	3,652	3,990	338	9.3

주 1) 서류, 두류, 맥류, 화훼, 잡곡수입 등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농업총수입 구조를 보면 미곡수입(28.5%), 채소(22.3%), 축산(20.6%), 과수(13.2%) 및 기타수입(15.4%)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25>

농업총수입 구성비

(단위 : %)

	1995	2004	2005	2006	2007	2008
농업총수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미곡수입	34.0	32.5	27.4	27.7	28.0	28.5
○축산수입	24.9	18.9	24.1	23.4	19.7	20.6
○채소수입	21.1	24.6	24.1	24.7	26.1	22.3
○과수수입	9.6	11.1	11.1	10.7	12.2	13.2
○기타수입	10.4	12.9	13.3	13.4	14.0	15.4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농업경영비는 16,189천원으로 전년(15,696천원)에 비해 3.1%(493천원) 증가하였다. 노무비와 임차료는 각각 7.5%, 12.4% 감소하였으나, 양축비는 사료값 상승으로 36.9% 증가 하였다.

<표 1-1-26>

농업경영비

(단위 : 천원, %)

구분	1995	2004	2005	2006	2007	2008	2007대비	
							증감	증감률(%)
농업경영비	5,543	14,572	14,681	15,231	15,696	16,189	493	3.1
○수선및농구비	807	335	318	333	326	329	3	0.9
○노무비	441	952	913	901	958	886	△72	△7.5
○양축비	1,261	2,607	2,747	2,633	2,440	3,340	900	36.9
○비료·농약비	695	1,587	1,624	1,666	1,822	1,806	△16	△0.9
○임차료	1,070	1,318	1,096	1,187	1,133	992	△141	△12.4
○기타비용 ¹⁾	1,269	7,773	7,983	8,511	9,017	8,836	△181	△2.0

주 1) 감가상각비, 종묘비, 기타, 광열비, 수리비, 위탁영농비, 조세 및 부담금, 지급이자, 영농잡비용, 보험료 및 수수료, 기타판매 및 관리비 등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3) 농업외소득

농업외소득은 11,353천원으로 전년(11,097천원)에 비해 2.3%(256천원) 증가하였다. 겸업소득은 2.0% 감소하고, 사업외소득이 3.9% 증가하였다.

* 겸업소득은 임업, 어업, 제조업 등 농업외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소득

* 사업외소득은 노임, 급료, 임대료 등 사업외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

<표 1-1-27>

농 외 소 득

(단위 : 천원, %)

구 분	1995	2004	2005	2006	2007	2008	2007대비	
							증감	증감률(%)
농 외 소 득	6,931	9,544	9,884	10,037	11,097	11,353	256	2.3
○점 업 소 득	1,527 (22.0)	2,342 (24.5)	2,531 (25.6)	2,690 (26.8)	2,959 (26.7)	2,900 (25.5)	△59	△2.0
○사업 외 소 득	5,404 (78.0)	7,201 (75.5)	7,353 (74.4)	7,347 (73.2)	8,138 (73.3)	8,453 (74.5)	315	3.9

주) ()는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4)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

이전소득은 6.7% 증가하였으나, 비경상소득은 23.2% 감소하여 합계는 전년에 비해 949천원(9.1%) 감소한 9,516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1-1-28>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

(단위 : 천원, %)

구 분	1995	2004	2005	2006	2007	2008	2007대비	
							증감	증감률(%)
합 계	4,403	7,407	8,803	10,175	10,465	9,516	△949	△9.1
○이 전 소 득	-	3,006	4,078	4,886	4,959	5,289	330	6.7
○비 경 상 소 득	-	4,401	4,725	5,289	5,506	4,227	△1,279	△23.2

주) 2003년부터 이전소득 중 경조수입, 퇴직일시금 등은 비경상소득으로 분리 신설됨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나. 가계지출 동향

2008년 가계비는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을 합하여 27,102천원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은 20,328천원으로 전년(20,510천원)에 비해 0.9%(182천원), 비소비지출은 6,773천원으로 전년(7,538천원)에 비해 10.1%(765천원) 감소하였다.

<표 1-1-29>

가계비 지출

(단위 : 천원, %)

구 분	1995	2004	2005	2006	2007	2008	2007대비	
							증감	증감률(%)
가 계 비	14,782	24,691	26,649	28,461	28,048	27,102	△946	△3.4
○ 소 비 지 출	14,782	18,386	19,378	19,891	20,510	20,328	△182	△0.9
○ 비 소비 지출 ¹⁾	-	6,305	7,271	8,571	7,538	6,773	△765	△10.1
농업소득의 가계비 충족도 (농업소득/가계비)	70.8	48.8	44.3	42.5	37.1	35.6	-	-
평 균 소 비 성 향 (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 ²⁾)	68.3	81.0	83.4	83.8	84.0	86.4	-	-

주 1) 2003년부터 조세, 사회보험 등으로 구성된 비소비지출이 분리 신설됨

2) 2003년부터 처분가능소득 = 농가소득-비소비지출
2003년이전 처분가능소득 = 농가소득-조세·부담금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농가의 소비지출은 20,328천원으로 전년(20,510천원)에 비해 0.9%(182천원) 감소하였다. 이는 광열수도비(7.9%), 보건의료비(7.1%), 교통통신비(5.2%), 등은 증가하였으나, 식료품비(3.1%), 주거비(8.7%), 교육비(14.5%)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표 1-1-30>

소비 지출

(단위 : 천원, %)

구 분	1995	2004	2005	2006	2007	2008	2007대비	
							증감	증감률(%)
소 비 지 출 ¹⁾	14,782	18,386	19,378	19,891	20,510	20,328	△182	△0.9
○ 식 료 품 비	3,118	4,823	4,998	4,967	5,152	4,992	△160	△3.1
○ 주 거 비	509	403	475	490	495	452	△43	△8.7
○ 광 열 수 도 비	484	994	1,067	1,088	1,121	1,210	89	7.9
○ 가 구 가 사 용 품 비	678	510	505	508	498	500	2	0.4
○ 피 복 신 발 비	627	553	585	582	584	546	△38	△6.5
○ 보 건 의 료 비	1,001	1,476	1,613	1,578	1,716	1,838	122	7.1
○ 교 육 비	1,553	749	756	740	759	649	△110	△14.5
○ 교 양 오 락 비	150	574	602	668	683	638	△45	△6.6
○ 교 통 통 신 비	793	2,056	2,176	2,238	2,285	2,404	119	5.2
○ 기 타 지 출 ²⁾	5,869	6,249	6,601	7,032	7,217	7,099	△118	△1.6

주 1) 2002년도 까지는 가계비 항목, 2003년부터 소비지출 항목

2) 기타지출은 감가상각비, 기타소비지출 등임.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농가의 비소비지출은 6,77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765천원(1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1>

비소비 지출

(단위 : 천원, %)

구 분	1995	2004	2005	2006	2007	2008	2007대비	
							증감	증감률(%)
비 소비 지 출¹⁾	174	6,305	7,271	8,571	7,538	6,773	△765	△10.1
○ 조세 및 부담금	174	299	396	431	471	377	△94	△20.0
○ 공적연금납부금	-	339	345	370	368	331	△37	△10.1
○ 사회보험납부금	-	358	326	308	349	371	22	6.3
○ 기 타	-	5,309	6,204	7,461	6,351	5,694	△657	△10.3

주 1) 비소비지출은 2003년부터 분리·신설된 것으로 조세 및 부담금, 공적연금납부금, 사회보험납부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다. 처분가능소득 및 잉여

농가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농가의 처분가능소득은 2008년 23,749천원이고,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농가 잉여금은 3,421천원으로 전년(3,919천원)에 비해 12.7%(498천원) 감소하였다.

이는 소비지출은 182천원이 감소하였으나, 처분가능소득이 680천원 감소하여 감소가 더 컸기 때문이다.

<표 1-1-32>

가처분소득 / 잉여금

(단위 : 천원, %)

구 분	1995	2004	2005	2006	2007	2008	2007대비	
							증감	증감률(%)
○ 처분가능소득 ¹⁾	21,629	22,696	23,232	23,733	24,429	23,749	△680	△2.8
○ 소비 지 출 (분 가지출)	14,782 (548)	18,386 -	19,378 -	19,891 -	20,510 -	20,328	△182	△0.9
○ 잉 여 금 ²⁾	6,299	4,309	3,854	3,842	3,919	3,421	△498	△12.7

주 1) 2003년부터 처분가능소득 = 농가소득 - 비소비지출
2003년이전 처분가능소득 = 농가소득 - 조세·부담금

2) 2003년부터 잉여금 = 처분가능소득 - 가계지출 중 소비지출
2003년이전 잉여금 = 처분가능소득 - 가계비 - 분가지출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라. 농가자산 동향

2008년말 현재 가구당 평균자산은 341,227천원으로 전년(395,981천원)에 비해 13.8%(54,754천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본농가 개편에 따른 시계열상의 단층 문제로 고정자산이 10.1% 감소하고, 유동자산도 28.6%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표 1-1-33>

농 가 자 산

(단위 : 천원, %)

구 분	1995	2004	2005	2006	2007	2008	2007대비	
							증감	증감률(%)
농 가 자 산	158,171	243,665	298,178	356,963	395,981	341,227	△54,754	△13.8
고 정 자 산 ¹⁾	134,334 (84.9)	194,401 (79.8)	238,399 (80.0)	284,696 (79.8)	315,569 (79.7)	283,826 (83.2)	△31,743	△10.1
유 동 자 산 ²⁾	23,837 (15.1)	49,264 (20.2)	59,779 (20.0)	72,267 (20.2)	80,412 (20.3)	57,401 (16.8)	△23,011	△28.6

주 : 1) 토지, 건축물 및 구축물, 기계·기구·비품, 대동·식물, 무형자산

2) 미처분농축산물, 미사용구입자재, 소동물 등의 채고자산 및 현금, 예금 등 당좌자산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마. 농가부채 동향

농가부채는 2008년말 현재 가구당 25,786천원으로 전년(29,946천원)에 비해 13.9%(4,160천원) 감소하였다. 농가부채 감소는 표본농가 개편에 따른 시계열상의 단층문제이며, 이 중 농업용부채는 17.5% 감소하였으며, 농업용 이외부채도 9.5% 감소하였다.

농가의 「단기상환능력」 평가지표인 당좌자산 대비 부채 비율(부채/당좌자산)은 49.5%로 전년(40.1%)에 비해 9.4%p 악화되었다.

<표 1-1-34>

농 가 부 채

(단위 : 천원, %)

구 분	1995	2004	2005	2006	2007	2008	2007대비	
							증감	증감률(%)
농 가 부 채 (A)	9,163	26,892	27,210	28,161	29,946	25,786	△4,160	△13.9
○농업용부채 (구 성 비)	6,351 (69.3)	16,961 (63.1)	16,315 (60.0)	16,042 (57.0)	16,486 (55.1)	13,600 (52.7)	△2,886	△17.5
○농업용이외부채 ¹⁾ (구 성 비)	2,812 (30.7)	9,931 (36.9)	10,895 (40.0)	12,118 (43.0)	13,460 (44.9)	12,186 (47.3)	△1,274	△9.5
당 좌 자 산 (B)	19,739	43,995	54,354	66,806	74,634	52,118	△22,516	△30.2
단기상환능력 ²⁾ [(A/B)×100]	46.4	61.1	50.1	42.2	40.1	49.5	-	9.4%P

주 1) 농업용이외 부채는 가계용 + 겸업용 + 기타용 부채임

2) 당좌자산 대비 부채가 적을수록(수치가 적을수록) 상환능력이 개선됨을 의미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바. 전업농가/겸업농가의 주요지표

전·겸업별 농가소득은 전업농가보다 겸업농가의 소득이 높고, 제2종 겸업농가의 소득이 38,568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업농가의 소득은 제2종 겸업농가의 63.9% 수준이었다.

<표 1-1-35>

2008 전업농가/겸업농가 주요지표

(단위 : 천원, %)

구 분	평 균 (A)	전업농가 (B)	겸업농가		전국평균 대비		
			제1종(C)	제2종(D)	B/A	C/A	D/A
농 가 구 성 비 ¹⁾	100.0	58.3	13.2	28.5	-	-	-
농 가 소 득	30,523	24,631	38,849	38,568	80.7	114.2	126.4
가 계 지 출	27,102	22,739	28,794	33,731	83.9	106.2	124.5
자 산	341,227	317,951	402,000	353,609	93.2	117.8	103.6
부 채 (부채 / 자산)	25,786 (7.6)	20,961 (6.6)	38,480 (9.6)	28,311 (8.0)	81.3	149.2	109.8

주 : 1) 2008년 농업기본통계 전·겸업별 농가의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평균 농가자산은 341,227천원이며 「제1종 겸업농가」의 자산이 402,000천원으로 가장 많고, 부채 또한 「제1종 겸업농가」가 가장 높은 38,480천원으로 나타났다.

사. 주·부업별 지표

주업농가 중 전문농가의 소득이 38,614천원으로 자급농가(26,467천원)의 1.5배 수준이고, 전문농가의 자산은 452,814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급농가는(221,494천원) 전문농가의 48.9%에 지나지 않았다. 자산대비 부채비율도 3ha이상 경지를 보유한 전문농가가 9.8%로 가장 높았다.

※ 주·부업농가 기준

- 주업농가 : 경지규모가 30a 이상 또는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농가 중에서 농업수입이 농업이외수입보다 많은 농가
- 전문농가 : 경지규모가 3ha이상 또는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 2,000만원 이상
- 부업농가 : 경지규모가 30a이상 또는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농가 중에서 농업이외수입이 농업수입보다 많은 농가
- 자급농가 : 경지가 없거나, 30a미만의 농가 중에서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농가

<표 1-1-36>

2008 주·부업별 지표

(단위 : 천원, %)

구 분	평 균	주 업 농 가		부업농가	자급농가
		전문농가	일반농가		
농 가 구 성 비 ¹⁾	100.0	20.3	41.7	20.4	17.6
농 가 소 득	30,523	38,614	18,371	38,812	26,467
가 계 지 출	27,102	30,467	19,402	33,813	25,509
자 산	341,227	452,814	248,225	380,883	221,494
부 채 (부채 / 자산)	25,786 (7.6)	44,384 (9.8)	10,938 (4.4)	29,431 (7.7)	13,428 (6.1)

주 : 1) 2008년 농업기본통계 주·부업별 농가의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아. 영농형태별 주요지표

영농형태별 농가소득은 축산농가가 46,398천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특작 농가가 41,633천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농가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논벼농가의 소득은 23,318천원으로 평균 농가소득(30,523천원)의 76.4% 수준이다.

농가자산은 축산농가의 자산이 592,687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화훼농가(432,142천원), 과수농가(384,860천원) 순서였다.

부채/자산비율은 축산농가가 18.1%로 다른 농가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논벼 농가는 4.5%로 가장 낮았다.

<표 1-1-37>

2008 영농형태별 주요지표

(단위 : 천원, %)

구 분	평 균	논벼	과수	채소	특작	화훼	전작	축산
농 가 구 성 비 ¹⁾	100.0	49.4	12.0	21.5	3.3	0.9	6.0	6.3
농 가 소 득	30,523	23,318	30,419	24,164	41,633	35,874	20,022	46,398
가 계 지 출	27,102	22,754	24,447	23,687	22,248	30,865	18,953	33,126
자 산	341,227	331,095	384,860	282,616	267,064	432,142	202,044	592,687
부 채 (부채 / 자산)	25,786 (7.6)	14,998 (4.5)	24,898 (6.8)	22,353 (7.9)	20,137 (7.5)	45,004 (10.4)	17,574 (8.7)	107,563 (18.1)

주 : 1) 2008년 농업기본통계 영농형태별 농가의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자. 경지규모별 주요지표

농가소득은 경지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비교적 높으며 특히 5.0~7.0ha, 10ha이상 농가의 소득은 4천만원 이상인 반면, 2.0ha미만은 3천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농가자산 또한 경지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토지자산이 많아 상대적으로 자산규모도 크며, 부채/자산비율도 경지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8>

2008 경지규모별 주요지표

(단위 : 천원, %)

구 분	평균	0.5ha 미만	0.5~1.0	1.0~1.5	1.5~2.0	2.0~3.0	3.0~5.0	5.0~7.0	7.0~10.0	10.0ha 이상
농가구성비 ¹⁾	100.0	40.5	25.4	12.8	7.4	6.7	4.6	1.4	0.7	0.5
농 가 소 득	30,523	28,453	25,283	26,647	30,524	35,054	35,924	44,915	63,548	48,032
가 계 지 출	27,102	27,383	23,803	25,604	24,707	28,809	32,300	38,052	33,873	33,006
자 산	341,227	240,375	254,861	299,346	339,707	438,530	466,709	885,203	673,637	645,635
부 채 (부채 / 자산)	25,786 (7.6)	17,079 (7.1)	16,322 (6.4)	18,030 (6.0)	19,292 (5.7)	35,191 (8.0)	40,167 (8.6)	86,967 (9.8)	90,823 (13.5)	74,277 (11.5)

주 : 1) 2008년 농업기본통계 경지규모별 농가의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차. 경영주 연령별 주요지표

농가소득은 39세 이하 연령층의 소득이 46,618천원으로 가장 높고, 70세 이상 연령층의 소득은 21,224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농가자산은 40대가 4억6천만원, 50대가 3억9천만원, 60대가 3억7천만원순이다.

농가부채는 30~39세가 71,421천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40~49세는 71,205천원, 60~69세가 23,388천원이나 70세이상은 8,341천원으로 경영주 연령간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표 1-1-39>

2008 경영주 연령별 주요지표

(단위 : 천원, %)

구 분	평균	30~39	40~49	50~59	60~69	70세이상
농 가 구 성 비 ¹⁾	100.0	1.9	11.4	23.3	32.8	30.5
농 가 소 득	30,523	46,618	41,050	38,756	31,368	21,224
가 계 지 출	27,102	31,267	40,755	34,906	26,269	19,404
자 산	341,227	351,302	457,436	394,894	370,890	246,130
부 채 (부채 / 자산)	25,786 (7.6)	71,421 (20.3)	71,205 (15.6)	36,920 (9.3)	23,388 (6.3)	8,341 (3.4)

주 : 1) 2008년 농업기본통계 경영주연령별 농가의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카. 지역별 주요지표

경기와 제주지역 농가소득이 3천 7백만원 내외 수준의 높은 소득을 올리고, 전남과 경남지역이 2천 6백만원 내외 정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자산은 토지가격이 높은 경기지역이 6억8천만원으로 월등히 높고, 부채는 제주(43,559천원), 경기(43,527천원)지역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표 1-1-40>

2008 지역별 주요지표

(단위 : 천원, %)

	전 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농가구성비 ¹⁾	100.0	11.3	6.3	7.0	13.3	9.3	15.3	16.8	11.9	2.9
농 가 소 득	30,523	36,928	32,822	28,909	36,607	28,959	26,349	27,895	25,194	37,672
가 계 지 출	27,102	35,618	27,266	26,815	32,749	21,711	22,986	22,324	24,574	31,711
자 산	341,227	682,444	334,960	283,001	366,610	243,706	205,462	265,650	262,522	394,842
부 채 (부채 / 자산)	25,786 (7.6)	43,527 (6.4)	30,180 (9.0)	21,374 (7.6)	30,014 (8.2)	17,759 (7.3)	18,891 (9.2)	17,603 (6.6)	26,324 (10.0)	43,559 (11.0)

주 : 1) 2008년 농업기본통계 지역별 구성비임(특·광역시 5.9% 제외)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정책통계담당관실 사무관 김규섭)

3.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가. 개 황

2008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99.4으로 전년에 비해 2.0%p 하락하였으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15.3으로 전년대비 10.0%p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농가 교역조건지수는 86.2로 나타났다. 여기서 농가교역조건이 100 이하인 것은 농가채산성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1-41>

농가교역조건지수 동향

(2005=100)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농가판매가격지수(①)	104.2	100.0	99.2	101.4	99.4
농가구입가격지수(②)	96.3	100.0	101.8	104.8	115.3
농가교역조건지수(①/②×100)	108.2	100.0	97.4	96.8	86.2

자료 : 통계청 농어업생산통계과

나.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2008년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99.4로 곡물(7.6↑), 기타 농산물(0.5↑)은 전년에 비해 올랐으나, 청과물(△12.7), 축산물(△0.3)이 내려 전체적으로는 전년에 비해 2.0%p 하락하였다.

1) 곡 물

2008년도 곡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7.8로 맥류(△3.5)는 내렸으나 미곡(6.0↑), 두류(34.7↑)등이 올라 전년에 비해 7.6%p 상승하였는데 품목별로는 겉보리(△2.0), 쌀보리(△3.9), 맥주맥(△4.0), 팥(△2.2) 등이 전년보다 하락하였다.

2) 청과물

2008년도 청과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92.3로 전년대비 12.7%p 하락하였다.

채소류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전년도보다 11.2%p 하락하였는데 품목별로는 배추(△60.0), 양배추(△52.0), 상추(△34.4) 등 엽채류가 전년보다 36.1%p 하락하고 무(△52.6) 등 근채류도 41.7%p 하락하였다.

고추(18.5↑), 마늘(△20.4), 양파(98.1↑), 파(△34.7), 생강(72.2↑) 등 조미채류는 전년보다 7.8%p 상승하였으며, 호박(△26.7), 가지(△10.8), 풋고추(△15.1) 등 과채류는 10.7%p 하락하였다.

과실류의 경우 배($\Delta 26.2$), 복숭아($\Delta 19.4$), 감($\Delta 43.8$) 등이 하락하여 전체적으로는 전년보다 16.0%p 하락하였다.

3) 축산물

2008년도 축산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93.0으로 돼지(24.7 \uparrow)는 상승하였으나, 한우암소($\Delta 9.2$), 한우송아지 암컷($\Delta 29.8$), 수컷($\Delta 19.1$), 유우송아지($\Delta 39.2$), 새끼돼지($\Delta 1.1$) 등이 내려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0.3%p 하락하였다.

4) 기타농산물

특용작물·화훼·부산물 등 기타 농산물의 2008년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5.3으로서 전년대비 0.5%p 상승하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들깨(4.4 \uparrow), 땅콩($\Delta 19.2$) 인삼($\Delta 14.9$), 송이버섯($\Delta 5.5$) 등 특용작물은 전년에 비해 4.7%p 하락하고, 국화(25.1 \uparrow), 장미(19.1 \uparrow) 등 화훼류는 9.0%p 상승하였다.

<표1-1-42>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2005=100)

구 분	가중치	지 수				전년대비 등락률	
		2005	2006	2007	2008	2007	2008
총 지 수	1,000	100.0	99.2	101.4	99.4	2.2	△2.0
곡 물	338.3	100.0	95.5	100.2	107.8	4.9	7.6
미 곡	277.3	100.0	94.9	98.5	104.4	3.8	6.0
맥 류	9.1	100.0	102.0	98.4	95.0	△3.5	△3.5
잡 곡	6.2	100.0	105.3	106.5	117.5	1.1	10.3
두 류	19.5	100.0	71.4	83.8	112.9	17.4	34.7
서 류	26.2	100.0	115.1	129.0	142.3	12.1	10.3
청 과 물	339.9	100.0	102.8	105.7	92.3	2.8	△12.7
채 소	226.0	100.0	105.1	109.1	96.9	3.8	△11.2
(엽 채 류)	45.1	100.0	69.4	87.6	56.0	26.2	△36.1
(근 채 류)	12.1	100.0	106.3	188.8	110.0	77.6	△41.7
(조 미 채)	83.5	100.0	118.5	103.5	111.6	△12.7	7.8
(과 채 류)	85.3	100.0	110.7	114.6	102.3	3.5	△10.7
과 실	113.9	100.0	98.3	98.9	83.1	0.6	△16.0
축 산 물	249.5	100.0	96.1	93.3	93.0	△2.9	△0.3
가 축	168.1	100.0	96.1	91.9	87.0	△4.4	△5.3
유 란	81.4	100.0	96.1	96.3	105.6	0.2	9.7
기타농산물	72.3	100.0	111.0	114.7	115.3	3.3	0.5
특 용 작 물	48.5	100.0	99.0	99.7	95.0	0.7	△4.7
화 훼	20.6	100.0	137.8	148.9	162.3	8.1	9.0
부 산 물	3.2	100.0	119.5	121.6	119.1	1.8	△2.1

다.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2008년도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15.3으로 가계용품(5.5↑), 영농광열(31.9↑) 농촌 임료금(7.9↑)등이 올라 전체적으로 전년에 비해 10.0%p 상승하였다.

1) 가계용품

2008년도 가계용품의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10.7로 식료품(5.4↑), 피복 및 신발(2.3↑), 광열수도(13.0↑), 보건의료(2.1↑), 교육(6.3↑) 등이 올라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5.5%p 상승하였다.

2) 농업용품

2008년도 농업용품의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8.5로 비료(71.5↑), 영농광열(31.9↑) 등이 올라 전년보다 22.6%p 상승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상승하였으나 품목별로는 가축(△20.0)이 하락하였다.

3) 농촌임료금

2008년도 농촌임료금 구입가격지수는 111.7로 전년보다 7.9%p 상승하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농업노동임금은 남자노임(11.4↑)과 여자노임(9.0↑) 모두 상승하여 전년보다 9.8%p 올랐으며 쌀 도정료는 6.8%p 상승하였다. 농기계임차료는 전년보다 5.4%p 상승하였다.

<표 1-1-43>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2005=100)

구 분	가중치	지 수				전년대비 등락률	
		2005	2006	2007	2008	2007	2008
총 지 수	1,000	100.0	101.8	104.8	115.3	2.9	10.0
가 계 용 품	660.4	100.0	102.3	104.9	110.7	2.5	5.5
농 업 용 품	255.9	100.0	100.7	104.8	128.5	4.1	22.6
종 자	18.0	100.0	96.4	96.6	96.9	0.2	0.3
비 료	23.5	100.0	113.9	121.0	207.5	6.2	71.5
농 약	22.0	100.0	99.8	99.9	104.2	0.1	4.3
농 기 구	49.1	100.0	105.3	106.5	114.1	1.1	7.1
영 농 광 열	16.8	100.0	108.6	112.7	148.7	3.8	31.9
가 축	34.6	100.0	94.3	86.6	69.3	△8.2	△20.0
사 료	66.3	100.0	98.4	112.1	155.5	13.9	38.7
영 농 자 재	25.4	100.0	93.0	97.6	123.3	4.9	26.3
농 촌 임 료 금	83.7	100.0	100.9	103.5	111.7	2.6	7.9
농 업 노 동 임 금	44.5	100.0	100.9	103.0	113.1	2.1	9.8
도 정 료	3.6	100.0	98.5	100.5	107.3	2.0	6.8
농 기 계 임 차 료	35.6	100.0	101.3	104.6	110.3	3.3	5.4

(정책통계담당관실 사무관 김규섭)

4. 농림업 부가가치

2008년 농림어업 총부가가치는 2005년 가격 기준으로 28조 7,870억원 수준이며, 실질로는 전년대비 5.5% 증가하였다. 이중 농업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6.4%, 어업부문은 1.5% 증가하였다.

농업 부가가치 중 재배업은 전년대비 5.3%, 축산업은 10.0% 증가하였다. 특히 재배업 중 벼, 과실류, 특용작물 등의 작물 생산액이 증가하였으며 축산업은 한육우, 돼지, 닭 등 주요 가축의 생산액이 증가하였다. 어업 부가가치는 어류, 갑각류, 패류 등 일반 해면어업 생산액 증가하였으나, 천해양식 생산액은 감소하여 전년대비 1.5% 증가에 그쳤다.

<표 1-1-44>

농림어업 부가가치 및 증감률

(단위 : 10억원, %, 2005년 기준가격)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p	
농 립 어 업	24,715	23,387	25,512	25,853	26,240	27,294	28,787	
실 질 증감률	농 립 어 업	△2.2	△5.4	9.1	1.3	1.5	4.0	5.5
	재 배 업	△5.5	△7.0	11.4	0.0	△0.6	1.2	5.3
	축 산 업	14.8	△4.6	5.5	0.7	3.4	9.1	10.0
	임 업	△1.8	△5.1	4.6	4.4	7.7	11.0	△0.1
	어 업	△1.5	3.9	△2.4	11.1	11.3	12.7	1.5
	농 립 어 업 서비스	25.1	14.4	14.0	11.2	△3.2	△1.1	1.2

자료 : 농림수산물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배성, 전문연구원 송성환)

5. 농업생산성

농가에서 영농작업에 투입한 주요 생산요소를 보면, 2008년 호당 노동시간은 1,229시간으로 전년대비 10.2% 감소하였으며, 농업자본액은 53,931천원으로 전년보다 4.9% 증가하였다. 또한 호당 경지면적은 1.45ha로 전년수준이었다.

<표 1-1-45>

농가호당 생산요소 투입량

(단위 : 시간, 천원, ha)

구 분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7대비	
							증감	증감률(%)
영 농 시 간	1,376	1,253	1,487	1,409	1,368	1,229	△139	△10.2
농 업 자 본 액	21,323	31,425	49,721	51,184	51,418	53,931	2,513	4.9
호당경지면적	1.32	1.37	1.43	1.45	1.45	1.45	-	-

* 호당경지면적 = 경지면적 / 농가수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2008년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13,157원으로 전년 12,839원보다 2.5% 증가하였고, 자본생산성은 0.30원으로 전년보다 11.8% 감소하였다.

단위면적당 투입되는 노동시간을 나타내는 노동집약도는 90시간으로 전년보다 7.1% 증가하였으며, 단위면적당 투입되는 자본액을 나타내는 자본집약도는 3,929천원으로 전년보다 23.3% 증가하였다.

<표 1-1-46>

농업생산성 지표

구 분	단위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7대비	
								증감	증감률(%)
노동생산성 ¹⁾	원/시간	9,387	11,778	12,297	13,384	12,839	13,157	318	2.5
토지생산성 ²⁾	천원/10a	954	1,051	1,141	1,161	1,077	1,178	101	9.4
자본생산성 ³⁾	원/원	0.61	0.47	0.36	0.36	0.34	0.30	△0.04	△11.8
노동집약도 ⁴⁾	시간/10a	102	89	93	87	84	90	6	7.1
자본집약도 ⁵⁾	천원/10a	1,575	2,237	3,138	3,186	3,187	3,929	742	23.3

주 1) 노동생산성(농업부가가치/자영농업노동시간) : 투하된 노동력과 그 결과로써 얻은 생산량의 비율

2) 토지생산성(농업부가가치/경지면적) : 토지면적 단위당 생산량

3) 자본생산성(농업부가가치/농업자본액) : 투입된 자본에 대한 생산량

4) 노동집약도(자영농업노동시간/경지면적) : 일정 경지면적에 대해 투하된 노동량

5) 자본집약도(농업자본액/경지면적) : 일정 경지면적에 대해 투입된 농업자본액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정책통계담당관실 사무관 김규섭)

6. 농산물 생산비 및 경영비

2008년 10a당 생산비는 논벼가 630천원으로 전년 607천원보다 3.8% 증가하였으며, 마늘은 1,677천원으로 전년 1,535천원보다 9.3% 증가하고, 양파는 1,286천원으로 전년 1,186천원보다 8.4% 증가하였으며, 고추 또한 1,732천원으로 전년 1,581천원보다 9.6% 증가하였다.

2008년 10a당 경영비는 마늘이 983천원으로 가장 많고, 고추가 814천원, 양파 803천원, 논벼가 389천원으로 나타났다.

2008년 조수입에서 경영비를 차감한 10a당 소득을 보면 양파가 2,345천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고추 1,822천원, 마늘 1,146천원, 논벼 624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 대비 생산비 증가폭이 가장 큰 품목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고추가 53.7%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양파 39.6%, 마늘 36.8%, 논벼 1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47>

주요 농산물 생산비 및 경영비(10a당)

(단위 : 천원)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7대비	
								증감	증감률(%)
논 벼	조수입(A)	737	1,041	879	892	854	1,013	159	18.6
	생산비(B)	412	538	588	600	607	630	23	3.8
	경영비(C)	198	280	334	350	364	389	25	6.9
	순수익(A-B)	325	503	292	292	247	383	136	55.1
	소 득(A-C)	539	761	546	542	490	624	134	27.3
마늘	조수입(A)	2,001	1,427	2,007	1,794	2,347	2,129	△218	△9.3
	생산비(B)	1,067	1,226	1,423	1,475	1,535	1,677	142	9.3
	경영비(C)	582	683	798	853	904	983	79	8.7
	순수익(A-B)	934	201	584	319	812	452	△360	△44.3
	소 득(A-C)	1,420	744	1,209	941	1,443	1,146	△297	△20.6
양파	조수입(A)	1,178	1,519	1,908	1,849	1,725	3,148	1,423	82.5
	생산비(B)	733	921	1,048	1,103	1,186	1,286	100	8.4
	경영비(C)	414	485	610	666	732	803	71	9.7
	순수익(A-B)	445	598	860	746	539	1,862	1,323	245.5
	소 득(A-C)	764	1,034	1,298	1,183	994	2,345	1,351	135.9
고추	조수입(A)	1,613	1,837	2,209	2,484	2,544	2,636	92	3.6
	생산비(B)	937	1,127	1,497	1,617	1,581	1,732	151	9.6
	경영비(C)	347	428	638	693	752	814	62	8.2
	순수익(A-B)	676	711	712	867	963	904	△59	△6.1
	소 득(A-C)	1,266	1,410	1,572	1,791	1,793	1,822	29	1.6

자료 : 통계청 농산물생산비통계

(정책통계담당관실 사무관 김규섭)

제2장 국내 농식품 수급동향

제1절 국내 주요농산물 수급동향

1. 식량작물

2008년도의 식량작물 재배면적은 2007년도의 1,161천ha보다 16천ha가 줄어든 1,145천ha 수준이며, 식량작물중 벼재배면적은 전년의 936천ha보다 12천ha가 줄어든 924천ha이었다. 이는 쌀 수급균형 회복을 위한 정부의 벼 적정생산 유도정책 실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경지이용면적중 식량작물 재배비율은 전년도 65.3%에서 65.1%로 소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벼와 맥류, 두류의 재배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맥류의 경우는 재고량의 증가추세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적정 재배면적 유도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5천ha 감소하였다.

전체곡물 생산량은 매년 다소 차이는 있지만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8양곡년도에는 총 5,015천톤이 생산되어 전년도 5,315천톤에 비해 300천톤이 감소되었는 바, 이는 국내곡물생산량의 9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쌀의 생산량이 기상악화로 흉년이 들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소비량은 2008년도의 19,717천톤보다 547천톤이 줄어든 19,170천톤이며, 이는 가공용 밀과 보리쌀, 서류의 소비량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쌀의 경우 국민식생활 변화 등에 따라 식용소비는 2007년보다 79천톤 수준 감소한 반면, 주정용 물량은 2007년도 보다 65천톤이 감소한 137천톤을 공급하였다. 이와 같은 수입쌀 재고감축 노력으로 2008양곡년도말 국가전체 쌀 재고량은 690천톤 수준이다.

<표 1-2-1>

주요작물의 경지이용면적 추이

(단위 : 천ha, %)

연도	경지 이용 면적	식 량 작 물					채 소		과 실		기 타	
		소계	구성비	미곡	맥류	기타 품목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1990	2,409	1,669	69.3	1,244	160	265	277	11.5	132	5.5	331	13.7
1995	2,197	1,346	61.3	1,056	90	200	322	14.7	172	7.8	357	16.2
1996	2,142	1,340	62.6	1,050	95	195	311	14.5	171	8.0	320	14.9
1997	2,097	1,314	62.7	1,052	70	192	285	13.6	174	8.3	324	15.4
1998	2,118	1,331	62.8	1,059	83	189	278	13.1	173	8.2	336	15.9
1999	2,116	1,325	62.6	1,066	77	182	289	13.7	171	8.1	331	15.6
2000	2,098	1,316	62.7	1,072	68	176	296	14.1	169	8.1	317	15.1
2003	1,936	1,234	63.7	1,016	65	153	245	12.3	159	8.2	298	15.4
2004	1,941	1,231	63.4	1,001	63	167	255	13.1	153	7.9	302	15.6
2005	1,921	1,232	64.1	980	61	191	240	12.5	150	7.8	300	15.6
2006	1,860	1,178	63.3	955	58	165	234	12.6	147	7.9	301	16.2
2007	1,855	1,161	62.6	950	56	155	222	12.0	148	8.0	324	17.5
2008	1,834	1,145	62.4	936	56	153	222	12.1	149	8.1	318	17.4

주 : 기타는 시설작물, 수원지, 기타작물임.
 자료 : 통계청 농어업생산통계과

<표 1-2-2>

연도별 전체양곡 수급상황

(단위 : 천톤)

양곡년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4	2005	2006	2007	2008
생 산	7,048	7,102	7,013	5,816	5,931	5,041	5,720	5,433	5,315	5,015
수 입	5,051	5,051	10,022	14,258	14,624	13,385	13,860	14,099	14,190	14,084
소 비	12,596	14,667	16,282	19,974	19,961	18,880	19,779	19,771	19,717	19,170
- 식량용	10,124	9,921	9,981	10,601	10,014	10,148	10,892	10,479	10,477	10,196
- 사료용	2,472	4,746	6,301	9,373	9,285	8,732	8,887	9,292	9,240	8,974
연 말 재 고	2,179	2,280	3,657	3,119	2,625	2,706	2,507	2,189	1,977	1,906
자급률(%) (사료용 제외)	56.0 (69.6)	48.4 (71.6)	43.1 (70.3)	29.1 (55.7)	29.7 (55.6)	26.8 (50.2)	29.4 (54.0)	27.7 (52.7)	27.2 (51.6)	26.2 (49.2)
1인당 연간 소비량(kg)	195.1	181.7	167.0	160.5	153.3	138.5	137.5	134.4	132.5	130.9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원예정책관

* 곡물자급도는 생산/수요, 식량자급도는 생산/(소비-사료) 비율임.

2008년도 전체 곡물자급도는 26.2%로 2007년보다 1.0% 감소되고 사료용을 제외하면 전년도 51.6%보다 2.4%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도 국민 1인당 양곡소비량은 2007년의 132.5kg에서 130.9kg으로 1.6kg이 줄어들었다.

곡종별로 보면 쌀이 전년도 76.9kg에서 1.1kg이 줄어든 75.8kg으로 나타났다으며, 보리쌀은 1.1kg으로 전년과 동일하였고, 그 외 품목들은 전반적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3>

1인당 연간 양곡소비량 추이

(단위 : kg)

양곡년도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 류	기 타
1970	219.4	136.4	37.3	26.1	1.1	5.3	10.2	3.0
1980	195.1	132.4	13.8	29.4	3.1	8.0	6.3	2.1
1985	181.7	128.1	4.6	32.1	3.1	9.3	3.1	1.4
1990	167.0	119.6	1.6	29.8	2.7	8.3	3.3	1.7
1995	160.5	106.5	1.5	33.9	3.3	9.0	3.0	3.3
1997	157.9	102.4	1.7	33.7	3.7	9.3	3.6	3.5
1998	156.4	99.2	1.5	34.6	4.8	9.7	3.2	3.4
1999	156.9	96.9	1.5	35.8	5.8	9.9	3.8	3.2
2000	153.3	93.6	1.6	35.9	5.9	8.5	4.3	3.5
2001	145.5	88.9	1.7	34.4	6.3	8.2	2.5	3.5
2002	144.0	87.0	1.5	34.6	5.7	8.4	3.4	3.4
2003	138.0	83.2	1.0	32.7	6.2	8.0	3.2	3.7
2004	138.5	82.0	1.1	34.1	5.6	8.5	3.1	4.1
2005	137.5	80.7	1.2	33.2	4.9	9.3	4.2	4.0
2006	133.8	78.8	1.2	32.4	4.6	9.1	3.9	3.8
2007	132.5	76.9	1.1	33.7	4.6	8.9	3.3	4.0
2008	130.9	75.8	1.1	33.7	5.0	8.0	3.6	4.2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원예정책관

(식량정책과 서기관 박선우)

2. 원예·특용작물

가. 채소류

2008년 채소류의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0.7% 감소한 275.5천ha이었고, 생산량은 작황이 좋아 2007년보다 5.8% 증가한 9,935천톤이었다.

봄무·배추 재배면적은 32.0천ha로 전년에 비해 0.3%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도 지난해에 비해 0.7% 증가한 1,484천톤이었다. 고랭지무·배추는 재배면적이 8.9천ha로 전년대비 0.5% 감소하였고 생산량은 323천톤으로 작황이 좋았던 전년보다 4.7%가 감소하였다. 가을무·배추의 재배면적은 2007년 대비 22.3% 증가한 23.6천ha이었고, 생산량은 작황이 좋아 36.4% 증가한 2,180천톤이었다.

고추는 재배면적이 48.8천ha로 전년보다 11.0% 감소하였다. 생산량은 작황이 좋았던 2007년 160천톤보다 23.0% 감소한 124천톤이 생산되었다. 마늘은 재배면적이 28.4천ha로 전년보다 5.3% 증가하였고 작황이 좋아 8.0% 증가한 375천톤이 생산되었다. 양파는 2007년 대비 재배면적이 13.3% 감소한 15.4천ha가 재배되었고 생산량은 14.7% 감소한 1,035천톤이 생산되었다.

<표 1-2-4>

채소류 수급동향

(단위 : 천톤)

구 분	1990	1995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수요	계	8,697	10,670	11,502	10,520	10,971	10,193	10,730	10,224	10,753
	내수	8,677	10,611	11,461	10,484	10,915	10,104	10,658	10,155	10,658
	수출	20	59	41	36	56	89	72	69	95
공급	계	8,697	10,670	11,502	10,520	10,971	10,193	10,730	10,224	10,753
	생산	8,677	10,586	11,282	10,068	10,468	9,605	9,994	9,394	9,935
	수입	20	84	220	452	503	588	736	830	818
1인당소비량(kg)	132.6	160.6	165.9	152.6	156.8	145.5	153.8	149.2	-	

주 : 1인당소비량은 농촌경제연구원 자료
 자료 : 농림수산물식품부 식량원예정책관

(채소특작과 농업사무관 안형덕)

나. 과실류

과수 총 재배면적은 1997년 176.1천ha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2008년은 153.7천ha로 전년에 비해 0.4천ha가 감소하였다. 사과와 감, 기타 품목이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 했으나, 배, 포도, 복숭아, 감귤은 각각 1.6천ha, 0.6천ha, 0.6천ha, 0.2천ha 감소하였다

과실 생산량은 2,697.7천톤으로 전년보다 52.1천톤이 감소하였는데, 사과, 배 등은 기상 여건은 생육기 전반에 걸쳐 좋아 대부분 단수가 증가했으나, 해거리 현상으로 인한 감귤의 생산량이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과실가격은 단위면적 당 생산량 증가에 따른 과실 공급량의 증가로 전년대비 약보합세를 보였으며, 감귤은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하였다

<표 1-2-5>

과실류 수급동향

(단위 : 천톤)

구 분		1990	1995	2000	2004	2005	2006	2007	2008
수요	내수	1,790.4	2,472.7	2,746.7	2,829.6	3,028.5	3,030.1	3,294.4	3,181.9
	수출	13.0	10.9	20.2	28.2	36.1	24.8	30.5	39.0
공급	생산	1,766.2	2,300.1	2,428.7	2,411.3	2,593.0	2,504.1	2,749.8	2,697.7
	수입	37.2	183.5	338.2	446.5	471.6	550.8	575.1	523.2
1인당 소비량(kg)		41.8	54.8	58.4	58.8	62.7	62.2	67.9	65.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원예정책관

(과수화훼과 농업사무관 김병천)

다. 화훼류

화훼류의 2008년도 재배면적은 7,073ha, 재배농가수는 11,588호로 2007년 대비 각각 5.8%와 3.6% 감소되었으며, 이는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수용, 유류·자재비 등 생산비 증가에 따른 생산여건 악화 등의 원인으로 보인다.

생산액은 2007년도 대비 2.1%가 감소한 9,043억원으로 조사되었으며, 1인당 연간 소비액은 약 18천원으로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수출은 1990년대 시설투자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며, 유가상승, 환율하락, 수출국내의 경쟁심화 등의 원인으로 2006년도에는 일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주 수출시장인 일본의 은퇴농 증가, 생산량 감소 등으로 주요 절화품목의 수출이 증가하고, 유럽시장과 러시아 등의 신시장 개척 및 신규 품목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2008년도 수출은 전년보다 31% 증가한 76,222천\$를 기록하였다.

반면, 수입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년보다 4% 증가된 42,757천\$를 기록하면서 2008년도 무역수지 흑자금액은 33,465천\$로 나타났다.

<표 1-2-6>

화훼산업 현황

구 분	1990	1995	2000	2004	2005	2006	2007	2008
재배농가 (호)	8,945	12,509	13,080	13,159	12,859	12,440	12,021	11,588
재배면적 (ha)	3,674	5,343	6,047	7,950	7,952	7,688	7,509	7,073
생산액 (억원)	2,393	5,090	6,649	9,218	10,105	9,411	9,237	9,043
수출액 (천\$)	1,443	6,363	28,888	48,527	52,142	40,414	58,089	76,222
수입액 (천\$)	5,907	26,738	19,472	23,366	28,845	35,819	40,974	42,757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원예정책관

(과수화훼과 농업사무관 김을수)

라. 특용작물

참깨 생산량은 1997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산 생산량은 2007년 생산 대비 11% 증가한 19.5천톤, 2008년 자급률은 20% 수준이다.

* 생산량 : (1997) 33천톤 → (2000) 32 → (2005) 23.5 → (2008) 19.5

참깨 수입은 연간 약 60~70천톤 내외 수준이며 수입물량의 대부분이 시장접근물량 도입사업(추천대행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을 통해 수입되어 국내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땅콩 생산량은 1998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산 생산량은 2007년산 대비 7% 증가한 7.5천톤이며, 2008년 자급률은 18% 수준이다.

* 생산량 : (1998) 14천톤 → (2000) 9 → (2005) 6.6 → (2008) 7.5

<표 1-2-7>

특용작물 수급동향

(단위 : 천톤)

구 분	참 깨						땅 콩						
	1990	1995	2000	2003	2005	2008	1990	1995	2000	2003	2005	2008	
수 요	계	57.8	88.9	101.6	112.2	100.6	87.9	44.2	29.7	42.9	44.3	40.8	39.0
	당년소비	56.8	86.3	94.6	104.6	90.7	81.4	40.1	25.1	41.0	43.8	39.9	38.0
	수 출	0.4	-	-	-	-	-	-	2.3	0.4	-	-	-
공 급	차년이월	0.6	2.6	7.0	7.6	9.9	6.5	4.1	2.3	1.5	0.5	0.9	1.0
	계	57.8	88.9	101.6	112.2	100.6	87.6	44.2	29.7	42.9	44.3	40.8	39.0
	전년이월	4.7	19.0	7.5	7.2	13.1	6.5	8.1	3.3	2.7	0.0	1.1	0.9
	생 산	38.1	27.9	24.1	23.8	20.9	17.5	28.7	16.8	12.4	11.2	8.3	7.0
수 입	15.0	42.0	70.0	81.2	66.6	63.9	7.4	9.6	27.8	33.1	31.4	31.1	
자급률(%)	67	32	30	23	23	20	72	67	30	26	21	18	

* 생산량은 전년도 실적 적용

자료 : 농림수산물부 식량원예정책관

버섯 생산량은 소득 향상과 식품의 고급화에 따라 수요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08년 농산버섯 생산량은 2007년 대비 8.4% 증가한 158.6천톤이며, 양송이, 느타리, 팽이, 새송이버섯 등 4품목 생산량이 150천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96%를 차지한다.

* 생산량 : (1997) 114천톤 → (2000) 117 → (2005) 162 → (2008) 158

<표 1-2-8>

버섯류 수급동향

(단위 : 천톤)

		1990	1995	2000	2003	2005	2008
수	계	58.4	103.3	126.8	157.6	174.2	172.8
	당년소비	55.4	103.2	126.6	157.3	173.7	164.1
요	수출	3.0	0.1	0.2	0.3	0.5	8.7
	차년이월	-	-	-	-	-	-
공	계	58.4	103.3	126.8	157.6	174.2	172.8
	전년이월	-	-	-	-	-	-
급	생산	55.3	95.8	117.6	145.3	162.1	158.6
	수입	3.1	7.5	9.2	12.3	12.1	14.2
자급률(%)		100	93	93	92	93	97

* 생산량은 전년도 실적 적용

수출은 팽이, 새송이버섯의 생산기술 향상에 의한 가격·품질경쟁력이 높아지면서 2006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 수출액은 2007년 대비 169% 상승한 23,185천불이다.

* 수출액 : (2000) 5,562천불 → (2007) 8,633 → (2008) 23,185

<표 1-2-9>

버섯종류별 수출액

(단위 : 천불)

	'95	'06	'07	'08
수출액(천불)	1,226	4,166	8,633	23,185
새 송 이	-	1,631	3,455	7,298
팽 이	-	1,747	3,449	11,259
영 지	383	291	383	508
양 송 이	36	17	48	118
느 타 리	-	140	693	1,347
기 타	807	340	605	2,65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원예정책관

(채소특작과 농업사무관 박윤식)

마. 인삼류

고려인삼은 우리민족 고유의 특산품으로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요 수출 상품이며, 우리나라의 인삼가공기술은 세계 선두로서 해외에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인삼의 재배면적은 1990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였으나, 1996년 홍삼전매제 폐지 이후 재배면적이 지속, 증가추세이다. 2008년 인삼 전체 재배면적은 2007년에 비해 8.8% 증가한 19,408ha 이다.

인삼재배 농가수는 2008년 24,298호로 전체농가의 1.4%에 불과하나, 2008년도 인삼수출액은 9,723만불로서 전체 농축산물 수출의 3.5%를 차지하여, 인삼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전략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표 1-2-10>

인삼 생산동향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면 적	12,184ha	9,375	12,445	14,153	16,405	17,831	19,408
생 산 량	13,889톤	11,971	13,664	14,561	19,850	21,818	24,613
농 가 수	36,404호	23,172	23,011	15,793	15,856	19,850	24,298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원예정책관

(채소특작팀 행정사무관 박경희)

3. 축산물과 사료작물

가. 축산물

1) 쇠고기

쇠고기 소비량은 2003년 말에 발생한 미국과 캐나다의 광우병 여파와 국내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2004년과 2005년에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6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어, 2008년도 국내 소비량은 전년보다 1.0% 감소한 365천톤이었다.

2008년도 소비량 중 수입산은 191천톤으로 전년보다 3.1% 감소하였고, 국내산은 173천톤으로 1.5% 증가하였다. 한편, 연간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7.5kg으로 전년보다 1.3% 감소하였다.

<표 1-2-11>

쇠고기 수급동향

(단위 : 천톤)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 총 소비량	384	403	390	328	317	330	369	365
－ 국내산	164	147	142	145	152	158	171	173
－ 수입산	220	255	248	183	164	172	198	191
○ 1인당 소비량(kg)	8.1	8.5	8.1	6.8	6.7	6.8	7.6	7.5

자료 : 농림수산물부 축산정책관

산지 소값은 2003년 12월 미국과 캐나다의 광우병 발생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2004년 5월 350만원(큰수소 기준)까지 하락하였다가 쇠고기 소비촉진 홍보 등 산지 소값 안정대책의 추진으로 소비가 회복되면서 2005년 465만원, 2006년 425만원, 2007년 475만원대로 보합세를 유지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한미 FTA협상 체결에 따른 여파로 2008년 산지평균가격은 390만원으로 약세를 보였다.

소 사육두수는 산지 소값이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2003년 3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어 2004년에는 1,666천두, 2005년에는 1,819천두, 2006년에는 2,020천두, 2007년에는 2,201천두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8년도 사육두수는 2,430천두로 전년보다 10.4% 증가하였다.

한편, 한육우 사육가구수는 2006년 12월 190천호, 2007년 12월 184천호에서 2008년 12월 181천호로 1.6% 감소하였으며, 가구당 평균 사육두수는 2006년 12월 10.6두, 2007년 12월 11.9두에서 2008년 12월 13.4두로 규모화가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사육두수 증가는 가임 암소수 증가, 정액공급량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돼지고기

돼지고기의 2008년 총 소비량은 2007년 931천톤보다 0.5% 감소한 927천톤이며, 1인당 소비량은 2007년 19.2kg에서 2008년 19.1kg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돼지사육두수는 PMWS 등 소모성질환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2007년 12월 9,606천두에서 2008년 12월에는 9,087천두로 5.4% 감소하였고, 2008년 12월 모돈수는 913천두로 2007년 12월 1,004천두보다 9.1% 감소하였다.

사육가구수는 2007년 12월 9.8천가구에서 2008년 12월 7.7천 가구로 21.4% 감소하였으나, 가구당 평균 사육두수가 2007년 12월 977두에서 2008년 12월 1,183두로 증가하여 규모화 및 전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산지 돼지가격은 2007년 연간 평균가격이 221천원/100kg이었으나 2008년은 국내산 선호도 증가와 원산지 표시 강화 등으로 276천원/100kg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3) 닭고기

2008년 닭고기 총 소비량은 43.6만톤으로 2007년에 비해 0.5% 증가하였고, 1인당 소비량은 9.0kg으로 전년도 9.0kg와 동일하였다. 닭고기 산지가격은 전년도보다 40.2% 증가하여 연평균 1,567원/kg이었으며, 2008년 12월 기준 전체 사육수수는 전년도보다 3.1% 감소한 54백만수였다.

전체 사육농가의 수는 2008년 12월에 1.3천호였으며, 호당 사육수수는 43,410수였다. 30,000수 이상 전업가구 수는 2007년보다 8.2% 감소한 874호였다.

4) 계란

계란의 2008년 총 소비량은 544천톤으로 2007년보다 0.6% 감소하였고, 1인당 소비량은 0.9% 감소한 11.2kg이었으며 산지 계란가격은 전년보다 36.2% 증가한 1,069원/10개(특란기준)이었다.

5) 우유

2008년 원유 총 생산량은 2,139천톤으로 2007년 2,188천톤 대비 2.2%(49천톤) 감소하였다.

유제품 소비량(수출포함)은 3,035천톤(치즈, 분유 등의 수입 유제품 포함)으로 2007년 3,101천톤 보다 2.1% 증가하였고, 시유 소비량은 2007년 1,697천톤 보다 0.3% 증가한 1,702천톤이었다.

1인당 연간 유제품 소비량은 61.3kg으로 2007년 63.0kg보다 2.7% 감소한 반면, 음용유 소비량은 35.0kg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는 2008년 5월 시유 덤주기행사 중단 및 10월 유제품가격 인상의 영향으로 우유 및 유제품 소비량이 감소하였다.

2008년도 국산원유(2,139천톤)중 유제품 가공에 직접 투입한량은 1,856천톤(백색시유 1,385, 가공시유 200, 기타 유제품 271)으로서 전년도 투입량(1,875천톤)에 비해 1.0% 감소하였으며, 잉여량(분유 가공량)은 전년(313천톤)에 비해 9.7% 감소한 283천톤 수준이었다. 아울러, 국내 분유재고량은 수입유제품의 가격상승과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유제품 수입이 억제되었고, 이러한 국제 유제품 시장상황에 맞춰 진흥회 잉여원유의 판매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하여 국산원유 및 분유의 사용을 촉진하여 연말 분유 재고량은 7.8천톤으로 2007년도에 비해 11% 감소하였다.

우유 자급률은 국내 생산이 감소한 반면 국내 소비가 증가하여 전년에 비해 0.2%p 증가한 71.8%를 기록하였으며, 원유 생산비의 경우 배합사료 가격인상 등으로 전년(494원/kg)보다 15% 높아진 568원/kg로 조사되었다.

젖소 사육두수는 2008년 12월 446천두로 지난해 453천두 보다 1.7% 감소하였으며, 젖소 사육 농가수는 2007년 12월 7.7천호에서 2008년 12월 7.0

천호로 8.6% 감소되었다.

낙농업의 전업화로 인해 가구당 사육두수는 2008년 12월 64두로 2007년 12월 59두 보다 8.5% 증가하였다.

(축산경영과 행정사무관 이성주)

나. 사료작물

2008년 가축용 사료의 총 수급량은 23,833천톤으로 전년(22,797천톤) 보다 4.5%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농후사료(농가자급사료 포함)가 18,779천톤, 조사료가 5,054천톤을 차지하였다. 농후사료 중 배합사료의 생산은 16,323천톤으로 전년(16,363천톤)보다 0.2% 감소하였다.

<표 1-2-12>

사료 수급 추이

(단위 : 천톤, %)

구 분	1990	1995	2000	2006	2007 (A)	2008 (B)	증감률 (B/A)
합 계	17,116	23,302	19,289	21,271	22,797	23,833	4.5
농 후 사 료	11,173	15,700	15,897	17,049	18,180	18,779	3.3
- 배 합 사 료	10,529	14,856	15,105	15,693	16,363	16,323	△0.2
- 농가자급사료	644	844	792	1,356	1,817	2,456	35.2
조 사 료	6,003	7,763	3,392	4,222	4,617	5,054	8.6
- 사료작물 및 목초류	2,832	2,498	992	1,326	1,490	1,792	16.8
- 산야초, 벼짚 등	3,171	5,265	2,400	2,896	3,127	3,262	4.1

주 : 조사료는 건물(乾物) 상태 기준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종별로는 한육우용 7.3% 증가한 반면, 양돈용 1.9%, 양계용 2.7%, 젖소용은 5.5% 감소하였다. 지난해에 비하여 한육우 사육두수가 증가하였

으나, 사료가격 상승 및 젓소 사육두수 감소 등으로 2008년도 전체 배합사료 생산량이 전년대비 0.2% 감소되었다. 기타가축용 배합사료 생산량도 2.2% 감소하였다.

옥수수 등 사료용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축산업은 해외곡물가격, 해상운임 및 환율변동에 따라 국내 사료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사료곡물의 국제가격 변동에 따라 사료가격 변동을 흡수할 수 있는 국내기반이 취약하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08년 10월이후 옥수수, 대두박 등 국제곡물가격의 안정과 해상운임(Ocean Freight)의 하락으로 인하여 배합사료가격은 2008년 이후 6차례에 걸쳐 약 33.3% 인하되었다.

<표 1-2-13>

배합사료 용도별 생산량

(단위 : 천톤, %)

구 분	1990	1995	2000	2003	2006	2007 (A)	2008 (B)	증감률 (B/A)
합 계	10,529	14,856	15,105	15,436	15,693	16,363	16,323	△0.2
양 계 용	3,274	3,766	3,867	3,907	4,267	4,403	4,286	△2.7
양 돈 용	3,551	4,725	5,215	5,663	5,175	5,409	5,307	△1.9
젓 소 용	1,790	2,905	1,891	1,774	1,539	1,449	1,370	△5.5
한육우용	1,667	3,681	3,340	2,926	3,574	3,880	4,165	7.3
기 타	247	589	792	1,179	1,138	1,222	1,195	△2.2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 사료자원 개발을 통한 사료자급도를 높이고 건전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초지개발과 청예 및 동계 사료작물의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2007년에 신규로 25ha의 초지를 조성한 바 있다.

<표 1-2-14>

초지조성 실적

(단위 : ha, 천톤, %)

구 분	1995	1999	2000	2003	2006	2007 (A)	2008 (B)	증감률 (B/A)
신규조성면적	413	430	253	58	25	25	26	3.8
관 리 면 적	66,301	53,783	51,870	46,546	42,114	41,432	40,790	△1.6
목 초 생 산 량	462	371	364	343	294	290	286	△1.4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

2008년 현재 초지 총 관리면적은 40천ha으로 286천톤(말린 무게 기준)의 목초를 생산하였고 전년보다 1.6% 감소하였다. 이는 환경문제로 인한 규제 강화와 지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신규 초지조성은 어려운 반면, 레저·관광산업용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리제외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고 있다.

(축산경영과 농업사무관 안규정, 축산정책과 수의사무관 우만수)

제2절 식품 수급동향

1. 식품소비와 식생활의 변화

가. 식품비 지출구조의 변화

1982~2008년간 연평균 식료품비 지출액의 증가율은 7.1%로 같은 기간 소비지출액 증가율 9.1%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표 1-2-13>. 식품류별로는 외식비(16.0%), 빵 및 과자류(7.4%), 과일류(7.1%), 차·음료주류(6.8%)가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곡류·식빵(1.1%), 조미식품(2.8%)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식료품비 지출의 식품별 비중을 보면 외식비가 1982년 5.9%에서 2008년 46.4%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곡류·식빵의 비중은 같은 기간 34.5%에서 7.6%로 감소하였다. 그밖에 2008년 식품류별 비중은 육류 8.1%, 어패류 5.9%, 채소·해조류 7.1%, 과일류 6.3%이다.

<표 1-2-15>

식품류별 월평균 소비지출액 추이(도시가구평균)

(단위 : 천원, %)

연도	소비 지출	식료품	곡류, 식빵	육류	낙농품	어패류	채소, 해조류	과실	조미 식품	빵, 과자류	차,음료, 주류	기타 식품	외식
1982	248.9	101.6 (100)	35.1 (34.5)	11.5 (11.3)	4.5 (4.4)	8.0 (7.9)	12.2 (12.0)	6.5 (6.4)	8.3 (8.2)	4.2 (4.1)	4.5 (4.4)	0.3 (0.3)	6.0 (5.9)
1985	317.0	118.8 (100)	34.6 (29.1)	14.8 (12.5)	6.0 (5.1)	10.2 (8.6)	15.2 (12.8)	7.4 (6.2)	10.5 (8.8)	5.2 (4.4)	5.2 (4.4)	0.2 (0.2)	8.8 (7.4)
1990	685.6	220.8 (100)	44.8 (20.3)	26.1 (11.8)	12.0 (5.4)	21.0 (9.5)	24.8 (11.2)	15.6 (7.1)	11.7 (5.3)	8.2 (3.7)	8.2 (3.7)	2.6 (1.2)	44.8 (20.3)
1995	1,265.9	367.1 (100)	46.7 (12.7)	42.2 (11.5)	17.1 (4.7)	33.3 (9.1)	35.6 (9.7)	28.5 (7.8)	15.7 (4.3)	13.5 (3.7)	13.7 (3.7)	5.0 (1.4)	115.7 (31.5)
2000	1,632.3	447.0 (100)	56.7 (12.7)	45.0 (10.1)	19.3 (4.3)	32.1 (7.2)	35.6 (8.0)	27.3 (6.1)	15.1 (3.4)	17.3 (3.9)	16.4 (3.7)	6.2 (1.4)	176.0 (39.4)
2002	1,834.8	481.0 (100)	53.3 (11.1)	46.8 (9.7)	18.9 (3.9)	34.8 (7.2)	36.7 (7.6)	28.5 (5.9)	13.9 (2.9)	18.6 (3.9)	18.5 (3.9)	9.5 (2.0)	201.5 (41.9)
2003	1,922.9	509.6 (100)	44.5 (8.7)	40.9 (8.0)	19.9 (3.9)	31.8 (6.2)	40.1 (7.9)	28.2 (5.5)	14.2 (2.8)	22.3 (4.4)	21.3 (4.2)	13.4 (2.6)	233.2 (45.8)
2004	2,018.2	544.8 (100)	48.3 (8.9)	39.7 (7.3)	21.1 (3.9)	32.7 (6.0)	40.7 (7.5)	32.9 (6.0)	18.2 (3.3)	23.2 (4.3)	23.0 (4.2)	11.2 (2.0)	253.9 (46.6)
2005	2,091.9	551.6 (100)	45.8 (8.3)	42.4 (7.7)	22.7 (4.1)	32.5 (5.9)	40.5 (7.3)	34.1 (6.2)	17.7 (3.2)	23.1 (4.2)	22.5 (4.1)	14.3 (2.6)	255.9 (46.4)
2006	2173.9	558.3 (100)	42.9 (7.7)	43.8 (7.8)	22.0 (3.9)	33.7 (6.0)	41.9 (7.5)	35.7 (6.4)	17.5 (3.1)	22.5 (4.0)	23.1 (4.1)	16.9 (3.0)	258.3 (46.3)
2007	2269.6	570.4 (100)	42.1 (7.4)	44.9 (7.9)	21.7 (3.8)	34.4 (6.0)	43.3 (7.6)	36.2 (6.3)	15.9 (2.8)	23.5 (4.1)	23.2 (4.1)	17.3 (3.0)	267.9 (47.0)
2008	2373.1	607.4 (100.0)	46.2 (7.6)	48.9 (8.1)	24.5 (4.0)	35.9 (5.9)	43.4 (7.1)	38.4 (6.3)	17.2 (2.8)	26.8 (4.4)	25.0 (4.1)	19.2 (3.2)	281.9 (46.4)
82-07	9.1	7.1	1.1	5.7	6.7	5.9	5.0	7.1	2.8	7.4	6.8	17.3	16.0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나. 소득계층별 소비지출액 비교

2008년의 경우 소득계층별로 소비지출액을 비교하면,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지출액은 대부분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식품류에 따라 증가정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2-14>. 중간소득계층(4~7분위) 근로자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소득 증가에 따른 지출액 증가정도가 큰 품목은 외식, 과일류, 차·음료 및 주류, 육류, 빵 및 과자류 등으로 나타났다. 소득 증가에 따른 지출액 증가정도가 작은 품목은 조미식품, 곡류 및 식빵, 채소·해조류 등이다.

<표 1-2-16>

소득계층별 소비지출액 비교(2008년도 도시가구 평균)

(단위 : 천원)

구 분	1~3분위		4~7분위		8~10분위	
소 비 지 출	1,392	(61.8)	2,250	(100)	3,518	(156.4)
식 료 품	401	(66.3)	605	(100)	817	(135.1)
곡 류 및 식 빵	41	(89.5)	46	(100)	51	(110.8)
육 류	36	(74.0)	49	(100)	62	(127.5)
낙 농 품	17	(68.4)	25	(100)	31	(122.1)
어 개 류	30	(87.4)	34	(100)	43	(126.0)
채 소 · 해 조 류	38	(90.4)	43	(100)	49	(115.8)
과 실 류	28	(75.0)	37	(100)	50	(135.2)
조 미 식 품	16	(97.8)	17	(100)	19	(110.3)
빵 및 과 자 류	17	(62.7)	28	(100)	35	(126.4)
차 · 음 료 및 주 류	18	(72.7)	25	(100)	32	(129.6)
외 식	145	(72.5)	283	(100)	417	(147.5)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다. 식품영양소 수요구조의 변화

식품 소비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식품영양소의 수요구조도 변화한다. 영양소별로 1인 1일당 에너지와 당질은 대체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지방과 비타민C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을 기준으로 섭취량은 에너지 1,810kcal, 단백질 65.4g, 지방 37.7g, 철분 12.9mg, 비타민C 92.8mg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2-15>.

<표 1-2-17>

1인 1일당(전국평균) 식품영양소별 섭취량 추이

	에너지 kcal	단백질 g	지방 g	칼슘 mg	철분 mg	비타민A (IU/R.E)	티아민 mg	리보플라빈 mg	나이아신 mg	비타민C mg
1985	1,936	74.5	29.5	569	15.6	1,846	1.34	1.21	25.7	64.7
1990	1,868	78.9	28.9	517	22.7	1,662	1.15	1.27	21.6	81.2
1991	1,930	73.0	35.6	518	23.0	550	1.27	1.24	17.5	92.2
1992	1,875	74.2	34.5	538	22.9	535	1.22	1.22	17.4	102.5
1993	1,848	72.6	36.9	523	22.4	440	1.37	1.11	16.5	92.6
1994	1,770	71.9	35.9	556	22.0	411	1.12	1.19	16.6	93.5
1995	1,839	73.3	38.5	531	21.9	443	1.16	1.20	16.7	98.3
1998	1,985	74.2	41.5	511	12.5	625	1.35	1.09	15.7	123.1
2001	1,976	71.6	41.6	497	12.2	624	1.27	1.13	16.9	132.6
2005	2,016	75.8	46.0	553	13.6	782	1.30	1.20	17.1	98.2
2007	1,810	65.4	37.7	462	12.9	711	1.24	1.05	14.7	92.8

주 : 1)1991년부터 비타민A의 단위는 RE

2)1998년도에는 식품성분표 제5개정판(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1996)을 이용함에 따라 쌀의 철 함량이 3.7mg/100g에서 0.5mg/100g으로 하향 조정된 수치를 적용하여 환산함.

3)1995년 이전에는 가구별 칭량법, 1998년도는 개인별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실시된 결과임.

4)2001년도는 식품성분표 제6개정판(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2001)을 이용함.

5)2007년도는 식품성분표 제7개정판(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2006)을 이용하였음.

6)2005년도는 새로 설정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한국영양학회, 2005)에 근거함.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08.

평균 영양소 섭취량을 2005년 11월 개정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한국영양학회)과 비교한 결과, 대부분 해당 영양소의 권장섭취수준과 유사했으나 칼슘섭취량은 권장량의 63.4%로 매우 낮았다. 철분의 경우 1995년까지 권장량을 초과하다가 1998년 미달수준을 보이게 된 것은 1998년 식품성분표상에 쌀의 철분 함량이 하향 조정된 데 기인한다. 단백질(142.9%), 철(119.8), 티아민(114.4%),비타민A(108.4%), 나이아신(102.6%)은 섭취기준을 다소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에너지는 87.5%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1-2-18>

영양소별 권장섭취 기준에 대한 섭취비율의 변화 추이

(단위 : %)

연도 영양소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8	2001	2005	2007
에너지	90.4	91.1	87.7	87.5	93.1	90.0	88.6	94.5	94.8	98.4	87.5
단백질	96.9	110.4	107.7	118.2	118.1	117.9	116.7	117.8	127.0	169.0	142.9
칼슘	69.4	93.0	78.1	76.2	82.3	84.0	75.4	72.8	71.0	76.3	63.4
철	109.4	112.0	167.7	156.7	177.3	176.0	159.5	91.9**	95.2	126.3	119.8
비타민 A	108.7	81.2	53.6	77.2	84.3	67.7	67.2	95.6	95.4	121.9	108.4
티아민	128.1	122.9	95.2	99.3	120.7	140.1	108.8	126.3	119.8	122.3	114.4
리보플라빈	82.0	93.8	87.3	85.0	98.4	97.3	96.0	86.2	91.0	95.8	82.5
나이아신	161.1	182.1	127.8	133.5	126.7	120.6	119.8	110.8	119.4	121.5	102.6
비타민 C	141.0	125.0	98.8	119.7	175.8	175.6	185.4	234.0	197.1	106.6	99.3

주 : 1) 1995년까지는 가구별 칭량법, 1998년도부터는 개인별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조사된 결과임.
 2) 1998년도에는 식품성분표 제5개정판(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1996)을 이용함에 따라 쌀의 철 함량이 3.7mg/100g에서 0.5mg/100g으로 하향조정된 수치를 적용하여 환산하였음.
 3) 2001년도는 식품성분표 제6개정판(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2001)을 이용하였음.
 4) 2007년도는 식품성분표 제7개정판(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2006)을 이용하였음.
 5) 2005년도는 새로 설정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한국영양학회, 2005)에 근거함.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08.

섭취에너지의 영양소 구성비율은 2007년을 기준으로 당질 67.0%, 단백질 14.7%, 지방 18.4%로 나타났다. 당질의 에너지 구성비율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단백질의 에너지 구성비율은 1985년 이후 큰 변동이 없다. 반면 지방은 1990년대 접어들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황윤재)

2. 식품 수요현황

가. 1인당 식품공급 현황

2007년에는 곡류와 채소류는 전년대비 재배면적 감소와 기후조건 악화로 인한 생육부진으로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식용공급량이 감소한 반면 과일류는 착과율이 비교적 높아 생산량이 증가하여 식용공급량이 증가하였다. 육류는 생산량과 수입량의 증가에 따라 식용공급량이 증가하였으며, 서류는 재배면적 감소와 기후의 영향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식용공급량이 감소하였고, 해조류는 생산량 증가로 식용공급량이 증가하였다.

쌀 생산량이 88천톤 감소하고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되어 1인당 식용공급량이 84.10kg에서 82.80kg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밀 수입량과 이입량은 각각 전년대비 242천톤, 31천톤 감소하였으나, 사료용 소비가 359천톤 감소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이 32.41kg에서 33.02kg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감자는 2007년 생산농가의 고령화와 타 작목으로의 전환 등의 영향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생산량이 102.8천톤 감소하여 식용공급량이 전년 대비 14.7% 감소하였다. 고구마는 2007년도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26.5%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파종기 가뭄과 수확철 비 피해로 생산이 전년 대비 3.3천톤으로 다소 증가하는데 그쳐 1인당 식용공급량이 전년 대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표 1-2-19>

품목별 1인당 연간 공급량

(단위 : kg, %)

품 목	2006(확정)	2007(잠정)	증가율(%)
곡 류	151.22	149.26	-1.30
쌀	84.10	82.80	-1.55
보 리	1.22	1.11	-9.02
밀	32.41	33.02	1.88
옥 수 수	30.58	29.77	-2.65
기 타	2.90	2.56	-11.72
서 류	14.45	12.90	-10.73
감 자	10.50	8.96	-14.67
고 구 마	3.95	3.94	-0.25
설 탕 류	21.18	20.18	-4.72
두 류	11.03	11.23	1.81
콩	9.03	9.06	0.33
팥	0.50	0.66	32.00
기 타	1.51	1.51	0.00
견 과 류	1.46	1.46	0.00
중 실 류	0.95	0.73	-23.16
참 깨	0.63	0.30	-52.38
기 타	0.33	0.42	27.27
채 소 류	153.81	149.24	-2.97
과 실 류	41.85	45.36	8.39
육 류	38.42	40.87	6.38
쇠 고 기	6.62	7.36	11.18
돼 지 고 기	17.57	18.64	6.09
닭 고 기	6.74	6.99	3.71
부 산 물	7.49	7.87	5.07
계 란 류	9.43	9.51	0.85
우 유 류	53.90	55.20	2.41
우 유	52.81	54.27	2.76
어 패 류	43.54	40.62	-6.71
어 류	28.02	20.97	-25.16
패 류	15.52	19.65	26.61
해 조 류	13.02	14.37	10.37
유 지 류	18.09	18.20	0.61
식 물 성	17.68	17.87	1.07
동 물 성	0.40	0.33	-17.50
주 류	69.85	72.23	3.41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식품수급표』, 2008.

채소류는 배추(532천톤), 무(301천톤), 파(54천톤) 등의 생산량 감소에 의해 전체 생산량이 583.1천톤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1인당 식용공급량이 153.81kg에서 149.24kg으로 3.0% 감소하였다. 배추의 생산량은 재배면적의 지속적인 감소와 잦은 강우에 따른 일조량 부족으로 작황이 부진하여 2007년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19.4% 감소하였다. 무의 재배면적은 2007년 전년대비 15.3% 감소하였다. 특히 가을무의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31.2%나 감소하여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과실의 생산량은 사과, 배, 귤 등의 주요 품목의 생산량 증가로 전년대비 245.7천톤 증가하였다. 사과는 지속적인 가격 호조의 영향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하였으며 성목면적의 증가로 생산량이 28천톤 증가하였다. 배는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3.7% 감소하였으나 기상여건이 양호하고 병충해 발생이 적어 생산량이 36천톤 증가하였다. 귤은 재배면적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개화기 기상여건이 양호하고 태풍피해를 거의 입지 않아 생산량이 전년대비 157천톤 증가하였다. 이밖에 복숭아는 노후과원의 폐원, 타 작목으로의 전환, 과원폐지지원사업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전년대비 10천톤 감소하였으며, 포도는 1천톤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쇠고기의 생산량과 수입량의 증가로 인해 쇠고기 1인당 식용공급량이 6.62kg에서 7.36kg로 11.2% 증가하였다. 돼지는 중·소 규모 양축농가 도태와 사육의 규모화로 양축가구수는 감소하였으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으로 한우시세가 강세를 유지하자 돼지고기 대체수요가 증가하여 사육두수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생산량이 전년대비 28.2천톤 증가하였으며 수입량도 37.6천톤 증가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이 17.57kg에서 18.64kg으로 증가하였다. 닭고기는 육계 사육수수 증가와 이입량 증가로 1인당 식용공급량이 6.74kg에서 6.99kg으로 3.7% 증가하였다.

어류는 2007년도 생산량이 전년대비 69천톤 증가하였으나 수입량이 339천톤 감소하고 수출량이 47.1천톤 증가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이 감소하였다. 패류는 양식생산의 증가, 전년도 이입량과 수입량 증가로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1인당 식용공급량이 15.52kg에서 19.65kg로 크게 증가하였다. 해조류는 다시마 등의 생산 증가로 생산량이 32.5천톤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수입량이 증가한 반면 수출량이 감소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이

13.02kg에서 14.37kg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식물성 유지는 생산량이 다소 증가하였으며(0.3천톤) 수입이 15.3천톤으로 증가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이 17.68kg에서 17.87kg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동물성 유지는 어유의 생산이 전년대비 1.0천톤으로 감소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이 0.40kg에서 0.33kg으로 17.5% 감소하였다.

나. 식품자급률 수준

주요 식품의 자급률 추이를 보면 곡류, 채소류, 과실류, 육류, 우유류, 어패류, 유지류 등 대부분 식품의 자급률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1-2-18>. 곡류자급률은 1995~2007년간 30.0%에서 27.4%, 채소류는 99.2%에서 90.4%, 과실류는 93.2%에서 83.5%, 육류는 89.2%에서 78.2%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유류는 93.3%에서 70.8%, 어패류는 100.4%에서 72.3%, 유지류는 4.8%에서 1.7%로 하락하였다.

<표 1-2-20>

연도별 자급률 추이

구분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공급 영양 자급률	칼로리	50.6	50.6	49.2	49.6	45.6	46.6	45.4	44.9	44.3
	단백질	57.2	52.8	51.9	50.4	47.4	46.9	47.0	46.3	46.9
	지방	26.8	21.4	20.3	20.4	19.2	18.6	18.1	17.6	17.7
물량 기준 자급률	곡류	30.0	30.8	32.2	31.0	28.1	27.6	29.4	27.8	27.4
	쌀	91.1	102.9	102.7	99.2	90.3	94.3	96.0	95.3	98.3
	두류	11.7	8.2	9.2	8.8	8.2	8.0	10.7	14.2	11.6
	채소류	99.2	97.7	98.3	97.7	94.7	95.0	94.5	92.2	90.4
	과실류	93.2	88.7	88.9	89.1	85.0	85.2	85.6	82.7	83.5
	육류	89.2	83.9	81.0	82.0	81.2	83.5	81.6	78.4	78.2
	쇠고기	50.8	53.2	42.3	36.6	36.3	44.2	48.1	47.8	46.4
	돼지고기	96.6	91.6	90.8	96.9	93.8	87.4	83.7	77.4	75.8
	닭고기	98.1	79.9	76.1	76.0	76.7	90.2	84.3	82.6	87.7
	계란류	99.9	100.0	100.0	100.0	100.0	100.0	99.3	99.4	99.4
	우유류	93.3	81.2	78.9	81.0	81.0	74.2	72.8	72.4	70.8
	어패류	100.4	87.7	77.9	63.8	61.7	55.7	60.0	64.0	72.3
	유지류	4.8	3.2	2.4	3.5	2.4	2.2	2.8	1.9	1.7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식품수급표』, 2008.

칼로리 자급률¹⁾은 1970년 79.5%, 1990년 62.6%, 2007년 44.3% 수준으로 1970년 이후 감소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백질 자급률은 1970년 80.1%에서 2007년 46.9%로 칼로리 자급률과 비슷한 감소추세를 보인다. 반면 지방 자급률은 1980년까지만 하더라도 64.2%를 유지하던 것이 1990년 30.3% 수준으로 급속하게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수입자유화의 영향으로 육류 및 유제품 수입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다. 지방 자급률은 2007년 17.7% 수준에 불과하다.

다. 식품 및 영양공급량의 국제비교

우리나라 국민 1인 1년당 식품 공급량(조식품기준)은 유럽 국가와 비교할 때 곡류(159.1kg), 채소류(168.7kg), 어패류(81.1kg) 등은 비교적 많은 반면, 두류(13.9kg), 과일류(57.4kg), 육류(43.6kg), 우유류(55.2kg) 등은 비교적 적다.

곡류 공급량은 조식품 기준으로 159.1kg으로서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일본(173.4kg)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나 대만(91.1kg)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며 유럽국가에 비해서도 많은 수준이다. 한편 두류의 1인 1년당 공급량은 13.9kg으로 대부분의 국가들보다 적다.

채소류의 연간 공급량은 조식품기준으로 2007년에 168.7kg으로 대부분의 유럽국가들과 일본, 대만, 미국 등의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편 육류의 공급량은 40.4kg으로 일본, 파키스탄(15.0kg) 보다는 많은 편이지만, 유럽국가들과 미국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계란류(11.1kg), 우유류(55.2kg)의 공급량도 미국 및 유럽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어패류의 공급량은 81.1kg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

1) 1999년부터 『식품수급표』(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새로운 산정방식에 근거하여 공급영양소 자급률을 발표함. 새로운 산정방식은 1인 1일당 순식용 공급칼로리 중에서 국내산 공급칼로리의 비중으로 계산되며, 사료자급률을 육류에서 감안한다는 특징이 있음.

<표 1-2-21>

주요국별 1인 1년간 식품공급량 비교

(단위 : kg)

연 도	한 국	일 본	대 만	미 국	독 일	파키스탄
	2007	2005	2005	2005	2005	2005
곡 류	159.1	173.4	91.1	177.2	137.7	153.7
서 류	13.1	38.4	21.4	57.4	74.1	13.8
설탕류	14.5	119.3	24.6	173.9	205.7	224.7
두 류	13.9	73.7	26.1	86.9	63.5	54.4
채소류	168.7	130.7	113.2	125.5	133.6	29.6
과실류	57.4	58.4	138.6	122.8	135.1	31.0
육 류	43.6	34.8	78.2	93.7	77.3	15.0
계란류	11.1	18.7	18.0	14.8	11.8	2.1
어패류	81.1	64.8	31.0	23.4	14.3	1.8
우유류	55.2	75.5	21.5	256.5	308.0	151.4
유지류	0.3	0.5	24.0	1.4	2.6	0.9

- 주 : 1) 조식품 공급량 기준임.(단, 대만은 순식품 공급량 기준임)
- 2) 두류에는 종실류와 견과류, 어패류에는 해조류가 포함됨.
- 3) 설탕류에는 당료작물이 포함됨.(단, 한국과 대만은 설탕)
- 4) 유지류에는 동물성만 포함됨.(단, 대만은 식물성도 포함)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식품수급표』, 2007.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국민 1인 1일당 공급 에너지는 대체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 1980년 2,485kcal에서 2000년에는 3,010kcal로 증가하여 연평균 0.6%씩 증가하였으나 2001년 이후로는 대체적으로 감소하여 2001년에는 3,000kcal에서 2007년도에는 2,967kcal로 감소하여 연평균 0.2%씩 감소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유럽국가의 1인 1일 당 공급 에너지는 3,400kcal 이상으로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는 주로 육류와 우유류 등 축산물과 유지류의 소비량이 많은데 기인한다 <표 1-2-22>.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전분질 식품으로부터의 에너지 공급은 2007년 현재 에너지원의 55.1%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낮지 않다. 그러나 이 비율은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동물성식품으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의 구성비는 소득 향상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도에는 15.8%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비율은 유럽 국가와 미국 등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표 1-2-22>

주요국별 1인 1일당 영양공급량 비교

연 도	한 국	일 본	대 만	미 국	독 일	파키스탄
	2007	2005	2005	2005	2005	2005
에너지(kcal)	2,967	2,837	2,955	3,690	3,584	2,422
전 분 질(%)	55.1	65.4	41.2	57.1	48.6	64.8
설 탕(%)	7.2	7.6	9.0	8.0	10.9	13.0
동 물 성(%)	15.8	20.5	21.4	27.7	32.0	17.8
유 지 류(%)	15.0	0.4	19.6	0.9	1.8	0.9
기 타(%)	6.8	6.0	8.9	6.4	6.7	3.5
1인당GNI(\$)	17,690	38,950	16,067	43,560	34,870	690

주 : 1) 한국, 대만은 순식품 공급량 기준이며, 기타국은 조식품 공급량 기준임.

2) 설탕류에는 당료작물이 포함됨.(단, 한국과 대만은 설탕)

3) 유지류에는 동물성만 포함됨.(단, 대만과 한국은 식물성도 포함)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식품수급표』, 200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황윤재)

3. 식품산업 동향

가. 식품제조업

2007년 식품제조업체수(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는 8,613개로 1997년(6,166개)보다 39.7% 증가하였고, 종사자수는 191천명으로 1997년(186천명)보다 2.7% 증가하였다. 시장규모를 나타내는 출하액은 2007년 52.5조원으로 1997년 31.2조원 대비 68.3% 증가하였다.

2007년 식품제조업 1개 사업체당 출하액(출하액/사업체수)은 61.0억원으로 1997년 50.7억원보다는 20.3% 증가하였다. 한편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부가가치/종사자수)는 1.1억원으로 1997년(0.67억원) 대비 64.2% 증가하였고, 부가가치율(부가가치/출하액)은 매년 40%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1-2-23>

식품제조업 연도별 추이

(단위 : 개, 천명, 10억원, 백만원/개소, 백만원/명, %)

	1997	2000	2004	2005	2006	2007
○사업체수(A)	6,166	6,421	8,051	8,389	8,495	8,613
○종사자수(B)	186	178	186	186	185	191
○출하액(C)	31,282.7	37,199.8	47,766.6	48,264.3	48,946.1	52,537.0
※업체당 출하액(C/A)	5,073.4	5,793.5	5,933.0	5,753.3	5,761.8	6,099.7
※1인당 부가가치	67.4	88.6	103.5	102.6	102.6	107.7
※부가가치율	40.1	42.3	40.4	39.5	38.9	39.2

자료 : 통계청 제조업통계조사 '음식료품 제조업'(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 대상)
 1인당 부가가치 = 부가가치 / 종사자수,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 / 출하액 × 100

식품제조업 내 세부업종별 현황을 보면 기타 식품제조업의 출하액이 13.7조원(전체 식품제조업의 26.6%), 사업체수 3,330개(38.7%)로 전체 식품제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 또한, 2007년 음료 제조업 규모는 사업체수 459개(5.3%), 출하액 7.6조원(14.5%) 수준을 보였다.

2007년 품목별 식품제조업체 구분을 보면 사업체수가 가장 많은 품목은 김치 제조업(239개), 김(186개), 육지동물 포장육(158개), 기타 혼합조제조미료(130개) 순서이고, 출하액이 가장 많은 품목은 시유(2.2조원), 배합사료(2.0조원), 맥주(1.7조원) 순서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구분해 보면 전국 식품제조업체 중 20.8%가 경기지역(1,795개)에 분포되어 있고, 다음으로 전남(1,057개, 12.3%)지역에 사업체수가 많이 있었다. 출하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13.8조원), 충남(6.1조원) 순서이며, 업체당 출하액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최고: 인천 134.3억원, 전남: 23.6억원), 이는 지역에 분포된 주요 업종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표 1-2-24>

업종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2007)

(단위 : 개, 명, 백만원)

	사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	비중(%)
□ 식품 제조업	8,613	191,328	52,536,989	100.0
○ 식료품 제조업	8,154	176,703	44,938,179	85.5
- 도축, 육류 가공·저장처리업	848	27,650	6,725,485	12.8
- 수산물 가공·저장처리업	1,863	29,708	3,399,128	6.5
- 과일·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782	15,907	1,829,511	3.5
-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6	2,078	1,345,411	2.5
- 낙농제품, 식용빙과류 제조업	116	10,242	5,913,602	11.2
- 곡물 가공품, 전분·전분제품제조업	776	10,009	5,835,378	11.1
- 기타 식품제조업	3,330	72,546	13,968,352	26.6
- 동물성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333	8,563	5,921,312	11.3
○ 음료 제조업	459	14,625	7,598,810	14.5
- 알콜 음료 제조업	207	7,040	4,365,555	8.3
- 비알콜 음료, 얼음 제조업	252	7,585	3,233,255	6.2

자료 : 통계청 제조업통계조사 '음식료품 제조업'(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 대상)

2007년 종사자 10인 이상 식품제조업체 중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체수가 전체의 91.4%이고 1999년 이후 90% 수준에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식품제조업체 중 대기업(종사자 300인 이상)의 비중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1999년 : 56개소 → 2007년 : 39개소). 또한, 식품제조업체의 91.5%에 달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의 종사자수 비중은 전체의 42.9%, 출하액 비중은 27.8%에 불과해 영세한 업체가 많이 있음을 보여준다.

2007년 종사자 10인 이상 식품제조업체 중 출하액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체는 전체의 26.9%이고, 10억원에서 1,000억원 사이의 업체는 70.7%, 1,000억원 이상인 업체는 2.3%에 그쳤다.

<표 1-2-25>

규모별 추이

(단위 : 개, %)

	1999	2000	2004	2005	2006	2007
□ 업체수	6,364	6,421	8,051	8,389	8,495	8,613
○ 종사자규모별						
- 50인 미만	89.0	89.1	90.9	91.6	91.6	91.4
- 50~300인	10.1	10.1	8.4	7.9	7.9	8.1
- 300인 이상	0.9	0.9	0.7	0.5	0.5	0.5
○ 출하액규모별						
- 10억원 미만	63.4	61.1	58.8	57.8	55.8	26.9 ¹⁾
- 10~100억원	28.1	29.9	32.0	33.2	35.1	55.1 ¹⁾
- 100~1,000억원	7.4	7.9	7.9	7.8	8.1	15.6 ¹⁾
- 1,000억원 이상	1.1	1.1	1.2	1.2	1.0	2.3 ¹⁾

자료 : 통계청 제조업통계조사 '음식료품 제조업'('06년 이전 :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 '07년 종사자 10인 이상 대상)

1) 출하액 규모별 비중 : '06년까지는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 대상이나 '07년부터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대상이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움

나. 외식산업

2007년 외식산업 사업체수는 550.8천개로 지난 10년간 55만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종사자수는 1,500천명으로 1997년 1,279천명보다는 17.3% 증가하였으나 2002년 이후 증가세는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07년 외식산업의 매출액은 57.0조원으로 1997년 30.2조원에 비해 88.4% 증가하여 큰 증가세를 보였다.

외식산업 1개 사업체당 매출액(매출액/사업체수)은 2007년 103.4백만원으로 1997년 54.9백만원에 비해 88.4% 증가하였고, 종사자 1인당 매출액(매출액/종사자수)은 2007년 38.0백만원으로 동기대비 61.0% 증가하였다. 2007년 외식산업 건물 연면적(m²)당 매출액(매출액/건물연면적)은 993.1천원으로 1997년 636.8천원에 비해 56.0% 증가하였다.

<표 1-2-26>

외식산업 연도별 추이

(단위 : 천개, 천명, 10억원, 백만원/개소, 백만원/명, 천원/m²)

	1997	2000	2004	2005	2006	2007
○ 사업체수(A)	550.5	570.6	600.2	531.9	546.5	550.8
○ 종사자수(B)	1,279	1,430	1,556	1,445	1,450	1,500
○ 매출액(C)	30,229.9	35,472.2	48,369.6	46,252.5	50,892.3	56,951.8
※ 업체당 매출액(C/A)	54.9	62.2	80.6	87.0	93.1	103.4
※ 1인당 매출액(C/B)	23.6	24.8	31.1	32.0	35.1	38.0
※ 건물 연면적(m ²)당 매출액	636.8	780.3	915.9	936.1	954.5	993.1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통계조사 '음식점업'

업종별 내역을 보면 한식당 사업체수가 266.6천개, 매출액은 29조원으로 전체 음식점업 사업체 및 매출액의 51%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업체당 매출액은 기관구내식당, 출장 및 이동음식점, 기타 음식점 등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구분을 보면 서울(103.6천개)과 경기(104.6천개) 지역에 전국 음식

점업 사업체 중 37.8%가 분포하고 있고, 종사자수 및 매출액도 서울과 경기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당 매출액은 서울(1.6억원), 경기(1.2억원), 대전(1.1억원), 광주(1.0), 인천(1.0)지역이 1억원 이상이고, 강원(65.4백만원), 경북(64.9백만원) 지역이 7천만원 미만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1-2-27>

업종별 사업체수 및 매출액(2007)

(단위 : 개, 10억원, 백만원/개소)

	사업체수 (A)	매출액 (B)	업체당매출액 (B/A)
음식점 및 주점업	550,823	56,951.8	103.4
□ 음식점업	405,732	46,135.9	113.7
○ 일반음식점업	304,864	35,175.7	115.4
- 한식	266,620	29,000.3	108.8
- 중식	21,722	2,320.3	106.8
- 일식	6,299	1,411.8	224.1
- 서양식	9,696	2,345.3	241.9
- 기타 외국식	527	98.0	185.9
○ 기관구내식당업	3,962	2,347.3	592.5
○ 출장 및 이동음식점업	462	165.9	359.2
○ 기타 음식점업	96,444	8,446.9	87.6
- 제과점업	9,060	1,267.4	139.9
- 피자,햄버거,샌드위치및유사음식점업	11,469	1,771.6	154.5
- 치킨 전문점	22,698	1,533.5	67.6
- 분식 및 김밥 전문점	49,588	2,955.2	59.6
- 그 외 기타 음식점업	3,629	919.2	253.3
□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145,091	10,815.9	74.5
○ 주점업	120,369	9,151.9	76.0
○ 비알콜 음료점업	24,722	1,663.9	67.3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통계조사 '음식점업'

2007년 전국 음식점업체 중 종사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수는 89.9%이고, 지난 10년간 90%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종사자 1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는 2%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사업체의 89.9%에 달하는 5인 미만 소규모 음식점업체의 종사자 비중은 전체의 68.8%, 매출액 비중은 58.9% 수준인 반면, 사업체 중 1.9%에 해당하는 10인 이상 대규모 음식점업체는 매출액 비중이 29.6%로 나타났다.

2007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체는 전체의 71.3%로 1997년 90.2%에 비해 18.9%p 감소하였고, 매출액이 1억원에서 10억원 사이인 업체는 전체의 27.9%이고 1997년 9.7%에 비해 18.2% 증가하였다.

<표 1-2-28>

규모별 추이

(단위 : 천개, %)

	1997	2000	2004	2005	2006	2007
□ 업체수	550.5	570.6	600.2	531.9	546.5	550.8
○ 종사자규모별						
- 5인 미만	92.0	95.3	91.1	89.6	90.4	89.9
- 5~10인	7.0	3.9	7.3	8.5	7.9	8.2
- 10인 이상	1.0	0.8	1.6	2.0	1.8	1.9
○ 매출액규모별						
- 100백만원 이상	90.2	86.2	81.9	79.1	75.0	71.3
- 100~1,000백만원	9.7	13.7	17.7	20.4	24.3	27.9
- 1,000백만원 이상	0.1	0.1	0.5	0.5	0.7	0.7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통계조사 '음식점업'

(식품산업정책과 기술서기관 전한영)

제3절 농식품 교역동향

1. 농식품 수출입동향

가. 수출동향

2008년도의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고유가, 글로벌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와 수출업체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노력과 고품질·안전 농식품 생산을 위한 체계적인 품질 및 안전성 관리노력의 결과로 전년 동기대비 17.1% 증가한 4,403백만불을 달성하였다. 농식품은 전년 동기대비 16.7% 증가한 2,955백만불을 달성하고, 수산물식품은 18.0% 증가한 1,448백만불을 달성하였다.

부류별 수출동향을 보면, 신선 농식품은 버섯류와 채소류, 화훼류의 수출이 급증한 가운데 김치, 인삼 등 대부분 주력품목도 수출이 증가하여 전년보다 13.0% 증가한 675백만불을 수출하였다.

가공농식품은 상반기 국제 곡물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당류와 전분 수출이 부진하였으나, 주류, 과자류, 면류, 연초류 등의 수출호조로 전년보다 17.8% 증가한 2,280백만불을 수출하였다.

수산물식품은 참치, 넙치, 오징어 등 상위 주력품목 수출은 전년수준에 머물렀으나 김, 미역 등 해조류와 고등어, 삼치, 붕장어 등 기타 어류의 수출이 큰 폭으로 신장되어 전년대비 18.0% 증가한 1,448백만불을 수출하였다.

<표 1-2-29>

농식품 수출실적

(단위 : 천톤, 백만불,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증감률 (B/A)
		물 량	금액(A)	물 량	금액(B)	
농림수산물	3,395	2,051	3,759	2,151	4,403	17.1
○ 농 식 품	2,304	1,514	2,532	1,566	2,955	16.7
(신선농식품)	(535)	(198)	(597)	(253)	(675)	(13.0)
(가공농식품)	(1,769)	(1,316)	(1,935)	(1,313)	(2,280)	(17.8)
- 농 산 물	2,008	1,337	2,222	1,390	2,621	17.9
- 축 산 물	172	93	182	99	215	18.8
- 임 산 물	124	84	128	77	119	△7.7
○ 수 산 식 품	1,091	537	1,227	585	1,448	18.0

자료 : 농림수산물식품부 & aT, 2008년도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및 통계

주요 국가별 수출동향을 보면, 일본 수출은 과실류와 인삼류 수출이 부진하였으나 엔화환율 상승 및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 문제 대두 등 수출여건 호조로 화훼류, 채소류, 가공농식품, 수산식품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7.9% 증가한 1,437백만불을 수출하였다.

미국은 과실류, 김치를 제외한 전 품목의 고른 신장세로 전년대비 10.5% 증가한 442백만불을 수출하였다.

중국은 밤과 과자류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채소, 인삼, 유자차, 수산물 등 전반적인 품목의 수출증가로 전년대비 18.7% 증가한 536백만불을 수출하였고, 러시아는 돼지고기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채소, 화훼, 김치 등의 수출호조로 전년대비 12.6% 증가한 282백만불을 수출하였다.

대만은 주요 수출품목인 홍삼이 감소하였으나 채소류 및 사과 수출이 급증하여 전년대비 3.6% 증가한 125백만불을 수출하였고, 아세안은 당류, 인삼류 등이 감소하였으나 과실류, 가금육, 조제분유, 참치 등의 수출호조로 전년대비 29.3% 증가한 444백만불을 수출하였으며, EU는 연초류와 수산식품의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버섯류, 화훼류 등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출 신장으로 전년대비 16.7% 증가한 189백만불을 수출하였다.

<표 1-2-30>

국가별 농식품 수출실적

(단위 : 천톤, 백만불, %)

구 분	2007년(A)		2008년(B)		증감률(B/A)		점유율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합 계	2,051.0	3,759.3	2,150.9	4,402.8	4.9	17.1	100.0
일 본	527.7	1,219.6	573.5	1,437.7	8.7	17.9	32.7
미 국	136.9	400.9	153.9	442.8	12.4	10.5	10.0
중 국	374.9	452.1	374.3	536.6	△0.2	18.7	12.2
홍 콩	186.2	153.7	169.3	172.2	△9.1	12.0	3.9
러시아	117.4	250.6	115.8	282.0	△1.4	12.6	6.4
대 만	51.3	120.8	65.9	125.2	28.5	3.6	2.8
아세안	334.3	343.8	327.7	444.6	△2.0	29.3	10.1
E U	66.9	162.2	78.6	189.2	17.5	16.7	4.3
기 타	255.4	655.6	292.0	772.6	14.3	17.8	17.6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 aT, 2008년도 농림수산식품 수출입동향 및 통계

(식품산업진흥과 농업사무관 변상문)

나. 수입동향

2008년도 농식품 수입은 옥수수, 밀 등 주요 곡물의 국제가격 급등과 중국산 채소류 가격 상승으로 전년대비 20.6% 증가한 23,198백만불이 수입되었다.

부류별 수입동향을 보면 과실류는 바나나, 키위, 파인애플 등 열대과일 수입량 감소로 전년대비 3.1% 감소한 825백만불이 수입되었다.

곡류는 옥수수, 밀 등 곡제 곡물가 상승에 따라 전년대비 52.9% 증가한 4,477백만불이 수입되었고, 채소류는 고추, 당근, 토마토 등 중국산 채소류 가격 상승으로 전년대비 0.8% 증가한 581백만불이 수입되었다.

축산물은 소고기, 돼지고기, 낙농품 등 전반적인 축산물 수입량은 감소하였으나 수입단가 상승으로 전년대비 3.6% 증가한 3,352백만불이 수입되었다.

<표 1-2-31>

농식품 수입실적

(단위 : 천톤, 백만불, %)

구 분	2007년(A)		2008년(B)		증감률(B/A)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합 계	38,025.3	19,242.3	41,751.8	23,198.6	9.8	20.6
○ 곡 류	12,353.4	2,928.8	12,324.5	4,477.4	△0.2	52.9
○ 박 류	4,491.6	895.3	5,319.6	1,603.2	18.4	79.1
○ 두 류	1,285.0	468.2	1,414.4	854.6	10.1	82.5
○ 과실류	808.5	851.7	738.5	825.5	△8.7	△3.1
○ 주 류	307.6	616.6	351.6	670.3	14.3	8.7
○ 채소류	830.4	577.0	817.7	581.8	△1.5	0.8
○ 인삼류	0.3	4.6	0.2	5.0	△33.3	8.7
○ 화훼류	6.0	41.0	7.5	42.8	25.0	4.4
○ 육류(포유기축)	604.5	1,953.6	576.6	1,942.0	△4.6	△0.6
○ 어 류	949.1	1,752.0	749.6	1,735.8	△21.0	△0.9
○ 갑각류	131.8	584.3	111.4	520.3	△15.5	△11.0
○ 기 타	16,257.1	8,569.2	19,340.2	9,939.9	9.8	20.6

자료 : 농림수산물부 & aT, 2008년도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및 통계

주요 국가별 수입동향을 보면, 미국은 옥수수, 밀 등의 곡물 수입가격 상승 및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축산물 수입증가로 전년대비 73.1% 증가한 6,401백만불이 수입되었고, 중국은 박류, 두류의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등의 전반적인 감소로 전년대비 13.1% 감소한 3,627백만불이 수입되었으며, 호주는 옥수수, 밀 등 곡물 수입가격 상승 및 낙농품, 임산물, 수산물 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13.4% 증가한 1,920백만불이 수입되었다.

<표 1-2-32>

국가별 농식품 수입실적

(단위 : 천톤, 백만불, %)

구 분	2007년(A)		2008년(B)		증감률(B/A)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합 계	38,025.3	19,242.3	41,751.8	23,198.6	9.8	20.6
미 국	8,967.5	3,698.8	13,850.1	6,401.0	54.4	73.1
중 국	8,723.5	4,173.4	4,910.1	3,627.1	△43.7	△13.1
호 주	3,232.8	1,694.5	4,794.3	1,920.9	48.3	13.4
브라질	2,232.7	828.9	1,489.9	950.6	△33.3	14.7
뉴질랜드	2,961.3	828.9	2,796.7	863.6	△5.6	4.2
인 도	1,238.0	317.6	1,544.7	601.5	24.8	89.4
칠 레	245.5	326.9	248.5	316.3	1.2	△3.2
ASEAN	4,998.0	2,375.2	6,336.7	3,111.6	26.8	31.0
E U	855.3	1,980.2	839.7	2,041.9	△1.8	3.1
기타국가	4,570.7	3,017.9	4,941.1	3,364.1	8.1	11.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 aT, 2008년도 농림수산식품 수출입동향 및 통계

(식품산업진흥과 사무관 변상문)

2. 농식품 남북교역 동향

가. 농식품 교역규모

2008년도 남북한 교역실적은 1,820.4백만달러로 전년도 1,797.9백만달러에 비해 1.2% 증가하였다. 이중 농식품 교역실적은 288.3백만달러로 전년대비 29.4%가 감소하였으며, 전체 남북교역규모 1,820.4백만달러의 15.8%를 차지하였다.

<표 1-2-33>

남북교역 동향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연도별 교역실적		
	2007	2008	증감률(%)
전 체	1,797.9	1,820.4	1.2
농식품	408.6	288.3	-29.4

자료 : 남북교류협력 동향(통일부)

나. 농식품 교역동향

1) 반출입 통관실적 총괄

2008년도 농식품의 대북 반출입 실적을 살펴보면, 반출은 80.4백만달러로서 전년도 224.4백만달러보다 64.2% 감소하였고, 반입은 207.9백만달러로서 전년도 184.2백만달러 보다 12.9% 증가하였다.

2) 주요 품목별 반출입 실적

가) 반출실적

농식품 반출 총품목수는 169개 품목이며, 이중 농축산물은 밀가루, 대두유, 감귤 등이고 임산물은 합판, 수목류 등이며, 수산물은 건조수산물 및 기타수산물가공품 등을 포함한다. 지난해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지원 하였던 쌀과 비료가 금년에는 지원이 중단되어 반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표 1-2-34>

주요 품목별 반출실적

(단위 : 톤, 천달러)

품 명	2007년(A)		2008년(B)		증감률(B/A, %)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합 계	524,167	224,446	64,302	80,362	-87.7	-64.2
비 료	305,657	87,064	4,174	2,123	-98.6	-97.6
쌀	167,179	75,054	329	646	-99.8	-99.1
채 소 류	12,580	17,447	10,126	15,856	-19.5	-9.1
기 타 농 산 가 공 품	2,213	5,190	961	2,743	-56.6	-47.1
밀 가 루	2,976	2,105	6,026	4,439	102.5	110.9
기 타 목 재	675	1,518	759	652	12.4	-57.0
대 두 유	986	1,173	7,252	11,826	635.5	908.2
수 산 물	557	1,364	2,619	4,686	370.2	243.5
기 타	31,344	33,531	32,056	37,391	2.3	11.5

자료 : 남북교류협력 동향(통일부)

나) 반입실적

농식품 반입 총품목수는 94개 품목이며, 이중 농축산물은 마늘, 한약재 등이고, 임산물은 송이버섯, 고사리 등이며, 수산물은 기타조개 및 기타수산가공품 등이다. 반입실적은 농식품이 207.9백만달러로 전년대비 12.9% 증가하였고, 그중 국내산 마늘을 반출하여 위탁임가공하여 반입한 마늘과 송이버섯의 증가율이 높았다.

<표 1-2-35>

주요 품목별 반입실적

(단위 : 톤, 천달러)

품 명	2007년(A)		2008년(B)		증감율(B/A, %)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합 계	79,815	184,189	88,429	207,914	10.8	12.9
기 타 조 개	33,863	39,455	34,757	41,953	2.6	6.3
기 타 수산가공품	5,661	19,939	5,188	21,378	-8.4	7.2
건조수산물	2,281	19,496	1,949	18,638	-14.6	-4.4
새 우	1,725	13,677	3,108	18,628	80.2	36.2
마 늘	6,485	13,564	8,502	19,809	31.1	46.0
기타연체동물	8,969	11,924	12,573	15,465	40.2	29.7
송 이 버 섯	302	10,466	401	14,933	32.8	42.7
고 사 리	1,463	9,671	1,336	9,583	-8.7	-0.9
기 타	19,066	45,997	20,615	47,527	8.1	3.3

자료 : 남북교류협력 동향(통일부)

(다자협상협력과 기술서기관 정종용)

제3장 국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제1절 국제 곡물수급과 가격동향

1. 국제곡물 수급동향

가. 개요

2009~2010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1.9% 감소한 21억 8,730만톤, 소비량은 1.8% 증가한 21억 8,337만톤, 그리고 기말재고량은 0.6% 늘어난 4억 5,058만톤, 기말재고율은 20.6%로 전망 되었다.

나. 쌀

2009~2010년도 쌀 생산량은 전년보다 2.7% 감소한 4억 3,354만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소비량은 전년대비 0.6% 증가한 4억 3,798만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4억 3,534만톤보다 약 264만톤 정도 많은 수준이다. 세계 쌀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6.4% 감소한 8,488만톤으로 전망되며, 기말재고율은 19.4%로 전년보다 약 1.4%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다. 밀

2009~2010년도 세계 밀 생산량은 전년보다 2.7% 감소한 6억 6,372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량은 전년보다 1.3% 증가한 6억 4,610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말재고량은 1억 8,661만톤으로 전년보다 11.9%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기말재고율도 지난해의 26.1%에서 28.9%로 2.8%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라. 옥수수

2009~2010년도 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보다 0.4% 늘어난 7억 9,406만톤을 기록할 전망이다. 소비량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7억 9,962만톤으로 예상되며 금년에는 소비량이 생산량을 약 556만톤 정도 초과할 전망이다.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5.3% 감소한 1억 3,912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보다 약 772만톤 정도 줄어든 수준이다. 기말 재고율은 전년보다 1.6% 포인트 줄어들어 17.4%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 대 두

2009~2010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4,394만톤으로 전년대비 15.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소비량은 전년도 2억 1,980만톤보다 1,183만톤 늘어난 2억 3,163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아르헨티나, 중국의 소비량이 각각 4.3%, 8.7%, 4.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기말재고량은 전년의 4,205만톤보다 20.2% 증가한 5,053만톤으로 전망되며 기말 재고율은 전년보다 2.7% 포인트 높은 21.8%가 될 것으로 보인다.

<표 1-3-1>

USDA 주요곡물 수급총괄

(단위 : 백만 톤)

구 분	2007/2008(A)	2008/2009(B) (추정)	2009/2010(C)		증 ▲ 감 C/B
			2009년 9월 전망		
전체곡물	생 산	2,112.00	2,229.93	2,187.30	▲ 1.9
	소 비	2100.24	2,144.65	2,183.37	1.8
	교 역	275.51	276.50	264.20	▲ 4.4
	재 고	362.74	448.02	450.58	0.6
	(재고율%)	(17.3)	(20.9)	(20.6)	
쌀	생 산	433.40	445.67	433.54	▲ 2.7
	소 비	428.12	435.34	437.98	0.6
	교 역	31.09	27.83	29.34	5.4
	재 고	80.38	90.71	84.88	▲ 6.4
	(재고율%)	(18.8)	(20.8)	(19.4)	
밀	생 산	610.99	682.32	663.72	▲ 2.7
	소 비	616.48	637.68	646.10	1.3
	교 역	117.20	140.66	122.96	▲ 12.6
	재 고	122.12	166.76	186.61	11.9
	(재고율%)	(19.8)	(26.1)	(28.9)	
옥수수	생 산	791.87	791.28	794.06	0.4
	소 비	770.72	774.72	799.62	3.2
	교 역	98.61	79.49	85.72	7.8
	재 고	130.27	146.84	139.12	▲ 5.3
	(재고율%)	(16.9)	(19.0)	(17.4)	
대 두	생 산	221.13	210.64	243.94	15.8
	소 비	229.75	219.80	231.63	5.4
	교 역	79.52	76.93	77.04	0.1
	재 고	52.91	42.05	50.53	20.2
	(재고율%)	(23.0)	(19.1)	(21.8)	
잡 곡	생 산	1,076.61	1,101.94	1,090.04	▲ 1.1
	소 비	1,055.64	1,071.64	1,099.29	2.6
	교 역	127.21	108.00	111.90	3.6
	재 고	160.24	190.54	179.09	▲ 6.0
	(재고율%)	(15.2)	(17.8)	(16.3)	

자료 : USDA, 전체곡물 = 쌀 + 밀 + 잡곡(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호밀, 기장, 혼합곡)

(식량정책과 사무관 정명호)

2. 국제곡물 가격동향

가. 쌀 값 동향

미 농무부(USDA)가 2009년 9월 15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9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의 본선인도가격(FOB: free on board)은 전년 동월대비 20.0% 하락한 톤당 895달러, 태국산 장립종 쌀의 본선인도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22.4% 하락한 톤당 544달러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쌀은 2002년 10월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2004년 2월에는 톤당 570달러를 기록하였다. 7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캘리포니아 쌀 가격은 11월 톤당 397달러로 내려간 이후 2005년 4월까지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9월부터 가격이 다시 상승하여 11월에는 톤당 507달러까지 상승한 후 2006년 2월까지 유지되었다가 4월에는 톤당 485달러로 하락했다.

2006년 5월 이후 상승하기 시작한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 가격은 2007년 상반기 550달러, 하반기에는 58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8년 이후 이집트 수출통제 정책에 따라 9월에는 1,119달러까지 상승하였다. 2009년도 4월에는 이집트 수출통제 연장 결정으로 1,208달러까지 상승하였으나, 중립종 신곡 증산이 전망되어 7월에는 1,067달러, 8월에는 948달러, 9월에는 895달러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이집트 수출 통제 완화가 기대되고 신곡 증산으로 약보합세가 전망된다.

태국산 장립종 가격은 이란에 대한 태국산 쌀의 수출 증대로 2006년 5월 초부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7월에 321달러였으나 11월에는 320달러까지 내려갔다. 이후 2007년 10월까지 톤당 320~34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이후 인도·베트남의 수출통제 정책에 따라 2008년 1월 384달러에서 5월에는 949달러까지 상승을 하였다. 6월 베트남의 수출통제가 해제되어 가격은 약보합세를 보이며 12월에는 543달러까지 하락하였다.

2009년 9월 현재 태국산 장립종 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22.4% 하락, 전월대비 1.6% 하락한 톤당 544달러수준이다. 인도의 가뭄에 따른 생산량 감소는 가격상승 요인이 될 수 있으나, 필리핀·인도의 재고가 적지 않아 보합세가 전망된다.

나. 밀 값 동향

2005년 상반기까지 밀 선물가격은 톤당 120~13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7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10월에는 톤당 139달러에 이르렀다. 2005년 11월에는 132달러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급격히 상승하여 2006년 10월에 193달러에 이르렀다.

이후 밀 선물가격은 톤당 18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7년 5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3월에는 424달러에 이르렀다. 이후 금융위기 영향 등으로 12월에는 208달러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2009년 상반기는 200\$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7월 205달러, 8월 190달러로 하락하였다.

9월 현재 최근월물 선물가격은 톤당 175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37.7%, 전월 대비 7.9% 하락하였다. 미국의 생산량 증가와 세계 밀 재고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밀 가격은 약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옥수수 값 동향

옥수수 선물가격은 2004년 4월에 톤당 124달러로 200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2004/2005년도 옥수수 생산량은 소비량을 초과하면서 2004년 11월에 톤당 78달러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2005년 상반기 옥수수 생산량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7월까지 꾸준히 상승하였다. 2005/2006년도에는 공급량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격이 하락하여 2005년 11월에는 톤당 76달러에 이르렀다.

2005년 12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옥수수 선물가격은 2007년 2월에는 162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다소 하락하여 10월까지 톤당 14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8년 6월 바이오 에탄올 수요증가 등으로 톤당 275달러까지 상승한 옥수수 선물가격은 2008년 12월에는 145달러까지 다소 하락하였다.

2009년 9월 현재 최근월물 옥수수 선물가격은 톤당 125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1.9%, 전월대비 3.1% 하락하였다. 가뭄으로 인한 중국의 생산량 감소로 수급악화 요인이 있으나 미국의 생산량이 사상 2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전망되어 보합세가 전망된다.

라. 콩 값 동향

중국의 식생활 변화에 따른 콩 수요증가와 미국의 작황부진 등 공급감소 우려로 2007년 1월 톤당 258달러에서 12월 423달러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2008년도에도 국제적인 수급악화 전망과 미국의 폭우에 따른 파종지연 영향 등으로 1월 464달러에서 7월에는 553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실물경제가 악화되어 12월에는 톤당 319달러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2009년도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영향으로 1월 톤당 365달러, 3월 374달러로 보합세를 유지하였으나, 가뭄에 따른 아르헨티나 생산량 감소 및 중국 수입증가에 의한 미국 기말재고량 감소와 유가상승, 달러 약세 등으로 6월 445달러로 일시적으로 상승하였다.

2009년 9월 현재 최근월물 콩 선물가격은 톤당 351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18.8%, 전월대비 13.5% 하락하였다. 미국의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신곡이 출하되면 가격은 약보합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3-2>

세계 곡물가격 동향표

(단위 : 달러/톤)

품 목	2007/2008	2008/2009	2008.9	2009.8	2009.9	증 감 률(%)		
						전년	전년 동월	전월
쌀(중립종)	694	1,119	1,119	948	895	▲20.0	▲20.0	▲5.6
(장립종)	551	609	701	553	544	▲10.7	▲22.4	▲1.6
밀	315	247	281	190	175	▲29.1	▲37.7	▲7.9
옥수수	203	154	215	129	125	▲18.8	▲41.9	▲3.1
콩	462	374	432	406	351	▲6.1	▲18.8	▲13.5

자료 : USDA(쌀:FOB, 밀·옥수수·콩 : 선물가격)

(식량정책과 사무관 정명호)

제2절 주요국가의 농업동향 및 양자간 통상협력

1. 주요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가. 미 국

1) 농업경제동향

미국의 농경지는 1억 8천만헥타로 전체 토지면적(9억 24백만헥타)의 약 20% 수준으로 세계1위를 차지한다. 2007년 미국 농업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전체 농가호수는 220만호로 2002년 대비 4% 증가하여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경향을 보였던 것이 다시 반등한 것으로 보이나, 곡물, 유지작물 및 원예 재배농가와 소·돼지 사육농가의 경우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농장주의 평균연령은 57.1세로 2002년 55.3세에 비해 높아졌는데 특히, 2002년 대비 75세 이상의 농장주는 20% 증가, 25세 이하 농장주는 30% 감소하였다. 농가당 평균 농지규모는 170헥타르로 2002년 176헥타르보다 감소하였다. 농가의 농지소유비율은 62%로 큰 변동이 없었다.

농가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2007년 농업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연간 농산물판매액이 2,500불 미만인 농가수가 74천호, 50만불 이상인 농가수가 46천호 각각 증가하였으며, 연간 농산물판매액이 25만불 이상인 대규모 농가는 전체 농가수의 9%이나 전체 판매액의 63%를 차지한다. 전체 농가의 60%는 연간 농산물판매액이 1만불 이하의 소농으로 전체 농가 중 45.5%만이 순수농업소득으로 생활한다.

국내총생산(2007)은 137,800억달러로 이 중 농업분야가 약 1,654억달러로 1.2%를 차지한다. 반면 농업인구(2005)는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 전체 실제고용노동력(2007) 중 농림수산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0.6%에 불과하다. 2003년 가치기준으로 미국의 10대 농산물은 옥수수, 쇠고기, 우유, 닭고기, 콩, 돼지고기, 밀, 면화(cotton lint), 계란 및 칠면조고기 순서이다.

2006년 기준 미국 농가 전체 농산물 생산액은 2,557억달러, 순수익은 590억달러, 정부지불금(government payments)은 158억달러에 이른다. 농산물판

매를 통한 농가 수입은 2,393억불에 이른다. 2007년 농산물 수출이 899억달러, 수입이 719억달러로 180억불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수입 농업국가이다. 이는 전체 수출액의 9%, 수입액의 4%를 차지한다. 수출액은 전체 농업생산액의 22.1%를, 특히 수출비중이 면화 및 담배는 70%, 밀 및 쌀은 47.1%에 달한다.

<표 1-3-3>

한미 주요 농업지표 비교

	한 국 (2006)		미 국 (통계년도)	
		단 위		단 위
○ GDP	8,874	억\$	132,466	억\$(2006)
- 농림어업	241	억\$	1,370	억\$(2005)
- 농림어업 구성비	3.2	%	1.1	%
○ 총인구	48,297	천명	299.8	백만(2005)
- 농가인구(명)	3,304	천명	5.7	백만(2005)
- 농가인구 비중	6.8	%	1.9	%
○ 총가구(A)	16,158	천호	105	백만호(2000)
○ 농가수(B)	1,245	천호	2,121	천호(2003)
○ 소사육가구(C)	198	천호	8105	천호(2003)
- 농가수 비중(B/A)	7.7	%	2.0	%
- 소사육가구 비중(C/B)	15.9	%	38.2	%
○ 총수출액	325,681	백만\$	10,240억	억\$(2007)
- 농림축산물수출액	2,304	백만\$	687	억\$(2006)
- 농림축산물 비중	0.7	%	6.7	%
○ 총수입액	309,309	백만\$	18,690억	억\$(2007)
- 농림축산물	13,327	백만\$	640	억\$(2006)
- 농림축산물 비중	4.3	%	3.4	%

자료 : USDA(www.ers.usda.gov) 및 농림통계 변형, 국회 답변자료

<표 1-3-4>

주요 농산물 생산량(2007년)

(단위 : 백만톤)

	세 계 전 체(A)		미 국(B)		B/A(%)	
	생 산	교 역	생 산	교 역	생 산	교 역
밀	606	110.5	56	35.5	9.2	32.1
옥수수	780	97.7	332	63	42.6	64.5
콩	220	75.3	70	29.7	31.9	39.4
쌀	427	31.3	6.3	3.0	1.5	9.6

* 자료근거 : 미농업부 해외농업처(FAS), Foreign Agricultural Commodity Circular Series, periodic

2) 농업정책동향

미국의 농업정책 및 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주요 농업정책은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단가, 연도별 예산 등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농업법(Farm Bill)으로 법제화하여 집행하고 있다. 2008년 정책사업은 2008년 농업법에 근거하고 있다.

2008년 농업법(Farm Bill)은 2008년 5월 14일 하원에서, 그리고 5월 15일 상원에서 가결된 후 2008년 6월 18일 정식법률로 확정되었으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작물년도) 5년간 유효하며, 소요 예산은 2002년 농업법 보다 370억불 증가한 5년간 총 3,050억불로 예상하고 있다.

농업법은 1933년 제정된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을 근간으로 발전하여 왔는데 기본적으로 1862년 미농업부(USDA) 창설 이후 가족농 중심의 소득 보존과 가격지지를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가격지지는 직불제 형태로 생산조정과 재고관리를 시장기능에 따르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농업법은 미국 농업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점시책(policy + Program)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연도별 지원 예산규모를 명시, 규범법과 집행법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며, 1965년 농업법 이후 4-5년 주기로 개정·보완하고 있다.

둘째,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성 및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됨에 따라 국내외산 농산물 및 식품의 위생검사기준과 통관절차, 유기농산물 규격 등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 생산식품뿐만 아니라 수입식품의 안전성조치와 관련된 농무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from farm to table) 전 단계를 감시하여 식품 안전성 보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축산물 및 수산물에 적용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를 과일, 채소 등의 분야까지 확대하였다. 특히, 2003년 12월의 BSE 발생 이후 소와 쇠고기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NAIS(동물개체식별시스템) 검역강화, 연구개발사업이 확충되어 실시되었다.

2001년 9.11테러를 계기로 2002년 11월 창설된 국토안보부는 농업과 식품 분야를 국가안보의 핵심적인 부문으로 인식하여 동식물검역 및 식품 수입 절차도 바이오테러에 대비한 감시·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유기식품기준, 유전자변형농산물(GMOs)의 안전성 기준 및 표시제, 계란 위생기준, 식육의 원산지표시제 도입 등에 관하여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미국 농무부는 유기농업인증제, 시범적인 유기농업지원제 등을 마련하여 유기농업을 적극 육성하여 나가고 있다. 원산지표시제도(COOL)의 경우 2002년 의회에서 1946년 제정된 농산물거래법에 추가하여 “2002 Farm Bill”에 포함하여 2004년 제정되었으나 그간 강제적 시행이 유예되어 오다 2009년 3월 16일부터 연간 매출액이 23만불 이상 되는 식육 및 신선농산물을 판매하는 소매점부터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되었다.

환경농업정책의 일환으로 토양유실, 지하수 오염, 습지상실 등의 환경문제 방지를 위해 보전유보 계획(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개선 장려계획(Wetland Quality Incentives Program, EQUIP)도 확충하였다. 이러한 환경농업정책은 국내적으로는 생산 감소 효과를 가져와 곡물의 과잉생산을 방지하는 효과는 물론 여가와 복지욕구의 충족과 종합적인 국가 안보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로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여타 분야의 농무부의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WTO 허용보조 프로그램은 향후에도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최근 미국농업정책의 주요 과제로 농산물 시장 확대 및 수출 증대를 목적으로 WTO, APEC, FTA 등 각종 국제기구 및 지역협정을 통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 지향성이 강한 공화당 부시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농업정책은 농산물의 무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무역협상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획득, 범미주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greement of the America)를 비롯한 지역FTA 정책 추진 등으로 강화하고 있다. 무역협상 권한은 2002년 8월 1일 상원을 통과하여 발효된 것으로 2007년 7월 1일까지 유효하였다. 동 법안은 대통령에 대한 무역협상권한(TPA) 부여, 무역으로 인한 실직 근로자에 대한 무역조정지원(TAA), 개도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연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시행정부는 강력한 FTA 등 자유무역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09년 2월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전 정부에서 합의되었던 한·미 FTA, 콜롬비아·미국 FTA 등이 아직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하는 등 FTA 추진은 상대적으로 소강상태에 머무르고 자국 산업의 이해를 더 많이 반영하여 FTA를 추진하려는 성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넷째, 미국은 세계적인 농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1년간 연평균 1.8%의 생산성 향상이 지속될 수 있었던 점은 연구개발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투자, 농업인프라에 대한 공공 지출, 비료나 농기계에 대한 기술향상 등 네가지 요인에 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의 기술개발 지원은 농산물의 다양한 용도로의 활용을 위한 Bio기술, GM기술, 곡물연료 생산 및 사용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참고로 2006년 미농무부가 발표한 “2005~2010회계연도 전략계획(Strategic Plan for FY 2005-2010)”에서 미농무부는 6개의 전략목표를 제

시하고 USDA의 역량을 집중토록 하고 있다. 6대전략 목표로는 미국 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농촌 및 농가경제의 경쟁력 및 지속 가능성 제고, 농촌에서의 경제적 기회 증가 및 삶의 질 향상지원, 미국 농업 및 식품공급 보호 및 안전성 제고, 미국인의 영양 및 건강증진, 미국의 자연자원 토대 및 환경의 보호 및 증진이다.

3) 개정 농업법 주요내용

마케팅론 프로그램, 가격상쇄직불, 고정직불 등 작물소득 보전 관련 내용은 2002년 농업법 내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입보전직접직불(ACRE)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으며, 대상농가를 농외 소득은 50만불 이하, 농가소득은 75만불 이하, 경작면적은 10에이커 이상으로 변경하였다.

식품공급(104억불) 및 환경보존(79억불) 프로그램 예산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재생에너지, 바이오에너지 관련 융자 및 연구지원을 강화하고, 원예(과일, 채소) 및 유기농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신규로 책정하였다. 또한 그간 수산물에만 적용되어오던 원산지표시제(COOL)를 육류 및 신선농산물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표 1-3-5>

개정 농업법 주요 내용

구 분	개 요
작 물 (Commod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농업법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되, 소득보전직접지불 제도 도입 • 자격기준 변경: 농외소득 100만달러에서 50만달러 이하로 변경, 농가소득 75만달러 이하 • 일부 품목의 가격보전직접지불 목표가격의 인상 • 설탕 및 낙농 프로그램 확대 • 프로그램 작물 추가
환경보전 (Conserv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환경보전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79억달러)
영 양 (Nutri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가격 인상에 따라 푸드 스탬프, 급식,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104억달러) • 식품은행(food bank) 지원(13억달러)
에너지 (Energ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 에너지 산업의 신기술개발 지원(10억달러) • 옥수수 에탄올에 대한 세금공제는 축소하는 대신 셀룰로오즈 에탄올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업에 대한 용자보증프로그램 도입
원예 및 유기농 (Horticulture and Organic Agricul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일과 채소에 대한 지원을 최초로 명시 • 지역푸드네트워크 활성화 도모
축 산 (Livesto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류 및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제 의무화 시행

(양자협상협력과 수의사무관 김용상)

나. 중 국

1) 농업경제동향

중국의 2008년 농가인구는 총 인구의 54.3%인 721,350천명이고, 경지면 적은 국토의 13.5%인 122백만ha이다. 농가호당 경지면적은 0.6ha로 매우 영세한 규모이다. 2008년 농업·농촌경제의 대 국민경제 기여율을 6.5%로 전년 대비 3.2%포인트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촌주민의 소득 격차는 3.31 : 1로 그 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화해사회 건설을 국정의 최상위에 두고 있는 것도 결국은 이러한 도 농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도시와 농촌 할 것 없이 전국민이 함께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뜻이 담겨 있다.

<표 1-3-6>

중국의 주요농업지표

구 분	단 위	2008	구 분	단 위	2008
○ 농촌 인구 - 총 인구대비	천명 %	721,350 54.3	○ 벼 생산량 ○ 옥수수 생산량	백만톤 "	192 166
○ 농가 호수 - 총 가구대비	만호 %	197,07	○ 식량작물 재배면적 ○ 채소·과수 재배면적	천ha 천ha	106,793 28,610
○ 1차산업 총생산액 - GDP 대비	억 위엔 %	34,000 11.3	○ 농산물 수출 - 전년 대비 증가	억달러 %	405.28 9.5
○ 경지면적 - 농가호당경지면적	백만ha ha	122 0.6	○ 농산물 수입 - 전년 대비 증가	억달러 %	586.84 42.8

자료 : 농림수산업 주요통계(2008), 중국통계연감(200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농업과 농촌 발전 동향

2008년은 국내외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 국제 농산물 시장의 과도한 파동, 농자재 가격의 대폭 상승, 심한 자연재해 등의 중대 도전에 직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농촌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중국의 2008년 GDP는 전년대비 9.0% 증가한 30조670억 위안이며 그 가운데 제1차산업 총생산액은 3조 4천억 위안으로 국내총생산액의 11.3%를 차지하였다.

2008년 식량생산은 재배면적이 106,793천ha이고 식량총생산량은 전년대비 5.4% 증가한 5억 2871만 톤으로 역대 최대 생산량을 달성 하였고신중국 건국 이래 최초로 5년 연속 증산을 실현하였다. 유지작물 생산은 감소에서 증가

로 전환하였고, 면화는 2년 연속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하였으며 채소, 과일, 차, 화훼 등 원예작물은 연초 남방지역의 심각한 냉해를 극복하고 증산을 실현하였다. 축산업은 돼지 생산의 쾌속 회복에 힘입어 안정적 발전을 이루었다. 2008년 육류총생산량은 7,279만 톤으로 전년대비 6.0% 증가하였다.

2008년 전국 농산물 생산가격 총 수준은 전년대비 14.1% 상승하였으나 상승폭은 전년보다 4.4% 포인트 하락하였다.

2008년 농산물 무역 총액은 991.6억 달러로 전년대비 27.0% 증가하였다. 그 중 수출액은 405.0억 달러로 9.4%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586.6억 달러로 42.8% 증가하여 농산물 무역적자가 181.6억 달러에 달했다.

2008년 농촌주민 일인당 순소득은 4,761위안으로 전년대비 15%(621위안) 증가하였으며 가격요인의 영향을 제외한 실질증가율은 8%이다. 농촌주민의 생활소비 지출은 일인당 3,661위안으로 전년대비 13.6%(437위안) 증가하였으며 가격요인을 뺀 실질증가율은 6.6%이다.

2008년 국가가 농업부에 배정한 각종 농업지원금은 595.24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66.6% 증가하였다. 이 농업지원금은 기본건설투자에 192.44억위안, 재정 특별항목자금으로 402.8억위안 사용되었다. 이 농업지원금은 식량이나 유지작물 등 대중농산물 생산능력, 장바구니 품목 생산능력, 농업과학기술 혁신능력, 재해 방제능력, 순환농업과 생태보호 및 농산물 품질안전 서비스체계 등 6개 분야의 건설에 중점적으로 투입되었다.

2008년 농촌퇴치 대상 인구는 4,007만명으로 전체 농촌인구의 4.2%이다. 전년 대비 빈곤인구는 313만명이 감소하였고 빈곤발생률도 0.4% 하락하였다.

2008년 중국의 농기계 총 동력은 8.22억 킬로와트로 전년대비 6.9% 증가하였고, 트랙터 보유대수가 2021.9만대에 이르는 등 농업기계화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중대형 트랙터 보급대수는 46.3% 증가하였고 콤바인 보급대수도 74.4만대로 17.6% 증가하였다. 2008년 전국 종합농업기계화수준은 45.8%로 전년대비 3.4%포인트 상승하였다.

2008년말 기준, 전국의 각종 농업 산업화 조직수는 20.15만개이며 그 중 용두기업이 8.15만개로 9,809만호 농가를 선도하고 있다. 산업화 경영에 참여

하는 농가는 연간 호당 평균 1,797위안의 소득증대가 이루어진다.

2008년 설립을 심사 승인한 농업부가 지역지정시장은 모두 54곳이며 농업부 지역지정시장은 총 748곳이 되었다. 농업부문은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추진, 농산물 생산과 유통 연결 강화, 국제시장 개척 및 농산물 시장 관측 및 조기경보 등 방면에서 갈수록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여 농산물 유통서비스 능력을 한층 제고시켰다.

농촌정보화 시범 프로젝트 등을 통해 농촌정보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미 전국 20여개 성(자치구, 직할시)가 “12316”농업서비스 핫라인을 개통하였다.

2008년 농산물품질안전 규정 준수 관찰 결과 채소, 축산물, 수산물 가운데 주요 약물 잔류 평균합격률이 95%이상에 달하였다.

3) 주요 농업과 농촌 정책

2008년 정부는 각종 정책조치를 통해 양돈, 양계, 낙농, 면화 등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2008년 정부의 농업 지원 정책은 그 강도가 그 어느 해 보다 강했다. 재정투입의 총량, 그 증가액 및 증가율 모두 역대 최고였다. 중앙재정의 “4대 보조”자금은 1,030.41억위안으로 2007년보다 배로 늘었다. 보조 수량이 대폭 증가하였고 보조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보조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농업생산 발전과 농민소득 증가 촉진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2008년 농촌종합개혁업무는 향진(읍면)기구 개혁, 농촌의무교육관리체제 개혁, 현향(군면)재정관리체제 개혁, 임권제도 개혁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2008년 정부는 밀과 벼의 최저수매가격을 연속적으로 제고시킨 것을 비롯하여 국가식량의 거시적 관리측면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 벼 최저수매가격 실시 범위를 11개 성(자치구)로 확대하고 식량생산농민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적절한 식량 수급 조절을 통해 식량가격을 안정시키고 철저한 식량 비축 관리로 시장조절능력을 제고시키고 국유식량기업의

소유권제도 개혁을 강화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국제금융위기 발생으로 농민공의 취업 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농민공의 취업문제는 국가 중대 정책 현안에 해당하므로 농민공의 실직에 따른 사회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조치를 동원하여 농민공의 취업 확대를 도모하였다.

이상 언급한 농업정책 외에도 2008년 중국 정부가 추진한 주요 농업정책은 다양하다. 농민부담 경감, 농촌토지양도 관리, 농민전업협작사 발전 추진, 농촌금융개혁 강화, 농업기술보급체계 개혁과 건설, 축목수의관리체제 개혁, 농업법제 구축 등이 주요 농업정책에 포함되어 있다.

(양자협상협력과 기술서기관 최현호)

다. 일 본

1) 농업경제동향

일본의 2008년 농가인구는 총 인구의 5.7%인 7,295천명이며, 2008년 경지면적은 국토의 약 12.2%인 4,628천ha이다. 2008년 호당 경지면적은 1.85ha로 한국의 1.45ha보다 약간 많은 편이다. 2008년 농산물 수입액은 59,821억엔으로 수출액 2,883억엔보다 약 20.7배 가량 많다. 일본의 식량 자급률은 열량 기준으로 41%이며, 생산액 기준 65%이며, 이 중 쌀의 자급률은 98.6%이다.

<표 1-3-7>

일본의 주요농업지표

구 분	단 위		구 분	단 위	
○ 농가 인구(2008) - 총 인구 대비	천명 %	7,295 5.7	○ 쌀 생산량(2009)	백만톤 (현미 기준)	8.46
○ 농가 호수(2008) - 총 가구 대비	천호 %	2,521 4.8	○ 맥류* 재배면적(2008)	천ha	266
			○ 과실류 재배면적(2008)	"	287
○ GDP(2007)	억달러	43,797	○ 농산물 수출(2008)	억엔	2,883
○ 경지면적(2008) - 호당 (2008)	천ha ha	4,628 1.85	○ 농산물 수입(2008)	억엔	59,821

자료 : 1. 농림수산물식품 주요통계(2009)
2. 일본 농림수산물통계(2009), *맥류 4종

2) 농업정책동향

일본 정부는 식량자급률 저하, 농업인의 고령화, 농지면적의 감소, 농촌의 활력 저하 등 식료·농업·농촌을 둘러싼 정세의 변화, 국제화의 빠른 진전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1961년 제정하였던 구「농업기본법」을 대체하는 「식료·농업·농촌 기본법」을 1999년 7월 제정하였다. 동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21세기 농정의 기본이념은 식료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 농업의 다면적 기능 발휘,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농촌 진흥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1세기 농정의 기본이념에 따른 모든 시책 실시의 평가 및 보증을 위하여 2000년 3월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 5년마다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2005년 3월 1차 수정을 거쳤다. 동 기본계획은 2015년까지 10년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공정을 제시하고 매년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식료·농업 및 농촌에 관한 시책의 기본 방침, 식량자급률 목표, 식료·농업 및 농촌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강구해야 할 시책 등을 담고 있다.

이하 2005년 책정한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에 의거 일본 정부가

“21세기 신농정 2008”로 추진하였던 농정개혁 과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신농정 2008’은 국제적인 식량사정을 감안한 식량안전보장의 확립, 소비자의 식(食)에 대한 신뢰확보와 식생활의 충실을 기하는 시책의 전개, 국내농업의 체질강화에 따른 식량공급력의 확보, 농산어촌의 활성화, 환경·자원대책의 5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국제적인 식량사정을 감안한 식량안전보장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외 식량사정에 관한 정보를 일원화하여 수집·분석, 제공하여 국민적인 협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정보는 재외공관, 회사 등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수집하고 수입국으로서의 독자적인 중장기 세계식량수급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정보를 분석하고, 식량수급보고서나 식량수급 팸플릿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국내에서 식량공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쌀가루나 사료용 쌀 등의 쌀 이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식량자급률 향상 대책으로서 청예옥수수나 식품잔사를 사료화하는 에코사료 등의 생산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농업에 관한 국제교섭 등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WTO나 EPA의 국제교섭에서 ‘다양한 농업의 공존’을 기본이념으로 일본 국내 농업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해야 하는 것’은 ‘지킨다’는 방침하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며, 아프리카의 농업 생산성 향상이나 생산확대 등에 협력하는 것을 통해 세계의 식량문제해결에 기여하고, 검역협회의 가속화, 수출비즈니스모델의 확립 등에 의해 일본 농림수산물과 식품의 수출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이다.

둘째, 소비자의 ‘식(食)’에 대한 신뢰확보와 식생활 충실을 위한 시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자주적인 정보제공의 장려 등을 추진하고, 식품산업계에 대해서는 국가가 제시하는 신뢰성 향상을 위한 절차에 따라 자주행동계획을 책정 또는 계획에 근거하는 조치를 요청하며, GAP나 HACCP 방법의 도입을 추진하여 생산에서 소비자의 식탁까지 식품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쌀밥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보급하여 쌀을 중심으로 하는 식생활의 실천을 추진하고, 각종 캠페인을 통해 학교급식에 쌀을 보급하고 정착시키는 조치를 추진하여 쌀 중심의 식생활을

실천토록 한다. 학교급식이나 기업의 식당 등에 현지 농림수산물을 활용토록 하고, 직매소를 중심으로 한 ‘지산지소’ 실천을 전개해 가고 있다.

셋째, 국내농업의 체질강화를 통해 식량공급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의욕적이고 능력있는 영농인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논·밭경영 소득안정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경영의 발전단계에 따른 지원으로 다양한 농업경영의 발전을 촉진하고 젊은이들이 농업에 종사하도록 촉진하고,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의 다양한 인재들이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다. 한편 식량의 생산기반인 농지를 확보하고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농지의 임차가 용이하도록 농지정책을 개정하고, 새로운 토지개량장기계획을 수립해 간다. 논·밭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과 농업단체의 연대를 통해 생산조정목표의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가며, 경작방기지의 해소를 위해 경작방기지 해소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가고 있다. 혁신을 선도하는 기술개발을 가속화하고, 지적재산의 전략적인 창조와 보호 및 활용을 위해 농림수산지적재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아시아식물품종보호 포럼을 통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품종보호제도의 조기정비를 추진해 가고 있다.

넷째,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리더의 육성이나 자문관의 지도와 조언에 의한 지역활성화를 담당할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도시주민, NPO기업 등의 다양한 주체의 협동, 지역축제나 전통문화의 보호·부활, 매력적인 지역고유의 경관 만들기를 지원하며, 초등학교의 농산어촌 장기숙박체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기간산업인 농림수산업과 상업·공업 등의 연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행정단위별로 피해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계획에 근거한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하며, 효과적인 피해방제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섯째, 환경·자원대책으로는 일본산 바이오연료의 대폭적인 생산확대를 위해 농림어업자와 바이오연료제조업자의 연대를 통해 저비용·안정공급을 지원하고, 비식용자원에서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일본형 바이오연료 생산 확대대책’을 추진해 가고 있다. 지산지소형·환경부하가 적은 ‘바이오매스 타운’에 대해 복수의 행정단위가 연대하여 광역적인 바이오매스의 활용

모델의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림수산분야에서 지구온난화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삼림흡수원 대책, 바이오매스자원의 순환이용 등 배출절감대책을 가속화하고 지구온난화의 농림수산업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적응책을 추진하고, 퇴비의 시용 등 적절한 토양관리를 통한 농지토양의 온실가스의 흡수원으로서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양자협상협력과 농업주사보 유미랑)

라.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

1) 농업경제 동향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2008년 현재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경제·정치적 연합체로써 GDP 12.3조유로(1인당 GDP 24,800유로)(2007), 인구 495,090천명(2007), 면적 432,526천ha의 거대 경제권이다.

EU 27개 회원국 전체의 경지면적은 182,264천ha(2007), 농업분야 취업자 수는 12,218천명(2007)으로 전체 취업자 수의 5.6%를 점유하고 있으며, 농업총생산액은 3,558억유로(2007) 정도이다. 2007년 농산물 생산액은 우유생산이 1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곡물류 10.9%, 돼지고기 8.6%, 쇠고기 8.5%, 신선채소 8.5%, 신선과일 6.6%, 포도 및 포도액 4.6% 순이었다. 농업생산에서 회원국들이 비중(2007)을 보면 프랑스(18.7%), 독일(12.7%), 이탈리아(12.4), 스페인(11.4%), 네덜란드(6.5%), 영국(6.4%), 폴란드(5.6%), 루마니아(4.0%), 그리스(3.0%), 덴마크(2.6%), 벨기에(2.1%), 포르투갈(1.9%), 헝가리(1.9%), 오스트리아(1.8%), 아일랜드(1.7%), 스웨덴(1.4%), 핀란드(1.3%), 체코(1.2%), 불가리아(0.9%), 슬로바키아(0.6%), 리투아니아(0.6%), 슬로베니아(0.3%), 라트비아(0.3%), 사이프러스(0.3%), 에스토니아(0.2%), 룩셈부르크(0.1%), 몰타(0.1%)의 순이었다.

EU 전체로 볼 때 농수산업 종사자가 전체 고용인구중에서 차지하는 비중(2007)은 5.6%이다. 국가별로는 영국(1.4%), 말타(1.8%), 룩셈부르크

(1.8%), 벨기에(1.9%), 독일(2.2%)은 그 비중이 낮은 반면, 루마니아(29.5%), 폴란드(14.7%), 포르투갈(11.6%), 그리스(11.5%), 라트비아(10.4%) 등은 높은 편이다. 신규 회원국을 중심으로 전체 고용인구 중 농수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이다. 농업이 전체 GDP중에서 차지하는 비중(2007)은 룩셈부르크(0.3%), 스웨덴(0.4%), 영국(0.4%), 독일(0.6%), 벨기에(0.8%)는 낮은 편이며, 루마니아(5.1%), 불가리아(4.2%), 사이프러스(3.6%), 그리스(2.8%), 폴란드(2.7%) 등으로 농업이 전체 GDP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다.

EU 역내 교역을 제외한 전체 역외 수출입액 중 농산물 및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2007)은 수출이 6.1%(총 12,744억유로 중 780억유로)이며, 수입은 5.4%(총 14,465억유로 중 787억유로)이다. 농산물 역외 수출의 주요 대상국은 미국(18.12%, 14,137백만유로), 러시아(9.9%, 7,694백만유로), 스위스(6.4%, 4,980백만유로), 일본(5.2%, 4,020백만유로) 등이며, 2006대비 8.0% 정도 증가하였다. 주요 수출품목은 주류 및 음료(17,436백만유로), 낙농품, 달걀 및 벌꿀(6,355백만유로), 담배 및 담배원료(5,178백만유로), 밀가루 또는 전분제조품(4,525백만유로), 육류(4,290백만유로) 등이다. 농산물 역외 수입의 주요 대상국은 브라질(15.5%, 12,233백만유로), 미국(9.0%, 7,104백만유로), 중국(4.4%, 3,450백만유로), 터키(4.0%, 3,127백만유로) 등이며, 주로 과실 및 너트류(12,354백만유로), 커피, 차 및 향신료(5,819백만유로), 유지종자류(6,058백만유로), 동물 또는 채소 지방 및 기름(5,728백만유로) 등이 주요 수입품목이다. EU의 농산물 교역은 역내 무역이 역외 무역에 비하여 비중이 크다. EU의 역외 농산물 무역은 2006년도에 46억유로의 흑자를 보였으나, 2007년도에는 681백만유로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자료출처: Agriculture in the European Union, Statistical and Economic Information 2008. 2009.3월)

<표 1-3-8>

EU의 주요 농업지표(2006-2007)

국 가 (27개국)	경지면적 (천ha)	농장수* (천개)	농장당 경지면 적 (ha)	농업분야고용		농업 생산액 (백만 유로)	농업 부가가치 (백만 유로)	GDP 대 비 (%)	농산물 무역			가계비중 식품비 (%)
				취업자 (천명)	전체 대비 (%)				수입 비중 (%)	수출 비중 (%)	무역 역지 유로 (백만 유로)	
	2007	2007	2007	2007	2007	2007	2007	2007	2007	2007	2007	2006
E U _ 2 7	182,264	-	-	12,218	5.6	355,810	153,516	1.2	7.4	8.4	-696	16.2
벨 기 에	1,370	48	28.6	81	1.9	7,355	2,549	0.8	7.6	6.3	-1,909	16.5
불 가 리 아	5,116	-	-	245	7.5	3,315	1,227	4.2	15.5	21.6	160	-
체 코	4,254	39	89.3	176	3.6	4,325	1,205	0.9	3.2	5.3	57	22.8
덴 마 크	2,695	45	59.7	83	3.0	9,158	2,574	1.1	12.3	26.2	2,380	14.6
독 일	16,954	371	45.7	859	2.2	45,363	15,008	0.6	6.6	3.8	-3,240	14.4
에스토니아	823	23	38.9	31	4.7	679	278	1.8	9.1	20.6	152	23.8
아 일 랜 드	4,276	128	32.3	117	5.6	5,972	1,896	1.0	4.7	15.7	3,555	13.4
그 리 스	3,984	-	-	520	11.5	10,771	6,381	2.8	7.8	24.5	-97	20.1
스 페 인	24,991	-	-	926	4.5	40,708	23,118	2.2	8.5	11.2	-2,558	16.5
프 랑 스	29,414	527	52.1	880	3.4	66,540	29,217	1.5	6.1	12.5	8,379	16.4
이 탈 리 아	14,490	1,679	7.6	924	4.0	44,365	25,213	1.6	6.6	6.9	-375	17.3
사이프러스	151	40	3.6	17	4.4	1,071	571	3.6	9.2	14.4	-111	21.9
라 트 비 아	1,839	108	16.5	111	9.9	1,047	344	1.7	18.0	57.4	94	-
리투아니아	2,696	230	11.5	160	10.4	2,078	769	2.7	16.4	60.9	449	32.2
룩셈부르크	131	2	56.8	4	1.8	285	121	0.3	1.2	0.9	-45	18.2
형 가 리	5,807	626	6.8	180	4.6	6,676	2,468	2.4	2.7	16.7	1,086	25.8
말 타	10	11	0.9	3	1.8	295	129	2.4	6.7	3.8	-12	19.2
네덜란드	1,886	77	24.9	253	3.1	23,015	8,828	1.6	9.6	16.3	-3,191	13.8
오스트리아	3,239	165	19.3	231	5.7	6,343	2,777	1.0	8.5	8.5	590	13.7
폴 란 드	16,177	2,391	6.5	2,247	14.7	19,937	8,318	2.7	9.4	26.6	571	27.3
포 투 투 칼	3,679	275	12.6	601	11.6	6,631	2,143	1.3	10.9	9.7	-580	20.5
루 마 니 아	13,714	-	-	2,762	29.5	14,312	6,265	5.1	12.5	11.0	-486	33.0
슬로바니아	499	75	6.5	96	9.9	1,113	416	1.2	11.1	5.3	-243	19.4
슬로바키아	1,931	69	28.1	99	4.2	2,016	526	1.0	1.5	4.4	43	23.0
핀 란 드	2,255	68	33.6	113	4.5	4,511	1,497	0.8	4.0	4.2	294	17.3
스 웨 덴	3,121	73	42.9	102	2.3	5,078	1,479	0.4	7.2	4.3	32	15.7
영 국	16,761	300	53.9	398	1.3	22,853	8,199	0.4	6.9	4.9	-5,691	12.7

* 농장수(agricultural holdings): 농업생산에 사용되는 단일 관리 단위로 농지, 건물, 산림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

2) 농업정책동향

EU는 1957. 3월 로마조약에 의거 회원국 공통의 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CAP)을 실행하고 있다. 이 조약 내용을 살펴보면 EU농정은 단일시장(Single Market), EU 생산농산물 우선(Community Preference), 공동재정부담(Common Financial Responsibility)을 기본운용 원칙으로 삼고 공동농업정책(CAP)의 목표를 농업생산성 향상, 농민의 소득향상,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적정한 소비자 가격유지에 두고 있다.

이러한 CAP도 1988, 1992, 1999년(Agenda 2000), 2003년 7월(MTR) 및 2008년 건진성 평가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수차례의 개혁을 겪었다.

1차개혁(1988) 때는 농산물 과잉생산문제가 그 배경이 되었고, 2차 개혁(1992) 때는 UR협상에 대비 가격지지 축소 및 직접지불제 도입, 제3차 개혁(1999, Agenda 2000) 때에는 CAP 재정지출억제 등을 목표로 가격지지 축소, 직접지불 강화, 농촌개발정책 확대, 제4차 개혁(2003. 7)은 단일농가 직접지불제도의 도입, 가격지지 축소, 환경과 농촌개발 강화가 주요내용이다.

Agenda 2000의 주요내용은 곡물분야에 대한 지지가격을 2000/2001년부터 2개년에 걸쳐 15% 감축하고, 소득 손실보상을 위한 직접지불금을 인상 지급하며, 직접지불을 조건으로 실시하는 의무 휴경비율을 기존 17.5%에서 2006/2007 까지 10%로 하향 조정하되 시장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쇠고기 분야는 광우병과동 등에 따른 공급통제로 재고가 낮아지고 있으나 2005년까지 재고가 늘어날 전망이므로 지지가격을 2000년 7월부터 3년간 균등비율로 20% 감축하고 장려금을 인상 지급하며 조방화를 위한 가축사양밀도는 ha당 2.0 가축단위로 계속 제한기로 하였다. 낙농분야에 있어서는 지지가격을 2005/2006부터 3년간 균등비율로 15% 감축하고 그에 따른 낙농보상금을 2005년부터 지급하되 젖소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우유생산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현행 쿼터제도는 2007/2008까지 연장하는 등 생산쿼터제도를 급격히 폐지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환경보전차원에서 CAP보조금 지급시 일정한 환경기준준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농가가 이를 위반할 시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 조기이농, 농업환경, 임업, 조건불리지역 등과 관련한 농촌개발정책, CAP수행을 위한 재정문제 등도 「Agenda 2000」의 공동농업정책에 포함되어 있다.

EU 공동농업정책 중간개혁안(MTR: Mid-term review)은 2003년 6월 26일 합의되었다. MTR은 전체 예산 규모 면에서는 Agenda 2000에서 설정된 수준과 같지만 CAP의 추가 개혁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변화를 담고 있다. MTR에서는 새로운 농정수단과 운용체제가 도입되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당부분의 블루박스에 해당하는 직접지불을 WTO 규정이 허용하는 그린박스의 형태로 전환했다. MTR은 보상 직접지불과 가축두수에 대한 프리미엄 등 블루박스의 대부분을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WTO상의 허용보조(그린박스)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금의 다양한 직접지불을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형태로 통합해 농가당 단일 직접지불(single farm payment: SFP)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둘째, 일부 품목에 대한 가격보조를 폐지하거나 그 수준을 낮췄다. 독일에서 많이 생산되는 호밀에 대한 개입가격이 폐지되고, 쌀에 대한 개입가격은 지금의 1/2 수준인 톤당 150유로로 감축되면서 그 개입물량도 연간 7만 5,000톤으로 제한된다. 곡물에 대한 개입가격은 지금과 같은 톤당 101.31유로로 유지하기로 했다.

낙농제품에 대한 쿼터는 2006/07~2008/09년에 0.5%씩 늘어나고, 쿼터제도는 2014년까지 유지된다. 대신에 버터에 대한 개입가격은 2004년부터 4년 동안 모두 25% 줄고 개입물량도 7만 톤에서 3만 톤으로 감소된다. 탈지분유의 개입가격은 3년 동안 총 15%를 감축하지만 개입물량은 10만 9,000톤으로 유지된다. 우유에 대한 목표가격은 없어졌다.

셋째, 환경과 농촌개발에 대한 조치가 강화됐다. 직접지불을 받기 위해 농가는 환경보전 등 기본적인 의무준수요건(cross-compliance)을 이행해야 한다. 이 의무준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수혜 농가에 벌칙(보조 규모의 감축)이 부과된다.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한 농업환경 조치(AEM)에서

회원국과 공동 부담하는 EU의 비율이 높아졌다. 1인당 GDP가 EU 평균의 75% 이하인 목표 1지역의 경우에 EU의 부담 비율이 최대 85%로 늘어나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60%로 정해졌다.

2005년은 2003년 중간개혁에서 제외되었던 설탕 분야의 개혁 방안이 타결되었다. 2004년 6월에 집행위에서 설탕분야 개혁안을 발표한 이래 많은 토론과 의견수렴, 협상의 과정을 거쳐 2005년 11월에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지가격을 4년간 36% 인하하고 보조금 지급은 생산과 단절하되 소득손실의 64.2%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개년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공수매 등 시장개입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2006.12월 EU집행위는 농업부문에 대한 회원국가 보조금 지급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채택하였는 바, 기존의 복잡한 농업부문 국가보조금 가이드라인을 통합하여 2007-2013년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신설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기존의 농산물 상품광고, 도축장 폐기물 관련 국가 보조금 지급가이드라인 및 농업부문 단기정책 용자지원지침은 폐지되고, 용수 관련 지원, 에너지작물 및 전력 관련 소비세 면제 지원 내용이 국가 보조금 지급 범주에 추가로 포함되었다. 한편, 농산물 가공, 판매 관련 국가보조금 지급규정은 폐지되고, 일반 산업부문 국가보조금 지급 규정에 의해 규율하도록 하였다. 일정 수준(농가당 3년간 3,000유로) 이상 국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규율대상 국가보조금으로 보지 않는 de minimis 규정은 그대로 존속시켰다.

유럽연합은 7년간 중기 예산을 미리 정하는데, 2007-2013년간 중기예산을 확정하였다. 총예산 8,624억 유로 중 농업예산은 3,629억 유로이며 이중 가격지지 및 직접지불에 2,931억 유로, 농촌개발에 698억 유로가 배정되었다. 농촌개발정책 분야에 대한 예산은 분야별로 예산 배정 하한을 규정하였는데, 농업경쟁력 제고에 10%, 농촌경제 다각화에 10%, 환경 및 국토관리 지원에 25%, LEADER 방식에 5%를 최소로 배정해야 한다. 유럽농업지도보 증기금(EAGGF) 등 여러 회계에서 농촌개발정책의 재원이 마련되고 있는

데 이를 유럽농촌개발기금을 창설하여 재원을 통합하기로 하였다.

2008. 11.20. EU 농업각료이사회는 지난 1년간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논의되어 온 공동농업정책 건전성 평가법안을 정치적으로 합의하였다. 공동농업정책 건전성평가는 2003년 공동농업정책 중간평가개혁 (Midterm Review) 이래 현재 중기재정개혁이 마무리되는 2013년까지 동 개혁방향을 유지하면서 정책을 보다 효율화하는데 중점을 둔 소규모 개혁조치로 2007.11.20. 집행위가 정책구상(communication)을 발표하고 회원국 반응을 감안하여 2008. 5.20. 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 2013년 이후 농업정책개혁은 2009년 재정중간평가 기간 중 공식 논의될 예정인 바,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가 보조금 생산 비연계(De-coupling)를 강화하였다. 밀, 올리브, 호프, 쇠고기, 살, 땅콩, 종자, 감자전분 등 현재 남아있는 생산연계성 직불금은 늦어도 2012년까지 생산 비연계 직불금으로 전환하여 단일농가직불금에 통합한다. 단, 송아지, 양, 염소에 지급되는 생산연계 보조금은 현행수준을 유지하고, 농가직불금 지급과 연계하여 친환경, 동물복지, 식품품질기준 준수를 요구하는 상호준수의무(Cross-compliance)중 농가의 책임과 관련이 없는 기준은 폐지하는 등 간소화한다. 대신 강제휴경으로 유지되었던 환경이익유지, 물 관리 개선 등 의무사항 추가하고, 농가지불금은 최소 250유로, 경작면적 1ha이상인 경우 지급한다는 원칙 하에 국가별로는 EU 평균 농가규모 및 지급수준과 비교한 상관계수를 적용하며, 에너지작물 지원금(45유로/ha)은 폐지된다.

둘째, 민감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관련, 회원국이 직접지불금 국가예산상한의 10% 범위 내에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해 친환경적 조치, 품질개선, 유통개선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69조 조항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한다. 현재는 직접지불금을 지급한 동일분야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어렵거나 취약한 지역에서 우유, 쇠고기, 염소, 닭고기, 쌀을 생산하는 모든 농가에 사용이 가능(WTO 감축대상보조)하다. 또한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작물 보험 등 위험관리를 위해 사용이 가능하며, 동물

질병 발생에 대비한 상호부조기금 지원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단일면적직접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신규 회원국도 적용 가능하며, 단일농가지불제도를 적용하는 회원국은 68조 정책수단을 위해 국가재정할당(national envelope)된 재원 중 불용이 발생할 경우 농촌개발기금으로 전환된다.

셋째, 신규회원국 (EU-12)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단일면적직접지불제도 (SAPS)를 운영하는 신규 회원국가는 2010년까지 단일농가직불제도(SPS)로 전환해야 하나 이를 2013년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신규회원국 농가들은 보조금지급에 따른 상호준수(Cross-compliance) 의무 적용이 연장된다. 에너지작물 보조금을 폐지하고, 불용되는 9천만유로를 신규 회원국이 기존 회원국 수준으로 농가보조금을 받을 때까지 지원하여 68조에 명시된 어려운 지역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넷째, 농촌개발예산 확대 및 직불금 역진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5000유로 이상 직불금을 지원받는 모든 농민에게 지원되는 농가직불금의 5% (2012년부터 10%)를 농촌개발예산으로 강제 전용하여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하고, 30만유로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추가로 4%를 더 삭감하여 농촌개발예산으로 전용한다.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물 관리, 생물다양성, 혁신, 낙농분야 등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농촌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EU집행위와 회원국이 재정을 공동 부담(EU 75%, GDP가 낮은 어려운 국가의 경우 90%)한다. 젊은 후계농을 위한 투자지원액을 현행 55천유로에서 70천유로로 증액한다.

다섯째, 농산물 시장관리수단을 대폭 폐지한다. 농지의 10%를 강제휴경(set-aside)하는 제도는 폐지하고, 2015년 우유쿼터가 폐지됨에 따라 2009/10년 - 2013/14년 기간 중 매년 1%씩 우유쿼터를 증량한다(단, 이태리의 경우 2009/10년에 5% 우유쿼터를 증량). 2009/10년 - 2010/11년 자신의 우유쿼터보다 6%더 생산한 농가의 경우 정상 벌금보다 50%를 높은 중벌금을 부과한다. 돼지고기, 쌀 시장관리제도는 폐지한다. 보리, 수수에 대한 수매량을 "0"으로 설정하고 밀은 3백만톤까지만 101.31유로/톤의 가격으로 수매가 가능하며 그 이상은 공매한다. 버터 3만톤, 탈지분유 10만9천톤

범위에서 구매하며 그 이상은 구매한다.

EU 각료이사회에서 합의한 공동농업정책 건전성평가 개혁법안은 당초 EU 집행위가 밝힌 구상과 법안에서 다소 후퇴한 모습이나 이는 회원국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타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 한 조치로 판단되며, 피셔보엘 농업담당집행위원과 EU 집행위의 구상인 ① 단일농가직불금 생산 비연계(De-coupling) 강화, ② 구매, 쿼터 등 농산물 시장관리 수단 대폭 폐지, ③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물 관리 등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한 농촌개발 정책 강화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로써 EU는 농가에 지불하는 대부분의 직접지불금을 WTO 감축대상 보조 (Amber Box, Blue Box)에서 허용대상 보조 (Green Box)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하였으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농가보조금의 부농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농촌개발예산 확대를 통해 정책목표달성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공동농업정책 시행 이래 계속되어온 구매, 쿼터 등 농산물 생산관리 제도를 대부분 폐지함으로써 농민들이 정부보다는 시장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일단 건전성 평가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2012년까지의 공동농업정책 틀은 완성되었으며, 앞으로 EU와 회원국은 2013년 이후 공동농업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자협상협력과 농업사무관 김영태)

2. 양자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통상협력

양자간 농업통상 및 협력활동은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결과의 이행 및 2001년부터 논의가 되고 있는 DDA 농산물협상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었다. 아울러 2004년부터는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FTA 협상에서도 양자 통상 및 협력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농축산물 관세인하 및 동식물검역 완화 등 각국이 제기하는 통상현안에

대해서는 각각의 논의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설명하여 상대국의 이해를 촉구하는 한편, WTO협정 및 우리나라 농산물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에 따라 성실히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특히 한국은 짧은 기간안에 정부의 수입관리를 철폐하는 등 농산물교역의 자유화를 이루었으며, UR협상을 비롯한 다자 및 양자무대에서 약속한 사항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협상 상대방의 신뢰를 확보하여 현안해결을 원만하게 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다수국이 제기하는 합리적 요구사항은 WTO협정 및 국제관례 등에 따라 국내제도개선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농업정책과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가. 미 국

미국은 우리의 최대 농산물 수입국으로 미국입장에서도 한국은 캐나다·멕시코·일본·중국·대만에 이어 제6위 수출국이다. 2008년에 옥수수·대두·밀 등 곡물류, 돼지고기·쇠고기·닭고기·낙농품 등 축산물, 오렌지·건포도·아몬드·양파·주류·과일 및 채소쥬스 등 과채류 및 가공품 등 약 59억 달러를 농산물수입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산물은 인삼, 연초, 면류, 일부 과실류 등이 약 3.2억달러 수준으로 수출실적이 저조하나, 미국은 일본, 중국과 함께 3대 수출시장에 속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미국간에는 농산물 교역과정에서 크고 작은 통상현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양국간 농산물 통상현안은 동식물 검역과 생명공학 문제를 주조를 이루는 가운데 다자 및 양자간의 관세인하 약속의 이행 등이 있다.

2007년 4월초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타결되어 6월말 공식 서명한 이후 현재 양국은 의회의 비준을 추진 중에 있다.

미국은 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및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의 정책건의서 등을 통해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지역화개념적용,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통제강

화와 유전자 변형 농산물 함유 가공품에 대한 ‘유전자변형’ 상표표시 의무화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산 감귤 및 사과 수출재개, 구제역 청정국 지위 인정, 삼계탕에 대한 수입허용절차의 조속한 진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07년도에 감귤의 알래스카주 수출이 허용되었으며, 여타 주로의 확대 수출 조건에 대해 협의 중에 있다.

한·미간의 농산물 통상현안은 한·미 경제협의회, 한미통상현안 정례점검회의 및 한·미 동물검역 및 식물검역 전문가회의 등의 정례회의와 이런 정기적 협의절차 이외에 주미 한국농무참사관의 외교활동과 주한 미국농무참사관 등과의 공식·비공식협의 등을 통해 일상적인 통상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양자협상협력과 수의사무관 김용상)

나. 일 본

일본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입국으로서 우리 농수산물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다.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 일본 농수산물 수출 규모는 1,438백만 달러로 총 수출액 중 32.7%를 차지한다. 일본은 우리와 농업여건이 비슷하고 농업통상 분야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 WTO, FAO, OECD, APEC 등 다자간 국제기구에서 상호 정보교류와 공조체제를 원만히 유지하고 있고, 양국 주재공관 등 외교채널을 통한 협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98년 10월 8일 한·일 양국 정상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양국을 둘러싼 새로운 경제정세를 기초로 포괄적인 경제통상 분야의 협의를 위한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009년 10월 제8차 회의가 일본에서 개최되어 다자 및 지역차원의 협력, 양국 통상 분야 협력에 대하여 폭넓게 논의하였다.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농업 분야의 고위급 대화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2003년 3월 21일 동경에서 제4차 한·일 농업각료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 양국 농업장관은 WTO 차기 농산물협상에서의 공동대응 합의 및 새로운 농업정책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상시적으로도 각종 채널을 통해 정보 교환 및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한·일 양국은 상호보완적 농업기술협력의 필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여 1968년부터 한·일 농림수산물기술협력위원회를 매년 교환 개최하여 농업기술협력 및 정보교류를 추진하여 왔으며 제41차 회의를 2008년 12월 일본에서 개최하였다.

한편, 일본은 2003년 5월 식품위생법을 개정, 농림축산물의 생산·가공 단계 등에서 사용되어 식품에 잔류할 가능성이 있는 농약, 동물용 의약품 및 사료 첨가물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06년 5월 29일부터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 제도 시행 전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일본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 14개 종류에 대하여 우리 기준을 반영시켰으며, 관심품목에 대한 우리측 잔류기준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일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동시에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자협상협력과 농업주사보 유미랑)

다. 중 국

한국과 중국의 농식품교역은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래 급격히 증가되어 왔다. 2008년 기준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고, 중국은 우리농식품 수출대상국중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큰 시장이다. 2008년 양국간 농식품 교역량은 한국이 중국에 536백만불을 수출하고 있고 중국은 한국에 3,627백만불을 수출하고 있다. 전체산업 분야로는 한국이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대중국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양국간 통상현안 협의는 매년 개최되는 한·중경제공동위원회와 한·중 무역실무회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전체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농산물의 대한국 수출 증대에 관심이 매우 크다. 중국은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조정관세폐지 및 세율인하, 수입입찰제도개선, 중국산 과일수입문제 등 경제·통상분야의 관심사항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요청사항에 대해 국제기준에 입각한 동·식물 검역제도 및 수입절차를 설명하고 상호간 협력을 통하여 무역마찰을 최소화하면서 공동 번영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양국간 농업의 상호보완적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96년 한·중 농업분야의 전반적인 교류협력강화를 위해 양국간 한·중 농수산협력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006년 5월 서울에서 제10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양국 농업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함에 따라 WTO, APEC 등 각종 국제 기구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제7차 회의시 한·중 농수산협력위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를 개정하고 종전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 위주의 협력을 농업 정책 및 통상분야 협력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2005년 11월 “김치 기생충알 파동”이 한·중간 통상 마찰로 촉발되면서 양국간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교류 및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한·중 품질감독검사검역협약체”의 조기 개최에 합의하고, 2006년 1월 제1차 회의를 북경에서 개최한 이래 양국간 교대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제2차 회의는 2007년 3월 서울, 제3차 회의는 2008년 8월 북경에서 각각 개최되었고, 우리측은 우리 관심품목인 파프리카, 참외에 대한 신속한 수입절차 조속 진행을, 중국측은 중국산 여지, 호박에 대한 수입절차 조속진행을 요청하였다. 본 협의회를 통해 공산품 뿐만 아니라 식품, 농축산물의 검사검역을 논의함으로써 양국간 농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교류와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자협상협력과 기술서기관 최현호)

라. 캐나다

캐나다산 농산물은 2007년 약 5.3억달러 수입되었으며, 주요 품목은 제분용밀·유채유·보리·알팔파·돼지고기·치이즈·감자제품 등이다. 반면 우리나라 농산물은 라면·감귤·배·비스킷 등이 수출되고 있으며, 2007년 약 0.3억달러에 그쳐 양국간 농산물교역은 그리 활발한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캐나다 경제의 많은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점을 벗어나기 위해 최근 들어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개척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세가 높거나 차별대우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국 관심품목에 대해 유사제품과 동일한 우대조치를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와는 한·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캐나다측은 2003년 5월 광우병(BSE) 발생이후 금지된 자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와 2007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미국과 동일한 소해면상뇌증 위험 통제국 지위를 부여 받은 것을 근거로 미국과의 차별없는 수입조건 설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우리측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양국간 전문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할 사항이라는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측은 2009년 4월 9일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하여 8월31일 분쟁패널이 구성되는 등 현재 WTO 분쟁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캐나다는 우리나라에 블루베리의 수입허용을 촉구하고, 캐나다는 2009년 8월 제정된 북미식품검역보호기구(NAPPO) 지역위생기준을 통해 캐나다에 출입 또는 수출되는 선박과 화물에 대한 아시아매미나방(AGM) 무감염 증명 규정을 2012년 3월부터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 및 주한 캐나다대사관과의 공식·비공식 협의 등을 통해 통상현안 및 협력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양자협상협력과 수의사무관 김용상)

마. 유럽연합

유럽연합(EU)과 우리나라와의 농림축수산물교역은 전체 규모에서의 비중은 크지 않으나, EU는 우리나라의 농림축수산물 수출액이 약 1.9억불('08)로 세계 5번째로 큰 수출 대상국이며, 수입은 20.4억불('08)로 미국, 중국에 이어 3번째로 큰 수입국이다. 이와 같이 농림축수산물의 경우, EU로부터 수입이 수출보다 월등히 많은 교역 구조이며, 이에 따라 한국과 EU 간에는 주로 EU에서 한국으로의 농림축수산물 수출과 관련한 위생 및 검역 문제가 양측간 통상현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위생 및 검역 현안의 대부분은 아직까지 한국으로의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EU 회원국산 동물·동물성산물 및 식물·식물성산물의 수입문제이며, 이들 현안들은 주로 한국과 EU개별 회원국의 관련 당국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해진 수입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검토되고 있다. 이 이외에도 이미 수입이 허용된 품목의 교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하여도 개별 회원국과 기술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EU 집행위 차원에서는 2001년 4월 1일에 발효된 한·EU 기본협력협정 하에 설치된 한·EU 공동위원회에서 농업분야 의제도 포함하여 논의해 오고 있는 바, 특히 동 공동위원회 산하에 농업 실무작업단을 구성하여 양자간 농업통상 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통상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

2009.2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7차 한·EU 공동위원회에서는 한국 측 관심사항으로써 한국산 분재 및 묘목의 EU 수출과 관련된 문제가 논의되었다. EU측은 한국산 편백나무속 등 3개속의 분재에 대해 2~3년마다 수입 허용기간을 설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한국 측은 검역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수입허용기간을 별도 설정하지 말고 수입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EU측은 '08.10월부터 산림해충의 일종인 알락하늘소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EU로 수출되는 동 해충의 기주식물(동 해충이 가해하는 식물)은 방충 시설이 구비된 장소에서 2년간 재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서 EU로 수출되는 단풍나무 등의 묘목과 분재가 주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바, EU측의 요건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당장 방충시설을 설치하더라도 2년간은 수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측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EU측은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건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하여만 예외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EU측 관심사항으로는 EU산 쇠고기 문제 및 프랑스산 에멘탈치즈 문제가 논의되었다. EU측은 관련 국제기준에 따라 유럽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해 오고 있으며, 우리 측은 유럽산 쇠고기와 관련하여는 소비자의 우려 및 정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에멘탈 치즈와 관련하여는 에멘탈 치즈에서 검출되는 프로피온산에 대한 문제로써 한국은 수입 치즈에서 프로피온산이 정해진 기준(3g/kg)을 초과할 경우 불합격 처분하고 있는데, EU측은 프로피온산이 에멘탈 치즈 제조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우리 측은 자연 발생하는 프로피온산에 대하여는 인정 가능하나, 문제는 도착지 검역과정에서 검출 시 이 프로피온산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인위적으로 첨가한 것인지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CODEX(국제식품규격)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육류 수출작업장을 승인하는데 있어 일괄 목록 승인방식(pre-listing)을 채택하여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 방식을 인정하나, 회원국별로 신청을 받아 위생상황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검역협정(WTO/SPS), OIE,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 국제기준의 기초 하에서 이들 통상 현안에 대한 협의해 오고 있다.

(양자협상협력과 농업사무관 김영태)

바. 중남미 국가

중남미 국가는 지정학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더욱이 농작물 및 가축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중해과실파리나 구제역 등이 발생하고 있어 농산물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농산물 교역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일부 국가로부터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동식물 검역상의 문제가 해소될 경우에는 농산물교역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브라질은 세계 제2위의 농업국가로서 생산량과 수출량에 있어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옥수수, 대두박, 커피, 오렌지 등 검역문제가 해소된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국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대두유, 옥수수, 대두박의 수출이 많은 편이다. 칠레와는 2004년의 한-칠레 FTA 체결 이후로 포도, 포도주, 키위, 돼지고기 등을 중심으로 농산물 교역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남미 국가는 동·식물 위생 및 검역 문제로 인하여 우리나라로 농산물을 수출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때문에 ABC국가(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를 위시하여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자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 주요 국가 및 세부 품목을 살펴보면, 아르헨티나의 오렌지·쇠고기 및 가금육, 브라질의 망고·감귤류·쇠고기 및 돼지고기, 칠레의 블루베리, 쇠고기, 멕시코의 페르시안라임 및 가금육, 페루의 포도, 우루과이의 감귤류 및 쇠고기 등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들 지역에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채소종자와 사과·배 등 과일류를 수출하기 위해 식물검역상의 수입제한조치가 해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 등의 열대과일 및 육류의 시장개방 요청에 대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WTO/SPS)」과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국제수역사무국(OIE)」 등 국제기준에서 설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상대국의 위생상황에 따라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

며, 그 외의 농산물의 경우 UR협상에서 양허한 범위에서 수입관리제도를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하며 대응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식량 및 유전자원의 확보 등 자원외교적 측면과 농업분야 국제협상에서의 협력 유도를 위한 여러 국가들간의 농업협력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05년 5월에 중남미국가 중 처음으로 브라질과 「한-브라질 농업협력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06년 2월에는 브라질에서 1차 농업협력위원회가 개최, 2008년 8월에는 서울에서 2차 농업협력위원회가 개최되는 등 양국의 농업부문 협력을 위하여 정보교환, 전문가 교환, 공동연구 등 농업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자협상협력과 주무관 김윤희)

사. 아시아·아프리카 국가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은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나 농업협력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지역이나 풍부한 천연자원 등을 기반으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 등 동남아국가들은 지리적으로 근접한 농업국가로 미작 농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 농업과 유사한 측면이 많아 이들 국가와의 농업교류를 통한 협력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들 나라는 전통적인 농업국가로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 무역적자를 내고 있는데, 매년 무역불균형 해소를 내세워 개별상품에 대한 관세인하, 검역기간 단축 및 절차간소화, 열대과일·축산물 등 농산물수입허용, 검역협정체결 등 자국산 농산물 대한국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양국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농업장관면담, 경제공동위, 주한주재관 면담 등 다각적인 협의 통로를 통해, UR 등 국제적 협상 결과에 따른 우리나라 농산물수입관리 제도 이해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동·식물 검역현안에 대하여는 WTO/SPS규정 및 IPPC(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 국제식물보호협약), OIE 등 관련 국제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입허용절차가 운용되고 있음을 설명함으로써 통상마찰을 예방하고 있다.

아시아·아프리카 각국과의 주요한 통상협력채널로는 ASEAN+3 농림장관회의,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란, 남아공 등과의 정례적인 경제공동위 및 무역공동위를 개최하고 있으며, 수시로 농업장관회담 및 통상장관, 외무장관회담을 통해 양국 농업교류확대 및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양자협상협력과 농업주사보 유미랑)

제3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부문 국제기구 활동

1. WTO 활동

가. DDA협상 출범에서 홍콩각료회의까지의 추진경과(2001~2005)

UR 협상결과에 따라서 상품,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광범위한 대상에 대한 국제무역질서를 관할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1995년 1월 1일 공식출범하였다. WTO는 출범 이후 각국 무역정책의 개혁 및 자유화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 DDA)”협상을 출범시켰다. 동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은 2005년 1월 1일까지 모든 협상을 종료토록 일정을 정하였다.

이후 이렇게 정해진 협상시한을 지키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당초 2003년 3월 및 5월말로 예정된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의 세부원칙(Modality) 합의 실패하는 등 중간 일정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5차 각료회의가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되었다.

당초 칸쿤 각료회의는 미국과 EU의 농업협상 모델리티 수립에 관한 공동 제안서가 제시됨에 따라 성공적으로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제2차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의제로 채택한 싱가포르 이슈의 협상개시 여부에 대해 의견이 대립하여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그러나 대부분 협상 전문가들은 농업 분야에서 브라질, 인도 등 개도국 그룹이 국내보조 및 수출보조의 대폭 감축 및 철폐, 시장접근기회의 확대 등 선진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등 농업분야에서의 합의실패에서 그 실질적인 원인을 찾고 있기도 하다.

제5차 각료회의 실패 이후 DDA 협상은 한동안 소강상태를 유지하다 2004년에 들어서면서 DDA 협상 진전 필요성에 대한 회원국간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우선적으로 2004년 7월말까지 세부원칙을 위한 기본골격(Framework)만이라도 합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에는 기본골격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마침내 2004년 8월 1일 일방이사회에서 기본골격을 채택하였다. 이사회는 또한 2004년 말로 예정된 협상시한을 연기하고 2005년 12월 홍콩에서 제6차 각료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후 2005년에는 기본골격을 토대로 세부원칙 마련을 위해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지속 개최되어, 세부원칙 작성에 필요한 기술적인 쟁점들을 위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DDA 농업협상의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한 기술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졌는데, 기본골격에서 합의한 구간별 관세감축을 위하여 비종가세의 종가세 상당치 전환문제 등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다.

각 분야별 쟁점들에 대한 기술적 논의들을 바탕으로 2005년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제6차 WTO 각료회의가 홍콩에서 개최되었으며 각료선언문을 채택되었다. 홍콩 각료회의 직전까지 회원국간 집중적인 협상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핵심쟁점들에 대한 회원국간 입장차가 매우 큰 상황이었는 바, 홍콩 각료회의에서는 관세와 보조금 감축에 관한 완전한 형태의 세부원칙 타결을 시도하지 않는다는데 회원국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홍콩 각료회의의 가장 뚜렷한 성과는 향후 DDA 협상일정을 정한 것이다. 홍콩 각료선언문에 따르면 2006년 4월 30일까지 세부원칙에 합의하고, 2006년

7월 31일까지 국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농업분야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그동안 크게 EU와 미국, 수출국들간 입장 대립이 극심하였던 수출보조 철폐 시한을 정한 것도 하나의 성과로 볼 수 있다.

나. 홍콩각료회의 이후 세부원칙안 협상 추진경과(2006~2008)

2005년 홍콩 각료회의 이후 2006년 들어서 관세와 보조금 감축에 관한 세부원칙 타결을 위한 협상이 가속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관세와 보조금 감축을 둘러싸고 주요국 및 주요 그룹간 입장차가 매우 컸으며, 홍콩에서 이루어졌던 합의와는 달리 2006년 4월말까지 세부원칙을 타결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Lamy WTO 사무총장은 각국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지 않다면 협상 진전을 위해서는 신축성을 좀 더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주요 8개국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주요 8개국 정상들은 현 DDA 협상의 교착상황에 대해 우려를 같이하고 향후 1개월 내에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 정상들의 촉구에 힘입어 미국, EU, 일본, 인도, 브라질 장관들은 7월 17일 제네바에서 향후 협상 진전방향을 논의하였으며 7월말에 회동하여 3대 핵심쟁점인 농산물 관세감축, 농업보조금 감축, 공산품 관세감축 등에 대한 타결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EU, 일본, 인도 등이 농산물 관세를 추가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반면 EU, 인도, 브라질, 일본은 미국이 국내 보조를 더 감축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등 주요국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림에 따라 협상 돌파구 마련에 실패하였다.

이에 따라 7월 24일 라미 사무총장은 무역협상위원회를 긴급 소집하여 협상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DDA 협상을 일시 중단한다고 선언하며, 향후 협상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협상이 재개되기 전까지 각국이 국내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촉구하였다.

협상 중단이후 미국, EU 등 주요국 및 그룹 차원의 비공식 협상이 진행되었고, 라미 사무총장은 약 4개월간의 휴지기간을 가진 후 11월 16일 비공식 무역협상위원회 회의를 소집 각 협상그룹 의장을 중심으로 “DDA 협

상 전반 재개를 선언”하였다. 협상이 정상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본격적인 협상보다는 주요국, 주요그룹 상호간 탐색전, 주요 그룹내 기술적 협의 위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2007년 1월 스위스에서 개최된 다보스포럼에서 주요국 각료들이 모여 DDA협상을 본격 재개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상반기 DDA협상은 세부원칙안 마련을 위한 집중 협상이 다시 진행되기 시작하였으며 농업협상분야에 있어서는 팔코너 농업협상그룹이 논의의 결과를 정리하여 4월 및 5월에 의장문서를 2차례 제시하였다. 이후 미국, EU, 인도, 브라질 주요 4개국은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장관급 회동을 통해 합의도출을 시도하였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합의에 실패하였다. 4개국 회동 결렬의 주요 원인은 농업분야 보다 비농산물 분야의 관세감축 문제였던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2007년 7월 17일 팔코너 농업협상그룹 의장은 그간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관세와 보조금 감축에 관한 세부원칙 초안을 회원국에게 배포하고 각국의 적극적인 협상 참여를 촉구하였다. 7월에 배포된 초안은 그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타결 가능한 합의점(Landing Zone)을 상당부분 좁혀서 제시하고 있다. 미국, EU, 인도, 브라질 등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은 전반적으로 동 세부원칙 초안이 협상 진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이후 논의는 동 초안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에 합의하였다.

7월 세부원칙이 배포된 이후 하반기 DDA협상은 더욱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그룹내 협상 및 주요국 고위급협상(약 30여 개국)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하반기 협상은 관세감축률 및 민감품목 개수 등 정치적으로 결정될 핵심내용에 대한 논의보다는 우선적으로 TRQ 증량방식 등 기술적인 사항과 그동안 논의가 미흡하였던 다양하고 구체적인 이슈들을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형태로 논의가 진행 되었는바, 이를 통해 각 이슈별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일부 의견접근을 이루는 등 논의의 진전이 이루어졌다.

2008년은 2월 팔코너 농업의장에 의해 세부원칙 수정안을 배포된 이래 5월에는 2차, 7월에는 3차수정안이 배포되어 관세 및 보조금 감축수준 등에

대하여 집중적이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3차 수정안이 배포된 7월에는 비공식 소규모 각료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세부원칙이 타결될 전망도 보였으나, 일부 잔여쟁점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 이견 대립으로 세부원칙 타결에 실패하였다.

이후 7월 각료회의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팔코너 농업의장은 12월에 4차수정안을 배포하고 비공식 각료회의를 추진하였으나, 개최 날짜가 시기상연도말이고 미국 등 주요국들의 국내 일정상 참여가 불가능하여 개최되지 못했다. 그러나, 2008년도 DDA 협상은 7월 각료회의 개최 등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 접근이 상당 수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다자협상협력과 사무관 정용호)

2. OECD 활동

가. OECD 농업·농촌 및 식품분야 활동 개요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OECD 농업위원회, 농업정책 및 시장작업반회의, 농업위/무역위 합동작업반회의, 농업위/환경위 합동작업반회의 등 산하작업반회의, 각종 워크숍 및 전문가회의에 참여하여 논의에 대응하여 왔다. 농업위원회 및 산하작업반회의에서는 그동안 회원국 농업정책에 대한 점검·평가, 다원적 기능, 식품경제, 농업환경평가, WTO농업협상 쟁점에 대한 연구·분석, 농산물 시장 및 유통기능 향상에 관한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OECD는 회원국 농업정책 점검·평가활동의 일환으로 첫째,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가별 검토를 실시하여 회원국 농업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있으며, 둘째, 회원국 농업정책 개선정도를 점검·평가하고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OECD는 AGLINK라는 고유의 모형을 사용한 중기농업전망을 실시하여 농산물의 생산·소비·무역·가격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OECD와 FAO가 공동으로 세계농업전망을 발간하고 있다.

나. OECD 중기농업전망

OECD-FAO는 2005년 공동발간을 시작한 이래 5번째로 “2009~2018 중기농업전망(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07~2016)”을 내놓았다. 동 보고서는 매년 급격히 부상하는 시장과 정책이슈에 대한 논의 증진을 위한 세계 주요 농산물 품목과 시장에 대한 중기적 평가이다. FAO의 품목적 전문성과 광범위한 대상국, OECD의 정책적 전문성이 조화되어 농정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면서 농업전망에서 개도국 입장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 Outlook 전망 여건의 변화

- Outlook은 2008년에 전 세계에 걸쳐 퍼졌던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해 식량시장의 미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 그 이후 식량가격은 상당히 하락했지만 세계 금융시장의 몰락과 경제위기는 세계 식량시장과 농업생산에 더욱 큰 문제를 안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
- 거시경제 여건의 변화가 이만큼 심각하게 농업생산에 영향을 미친 적이 없었으며, 지역적 경계를 넘어 순식간에 세계 전역으로 전파, 당분간은 이와 같은 거시경제 혼란의 지속이 단기적 미래의 특징이 될 것으로 우려
- 이전의 시장 전망에서 보였던 수준보다 더 낮은 경제 전망과 훨씬 낮은 에너지 가격에도 불구하고, 경상가격과 실질 곡물가격은 1997~2006 기간 동안에 관측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치즈, 탈지분유, 버터, 쌀, 밀 생산자들은 2007-2008년의 수취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평균가격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 다음 10년간은 1997~2006년 기간 동안의 평균가격 수준보다 더 높을 것으로 전망. 돼지고기를 제외한 모든 농산물에 대한 경상가격은 1997~2006년 평균 수준보다 20% 이상 높은 수준 유지 예측.
- 유가가 배럴당 US\$ 100 정도의 높은 가격 수준으로 회귀될 경우 곡물 가격은 추가적으로 20%에서 30%까지 상승할 것이지만 축산물

가격은 10% 정도 보다 낮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

- 실질가격으로 환산한 곡물가격 역시 평균적으로 2007-08 평균 최고 가격 수준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전망. 2007~08 평균 수준과 비교해서 실질가격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곡물들은 쌀, 밀, 버터, 치즈, 탈지분유 등임.
- 그러나 쇠고기, 돼지고기를 제외한 농산물의 실질가격은 Outlook이 전망한 대상 기간 동안 1997~2006 수준의 평균가격보다는 높을 것으로 기대. 다음 10년간 평균 실질가격 유가에 대한 가정이 2007-08 최고 수준보다 상당히 낮았지만 1997-2006 평균 수준보다는 약 60% 정도 높을 것으로 전망.

□ 쌀부문의 생산 전망

- 2008년의 높은 가격은 전 세계에 걸쳐 쌀에 대한 정치적 비중이 지속적으로 얼마나 크게 부과되는지 보여준다고 설명.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쌀가격이 2006~2008 기간 동안 국제 가격보다 두 배 상승한 이유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부 간섭과 무역보호조치에 기인했기 때문임
- 외부 여건으로부터 국내시장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모든 정책 간섭의 수단들은 오직 쌀의 국제시장 가격을 올리고 변동성만 증가시킬 뿐이라고 주장.
- 각국에서 정부지원의 집중과 더불어 2007년과 2008년의 쌀가격 상승은 2008년 논경작의 확대를 촉진시켰음. 이와 같은 쌀 경작 선호경향은 특히 쌀자급 목표를 갱신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향후 몇 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Outlook은 전망.
- 다른 곡물에서와 마찬가지로 생산성 향상은 생산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로 인해 2018년까지 9%의 성장이 기대.
- 다수확 품종과 유전자변형 품종의 재배를 통해 토양의 비옥도 감소, 경지 부족 현상, 용수 문제, 노동 등과 같은 자원제약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

- 쌀은 지속적으로 가장 중요한 주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런 중요성은 전 세계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같은 쌀이 주식인 국가들의 경우 지속적인 소득의 성장과 식생활의 다양화로 인해 1인당 쌀 소비량이 약 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축산부문의 전망

- 세계 경기불황으로 인한 단기적인 소득감소 효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축산물 수입국가들 뿐만 아니라 주요 축산물 수출국가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료비용과 국내 육류 생산 성장으로 인해 세계 시장의 육류 실질가격의 상승이 억제될 것으로 예측
 - 그러나 경상가격으로 보면, 처음에는 상승하였다가 추정기간의 후반기에는 상대적으로 평평하게 유지되는 모양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 반면에 Outlook은 세계 낙농품 시장의 실질가격이 2011년 이후 다시 올라갈 것으로 전망.
 - 이런 상승 추세의 여파는 전망 기간의 후반기에 흩어져 분산될 것이지만 실질가격으로 환산한 평균가격은 1997~2006 기간 평균가격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Outlook은 추정.
- 지속되는 경제상황의 취약성 때문에 농산물 가격은 최소한 다음 2-3년간에 걸쳐 다소 침체될 것으로 전망. 식량에 대한 수요는 비탄력적이므로 국민소득이 높은 OECD국들에 있어 불경기에 대한 소비패턴의 조정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 추정.

□ 곡물가격의 주요 전망

- 2007~2008년에 농산물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식량가격이 크게 상승하였고 이런 현상은 특히 식품에 대한 소비지출이 전체 소비자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후진국에 있어 더욱 심화.
 - 비록 최근 들어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였다 하더라도 이런 변화는 모든 국가에서 아직 식량가격에 반영 못함
- 식량가격의 상승은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에 중요 요인으로 CPI에 대한

식품 구성 비중은 가구 소비지출 구조에 따라 변하므로 국가들마다 매우 상이. 고소득 국가들에서는 CPI에서의 식품의 비중은 10%에서 20%까지 변하지만 중위권 소득의 국가들에서는 일반적으로 40~60% 범위로 매우 높게 형성

- 2009년 2월까지 지난 12개월간 측정된 식량가격 인플레이션은 많은 나라들에서 1년 전보다 하락, 그러나 많은 국가들에서는 아직도 식량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로는 일본, 멕시코, 한국, 영국 등의 국가들 외에도 OECD국가가 아닌 가나, 케냐, 인디아, 파키스탄, 남아프리카 등이 있음
- 최근 3개월과 6개월 사이의 기간 동안 식량가격 인플레이션을 자세히 살펴보면 식량가격의 상승이 최근 들어 매우 느리게 변화하고 있으며 심지어 어떤 나라들에 있어서는 음(-)의 변화율이 나타나고 있다고 봄

□ 세계 육류 무역 전망

- 미국, EU, 캐나다,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등의 국가들에 의해 주도되는 세계 육류수출은 2018년까지 기준년도에 비교하여 25%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이는 일부 국가들이 많은 수출 물량을 보유하고 있고 EU나 북아프리카의 쇠고기 수요의 경우처럼 다른 많은 국가들에서 육류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정도에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 국가들이 육류 수출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 특히 OECD 지역 외의 국가들의 육류 수출이 증가할 것임.
- 캐나다의 육류 수출은 전망 기간 동안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추정하나 생체 동물의 수출에서 육류 제품의 수출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
 - 미국이 생체 동물보다는 육류로 수입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임.
 - EU 국가들의 육류 수출은 지난 10년간에 걸쳐 감소해왔는데, 농업

정책 개혁과 국내 소비 증가로 인해 이런 구조적 변화가 계속될 것으로 Outlook은 전망.

- 육류 수입국의 위치에도 변화가 발생했는데 일본이 러시아를 제치고 가장 큰 육류 순수입국이 될 전망이다. 러시아는 국내 양돈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수입이 감소 될 것임
- 중국이 가금육에 대한 새로운 주요 수입국으로 등장. 중국에서의 가금육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수입이 기준년도의 낮은 수준에 비해 3배나 증가할 전망이다.

다. OECD 회원국 농업·농촌·식품 정책 평가

□ 주요 경제 및 시장관련 특징

- 2008년 OECD회원국의 생산자지지 추정치는 역대 최저임.
 - 2008년의 OECD 국가의 생산자지지 추정치는 265십억달러, 182십억유로로 OECD 국가 농업생산액의 21%에 해당하는 것임. 이것은 2007년 22%, 2006년 26%에 비해 낮아진 수치임.
- 생산자 지지 추정치 하락은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기인함.
 - 2008년에 PSE가 낮아진 이유는 생산자 지지를 하는 농업정책을 개혁한 결과이기 보다는 2007년과 마찬가지로 이례적으로 높았던 국제 농산물 가격에 기인함.

□ 금융 및 경제위기가 주는 함의와 경제위기에 대응한 농업정책

- 2008년은 금융위기에 말미암아 극심하게 세계 경기가 침체했는데, 특히 금융위기는 농산물가격이 절정에 달했던 2008년 중반 이후에 발생하였음. 금융위기로 인해 절정으로 치달던 농산물 가격은 2007년 초 수준으로 하락하게 되었음.
- 경제 및 금융위기의 영향은 농업부문에는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났다음.
- 시장의 불안정성과 경제위기는 회원국들로 하여금 체계적인 농업정

책 수립이나 농업정책의 개혁보다는 즉흥적인 액션을 취하게 하였음.

□ 농업정책에서의 주요한 변화들

- 일부 회원국에서는 농업정책에서 두드러진 변화가 있었음 : EU에서는 공동농업정책의 Health Check 프로그램에서 마련된 기금의 사용 분야를 넓히고 농업분야 구조개혁을 수행하였으며, 미국에서는 새로운 농업법을 제정하였고, 캐나다에서는 위험관리 제도를 농업법에 도입하였음.
- 위험관리 정책은 농업정책의 변화에서 특별히 대두
 - EU는 Health Check으로 마련된 기금을 작물 보험과 가축질병에 대한 위험에 대처하는 뮤추얼 펀드(mutual funds)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른 국가들도 위험관리 정책들을 도입하였는데, 미국의 새로운 농업법에서 새로이 도입된 Countercyclical 지불이나 새로운 EU 회원국에서의 보험프로그램 도입, 대한민국에서의 15개의 농작물에 대해 재해보험을 확대한 것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음.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도 있었으며 농업-환경 관련 정책은 그 범위가 확대되었음. 많은 국가들은 DDA협상의 부진 속에 FTA와 같은 양자 간 협상을 추구하였음.

□ 농업지지의 진전

- 생산자지지는 OECD회원국에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감소 속도는 둔화되었음
- 2008년 생산자 지지 수준의 변화는 국제 농산물 가격과 환율의 변화에 크게 기인함.
 - 국제농산물 가격의 변화가 MPS의 변화에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예에서 단적으로 보여짐. 또한 대한민국의 경우 달러에 대한 원화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MPS의 감소 효과가 더 커지게 되었음.
- 지지 수준에 대한 OECD 회원국 간의 편차는 여전히 큼
 - PSE와 %PSE가 2008년 들어 큰 폭으로 감소한 국가는 캐나다, 아

이슬란드, 대한민국, 미국임. EU, 일본, 멕시코의 PSE는 증가하였으나 이들 국가의 %PSE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그 까닭은 이들 국가의 총 농업생산액 역시 증가하였기 때문임.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는 PSE와 %PSE 모두 증가하였음.

- 생산자지지 중 품목을 기준으로 지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음.
- 현재의 생산과 연계된 형태로의 지지는 점점 감소하고 있음.

□ 개혁 진전에 대한 평가

- 전반적으로 생산이나 무역왜곡을 덜 시키는 쪽으로 지지의 형태가 바뀌고 있으며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형태의 지지와 농가 단위에 대한 직접보조가 개혁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음.
- 현재의 시장과 경제상황은 새로운 과제를 던져줌과 동시에 개혁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세계 경제위기는 희소자원에 대한 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며, 가격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킬 것임.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각국의 예산 지출은 예산부담의 가중이라는 문제와 함께, 경기회복 이후의 농업을 포함한 각 분야에 대한 보조 정책이나 지원에 대한 재검토하는 계기를 가져올 것임.

라. OECD 농업위원회 및 관련 작업반 활동

2006년 12월 1일자로 농업위담당 사무국이 개편되어 기존의 식량·농업·수산물국이 무역국과 통합되어 무역농업국(Directorate for Trade and Agriculture)이 되었으며, 농업관련 조직은 농업정책·무역 및 조정과, 농업정책 및 환경과, 농업무역 및 시장과, 비회원국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관련 협력 연구프로그램, 농업관련표준과 Scheme, 수산 관련 1개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계획은 향후 2년간의 OECD 분석활동의 청사진으로 각 회원국은 자국의 농정추진과 관련 시사점이 큰 분야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확정 과정에서 수출입국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우리의 관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전준비로 수입국공조모임, 의장단 활용 등 다양

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수출국들은 주로 OECD 논의가 WTO의 무역자유화를 선도하는 방향의 분석작업(무역자유화이점, 국내정책의 무역왜곡 등)을 유도하고, 수입국들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 지속가능성, 식품 안전, 농촌 개발 등 농업의 사회 환경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의 주요 작업은 크게 농업위원회 차원의 농업정책개혁, 농업무역쟁점, 농업의 환경지속가능성과 농촌지역개발 작업으로 대별하여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바이오에너지 접근정책과 시장”, “금융과 경제위기에 대응한 전략과 대응”, “PSE 지표 및 분류체계 개선”, “기후변화와 농업” 등을 주제로 논의되고 있다.

(국제협력총괄과 기술서기관 서은수)

3. FAO 활동

가. 개요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모든 국민의 영양상태 및 생활수준의 향상, 식량(농산물)의 생산 및 분배능률 증진, 영양·식량·농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보급 및 국제활동의 촉진과 권고를 목적으로 1946년 12월 14일 UN 최초의 상설전문기구로 설립되었다.

기구 소재지는 이태리 로마로 2010년 현재 191개 회원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매 홀수년도에 각 회원국 각료급 대표가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한다. 49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이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8개 위원회로 구성되며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 국제미곡위원회 등 산하기구와 보조기구를 두고 있다. 사무국은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및 국제공무원으로 구성되며 2010년도 현재 3,8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FAO의 재정은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충당되는데 회원국 분담금 규모는 자국의 인구, 소득 등을 감안하여 UN이 결정한 UN 분담금 비율을 기준으로

총회에서 결정한다. 2009년도의 예산규모는 약 10억 달러 수준이며 2010년의 경우 약 11억달러에 이른다.

나. 주요활동

FAO의 기본적인 기능은 필요시 식량 및 농산물의 생산, 분배 및 소비에 관하여 회원국에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고 권고하며, 적절한 기술협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FAO 사업은 FAO 회원국들의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규사업(Regular Programmes)과 UNDP, WFP, UNICEF, FFHC, 신탁기금 등 관련 국제기구나 각국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조성되는 재원을 바탕으로 실시하는 기타사업(Other Programmes)이 있다.

FAO는 창설 이래 농업, 수산, 임업 및 영양분야에서 유일한 국제정보 센터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전 세계에 걸친 수백 가지 상품에 대한 생산, 소비 및 교역에 관한 통계를 수집하여 이를 연감과 통계자료로 발간하고 식품 수급표를 발간하여 세계 식량의 수급현황을 제시하는 동시에 세계의 영양사정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세계 식량 및 농업개발에 큰 기여를 해왔다.

FAO는 농업, 수산 및 임업용 기자재 목록의 간행과 심지어는 동식물 질병의 통보 등 식량, 수산, 임업 및 영양분야에 대한 광범위하고 유익한 각종 기술정보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어분으로부터 생사에 이르는 각종 상품에 대한 경제적 관측연구를 실시하여 왔다.

FAO는 이와 같은 정보자료의 제공에 만족치 않고 세계식량농업개발의 장기적인 전략과 방향을 제시한 방대한 장기계획 지침서로서 “세계식량농업개발계획지표(Indicative World Plan for Agricultural Development)”를 주기적으로 발간하였고 그 외에도 “2015년의 세계농업(Agriculture Toward 2015)”, “2030년의 세계농업(Agriculture Toward 2030)” 등 각종 중장기 농업예측전망자료를 발간하며, 또한 매10년마다 실시되는 “세계농업센서스(World Census of Agriculture)”를 주도하여 각 회원국들이 실시하는 방대한 조사사업에 대하여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기술적인 면에서 적극 지원하여 왔다.

최근 FAO는 효율적인 국제기구로 거듭나기 위하여 본부의 조직을 축소하고 지역사무소의 기능강화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혁안이 2005년 11월 제33차 총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본부의 조직개편과 함께 기존의 지역사무소에 소지역사무소를 추가(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유럽, 남미)하고 아랍에미리트에 하부지역사무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각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는 농업·산림·수산분야의 바이오에너지 생산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다수의 회원국들이 바이오에너지개발에 따른 사회·경제·환경 및 식량안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논의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지구촌의 환경문제를 반영한 물 부족, 생물다양성, 농업·산림·수산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또한, 동 기구의 한정된 재원의 배분경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객관적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6~2007년 기간 중 독립외부평가(IEE)를 추진하여 동 기구 조직, 기능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개선안 도출 후 2007년 11월 제34차 총회에 “성장을 동반한 개혁”이라는 핵심적 결론과, 109개 권고사항과, 300여개의 구체적 조치계획을 보고하였으며 이의 이행을 위한 즉각 행동계획의 세부일정을 2008년도 특별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후 2009년 11월 제36차 총회와 세계식량안보정상회의에서 그간 추진된 독립외부평가의 성과(행정절차 간소화, 관리급 감축, 분권화 추진 등)를 제시하고, 향후 지속적인 개혁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우리나라와의 관계

우리나라는 1945년 11월 제5차 총회시 가입하여 활동 중이며 1966년 아태 지역총회를 개최하였고, 9회에 걸쳐 이사국으로 피선되어 FAO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제36차 총회에서 2009년 11월~2012년 12월까지 이사국 피선)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회원 분담금 규모는 약 11백만불 수준이고 191개 회원국 중 11위이다.

2009년 11월 18일~23일 기간 중에 약 190개 회원국, 관련국제기구, NGO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제36차 총회가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통상정책관을 수석대표로 동 회의에 참가하여 총회기조연설을 통해 빈곤퇴치와 식량안보의 중요성, G8 정상회의 해결방안에 기초한 문제의 접근을 강조하였으며, 캐나다 수석대표와 면담을 통해 FAO 개혁에 대한 회원국간 컨센서스를 마련하여 개혁에 대한 공동대응이 필요함을 상호 재확인하였다.

총회에 앞서 11월 16일~18일 개최된 세계 식량안보 정상회의에는 농식품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참가하여 기조연설과 FAO 사무총장, 호주농업부장관 등 각 회원국 수석대표와 양자면담을 실시하였다.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세계 식량문제는 G8라퀼라 정상회의 연장선 상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논의하자는 제안과 주곡자급문제를 해결한 한국의 경험을 전수할 용의가 있음을 언급하고, 지난 7월 G8라퀼라 정상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곡물가격 변동요인 국제 공동연구’를 재차 제안하였다.

사무총장과의 면담시 농식품부 장관은 한국인의 FAO 진출확대에 대한 의견교환과 함께 2010년 경주 개최예정인 제30차 아태 지역총회에 대한 사무총장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호주·뉴질랜드·칠레·노르웨이 농업부장관과 실시한 양자면담에서는 각 농어업 통상현안을 조율하고 DDA 협상공조를 유도하였다.

금번 총회에서는 2010~2011 기간 FAO 예산 및 분담비율을 결정한 바, 2010~2011년 FAO 예산은 약 10억불(2년)로 결정하였다. 이는 FAO 개혁과제 수행을 위한 비용 증가(약 4천만불) 등이 예산증액의 주요원인으로, 전기 이월분(2.5백만불)과 기타수입을 제외 시 회원국의 순수 분담금은 993백만불이며 이는 전기(2008~2009) 대비 약 8.4% 증액된 규모이다.

분담금 비율은 UN 총회 분담비율 준용(우리나라 : 2.184%)하여 지난 기간과 변동이 없으며, 우리나라 분담금은 연간 약 10.8백만불(2009년 현재, 10백만불)이 된다.

우리나라는 금번 총회를 통해 '09.11월-'12.6월(2년 6개월) 임기의 이사국으로 피선되었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89년 이후 8회 연속 이사국으로 진출하였으며, 이사국 수행은 1965년~1967년 임기 포함 총 9회에 이르게 되었다.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항구국 조치 협정 또한 금번 총회에서 승인되어, 국제기구가 선정한 IUU(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목록에 등재된 선박과 기타 IUU에 가담한 선박이 입항할 경우 항구국은 입항 금지, 항구서비스(양륙, 환적, 연료 공급 등) 사용 거부, 검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FAO 현장 및 규정의 개정에서는 사무총장의 최초 임기를 4년으로 조정(현행 6년)하고,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특별총회는 임기 종료일로부터 120일 전(현행 90일 전) 개최하기로 변경하였으며, 식량안보위원회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여 식량안보위원회의 사업·예산 검토결과를 FAO 총회와 UN 총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개정(현행, 이사회 심의를 거친 후 FAO 총회에 보고)하였다. 또한, 위원회를 WFP와 IFAD 등 관련 국제기구도 참가 가능토록하여 FAO와 UN 회원국으로 한정되었던 위원회 구성을 보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분담금 인센티브 분담금 납부를 촉진하기 위해 당년 3.31까지 완납한 경우 할인율 적용 인센티브 제도 도입하여, 달러화는 0.03%, 유로화는 0.43%의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정규 총회 개최시기를 매년 6월로 조정(차기 총회는 2011년 6월 25일~7월 2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사회 역할 강화를 위해 이사회 내 session을 현행 3개에서 5개로 늘리고, session 별 활동 기간을 현행 최소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여 업무의 신속을 기하는 한편, 이사회 소집 요구를 위한 최소 정족수는 현행 5개국에서 15개국으로 증가시켰다.

제34차 총회에서 채택된 독립외부평가(IEE) 보고서는 “성장을 동반한 개혁(Reform With Growth)”과 이를 위한 109개 권고사항과 300여개의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안한 바, FAO는 동 권고안 이행을 위해 2008년도 하반기에 특별총회를 개최하고 매 기간 FAO 개혁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한 바, 그 성과로 행정절차 간소화, 관리급 감축, 분권화 추진 등을 제시하고 향후 지속적인 개혁작업 수행을 약속했다.

4. ASEAN+3 농림수산식품장관회의

2000년 8월 앙가라 필리핀 농업장관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과 한·중·일 3개국 간 농업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요구하였고, 3국이 수용하여 2001년부터 매년 하반기 「ASEAN+3 농림장관회의(AMAF+3)」가 개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 회의에 매년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농업발전 경험을 소개하고 대아세안 협력사업을 제안함으로써 역내 개발격차의 해소 및 통합에 기여하고 아국의 위상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ASEAN과 한·중·일 3국의 농업협력은 6개 분야 - ① 빈곤극복 및 식량안보 ② R&D ③ 인적자원개발 ④ 국제적·지역적 이슈 ⑤ 농업정보 연계화 및 교환 ⑥ 무역촉진 - 로 구분되고 있다. 이 가운데 ‘빈곤극복 및 식량안보’, ‘인적자원개발’, ‘농업정보 연계화 및 교환’에 대한 협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빈곤극복 및 식량안보’ 협력 차원에서 동아시아비상쌀비축제(EAERR : East Asia Emergency Rice Reserve)가 논의되고 있으며, 2004년 3월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후 본격적인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농업정보 연계화 및 교환’ 협력 차원에서 아세안식량안보정보시스템(AFSIS : ASEAN Food Security Information System)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AFSIS는 식량정보(작황, 시장가격, 수출입, 재고 등)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공유함으로써 역내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HW/SW 개발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제1기(2003~2007년) 사업이 완료되고 제2기(2008~2012년) 사업이 추진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협력사업 제안 및 이행이 본격화된 것은 2003년부터인데,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협력의 중점을 두어 왔다. 2003년 8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3차 회의에는 허상만 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농업금융에 관한 워크숍’ 개최를 제안하였다.

2004년 10월 미얀마 양곤에서 개최된 제4차 회의에는 박해상 농림부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제2차 회의에서 ASEAN 회원국가를 대상으

로 제안된 「미곡증산」과 「가축 인공수정」 연수생 초청사업의 2003년 추진 상황을 설명하였으며, 제3차 회의에서 제안한 ‘농업금융에 관한 워크숍’의 개최계획을 설명하였다. 또한, 제4차 회의에서는 아세안 회원국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우리나라의 ‘벼농사 물관리 자동화 기법 및 농업용수관리 기술에 관한 연수과정’을 제안하였다.

2005년 필리핀 따가이따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농림장관회의에는 이명수 농림부 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통해 농업이 갖는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과 농업 비중이 높은 아시아 지역에서 농업·농촌 분야의 발전이 역내 빈곤경감, 기아감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하고 지난 4년 동안 아세안국가와 한·중·일 간의 농업협력 사업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 내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였고,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정체, 자연재해 및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등 많은 도전과제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만큼 이러한 여러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동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아세안 지하수개발 및 관리’, ‘아세안식량안보정보시스템 훈련과정’ 및 ‘아세안 식물검역 전문가 초청 연수’ 등 총 3개 협력사업을 제안하였다.

2006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6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에는 박해상 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하고 우리 측 협력사업에 대한 실적과 계획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실시하였던 ‘아세안 지하수개발 및 관리’, ‘아세안식량안보정보시스템 훈련과정’, ‘아세안 식물검역전문가 초청 연수’를 2006년에도 계속 실시할 것과 새롭게 ‘조류인플루엔자 진단기술 연수 및 진단키트 제공’, ‘서울국제농기계박람회 및 국제농기계학술대회 초청’ 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6차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사업은 2007년에 실시되었는데, 아세안회원국의 뜨거운 관심이 높은 참여율로 반영되었다.

제7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는 2007년 11월 2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으며, 협력사업으로는 중소기업 농산물 수확 후 관리기술향상, 농촌개발

과 기술협력, 가축전염병 방역기술 연수, 식물검역 전문가 초청연수, 식량안보 정보시스템 초청훈련 등 5가지 사업을 제안하였다. 또한, 2007년 6월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발효 등을 배경으로 “한-아세안 FTA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 국가간의 관계가 이와 같이 긴밀해짐에 따라 농업분야 협력도 더욱 확대·강화될 전망이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8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에서는 경제상황, 설문조사를 통한 호응도 등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하고 상호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08년도에 실시하고 있는 기존사업을 2009년도에도 계속 실시하였으며,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9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에서는 업무연속성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009년도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2010년도에도 계속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표 1-3-9>

우리부 역대 수석대표 현황

회차	일시 및 장소	수석대표	고위급회의
1차	2001. 10. 인도네시아 메단	김동근 차관	이명수 국제국장
2차	2002. 10. 라오스 비엔티안	김동태 장관	이명수 국제국장
3차	2003. 8. 말련 쿠알라룸푸르	허상만 장관	이명수 국제국장
4차	2004. 10. 미얀마 양곤	박해상 차관보	김정규 국협과장
5차	2005. 9. 필리핀 따가이따이	이명수 차관	배종하 국제국장
6차	2006. 11. 싱가포르	박해상 차관	김창현 국협과장
7차	2007. 11. 태국 방콕	박해상 차관	김창현 국협과장
8차	2008. 10. 베트남 하노이	박덕배 차관	김남수 국협과장
9차	2009. 11. 브루나이	유병린 통상정책관	이재욱 채소과장

<표 1-3-10>

우리나라 제안사업 내역

사업명	년도	시행기관	재원
미곡증산기술연수과정	2003	농진청	KOICA
가축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기술연수			
농업금융에 관한 워크샵		농협	농협
벼농사 물관리 자동화 연수과정	2004	농촌공사	KOICA
AFSIS 훈련과정	2005	정보화담당관실	농림부
지하수개발 및 관리 연수과정		농촌공사	KOICA
아세안 식물검역전문가초청연수		농림부/식검	농림부
조류인플루엔자 진단기술연수 및 진단키트 제공	2006	농림부/ 수과원	농림부
2차 아세안 식물검역전문가초청연수		농림부/식검	농림부
국제농기계박람회 및 학술대회 초청		농림부	농림부
아세안 식량안보정보시스템 초청훈련		농림부	농림부 / KOICA
2차 지하수개발 및 관리 연수과정		농림부	KOICA
중소기업 농산물 수확 후 관리기술향상	2007	농림부/한식연	한·아 협력기금
농촌개발과 기술보급 훈련		농진청	KOICA
제2차 아세안가축전염병 방역기술 연수		농림부/수과원	KOICA
제3차 아세안 식물검역 전문가 연수		농림부/식검	농림부
제4차 식량안보정보시스템 초청훈련		농림부	KOICA
제2차 중소기업 농산물 수확 후 관리기술향상	2008	농림부/한식연	한·아 협력기금
제2차 농촌개발과 기술보급 훈련		농진청	KOICA
제3차 아세안가축전염병 방역기술 연수		농림부/수과원	KOICA
제4차 아세안 식물검역 전문가 연수		농림부/식검	농림부
제5차 식량안보정보시스템 초청훈련		농림부	KOICA

(국제협력총괄과 농업사무관 한철수)

5. 기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부문 국제기구 활동

가. 세계식량계획(WFP)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은 개도국 기아해방을 위한 잉여농산물 원조목적으로 창설되어 FAO 및 유엔경제사회이사회와 긴밀히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WFP 재정지원 규모는 1981년 연6만불로 개시되었으며 1997년 54만불 규모로 증액시켜오다가 IMF 사태 이후 지원규모를 줄여 2002년부터는 10만불을 지원해오고 있다.

나.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은 2009년 2월 18일~19일 기간 중 이태리소재 본부에서 165개 회원국, 관련 국제기구, NGO등이 참가한 가운데 제32차 총회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를 포함, 약46개국 대표들은 IFAD의 더 강화된 파트너쉽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IFAD의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지속적 개혁을 요청하였다.

우리나라는 통상협력관을 수석대표로 동 총회에 참가하여 IFAD의 효율성 제고와 기아, 빈곤 극복을 위해 노력한 현 총재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새로 선출된 후임 Nwanze 총재에게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요청하였다. 또한 IFAD가 추구해온 농촌빈곤 퇴치와 기아근절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제8차 IFAD 기금조성 증액목표 수준에 맞추어 우리의 기여수준도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요지의 기조연설을 하였다.

제8차(2010-2012년) 기금조성에서는 제7차 기금조성 대비 증액 목표(12억불, 7차 대비 67% 증액) 수준에 합의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후임 총재로 1차 투표시 과반수 득표한 Kanayo F. Nwanze를 선출하였다.

2009-2011 이사국 선출에서는 우리나라를 교체이사국(2009)으로 선임하였고, 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의 가입을 승인하고 제7차 기금조성 상황보고, 제8차 기금조성협의 최종결과 보고, 2007 재무감사보고 등 9개 안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였다.

최근 소농이 직면한 위기 극복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원탁 토론 회의를 개최하여 ① 근래의 예측 불가한 시장과 가격 변동에 대한 소농의 대처방안, ② 경지수요 증가에 대한 농민의 대처, ③ 급격한 기후와 환경변화에 대응한 연구와 혁신 필요성 등 3개 주제에 대해 패널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제29차 총회시 IFAD의 제7차(2007~2009) 기금조성에 3백만불의 납부서약을 바탕으로 2007년부터 연간 1백만불의 분담금을 기여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합의된 기금조성 증액목표를 반영하여 확대된 규모의 분담금을 납부할 계획이다.

다. 아프리카·아시아농촌개발기구(AARDO)

아프리카·아시아농촌개발기구(Afro-Asia Rural Development Organization)는 2007년 1월 8일~12일 기간 중 회원국에게 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의 빈곤타파를 위한 새로운 농촌개발정책수립과 농촌개발노력을 촉구하기 위하여 농촌개발 연찬회 및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농촌개발에 관한 뉴델리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그 골자는 빈곤타파를 위한 적절한 자원배분, 여성의 권익보호, 빈곤타파를 위한 공동협력활동 약속 등이며, 우리나라는 농촌개발 연찬회에 참가하여 “한국의 농촌개발전망 : 교훈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농촌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발전을 소개하고 1990년대 후반부터 가속되는 세계농업시장개방과 관련된 주요 정책들을 설명하였다.

2009년 11월 12~11월 14,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개최된 제59차 집행위원회에서는 Ms. S. Bahuguna 사무차장 임기를 1년 연장(‘10.12만료)하고, 제60차 집행위원회(‘10)를 오만에서 개최기로 결정하였다.

그 외 우리나라 관련사항으로는 제57차 집행위원회 권고사항인 극동지역 사무소의 “아·태농정포럼” 초청대상을 전회원국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언급하여 회원국들의 긍정적인 참여의사를 이끌어내었다.

한편, AARDO극동지역사무소(우리나라) 주관으로 6월 18일~7월 3일간 농진청에서 ‘지속가능한 농업개발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여 19개국 22명이 이에

참가하였으며, 9월 1일~9월 2일에는 제주대학교에서 제8차 아·태 농정포럼을 개최하여 13개 회원국이 이 포럼에 참석하였다.

(국제협력총괄과 주무관 전지수)

6. 농업·환경·무역 연계 논의동향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업의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지속가능 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농업의 무역과 환경에 대한 영향이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친환경농업의 장려라는 당위성과 함께, 농업보조의 환경효과 및 무역효과를 분석하여 좀더 친환경적이고 무역친화적인 농업정책을 모색하려는 세계적인 흐름이 있다. 이 과정에서 농산물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이 노정되고 있는데, 농업활동은 비료 및 농약의 사용을 통하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자연경관보전이나 홍수조절을 통하여 환경에 유익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농업·환경·무역논의는 크게 OECD, WTO, 다자 환경협상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가. OECD 농업환경 합동작업반

OECD는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을 주창하면서 농업과 환경간의 관계분석을 위하여, 1993년 9월부터 농업위·환경정책위원회 합동작업반 회의(JWP, Joint Working Party of the Committee for Agriculture and the Environment Policy Committee)를 설치하여 이 분야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주요 논의사항은 농업환경지표의 개발, 농업환경기준 준수조건 농업지원정책(Environmental Cross Compliance : ECC) 분석, 농업생산·무역자유화·환경과의 관계, 회원국 농업환경정책 목록 작성, 농업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농업의 환경영향 분석 모델 개발) 등이다. 이상의 논의들은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큰 틀 속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OECD에서의 기본적인 시각은 오염자 부담원칙(Polluter Pay Principle :

PPP)과 농업보호 축소를 통한 무역자유화가 환경에도 긍정적이라는 인식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농산물 수입국 그룹들과 공조하여, 농업의 환경 긍정적 외부효과(다원적 기능 등) 부각에 노력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 및 지역별로 다양한 관계로 이를 반영한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농업환경지표의 개발과 관련, OECD에서는 그간의 농업환경지표 논의결과를 종합한 농업환경지표 종합보고서 제4권을 발간하였다. 회원국의 농업환경 실태를 수질, 용수사용, 양분, 농약사용, 토양, 생물다양성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분석한 보고서로 2001년~2006년까지의 작업반 논의결과와 회원국 설문결과 및 지표관련 전문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요약 부분과 OECD 국가들의 농업환경 변화(제1장), 농업환경지표 개발 진행 상황(제2장), OECD 국가들의 농업환경 상태 추세(제3장), 정책분석도구로서의 농업환경지표의 활용(제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환경지표 종합보고서 제4권은 2008년에 공식적으로 발간되었으며, 농업환경정책 목록(Inventory), 생산자지지 추정치(PSE) 등과 함께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환경기준 준수조건 농업지원 정책(Environmental Cross Compliance : ECC)은 ECC의 개념, 특성, 다른 농업정책과의 일관성 등에 대하여 분석과 아울러 EU,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도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업인에 대한 직불 정책 개혁과 관련하여 적용가능성을 모색하는 등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WTO 무역환경위원회 회의

1995년 출범한 WTO 무역환경위원회(CTE,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에서는 무역과 환경에 관한 10개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 농업 부문과 관련된 주요 의제는 “무역제한 및 왜곡 제거의 환경적 편익”으로서, 무역 왜곡조치(농업보조금, 고관세 등) 제거가 환경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다. 또한, 2002년 3월부터 도하선언에 따라

무역환경위원회에서 환경협상을 담당하고 있는데, 1년에 2차례 WTO 규범과 국제환경협약의 관계,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 감축 등의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

2002년 6월 회의에서 개도국과 케언즈 그룹(농산물수출국들)들은 유기농산물도 환경상품에 포함시켜 저관세 및 무관세품목으로 전환시키자고 주장하였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입국들은 반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회원국들은 2005년 12월 홍콩각료회의 전까지 환경상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비농산물협상(NAMA)과 연계하여 상세 협상원칙(Mdality)을 수립하고자 하였으나 환경상품의 범위에 대한 회원국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상설의제인 “무역제한 및 왜곡 제거의 환경적 편익”의 표제하에서 다루고 있는 농업보조의 문제에 대하여 케언즈 그룹은 농업보조금이 농산물 생산을 촉진하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가 무역자유화를 통해 환경편익을 증대시키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EU, 일본, 노르웨이 등과 공조하여 농업보조금은 경관보존, 홍수조절 등의 다양한 환경효과를 지니므로 보조금의 감소는 환경에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각국의 특수한 사정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환경과 연계된 농업보조금 논의가 농산물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다. 다자간 국제 환경협약 논의

OECD, WTO 등 다자국제기구에서의 논의와는 별도로 환경보전을 위해 무역을 규제하고자 하는 각종 국제 환경협약이 증가하고 있다.

지구온난화가스로 지목받고 있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등을 감축하도록 약속한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유해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사전통보승인(PIC)협약,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을 금지·제한하고자 하는 스톡홀름협약, 멸종위기의 다양한 생물종을 보전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지속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생물다양성협약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특히, 유전자변형농산물 등 현대생명공학기술에 의해 생산되는 생명 공학제품의 국가간 이동 및 자연방출이 늘어남에 따라 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생태계에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2000년 채택되고 2003년 9월 발효되었다. 「생명공학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로 명명된 동 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의정서로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s)를 사용 용도에 따라 환경방출용 및 기타 LMOs, 식용·사료용·가공용(LMO-FFPs), 밀폐사용 LMO 등 3가지로 분류하여 국가간 이동시 차별화된 교역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전에 기여토록 하고 있다.

동 의정서의 채택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주요 수입국임을 감안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일본, EU, 스위스, 노르웨이 등과 공조하여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수입국의 새로운 환경에 들어올 때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수입국이 그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통보승인제도(AIA, Advance Informed Agreement)를 반영토록 하여 수입국의 주권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동 의정서 가입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는 2001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동 법률에 따라 농업·임업·축산업용 LMOs의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용 LMO의 수출입 등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를 마련하였다. 정부에서 2007년 10월 3일자로 의정서에 대한 비준서를 사무국에 기탁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8년 1월 1일부터 당사국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으며, LMO법 및 관련 고시 등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제협력총괄과 농업사무관 한철수)

7. WTO/SPS협정 이행관련 논의동향

“WTO/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WTO/SPS협정)”은 1995년 발효된 WTO 협정의 부속협정으로서, SPS조치(식품 위생조치, 동·식물 및 그 생산물에 대한 동·식물 검역 조치)가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함과 동시에 국제교역을 왜곡시키는 비관세 장벽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협정에 따라 WTO/SPS위원회가 설치되어 매년 3~4차례의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세 차례의 회의(2008. 3-41차 회의, 2008. 6-42차 회의, 2008. 10-43차 회의) 개최되었다.

2008년도 SPS 위원회에서는 WTO/SPS협정 제6조에서는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빈도가 낮은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여 농축산물의 수입을 가능케 하도록 규정(지역화 인정; Regionalization)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남미국가들의 주장에 따라 2003년 이후부터 논의가 되어온 지역개념 도입 이행지침이 최종 확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협정상 부여된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가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과 지역화 인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하였다. 특히, 남미지역 국가들이 연대하여 지역화 논의를 주도하는 점을 중시하여, 우리나라와 입장이 유사한 국가들과의 소그룹회의를 개최하여 공조하여 대응하였다. 또한 SPS 위원회는 회원국이 새롭게 도입하는 SPS 조치의 통보 등과 관련하여 그간 논의되어 온 SPS 협정 제7조의 투명성 의무를 실행하기 위한 권고기준이 개정되어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SPS 위원회는 2001년 도하 장관급회의 결정에 따라 회원국의 SPS 이행실태를 매 4년마다 평가토록 함에 따라 2005년부터의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개도국에 대한 차별 및 특별대우의 세부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SPS위원회는 개별국가의 위생 및 검역관련 무역현안에 대한

이의제기 및 답변 등 현안해결의 장을 제공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위생 및 검역관련 규정개발 과정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개도국 특별대우 규정의 이행문제 등 논의시 SPS협정 대상물품(농산물, 식품 등) 수입국인 우리나라에 과도한 부담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대응하였다.

2008년에는 우리나라의 SPS조치와 관련된 캐나다(쇠고기, 유기가공식품 인증제)와 EU(쇠고기)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EU(육류 수출작업장 승인방법, 쇠고기 수입허용, 치즈내 프로피온산 함유량 등), 미국(유기가공식품인증제) 등의 요청으로 수차례의 비공식 협의를 개최하였으며, 관심사항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들 국가들이 자국산 농산물 및 축산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검역조치를 이의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관련 조치의 정당성 및 후속조치 계획을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하였다. 우리나라도 미국(삼계탕 수출 및 구제역 청정국 인정) 등에 비공식 협의를 요청하여 우리측 입장을 제기하였다.

2008년에도 국제교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내의 위생 및 검역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에 대하여 WTO/SPS협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WTO 사무국에 통보하여 각 회원국에 회람토록 조치하였다.

(양자협상협력과 수의사무관 김용상)

8. 국제농업협력사업

상호 의존도가 증대하고 있는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국가 이미지 제고와 DDA/FTA 등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입지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은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다.

최근 동남아 및 아프리카 개도국을 중심으로 우리의 농업·농촌 개발경험과 기술을 전수 받고자하는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또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세계 식량수급 불안정에 대비하여 해외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 등 우리 농업의 외연 확대를 위해서도 개도국과의 협력기반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제농업협력사업은 개도국에 대한 농업관련 기술, 물자 지원 등을 통하여 빈곤문제 및 어려운 경제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한편, 양자간의 호혜적 협력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개도국들의 주된 산업이 농업이며,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 지원분야가 농업임을 감안할 때 국제 농업협력사업의 역할이 특히 크다 할 것이다.

농식품부에서는 2006년부터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06년 8억원, 2008년 18억원, 2009년에 28억원을 확보하여 개도국 농업관련 종사자 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 컨설팅 등 주로 인적자원 개발분야 중심의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사업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국제농업협력사업의 목표로는 첫째, 개도국 농업·농촌개발 지원을 통한 빈곤퇴치 기여로 국가 이미지 제고, 둘째, 아국에 우호적인 세력 확보로 DDA, FTA 협상 측면지원, 셋째, 농식품 관련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기반 조성에 두고 있다.

2009년도에는 ASEAN 회원국 식물검역 전문가 초청 연수 및 워크숍 개최, ASEAN 회원국간 축산물 안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세미나, 베트남 가공용 감자 생산시설 및 기술지원 사업, 캄보디아 주요동물 질병 역학 및 방제기술 지원사업, 모잠비크 농업기술 보급체계구축 시범사업 등 총 22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원 효과가 큰 저소득 농업자원부국을 중점협력 대상국으로 선정하여 성숙한 세계국가를 지향하여 국제사회 기여 측면을 고려하면서, 우리 농업분야에 대한 긍정적 효과도 도출될 수 있도록 개도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양자협상협력과 행정사무관 조용범)

제 2 편

2008년도에 시행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시책

- 제 1 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농정추진기반 강화
- 제 2 장 2008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시책 추진

제1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농정추진기반 강화

제1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운영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점검·조정

정부는 10년간(2004~2013)의 농업·농촌 분야 중장기 발전 계획인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대내외 여건에 맞게 보완하고 있다. 현재까지 두 차례(2004, 2007)에 걸쳐 발전계획을 마련·보완함으로써 농식품분야 투융자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2004년 농업·농촌 종합대책 마련 당시 3년 단위로 투융자계획을 조정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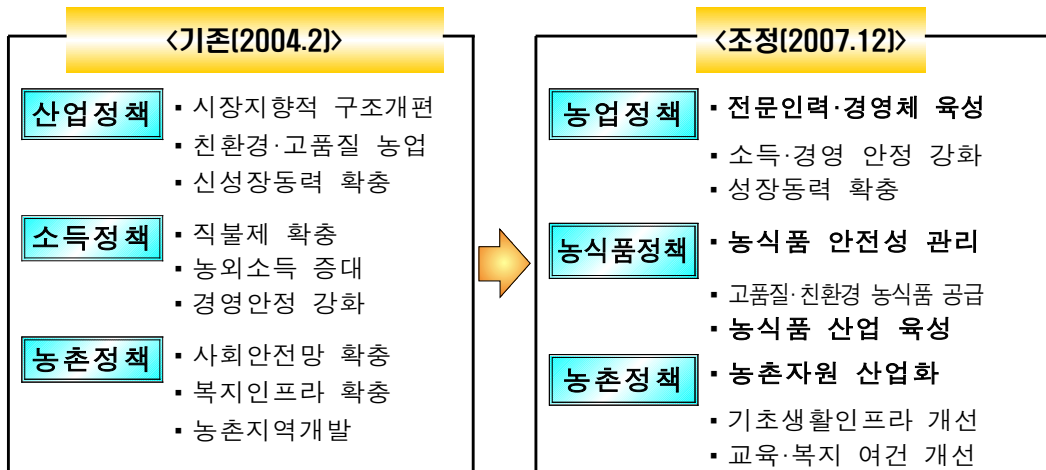
2007년 12월에는 2004년에 마련한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점검·평가하고 2007년 4월에 타결된 한미 FTA 협상결과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농업·농촌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작업은 2005년 12월부터 시작되었다. 농업·농촌 종합대책 점검단을 운영하면서, 관계부처협의회, 투융자평가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통한 점검·조정과 워크숍, 농림기관 혁신 토의, 농업인단체장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투융자평가 연구용역, 관계부처, 농업인단체가 참여한 투융자평가협의회(5회) 및 시도 농정과장 회의와 정책공모, 여론조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점검·조정방안을 확정하였다.

이후, 한미 FTA 협상이 전격적으로 타결되어 종합대책 점검 및 보완작업을 미루고 한미 FTA 보완대책 및 재정지원계획을 종합대책에 반영하게 되었다. 종합대책 보완은 그 동안 한미 FTA 타결로 인한 농업생산액 감소에 대비하고, 그동안 식품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된 점 등이 고려되었다. 2004년 5월 마련된 농업·농촌발전 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 주요 정

책내용을 유지하면서 최근 여건변화를 반영, 보완하여 기본틀을 당초 산업정책, 소득정책, 농촌정책을 농업정책, 농식품정책, 농촌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농업·농촌발전 기본계획 기본틀 조정>



한미 FTA 등 개방확대에 대비, 농업구조조정 촉진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한국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을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정책수단을 확대하였으며, 식품안전관리, 식품산업 육성 등 소비자 지향적 농식품정책을 강화한 것이 주요 골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농업경쟁력 향상 토대 마련을 위한 맞춤형 농정을 본격 추진하여 주업농은 ‘규모확대+경영안정+직불확충’으로 소득문제를 해결하고, 고령농은 경영이양직불, 일자리 창출 및 의료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노후생활을 지원하게 된다.

두 번째로는 직불제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지급단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쌀 소득보전직불 등 각종 소득안정직불을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를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하고, 조건불리 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은 농촌사회안전 차원에서 지급단가를 상향 조정하게 된다.

세 번째로 BT·NT·IT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기능성 농산품, 형질전환 동·식물 개발 등 농업생명공학분야의 연구를 확대하고, R&D사업 비중

을 2006년 21%에서 2012년 49% 수준까지 확대하는 종자산업 등 첨단지식·기술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네 번째로 농식품 안전, 식품산업 등 농식품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GAP·이력추적제·HACCP 추진기반 확충 및 동식물 검역을 강화하는 등 농산물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식품산업진흥법 제정 등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기반을 구축하며, 광역식품 클러스터 조성, 산지에 반가공·전처리된 식자재 생산·공급 시설 확대 등 식품산업 육성 지원을 강화하고, 식량자급률 목표치(2015년)를 설정, 중장기 농정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활력지원, 지역특화 등 농촌자원 산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은 「농촌활력증진 사업」으로 통합,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촌주택개량 및 면단위 생활환경정비 사업을 농식품부사업으로 통합, 상·하수도 정비는 환경부에서 주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계획은 그동안의 투융자실적을 기초로 향후 계획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면서 한미 FTA 등으로 인한 추가 소요 재원을 반영하여 당초 119조원에서 123.2조원으로 3.9조원 증액하였다. 농업경쟁력 강화분야는 고령농 경영이양 촉진, 축사시설 등 시설장비 현대화, 생산기반정비 분야를 확대하여 4.0조원 증액된 40.7조원으로 조정하였고, 당초 과다 책정된 쌀소득·조건불리직불 등을 축소하여 소득·경영안정분야는 4.4조원 감소한 19.5조원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소비자 건강과 관련한 농식품안전·유통혁신분야는 2.2조원 증액된 8.3조원으로, 복지·지역개발분야는 당초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완하였다.

이같은 대책은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에 포함하여 2007년 10월 29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11.6일 국무회의에 보고 후 대외에 발표하였고, 12월 29일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되었다.

정부는 앞으로 미래 농어업을 견인할 농어업·농어촌 비전 2020을 마련할 계획이다. 메가트렌드와 대내외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대책을 마련하는 등 농어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119조원 투입자 계획 조정 총괄표

(단위 : 억원)

구 분	2004~2007			2008~2013			2004~2013		
	당초	조정	증감	당초	조정	증감	당초	조정	증감
합 계	395,934	415,112	19,178	796,969	816,980	20,011	1,192,903	1,232,092	39,189
1. 농업경쟁력 강화	203,479	225,231	21,752	367,207	407,140	39,933	570,686	632,371	61,685
1) 맞춤형 농정 추진시스템	390	273	△117	0	440	440	390	713	323
2) 고령농 경영이양촉진	2,500	715	△1,785	8,767	9,794	1,027	11,267	10,509	△758
3) 농업인 교육훈련	1,473	1,485	12	2,121	3,807	1,686	3,594	5,292	1,698
4) 영농규모화 사업	16,044	16,798	754	36,632	26,365	△10,267	52,676	43,163	△9,513
5)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67,354	78,711	11,357	141,118	162,133	21,015	208,472	240,844	32,372
6) 생산기반정비	71,362	79,206	7,844	87,295	102,757	15,462	158,657	181,963	23,306
7) 수출확대 지원	2,225	1,679	△546	4,941	6,377	1,436	7,166	8,056	890
8) 성장동력확충	17,759	16,750	△1,009	41,103	37,893	△3,210	58,862	54,643	△4,219
9) 산림자원 육성	24,372	29,614	5,242	45,230	57,574	12,344	69,602	87,188	17,586
2. 경영 및 소득안정 부문	100,110	103,727	3,617	239,333	195,474	△43,859	339,443	299,201	△40,242
1) 주업농 소득안정 강화	37,554	46,508	8,954	128,953	103,685	△25,268	166,507	150,193	△16,314
2) 수급 및 가격안정	15,779	10,547	△5,232	22,974	16,389	△6,585	38,753	26,936	△11,817
3) 경영안정강화	40,550	43,309	2,759	73,053	58,286	△14,767	113,603	101,595	△12,008
4) 조건불리·경관보전 직불	3,605	1,291	△2,314	13,324	5,914	△7,410	16,929	7,205	△9,724
5) 수입피해보전(폐업포함)	2,622	2,072	-550	1,029	11,200	10,171	3,651	13,272	9,621
3. 농식품안전 및 유통혁신	41,752	36,518	△5,234	61,450	82,977	21,527	103,202	119,495	16,203
1)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3,249	5,553	2,304	5,502	13,529	8,027	8,751	19,082	10,331
2) 친환경·고품질 농식품	7,130	5,498	△1,632	14,669	15,704	1,035	21,799	21,202	△597
3) 농식품 유통혁신	29,742	24,884	△4,858	37,198	50,552	13,354	66,940	75,436	8,496
4) 식자재 및 외식산업 육성	317	125	△192	771	1,885	1,114	1,088	2,010	922
5) 건강 식생활 교육홍보	1,314	458	△856	3,310	1,307	△2,003	4,624	1,765	△2,859
4.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50,593	49,636	△957	128,979	131,389	2,410	179,572	181,025	1,453
1) 복지여건 개선	13,849	11,966	△1,883	32,983	28,811	△4,172	46,832	40,777	△6,055
2) 교육여건 개선	5,695	2,724	△2,971	21,758	4,871	△16,887	27,453	7,595	△19,858
3) 농촌 기초생활환경	10,661	18,987	8,326	11,026	26,582	15,556	21,687	45,569	23,882
4) 면·마을단위 종합개발	14,960	9,212	△5,748	46,960	41,669	△5,291	61,920	50,881	△11,039
5) 농촌자원 산업화	5,428	6,747	1,319	16,252	29,456	13,204	21,680	36,203	14,523

(농업정책과 서기관 임영훈, 주무관 강석인)

제2절 2008년도 예산 중점투자분야 및 재원 확보

1. 2008년 예산편성 기본방향 및 규모

가. 예산편성 기본방향

2008년도 농림수산식품예산은 농어업·농어촌종합대책과 삶의질 향상 5개년 계획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한·미 FTA 협상 타결 등 여건변화에 따른 투자소요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원을 배분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편성하였다.

정부 부처의 통폐합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출범함에 따라 구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분야 예산(기금) 1조 5,654억원이 분리되어 농림분야와 통합됨으로써 명실공히 농어촌을 두루 아우르는 부처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아울러, 기금은 수산분야에서 운용되던 수산발전기금이 이관됨으로써 8개에서 9개로 늘어났다.

2008년도 예산 편성의 주요내용을 보면, 농업인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경영이양직불제의 지원면적 확대와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농업인 재해공제 사업량 확대와, 지원단가를 현실화하여 농가경영위험 관리 및 농업재해의 신속한 복구를 뒷받침하였다.

삶의질 향상을 위한 복지 및 지역개발을 중점지원하기 위해 농업인 복지 증진 및 농촌정주기반을 확충하고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체계를 정비하였다. 농어민 건강 및 연금보험료와 영유아양육비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농촌마을 생활환경 정비, 소득기반 시설 등을 확충하여 쾌적한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역시 사업 권역을 대폭 확대하였다.

한·미 FTA 등 개방확대에 대비한 피해 최소화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득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등을 확대하였고, 과수·축산·원예 및 식량작물의 경쟁력 제고 사업도 차질없이 뒷받침하였다.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자연순환농업과 연계하

여 유기질비료 지원을 늘리고, 분뇨처리시설 지원을 통해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는 한편,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친환경 농업단지도 확대 조성하였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과 지식·기술농업 확산을 위해 전문 농업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훈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업화·실용화 중심의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하였다.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개선을 위해 수매자금을 지원하고, 산지유통개선 사업 확대를 통해 민간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기능도 강화하였다.

농업생산기반정비 부문은 재해예방 및 준공위주로 지원하되, 수리시설개보수,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은 시행지구 마무리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등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수산부문은 지속적인 어업생산을 위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지속하고, 바다목장 등 자원조성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해 노량진 등 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지원도 확대하였다.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기능 어항,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 등을 중점 지원하고, 국가 및 지방 어항건설은 완공 위주로 지원하였다. 또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신규로 도입하고, 어업인 경영자금 이차보전 등 수산경영지원을 통해 수산업 및 어업인의 경영활동 지원도 강화하였다.

나. 예산규모

2008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총 15조 9,821억원으로 2007년 보다 2.6%(4,006억원) 증가하였으며, 기능별·재원별 규모와 사업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2-1-1>

2008년 부문별 예산규모(2개 외청 포함)

(단위 : 억원)

구분	'07 예산 (A)	'08 예산 (B)	증△감 (B-A)	%
◆ 농림수산식품분야	155,815	159,821	4,066	2.6
《농림수산식품부》	138,451	140,990	2,539	1.8
▶ 농업·농촌부문	123,121	124,755	1,634	1.3
* 예산 일반지출	76,910	78,921	2,011	2.6
* 기금 일반지출	46,211	45,834	△377	△0.8
- 소득보전·경영안정	36,882	32,167	△4,715	△12.8
- 농촌개발·복지증진	11,921	13,351	1,430	12.0
- 농업체질강화	16,155	20,520	4,365	27.0
- 양곡관리·농산물유통	34,860	36,103	1,243	3.6
- 농업생산기반조성	20,320	19,491	△829	△4.1
- 기본적 경비	2,983	3,123	140	4.7
▶ 수산·어촌부문	15,330	16,234	904	5.9
* 예산 일반지출	9,397	10,161	764	8.1
* 기금 일반지출	5,933	6,073	140	2.4
- 수산·어촌	13,532	14,453	921	6.8
- 기본적 경비	1,130	1,202	72	6.4
《농촌진흥청》	5,129	5,509	380	7.4
《산림청》	12,235	13,322	1,087	8.9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 서준한)

2. 농어촌발전특별세 운용

2008년도 농특세 세입실적은 3조 7,549억원으로, 2007년도 세입실적 3조 8,009억원보다 460억원(1.2%) 감소되었다. 감수요인은 증권거래세(거래대금의 0.15%)와 종합부동산세(6억 이상 종합부동산세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20%) 수납실적이 예년보다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08년도 집행실적은 농어업경쟁력강화로 1조 2,004억원, 농어가소득안정 및 경영안정에 1조 4,256억원, 농어민복지증진에 3,583억원, 농어촌지역개발에 1,757억원등이 사용되었으며, 보건복지가족부 등 타부처 소관사업에 4,958억원이 전출되어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되었다.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 김정빈)

제3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사업평가 및 투융자 효율성 제고

1. 농업·농촌 식품산업 투융자 현황

2008년도는 제3단계(2004~) 농업·농촌 종합대책 투융자(119조원) 계획 시행의 5년차로 총 투융자 규모를 12조 4,487억원을 계획, 계획대비 95.5%인 11조 8,927억원을 집행하였다.

<표 2-1-2>

지원 대상별 세부 집행실적(2004~2008)

(단위 : 억원,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누계('04~'08)	
	집 행	%	집 행	%	집 행	%	집 행	%
합 계	108,910	100.0	109,560	100	118,927	100.0	504,503	100.0
[1] 농어업인 등 지원	57,827	53.1	54,060	49.3	59,092	49.7	256,346	50.8
1. 농업인 지원	47,184	43.3	41,092	37.5	43,263	36.4	196,418	38.9
2. 생산자단체 등	10,643	9.8	12,968	11.8	15,829	13.3	59,928	11.9
○ 생산자 단체	6,342	5.8	8,130	7.4	10,141	8.5	37,157	7.4
○ 지자체 + 농업인	1,071	1.0	1,366	1.2	645	0.5	4,110	0.8
○ 단체 + 농업인	2,465	2.3	2,345	2.1	2,827	2.4	12,523	2.5
○ 업체지원	765	0.7	1,127	1.0	2,216	1.9	6,138	1.2
[2] SOC 사업	24,449	22.4	26,721	24.4	30,498	25.6	127,659	25.3
1. 생산·유통기반	17,027	15.6	17,248	15.7	17,494	14.7	88,436	17.5
2. 생활공간	7,422	6.8	9,473	8.6	13,004	10.9	39,223	7.8
[3] 정부사업	26,634	24.5	28,779	26.3	29,337	24.7	120,498	23.9

지난 5년간('04~'08) 농업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농업·농촌에 총 50조 4,503억원을 투융자 하였으며, 지원 대상별로 농업인 등에 25조 6,346억원(50.8%), SOC사업에 12조 7,659억원(25.3%), 정부직접 수행사업(23.9%)에 집행하였다.

지난 5년간(2004~2008) 119조 투융자 계획의 분야별 집행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2-1-3>

지원 분야별 세부 집행실적(2004~2008)

(단위 : 억원, %)

분 야 별	2008년도			누계(04~08)		
	계획	집행	%	계획	집행	%
합 계	124,487	118,927	95.5	539,599	504,503	93.5
[1] 농업경쟁력 강화	67,149	65,880	98.1	292,380	290,547	99.4
1. 맞춤형 농정원칙 및 추천시스템 구축	95	-	0.0	368	-	0.0
2. 고령농 경영이양 촉진	365	131	35.9	1,080	747	69.2
3. 농업인 교육훈련 지원 강화	593	590	99.5	2,078	2,048	98.6
4. 영농규모화 사업	3,774	3,578	94.8	20,572	20,368	99.0
5.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27,164	26,415	97.2	105,875	104,307	98.5
6. 생산기반정비 사업규모 현실화	18,530	19,779	106.7	97,736	98,579	100.9
7. 수출확대 지원	1,037	633	61.0	2,716	2,279	83.9
8. 성장동력 확충	5,457	5,266	96.5	22,207	21,807	98.2
9. 산림자원 육성	10,134	9,488	93.6	39,748	40,412	101.7
[2] 경영 및 소득안정 강화	27,785	20,797	74.8	131,512	101,445	77.1
1. 주업농 소득안정 강화	14,666	10,173	69.4	61,174	49,339	80.7
2. 수급 및 가격안정	2,208	1,941	87.9	12,755	8,592	67.4
3. 경영안정강화	8,263	7,979	96.6	51,572	39,725	77.0
4. 조건불리 및 경관보전 직불 확충	448	337	75.2	1,739	1,412	81.2
5. 수입피해 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2,200	367	16.7	4,272	2,377	55.6
[3] 농식품 안전 및 유통혁신	12,136	14,109	116.3	48,654	49,305	101.3
1.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2,084	2,580	123.8	7,637	8,872	116.2
2. 친환경 고품질 농식품 공급	2,131	2,806	131.7	7,629	8,075	105.8
3. 농식품 유통혁신	7,673	8,493	110.7	32,557	31,597	97.1
4. 식자재 및 외식산업 육성	80	100	125.0	205	192	93.7
5. 건강 식생활 교육홍보	168	130	77.4	626	569	90.9
[4]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17,417	18,141	104.2	67,053	63,206	94.3
1. 복지여건 개선	3,773	4,023	106.6	15,739	15,352	97.5
2. 교육여건 개선	493	500	101.4	3,217	3,203	99.6
3. 농촌 기초생활환경	4,253	4,561	107.2	23,240	20,303	87.4
4. 면.마을단위 종합개발	4,786	4,583	95.8	13,998	13,163	94.0
5. 농촌자원 산업화	4,112	4,474	108.8	10,859	11,185	103.0

(정책평가담당관실 농업사무관 김해녕)

2. 농업 투융자사업의 평가실시

가. 농림사업 성과평가 실시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자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04년도에 마련한 “투융자 심사평가시스템 혁신방안”(2004년 4월) 및 “농림사업 평가시스템 개편”(2004년 12월) 내용에 따라 2007년도에 추진한 주요 53개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2008년도에 실시하였다.

농림사업 성과평가는 사업담당부서가 사업별로 사업수행 당해년도에 평가지표와 목표달성 전략을 수립하고, 익년도에 사업부서의 자체평가와 평가부서의 총괄평가를 실시한 후, 학계·생산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림업무자체평가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사업별로 조직목표, 상위 정책과의 연계성,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상충성, 목표달성도, 프로세스(의견수렴, 현장점검, 정책홍보 등) 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한다. 예산편성방향은 증액 또는 현수준 유지, 현수준유지 또는 감액, 통합·폐지 등으로 구분·제시하고, 제시된 예산편성방향에 따라 다음년도 예산편성시 그 결과를 반영토록 조치하며, 사업별로 제시된 제도개선 사항은 법령정비, 사업지침의 수정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간다.

2008년도 평가결과를 요약하면 ① 농업종합자금,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농어민건강보험료지원, 시도가축방역 등 22개 사업은 예산을 증액 또는 현수준 유지, ②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배수개선, 바이오디젤유채생산시범사업, 유통협약·명령제 등 4개 사업은 현수준 유지, ③ 농업전문투자조합 출자, 토양개량제 보조,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살처분보상금 등 18개 사업은 현수준유지 또는 감액, ④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대단위농업개발(조성), 중규모용수개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원유수급조절 등 5개 사업은 감액, ⑤ 농소정협력사업, 오지종합개발, 신활력지역지원, 계약재배안정화사업 4개 사업은 통합·폐지·사업종료를 제시하였다.

(정책평가담당관실 농업사무관 하혜경)

나. 농림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농림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체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2008년도 자체평가는 주요정책, 재정사업, 기관역량(인사, 조직, 정보화, 정보공개, 변화관리, 재정운용) 분야에 대해 실시하였다.

자체평가의 객관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의 외부전문가 27명과 내부위원 1명을 위원으로 “농림업무자체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다. 2008년도에는 자체평가를 위한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평가와 함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2008년도 농식품부 자체평가 결과로 96개 주요정책과제 및 39개 재정사업 자율평가 과제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있다.

(정책평가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김성겸)

다. 지방자치단체 농정 업무평가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업무 평가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직접 집행·관리하는 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정업무를 책임감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정책자금의 투자효율성 제고 및 지방농정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농정시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선의의 경쟁 유도 및 자치단체 스스로 창의적·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농정업무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업무를 평가해 오고 있으며, 평가결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포상금(시상금) 지급과 더불어 유공자에게 포상을 실시해 오고 있다.

금년에는 2007년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한 ① 투융자사업관리부문(농림사업 추진상황, 재해대책 시설물관리실태, 재정사업의 집행실적), ② 중점농정시책부문(고품질브랜드쌀 생산·유통대책, 가축방역 및 조사료

생산대책, 농산물 수출촉진, 농산물 유통대책, 농업정보화, 친환경농업 육성,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농촌교육 및 복지개선 등), ③ 농업예산 투입노력부문(임의지방비 투입규모·투입비율·증가율, 균특회계 예산 확보율), ④ 지방농정추진 노력부문(지역농업 차별화 시책) 등 4개 분야를 종합 평가하였으며, 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서면평가와 지자체 관련 공무원들이 상호교차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80백만원의 시상금 지급과 정부포상을 하였다.

아울러, 2009년도 지자체 업무평가는 국정 주요시책 등의 추진상황을 평가·환류함으로써 통합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중앙부처 평가로 인한 지자체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안부 주관의 합동평가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농림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와 지방 농정업무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행안부의 합동평가에 2개시책(가축방역, 지자체농정업무)을 포함하여 평가토록 하였으며, 평가지표는 농정여건 변화 등에 적합한 가축방역시책 4개(대가축·중가축·소가축방역, 가축혈청검사)와 지자체 농정업무시책 7개(농업인력 및 농지 등 농업인프라 구축,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사료 생산 추진, 고품질쌀 생산·유통 및 경영개선 추진, 생산자조직기능 활성화, 농림수산물 수출촉진 노력, 쌀직불제 추진, 수산자원 회복)를 개발하여 평가토록 하였다.

(정책평가담당관실 농업사무관 김해녕)

제4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행정쇄신·조직 개편 및 법령제도 개선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행정규제 완화

정부는 규제개혁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97년 8월 22일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고 1998년 4월 18일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근거 대통령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동 위원

회를 중심으로 법령 제·개정시 규제신설 강화 사항을 심의·조정함으로써 규제사항 남발을 억제하여 왔다. 또한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8월에는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규제기획단을 설립하여 기존의 행정규제의 내용을 검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거나 규제수를 대폭 감축해나가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농림분야 행정규제는 2008년 말 현재 416개로서, 분야별로는 국내 가축 전염병 예방, 축산물 유통상 위생관리 등 공중위생과 보건에 관한 규제와 안전한 농축산물의 공급, 기타 농약생산·안전관리, 유해식물의 국내유입방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통분야 및 식량농자재 분야, 그리고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농지분야 등의 규제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2008년도 규제정비는 농어업 성장동력 확충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완화, 농림수산업의 부가가치 제고에 장애가 되는 타부처 규제 개선 유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2008년도에는 농림규제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법령안 제·개정 시 사전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이를 함께 공표하도록 강화하고 피규제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행정규제에 따른 피규제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림부내의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전체위원을 늘려 18명으로 확대 구성하고 총 10회에 걸쳐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30개 법령 67개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규제의 신설·강화에 따른 사전 심사절차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규제정비의 지속적인 발굴정비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단체 및 법인과 그 밖에 민간이해관계인들로부터 불편규제를 수집·점검하였다.

2008년도 규제정비는 경쟁축진을 저해하거나 사업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법률에 근거가 없거나 자의적인 해석이 우려되는 조문을 명확화하는 등 규제개혁이 시급히 필요한 분야의 과제발굴을 위하여 전경련 등 경제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지·축산위생·유통 및 수산분야 등의 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지속적인 실

시와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한 소비자 및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규제개혁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정비하도록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규제정비 대상과제로 연초에 97건을 과제를 발굴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 획일적인 지정을 완화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절차를 간소화하는 농지법시행령을 개정하였고, 비농업인에 대한 농지소유규제 완화 및 한계농지 소유 및 거래제한을 폐지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농지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으며,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마을구역 정비, 대규모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간척지 등 임대기간을 30년 이상으로 개선하는 등의 농어촌 정비법 관련법령을 개정하였다.

또한 축산물운반업체의 영업기준 완화 및 식육판매영업자의 식육용도 미표시시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완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축산물가공장의 지정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등의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을 개정하였고, 비료 생산업 등록, 수입업 신고, 농약제조업·판매업 등록시 서류제출을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부령을 제정하고, 사료제조업 등록시 필요한 생산시설규모의 하한선을 폐지하여 소규모업체의 시장진입 기회를 부여하도록 사료관리법령을 개정하였다. 아울러 양곡 판매·가공업자에 가공방법, 시설개선 등의 명령을 폐지하고 양곡가공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양곡관리법령을 개정하였으며, 축산발전기금의 용자취급기관을 확대하고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 발급규정을 완화하는 등의 축산법 관련법령의 개정도 추진하였다.

특히,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준공 확인제도를 개선하고, 품종별 양식어업 면허제도를 통합 면허제도로 전환하며, 축제식 양식장 낚시터 운영 허용, 어업허가 신청서류 간소화 및 연근해 채낚기어선의 집어 등 최대전력기준을 재설정하는 등 수산 및 어업 관련법령의 개정도 추진하였다.

아울러 규제개혁추진과정에서 추가로 자체발굴한 개혁과제도 적극 개혁하는 등 2008년도에는 총 107건의 행정규제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였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기관 이호재)

2. 농정조직의 개편

가. 신 정부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시 농림수산식품부 발족

농수산업의 시장개방 확대 추세에 따라 1차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어촌 발전을 위한 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어업수산정책,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진흥정책을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 하였다.

- 복수차관 설치 및 차관보 직위 폐지
- 1실 12국·관·단 40과·팀(농림부) + 4국·관 15팀(해수부) ⇒ 2실 1본부 14국·관·단 52과·팀(농림수산식품부)
 - * 1실 1본부 증가, 2국·관 감소, 3과·팀 감소
- 정원변동 : 3,356명(농림부) + 2,023명(해수부) ⇒ 5,101명
 - * 순수감축 278명(본부 76, 소속기관 202)
- 농업통계 생산기능은 통계청으로 이관(667명)
- 미래 전략산업인 ‘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발족과 함께 ‘식품산업본부’ 설치

<농림수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20677호, 2008년 2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농식품부령 제1호, 2008년 3월 3일)>

나. 식품산업 진흥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

식품산업 진흥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식품산업진흥법 시행에 맞춰 식품산업본부내 ‘식품산업정책단’(고공단 다급)을 신설(‘08.6.28)하였다.

- 식품산업정책단은 식품산업정책팀, 식품산업진흥팀, 소비안전팀으로 구성
- 농가소득안정추진단(고공단 마급)은 과장급 직위(3급)으로 하향 조정
- 유통정책단 6팀을 3팀으로 조정(유통정책팀, 채소특작팀, 과수화훼팀)

<농림수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20860호, 2008년 6월 28일)>

다.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 소요정원 확보 추진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 농수축산물의 품질·안전성, 농축산물 검역검사 등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 및 대민서비스 강화가 필요한 분야 등을 중심으로 2009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소요정원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하였으나 국립종자원 강원지원 기구신설만 인정받아 인력증원은 재정 협의를 하지 못했다.

- 행정안전부 검토 결과를 재정협의 요청
 - 기구신설 : 국립종자원 강원지원
 - 인력증원 : 국립종자원 강원지원 4명
 - 인천공항 CIQ검역인력 12명
 - 수산동물검역인력 33명
 - 미국산쇠고기 부산물 조직검사 5명 등 54명은 반영 검토
- 기획재정부 재정협의결과
 - 기구신설 : 국립종자원 강원지원
 - 인력증원 : 재정협의 보류

(행정관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이종태)

3. 농림분야 법률개정 등 제도개선

정부가 국회에 단독 제출한 법률안 중 사료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식물방역법, 농어촌정비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염관리법, 염업조합법 등 8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의원이 단독 발의한 법률안 중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 등의 복원에 관한 특별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도축장구조조정을 위한 특별조치법,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사방사업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7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정부가 제출하고 의원이 동시 발의한 법률안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어선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에는 농림수산식품부문과 관련 있는 법률안 중 총 18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중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 등의 복원에 관한 특별법은 제정법이었고 나머지 17개 법률안은 일부 및 전부개정법이었다.

가. 정부 단독 제출 국회통과 법률

1) 사료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이 법률은 정부가 2007년 6월 7일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에서 2008년 2월 19일 수정하여 통과시켰으며, 법률 제8931호로 2008년 3월 21일 공포하여 2009년 3월 22일부터 발효하였다.

가) 개정이유

사료산업과 관련한 사회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있어 업계의 자율성을 확대·보장하기 위하여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등에 대한 사료제조업 등록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료제조업 휴·폐업 등의 신고 제도를 마련하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지정취소 및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이다.

나) 주요내용

이 법률을 개정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식품첨가물의 제조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사료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이 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사료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셋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에 대하여는 제조시설의 개선을 위한 용자사업 등의 우선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이 법률은 정부가 2007년 8월 24일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에서 2008년 2월 19일 수정하여 통과시켰으며, 법률 제9009호로 2008년 3월 28일 공포하여 2008년 3월 28일부터 발효하였다.

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에 대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행정조사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의 생산·가공시설 등이 다른 식품 관련 법령에 따른 조사·점검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목적으로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검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으로 조사

· 점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위해물이 섞여 들어오거나 남아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효과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수산물가공업의 영업정지·등록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3)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이 법률은 정부가 2007년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에서 2008년 2월 19일 수정하여 통과시켰으며, 법률 제8930호로 2008년 3월 21일 공포하여 2008년 3월 22일부터 발효하였다.

가) 개정이유

외래 병해충이 유입되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하거나 국내 지역 경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 또는 보관하는 자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수출입용 목재 검역에 관한 국제 기준에 맞추어 수출입 목재 및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열처리를 하는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제도를 마련하며,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식물방역질서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다.

나) 주요내용

이 법률을 개정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입 중이거나 국내 지역을 경유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거나 보관하는 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붙어있는 병해충이 퍼지지 아

니하도록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는 등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수송하거나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둘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수입항 외의 장소를 통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한 자, 금지품을 수입한 자 또는 수입제한을 위반하여 식물등을 수입한 자 등에 대한 처벌기준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식물방역관의 검사, 소독 또는 폐기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에 대한 처벌기준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하였다.

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이 법률은 정부가 2008년 1월 18일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에서 2008년 2월 26일 통과시켰으며, 법률 제9008호로 2008년 3월 28일 공포하여 2009년 3월 28일부터 발효하였다.

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이 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생활정비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오지개발촉진법」 및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오지종합개발사업 및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유사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어 중복투자 등의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생활정비사업에 오지종합개발사업과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합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이 법률은 정부가 2008년 10월 10일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에서 2008년 12월 5일 수정하여 통과시켰으며, 법률 제9276호로 2008년 12월 26일 공포하여 2009년 6월 27일부터 발효하였다.

가) 개정이유

공유림·사유림 소유자에 대한 지원대상사업을 정비하고, 임업후계자 선발 및 독립가(篤林家) 선정에 대한 취소사유를 보완하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요건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나) 주요내용

이 법률을 개정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업후계자 또는 독립가로 선발되거나 선정된 경우에는 그 선발 또는 선정을 취소하도록 하였다.

둘째, 국방·군사시설,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거나, 지역사회 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임업진흥권역 지정의 변경·해제 사유에서 대체지정지의 선정을 제외하였다.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이 법률은 정부가 2008년 11월 12일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에서 2008년 12월 5일 수정하여 통과시켰으며, 법률 제9276호로 2008년 12월 29일 공포하여 2009년 6월 30일부터 발효하였다.

가) 개정이유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추가하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을 정비하고, 농림수산

식품부장관의 한국농어촌공사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나) 주요내용

이 법률을 개정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이에 맞추어 법률 제명을 변경하였다.

둘째,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에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지원사업,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사업 및 농업기반시설과 그 주변 지역의 개발·이용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 각 사업의 근거 및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셋째,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용자와 해외농업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용자 및 투자를 추가하였다.

넷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 한국농어촌공사의 고유사업, 법령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도록 하였다.

7)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이 법률은 정부가 2008년 7월 11일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에서 2008년 12월 2일 통과시켰으며, 법률 제9157호로 2008년 12월 19일 공포하여 2009년 3월 20일부터 발효하였다.

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하기 위해 염관리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8) 영업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이 법률은 정부가 2008년 7월 11일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에서 2008년 12월 2일 통과시켰으며, 법률 제9157호로 2008년 12월 19일 공포하여 2009년 3월 20일부터 발효하였다.

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하기 위해 영업조합에 관한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고, 그 밖에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였다.

나. 의원 단독 발의 국회통과 법률

1)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 법률은 안상수의원이 2008년 1월 21일 대표 발의한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2008년 2월 22일 김영덕·서재관의원이 농림수산식품위원회안의 제정을 요구하는 서면동의서를 바탕으로 2008년 2월 26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대안을 마련하여 2008년 2월 29일 통과시켰으며, 법률 제8866호로 2008년 2월 29일 공포하여 2002년 2월 29일부터 발효하였다.

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증설로 각 부처 중심의 국정운영에 차질을 야기하고, 책임성 확보 등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농어업·농어촌특

별대책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고, 당연직 위원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하여 현재의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2)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

2007년 12월 31일 문석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 등 특별법안」, 2008년 1월 21일 김학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상 및 해안 유류유출 오염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복구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8년 1월 29일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과 허베이 스피리트호 충돌로 인한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8년 1월 29일 심대평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류유출사고 피해지역주민의 손해배상 및 경제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병합 심의하여 2008년 2월 22일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을 마련하여 2008년 2월 22일 통과시켰으며, 법률 제8898호로 2008년 3월 14일 공포하여 2008년 3월 14일부터 발효하였다.

가) 제정이유

이 법률은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 및 복구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나) 주요내용

이 법률을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이 되도록 하였다.

둘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은

피해주민단체를 구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에게 신고할 수 있고, 대책위원회, 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주민단체의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국제기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보상 청구 후 6개월 이내에 손해액의 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생태계복원을 위하여 유류오염 관련 연구·조사 및 해양환경 측정·분석을 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학술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피해주민 중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이 법률은 우윤근의원이 2008년 4월 18일 대표 발의하여 국회에서 2008년 5월 22일 통과시켰으며, 법률 제9117호로 2008년 6월 13일 공포하여 2008년 6월 13일부터 발효하였다.

가) 개정이유

농·축산물의 생산·수입에서부터 최종소비처인 음식점까지 일관되고 체계적인 원산지표시 관리·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음식점에서 축산물 및 쌀·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원산지 판정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표시를 관리하도록 하여 원산지표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농업과 국내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나) 주요내용

이 법률을 개정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축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조리하여 판매하려는 축산물 및 쌀·김치류에도 원산 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둘째, 축산물 및 쌀·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농림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셋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식품접객업 영업장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표시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영업소의 폐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도축장 구조조정법 일부개정법률

이 법률은 이강두의원이 2008년 2월 1일 대표 발의하여 국회에서 2008년 5월 22일 수정하여 통과시켰으며, 법률 제9118호로 2008년 6월 13일 공포하여 2008년 12월 14일부터 발효하였다.

가) 개정이유

최근 수입자유화 및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등으로 외국 축산물의 국내유입이 계속 증가됨에 따라 국내 사육 가축두수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나, 도축장의 수는 감소되지 않고 그대로 존치 운영되고 있어 낮은 가동률로 인해 도축업 전반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가축사육두수에 상응하는 적절한 도축능력을 유지하도록 구조조정을 유도·지원하여 도축장의 경영안정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토록 하며 수입축산물에 대응하여 우리축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나) 주요내용

이 법률을 개정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축장경영자는 도축장의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거래가격의 1천분의 3이하에서 도축장경영자가 분담하는 분담금 등으로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을 조성하여, 폐업하는 도축장의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폐업신청자에 대한 조정자금 지원 시 과거 3년 간의 도축실적 등을 근거로 조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정자금을 지원받고 폐업한 도축장이 소재한 장소에서는 폐업한 날부터 10년 동안 도축업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5)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이 법률은 이낙연의원이 2008년 7월 15일 대표 발의하여 국회에서 2008년 12월 5일 수정하여 통과시켰으며, 법률 제9175호로 2008년 12월 26일 공포하여 2009년 6월 27일부터 발효하였다.

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섬지역 농림어업인들은 고품질의 농축산물을 생산하고도 지리적 여건에 따른 과도한 물류비용으로 인하여 생산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섬지역 농림어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육지로 운송하여 판매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화물운송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섬지역 농림어업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6)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이 법률은 최욱철의원이 2008년 7월 17일 대표 발의하여 국회에서 2008년 12월 5일 수정하여 통과시켰으며, 법률 제9176호로 2008년 12월 26일 공포하여 2009년 3월 27일부터 발효하였다.

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대상지라 할 수 있는 황폐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산림청장이 먼저 황폐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는 사방사업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7)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

2008년 6월 5일 최인기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6월 5일 강기갑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8년 7월 14일 류근찬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병합 심의하여 2008년 8월 25일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을 마련하여 2008년 8월 26일 통과시켰으며, 법률 제9130호로 2008년 9월 11일 공포하여 2008년 9월 11일부터 발효하였다.

가) 개정이유

이 법률은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人獸共通) 전염병인 소해면상뇌증(해면상뇌증)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국민이 안심하고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해면상뇌증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특정위험물질(SRM) 등이 국민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개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한 모든 월령(月齡) 소의 편도(扁桃)·회장원위부(회장원위부, 소장의 끝부분) 및 30개월령 이상 소의 뇌·눈·척수·머리뼈·척주 등의 특정위험물질 등은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위생조건이 고시되어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는 국가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나라의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수입중단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이 중단된 국가에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다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입

과 관련된 위생조건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우리 국민의 오랜 식습관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면서도 합리적인 예방기준과 수입 위생조건을 적용하는 쇠고기 검역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나) 주요내용

이 법률을 개정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에서 생산된 모든 월령의 소에서 유래한 편도와 회장원위부 및 30개월령 이상된 소에서 유래한 뇌·눈·척수·머리뼈·척추 등을 특정위험물질로 규정하였다.

둘째, 수입축산물의 검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사업에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를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셋째, 특정위험물질과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국가에서 생산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입금지품목에 추가하였다.

넷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입이 금지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미 위생조건이 고시된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최초로 수입하려는 경우나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수입이 중단된 국가로부터 수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위생조건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다.

일곱째, 종전의 위생조건이 적용되는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수입 중단 조치를 하거나, 수입이 중단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재개할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 정부 제출 및 의원 동시 발의 국회통과 법률

1)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이 법률은 정부가 2007년 8월 13일 국회에 제출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7년 9월 7일 서재관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의하여 2008년 2월 26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대안을 마련하여 2008년 2월 26일 통과시켰으며, 법률 제9007호로 2008년 3월 28일 공포하여 2002년 월 28일부터 발효하였다.

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공시력 규정을 신설하여, 「소형선박저당법」의 저당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 어선 저당권자와 소유권자의 권익을 동시에 보장하도록 정비하고, 저당권의 집행절차상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어선의 등록원부에 그 사유를 기입하도록 등록관청에 촉탁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에 촉탁등기에 관한 절차적 규정을 이 법에 보완하여 저당권의 집행을 위한 절차적 통일을 기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다.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08년 11월 6일 정부가 제출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8년 11월 10일 유기준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의하여 2008년 12월 4일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을 마련하여 2008년 12월 5일 통과시켰으며, 법률 제9178호로 2008년 12월 26일 공포하여 2009년 6월 27일부터 발효하였다.

가) 개정이유

이 법률은 책임행정과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관측위원회 및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고, 경매사 자격시험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험의 관리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나) 주요내용

이 법률을 개정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관측위원회 및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를 두고 있으나,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어 책임행정 실현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를 폐지하였다.

둘째, 현행 경매사 자격시험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되,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하던 것을 경매사 자격시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전자거래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외에도 일정기준 이상의 지정된 시설에 보관·저장 중인 거래대상 농수산물의 경우에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않고 그 견본으로 거래 및 판매업무를 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유통비용의 절감과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넷째,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에 따라 현행의 과태료 규정과 중복되는 규정 등을 삭제하였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사무관 김형재)

제5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기관 개혁

1. 농업협동조합

가. 농협개혁 추진

90년대부터 농협이 신용사업에 치중한다는 비판과 함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협중앙회의 신용 및 경제사업 분리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였고, 경제사업에 소홀하다는 농업인의 불만과 경제사업의 적자구조가 신용사업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 분리 방안을 마련('07.3)하여 2년차 추진하였다.

농협 사업분리 방안에 포함된 38개 세부추진과제에 대해 제도개선, 투·융자수준 측면에서 '08년 계획대비 84.2%가 정상 추진되었으나, 축종별 핵심농가·연합사업조직 육성, BIS비율 유지 등 일부 과제는 미흡하게 추진되었다. 기존 과제 외 추가로 실시한 농기계은행사업은 농기계매입에 1,629억원을 지원하고, 7,421ha에 대해 농작업을 대행함으로써 농가부채 및 이자경감 등 3,920억원, 고용효과 3,100명의 성과를 나타냈다. 아울러, 125개 조합에 대해 품목별 공선출하회 조직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전년대비 40% 증가) 육성 등 산지유통 활성화도 적극 수행하였다.

아울러, 동 38개 과제의 이행을 점검하고 추진결과를 평가·보완하기 위해, 제3차 및 제4차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두 차례의 위원회 개최 전·후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동 사업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실용정부 들어 그 동안 정부의 개혁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여전히 소규모, 비효율적인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보다 경쟁력 있고 실천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조합원의 조합경영 참여를 촉진하고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2008년 초부터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검토하였으며,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2008. 9)하여 기획재정부 등 39개 중앙행정기관의 협의와 입법예고

(2008. 10)를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 국무총리실 중앙규제심사위원회의 규제심사(2008.11) 및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정부안을 확정(2008. 12)하였다.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규제완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합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조합 및 중앙회의 운영구조와 선거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으로서, 농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농협 설립구역을 시·도 단위로 확대하고, 일정규모 이상 조합장의 신분을 비상임으로 전환토록 하며, 아울러, 중앙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하고, 회장은 중임할 수 없도록 하며, 중앙회 이사회 기능 강화 및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이사수를 감축(현 : 21명 이상→ 30명 이내)하고, 인사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그리고, 감사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가 아닌 상임감사체제로 전환하고, 이사회로부터 독립시켰으며,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하여 감사를 선임하도록 하였다.

(농업금융정책과 행정사무관 송태복, 행정사무관 변혜중)

나. 일선조합 구조조정 추진

일선조합의 부실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부실발생 사전예방시스템을 중앙회 내에 구축·운영하고, 농협자산관리회사에서 신용조사·신용조회·신용평가 등의 수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추가하기 위하여 2007년 8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부실조합 조기 정리 및 조합의 부실 예방을 위해 제정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전년말 결산 및 경영상태평가결과 등을 기초로 3개 조합을 부실우려조합 등으로 신규 결정하고 경영개선조치 권고·요구·명령을 하는 등 일선조합의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였다.

2007년도의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구조개선을 추진 중인 조합에 있어서도

합병이행기간은 종료되었으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는 조합에 대하여는 이행기간을 연장하여 합병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재무구조개선을 추진 중인 조합의 경영개선상황을 평가하여 이행상황이 미흡한 조합에 대하여는 추가 경영개선조치사항을 부과하거나 적기시정조치의 단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제재조치를 하여 구조개선 추진에 박차를 가하였다.

또한,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에도 29개 조합에 총 471억원(출연)의 자금을 지원하였는 바, 재무구조개선을 추진중인 6개의 조합에 출연 43억원을 지원하였고, 19개의 합병조합에 출연금 41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퇴출대상조합의 계약을 인수한 4개 조합에 계약이전 손실금 보전을 위해 16억원을 출연하였다.

이와 같이 일선조합의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한 결과 2008년도에도 2개 조합이 합병으로 정리되었으며 1개 조합은 정리 중에 있다. 또한 23개 조합이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정상화되었다.

2008년도 결산결과 조합 경영수지는 조합의 경영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합병 등 구조개선의 노력으로 적자규모가 172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9억원 감소하였으며, 전체 조합의 당기순이익 또한 10,617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761억원이 감소하였다. 또한, 적자조합은 전년에 비해 4개 조합이 줄어든 5개 조합이다.

경제·신용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되어 전체 경제사업실적은 34조 4,431억원으로 전년 대비 14.6% 성장하였으며, 예수금 평잔액은 149조 9,177억원으로 전년 대비 4.5% 성장하였고, 상호금융 대출도 115조 5,899억원으로 전년 대비 14.4% 성장하였다.

(농업금융정책과 행정사무관 박종신)

2.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 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급격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구축을 통해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

국민의 먹을거리 생산기반 조성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어촌 정주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미션과 함께, 농어업생산기반조성·정비, 농어촌용수 및 수리시설물관리, 농어업 소득증대 및 경쟁력 제고, 농어촌지역개발 종합 솔루션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를 公社의 핵심업무 5대분야로 선정하여 농어촌에 희망주고, 국민에게 신뢰 받는 일등 공기기업이라는 장기 비전을 마련하였다.

또한, 거시환경/산업환경/기타 환경요인 등 외부환경 분석으로 기회와 위협을, 성장경로/사업구조/경영자원/경쟁우위 등 내부역량 분석으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SWOT Matrix 분석을 통해 전략대안과 전략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5대 전략을 도출함으로써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체계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전략 중심의 유기적인 자원배분을 위해서 전사경영전략과 연계한 중장기 재무계획을 수립, 조직구조의 정비와 중장기인력개발계획을 마련하는 등 경영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였다. 차질 없는 전략의 실행을 위해 전략목표달성을 위한 부서별 업무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간부회의, 사업현장 방문, 워크숍, 업무보고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여 중장기 전략 중심의 公社운영체계를 구축하였다.

경영선진화를 위하여 조직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내 경쟁적 요소를 과감히 도입하여 “자립형 공기기업”으로 경영체질을 변화시키기 위한 추진목적을 가지고, 조직·인력·사업·경영관리 등 경영시스템 전반에 걸

처 잘못된 관행을 깨고 기본틀도 새롭게 구축하고 개선 프로그램의 제도화를 통하여 연속적이며 꾸준한 체질 개선을 도모하는 등 조직 구성원의 변화에 대한 열망 결집으로 계획의 실행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윤리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윤리경영실행 목표와 이에 따른 윤리경영 활동 및 중점과제 관리계획 수립·추진으로 조직간 네트워크화를 강화했다. 또한 Plan, Do, Check, Action의 단계로 실천과 성과중심으로 윤리경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하였다.

윤리문화 정착을 위해서 CEO의 윤리경영 메시지 전파, UN Global Compact 가입, 윤리경영 나침반 제작 등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윤리경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반부패교육, 사이버 교육, 우편통신, 특별교육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계약관리, 예산회계, 영농규모화 등 부패취약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시행하였다.

사회공헌추진 전략 및 기본계획을 수립, 농촌사랑, 이웃사랑, 환경사랑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여 사회공헌 기반구축, 사회공헌활동 추진,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다. 또한 사회책임경영을 실행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소외계층 및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행을 강화하였으며, 도농균형 발전 역할 수행을 통한 농촌지역사회 공헌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의 윤리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중장기 전략경영계획과 연계한 고객만족계획 수립, 고객만족 실천문화 정착, 고객후견인제도 실시, 고객점검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객만족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CS 실천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분야별 핵심고객을 6개로 유형화하고 고객유형별 핵심Needs를 파악 그 관리방향을 차별화하였고, 중장기전략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과제를 고객만족 극대화, 고객만족역량 강화, 고객참여 활성화 등으로 구체화하고 내·외부고객만족도의 목표치를 설정하여 CS경영 실천에 대한 직원이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고객만족경영에 대한 평가와 보상체계 정립을 통한 고객만족 실천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베스트 친절사원상’의 포상등급을 확대하였으며, 고객접점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임대차료 납부 및 지급방법을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함으로써 임차고객 및 위탁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였다.

公社의 특화된 고객서비스인 ‘고객후견인’제도를 통해 농촌소외계층에 대한 산발적 지원을 고객이 요청하는 서비스에 대해 1대1로 제공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公社의 주 고객인 농업인 뿐 아니라 도시민에게도 웰촌포털 운영, 도농교류엑스포, 농어촌산업박람회 개최, 대중매체 활용 등 농어촌의 종합 정보를 제공하여 도농교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공사가 내부 운영시스템 개선 등 지속적으로 경영선진화를 추진하는 한편,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신규 사업의 개발·자체투자사업의 확대 등을 통해 사업구조는 고도화하고, 조직문화도 선진화하여 농어촌에 희망주고 국민에게 신뢰 받는 일등 공기업으로 성장·발전에 나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정책과 서기관 우양호)

3. 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어민의 소득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농수산물 가격안정, 유통개선 및 수출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농정집행기관으로서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수행사업의 성과제고를 통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공사는 식품산업진흥법 제정 등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기존의 식품산업팀을 식품산업처로 확대 개편하고 식품산업 종합지원체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식품정보·교육 등 식품산업 발전의 기초가 되는 인프라를 조성하고 맞춤형 종합컨설팅 및 자금지원 등

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 한식을 세계인이 즐겨먹는 세계 음식화하기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이는 외형적으로는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산업 구조가 취약하고 기술, 교육, 정보 등 핵심역량이 부족한 식품산업을 농어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의성 있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또한, 공사는 식품산업 육성과 더불어 농수산물 사이버 거래소 및 시군 유통회사 설립, 직거래 및 공정거래 지원센터 운영 등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유통혁신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산지유통조직 종합평가업무를 담당하여 규모화·전문화된 산지유통조직을 육성하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농식품 마케팅대학 및 산지유통개선과정 등 교육과정을 운영해오고 있다.

농식품 수출지원 전담기관으로서 수출촉진을 위해 안전성 관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 제공, 수출자금 지원 등 생산부터 수출까지 종합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08년에는 수출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신규유망품목의 개발수출을 시행하여 수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수출협의회 결성 및 수출선도조직 육성 등 수출업체의 조직화·규모화를 도모하여 수출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일본, 아태, 구미 등 지역별로 차별화된 마케팅을 실시하고 일본 코프 샷포로, 중국 E-Mart 등 해외 유통업체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등 해외마케팅 혁신을 실현하였다. 공사의 이러한 수출지원 활동으로 고유가, 안전성 강화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2008년 농수산식품 수출 44억 3백만불을 달성하여 매년 농수산식품 수출 최고치를 경신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또한, 공사는 정부비축사업 담당기관으로서 농산물 수급관리와 적기방출로 농산물 가격안정에 기여하였고, MMA쌀 도입·판매 전담기관으로서 시판용 수입쌀의 도입과 판매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여 정부의 양곡관리 정책에 기여하였다.

고추, 마늘 등 주요 민감품목(27개 품목)의 민간도입가능가격, 품목위장·규격위반과 같은 불법수입사례 등을 조사하여 농림수산식품부, 관세청에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저가수입 등에 따른 국내농업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공사는 직무희망제 시행, 직위공모제 확대 등을 통해 성과와 능력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부서별 업적의 실시간 측정, 평가 인센티브 차등 폭 확대 등 경영관리체제를 성과중심으로 전환하였다.

한편 공기업 최초로 업무전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On-line 감사체제 확보를 위한 e-감사시스템을 구축한 이래, 상시 감사체제 확립, 전략적 성과감사 수행으로 경영개선 및 사업성과 제고를 도모하여 약 7억원의 예산 절감 성과를 제고하고, 2년 연속 금품·향응·편의 제공률 제로 달성,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조사결과 2년 연속 준정부기관 1위의 성과를 거두었다.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고객의 기대수준에 한발 앞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만족 Plus one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고객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신속·정확한 고객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정책자금 용자 확대 및 채권관리제도 개선, 비축물자 리콜제·출고 예약제 시행 등 각종 제도개선을 한 결과 2008년 준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93.1점으로 최고 등급(AA)을 달성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공사는 내부 운영시스템 개선 등 지속적으로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을 위한 수출지원 기능과 우리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식품산업 육성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유통비용을 절감할 신유통시스템 구축을 통한 유통혁신, 국민 먹을거리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등 신규 정책사업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유통정책과 행정사무관 전건호)

4.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마사 진흥과 축산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2008년도에 미션 및 비전과 연계한 고유 가치로서 말산업, 고객, 봉사, 창조, 미래를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4대 경영방침인 fun경영(유연한 사고), 섬김 경영(실질적인 서비스 강조), 나눔 경영(사회공헌활동 모범적 실천), 선도 경영(녹색성장인 말산업화)을 선정하였으며, 경기침체, 경마규제, 경영효율화와 관련해서는 3대 경영 중점을 제시하고 중점테마별 3대 추진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마사회의 주요 핵심사업인 경마 부문에서는 경주시행 시스템 선진화와 경마인력의 전문성 강화, 질 높은 경주마 생산을 통해 경쟁성을 향상하고자 노력했다. 서울-부산경남 경마공원의 교류경주를 시행해 경주운영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며 경마 국제화 노력의 일환으로 경마선진국 경마인력 개방 확대를 추진하고 자유기승기수 제도를 확대 시행해 선수들의 수준 향상을 도모했고, 암말 도입 상한선 조정과 관리시스템 강화로 경주마 수준 향상을 도모해 그 결과로 1위에서 5위까지의 착차를 7.79마신(2007년 8.10마신) 이하로 감소시켰다. 또 국내 경마의 수준을 국제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외경주출진, 선진 경마국들과 교류, 외국 경마 인력 활용을 추진하여, 국내 경마 국제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Part I 국가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교류협약 체결과 외국경마 전문 인력 확대하여 국내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으며, 마필을 미국경기에 출전시켜 국제교류를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했다.

또한 마사회는 한국경마 수준제고와 국내산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내산마 생산 육성 및 말산업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씨수말 운영체계를 개선해 씨수말 운영 효율화를 추진했고 국내산마 개량평가모형을 개발해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운영체계 개선 노력으로 씨수말 운영시스템 정밀화와 우수 씨수말 활용률을 높였다. 또한

말 개량 목표 달성을 위해 개량평가 모델을 개발, 우수 국내산마 육성을 위한 과학적 방법을 제시했으며 이 모델을 활용한 모델 실용화와 피드백을 기반으로 모델 개량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한 우수마 육성 지원을 위해 국내산마 생산 육성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했다. 생산 육성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말 생산기술 아카데미 설립과 선진국 해외 연수 지원을 추진했고 산학연 공동 네트워크를 형성해 말 생산 및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였다.

말 산업 부문에서는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국내 최고의 말 생산과 이용(승마, 경마)에 관한 전문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설정하였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업무면에서는 핵심업무 프로세스를 17개로 세분화하였고,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자원의 투입에서부터 산출물이 고객에 전달되는 일련의 과정을 체계화하여 업무프로세스 단계별 내부조직의 역할연계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환경변화 및 기관의 역할전환에 대응하여 경마사업본부 및 말산업본부를 신설하는 등 본부조직을 개편하고, 전체적으로 2실 5팀을 축소하는 슬림화를 추진하였으며, 나아가 지원조직의 1본부를 축소하는 대신 현장조직의 1본부를 강화하여 현장중심의 조직체계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로 경마 및 마사진흥 등 핵심조직 및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의 비중 86.0%로서 지난해 수준(83.0%)보다 3.0% 증대시켰다.

나아가 마사회는 정부의 적극적인 FTA 정책으로 인해 농촌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체소득원의 하나로 말산업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특히 마사회는 말 산업 육성정책이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고 농촌경제의 대체소득원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기울여 정부의 정책과제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동 정책 추진을 위해 마사회는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무총리실과 협력 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와도 MOU를 체결해 말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승마수요 창출을 위한 마문화 확산 계획을 수립하였다. 마사회는 또한 승마사업 육성, 생활승마 대중화 및 활성화, 마문화 홍보를 통해 승마수요 창출 뿐만

아니라 마사회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생활 승마 활성화를 위한 전 국민 말 타기 운동을 추진했으며 이는 국민들에게 승마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08년은 마사회의 핵심사업인 마필을 이용한 경마산업이 기존의 좁은 범위의 경마산업에서 벗어나 말을 이용한 전체 산업을 아우르는 말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한 첫 해였다. 하지만 아직은 초기단계인 이유로 말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어 말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과 홍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할 예정이다.

(축산정책과 사무관 김휴현)

제6절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활동상황

1. 농어업특위의 현황

2001년 11월 14일 WTO(세계무역기구)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출범을 위한 도하개발어젠다(DDA)가 채택되고,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칠레 FTA협상이 시작되는 등 변화하는 국제무역환경에 대비하여 농어업·농어촌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그 실천계획을 농어민, 소비자, 정부와 함께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이하 “농어업특위”라 한다)를 구성 운영(제정 2002. 1. 26 법률 제6336호)하고 있다.

그 동안 농어업특위(제1대 위원장 : 전 농림부장관 한갑수, 제2대 위원장 : 단국대 교수 장원석, 제3대 위원장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 황민영, 제4대 위원장 : 세계농정연구원 이사장 이상무)는 국민적 합의를 기본 바탕으로 하는 민·관 합동기구로서 본위원회·상임위원회·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해 관계부처와 기관·단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으로 사무국을 구성·운영하여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제1기 농어업특위는 2002년 1월 26일~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설치되어 “범국민적·범정부적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농어업·농어촌 정책방향의 제시, 농어업정책의 신뢰강화 및 국민적 공감대의 확산”을 목표로 농어업·농어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의 수립, 농어업·농어촌 종합대책 및 투융자계획의 수립, 종합대책 협의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의 사회적 합의 도출 등 큰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DDA·쌀협상 등 갈등국면과 FTA협상 등 산적한 국내외 농어업 문제들에 대한 대응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각계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 및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존속기한을 연장(개정 2004년 12월 31일 법률 제7274호)하여 제2기 농어업특위가 출범하게 되었다.

제2기 농어업특위는 “농어촌과 도시가 더불어 발전하는 동반성장 구현”이라는 참여정부의 농정 비전을 두고, 선진 농어업의 육성과 농어가의 소득안정, 미래형 농산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으로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중장기 정책방향의 설정, 농어업·농어촌 정책의 점검·평가, 농어업분야의 사회적 통합의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농어촌 실현 등을 중점과제로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2기 농어업특위 주요 실적으로는 참여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된 농업 인력의 정예화, 직접지불제 확충, 농지제도의 개선, 쌀 산업 대책, 농촌사회의 인프라확충 등 5대 농어업과제를 추진하고 점검하는 한편,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방향(안) 마련, 식량자급률 설정방안, WTO/DDA 및 FTA협상의 동향과 대응방안, 119조 투융자 계획의 조정, 농어민 교육체계의 개선,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 활성화 방안,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방안, 가칭 “식생활교육추진법” 제정, 가칭 “수산기본법” 제정, 농산물 관세체제의 중장기 개편방향, 협동조합의 혁신, 남북농업 협력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 제2기 농어업특위 설치기한이 200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의 다자간 무역협상 등에 따

른 국내외 농어업 문제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각계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08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존속기한을 연장(개정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48호)하여 제3기 농어업특위가 출범하게 되었다.

제3기 농어업특위는 2008년 2월 29일자로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농림수산 식품부장관 자문기구로 기관의 성격이 변경되었다. 제3기에서는 장관 자문 기구의 성격에 맞추어 대내외 농수축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방향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시하는 한편, 농수축산인과 정부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그 기본원칙을 두어 운영하였다.

주요 실적으로는 해외 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안) 수립, 농·수협개혁 방안 마련, 정부 보조금 개편방안, 수산증양식 활성화방안, 농산어촌계획 제도의 정립 및 효율화방안, 농림수산분야 바이오에너지 산업화 전략, 지역 그린비즈니스 실천방안, 한·EU FTA 대응전략, 국제 농림수산 ODA사업 전략 마련, 식품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 발전의 조사방안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문과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화훼산업·양돈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 농림수산식품부 긴급 현안과제를 논의하고 한·중 및 한·일 FTA 농업협상 대응전략, 농어촌지역 특화산업 육성방안, 복합(생태·생산·관광)바다목장 조성 등 22개 과제를 분과위별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등 6개 분과위원회(1~5분과위, 해외농수산자원협력특별분과위)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왕성하게 전개하였다.

농어업특위는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3기 농어업특위 설치기한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02년 1월 26일부터 설치하여 약 8년간 3기에 걸쳐 운영해 온 농어업특위의 업무는 종료된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관 유미선)

2. 2008년도 농어업특위 운영현황

가. 본위원회

2008년도 본위원회는 6월 9일 농어업특위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기 본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농어업특위 운영규정 개정(안), 6개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 및 제3기 농어업특위 운영방향 등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운영규정 개정내용은 농어업특위 소속기관 및 구성원 정비 등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 개정내용은 첫째,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분과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하였고 둘째, 분과위원회를 기존 3개분과(농림업, 농어촌, 어업)에서 5개분과(농어업, 농어촌, 식품·외식, 생명·기술, 통상)로 확대·개편하였으며 셋째, 사무국 직원 정원을 20인 이내로 조정하였고 기타, 위원장 직무대행 순서 명확화, 사무부국장 제도 폐지 등이다.

제3기 농어업특위 운영의 기본방향은 농림수산식품부 주요 전략과제 등 부내 정책방향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실효적 정책지원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2009년도 본위원회는 1월19일 농어업특위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농어업특위 주요 활동실적 및 평가, 2008년도 농어업특위 운영현황 및 활동실적, 2009년도 농어업특위 운영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2007년도까지는 농어업인단체 의견수렴, 정부의 정책이나 입법에 반영, 농정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과제의 선행적 연구 및 공론화, 정부 부처간 쟁점 현안에 대한 조정기능 수행 등이 성과로 평가되었고,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어업특위간 업무영역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중복기능 수행에 따른 비효율 발생, 정부와 농어업인단체의 가교역할 및 위원회 정체성확립 미흡 등은 반성할 부분으로 인식을 같이 하였다.

2008년도에는 6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왕성하게 활동하였다. 전체 66

회에 걸쳐 회의를 운영하였는데 본위원회 1회, 분과위원회 46회, 소위원회 17회, 세미나 등 2회 개최하였다.

2009년도에는 위원장, 6개 분과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농어업특위 운영협의회를 활성화하는 한편, 정기적인 분과위원회 외에 워크숍, 세미나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대내외 농수축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자문기능을 강화하여 농수축산인과 정부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보고하였다.

나. 분과위원회

본위원회 하부조직으로 6개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1분과위원회는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농수산물의 유통활성화 및 수출촉진 등 농어업인의 소득·경영안정 관련 분야를, 제2분과위원회는 농어촌지역개발, 농외소득원 확충, 교육·문화·의료 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관련 분야를, 제3분과위원회는 식품산업육성, 안전 등 농식품 관련 분야를, 제4분과위원회는 환경분석, 품목별 기술 등 농림수산 R&D 관련 분야를, 제5분과위원회는 DDA, FTA 협상 등과 관련된 분야를, 그리고 해외농수산자원협력특별분과위원회는 해외 농업개발과 관련된 분야를 다루고 있다.

위원 구성은 1~5분과위원회는 각각 16명, 해외농수산자원협력특별분과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하였다.

2008~2009년도 분과위 및 세미나 등 운영실적

구 분	계	1분과	2분과	3분과	4분과	5분과	특별분과
2008년도	48회(2)	7	9(1)	6	6	8	12(1)
2009년도	54회(9)	7(1)	12(2)	9(1)	12(3)	9(2)	5

※ ()내는 세미나·심포지엄 및 워크숍 개최 실적임.

2008년도, 2009년도는 분과위원회 위주로 활동을 왕성하게 전개하였는데, 특히 세미나·심포지엄 및 워크숍을 11회에 걸쳐서 추진하였다.

1분과위원회에서는 2009년 1월 12일 aT센터에서 『농·수협 개혁 추진방안』 세미나를 주제로 개최하였는데, 농·수협 및 농어업단체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하였다,

2분과위원회에서는 2008년 12월 22일 aT센터에서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활성화 방안』 워크숍(160명 참석)과 2009년 3월 5일 부산 그랜드호텔에서 『수산증양식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120명)을, 같은 해 6월 24일 aT센터에서 『농산어촌계획제도의 정립 및 효율화 방안』 심포지엄(150명)을 개최하였다.

3분과위원회에서는 2009년 10월 29일 농어업특위 회의실에서 『건전한 식생활 문화조성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다.

4분과위원회에서는 2009년 5월 12일 aT센터에서 『농림수산분야 바이오에너지 산업화 전략』 심포지엄(130명 참석)을, 같은 해 7월 17일 서울대 태화산 학술림에서 『농림수산식품 분야 R&D 발전방안』 워크숍을 분과위원회를 겸하여 개최하였으며, 같은 해 9월 24일 강원도 화천군 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지역 그린비즈니스 실천방안』 심포지엄(130명)을 개최하였다.

5분과위원회에서는 2009년 6월 30일 롯데호텔에서 『한·EU FTA 관련 전문가 세미나』를, 같은 해 9월 4일에는 동일 장소에서 『국제 농림수산 ODA사업 관련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해외농수산자원협력특별분과위원회에서는 2008년 12월 22일 aT센터에서 『해외농림수산 자원협력 방안』 워크숍(200명 참석)을 개최하였다.

11회에 걸쳐 추진된 각종 세미나·심포지엄 및 워크숍에서 발표·토론된 자료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진한 의견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였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관 유미선)

제2장 2008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시책 추진

제1절 친환경농업 식품산업 적극 추진

1. 친환경농업의 기반 마련

우리나라의 농약 사용량은 1998년 이후 증가하다가 2002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2008년도에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약 25,000톤이 소비되었다. 전체 사용량은 수도용 농약 사용량 감소에 힘입어 꾸준한 감소추세에 있으나 원예용 농약 사용량은 소득작목 재배 증가 등으로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화학비료 사용량은 성분량 기준으로 1990년 1,104천톤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2001년도에 717천톤에서 2003년도에는 678천톤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2003년 10월부터 추진한 화학비료 판매가격 차손보전 제도의 단계적 감축·폐지에 따른 사전구매 등 영향으로 2004년도에 747천톤, 2005년도에는 722천톤으로 증가하였고 2005년 7월부터 화학비료 판매가격 차손보전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2006년도에는 478천톤으로 크게 감소를 하였으나 2007년도에는 631천톤으로 다시 증가하였다가 2008년도에는 570천톤으로 감소하였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추진을 위해 유기질비료는 2005년도에 70만톤(24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120만톤(420억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도에는 135만톤(47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200만톤(1,160억원)으로 지원을 확대하였다.

우리의 농업을 환경과 조화되며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작물양분종합관리와 병해충종합관리를 통해 화학비료와 농약사용량을 1999~2003년 평균량 대비 2013년까지 40% 감축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06년도에 전국적으로 병해충 관찰포 690개소, 예찰포 151개소를 통한 과학적 정밀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적기에 경제적 방제가 실시되도록 하고,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를 점차 확대하여 농약 사용량을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위한 대농업인 교육도 강화하였다.

또한, 전국 148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토양종합검정실을 통해 토양정밀검정을 실시하여 토양에 부족한 성분만을 시비토록 하고 완효성비료, 주문 배합비료, 저농도비료 등 환경친화형 비료공급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1999년부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급단가는 논·밭의 경우 ha당 유기 392천원, 무농약 307천원, 저농약 217천원이며, 밭의 경우 ha당 유기 794천원, 무농약 674천원, 저농약 524천원을 3년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친환경농업과 농업사무관 조병임, 행정사무관 류성모, 행정사무관 임기창)

2. 고부가가치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판로확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를 육성하고 농업환경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단위 농가에 환경오염경감시설,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시설 등을 지원하고, 농업인들이 쉽게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해 나가고 있다.

1995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은 중소농, 소규모, 대규모 지구로 나누어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단위 친환경농업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해 실천기반 조성에 집중하였다. 1995년~2008년까지 총사업비 2,705억원을 투입하여 948개소를 조성하였다.

또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4,068백만원을 투자하여 병해충종합방제기술과 작물양분종합관리기술을 실천하는 친환경농업시범마을 34개소를 조성하였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은 2004년말 기준 2.5%수준이었으나 2013년까지 10%(저농약제외)로 확대하고 화학비료와 농약사용량을 매년 5% 수준씩

2013년까지 40%감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3년까지 친환경농업지구를 읍·면 1지구조성으로 총 1,500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2004년부터 대·소규모 사업구분을 폐지하고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으로 통합하여 사업지구 여건에 맞는 적정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에는 69개 지구 총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하여,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하였다.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2008년도에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14억원을 조성하여 홍보, 판촉행사 및 학교급식확대를 추진하였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분기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유통실태 및 품질관리 점검을 실시하였다.

친환경농산물의 연중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매취자금 및 유통활성화자금 460억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경기도 광주시에 친환경농산물 종합유통센터를 조성하여 유통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과 행정사무관 임기창, 행정사무관 류성모)

3. 토양개량사업 추진

토양개량사업은 산성토양 개량 및 논토양의 규산성분 공급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07년도 이전에는 4년 1주기로 물량을 확보하여 공급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농가단위 신청제로 전환하고 살포주기도 3년 1주기 공급으로 개선하였으며 100% 보조사업(국고 80%, 지방비 20%)으로 491천톤(규산 289, 석회 202)을 지원하였다.

또한 살포작업 간편화를 위하여 2001년부터 알갱이형태의 입상제를 공급하기 시작하여 2006년도 300천톤에 이어 2007년도에는 337천톤으로 확대·공급하였고, 이중 규산질은 2006년도 240천톤에 이어 2007년도에는 236천톤을 2008년도에는 전량 입상으로 공급하였으며, 석회질은 2006년도 60천

톤에 이어 2007년도에는 101천톤을 2008년도에는 151천톤을 입상으로 공급하였다.

(친환경농업과 농업사무관 조병임)

4. 사료·녹비작물 재배확대

가. 사료작물 재배확대

국내 부존자원 활용 및 조사료 생산확대를 위해 1998년부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2007년까지 청보리 사일리지 제조비, 기계·장비, 종자대, 벧짚처리비 등에 27,14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엔 414억 원을 지원하였다.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의 지원으로 조사료의 저장·운송이 보다 편리해 졌으며, 작업능률 향상과 재배의 규모화가 촉진됨에 따라 국내 조사료 생산·유통이 활성화되어 전체 사료작물 재배면적이 2007년 123천ha에서 2008년 152천ha로 19% 늘어났으며, 청보리 등 동계사료작물 재배면적은 2007년 12.7천ha에서 2008년 23천ha로 44.8% 증가하였다.

아울러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사료비 절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2년까지 조사료 재배면적을 370천ha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논을 이용한 하계작물 재배 확대에 필요한 조사료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이에 따른 품질·안전·유통관리와 지역여건에 맞는 작부체계 개발·보급·육성 등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국산 조사료의 생산·이용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정책과 수의사무관 우만수)

나. 녹비작물 재배확대

유희농경지에 자운영, 호밀, 헤어리벳치 등 녹비 효과가 있는 작물을 재

배하여 토양유기물 함량을 높여 지력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호밀은 사료용으로 사용하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운영, 호밀, 헤어리벤티 등 녹비작물을 과중면적 기준으로 2007년도 134천ha의 재배에 이어 2008년도에는 118천ha 수준으로 추진하였다.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위해 향후 녹비작물의 재배면적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농업과 전산주사 최문환)

5. 환경친화적 축산기반 구축

가. 가축분뇨의 자원화

가축분뇨는 적절하게 관리되고 자원화(퇴·액비)되면 유기물을 다량 함유한 유익한 비료로 이용이 가능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토양의 물리적 성질 개량 등에 기여하며 작물의 증수와 품질향상에 효과가 있다. 또한, 화학비료 사용을 대체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경종농가에서는 가축분뇨 퇴·액비를 토양에 환원하는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시설자금을 지원하되 축사구조와 지역여건에 적합한 처리공법의 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경종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품질이 검증된 퇴·액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농가 스스로 악취 및 파리 등의 제거를 위하여 농장관리, 환경개선제 사용, 분뇨분리 등으로 악취저감을 유도하고 농촌진흥청,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이용과 지도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가축분뇨발효비료(액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액비유통센터(101개소, 2009년)를 지정하여 액비 수거·운반·살포장비 등의 구입을 지원하는 한편, 경종농가의 액비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액비저장조 설치를 지원(2008, 833개소 → 2009계획, 930개소) 하였다.

그리고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 및 자원화 촉진을 위해 '07년부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를 신규 지원(1일 100톤 처리에 개소당 25억원)하고 있고,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친환경인증으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을 신설(2007년 3월)하였으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환경친화축산농장 제도를 도입(2007년 9월) 하는 등 친환경축산 기반조성을 하였다.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 ('07) 5개소 → ('08) 14 → ('09) 20 → ('11.까지) → 70

또한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2007년 6월)을 수립·추진하고, 가축분뇨 퇴·액비 품질기준 등을 설정한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시행 규칙」을 제정(2007년 11월)하였다.

아울러, 환경보전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 증가로 농축산업의 환경측면에서의 역할 부각, 농축산물 구매패턴의 안전성과 품질 중심으로의 변화, 동물복지 요구 등 축산환경의 급변에 따라, 축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자연환경과 조화되고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깨끗하고 가축의 건강성을 유지하며 주변의 경관과 조화되는 축사시설 등 친환경축산모델의 개발·제공으로 친환경축산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친환경축산 표준 모델을 개발 보급하였으며, 농지법의 개정(2007년 7월 4일 시행)으로 농지 내 축사 진입이 용이하게 되는 반면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등 사회적 여건이 환경친화적인 축산을 요구하고 있고, 동물 복지 등 사육환경의 변화, 가축분뇨의 자원화 진전 등에 따라 기존에 제작·보급한 축사 및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를 대체하여 변화된 여건에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설계도 보급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 보급된 표준설계도 중 축사 및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를 수정·개편 및 친환경축산 표준모델을 반영하여 현실여건에 맞는 친환경적인 축사 설치 및 자원화 처리가 가능토록 가변형 축사표준설계도 한우사(육성, 번식), 유우사, 돈사(비육, 번식), 계사(육계, 산란) 등 7종과 돼지사, 통풍식 톱밥발효시설, 교반식 톱밥발효시설(직선형, 순환형), 돼비단여과시설(SCB), 호기액비화

시설, 톱밥깎짚우사의 퇴비사 등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7종을 개발하였다.

그동안 전문가의 평가 또는 검증절차 없이 퇴·액비 생산용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시공함에 따라 가동중단, 불량퇴비 생산 등 다수의 시행착오가 발생하였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축분뇨자원화 시스템을 전문가가 평가·검증토록 하여 그 결과를 농가 등에 제공하여 가축분뇨 자원화의 효율성을 증진시켰다. 평가를 통해 시설설치업체의 시스템 시공 후 농가 사후관리 강화 및 지속적인 기술개발 의욕 고취 등 여건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새로운 시스템이나 업그레이드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저탄소 녹색성장 대비 가축분뇨 산업을 신 성장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10년에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정책과 농업사무관 하옥원)

6. 식품산업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식품산업진흥법이 2007년 12월 27일 공포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동 법률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하여 지체 없이 하위법령 마련에 착수하였다.

우선 시행령 제정안에는 법에서 위임된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과 경비 지원대상 사무, 식품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설립요건 및 의무사항, 구체적인 교류협력 사업의 종류·경비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 식품명인 지정분야·자격요건·지정시 평가사항·지정절차 및 식품명인에 대한 경비 지원범위, 산지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경비 지원범위,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경비의 지원대상, 식품성분표 발간 및 정보제공,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 전통식품품질인증의 대상품목 지정시 고려사항·인증절차 및 표시방법,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요건 및 의무사항, 권한의 위임·위탁 대상업무 및 과

태료 부과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으며, 시행규칙 제정안에는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식품산업 통계조사의 범위, 식품산업 사업자단체의 사업 범위, 식품명인 지정기준, 전통식품품질인증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의뢰 대상기관, 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인증절차 및 표시사항,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우수식품인증 관련문서의 보존기간, 수수료 납부기준 및 표시변경 등의 처분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렇게 마련된 제정안은 입법절차에 따라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령은 2008년 6월 25일, 시행규칙은 2008년 6월 27일 각각 공포되어 2008년 6월 28일부터 모범과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으로 종전에 한국식품연구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던 국가인증제도가 민간기관 인증제도로 전환되고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을 제정하여 2008년 8월 1일 고시하였고,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2008년 12월 19일 고시하였다.

이로써 식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완벽하게 갖추어 졌다.

(식품산업정책과 행정사무관 장명철)

나.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 추진

2008.2월 신 정부 출범과 더불어 기존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수산기능, 식품산업 진흥부분을 통합한 농림수산식품부가 출범하였다. 이는 기존 농어업 생산에만 집중되었던 정책이 푸드 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으로 확장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생산 중심의 농업정책으로는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제대로 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잡다기한 푸드시스템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 농식품부는 식품산업 진흥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2008.6.28일 식품산업진흥법 시행을 바탕으로 식품산업 진흥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2008.11.13일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제시한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였다.

동 대책은 ‘08.3월 업무보고시 식품산업 발전 및 농어업과 연계강화 시책 등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계획을 보고한 이래, 관련업계·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 협의를 거쳐 ‘종합대책(안)’을 마련하여 정책토론회, 공청회, 업계 및 지자체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08.10월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심의 및 부내 정책조정심의, ’08.11월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거쳐 대책을 확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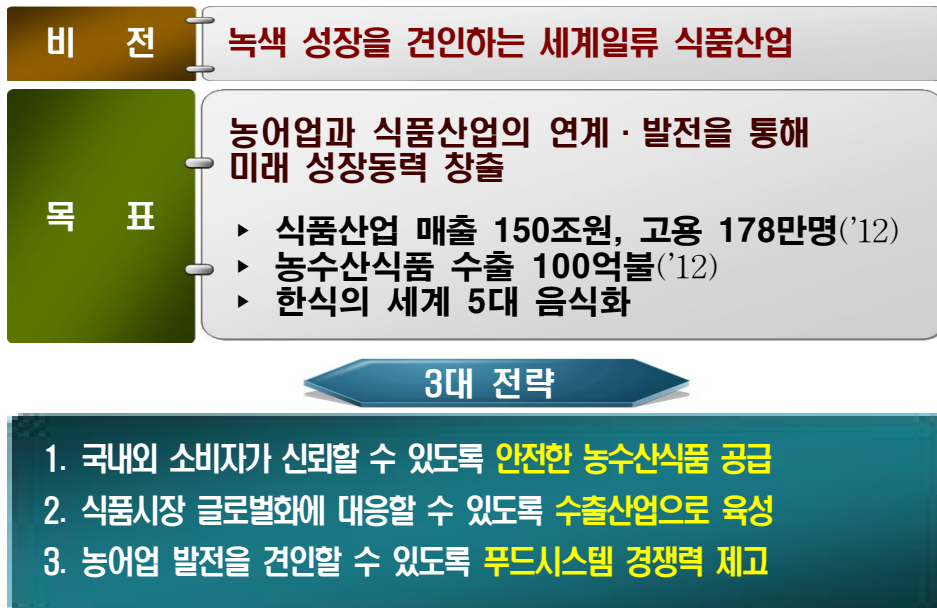
이로써, 기존 규제 중심에서 탈피하여 식품을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은 식품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가 최초로 마련한 중장기 정책이다.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세계 인류의 식품산업 육성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2006년 기준 100조원인 식품산업 매출액을 2012년까지 150조원으로 확대, 38억불 수준인 농수산물 수출을 100억불로 증가, 2017년까지 우리 한식의 세계 5대 음식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략으로는, 첫째 국내외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하고, 둘째 글로벌화되고 있는 식품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식품산업을 수출산업으로 강화하며, 셋째 농어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식재료 산업 등 푸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의 비전, 목표 및 3대 전략을 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①안전한 농수산물 생산·공급 강화, ②식품 R&D 투자 확대, ③전통·발효 식품의 과학화·세계화, ④농수산물 수출 확대지원, ⑤규제혁신·인센티브 제공, ⑥식재료 산업 활성화, ⑦농어업·식품산업 연계 등 7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08.12월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을 토대로 농식품 100억불 수출계획, 한식 세계화 기본계획,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계획 등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되었다.

아직 식품산업 진흥정책이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앞으로 해야 할 과제는 수없이 많을 것이다. 식품업계와 학계, 소비자단체는 물론이고 전 국민이 우리의 식품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실천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협력해 나간다면 머지 않아 세계 일류 수준으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식품산업정책과 기술서기관 전한영)

다. 국가 식품클러스터 조성 추진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농·식품의 해외 의존이 심화되면서 국내 농업 생산은 상대적으로 정체되고 있는 반면, 식생활 소비 패턴이 외식 중심으로 변화해가는 등 식품산업의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¹⁾. 또한 농산물을 가공할 경우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으며, 향후 농업 성장은 식품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새로운 수요 창출이 필요하게 되었다.

시장개방 확대와 산업화로 인하여 우리의 농어업은 10년 이상 성장통을 겪고 있다. 반면 선진국은 농어업에 정보통신기술(IT)·생명과학기술(BT) 기술을 식품산업에 접목하여 자생적 발전과 그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혁신적인 식품클러스터 구축 정책을 통해 자국 농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네덜란드 푸드밸리(Food Valley), 덴마크와 스웨덴에 걸쳐 있는 외레순 클러스터(Öresund Cluster), 미국 나파밸리(Napa Valley),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 클러스터(Emilia-Romagna Cluster)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이들 식품클러스터의 조성 형태는 국가별·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연구개발 기능이 특별히 강조된 점이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식품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식품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낮고, 소수 대기업 외에는 대부분이 영세한 사업체로 자체적인 R&D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마케팅 능력도 미흡하다. 5인 이상 식품제조업체 8.5천개 중 종업원 50인 미만이 92%를 차지하며, 기술 수준도 선진국의 40~60% 수준(국가과학위원회)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1) 농업 및 식품산업 시장 규모(생산액 기준)

- 농림어업 : (2000) 37조원 → (2004) 41 → (2006) 42
- 식품산업
 - 식품제조업 : (2000) 37조원 → (2002) 43 → (2005) 48 → (2006) 49
 - 외 식 업 : (2000) 36조원 → (2002) 40 → (2005) 46 → (2006) 51

이러한 국내 여건과 대외 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식품산업도 혁신적인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시급해짐에 따라 농림부가 식품산업 육성정책을 담당하면서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업과 연계 강화를 위해 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였다.

2007년 11월 ‘클러스터 정책 보고회’에서 ‘식품클러스터 조성방향’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하고 추진계획을 확정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역과 중소 식품클러스터를 이원적(two-track)으로 구축하여 광역과 중소 클러스터의 유기적 연계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되, 광역 식품클러스터는 국가식품클러스터²⁾로 조성하여,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R&D 중심지로 조성하고 중소 클러스터와 네트워킹(Networking)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2007년 12월에는 국가 식품클러스터 조성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5개 시·도)의 신청을 받아,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전라북도를 대상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였다.

2008년 3월 18일 연두업무 보고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2008년 사업추진 계획을 대통령께 보고하였다.

업
무
보
고

- ◆ 국가식품 R&D 허브로서의 국가 식품클러스터를 전북에 조성
 - R&D·생산·유통·수출까지 일관 추진체계를 형성
 - 국내외 식품기업, 연구소, 연구기관 등으로 식품전문단지 조성
 - 기본계획을 수립('08년.), 2012년까지 단지조성 추진

2008년 4월에는 정책수립에 참고할 목적으로 해외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추진하여 농식품부 담당과장, 사무관과 전라북도 도지사, 시장·군수 등 20여명과 네덜란드 푸드밸리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기본계획 정책연구(2008년 5월~12월)을 전라북도에서 발주하여 수행하였으며, 산·학·연 전문

2) ‘국가 식품클러스터’란 국가가 식품산업과 관련되는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 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하고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도록 형성한 집합체를 의미함.

가 세미나 개최(2회), 기본계획 수립 용역기관 협의(14회), 식품업체 의견수렴(20회), 세미나 및 학술대회 발표 및 의견수렴(4회) 등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 용역기관 : 산업연구원 주관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한국식품연구원·전북발전연구원 공동수행

2008년 12월 최종 입지 선정을 위해 전라북도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6개 시·군(고창, 김제, 남원, 부안, 익산, 정읍)이 최종 응모하였고, 민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클러스터 입지선정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12월 26일 전북 익산시 왕궁면 일원을 최종 입지로 확정하였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조성 기본계획은 R&D중심의 수출전문 클러스터를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①전북 익산시 일원 약 400ha 규모로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최소 100개 식품기업 및 10개 민간식품연구소 유치, ②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해 저렴한 토지제공, 운영자금의 저리용자 지원, R&D자금의 우선 지원, 식품연관기업의 유치 등 적극적인 기업유치방안 마련, ③식품단지 내 관리기구인 (가칭)클러스터진흥원과 기능성평가센터, 품질안전지원센터, 패키징센터 등 R&D기관, 임대형공장, 전처리시설, 공동집배송시설 등 기업지원시설의 설립, ④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R&D지원 및 기업지원, 수출지원,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S/W사업 지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식품전문 산업단지는 2010년 준공하여 2012년 착공하고,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식품연구소, 식품관련 대학, 지역농업과 활발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집적효과를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1조68억원(국비 3,446억원, 산업단지 조성 민간예산 포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예산이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으로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2009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였다.(2008.12.31)

2008년 예산(국비 20억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이 한미 FTA비준유

보예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유로, 2008년 한미FTA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용되었다. 2009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예산도 작년과 동일하게 국비 20억원(지방비 50% 매칭)을 확보하였으며, 한미FTA비준 유보예산에서 제외되어 정상적인 집행이 가능할 수 있게 하였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양적 성장에 비해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진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시장개방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농어업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품산업정책과 행정사무관 문태섭)

라. 한식세계화

우리 정부는 2005년부터 전통문화 콘텐츠를 산업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이미지를 고양시키고자 한식(韓食)을 포함한 한(韓)스타일³⁾ 육성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특히, 2006년 6월 국가이미지위원회에서 ‘한스타일육성종합계획’ 중 한식 분야는 농림부가 주무부처로 추진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우리부는 2007년 1월 ‘한식의 세계 5대 음식화⁴⁾’를 목표로 한 한식 세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한국음식 조리법 표준화 및 해외 한식당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일본 실태조사 등 인프라 구축과, 해외 공관과 연계한 식문화 홍보 행사 등을 추진하여 왔다.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가 2월에 출범하였고, 6월 28일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되는 등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조직과 법령이 정비되어 한식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2008년 4월에서

3) 한(韓)스타일(HanStyle)이란 우리문화의 원류로서 대표성과 상징성을 띠며,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가 가능한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음악(국악) 등의 전통 문화에 담겨있는 한국적 양식을 일컫는다.

4) 세계 5대 음식은 일반적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일본, 태국을 일컬으며, 한식은 ethnic food 중 20위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미국 NRA, 2002.)

9월까지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한식 세계화 포럼’을 운영하여, 한식의 세계 5대 음식화를 위한 전략과 세부 실행계획에 대한 자문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한식 마케팅 모형 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한식의 효과적인 해외 진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식 세계화의 비전을 ‘세계인이 즐기는 우리 한식’으로 정하고, 세계 5대 음식화를 위해 해외 한식당 수를 2007년 10천 개소에서 2017년까지 40천개소로 증대하고, 세계 일류 한식당을 2017년까지 100개소를 조성하며, 농식품 수출액을 2007년 38억불에서 2012년 100억불로 증대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2008년 10월 16일에는 국무총리 주제로 ‘한식 세계화 선포식’을 개최하고, 한식 세계화의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한식 세계화를 위한 정부의 추진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였으며, 2008년 12월에는 그간 한식세계화 포럼 및 자문단 회의 등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한식 세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한식세계화추진팀 농업사무관 이정삼)

마. 지역농업클러스터⁵⁾ 사업 추진

기존의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한 평균적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지역에 특화된 농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시스템농업의 구축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서 국가균형발전계획과 농림부의 중장기 농업·농촌 발전계획에 따라 새로운 농업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2004년에 지역 전문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지자체 및 민간클러스터사업단 20개소⁶⁾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5) 개념 : 일정지역의 특화된 농산업과 관련된 주체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가용자원의 최적 이용을 통해 지역농업을 혁신하는 농산업 결집체

6) 20개 시범사업단 : 안성마춤, 포천 전통한과마을, 하이록한우, 백두대간농업포

추진하였고 2008년부터는 22개 사업단⁷⁾을 선정하여 본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은 과거 생산 위주의 농정을 1·2·3차 산업이 융·복합화된 「농산업」으로 전환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유기적 농정시스템을 가동하여, 창조적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클러스터사업의 자립도를 완성시키는 패키지형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분야는 ①산·학·연·관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②생산기반조성, ③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로 구분하여 지원중에 있다.

사업추진 결과 시행주체의 교육활동 및 네트워킹을 통한 산업협력 문화 기반 조성, 농산업화 및 복합화 단계 진입, 수요자 중심의 농림사업 패키지화, 지방농정과 농산업체간의 대화채널 구축 및 정보공유 등의 정책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사업시행주체의 클러스터 개념 이해 부족과 추진체계 구축 미흡, 책임성·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시스템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2007년에 마련한 본 사업추진 방안을 토대로 선정한 22개 본 사업단에 1년차 사업비로 19억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도에 실시한 시업사업단 평가결과를 토대로 18개 사업단에 대하여 사업의 성과 거향을 위하여 41억원을 추가지원 하였고 2개 사업단에 대하여는 지원을 중단하였다.

향후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출범에 따라 식품부문을 중점 육성·추진할 계획이며,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등 정책 Feed-back 시스템

림, 영동포도, 괴산 친환경청정고추, 아산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 한산모시, 장수사과, 정읍환원순환농업, 임실 낙농(치즈), 보성녹차, 함평 과학농업, 전남 친환경쌀, 경북한우, 풍기인삼, 경남친환경쌀, 하동녹차, 경남양돈, 제주 감귤

7) 22개 본 사업단 : 화성 웰빙떡, 강원 영동 한우령, 홍천 늘푸름 한우, 충북 친환경 축산, 서산 생강, 논산 에스민 딸기, 홍성 백년대계 한우, 진안 친환경한방, 무주 반딧불 산머루, 남원 친환경 흑돈, 완주 감, 영암 무화과, 곡성 멜론, 신안 시금치, 구례 산수유, 무안 황토고구마, 경산 종묘, 상주 고랭지포도, 영천 와인, 남해 보물섬 시금치, 경남 서북부 한우, 제주 마(馬)산업

강화와 지역 농산업육성 및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성 제고에도 초점을 맞추어 나갈 계획이다.

(식품산업정책과 행정사무관 문태섭)

제2절 고품질·안전 농식품 공급

1. 우수농산물(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생산기반 조성

선진적인 안전성 관리제도로 도입한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와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의 조기 정착을 위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2006년도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하여 2003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2005년 8월에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였고, 2006년 1월에는 하위법령을 개정하였다. 또한, 미생물·농약·중금속 등 유해물질 관리 기준 등 GAP 재배·관리지침을 96개 품목에 대해 제정하고, 관련제도 운용을 위해 세부기준 및 실시요령을 고시하였다.

2009년도에는 GAP 대상품목을 105개에서 국내에서 식용으로 재배되는 모든 품목으로 고시하였다.

GAP 인증업무를 민간주도로 시행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인증기관으로 43개 기관을 지정하였다. 특히, GAP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수확 후 농산물 처리를 위생적으로 하기 위한 GAP관리시설의 시설기준을 보완하고, 2010년도부터는 작목반이 보유하고 있는 소규모 유통시설에도 GAP시설보완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2009년도 11월 현재 GAP관리시설은 469개 소이며, GAP 인증 참여 농가 수는 27천여 농가가 된다.

GAP제도는 농산물이력관리가 의무화되어 있어, 농산물이력관리시스템(www.farm2table)을 구축·운영하여 소비자가 쉽게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체계화해 나가고, 농업인들에게는 자료 입력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GAP확대를 위하여 GAP 민간인증기관 전담요원 교육을 실시하고, GAP 참여 예정자를 대상으로 농업인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GAP 및 이력추적 관리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관측행사, 신문 등 언론매체 홍보, 지하철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안전위생과 농업사무관 김봉희)

2. 축산물위생·안전성 수준 제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서는 가축의 사육단계(Farm)부터 최종 소비단계(Table)에 이르는 축산물 공급체인(Supply Chain)의 모든 과정에 대하여 각 단계별로 위생·안전관리가 일관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사육에서 최종 판매단계까지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 축산물위생관리 제도개선

축산물의 유통과정에서 재오염 방지 등 안전관리를 위해 1일 평균 8만수 이상을 도축하는 닭·오리 도축장에 대해 시행하던 포장유통 의무화를 2008년 6월부터는 1일 도축두수 5만수 이상인 곳으로 확대하였다. 「축산물가공처리법」에는 「식품위생법」의 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영업형태가 없어 각 유통업체에서 자사브랜드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축산물 가공품이 영업신고 없이 유통·판매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신설하여 신고대상 업종으로 규정하였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 등으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할 때에는 일률적으로 최근 3개월간의 생산 또는 영업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어려움이 발생하던 점을 감안하여 최근 1개월간의 생산 또는 영업실적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HACCP 지정 후

매년 실시하도록 한 정기심사의 신청절차 및 심사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수입축산물에 대한 정밀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식육판매업의 영업자에 대하여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판매를 위하여 부위명, 판매가격 등과 함께 도축장명이 표시된 표지판을 설치하며 표장육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한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축산물가공업을 함께 하는 경우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음식점 영업자가 식육판매점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인 건물이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하였다.

2008년 12월에는 수입축산물의 유통흐름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위해 축산물 회수기반을 보다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식육가공·판매업체에 대해 판매처, 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을 작성, 2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원산지 및 종류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식품접객업 영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하며, 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판매업 영업자에게 개체 식별번호 또는 선하증권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을 일부 개정하였다.

나.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를 위한 HACCP 제도 추진

축산물의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 지정업무를 전담하는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축산물HACCP기준원)’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HACCP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HACCP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2008년 6월 축산물HACCP기준원을 법정 기구로 전환하여 새로이 출범시키는 한편, 심사관 18명을 충원하였다.

도축장 HACCP 제도의 정착을 목표로 2000년 7월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도축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HACCP 제도를 의무 적용하도록 추진하였으며, 2003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소, 돼지, 닭 도축장에 HACCP 적용을 의무화하고 허가관청인 시·도에서 그 적용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07년 7월 1일부터 오리 도축장에 대해서도 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하였다.

HACCP 지정신청 작업장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HACCP 적용작업장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소·돼지 도축장 93개소, 닭 도축장 41개소와 오리 도축장 11개소에서 HACCP을 적용하고 있고, 이와 함께 유가공장 44개소, 식육가공장 169개소, 식육포장처리장 585, 알가공업 16, 식육판매업 92, 집유업 19, 사료업체 76개소, 돼지농장 220, 소농장 118, 닭농장 42개소, 축산물보관장 2개소를 HACCP 적용작업장으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HACCP 지정업체는 총 1,528개소이며 국내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HACCP 제도가 사육단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사육단계에 적용할 HACCP 적용 지침 및 모델 개발노력을 계속하여 2006년 돼지, 2007년 소 사육단계에 이어 2008년에는 닭 농장에 대한 지침 및 모델 개발을 완료하였다.

<표 2-2-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현황

(2008년 12월 31일 기준)

도축장				축산물가공장						기타				
계	소·돼지	닭	오리	계	식육	유(乳)	식육포장처리	알	집유	판매업 보관업	사료	돼지	소	닭
145	93	41	11	833	169	44	585	16	19	94	76	220	118	42

자료 : 농식품부 안전위생과

다. 축산물 수거검사 실시

목표달성 위주의 획일적인 수거검사를 지양하고 위반이 반복되는 품목을 중점으로 지역별·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하였다.

2008년 수거검사 목표는 8,000건을 계획하였으며, 실적은 목표량보다 증가한 12,531건을 검사하였다. 수거대상 품목은 식육·식육가공품·유가공품

등 축산물가공품이 주 대상이었으며, 수거검사결과 총 63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다.

라. 국내 축산물의 잔류물질 검사

국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대상으로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잔류검사를 실시하였다.

잔류물질검사는 크게 잔류조사(Monitoring), 규제검사(Surveillance), 탐색조사(Exploratory)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2008년에 총 150,912건을 검사하여 이중 0.17%에 해당하는 258건이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생산된 우리 축산물은 소비자들이 우선 선택하도록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 추진과정에 소비자단체의 참여확대 등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우리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

(안전위생과 수의사무관 강대진)

3. 농산물 안전성 제고 및 표시관리 강화

가. 농산물 안전성 제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 및 품질향상을 위해 농산물이 생산, 저장,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에 잔류농약, 중금속 등을 조사하여 부적합품은 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토록 하는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199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2007년도에는 186품목 69천건의 농산물을 조사하였고 이중 1,477건이 잔류농약기준 초과 등 부적합품으로 판명되어 폐기 등 조치하였다.

또한, 토양, 용수 등 재배환경의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위해 156건을 조사

한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었다. 폐광산지역 등 중금속 오염 우려지역 6,959 필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하여 납·카드뮴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139건을 전량 수거하여 폐기하였다.

생산자가 스스로 안전 농산물 생산의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221천명의 생산자와 23천명의 관계공무원, 농약판매상 등에 대한 안전성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농산물 안전성 업무에 소비자 참여확대를 위해 농소정협의회를 지역별로 개최하였으며 농소정협의회 회원과 합동실태조사를 300건,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조사를 1,033건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가 우리 농산물 안전성 실태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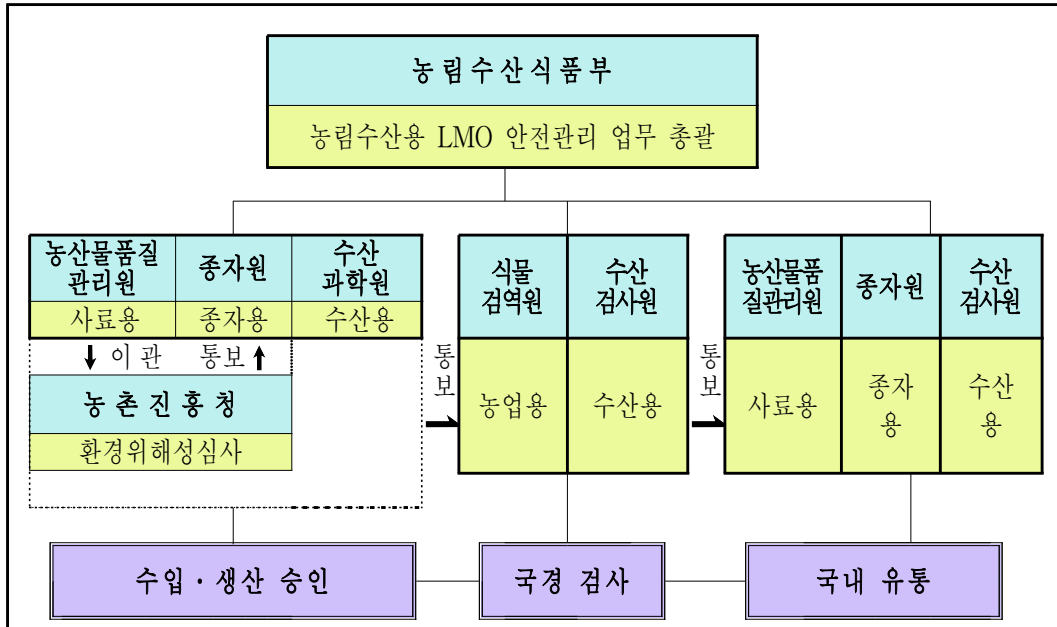
농림부, 농진청, 산하기관, 농협,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등의 전문가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농식품안전종합대책을 지속 추진하였다. 종합대책에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로 부적합품 시장유통 방지, 안전농산물 우대 및 농산물 표시 관리 강화,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소비자 정책참여 기회 확대 등 4개 분야에 대한 추진과제 및 일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종합대책은 중장기 농산물 안전성 대책의 근간이 될 것이며, 향후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안전위생과 수의사무관 강대진)

나. 농림수산물 LMO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2008년 1월 1일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에 수입·생산되는 농림수산물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 LMO)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수산물식품부 소속기관별 소관업무에 따라 LMO 안전관리 역할을 분담하여 연구개발 단계부터 수입·생산 및 국내 유통 단계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농림수산물용 LMO 안전관리체계



사료용 LMO의 국내 비의도적 환경방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NGO단체 등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8개반 27명)하여 2008년 7월 14일부터 8월 8일까지 수입항구·사료공장 주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6개 업체를 적발하였다.

LMO 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관련협회, 유통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지자체 공무원 573명, 한국조리사회중앙회·YMCA 등1,452명)을 실시하고, LMO 표시의 철저한 이행을 위하여 38천여개 업체를 단속한 결과 표시위반 4건을 적발하였다.

(표시검역과 행정사무관 이정길)

다. 원산지 표시관리 강화

원산지표시는 1991년부터 수입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래, 1996년 국내가공품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왔으며, 현재 국산과 수입산의 경우 각각 160개 품목과 국내가공품 211개 등 총 531개 품목에 대해 표시를 의무화하

고 있다.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결과 원산지표시 이행률이 2007년 97.3%에 이르게 되었으나, 조직적 허위표시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한 기획단속 실시, 단속기법 및 과학적 식별방법 개발 등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민간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부정유통 신고망(www.naqs.go.kr)을 구축하였으며, 소비자단체 회원 등 26천명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표시위반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내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소비안전정책과 사무관 문광규)

라. 농산물 안전성 강화로 소비자의 안전 식생활 보장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및 공급을 위해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적합한 농산물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우선, 농가의 농약 안전사용 등 안전성에 대한 인식전환을 유도하여 생산자가 스스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생산자, 관계공무원, 농약판매상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농식품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제도인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를 2003년부터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09년 11월 24일 현재 GAP 인증대상품목은 105개 품목에서 국내에서 식용으로 재배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였고, 인증농가수는 28천 농가이며 재배면적은 3만8천ha이다. 2012년까지 인증농가수는 10만 농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에 농약검출 등 농산물 안전성에 위해가 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추적을 통하여 문제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를 시범사업 및 실무교육 등을 거쳐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09년 11월 24일 현재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의 대상품목은 105개품목에서 국내에서 식용으로 재배되는 모든품목으로 확대하였으며, 참여농가수는 66천농가이다. 2012년까지 10만 농가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부적합 농산물의 시장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주산단지, 도매시장 등에서 시료를 수거하여 안전성조사를 57천건 실시하였고, 그 결과 부적합 농산물은 폐기 및 출하연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안전성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지자체, 도매시장 등에 조사결과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PDA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중이다.

또한 수입농축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단속을 전담하는 「원산지단속 112 기동대」를 운영하고, 실시간 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분석하여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009년 11월부터는 통신판매 농산물(가공품 포함)도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며,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자는 인터넷에 그 정보가 공개된다. 그리고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과학적 DNA분석·정성·정량분석법을 개발하고 지도 및 단속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다.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하는 정기교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였고, 소비자의 농업 현장체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농식품안전자문단을 2003년말 구성하여 소비자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소비안전정책과 사무관 이동식)

4. 가축방역·검역 강화

구제역 방역대책 기본방향은 발생 위험성이 높은 3~5월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강도 높은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을 추진하고, 특별대책기간

종료 후에는 평시 방역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국경검역은 수입건초는 소독 및 검사후 합격품만 반입하였고, 해외여행객 신발소독은 공·항만 입국장의 발판소독조를 운영하여 모든 입국자의 신발소독을 실시하였다. 휴대축산물은 발생국 여행객을 중심으로 탐지견 및 현장검역관 기동배치 등을 통해 검색하고 있다. 또한 휴대축산물의 반입신고 및 자제를 위해 재외공관을 통해 검역안내서를 배포하였고 검역전용전광판 제작·설치 선·기내방송·리후렛 배포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국내방역은 우선 예찰요원을 동원하여 농장예찰 및 혈청검사 실시로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를 확립하였고, 가축질병신고전화(1588~4060) 및 특별대책기간중 상황실을 운영하였다. 또한, 매주 수요일 “전국일제소독의날”을 운영하면서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규모 농가에 대해 소독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축산관련 외국인 연수생에 대하여는 농협에서 명단을 관리하고 지자체 및 검역원에서는 해당농장을 방문하여 방역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지자체는 초동능력 향상을 위해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였고 정기적인 방역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즉, 휴대축산물의 검색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방역상황 점검으로 취약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보완 조치하였으며, 지자체 초동대응능력 향상 등을 통해 2002년 6월 이후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다만, 지자체·농가·축산시설 경영자의 능동적인 방역활동과 지자체의 방역인력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고, 또한 해외여행객 입국자의 편의를 감안하였기에 휴대축산물 검색에 한계가 있었다.

소 브루셀라병 방역대책은 2013년 근절을 목표로 가축시장·도축장 및 문전거래되는 모든 한육우 암소에 대한 검사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하였으며, 1세 이상 모든 암소(연1회)와 수집상·중개상(연4회)이 사육하는 소, 자연교배 수소(연4회)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가축 및 사람 브루셀라병 예방을 위해 홍보리후렛을 제작·배포, 전문지 광고 등 예방수칙을 홍보·교육토록 하였다.

한육우 브루셀라병 발생이 지속적인 방역대책 추진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어 2013년까지 근절목표를 달성하는데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소 브루셀라병 발생 확산방지를 위해서 현재와 같이 지속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돼지열병은 2003년 72건 발생 이후 2004년 9건, 2005년 5건, 2006년 2건이 발생하여 발생건수가 급속도로 감소하였다.

<표 2-2-2>

돼지열병 발생 현황

(단위 : 두수(건))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돼지열병	406 (13)	5,866 (72)	779 (9)	811 (5)	1,074 (2)	58 (2)

앞으로 돼지열병 발생 최소화 및 청정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예방접종명령 위반농가(면역형성률 80%미만)는 과태료 처분과 혈청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항체가가 높은 모돈(감염 의심축)은 조기도태 유도로 감염원을 차단하고, 발생농장에 대하여는 살처분 보상금 차등지급으로 농가의 자율 방역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고, 청정화에 대한 단계적 기반조성을 위하여 밀집지역 농가분산, 친환경 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방역과 수의서기관 김대균)

5. 동물보호·복지대책 추진

개정 동물보호법이 2008.1.27부터 시행되었다. 종전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시행되어 선언적인 법이었으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물보호법을 실행함에 있어 내실을

기하게 되었다.

강화된 주요내용으로는 동물학대를 방지하도록 하기위하여 동물학대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의 시행을 뒷받침하기위하여 2009부터 2013까지 추진하여야 할 동물보호·복지 종합대책을 마련(08.7)하여 시·도에 시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의 보호·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동물학대 감시시스템구축, 반려동물판매업 등록제운용, 동물등록제 운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정책과 실험동물 산업육성을 위한 생산·공급·관리대책 마련 등 실험동물 보호·복지정책, OIE 기준과 부합하는 운송·도축·살처분 관련제정 등 농장동물 보호·복지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동물보호·복지정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TV 프로그램 제작·방영, 2008 동물보호 사랑축제 등을 개최(2008.10.18~19)하는 등 홍보를 중점 추진하였으며, 동물보호단체육성을 위한 워크숍(08.8.5), 동물판매업자(장묘업)에 대한 교육(08.8~10월), 동물보호감시관 교육(08.9) 등을 개최하는 등 교육도 강화하였다.

(동물방역과 사무관 손경자)

제3절 농업구조의 체질개선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

1. 농업구조의 체질개선

가. 영농규모화사업 추진

영농의 규모화·집단화를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업농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경자유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영농규모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비농가나, 전업 또는 은퇴하는 농업인들로부터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도록 하여 이를 다시 젊고 유능한 전업농육성대상자들에게 장기 저리(매매 : 연리 2%, 임대 : 무이자)의 상환 조건으로 매도하거나 임대하여 우리나라의 농업 경쟁력과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8년도 영농규모화사업의 지원규모는 총 5,863ha 3,203억원으로 이중 농지매매가 2,800ha 2,390억원, 농지임대차가 3,040ha 796억원, 농지교환·분합이 23ha 17억원을 집행하였다.

2008년말 현재 쌀전업농(70천호)이 전체 벼 재배농가 857천호 중 8.2%(70천호)의 비중을 차지하는 쌀 전업농들이 전국 벼 재배면적(936천ha)의 36%(336천ha)를 담당하고, 3ha이상 규모 벼 재배 농가 49천호중 쌀 전업농이 45천호(92%)를 차지하여 쌀 산업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3>

2008 영농규모화사업 계획 대 실적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2008 계획		2008 실적		집행율 (B/A)
	면적	금액(A)	면적	금액(B)	
계	6,407	320,500	5,863	320,358	99.9
농지매매	2,882	238,995	2,800	238,995	100
임대차	3,490	79,626	3,040	79,626	100
교환분합	35	1,879	23	1,737	92.4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사무관 정수경)

나. 경영이양직불제 운영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를 촉진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영농규모화사업과 마찬가지로 한국농촌공사를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정 신청일 이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벼농사를 경작하고 선정신청일로부터 3년간 벼농사를 경작한 연령이 63세 이상 69세 이하인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60세 이하 경영규모가 1.5ha이상인 농업인에게 매도·임대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 매도의 경우 최장 8년간 ha당 연간 2,896천원을 매월 분할 지급하고, 임대의 경우 ha당 2,977천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지급상한은 매도 및 임대 이양 각각 2ha까지로 되어 있다.

아울러 한·칠레 FTA 비준시 추가지원 대책에 따라 70세 이상 72세 이하 고령농업인에 대해서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매도·임대 공히 ha당 2,977천원을 1회에 걸쳐 일시 지급해 주고 있다.

한편,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농업부분 보완대책으로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를 확대·개편하기로 함에 대상농지 확대, 신청연령 조정, 지급기간 연장, 지급단가 상향 등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2008년도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의 지원규모는 총 1,885ha, 13,103백만원으로 이 중 매매이양이 234ha, 401백만원, 임대이양이 1,651ha, 4,915백만원을 집행하였다. 1997년부터 2008년까지 78천명의 고령은퇴 농업인에게 1,578억원의 경영이양직불금을 지급하여 고령농업인 1인당 201만원의 소득을 지원하였으며, 쌀 전업농 54.4천명이 고령농업인의 경영이양농지 53.3천ha를 양수하여 쌀 전업농 1인당 약 1.0ha의 영농규모 확대에 기여 하였다.

<표 2-2-4>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실적

(단위 : 명, ha, 백만원)

구 분	예 산		경영이양실적			전업농 지원현황		
	면 적	금 액	인 원	면 적	금 액	인 원	1인당 이양면적	
'06	계	4,818	17,491	5,214	3,709	14,391	4,449	0.83
	매 도	820	1,544	1,014	566	1,011	1,041	0.54
	임 대	3,998	11,902	4,200	3,143	9,389	3,658	0.86
	분할지급	1,111	3,006	1,871	1,019	2,952	-	-
	운영비		1,039	-	-	1,039	-	-
'07	계	2,000	11,263	3,077	2,345	11,263	2,556	0.92
	매 도	500	941	474	246	477	395	0.62
	임 대	1,500	4,466	2,628	2,099	6,178	2,269	0.93
	분할지급	1,931	4,921	2,365	1,334	3,673	-	-
	운영비		935	-	-	935	-	-
'08	계	20,000	30,013	2,185	1,885	13,103	2,285	0.82
	매 도	2,640	2,376	414	234	401	408	0.57
	임 대	17,360	15,624	1,840	1,651	4,915	1,943	0.85
	분할지급	2,173	6,519	2,181	1,446	3,913	-	-
	운영비		5,494	-	-	3,874	-	-

2. 농업생산기반 정비 지속 추진

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과거의 경지정리는 당시의 영농 수단인 경운기 등을 이용한 영농방식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어 필지 규모가 600~1,200평으로 작고, 농로가 없거나 협소하며, 수로가 용수로 및 배수로를 겸하고 있어 대형 농기계 작업과 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업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과거 경지정리된 지역 중 평야부의 집단화된 우량농지 지역을 재정비하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94년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여 예산을 지원했으며 2005년부터는 국

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의 내용은 기존에 경지정리된 우량한 농지를 주대상으로 필지 규모를 3천평 수준으로 대형화하거나, 용수로와 배수로를 신설 및 구조물화하는 등 시설을 현대화하고, 농로는 폭 3~7m로 확장·정비하는 것으로 1994년 가을에 5천ha를 시작으로, 2008년 봄마무리까지 국고 2조 1,703억원, 지방비 6,700억원 등 2조 8,403억원을 투자하여 109천ha를 완료하였고,

<표 2-2-5>

연차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

(단위 : 천ha)

구 분	목 표	2007까지	2008실적	2009이후
사 업 량	151	104.4	4.4	42.2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쌀 산업 여건변화, 농촌·농업에 대한 재정수요 변화 등을 감안하여 기계화·규모화 영농에 꼭 필요한 집단화된 우량농지 위주로 시행하였다.

(농업기반과 시설사무관 유재중)

나. 밭기반정비사업

밭기반정비사업은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가소득 확충을 위하여 생산기반 시설이 취약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암반관정 등의 수원공개발, 농로개설, 밭경지정리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1970년대에는 일부 지역에서 밭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쌀 증산 및 고미가정책 등의 영향으로 우량밭이 논으로 전환되어 밭정비가 정착되지 않았다. 1990년대 들어 국민소득증대와 더불어 식생활이 변화하면서 신선채소, 과일 등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밭작물의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밭기반정비 여건이 성숙되어 1994년부터 전국 단위로 밭기반정비를 시행하게 되었다.

사업 초년도인 1994년에는 국고지원율이 60%로 지방비 부담이 어려운 일부지역에서는 지방비(40%)를 부담하지 못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고, 사업추진방식도 착수 당해년에 완료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고지원율을 1995년에 70%, 1996년에 80%로 상향조정하였고, 사업추진방식도 착수 당해연도 완료방식에서 2개년차 사업완료방식으로 조정하였으며, 밭기반이 정비된 지구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생산유통지원사업 등 관련사업과의 연계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적정한 사업계획 검토, 시설물 활용방안, 영농계획 등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군, 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이 참여하는 사업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으며, 농업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시설물을 관리하며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완료 후에는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조직 구성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밭 관개용수는 기존 저수지와 양수장의 여유수량을 활용하고, 신규 농업용수 개발시에는 발용수를 확보하는 등 지표수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여 지하수 개발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다.

밭기반정비사업은 국민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한다. 또한, 밭작물 생산성 향상과 맛 등 품질이 우수한 밭작물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재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경쟁력 제고, 아름다운 국토공간을 가꾸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요 시책사업의 하나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6>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천ha, 억원)

구 분	총발면적	목 표	2008까지	2009계획	2010이후
사 업 량	712	110	81.9	3.6	24.5
사 업 비		25,794	19,011	990	5,793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업기반과 시설사무관 유재중)

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어촌지역의 도로 확장 및 포장사업은 1970년대 새마을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추진되었으며, 1985년부터는 우리부가 농어촌 소득원도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1990년 12월 지방양여금법, 1991년 12월 농어촌도로정비법이 제정되면서 농어촌 소득원도로사업이 행정안전부(당시 내무부)로 이관되어 1991년부터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권 위주로 추진되어 농로 및 경작로 확·포장 수요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우리부 주관으로 기계화영농에 의한 영농편의 제공과 농산물 품질제고를 목적으로 1995년부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기존의 농로 또는 경작로를 포장 또는 부분적으로 확장을 함으로써 농기계 통행 및 농산물 운반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산단지와 미곡종합처리장 등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유통구조개선에도 기여하였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농업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7>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천km, 억원)

구 분	목 표	2007까지	2008실적	2009이후
사 업 량	35	18.8	1.3	14.9
사 업 비	37,071	19,337	1,319	16,41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업기반과 시설사무관 유재중)

라. 배수개선사업

매년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침수피해를 입는 수해상습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며 2008년에는 2,082 억원을 투입하여 약 3.5천ha를 준공함으로써 2008년까지 총 대상면적 188천ha의 75%인 141.0천ha를 완료하였다. 최근 기상변화로 강수량이 증가되어 침수면적이 늘어나고 있고 설치된 지 오래된 시설은 홍수배제능력이 부족하여 시설개선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따른 사업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표 2-2-8>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ha)

구 분	총대상	2008까지	2009계획	2010이후
사 업 량	188	141.0	4.1	42.9
사 업 비	53,252	31,120	2,135	19,997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업기반과 시설사무관 유재중)

마.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방조제 등이 이미 설치되어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시설 중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영농급수에 지장이 있으며, 재해에 위험이 있는 시설을 보수·보강하여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보수하는 사업이다.

2008년도에는 저수지, 양수장, 방조제 등의 재해취약시설과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수로중 흘수로 되어 있어 유지관리가 어려운 용수로의 개·보수에 4,643억원을 투입하였다. 사업별로 보면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개·보수에 3,823억원,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에 450억원, 지방관리 방조제개·보수에 370억원이 투입되었다.

<표 2-2-9>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지구)

구 분	총대상		2008까지		2009계획		2010이후	
		%		%		%		%
공사관리수리시설	8,769	100	5,808	66.2	82	0.9	2,879	32.9
국가관리방조제	206	100	140	68.0	12	5.8	54	26.2
지방관리방조제	3,284	100	1,253	38.2	63	1.9	1,968	60.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업기반과 기술서기관 전경구)

바. 농촌용수 개발사업

농촌용수개발은 영농에 기본이 되는 물을 확보·공급하는 사업으로서 필요성이 매우 높으며 농업인의 열망도 높은 사업이다. 그러나, 연간 예산지원규모가 실제 소요보다 크게 부족하여 준공이 지연되고 사업효율이 저하

되는 문제점이 있어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시행중인 지구의 준공위주로 사업비를 지원하며 예산규모 확대 등 동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5년 대규모 용수개발의 사업준공(경북 성주, 전북 동화 7,380ha)에 이어, 2008년도 중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 83개 지구에 2,000억 원을 투입하여 10개 지구 2,150ha를 준공하는 등(지표수보강 1,064ha, 소규모용수개발 335ha 준공) 용수부족지역 영농급수에 기여하였다.

<표 2-2-10>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ha)

구 분	총 계 획	2007까지	2008실적	2009이후
대 · 중규모	118.8	64.9	2.2	51.7
소규모	11.0	0.6	0.3	10.1
지표수 보강	31.9	24.0	1.1	6.8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업기반과 시설사무관 신동원, 시설사무관 유재중)

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및 간척사업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은 하천 등 대규모 수계를 중심으로 농업용수 공급,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 등 각종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수자원 확보와 기계화 영농기반구축은 물론, 상습침수를 해소하고 우량농지를 창출하여 영농환경개선 및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1970년에 금강·평택지구를 시작으로 2007년까지 금강, 평택, 계화도 등 25지구 17만 4천ha를 완공하고 현재 13지구 13만 8천ha에 대한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2008년에는 시행중인 13지구에 국고(농특회계) 1,100억원, 농지관리기금 2,951억원 등 총 4,051억원을 투입하여 고흥, 군내지구 등 2개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을 준공하였다.

<표 2-2-11>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추진실적

(단위 : ha, 억원)

지구명	개발면적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규모		
			2007까지	2008실적	2009이후
합 계	137,918	80,754	53,514	4,051	21,284
금 강Ⅱ	43,000	7,216	4,763	470	1,543
미호천Ⅱ	4,430	3,095	2,470	130	315
홍 보	8,100	4,234	3,035	230	709
영산강Ⅲ-1	13,160	4,732	3,539	191	901
영산강Ⅲ-2	7,840	4,016	2,072	270	1,324
영산강Ⅳ	16,730	7,536	1,030	270	6,146
새만금(외곽시설)	28,300	29,490	23,286	1,798	4,406
화 웅	6,212	8,251	4,264	270	3,447
시 화	4,396	4,215	1,373	222	2,406
이 원	1,352	1,532	1,468	49	15
삼 산	398	1,391	1,236	83	72
고 흥	3,100	3,969	3,935	34	-
군 내	900	1,077	1,043	34	-

※ 대단위 15지구, 서남해안간척 10지구 준공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녹색성장정책관

(농업기반과 시설사무관 이형주, 4대강새만금과 시설사무관 한준희)

아.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은 기존의 인력에 의하여 현장위주로 물 관리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중앙관리소에서 원격조정에 의하여 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용·배수 제어시설을 자동화하고 원격조정장치를 설치하는 등 물관리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용수절약 및 물관리비 절감 등 물관리 효율을 높이고 재해 등에 신속히 대처, 농업인에 대한 물관리서비스 개선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며, 2008년도에는 9개 지구에 국고 63억원을 투입하여 1개 지구를 준공하였다.

<표 2-2-12>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 추진계획

(단위 : 지구)

구 분	총대상	%	2008까지		2009계획		2010이후	
				%		%		%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	93	100	14	15.1	5 (13)	5.4	74	79.5

※ 사업량은 완료기준이며, ()는 시행물량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업기반과 기술서기관 전경구)

3. 농업전문인력 육성

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1) 개 요

농가인구의 감소 및 농업생산인구의 고령화로 향후 농업의 지속적 성장 동력확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농업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토지집약적 생산방식에서 벗어나서 기술·자본집약적 생산방식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농업 비즈니스 창출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식과 자본을 갖추고 도전과 열정으로 뭉친 젊고 유능한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농업 분야의 인적자원 개발 및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1981년도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영농종사를 희망하는 청장년을 후계농업인으로 선발하여 영농기반 확보에 필요한 농업 창업자금 및 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특히 45세 미만의 젊은 농업인력을 창업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여 후계농업인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는 잠재농업인력 영농정착을 돕기 위하여 선도농가에 인턴으로 실무연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산업인턴제를 실시하고 있고, 선정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창업농의 영농문제 해결을 돕기 위하여 창업농 멘토제(후견인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2) 2008년도 추진상황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창업 후계농업경영인육성과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구분되는데, 2008년에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은 591명이 선정되었다. 농업계와 비농업계로 구분해 보면, 농업계 141명(23.9%), 비농업계 414명(70.0%), 기타 36명(6.1%)이었으며, 이중 남성이 449명(76.0%), 여성 142명(24.0%) 이었다. 융자금은 392명에게 총 133억원을 대출 실행하였다.

<표 2-2-13>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단위 : 명)

	계	초 졸	중 졸	고 졸			전 문 대 졸			특수전문대			대 졸 이 상		
				소 계	농 업	비 농업	소 계	농 업	비 농업	소 계	한 국 농 업 대 학	여 주 전	소 계	농 업	비 농 업
계	591	8	28	333	56	277	63	25	43	12	5	2	147	53	94
남	449	1	15	240	50	190	50	24	31	11	5	1	132	48	84
여	142	7	13	93	6	87	13	1	12	1	0	1	15	5	10

2008년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은 1,114명이 선정되었다. 농업계와 비농업계로 구분해 보면, 농업계 388명(34.8%), 비농업계 697명(62.6%), 기타 29명(2.6%)이었으며, 이중 남성이 961명(86.3%), 여성 153명(13.7%) 이었다. 융자금은 611명에게 총 261억원을 대출 실행하였다.

<표 2-3-14>

창업 후계농업경영인

(단위 : 명)

	계	초 졸	중 졸	고 졸			전 문 대 졸			특수전문대			대 졸 이 상		
				소 계	농 업	비 농 업	소 계	농 업	비 농 업	소 계	한 국 농 업 대 학	여 주 전 농 전	소 계	농 업	비 농 업
계	1114	3	26	461	73	388	216	65	151	190	182	8	218	60	158
남	961	2	18	375	66	309	192	64	128	177	169	8	197	57	140
여	153	1	8	86	7	79	24	1	23	13	13		21	3	18

창업 후계농업인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가 농업농촌식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창업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면 이들에게는 사업계획에 따라 연리 3%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의 장기 저리로 1인당 2천만원~2억원의 사업비가 차등 지원된다. 신규 후계농업인은 그 선정방식과 지원조건이 창업후계농업인과 동일하며, 사업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2천만원~5천만원 범위의 사업비가 지원한다.

농업인턴제는 만 18세에서 44세 사이의 미취업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인턴 자격으로 선도농가에 가서 현장실무연수를 하면서 영농기술과 경험을 얻도록 하는 제도이다.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는 인턴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월보수의 50% 이내로 연간 600만원까지 지원된다. 2008년에는 191명을 지원하였다.

창업농 멘토(후견인)제는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영농정착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선도농가를 후견인으로 삼아 기술과 경영 등에 대한 조언 및 교육,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창업농을 후견하는 후견인에 대하여 창업농 1인당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2008년에는 106명을 선정 지원했다.

또한,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는 선정된 지 5년 이상된 후계농업경영인 중에서 경영성과 및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게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8년에는 우수농업경영인으로 1,670명을 선정, 292억원을 지원하였다.

3) 평 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통해 1981년부터 2008년까지 약 2조6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우리 농업을 선도할 128천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을 확보하였다. 이들은 우리 농업·농촌의 활력을 높이고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최근 대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단순 자금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 컨설팅,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경영조직과 행정사무관 하경희)

나. 농업법인 육성

1) 농업법인제도

1989년 영농규모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영농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사 육성계획을 농어촌발전종합대책으로 발표하고, 이듬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제정에 따라 법인설립의 법적근거가 마련되면서 농업법인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후, 농업 및 어업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주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규정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그리고 「수산업법」에 규정된 영어조합법인을 각각 통합적으로 정비하고 그 동안 설립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어업회사법인 설립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이 반영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어 2009년 10월 2일자로 시행하게 되었다.

<표 2-2-15>

농업법인제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목적	· 협업적 농업경영	· 기업적 농업경영
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발기인	· 농업인 5인 이상	· 합자(유·무한 각 1인 이상), 합명(2인 이상), 유한(2인 이상 50인 이내), 주식(1인 이상)
의결권	· 1인 1표제(인적 구성) · 비농업인은 의결권 없는 준조합원	· 출자지분(물적 구성) · 비농업인도 의결권 인정
출자	· 농지, 현금, 현물 등	· 농지, 현금, 현물 등
출자한도	· 제한 없음	· 총출자액의 9/10까지 비농업인 출자 가능
농지소유	· 제한 없음	· 업무집행권자인 농업인이 1/4이상인 경우

1994년 농업법인에 농업생산, 가공·유통 기능까지 포함한 생산자조직으로 역할과 기능이 부여되고, 위탁영농회사의 명칭을 농업회사법인으로 개칭하면서 농업법인제도의 체계가 정립되었으며, 1999년 농업·농촌기본법의 제정으로 농업법인 육성 근거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동 법으로 이관 후 최근까지 운영되어 왔으나, 농어업법인을 통합적으로 정비하고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시행(2009.10.2)하게 되었다.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하는 농업인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고,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고자하는 자가 설립할 수 있다.

2) 농업법인 현황

농업법인 수는 2000년 5,208개소에서 2008년 6,306개소로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았으나, 농업법인의 연간 총 매출규모는 2000년 1조 7,003억원에서 2008년 5조 7,901억원으로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농업법인당 자산은 2000년 11억 8백만원에서 2008년 18억 1천만원으로 53% 증가하였으며,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2000년 286%에서 2008년 193.3%로 낮아져 안정성이 증대되었다.

2008년 법인당 출자금은 2억5천만원이며, 평균 출자자수는 17.6명선이고, 농업법인당 평균 매출액은 2000년 5억5백만원에서 2008년 18억1천만원으로 3543%가 증가하였다.

특히, 법인별 당기 순이익은 2000년 5백만원에서 2008년 4천만원으로 8배가 증가하였으며, 2008년 농업법인의 평균 종사자 수는 7.96명으로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 농업법인제도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

농업법인제도는 개별농가의 자본과 기술을 통합하여 규모의 이익을 창출하고, 고품질·기술농업의 실현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 농업경영의 전문화 촉진에 기여하였으며, 법인화를 통해 농업분야에 기업적 경영방식을 도입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과거 농업법인의 지원우대로 정부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 법인을 설립한 후 개별 경영체로 전환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법인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 시행)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등 운영현황을 조사하는 등 현재 동법 시행규칙을 검토하고 있다.

4) 농업경영체활성화 대책 추진

이러한 농업법인이 DDA·FTA 등 개방확대에 대응하여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4년부터 농업경영체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제1차 농업경영체활성화 대책 주요 추진실적>

◇ 법인 성장유도방향으로 세제보완

- 농업법인 창업 후 2년내 취득 농업용 부동산의 취·등록세 면제
- 농지구입 정책자금 이자를 농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
- 농업법인의 농지 구입시 국민주택채권 구입의무 면제
-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업용 창고 등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 5년간(2005~2009) 농업소득세 과세 중단, 2010년 이후 농업소득세 폐지
(정부안, 국회 계류중)
- 친환경 농업용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세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배제

◇ 외부자본과 전문인력 참여 촉진을 위한 진입제한 완화

- 농업법인에 관광사업 허용 등 부대사업 제한 완화(추진중)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인 출자지분과 농지소유제한 완화(1/2 → 1/4)

◇ 기 타

- 농업법인협의체 구성 → 한국농업CEO연합회 설립(2006.3)
- 창업보육센터 권역별 확충(9개소) 및 농업전문투자조합 결성(현재 3-6호
투자 진행 중) 등 농업벤처 육성
- 맞춤형 교육기반 구축 및 컨설팅 지원제도 개선
- 경영회생지원사업 지침 개정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 마련
- 농업회계처리지침 마련, 정보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 중장기 검토(추진 중)

농업인 위주의 농업관련 세금제도를 농업법인의 성장을 제약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농업회사법인에 외부자본과 경영 전문인력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진입제한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창업 및 기업경영의 전 과정에 걸쳐 농업법인의 사업원활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경영조직과 농업사무관 황규광)

다. 신지식 농업인 육성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기술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기로, 농업도 소규모 토지·자본으로 신지식과 기술 및 마케팅을 잘 활용하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농업의 시대이다. 이러한 지식농업 시대의 주역으로서 농업과 농촌의 변화를 주도해 나가고 농업경쟁력 제고함은 물론 농업인의 신지식농업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 1999년에 ‘신지식농업인’ 발굴·육성계획을 수립하여 1999년부터 신지식농업인을 선발해 오고 있으며, 2008년에도 22명의 신지식농업인을 선발하는 등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263명의 신지식농업인을 선발하였다.

지금까지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에 대해서는 ‘(사)한국신지식농업인회’를 통하여 신지식농업인들이 보유한 신기술과 노하우를 농업인에게 확산·보급시키기 위한 기술교육 등을 전수하고 있으며, 미래의 전문농업인인 농과계 학생에 대한 지식농업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신지식농업인의 성공모델을 네트워크화 하여 농업인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2003년부터 포털사이트(www.farmig.com)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지식농업인 홈페이지 운영 및 전자상거래 등을 관리하는 등 신지식농업인에 대한 관련정보를 일반농업인이나 소비자들에게 최대한 제공해 오고 있다.

아울러, 신지식농업인의 영농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제도 발굴은 물론 정부 시책을 수행하고 전달해 주는 농업선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선진농업기반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표 2-2-16>

<1999~2008년까지 작목별 신지식농업인 선정 현황>

계	경 종	과 수	채 소	특 작	화 훼	축 산	가공 및 기타
263명	20	35	36	36	33	52	51

* 신지식농업인의 개념 : 지식의 생성, 저장, 활용, 공유를 통해 농업생산기술이나 농산물 가공·유통 등을 끊임없이 개발·개선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농업·농촌의 혁신을 주도하는 농업인

(경영조직과 사무관 하경희)

라. 농업인 교육훈련

1) 도입배경 및 의의

농촌인구의 감소·고령화 등 농업 인력의 양적·질적 저하가 심각하며, 시장개방 확대 등 농업환경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농업의 핵심역량이 노동, 토지, 자본 중심에서 지식, 정보, 창의성 및 문제해결 능력을 지닌 인적자원 중심으로 변화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전문지식·기술 및 경영혁신 능력을 겸비한 경쟁력 있는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수준별 맞춤형 농업교육 체계 정착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경영수준별 선택이 가능한 교육지원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고, 농업경영체별 수준별 전문농업경영인 교육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였다.

예비농업인력 양성 및 브랜드조직화 등 맞춤형교육도 강화하였다. 농대 영농정착교육과정 및 농고현장체험교육을 현장실습중심 교육으로 강화하고 도시민 귀농교육의 체계화를 위해 귀농실행 단계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브랜드 경영체 임직원·농가교육담당자 등에 대한 농가 기술·조직화교육 등을 강화하였고, 수요기관에서 농업인 해외연수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 전문기관을 확대·지정하였다.

또한, 농업인단체·지역특성화사업단 교육운영 역량 확충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가이드 북 제작·보급, 네트워크 활동 등을 확대 지원하였으며, 에그리에듀넷 서비스 기능 최적화를 지원하고, 교육평가에 대한 평가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추진하였다.

2) 2008년도 추진상황

수요자 중심의 수준별 맞춤형 농업교육체계 정착을 위하여 경영수준별 선택이 가능한 교육지원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고, 농업경영체별 수준별 전문농업경영인 교육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였다.

예비농업인력 양성 및 브랜드조직화 등 맞춤형교육도 강화하였다. 농대 영농정착교육과정 및 농고현장체험교육을 현장실습중심 교육으로 강화하고 도시민 귀농교육의 체계화를 위해 귀농실행 단계별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브랜드 경영체 임직원·농가교육담당자 등에 대한 농가 기술·조직화교육 등을 강화하고, 수요기관에서 농업인 해외연수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 전문기관을 총 13개 기관으로 확대·지정하였다.

또한, 농업인단체·지역특성화사업단 교육운영 역량 확충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가이드 북 제작·보급, 네트워킹 활동 등을 확대 지원하였으며, 에그리에듀넷 서비스 기능 최적화를 지원하고, 교육평가에 대한 평가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였다.

3) 주요 정책 내용

자조금이 조성된 25개 단체 및 비자조금 4개 단체가 품목별 고품질 생산 기술, 안전성 관리, 가공 및 마케팅, 농가 조직화 등 기술경영 혁신역량 제고 교육을 실시하였고, 품목특성 수요를 반영하여 78개 과정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추진하였다. 또한 방역 등의 사유로 현장실습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 동영상 실습교재를 제작하여 지원하였다.

11개 농업인단체에서는 농업인이 개방 등 시장환경 변화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영 및 셀프리더쉽 등 실용교육을 추진하였고, 농업인단체 특성에 맞는 26개 과정의 농가수준별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또한,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고 예산을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고 직불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 집행 원칙을 정착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여성농업인이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하도록 경영혁신·역량개발 교육 및 예산 지원도 확대하였다.

지역농업의 발전 목표와 특성에 맞는 농업경영 및 기술향상 교육, 브랜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역농업 조직화 교육을 2007년도 전국 9개도, 3개 시·군에서 2008년도에는 전국 9개도 6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하였다. 수준별 맞춤형 교육의 단계적 정착을 위해 단기과정을 중장기 과정으로 통폐

합하고, 유사 중복 과정을 대규모 과정으로 통합 운영하였다. 또한, 농촌 결혼이민여성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신규 후계농을 대상으로 농업·농정·경영에 대한 창업농교육을 실시하였다. 주요 교육내용은 농업경영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사업계획을 직접 수립해보는 내용과 비즈니스 시뮬레이션 보드게임 방식 등으로 과정을 편성하여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과정을 포함하였다. 교육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자금 배정한도를 차등화하여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에 대한 해외연수제도를 전면 개선하여 추진하였다. 교육기관이 전문연수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연수기관 지정을 확대하였고, 연수프로그램 운영도 기관·단체에서 농고·농대, 지역특성화사업단까지 확대하여 전문연수기관을 통한 해외연수로 전면 개편하였다.

신규자원 확보를 위하여 농고, 농대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었다. 2007년 현장체험교육 참여 농고 10개교를 2008년에도 계속 지원하여 농고생의 농업에 흥미를 유발하고 농업경영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체험교육을 더욱 확대하였으며 농고생과 선도농가간의 멘토링 실시, 농과대학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관련분야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또한, 농과대 영농정착교육과정을 2007년 7개 대학에서 2008년 11개 대학으로 확대 운영하여 농대 2학년부터 졸업시까지 부전공연계 등을 통해 체계적인 창업준비에 필요한 경영 및 기술교육, 현장실습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귀농단계별 최적의 교육방법을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단계별 귀농교육을 운영하였다. 귀농정보 탐색 그룹인 귀농을 준비하는 도시민을 위하여 온라인 귀농 콘텐츠를 개발하고, 본격적 귀농 준비 그룹 대상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육 중 또는 수료 후 영농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생의 각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e-tutor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 자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농업교육과정 정보 및 농업인 교육이력정보를 한눈에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고도화 및 기능 개선 사업을 확대하였다.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도 강화하여 농업인교육과정은 3일(24시간) 이상 중장기 과정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단기과정은 모니터링에 집중하여 평가의 질을 높여나가고 있다. 농과계 학교교육 평가는 별도로 평가를 하되 교육운영 컨설팅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농식품부는 2007년 130억원에서 2008년 215억원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추진하였다.

4) 평 가

농업인단체 등의 교육 참여 확대로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교육 추진여건이 마련되었으며 문제해결형 기술습득, 농업금융 활용방법, 맞춤형 사업계획 수립교육 등 현장에서 필요한 고품질의 교육내용을 담은 모델이 시도되었고, 현장교육 수요가 교육과정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교육기관의 노하우와 교육기법을 접목하여 교육성과를 높이고, 관광성격이 짙었던 해외연수를 전문연수기관이 계획 수립·사전교육·현지진행까지 일괄 추진하는 체계로 개선하였다

또한, 지역농업교육협력체가 구성되고, 지역단위 교육목표의 공동설정 및 기획기능 수행으로 중복교육이 감소하고,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교육수요조사·기획부터 자체평가까지 교육운영 업무 개선에 큰 기여를 하였다.

(경영조직과 행정사무관 박영근)

마. 여성농업인 육성

1) 개 요

1960년대 이후 진행된 산업화정책으로 농가인구는 급격히 감소하여, 1970년의 14,422천명이 2008년에는 총인구의 약 6.8%인 3,187천명으로 줄었다.

농가여성인구도 1970년의 7,258천명이 2008년에는 1,645천명(농가인구의 51.6%)으로 감소하였다.

<표 2-2-17>

농가인구 추이

(단위 : 천명)

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	14,422	10,827	6,661	4,032	3,415	3,434	3,304	3,274	3,187
남성 (%)	7,164 (49.7)	5,415 (50.0)	3,279 (49.2)	1,972 (48.9)	1,654 (48.4)	1,677 (48.8)	1,607 (48.6)	1,590 (48.6)	1,542 (48.4)
여성 (%)	7,258 (50.3)	5,412 (50.0)	3,383 (50.8)	2,060 (51.1)	1,761 (51.6)	1,757 (51.2)	1,697 (51.3)	1,684 (51.4)	1,645 (51.6)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2005), 농업조사(2008)

이와 같은 농가인구변화에 따라 농업의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의 하나인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농가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토록 할 것인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여성농업인력의 전문화라는 목표 하에 다양한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1999년에는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여성농업인력육성)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여성농업인 육성 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2000년에는 제1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 수립하였고, 2001~2002년에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시행령·시행규칙을 완비하여 여성농업인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으며, 2005년에는 제2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2008년에는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전문인력화, 복지 증진 그리고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이라는 4대 추진과제로 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 주요 추진시책

가) 농가경영협약 보급을 위한 교육 지원

농가경영협약은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가족구성원간의 영농계획의 수립, 노동에 대한 보수, 휴가, 경영승계 등의 내용을 문서로 명확하게 협약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농업경영 참여에 대한 성취감과 만족감을 고취하고 경영합리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성농업인단체를 통해 ‘농가경영협약’을 교육하고 있으며 농림수산물부에서는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138농가가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각종 위원회 및 협동조합 등에 여성의 참여확대

여성농업인의 대표성 확보와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그리고 여성의 관점이 농업정책에 반영되도록 농업관련 각 위원회에 여성참여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농정분야 각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은 1997년 5.1%에서 2005년 30.5%, 2006년 33.1%, 2007년 23.4%, 2008년 27.3%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농업협동조합 운영에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를 추진한 결과, 여성조합원 비율은 2001년 19.6%, 2006년 26%, 2007년 28%, 2008년 29%, 여성대의원수는 2001년 1,924명 2006년 8,530명, 2007년 10,165명, 2008년 10,195명, 여성임원수는 2001년 94명 2006년 348명, 2007년 349명, 2008년 359명으로 꾸준히 확대되었다.

이밖에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촌공사 등 농업관련 국가기관이나 단체에 여성임원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다) 여성농업인단체 지원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 활성화를 꾀하고 농촌지역에서 지도자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여성농업인단체 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매년 여성농업인 단체주관 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농업·농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시·농

촌간 교류사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여성농업인단체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회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2008년 주요 지원내역을 보면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큰 폭으로 확대되어 농림수산식품부 457백만원, 농협 300백만원을 각각 지원하였다.

라)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훈련실시

신기술·신지식농업으로의 이행과 친환경농업의 확산, 유통 및 식품안전을 비롯한 농업관련산업의 발달 등 급속하게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는 농업·농촌발전의 현안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농가인구의 52%에 달하고 농업주종사자의 53%를 차지하는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여성농업인에 대한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능력 정도는 개인 뿐 아니라 국가의 농업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준이 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농협 등 농업관련기관의 주관으로 영농에 필요한 각종정보를 활용하고 스스로 체계화 할 수 있는 정보화 교육 28,217명, 농업경영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전하기 위한 경영혁신 및 리더십교육 3,285명,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300명을 실시하였다.

특히, 2002년부터는 여성농업인 교육훈련에 관심과 자질이 있는 여성농업인 또는 관련단체 지도자를 대상으로 농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강의기법 등의 교육훈련을 통하여 창조적 실천력을 갖춘 여성농업인 전문강사요원을 양성하고자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농업연수원에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은 지도력개발과 직업능력강화과정으로 나뉘어 동일인을 대상으로 연중 2박3일씩 총 6회에 걸쳐 합숙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2년 24명, 2003년 22명, 2004년 19명, 2005년 23명, 2006년 25명, 2007년 23명, 2008년 21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여 현장의 여성농업인 강사요원으로서 폭넓은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분야별, 수준별 맞춤형 전문교육을 강화하고자 「여성농정위원」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2005년 30명, 2006년 40명, 2007년 23명, 2008년 19명의 여성농업인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마) 후계여성농업인 육성 및 해외연수 실시

젊고 유능한 여성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전문직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농업에 종사하여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도록 1992년부터 후계여성농업인을 선발하였으며, 2008년까지 총 7,875명의 여성농업인 후계자를 선발하였다.

2004년부터는 창업농 지원사업으로 개편하고 대상자 선정 시 여성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여성신청자 우대장치를 마련하여 여성인력 유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296명의 여성 창업농 후계농업인이 선정되었다.

한편, 선도 여성농업인으로 하여금 선진농업국의 영농기술과 경영기법 등을 체험하게 하여 국제적 안목을 증진시키고 국내 농업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여성농업인 해외연수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08년에는 여성농업인단체 소속 85명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유럽 등 선진농업국 해외 연수를 실시하였다.

<표 2-2-18>

연도별 후계여성농업인 수

(단위 : 명)

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7,875	213	267	442	595	707	823	1,011	980	859	462	339	264	147	158	144	168	296

* 2004년 이후는 창업농 후계농업인

바)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환금성이 높은 원예작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농가에서의 재배가 확대됨에 따라 원예작물 재배분야에서 여성농업인의 노동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여성농업인의 노동부담을 완화하고 영농의

효율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농작업 환경의 과학화와 자동화가 추진되고 있다. 특히, 여성농업인의 노동의존도가 높은 밭농사에서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개발·보급은 여성농업인의 영농의지를 높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여성농작업의 기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2008년에는 과채류 접목로봇, 채소정식기 산업화 및 양과정식기, 오이 캡 해제장치 등 3종의 여성친화적 농기계를 개발하는 등 2001년부터 총 44종의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개발하고 33종에 대하여 현장점목시험을 실시하였다.

<표 2-2-19>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실적

(단위 : 종)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현장점목 시험	농기계 개발	현장점목 시험	농기계 개발	현장점목 시험	농기계 개발	현장점목 시험	농기계 개발	현장점목 시험	농기계 개발	현장점목 시험	농기계 개발	현장점목 시험	농기계 개발	현장점목 시험	농기계 개발		
33	44	5	8	7	12	4	5	5	3	4	2	4	7	2	4	2	3

(농촌사회과 행정사무관 김일상)

사)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어촌의 고령화·과소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어업인의 영유아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여 젊은층의 농촌거주 유도 및 지역사회 활력유지를 위해 2004년부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농촌지역의 열악한 보육여건으로 인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2006년부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추진하였는데 2008년도에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였다.

지원대상은 농지소유규모 5ha 미만인 농어가로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의 영유아(0~5세)로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는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료 단가의 70%(만 5세 100%)를 지원하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 단가의 35%(만5세 50%)를 지원하였다.

2008년도 지원실적은 시설이용료 지원의 경우 40천명에게 627억원(지방비 포함)을 지원하였고, 시설미이용 양육비 지원의 경우 26천명에게 360억원에 달하여 총 지원인원은 66천명, 지원액은 988억원(지방비 포함)이었다.

<표 2-2-20>

연도별 영유아 양육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천명/월)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지원액		29,204	38,308	63,224	85,946	98,824
지원인원		27	30	46	57	66
시설 이용	지원액	29,204	38,308	43,998	55,658	62,744
	지원인원	27	30	33	35	40
시설 미이용	지원액	-	-	19,226	30,288	36,080
	지원인원	-	-	23	22	26

* '06~'07년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은 분리운영되었으나 '08년부터 통합

(농촌사회과 서기관 박성우)

바. 농업벤처 육성

농업벤처는 농림업, 농업 전후방연관산업 및 농촌과 관련된 분야에서 농업생명공학기술 등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한 고위험-고수익의 중소형 모험기업으로서 생산성제고 및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 창출 등을 통해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업관련 산업의 발전 및 농업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농업벤처를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2001년에 농업벤처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전문펀드 조성, 농업벤처창업 보육센터 지원, 농업벤처창업경연대회 지원 등 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1) 2008년도 추진상황

정부와 민간이 공동출자하여 2001년(100억원, 1호 조합)과 2002년(80억

원, 2호 조합)에 이어 2006년에 농업전문투자조합 3호(100억원)를 결성하였으며, 2007년에 농업전문투자조합 4호(200억원), 2008년에 농업전문투자조합 5호(200억원)를 각각 결성하였다. 특히 1-2호는 청산이 완료되었고 이 중 2호 투자조합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농업벤처에 투자하여 147%(117억원)의 이익을 창출해 농업부문의 성장발전에 기여함으로써 향후 농업펀드 확대를 통한 농기업 기반조성과 투자 분위기 확산이 기대된다. 또한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9개소의 운영을 지원하였고, 지식농업실현 제7회 농업벤처창업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창업아이템 10점을 선발하여 시상한 바 있으며,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 보육센터 확충(권역별 9개소)을 목표로 시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1차로 서울대, 한농대, KREI, 경상대('06), 전남대('07)에 농업특화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중이며, 2009년에 나머지 강원대, 상지대, 충북대, 제주대가 개소하게 되며, 전국의 권역별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구축이 완료되어 벤처기업농 등의 농업벤처 창업 및 활성화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표 2-2-21>

제7회 농업벤처창업경연대회 수상작

구분	성명	아이템명
최우수상	이현욱	새송이버섯 부산물을 이용한 미백기능성 화장품 개발 및 상품화
우수상	조현국	다래와인, 터널, 관광의 연결을 통한 마케팅
	우태하	씨앗 스티커(종자 스티커: Seed Sticker)
	이영재	과일퓨레
장려상	노남두	효소보존형 농산물 건조가공기술을 통한 메디푸드 제품개발
	권도영	껍질째먹는 알로에사포나리아 기능성 식품개발
	임주완	마술장미
	이승현	우리 쌀과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gluten-free bakery 개발 및 우리 농산물 냉동쿠키생지 개발
	김철홍	산삼배양근 배양액과 토양 유용 미생물을 이용한 식물병 및 바이러스 병 방제 기술
	양재열	흑도라지

(경영조직과 농업사무관 황규광)

사.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농업경영의 상업화·규모화·전문화로 인한 농업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농축산물 생산 중심의 지도사업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부합하고, 개별농가 특성에 맞는 경영개선의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1999년부터 민간컨설팅 회사를 통한 농업분야 컨설팅제도를 도입하였다. 컨설팅사업은 민간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농가의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영능력을 향상시켜 농가의 자력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표 2-2-22>

경영컨설팅사업비 지원현황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사업량(개소)	220	441	553	759	847	870	1,000	1,009	1,080	1,250
사업비(백만원)	1,710	3,388	4,427	5,586	5,696	6,550	8,000	8,640	8,640	9,750
국 고	671	1,227	1,499	1,676	1,709	1,965	4,000	4,400	4,400	5,000

1) 2008년도 제도개선 내용

2008년에는 사업대상자를 친환경농업 경영체까지 확대하고, 풀벌 사육농가도 포함하는 등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무농약·유기재배로 인증받은 농가와 풀벌 200군 이상 사육농가까지 신청자격 부여

선정우선 1순위에 고품질교육과정을 이수한 여성농업인을 포함하여 여성농업인을 컨설팅대상자로 우대하였다

- * 대상과정 : 여성농업인 비즈니스 아카데미과정, 농업경영인 MBA과정

2008년부터 컨설팅 참가 농가 중 20%를 선정하여 컨설팅 전후 소득증가율을 조사하고, 컨설팅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컨설팅업체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하여 인증받지 아니한 업체에 대한 하청금지, 외부 컨설턴트 추가등록시 우리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컨설팅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농가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농가 및 컨설팅업체의 책임의식 제고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07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바우처 쿠폰제를 2008년에는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쿠폰제 실시와 함께 지자체의 컨설팅업체에 대한 인감증명서 등 과도한 증거서류의 제출을 자제하도록 하였다.

- * 시·군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 쿠폰을 지급하고, 농가는 컨설팅 서비스 희망업체를 선택한 후 쿠폰과 자부담(계약금)을 업체에게 지급
- * 업체는 농가로부터 받은 쿠폰(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시·군에 컨설팅 서비스 대가를 요구

아울러, 사전 교육을 통한 컨설팅 효과를 높이고 농업정책 및 관련 사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APC·RPC는 우리부에서 선정하였으며, 일반 경영체는 현행대로 시·도(시·군)에서 선정하였다.

또한, 컨설팅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6년에 인증받은 업체에 대하여 2년간의 실적을 평가하여 재인증을 실시하고, 새로운 업체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8년도 컨설팅업체 인증을 실시하였다.

- * 컨설팅업체 인증 : 우리부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컨설팅업체의 신청을 받아 평가기관의 평가,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증
-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컨설팅 업체 Pool을 게시하고, 농업인은 이 컨설팅업체 Pool에서 희망하는 업체를 선정, 계약체결 및 컨설팅 실시

(경영조직과 전산사무관 이천순)

제4절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1. 농업관측제도 기능 강화

농업관측사업은 1999년 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농업관측정보센터」를 설치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0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동 센터를 농업관측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고, 2006년 12월 7일 동법 제5조 제3항에 농업관측사업의 지원근거가 규정되었다(2007년 1월 3일 공포).

동 사업은 농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농업생산액중 비중이 높고, 가격 변동폭이 큰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재배(의향), 작황, 생산, 출하, 재고, 수출입 등 국내외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측·분석하여, 시장 수급과 가격 동향 및 예측정보를 제공한다. 농업관측정보는 농업인들이 생산계획 단계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자율적으로 영농의사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한편, 유통·가공업 종사자 및 소비자에게는 종합적인 수급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농산물 거래와 소비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1999년 9개 품목으로 출발한 농업관측사업은 이후 지속적인 관측수요 증대에 따라 관측 대상품목이 확대되어 2009년 현재 총 29개 품목에 대한 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품목류별로 채소 10개, 과일 6개, 과채 6개, 축산 5개, 곡물 2개 품목 등이다.

생산·유통정보와 함께 소비정보 제공을 위하여 품목별로 연 4회 실시하던 소비자패널(1,000명) 조사를 2008년 부터 15회 실시하고 있고, 쌀 POS 데이터를 분석하여 소비자 정보를 관측보로 제공하고 있다. 해외정보 수집에 있어서도 급변하는 해외시장 환경 반영을 위해 중국 뿐 만 아니라 미국, 칠레, 일본, 호주, 프랑스 등 총 7개국에 44명의 모니터 요원을 두고 주재국의 생산, 유통, 가격 정보 등을 수집해서 집중적인 분석을 거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교역량이 급증하는 중국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에 중국농업부 정보센터와 MOU를 체결 하고, 2005년 9월부터 중국 도매시장의 주요 농산물 가격정보 등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있다.

2006년 12월에는 중국농업부 정보센터간의 MOU를 갱신하여 곡물류 품목 추가 및 관련 중국통계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2009년 12월 중국농업부 정보센터와의 MOU 기한 종료에 따라 추가적인 연장갱신을 앞두고 있다.

농업관측정보센터는 주요 농축산물 수출국가의 생산, 유통, 수출 동향 뿐 만 아니라 농업 및 농산물 관련정책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도록 관측체계를 정비하고, 더불어 관세청의 수출입정보를 실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정보 관측기능을 강화하였다.

수집된 농업관측정보에 대한 가공·분석 능력 향상을 위하여 2007년부터 농축산물 정보가공시스템을 보강하고 있고, 2008년에는 주요 청과물의 계절별 생산·공급 모형을 보완해 왔으며, 미국 미주리대학 농업정책연구소(FAPRI)와 공동연구로 개별 품목의 품목별 수급모형(KREI-COMO)을 개발하였다.

한편, 농업관측의 고도화 및 정밀화를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관측정보 제공시스템을 개발⁸⁾, 주산지 정보를 그래픽 위주의 지리정보와 연동하여 현행 텍스트 방식보다 쉽고 직관적인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측정보에 대한 활용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매월 수집·분석된 관측정보는 품목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및 지역자문회의와 품목팀의 세밀한 검토를 거쳐 정기적으로 관측보(월보·분기보)에 담아 발간하고 있다. 관측보는 주산지 작목반, 표본농가, 지역모니터, 생산자단체, 도매시장, 농업전문지, 인터넷, 농업관측 홈페이지 등에 제공되고 있다. 2009년에는 주산지 속보 11회를 포함하여 총 62회의 관측보를 제공하였다. 관측정보 제공면에서 기존 소극적인 배포방식에서 벗어나 찾아가는 관측정보 서비스로의 발전적 추진을 위해 'e-농업관측'를 작성하여 매월 4만명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관측의 핵심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월 1,500여명에게 농업관측알림(휴대폰 SMS)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매년 연초(1월말)에는 농업전망대회를 개최하여 농업인, 관련단체, 학계,

8)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하여, 도매가격 및 산지가격 정보(2006), 수출입정보(2007), 저장정보(2008) 등을 연차적으로 제공해 오고 있다.

관련 유통업체 등이 참석하는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해오고 있다. 농업관측 정보센터가 주관 개최하는 농업전망대회는 한국농업부문 최대 행사로 명실상부한 위상이 정립되었다. 2009년 1월 개최된 대회에는 ‘한국 농업·농촌, 도전과 새로운 희망’ 이라는 대주제하에 1,500여명이 참석하였고, ‘2009 한국 경제전망과 농업’ 등 총 36개의 소주제가 발표되었다.

농업관측사업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농업인의 인지도는 84.8%로 매우 높은 반면, 소비자의 인지도는 45.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조사에 응답한 소비자 중 90.6%가 소비관측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소비자들이 소비관측사업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업인의 55.3%, 소비자의 71.8%가 현재의 관측정보를 신뢰한다고 응답하였고, 현재 제공되는 농업관측정보에 대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⁹⁾

2009년 시범으로 실시한 「소비관측」을 더욱 확대하여 2010년부터 소비관측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소비지 시장가격, 소비의향량 등 소비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시행된 농업관측정보는 단기 시장유통물량 조절에 초점을 두어 생산단계 규모조절 기능이 미흡하였다. 기존 관측의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식 또는 입식 3~4개월 전에 미리 수급 및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중기선행관측사업을 2009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2009년 하반기 양파와 월동배추를 대상으로 중기선행관측 시범사업이 계획되었고, 2010년 1월부터 양파, 배추, 무, 대파, 돼지고기, 닭고기 등 총 6개 품목을 대상으로 중기선행관측이 본격 실시된다. 중기선행관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중기선행관측 대상품목에 대해 작형별 월별 수급모형이 구축·운영되고, 경제내외적인 변수들을 종합분석하여 조기에보지수를 개발·제공하게 된다. 조기에보지수는 정식 또는 입식 3~4개월전에 제공되는 것으로 예측가격이 어느 단계에 있는 지를 제시한다. 조기에보지수는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 등 5단계로 구분·제공된다. 중기선행관측은 시장 유통물량 뿐 만 아니라

9) 농업관측사업 평가 및 중장기 발전방안(2008년 8월, 서울대학교)

생산규모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업관측사업이 농축산물 시장 수급안정 및 관련 정책 수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관측 대상품목은 2009년 말 현재 총 29개이나 2010년부터는 생산자 및 정책적 수요 증대에 따라 버섯과 오리 2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31개 품목에 대한 관측을 실시한다. 「주요 25개 농수산물 생산·유통구조 개선대책(08.12)」 추진의 일환으로 버섯과 오리 2개 품목이 추가로 관측된다. 「버섯관측」은 양송이와 느타리를 분류하여 관측하고 「오리관측」은 육용오리 생산수수 및 사육수수, 가격동향과 전망 등을 관측체제 구축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관측보가 발표된다.

농업관측사업은 농축산물 시장이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전문가 양성과 심도있는 현장분석을 통해 더욱 정밀하고 유용한 농업관측정보를 제공해 나아갈 계획이다.

<표-2-2-23>

2010년 주요 농축산물 부류별 관측정보 발표시기

부류별	해당 품목현황	발표시기	
		시점	일
양념채소류 (5개)	고추, 마늘, 양파, 파(대파, 쪽파), 풋고추 (중기선행관측 : 양파, 파)	3 ~ 12월	1일
엽근채소류 (5개)	배추, 무, 감자, 당근, 양배추 (중기선행관측 : 배추, 무)	3 ~ 12월	1일
버섯관측(신규)	양송이, 느타리	8 ~ 12월	1일
과일류 (6개)	사과, 배, 포도, 감귤, 단감, 복숭아	5 ~ 12월	10일
과채류 (6개)	오이, 수박, 참외, 호박, 토마토, 딸기	3 ~ 11월	"
축산물 (6개)	한육우, 젓소, 돼지(중기선행관측), 산란계, 오리(신규)	2, 5, 8, 11월	25일
	육계(중기선행관측)	2 ~ 12월	"
곡물류 (2개)	쌀, 콩	1, 5, 8, 11월 쌀 속보 9, 10월	15일

(정책통계담당관실 통계사무관 권영욱)

2. 마케팅지향형 산지유통 혁신

가. 공동마케팅조직 등 산지유통주체 육성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 전자상거래 등 신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지유통 주체의 규모화, 전문화, 브랜드화가 절실하다.

그 동안 정부는 산지유통전문조직을 육성 지원하고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는 등 마케팅의 규모화·전문화에 역점을 두어 2008년까지 산지유통전문조직 294개를 선정하였고 산지유통시설 APC 276개소를 지원함으로써 산지유통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상당수가 지역조합단위 소규모 판매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경영면에서도 마케팅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상품화·브랜드화·고정거래처 확보 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농산물유통의 근본문제인 산지유통조직의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규모화된 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시·군단위 이상 농가를 조직화하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 연간 1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공동마케팅조직을 2005년부터 2013년까지 80개 조직을 육성할 계획이다.

2005년도에 최초로 9개 조직, 2006년도에 6개 조직, 2007년도에 4개 조직을 선정하였으며, 2008년의 경우 공모를 통해 신청한 조직(16개)에 대해 농가조직화, 사업규모, 브랜드 능력, 경영성과, 향후발전계획 등에 대한 현지 심사와 평가를 실시한 후 관계전문가로 구성·운영되는 산지유통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13개 조직을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선정하였다.

공동마케팅조직은 기존 산지유통조직에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 광역화된 사업권역, 회원제 생산·출하관리 등 차세대 기업형 마케팅조직으로 육성해 가고 산지유통전문조직은 매년 매출규모,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를 분석, 농협군과 법인군으로 분리하고 상대평가하여 A~F등급(6개 그룹)으로 구분,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리를 1~3% 차등화하고 우수조직은 무이자 인센티브자금을, 하위 10%의 부진조직은 자금회수 및 사업 참여제한 등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 선택과 집중의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조직유형별 공동마케팅선정조직

선정연도	합계	거점산지조직형(6)	사업연합형(14)	전문마케팅법인형(12)
2005	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천농협(합병조합) ▪ 대관령원예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성(조합법인) ▪ 나주(조합법인) ▪ 합천(유통회사) ▪ 햇사레(조합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맛젤영농조합 ▪ 농업회사 팜슨 ▪ 농업회사 농산무역
2006	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주원예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조합법인) ▪ 부여(조합법인) ▪ 여주(농협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회사 통통 ▪ 풀빛 영농조합
2007	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감귤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창(농협연합) ▪ 진주(농협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후레쉬영농조합
2008	1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천농협(합병조합) ▪ 대관령원예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성(조합법인) ▪ 나주(조합법인) ▪ 합천(유통회사) ▪ 햇사레(조합법인) ▪ 경기농협(농협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회사 팜슨 ▪ 농업회사 농산무역 ▪ 얼음골유통영농조합 ▪ 참다래유통영농조합 ▪ 농업회사 매봉 ▪ 신미네영농조합

아울러, 2004년 농협법 개정을 통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선정된 농협연합사업단에 법인화를 의무화 하고, 실질적인 경제사업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공동마케팅조직의 규모화·조직화가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2008년도 선정된 13개 공동마케팅조직에 대해서는 3년간 용자 1%의 유통정책자금(148,638백만원), 1년간 무이자인센티브(22개 조직 55,362백만원), 홍보 및 브랜드 개발지원(16개 조직 256백만원)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공동선별비 보조(40~50%), APC시설보완 사업자 우선선정, 공동마케팅조직 회원농가에 대한 농업종합자금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또한, 산지유통혁신을 위한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케팅 전문화를 주도할 유통인재 활용을 촉진하고 수확후 관리기술도 적극 개발하여 APC 등에 보급하였으며, 공동마케팅조직 및 산지

유통전문조직에서 농산물 판매·유통·품질관리 등 경제사업에 종사하는 품질관리사에 인센티브를 지원(191명 13,500백만원)함으로써 농산물 품질·유통관리 인력에 대한 사기진작과 경제사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유통인재 양성을 위한 「농산물 유통전문교육과정」을 지방대학과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교육원 등에서 저온저장, 브랜드 개발, 안전성 관리, 물류개선, 수출마케팅 등 유통단계·분야별로 특화된 3~9개월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품목별 수확후 관리기술 매뉴얼을 개발하여 사이버컨설팅도 지원하였다.

공동마케팅조직이 활성화되면 단순 공동판매에서 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산지-소비지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담당할 책임 있는 거래 주체로서 우리나라 농업경쟁력과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통정책과 행정사무관 고경만)

나.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지속 추진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유통능률 향상, 공정한 거래 실현을 위해 농산물 표준규격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농산물 생산자 등이 표준규격에 맞는 농산물을 출하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포장재비를 지원하여 농산물의 포장화율 및 표준규격출하율이 향상되고 농산물 상품성도 향상되었다.

농산물 포장화율 및 표준규격 출하율

	1998	2004	2005	2007
포장화율(%)	17.1	50.4	54.5	73.6
표준규격출하율(%)	75.1	85.4	87.8	92.9

2002년부터 농산물 산지의 규모화를 통한 물류효율화 및 균일화된 농산물 출하를 촉진하기 위해 농산물을 공동선별·공동계산·공동출하 산지유통

전문조직, 공동마케팅 조직을 대상으로 공동선별비를 지원하여 공동선별 물량이 2002년 158천톤에서 2007년에는 391천톤으로 늘어났다.

<표-2-2-24>

공동선별물량 및 지원현황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공동선별물량(천톤)	158	227	273	306	353	391
공동선별비 지원(억원)	24	34	50	70	83	98

2007년도에는 배추·무의 상품성 향상, 투명한 거래, 공영도매시장 환경개선 등을 위해 생산자단체 및 농가, 산지유통인에 대하여 포장유통을 지원하고 공동선별·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 공동출하·공동계산한 산지유통전문조직 및 공동마케팅조직에 대하여 선별비를 지원하였으며, 출하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배추·무를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포장재비를 집중 지원하였다.

2007년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지원규모는 452억원으로 122여개 품목에 대하여 공동선별비 및 포장재비를 지원하였으며, 2007년말 현재 73.6% 수준인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율을 2013년까지 80%수준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소비안전팀 행정사무관 강경란)

3. 농산물 물류혁신 및 도매시장 운영효율화

정부에서는 농수산물 산지의 생산자들이 조직화되고 대형유통업체가 등장하는 등 유통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도매시장 법인의 환경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매시장 법인간 또는 시장도매인간 인수·합병의 근거를 마련하고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수탁거부금지 규정을 완화하며 도매

시장에 출하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2007년 1월에 개정 공포하였으며 2007년 7월에는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였다.

또한 개정된 농안법에 따라 안정사검사도입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를 거쳐 '08.10.15일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였다. 동 시행규칙의 안전성 검사기준 및 방법은 개설자가 검사체계, 검사시기와 주기, 검사품목, 수거서류, 기준미달품의 관리방법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번 농안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에는 규제완화를 위해 중도매인의 허가시 제출서류 간소화, 경매사 임면신고 기간 완화,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의 중개수수료 한도 폐지 등 규제완화 내용도 포함되었다.

또한 2009.1.1부터 도입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자 신고제 도입을 위해 「출하자신고 시스템」을 개발하여 출하자의 신고를 돕고 개설자에게는 출하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금년중에 시스템을 개발 할 계획이다.

한편 유통환경 변화와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한편 노후화된 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기 지난해에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1월 시설현대화가 필요한 11개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 가락시장 등 8개 도매시장이 시설현대화를 신청하였다.

도매시장시설현대화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성장가능성, 시설의 노후와 정도 및 과부족전망, 지자체의 의지 및 계획의 적정성, 시설정비에 연계한 운영 개선 방안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서울 가락시장, 광주각화시장, 대전오정시장을 '09년도 시설현대화 대상으로 선정 하였으며, '09년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으로 기본설계비 60억원을 반영하여 내년부터 이를 대상으로 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를 우선 추진하고 앞으로도 추가로 매년 2~3개 도매시장을 선정하여 시설현대화를 추진 할 계획이다.

(유통정책과 행정사무관 박성기)

4. 축산물시장 차별화

축산구조를 브랜드 경영체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목표 하에 「축산물브랜드 육성대책」이 2004년 2월에 수립된 이래로 지금까지 축산물 브랜드의 개념, 육성 방향 등 기본체계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왔다.

또한, 2017년까지 브랜드 경영체 사육비중을 소 60%, 돼지 80% 이상 달성한다는 목표 하에 「축산물브랜드 2단계 발전대책」이 2007년 11월에 마련되었다. 2008년은 시행 원년으로서 ① 소규모 브랜드 통합으로 규모화·광역화를 추진하고, ② 우수 브랜드를 고품격 브랜드로 발전시키고, ③ 차별화된 컨설팅·교육·홍보로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기본전략 하에 대책을 실효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08년 현재 브랜드 사육비중은 2004년에 한우 24.8%, 돼지 45.0%이던 것이 각각 39.3%, 59.5%로 크게 높아졌다.

육류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과학적이고 제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과 소비자가 참여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하였다. 먼저 쇠고기 이력제 사업을 통한 유전자(DNA) 동일성 검사제도를 도입하여 도축두수의 1% 수준의 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판매단계까지만 실시해 오던 원산지표시제를 쇠고기를 소비하는 음식점에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위해 2007년 1월부터 구이용 쇠고기에 대하여 영업장 면적 300㎡ 이상에서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였으며, 2008년 7월 8일부터(돼지고기 및 닭고기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쇠고기(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육회용)에 대해 식육점 등 모든 유통단계는 물론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 등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원산지를 집중 단속하여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축산경영과 사무관 송광현)

제5절 농·축산물 수출확대 및 수입관리

1. 농·축산물 수출확대 대책

가. 수출여건 및 수출현황

우리 농업은 안으로는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농촌인구의 감소에 직면해 있고, 밖으로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가속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등으로 시장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저가의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여 농가의 불안감 또한 가중되고 있으나, 농산물 시장개방은 우리 농산물의 해외진출 기회도 확대된다는 의미가 있어 수출농업 육성을 통한 우리 농업의 활로개척 및 농가소득 증대, 신성장동력 창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와 인접한 15억인구 7,400억달러 규모의 식품시장 선점과 ‘선진국형 강한 농림수산식품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2008년 8월 2012년 농림수산식품 100억불 수출목표를 설정하고, 100억불 수출 달성을 위한 공세적인 수출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08년도에는 세계의 농식품 소비 트렌드가 기본적 영양섭취의 차원을 넘어 건강 등 삶의 질과 연결되면서 김치, 장류 등의 발효식품과 고려인삼 등 우리 농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일본·중국·동남아 등지에서 확산되고 있는 한류 영향으로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식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국산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유리한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중국, 미국 등 일부 국가에 수출이 집중되어 있고, 수출업체의 영세성, 수출품목의 다양성 미흡 등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고, 국가간 식습관 차이라는 전통적 요인 외에 수입국의 식품안전기준 강화, 글로벌 경제위기 등이 새로운 장애요인으로 대두되어 농식품 수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장애극복을 위해 고품질·안전 수출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 한류열풍을 활용한 해외 수요기반 확충, 수출증대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08년 농식품 수출은 고유가, 글로벌 경제침체, 안전 규제 강화 등의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상 처음으로 농식품 수출 40억불을 초과 달성하였고, 수출 증가율은 1988년 이후 가장 높은 17.1%를 기록하였다.

나. 선진국형 수출 인프라 조성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 농산물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영세한 소규모 수출구조를 규모화하고 조직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수출 인프라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대표적인 품목의 수출을 선도하여 나갈 수 있는 조직육성을 위해 수출선도조직육성 정책을 수립하여 배·김치·파프리카·유자차·버섯 등의 10개 품목을 중심으로 2008년 12월에 13개 수출선도조직을 선정하였다.

또한, 고품질·안전 수출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수출전문 원예전문생산단지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해 우수단지에는 수출물류비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한편, 농수산물무역정보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해외식품시장 동향·소비자 기호 및 품목별 수출입 동향 등을 수출업체 및 수출농업인들에게 제공하여 해외시장개척에 도움을 주고 있다.

다. 새로운 수출성장동력 확충 및 해외 마케팅 전개

김치·인삼 등의 기존 수출 품목 이외에 새로운 수출유망품목을 발굴하는 동시에 미개척시장에 대한 시장개척도 추진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위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있다.

농식품 수출업체의 해외 진출 지원, 바이어발굴 및 해외 소비자 대상 국산 농식품 홍보를 위하여 해외 식품박람회 참가, 해외 대형 유통·외식업체 연계 판촉행사, 수출바이어상담회 개최, 미디어 광고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교민 중심의 시장에서 현지 주류계층으로 국산 농식품 소비층을 확대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와 연계하여 30여 재외공관과 농식품 홍보사업을 추진하였고, 해외 대형 유통업체와의 협력사업도 확대하여 추진하였다.

또한, 수출업체의 경영안정 및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하였다.

(식품산업진흥과 농업사무관 변상문)

2. 수입관리 대책

가. 시장접근물량의 적절한 수입관리 추진

WTO협정 내용과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쌀, 고추, 마늘 등 17개 주요 품목은 국영무역형태로 수입관리하고 연유, 분유 등 6개 품목은 수입권공매 방식으로 수입관리하여, 수입으로 발생하는 판매이익금을 농업투자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들 품목의 수입은 국내 생산시기, 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시장접근물량을 적절하게 수급관리 함으로서 국내 농업보호와 WTO협정 이행을 동시에 조화시켜 나가고 있다.

<표 2-2-25>

농·축산물 개방 일정표

년도별	개방품목수	주요 품목	수입자유화율
1994말까지	1,221	바나나, 배, 키위, 유채 등	81.7%
1995. 1. 1	194	보리, 옥수수, 대두, 고추, 마늘, 참깨 등	94.7
1996. 1. 1	3	포도, 사과주스(2)	94.9
1996. 7. 1	13	버터, 연유, 유당, 인조꿀, 누에고치 등	95.8
1997. 7. 1	39	돼지고기, 닭고기, 오렌지, 감귤 등	98.4
2001. 1. 1	8	소, 쇠고기 등	98.7
2009. 1. 1	-		98.9
잔여품목	16	쌀 관련품목	
계	1,499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협력국

나. 관련법상 탄력관세의 적극 활용

수입자유화에 따라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관련된 국내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고추장, 찌쌀, 당면, 메주 등 4개 농산물에 대해서는 조정 관세를 부과하여 관세율을 인상하여 운용하고 있다.

또한,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가안정을 위하여 사료용 곡물, 농업용원자재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하하는 할당관세를 운용하고 있다. 2009년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사료용 옥수수, 밀, 근채류 등으로 상반기 36개, 하반기 2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관세상당치로 개방한 품목 중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생산농가 및 관련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 긴급관세 운용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땅콩, 녹두, 메밀 등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기준물량을 초과할 경우 추가관세를 부과하도록 하였고, 수삼, 백삼 등 23개 품목에 대해서는 기준가격보다 수입가격이 낮을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다자협상협력과 기술서기관 정종용)

다. 동·식물 검역기능 강화

WTO 출범에 따른 국내·외 검역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안전하며 위생적인 농·축산물을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1992~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약 1,400억원을 투자하여, 검역시설 및 장비 확충, 최신 검역기술을 확립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2005년 이후에도 동물검역 분야는 종전의 기능강화 계획을 연장하여 2008년까지 400억을 투자하는 제5단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제6단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594억원을 검역기능강화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며, 식물검역 분야도 2016년까지 약 1,600억원을 투자하는 식물검역발전 10개년 계획을 확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사전예방적이고 과학적인 검역체

계를 확립함으로써 DDA협상, 동시다발적인 FTA체결 등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양자협상협력과 수의사무관 김용상)

제6절 생산자 주도의 농식품 수급조절 강화

1. 쌀 협상비준에 따른 쌀산업 국내대책 추진

가. 쌀산업발전대책 추진

쌀협상과 WTO/DDA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는 경우에도 우리 쌀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2004년 2월 쌀산업종합대책을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 투융자계획과 연계하여 마련하였다.

아울러, 2005년 7월 1일 양곡관리법과 쌀소득보전기금법을 개편하여 해방 이후부터 지속되어오던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여 시장개방 폭 확대에 사전 대비하였다. 양정제도의 주요개편 내용은 그동안 추곡수매제가 담당하던 비축기능은 WTO에서 허용하는 공공비축제로, 가격지지에 따른 소득보전기능은 쌀소득보전직불제로, 수확기 출하물량의 조절은 RPC등 민간유통기능 활성화로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관세화를 유예 받은 10년 동안 우리 쌀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젊고 유능한 전업농을 중심으로 경영규모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우리쌀이 외국쌀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품질고급화를 추진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의 경영개선을 통한 민간유통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식량정책과 서기관 박선우)

나. 공공비축제 도입 및 정착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비축제는 WTO허용보조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보조금 감축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고 급변하는 국내외적 시장상황에 능동적 대응이 가능한 제도이다. 공공비축제가 WTO 협정상 허용보조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화된 식량안보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재정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시가로 매입하고 시가로 방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비축제는 재해,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일정수준의 재고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종전의 추곡수매제도와 같이 정부가 가격을 정하여 수확기에 일정한 물량을 흡수함으로써 가격을 지지하는 수급조절용 제도와는 다르다.

따라서, 정부는 양곡연도말 재고를 86.4만톤 수준으로 연중 43.2만톤을 매입·방출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하되, 제도의 정착률을 위해 연차별로 감축(2005년 57.6만톤, 2006년 50.4, 2007년 43.2만톤)하기로 하였다.

2005년도는 제도변경에 따른 농업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수확기 농가의 판로확대를 위해 57.6만톤을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수확기 가격폭락으로 공공비축미곡과는 별도로 수확기 가격 안정을 위해 14.4만톤을 추가로 매입하는 등 2005년산 미곡은 총 72만톤을 매입하였다.

2005년의 경우 제도시행의 첫해로서 새로운 제도에 대한 공감대, 제도변화에 대한 적응 부족으로 큰 폭의 쌀값 하락 등 혼란이 야기된 바 있어 2006년에는 공공비축제의 정착률을 위해 2005년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조기 정착에 노력하였다.

2006년 제도개선 내용으로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산물벼 매입방식을 포대벼와 같은 방식으로 매입·정산토록 하였고, 제도의 일관성을 위해 매입가격을 수확기 전국평균가격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RPC의 산물벼 인수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인수하되 포기시 정부 인수방안을 도입하였다. 또한 시행방안의 조기 확정발표 및 홍보로 농업인과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였다. 이에따라 2006년도 공공비축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계획량 50.4만톤을 매입하였다.

2007년도 공공비축 매입 계획량은 43.2만톤이나 실제 매입량은 1.5만톤이 부족한 41.7만톤을 매입하였다.

매입이 저조한 사유로는 2007년도 생산량 감소에 따른 단경기 쌀값 상승 기대 심리로 일부 대농(전업농)등이 출하를 기피함에 따라 2005년도 공공비축제 시행 이후 계획량 미달은 처음으로 발생하였다.

제도개선사항으로는 물벼 산물(산물벼)매입을 축소하는 대신 건조벼 산물(톤백)매입을 시범실시하였다. 건조벼 산물(톤백벼)매입은 농촌의 노령화 및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2007년도에 시범실시(약 4천톤)를 거쳐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식량정책과 농업사무관 이재갑)

다. RPC 경영혁신

RPC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규모화 및 구조조정을 촉진시켜 RPC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경영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화하는 한편, 경영우수 RPC와 통합RPC에 집중하는 “RPC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8년도 RPC 경영평가는 RPC 경영자,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수익성 지수를 줄이고, 규모화 지수를 상향 조정하며, 공공성 지수 배점을 조정하는 등 일부 배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였다.

구분	수익성 지수			규모화 지수			공익성 지수					계
	총자산회전율	영업이익율	유통부가가치율	매출액	건조능력	저장능력	수확기 원료곡 확보율	수확기 원료곡 확보율	계약재배비율	계약재배량	친환경 쌀 판매량	
농협	15	15	5	20	5	5	10	10	5	5	5	100
민간	15	10	5	20	5	5	15	10	5	5	5	100

평가결과 282개 RPC(농협 173, 민간 109)에 대해 비 매입자금 5,510억원을 등급별로 차등지원(A등급 27.5억원~E등급 7.5억원, 등급간 2.5억원 차등, F등급 지원 제외, 금리 0~2%)하였다.

<표 2-2-26>

RPC 경영평가 등급별 지원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A	B+	B	C+	C	D+	D	E+	E	F
지원액	27.5	25	22.5	20	17.5	15	12.5	10	7.5	지원제외
(금 리)	0%	1%	1%	1%	1%	2%	2%	2%	2%	-
(비 율)	(5%)	(5%)	(15%)	(10%)	(15%)	(10%)	(15%)	(5%)	(15%)	(5%)

한편, RPC 경영평가와 연계하여 평가결과 경영부진 RPC의 통합 등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08년말까지 23개 시·군(충남 연기·부여·예산, 전북 정읍·고창·김제·익산, 전남 보성·함평·장흥·장성·영암, 충북 진천·음성·청원, 경기 안성·용인, 강원 횡성, 인천 강화, 광주 광산, 경북 의성, 경남 김해·창원)에서 61개 RPC가 25개로 통합(농협:59→24, 민간:2→1)하였으며, 특히 통합된 농협RPC는 각각 「농협쌀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출범하여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조합경영과의 분리를 통한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통합 RPC에 비 매입자금 및 건조·저장시설 자금 우대지원, 등을 통해 조기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쌀 브랜드 육성사업자 선정시에도 우대하여 쌀 시장개방폭 확대에 대비 쌀 산업의 선도적인 경영체가 되도록 육성하고 있다.

(농산경영과 농업사무관 홍인기)

라. 고품질쌀 생산·유통 촉진

1990년대 후반부터 쌀 소비량 감소는 지속되는 반면, 소비자의 고품질·안전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쌀의 완전미를 향상, 단백질 함량 저하 등 품질 향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보급종 공급비율이 35% 수준으로 낮은 점이나 수확후 건조·저장·도정 및 유통관리가 미흡한 점 등에 있어서는 정부와 농업인들의 더 많은 노력들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 따라 쌀 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2002년부터 고품질 쌀 생산·유통대책을 추진하여 왔다.

2007년도까지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유통대책의 기본방향은 농업인의 생산의욕 고취와 소비자 신뢰 확립을 통한 “맛있고, 안전하고, 잘 팔리는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유통 체계구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추진하였다.

첫째로 화학비료 사용 억제 및 유기물시용을 확대하고, 둘째로 외관이 우수하고 밥맛이 좋으며 가공특성이 우수한 품종으로 병해충 및 재해저항성이 강하여 소비(小肥)재배에도 수량이 떨어지지 않는 친환경 재배적성 품종을 개발하고, 셋째로 고품질 정부보급종 공급확대, 넷째로 적기이앙, 적정 포기수 확보, 적정 물 관리, 질소질 비료 시용량 감축, 병해충 최소 방제, 적기 수확 등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핵심 재배기술을 지도·홍보하고, 다섯째로 농가와 RPC(미곡종합처리장)간의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여섯째로 소비자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하여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하였다.

2008년부터는 지금까지 중앙정부 단위 평균적 개념의 고품질 쌀 생산·유통정책에서 지역·들녘·품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단위 차별화된 고품질 쌀 생산·유통 및 경영개선정책으로 전환하여 쌀 전업농 중심의 조직화, 규모화를 통한 경영비 절감 및 경영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들녘·품종별 차별화·정예화된 고품질 쌀 생산·유통체계 구축으로 쌀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첫째, 녹비작물 재배 확대, 입상 규산질비료 공급 확대(100%) 등 생산기반 조성을 확대하고, 둘째, 수요자 중심의 최고 품질 품종(7개)을 육성하고, 셋째,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

보급중 공급량을 50%까지 확대하고, 넷째, 적기이앙, 질소질 비료 시용량 감축, 병해충 최소 방제, 적기 수확 등 6대 고품질 쌀 생산·재배기술을 조기 정착하며, 다섯째, RPC 수확후 관리시스템을 개선 및 확충하고, 여섯째, 고품질 쌀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시·군 단위 대표브랜드 육성 추진 및 쌀 품질 표시방법 개선, 시중 유통 브랜드쌀 평가로 소비자 신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농산경영과 농업사무관 장대수)

마.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WTO체제 출범이후 식량수입국의 식량안보는 수출국의 국내 보조금 삭감과 관세인하, 시장개방 압력의 증대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예컨대 국내 보조금 감축으로 생산이 감소하고 소수식량수출국에 많은 수입국이 의존함에 따라 자연재해나 전쟁 등 비상시에 식량이 부족할 경우 수출국의 식량무기화로 필요한 식량의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표 2-2-27>

식량자급률 목표치(2015년)

(단위 : %)

품 목		2003	2004	2015
쌀	(A)	97.4	96.5	90.0
맥 류	(B)	7.0	7.6	4.0
주식용 자급률	(C)=A+B	68.2	65.3	54.0
두류(콩)	(D)	29.0	25.0	42.0
서 류	(E)	109.1	107.6	99.0
곡물자급률	(F)=C+D+E+사료곡물	27.8	26.8	25.0
조사료자급률		84.0	83.1	85.0
채소류		94.6	94.3	85.0
과일류		85.0	85.2	66.0
우유 및 유제품		80.0	73.0	65.0
육 류		70.8	79.3	71.0
	쇠고기	36.3	44.2	46.0
	돼지고기	93.0	86.9	81.0
	닭고기	76.3	90.0	80.0
계란류		100.0	100.0	100.0
칼로리 자급률*		45.6	46.7	47.0

* 칼로리 자급률은 수산물까지 포함한 개념임.

세계 식량사정의 불확실성하에서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농업생산을 적정수준 유지하면서 수입과 비축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의 변화로 식량생산의 증가는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데 우리의 생산기반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는 바람직한 식량소비 목표를 제시하고, 정부에게는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의 반영과 장기적인 식량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하나의 지표로 활용코자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토론회·공청회를 거쳐 식량자급률자문위원회의 대정부 건의서를 기준으로 부내검토와 중앙농정심의회 심의(2006년12월18일)를 거쳐 최종적으로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2006년12월29일)하였으며 이를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국회에 보고(2007년12월29일)하였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주식용 곡물자급률, 사료용 포함 곡물자급률, 칼로리 자급률, 주요 품목별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DDA/FTA협상 등에 따른 국내외 수급여건을 반영코자 5년마다 10년 뒤의 목표치를 수정·보완키로 하였다.

(식량정책과 서기관 박선우)

2. 채소·과실류 수급조절능력 강화

가. 채소류

정부에서는 시장개방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수급조절에 한계가 있어 가능한 한 생산자단체 주도의 자율적 수급조절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 추진하고 있다.

사전적 수급조절의 한 방법으로 생산액이 많고 가격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산물에 대해 농업관측사업(1999년부터 본격실시)을 실시하여 기상정보, 재배의향면적, 작황, 예상 생산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 미래정보를 신속하게 예측 제공함으로써 농업인들이 품목선택, 영농규모 결정 등 영농계획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하기간 중 수급조절의 방법으로 민간수매지원(1968년), 정부비축사업(1978년), 채소수급안정사업(1995년)을 통해 채소류 가격이 높아질 경우에는 출하를 유도하고, 가격이 낮게 형성될 경우에는 수매비축, 저급품 출하자제, 소비확대 홍보 등을 통해 공급물량을 조절함으로써 가격 및 수급안정을 기하고 있다.

또한 생산자단체의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과 산업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유통협약·명령제(2000년)와 자조금제도(2000년)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자조금사업은 품목별 생산자단체가 자발적으로 자조금을 조성할 경우 정부가 자조금 조성액 만큼을 지원하여 생산자단체 주도적으로 농산물 판로 확대와 수급조절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 초년도(2000년) 2개 품목에 64백만원을 지원했던 것이, 2008년 26 품목에 8,463백만원을 지원하여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표 2-2-28>

주요 채소류 가격안정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톤, 백만원)

구 분	1990		1995		2000		2004		2005		2006		2007		2008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총 계	74.0	28,472	218.9	60,994	586.6	390,786	911.3	828,349	1,041.7	833,717	1,178.1	829,822	801.3	733,891	1,014.5	789,763
정부수매비축	8.9	17,914	57.5	24,909	14.6	18,534	-	-	296	635	325	697	-	-	-	-
고추 늘과 양파	3.5	15,204	-	-	-	-	-	-	-	-	-	-	-	-	-	-
	1.1	1,602	14.5	16,759	14.6	18,534	-	-	296	635	325	697	-	-	-	-
	4.3	1,108	43.0	8,150	-	-	-	-	-	-	-	-	-	-	-	-
민간수매	42.3	8,805	76.6	18,566	45.6	20,848	33.3	21,538	44.7	23,786	47.1	23,493	53.3	26,810	46.5	28,048
마늘 늘과 추고	20.2	8,093	14.1	11,566	14.9	14,079	12.8	16,386	14.5	15,982	14.5	15,048	15.1	18,514	21.3	20,000
	22.1	712	62.5	7,000	30.7	6,769	20.5	5,191	30.2	7,804	32.6	8,445	38.2	8,296	25.2	8,048
	-	-	-	-	-	-	-	-	-	-	-	-	-	-	-	-
정부출하조정	22.8	1,753	3.8	217	28.4	1,404	89	4,572	44	7,096	61	3,432	14	2,655	99	8,376
계약채배	-	-	81	17,302	498	350,000	789	802,200	657	802,200	745	802,200	734	704,426	869	753,339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원예정책관

(채소특작과 농업사무관 안형덕)

나. 과일류

정부에서는 과일류 수급안정을 위해 2001년부터 농협중앙회를 통하여 과실계약출하(수급안정)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2008년은 사과, 배, 단감, 감귤을 대상으로 총 3,385억을 지원하였다. 사업규모는 전년과 비교할 때 사업물량은 45천톤(12.2%), 참여농가 2,857호(10.1%) 증가하였다. 2008년산 사과와 배는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약세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들 계약재배 물량의 단경기중 분산 출하로 과실가격안정 및 과수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배는 이른 추석으로 재고량이 증가하여 가격이 폭락하였으나, 계약출하사업 농협을 중심으로 유통협약을 체결하여 농안기금 및 과실계약출하사업 적립금 4,192백만원 지원하여 9,539톤을 산지폐기 등 시장격리시킴으로써 배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정부에서는 또한 2001년부터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능력 향상을 위해 유통협약·명령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2007년까지 21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은 배, 감귤, 가을배추의 과잉생산으로 각각 유통협약이 체결되어 시장격리에 따른 손실보전금 50억원을 지원하였다.

(과수화훼과 농업사무관 김병천)

3. 양돈·양계 수급안정 지원 및 소비홍보 추진

돼지고기는 1997년부터 수입이 완전 자유화되었고, 생산주기가 상대적으로 짧아 과거와 같이 정부에서 산지가격이 낮을 때는 수매비축 하였다가 높을 때 방출하는 등의 직접적인 수급안정대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농협중앙회, 대한양돈협회 등 생산자단체가 2004년4월1일부터 도축장에서 등급판정을 받는 돼지로부터 의무적으로 거출하고 있는 양돈자조금(두당 400원, 2008년부터는 600원)의 100%이내에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였다.

조성된 자조금은 등·안심, 후지 등 비선호부위 소비확대를 통한 부위별 수급안정을 위해 TV·라디오 광고, 이벤트 실시 등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돈육가공제품에 대해 TV홈쇼핑을 통한 광고·판매로 소비확대를 지원하였다

아울러, 양돈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해서는 해외시장 수출다변화를 위해·수출국 현지마케팅 및 바이어 초청비 등을 지원하고, 일본, 필리핀, 홍콩 등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수출확대 기반조성을 추진하였다.

<표 2-2-29>

축산물 가격동향

(단위 : 원/kg)

구 분	2001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쇠 고 기	8,284	9,418	8,645	10,806	11,300	12,075	11,744
돼지고기	2,599	2,444	3,479	3,730	3,649	3,247	4,046
닭 고 기	2,528	1,854	2,481	2,469	2,162	2,030	2,739
계 란	981	865	1,179	1,204	991	995	1,282
우 유	610	625	646	696	699		

※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은 도매가격이며, 우유는 원유실제수취가격임.

양계는 축산관측의 기초가 되는 종계 D/B사업을 추진하여 닭고기 및 계란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유도를 통해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였고, 가금수급안정위원회 사업을 통하여 소비홍보 및 육계계열화사업의 발전방향과 공정한 계란가격 형성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 등을 추진하여 양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09.6월부터는 육계 및 산란계 의무자조금이 출범하여 소비홍보, 조사연구, 농가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09년부터 추진중인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기존의 축산물가공업체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사업, 가축계열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가금산업의 전업화·규모화를 촉진시켜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축산경영팀 사무관 이연섭, 사무관 김영만)

4. 가축개량 활성화

가축개량은 유전적으로 우수한 개체를 찾고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활용하여 가축의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 이러한 가축개량의 방법은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선발 및 계획교배의 연쇄적 반복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데, 2008년에 가축개량 시책은 주요 가축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다.

중장기(5년, 10년) 가축개량 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개량시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가축개량 추세를 살펴보면 <표 2-2-28>에서 보듯이 개량 성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어 가축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한우개량은 개량농가의 등록우를 대상으로 우량 암소와 보증씨수소를 선발하여 계획교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량을 추진한 결과, 한우 수소 18개월령의 체중이 575kg으로 나타나 1998년 505kg 대비 13.8% 증가하였다. 또한, 한우 1등급 이상 고급육 출현율도 1998년 15.3%에서 2008년 54%로 증가하였다.

<표 2-2-30>

주요 가축개량 추세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 한 우												
- 18개월 체중 (kg, ♂)	505.0	507.3	509.6	512.0	522.1	532.2	542.2	564.5	571	567	575	
- 1등급출현율(%)	15.3	18.8	24.8	29.8	35.2	33.3	35.9	47.9	44.5	50.9	54.0	
○ 젖 소												
산유량 (kg/305일)	일반농가	5,972	6,135	6,539	6,749	7,017	7,117	7,286	7,417	7,584	7,711	7,881
	검정농가 (초산우)	7,252 (6,694)	7,629 (7,032)	8,086 (7,445)	8,364 (7,688)	8,761 (7,962)	8,899 (8,032)	8,935 (8,019)	9,014 (8,142)	9,271 (8,362)	9,556 (8,554)	9,598 (8,553)
○ 돼 지(요크셔, ♂)												
- 일당증체량(g)	608	649	664	647	654	648	642	637	645	649	638	
○ 닭												
- 산란계 산란지수 (개/년)	281	299	279	285	297	307	320	320	312	318	319	
- 육용계 체중 (6주, g)	1,948	2,195	2,300	2,127	2,285	2,431	2,544	2,650	2,530	2,644	1,974 (5주)	

2008년에 주요 가축 중심으로 추진한 가축개량 시책을 살펴보면, 한우 개량 시책은 첫째, 한우개량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육종농가 제도의 도입이다. 한우 육종농가는 일정수준 이상 혈통등록(혈통·고등등록우)된 암소 50두 내외(목표 100두 이상)를 사육하는 번식농가 중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10호씩 총 40호를 선발하고, 이들 농가에서 발육성적과 육질 등 유전 능력이 뛰어난 암소 4,000두를 선정, 보증씨수소와 교배시켜 우량 씨수송아지를 생산하여 검정한다. 이 검정 성적을 바탕으로 유전능력을 평가하여 가장 우수한 한우 보증씨수소를 연간 20두씩 선발하여 인공수정

용 한우 정액을 생산하여 한우 농가에 공급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사업이다. 육종농가는 2005년 12개소(농가 10, 도센터 2), 2006년 11개소(농가 10, 도센터 1), 2007년 11개소(농가 11), 2008년 10개소(농가 10)로 총 44개 육종농가를 선정 추진하였다.

둘째, 현재 한우 개량농가가 관리하고 있는 혈통등록우는 우량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기반으로 활용한다. 2008년도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에 실제 참여한 농가수는 전년보다 줄어든 12,742호이며, 이들 농가들이 사육하는 관리대상 등록우 중 기록관리가 되는 74,917두와 이 등록우에 생산된 송아지 70,829두에 대하여 4,615백만원을 지원하였다.

그밖에 2008년에는 가축인공수정용 정액 생산·공급을 위하여 한우 당대 및 후대 검정을 통해 유전능력 평가를 거쳐 한우 후보씨수소 47두와 보증씨수소 23두를 새로이 선발하였으며, 이렇게 선발을 통해 확보된 보증씨수소 총 61두에서 생산한 우량 한우 정액 1,940천두분을 번식농가에 공급함으로써 한우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젖소개량은 검정을 받는 낙농가 3,772호에서 사육하는 암소 218,722두를 대상으로 유우군능력검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들중 검정성적이 정상적으로 관리되는 218,722두에 대한 검정비 총 2,390백만원을 검정농가에 지원하였다. 가축인공수정용 정액 생산에 필요한 젖소 보증씨수소는 2두 선발한 것을 포함하여 보증씨수소 총 19두를 확보하여 국내산 젖소 정액 370천두분을 생산하여 낙농가에 공급하였다. 젖소개량은 검정농가의 경우 검정참여기간이 길수록, 검정 참여율이 높을수록 평균 산유량이 높다. 2008년도에 유우군 검정농가의 두당 평균 산유량이 일반 낙농가 보다 1,171kg 증가하여 두당 21.8%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개량의 성과를 보면 요크셔 수퇘지의 경우 검정소 검정에 의한 일당 증체량은 1998년 929g에서 2008년 884g으로 -4.8%나 감소하였다. 돼지의 사료요구율은 1998년 2.34에서 2008년 2.45로 4.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닭 개량은 산란계의 경우 산란지수가 2008년도 281개에서 2008년 319개로 13.5% 향상 되었으며, 육용계의 경우 평균체중(6주 기준)이 1998년 1,948g

에서 2008년 1,974g 으로 1.3% 증가하였다.

돼지와 닭 개량은 민간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직도 돼지와 닭 개량은 민간업체에서 종축을 수입하여 확대 생산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종돈의 능력검정을 위해 종돈검정소 검정과 농장검정을 병행하여 추진한 결과, 종돈 44천두에 대한 능력검정사업을 하여 돼지개량을 촉진하였다.

닭 개량을 위해 종계 22천수에 대한 능력검정을 실시하고 소요 검정비를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검정성적은 양계농가들에게 제공하여 양계농가들이 유전능력이 우수한 계종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축산정책과 농업사무관 서재호)

5. 우유수급 안정대책

출산을 저하, 대체음료 개발 등으로 우유 및 유제품의 소비가 정체이나, 전국적으로 시행된 생산조절제도의 영향으로 만성적인 수급문제가 점차 해소되어 낙농산업의 핵심과제인 우유수급균형이 점차 실현되고 있다

2008년의 경우 전국적으로 2,139천톤의 원유가 생산되어 1,856천톤은 원유로 직접사용(백색시유 1,385, 가공시유 200, 유제품 271)하였고 나머지 283천톤은 생산 당시 잉여되어 분유로 가공하였다.

낙농진흥회의 경우 557천톤을 생산하여 477천톤은 정상가격으로 유업체에 판매 하였으며, 나머지 80천톤은 잉여 되어 정상가격의 50%수준으로 치즈·분유·아이스크림 등의 용도로 공급하였다. 이러한 잉여량은 전년도 잉여량 94천톤에 비해 14.9% 감소한 수준이며, 이에 따른 원유수급조절자금 소요액도 전년도 280억원 보다 13.2% 감소한 243억원이 투입되었다.

이와 같이 잉여원유 및 원유수급조절자금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낙농진흥회의 일관성 있는 수급조절제도의 유지와 쿼터인수도시 20% 쿼터회수제 등을 지속 추진한 성과로 보여진다

<표 2-2-31>

우유 수급상황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 생산 :	254만톤	237	226	223	218	219	214
- 수요 :	309	304	311	308	312	310	304
· 시유 :	150	163	161	154	156	158	158
(백색시유)	(131)	(139)	(135)	(132)	(136)	(138)	(138)
· 유제품 :	159	141	150	154	156	152	146

* 유제품 수요량은 수입 유제품을 원유로 환산하여 포함된 수치임.

* 진흥회 잉여량 : (2002) 31만톤 → (2003) 20 → (2004) 12 → (2005) 11 → (2006) 9.7 → (2007) 9.4 → (2008) 8.0

한편, 고품질의 목장원유(1A 등급) 상태를 유가공장까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원유 유통단계의 집유·검사방식을 개선하고 낙농가의 유질개선을 지도하여 공장 도착시까지 고품질 원유의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유제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또한, 세균수 1등급 비율은 97.8%로 전년 대비 0.1% 상승하였으며, 유지방 역시 4.03%로 전년에 비해 0.02% 증가하여 위생 및 유질측면에서도 향상되었다

소비홍보사업으로 낙농자조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유음용의 필요성을 소비자들이 자각할 수 있도록 다큐멘터리 등을 제작·반영했으며 전국적으로 유아, 주부, 노인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우유관련 교육체험 행사를 통해 우유의 가치 증진 등 국민들에게 우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을 통해 영양불균형이 심각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유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소득 수준에 따른 영양 양극화를 해소하고 무상급식 지원을 통해 우유급식 학교수를 확대하여 청소년의 영양불균형

해소와 우유음용습관을 길러 미래 우유소비층 확보에 주력하였다.

이밖에도 세계학교우유급식의 날 부대행사, 우유급식 우수학교 선정, ilovemilk 전국어린이 영어스피치 등을 통한 우유소비 홍보에 노력하였으며, 낙농체험관광 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선진화된 친환경 낙농의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확인시키고 생산현장인 목장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도시민들이 우유와 낙농산업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느끼게 함으로써 우유소비 확대에 기여하였다.

한편, 계약생산제 실시 이후 생산량과 가격이 일정수준 보장되어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에는 기여했으나 우유의 특성상 계절적 수급불균형으로 잉여량이 발생하며, 현행 원유 조달체계가 낙농진흥회, 협동조합, 유업체 직접직유 등 다중구조로 되어 있어 수급불안요인이 잔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심리와 향후 FTA 등에 따른 낙농산업 피해방지를 위해 정부는 필수 식량자원으로서의 우유산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낙농산업발전 종합대책은 i) 전국쿼터관리제도, 가공원료유 지원 등 장기적인 수급안정을 위한 전국목표생산제(200만톤) 추진 ii) 학교우유급식 확대, 신규 유제품개발, 체험목장 확대, 목장형 유가공사업지원, 낙농자조금사업 등 FTA 개방충격을 최소화하도록 소비확대 추진 iii) 경영규모화, 시설현대화,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젖소 개량, 원유가격안정체계 개선 등 품질개선 및 생산성 향상 대책이 그 주요내용이며, 실무협의, 이해주체별 협의회, 종합토론회 등을 거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종합대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경영과 행정사무관 이성주)

제7절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추진

1.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제 확충

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쌀 협상이후 시장개방 폭의 확대와 쌀값 하락, 이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쌀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쌀값 하락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적정수준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쌀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직불제를 확충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존 쌀소득보전기금법을 전면 개정하여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중전 논농업직불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WTO규정상 환경보전직불제로 분류되어 허용보조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환경농법과 일반농법과의 생산비 차액만큼만 지급되어야 하므로 지급단가를 지속적으로 또는 대폭 인상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중전 쌀소득보전금은 WTO가 규정한 감축대상보조로 5개년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함에 따라, 쌀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 또는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이를 적절히 신속하게 보전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새로운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논농업직불제는 생산중립적직불제(decoupled income support)인 고정형직불제로 전환하고, 쌀소득보전제는 쌀값하락에 따른 실질적인 보전이 되도록 쌀값 하락폭과 연동하는 변동형직불제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를 개편하여 시행(2005년7월1일)하였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는 정부가 목표가격을 정하고 수확기(10월~익년 1월) 산지 평균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낮을 경우 떨어진 금액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목표가격은 3년마다 변경하되,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05년산부터 적용되고 있는 목표가격은 2001~2003년도 평균 수확

기 산지 쌀값과 추곡수매제 직접소득효과, 2003년도 논농업직불제 소득효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쌀 80kg 한 가마당 170,083원으로 설정하였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나누어지며, 고정직접지불금은 쌀값과 관계없이 ha당 평균 70만원을 벼 재배여부 및 타작목 재배와 상관없이 지급하며, 변동직접지불금은 벼를 재배한 면적에 대하여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접지불금 지급 단가를 빼고 남은 금액을 쌀을 생산한 농업인들에게 지급한다.

2008년도 하반기에 전문직 종사자 등 사회지도층 일부가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에서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부당수령사건실태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정부에서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여부에 대한 특별조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우선 국회에서는 '08.10.22일 교섭단체인 한나라당·민주당·자유선진당 원내 대표간에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사건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나라당 송광호의원을 선출하고 간사는 한나라당 장윤석의원, 민주당 최규성의원, 자유선진당 김창수의원을 선임하고 '08.11.10일부터 12.5까지 26일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기간이 2차례 연장되어 2008.12.23까지 44일간 국정조사를 실시하였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008.11.25일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기관보고를 받고, 2008.11.26일에는 감사원, 국무총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은 후,

문서검증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 구성현황, 영농기록으로 인정되는 내용, 영농자료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농업인들의 확인 방법, 부당수령으로 판정된 농지의 실제 경작자를 찾는 방안, 부당수령 의혹이 있는 28만명을 먼저 조사하는 방안, 시·군에서 협조는 잘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와 정부측의 답변을 받게 된다.

2008.12.8일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그동안 실경작 확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부당수령 공직자들의 징계처리 기준 및 절차, 관내·외를 구분하여 영농기록으로 부당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읍·면·동의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의 활동현황, 자진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들의 확인방법,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의 조사기준 및 '96년 이후 구입한 농지는 농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

2008.12.23일에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위해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조사기간 연장을 결정하지 못하고 정회를 선포한 후 개의되지 않았으며, 한나라당은 “국정조사 관련 활동보고서”를 배부하고, 한편으로 민주당은 “쌀 직불법 개정안 및 현지조사 사례”를 발표하고, 민주노동당은 28만명의 명단공개를 요구하면서 국정조사는 사실상 2008년 12월 23일로 종료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국정조사 기간동안 국정조사 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국정조사 특위에서 요구한 자료 911건을 모두 제출하고, 문서검증 및 현지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였다.

한편 정부에서는 '05년부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재 지주 등이 논농업에 실제 종사하지 않으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다는 여론이 있어 2008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실경작 여부 등에 대한 특별조사와 아울러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은 2009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농가소득안정추진단 행정사무관 변동주)

나.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친환경농업으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업·농촌의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 도시행규정에 따라 1999년도부터 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2001년까지 대상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지역

등 환경개선정도가 크고 지원과급효과가 높은 환경규제지역내의 농경지를 대상으로 하고 대상 농업인은 대상지역내에서 경작하고 작목반을 구성하는 농업인으로서 일정수준이상의 친환경농업실천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농업을 이행하고 그 면적이 1천m² 이상인 농업인으로 하였다. 대상농산물은 축산물과 임산물을 제외한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2년도에는 논농업직불제와 친환경 영농이행단계에서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더욱 수준높은 친환경농업이 농업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보완하였다. 먼저 대상지역을 종전의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예산사정 등을 감안,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 중 일정수준이상 친환경영농을 이행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하여 친환경직불보조금을 ha당 524천원 지원하도록 하되, 농가당 최소 1천m²이상 농지를 경작하여야 하고 연간 친환경농산물 판매액이 1백만원 이상인 자로 제한하였다. 또한 환경규제지역내에는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감안 저농약이상 인증을 받은 농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직불금은 초기단계 벼의 관행재배와 저투입농법으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기준으로 하여 ha당 524천원을 지원하였다. 친환경적인 영농실천으로 사업시행전인 1999년에 비해 최근 3년간 화학비료 사용량은 단위면적당 약 14% 줄어들었으며, 농약 사용량은 논벼는 줄어들었으나, 원예용 등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2003년도에는 친환경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논·밭 각각 인증수준별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였는데, 인센티브는 유기인증 270천원/ha, 무농약 150천원이다.

이로인해 밭단가는 저농약인증 524천원/ha, 무농약 674천원, 유기 794천원이고, 논은 논농업직불금외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 유기인증은 270천원/ha, 무농약 150천원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했다.

2004년도에는 지원 단가가 논·밭 모두 2003년과 동일하나, 예산은 2003년 30억원에서 2004년 55억원으로 증가하였다.

2005년도에는 지원단가가 2004년과 동일하고, 예산은 2004년 55억원에서 2005년 69억원이었으나 집행액은 82억원으로 증가하였다.

2006년부터 논·밭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논 단가를 저농약인증 217천원/ha(신규지급), 무농약 307천원, 유기 392천원으로 인상하여 예산은 114억 원이 확대 되었으나, 집행액은 141억원으로 증가하였다.

2007년에는 지원단가가 2006년과 동일하고, 예산은 175억원으로 확대 되었으나, 집행액은 208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아울러 2008년에는 지원단가가 2007년과 동일하고, 예산은 263억원으로 확대 되었으나, 집행액은 287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표 2-2-32>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ha, 호)

	1999~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지 원 액	17,121	2,757	2,988	4,507	8,180	14,106	20,807	28,655
사업면적	31,208	5,274	10,459	12,827	20,780	35,030	53,682	72,444
농 가 수	54,939	6,589	12,195	14,520	22,119	45,567	60,090	87,416

(친환경농업과 행정사무관 류성모)

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사회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04~'05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06년부터 본사업을 실시하였다.

동사업은 2008년 본사업 실시 3년째를 맞아 직불금 부당수령을 예방하여 투명하게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사업시행지침의 지급요건 규정을 강화하였다. 먼저, 관리가 미흡한 하급초지와 임산유실수 등을 식재하는 임야는 형질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에서 제외하였다. 아울러, 부정지급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마을대표확인서를 통한 자경판정은 불인정하고, 임대차는 공식적인 계약서로 증명이 된 경우만을 인정하였으며, 1996년 이후 취득농지 중 임대차가 불가한 농지는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의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임대차 관련규정을 강화하였다.

한편, 2008년에는 16만 농가, 11만ha에 30,265백만원(국비기준)의 보조금이 집행되었으며, 이중 평균 33%가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되었다. 지역별로는 산지가 많은 강원, 경북과 도서가 많은 제주, 전남 지역이 전체 직불금의 77%가 지급되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급단가는 밭 40만원/ha, 초지 20만원/ha로 제도도입 당시('04)의 단가가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쌀고정직불금 단가 등을 고려하여 단가의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표 2-2-33>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연도별 지원액(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천ha)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사 업 량(천ha)		118	109	110	
사업비	보조금	소 계	45,930	43,079	43,236
		국 고	32,151	30,155	30,265
		지방비	13,779	12,924	12,971

(농가소득안정추진단 행정사무관 김형식)

라. 경관보전직불제 본 사업 실시

최근 도시민의 농촌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촌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경관형성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어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대에 부응하고, 농촌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5년부터 경관보전직불제를 도입하여 2007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08년부터 본사업으로 확대시행 하였다.

경관보전직불제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지역축제,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지자체와 마을간 협약을 체결하고, 농지에 일반작물 대신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당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2005~2007(3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관작물의 범위를 지난해까지는 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등 6개 품목에서 연, 자운영을 추가하여 8개 품목으로 확대하였고, '08년 본사업 시행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작물 선택이 가능토록 작물 범위를 시장·군수가 협약서를 심사하여 경관형성이 주목적이고 효과가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초화류(목본류 제외)로 확대하였고, 다만, 해당 품목에 정부수매 등 품목특정적인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중복지원을 금지토록 하여 WTO규정에 합치되도록 하였고, 최소 지원면적 규모도 완화(필지 1ha/마을 3ha → 0.5ha/2ha)하여 마을주변 소규모 농지를 활용한 마을경관형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경지내 탐방로 설치 및 주변환경 관리를 의무화하여 성실한 재배관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액지원 또는 다음해 지구선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제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동계작물의 지원단가를 메밀(하계), 유채(동계) 생산비 기준에 따라 감액조정(170만원/ha → 100만원)하여 동절기 유휴농지를 활용하는 것을 감안, 소득손실액(보리) 개념에서 생산비 보전개념(메밀, 유채)으로 전환하여 수혜자 폭이 확대되도록 하였다.

그 밖에 추진체계를 변경하여 대상지 선정기관을 정부에서 시도로 조정하여 농식품부는 시도별 예산(면적)을 배분하고, 시도는 시군별 대상지를 확정하도록 하였다. '08년 동계작물부터 반복적 이월되는 예산집행방식 개선 및 동계작물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방식을 개선하여 동계작물은 파종(10~11월)과 개화시기(익년 4~5월)에 맞추어 회계연도를 달리 하여 집행(개화기 지급분은 차년도 예산으로 집행, 50%)하도록 하여 매년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신청절차는 마을주민들이 농촌경관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농촌경관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장에게 신청하고, 지자체장은 마을의 경관보전계획을 심사·평가하여 선정된 마을과 협약을 체결한다. 지자체장은 협약에 따라 사업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보조금의 지급기준은 국고 70%, 지방비 30%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단가는 하계작물이 ha당 170만원, 동계작물은 ha당 100만원이다

2008년도에는 총 5,814ha를 선정하고 26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시행지역의 경관작물은 메밀, 코스모스 등 하절기 작물 502ha, 유채, 자운영 등 동절기 작물이 5,312ha였다.

경관보전직불제시행을 통해 마을경관개선, 방문객 증가, 공동체의식 향상 등 경관가꾸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성과를 거양하였고, 지역별로 경관작물을 활용한 지역축제나 마을 행사를 통해 방문객이 크게 증가하는 등 도시민의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관 강동민)

2. 금융부담 경감과 경영위험 관리강화

가. 농가부채 경감대책 추진

1) 2008년 농가부채 경감대책

2001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2008년까지 5차례에 걸쳐 총 24.3조원에 대하여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인하 등 농업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지원하였고,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손실액 2.7조원(*수산분야 0.2조원 별도)을 정부에서 지원하였다.

2008년 중 이차보전대상 자금은 '01·'04 정책자금 상환연기, '01·'04·'06 상호금융자금 처리대체지원 및 농업경영개선자금 등 '07말 대출 잔액 9조 7,370억원(연체액 차감 잔액 기준)에 대하여 3,041억원을 이차보전 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농가당 평균 약 251천원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부채 없는 농가(전체 농가 수의 29.4%)를 감안할 때 실제 지원받은 농가의 금융부담 경감효과는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2)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의 조속한 경영회생을 돕기 위해 2003년 시범사업 이후, 2004년부터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시적인 경영회생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금리 3%)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다.

‘08년에는 농업경영회생자금 예산 1,000억원을 반영하여 지원토록 하였으나, 144억원이 집행되는 등 ‘03~‘08까지 총 4,917농가에게 3,662억원이 지원되었다. 특히, ‘06년 이후 집행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그동안 농신보 보증 심사를 강화하였고, 대출신청 및 취급절차가 복잡하여 일선조합에서 취급을 기피하고 있으며, ‘06년부터 부채보유 농가의 농지매입 지원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는 농지은행제도의 도입·시행으로 수요가 이동하였고 최근 거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등 복합적 요인에 의거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집행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08.12월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제도를 개선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일시적 경영위기 기준(예시)을 완화하였고 특별재난지역의 신청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였다. 또한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지원제외토록 되어 있는 것을 자산 대비 부채비율 기준으로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원제외토록 하는 등 심사기준을 완화하였다. 다만, 지원기준 완화에 따른 제도의 남용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제외기준인 비농업용 부동산 보유자 범위에 배우자를 추가하였으며, 골프회원권 및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3) 2008년말 농가부채실태 분석·평가

2008년말 현재 농가부채는 가구당 25,786천원으로 '07년(29,946천원)에 비해 13.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는 통계청 표본개편에 따른 시계열 단층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 참고로 통계청에서는 보다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매 5년마다 표본개편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08년 농가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신표본으로 개편하였음

통계청 조사결과 전체 농가부채는 31.2조원으로 추정되며, 1천만원 미만의 소액부채 농가는 57%, 5천만원 이상 농가는 16.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농가부채가 시설투자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그에 상응하게 자산도 증가하여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평균적인 부채상환능력은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부채/자산비율(%) : ('03) 13.0 → ('05) 9.1 → ('07) 7.6 → ('08) 7.6

(농업금융정책과 서기관 이낙휘)

나.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원리를 이용,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요소를 해소하여 안정적인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고자 2001년부터 도입한 제도로서 그간 태풍 “루사(2002)” 및 “매미(2003)” 등으로 약 4만 2천여 농가에 3,21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2001년 사과·배 2개 품목으로 시작한 농작물재해보험은 지속적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하여 2009년 현재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곶감·밤·참다래·자두·감자·콩·양파·고추·수박·옥수수·고구마·마늘·매실 등 20개 품목에 대해 보험실시 중에 있으며, 매년 제도개선을 통해 대상재해를 확대하고 보상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집중호우 및 나무보상 특약 적용품목을 사과·배에서 과수

전 품목으로 확대하였고 감귤의 태풍에 의한 풍상과 피해 보상을 추가하였으며 봄동상해 특약 보장금액을 주계약 보장금액의 50%에서 100%로 확대하였다. 또한 우박피해 과실의 평가등급을 세분화하여 보상범위를 현실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50%, 운영비의 100%를 지속 지원하고, 보험요율을 2008년 대비 0.61%P 감소한 5.52%로 인하하였다.

이에 2009년도에는 전년대비 7.4% 증가한 32,968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면적도 2008년 24,009ha에서 26,388ha로 늘어 가입률 31.4%를 달성하였다.

<표 2-2-34>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성장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대상품목 ¹⁾		6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	6	7 (뽕은감 추가)	10 (밤·참다래·자두 추가)	15 (콩,감자,고추,양파,수박 추가)
가입 실적	가입농가(호)	23,926	26,335	27,419	29,174	32,538
	가입면적(ha)	17,546	20,301	21,466	23,661	26,037
	가입률(%)	18.2	23.4	24.5	26.5	28.5
지원 규모	순보험료(%)	50	61.2	58.4	55.6	52.8
	운영비(%)	90	100	100	100	100
	국고지원액	37,803	49,371	50,783	49,280	49,063
지급 보험금	지급농가(호)	3,177	5,877	5,171	7,274	3,383
	보험금	13,599	23,871	21,112	61,464	24,932
	손해율(%)	42.3	43.5	36.6	110.4	45.0

주 : 1) 본사업 시작년도 : 사과·배(2003), 복숭아·포도·단감·감귤(2004)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윤승우)

다. 가축공제 운영 내실화

가축공제는 자연재해, 화재 및 질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축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회생을 도모하고자 1997년부터 도입한 제도로서 최근 태풍,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증가하면서 농가의 공제가입건수 및 보험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1997년 “소” 1개 축종으로 시작한 가축공제 사업은 대상축종을 지속 확대하여 2009년에는 “소, 돼지, 닭, 말, 오리, 메추리, 꿩, 사슴, 칠면조, 거위, 타조, 양, 벌” 등 13개 축종에 대해 사업실시 중에 있으며, 매년 제도개선을 통해 대상재해 및 보상수준을 확대하고 있다.

2009년에는 축산농가의 공제료 부담경감을 위해 공제료의 50%를 지속 지원하였고, 무료가축진료사업 추진, 대농업인 공제가입 홍보강화 등으로 공제가입률을 전년 45.4% 대비 2.4P 증가한 47.8%로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가축공제의 “축사보상 특약”의 경우 축사의 겨울철 주요재해인 “설해”를 추가하였고, 공제료 지원율도 가축과 동일하게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민영보험사(LIG 컨소시엄)에서 추진하는 가축보험의 대상축종을 5개에서 12개로 확대하여 축산농가가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2-35>

가축공제 가입률

(단위 :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소	7.2	7.3	7.1	8.3	8.1
돼 지	49.9	57.6	66.7	63.3	65.3
말	1.9	4.9	6.7	8.6	7.9
닭	22.3	32.8	39.3	43.1	45.4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윤승우)

라. 재해지원 현실화 추진실적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은 농작물, 가축 및 농업용 시설 등의 피해복구지원과 농가별 피해정도에 따른 생계비 지원, 학자금 면제 등 간접지원의 두 형태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농가의 영농재개 도모와 복구부담 경감을 위하여 매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 인상 및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재해지원 현실화를 위해 2009년도에는 생계지원(양곡대), 콩치, 꽃게, 돔 등 19개 품목을 1.1~92.0%까지 인상하였고, 종오리사, 분뇨처리(오리), 농어, 전복, 양액재배시설, 붕어(내수면양식생물) 등 26개 품목을 신설하였다.

(농산경영과 사무관 이상집)

제8절 다양한 농외소득원 확충

1.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

국민소득 증가와 주5일 근무제 확대 등으로 국민의 여가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관광형태도 유명관광지 위주의 대중관광에서 가족중심의 체험관광·휴양 등 대안관광 형태로 변화되는 추세이다.

농촌의 생태적·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 증가, 웰빙(Well-being)생활 중시, 고품질의 안전농산물과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등에 따라 농촌 체험관광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변화를 활용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 도모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도농교류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농촌체험·휴양기반을 확충하고,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범국민적 참여유도를 위한 다양한 홍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였다.

도시민의 여가 및 다양한 문화체험 수요에 부응하는 농촌체험·휴양기반 확충을 위해 2002년부터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마을주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도시방문객들이 농촌체험관광을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마을공동의 농촌체험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마을경관 및 컨설팅 등 S/W 관련분야 등 조성을 지원(마을당 2억원)하고 있다.

2008년까지 364억원(국고)을 지원하여 전국에 364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였다. 또한,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업간 연계를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도시민의 방문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상품을 개발·보급하였다.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해 나갈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대책’을 수립하여, 마을리더·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08년도에는 지역주민, 공무원, 도시민 등을 대상으로 농촌지역개발 리더십육성, 농촌마을·녹색농촌체험마을 동기화과정, 사업주제별 특화과정, 전원생활체험과정, 농촌마을종합개발 집체·순회교육 등 21개 과정으로 7,326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농산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는 마을에 마을대표의 업무부담 경감과 체험프로그램개발, 방문객관리, 도시민유치 등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제도를 2006년도에 도입하여 2008년도까지 150개 마을을 지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농촌체험관광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마을에서 전문가로부터 수시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1인1촌 전문가 자문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2008년도에 50개 마을(2007년 50개 마을)을 지원하고 있다.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5~12월까지 ‘농어촌에서 여름휴가보내기 캠페인’을 추진하여 체험마을 방문객 수가 '07년 대비 39% 증가하는 등 체험마을 인지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서울 양재동 시민의 숲에서 체험마을과 지자체가 함께한 도농교류 엑스포를 개최하여 도시민 총 236천명이 관람하고, 다양한 도시민 유치활동을 실시하였다.

농어촌 정책에 대한 중앙-지방간 인식을 공유하고,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학계, 마을, 농식품부, 지자체가 참여하는 그린포럼을 개최하여 분과별 토론회 및 종합토론 등을 추진하였다.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제고 및 수요 창출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TV, 신문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웰촌포털(www.welchon.com) 운영을 통해 도시민들에게 체험관광, 정주정보 등 다양한 도농교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사1촌 자매결연 운동은 도시와 농촌이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상생(win-win)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기업·단체와 농촌마을이 자발적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는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기업체와 사회단체 등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2008년도에는 7,581건의 자매결연을 통해 농산물직거래, 농촌일손돕기 등 565억원의 교류성과를 창출하였다.

다양한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촌소득증대 등 농촌지역 활력 회복의 전기가 되고, 아울러 농촌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이 높아져 도농상생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농촌사회과 행정사무관 하지은)

2. 농공단지 조성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탈농인구의 재촌 흡수, 농어촌지역에 경제활성화 및 농외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1983년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 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하였다. 당초 사업시행 초기에는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나, 1998년 이후 IMF영향 등으로 수요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고 입주업체 경영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도로망 확충 등 입지여건 개선, 수도권내 입지부족, 지자체의 기업투자유치 강화 등으로 농공단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매년 농공단지 지정이 늘고 있는 추세다.

* 연도별 지구지정 현황 : (1999) 1개소 → (2001) 5 → (2005) 11 → (2007) 14 → (2008) 32

현재, 2014년까지 농공단지 400개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8년에는 농공단지 신규 26개소를 포함, 47개소에 국고 428억원을 지원하여 2008년까지 330개소를 조성(완공)하였으며, 2008년말 현재 농공단지에 5,372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 4,946개 업체가 공장을 설립·가동중에 있는 등 지표상 타 산업단지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다.

또한, 지금까지 고용인원 120천여명, 매출 32조원(업체당 69억원), 수출 78억\$(평균 169만\$)로 지역 및 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표 2-2-36>

산업단지 분양 및 가동 현황

구 분	농공단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분 양 률 (%)	98.4	98.2	95.7
가 동 률 (%)	94.1	99.8	97.3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2008년 12월)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관 김일환)

3. 향토산업육성 추진

농촌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1·2·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7년도 19개 사업(국고 43억원), 2008년도 30개 사업대상(국고 90억원)으로 선정된 향토자원에 대해서 지자체별 향토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사업을 시행하였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이 2007년도부터 새로 시행된 사업임을 감안, 향토자원 개발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향토산업육성 사업설명회 및 워크숍」을 개최(2008년 2월과 6월)하여, 지자체 담당공무원, 연구기관 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 중앙·지자체간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개협의회, 전문가 특강 등을 실시하였다.

기 선정된 2009년도 대상사업에 대하여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2010년도 사업대상 선정을 위해 시·군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2008.10) 향토자원 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와 학계,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면평가, 현장평가 및 농식품부의 향토산업육성심의회의 평가과정을 거쳐 사업대상(30개)을 최종 선정(2008.12)하였다.

또한, 농촌산업분야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사업목표를 명확히 하는 목표지향적 사업추진 체계 구축을 위해, 신활력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특화품목육성사업을 “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 통합·체계화하고 시·군으로 하여금 3년 단위('08~'10) 농촌활력증진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농촌공사 내 농촌활력사업본부를 발족('08.1)하고 평가·모니터링·컨설팅 및 성과관리DB구축 등을 지원토록 했다.(사업비 17억원, 4팀 17명)

향후, 2009년도 사업부터는 사업계정을 변경하여 국가 직접편성사업으로 시행하고, 매년 30개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2013년까지 200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1·2·3차 산업의 융·복합화를 지원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핵심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관 이수열)

4.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

FTA 등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확충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관련 사업인 신활력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특화품목육성사업을 2008년부터 “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 통합·체계화하였으며, 시·군은 유사한 관련 사업을 연계한 “3년단위(2008~2010) 시·군 농촌활력증진계획”을 수립·추진하되 연차별 목표를 제시하고, 재원·인력 등 관련 자원을 목표달성을 위해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목표지향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효율적인 농촌활력증진계획 수립·지원을 위하여 자문위원회에서 시·군을 분담하여 컨설팅 등 시·군의 농촌활력증진계획 수립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 1월 농촌활력증진사업의 평가·모니터링·컨설팅, 성과관리 DB 구축 등 지원을 위하여 한국농촌공사 내 「농촌활력사업본부」를 발족하였다.

사업성과 제고 및 연관사업간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8년 4~5월에는 시·군 3년단위 농촌활력증진계획을 평가하여 22개 우수 시·군을 선정하여 인센티브 152억원을 지급하였으며, 2008년 5~7월에는 농촌활력증진사업 우수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사업모델을 공모하여 61개 시·군에서 94개 모델을 응모하여 그 중 21개 우수모델을 선정하여 인센티브 36억원을 지급하였다.

2008년 8월 농촌활력증진사업에 대한 인식도 제고, 추진주체의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 상호 네트워킹의 장 마련 및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북 부안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균형위원장, 전북지사, 신활력시·군 단체장, 관계 공무원, 자문위원, 지역협력단, 사업추진단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농촌활력증진계획(2008~2010)의 종합현황 및 시·군별 현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집을 제작·배포하여, 각종 행사 및 업무추진 시 활용함으로써, 상호 벤치마킹·업무교류 활성화 및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였다.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관 허훈)

5.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주40시간 근무제 등으로 도시민의 관광·여가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웰빙문화의 확산,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 등으로 도시민들의 농촌에 대한 체험·여가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여건 변화속에서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촌으로 유치하여 농외소득증대 등 농촌지역의 활력증진을 도모하고 도시민에게는 건전한 가족단위 체험·여가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2년부터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마을주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도시방문객들이 농촌체험관광을 보다 유익하고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코자, 마을 공동의 농촌체험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마을경관 및 컨설팅 등 S/W 관련분야 등 조성을 지원(마을당 2억원)하고 있다. 2008년에는 90개소를 신규를 조성 하여 전국에 364개의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을 주도하는 마을리더·주민들의 사업추진·운영능력 배양 등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농촌체험관광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마을에서 전문가로부터 수시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50개 마을)하고 있다. 또한, 농촌체험활동 중 사고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비를 지원(78개 마을)하였으며, 맞춤형 농촌관광 홍보책자(‘가족여행’) 제작·배포, 농촌문화체험기 공모전, 제7회 농촌마을가꾸기경진대회 개최, 농촌관광 포털사이트 운영 등 도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이후, 전국에서 다양한 성공모델이 나타나면서 도시민 및 농업인, 지자체의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08년 중 녹색농촌체험마을에 236만명이 방문하고, 308억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법을 활용한 도시민 초청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와 연계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직거래하며 소득증대에 기여한 사례, 행정과 주민간 일체의 노력 및 기업과의 자매결연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전개한 사례, 마을주민·출향인·귀농예술인이 협력하여 농촌전통문화와 농사체험이 조화를 이루는 마을로 성장한 사례 등 다양한 성공모델이 나타나고 있다.

(농촌사회과 사무관 김홍철)

6.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사업은 주5일 근무제, 전원생활 등 웰빙 문화 확산으로 농촌체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업생산 및 소득기반 약화로 농촌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시작하였다.

농촌전통테마마을은 농촌마을의 고유의 테마 및 마을별 7거리(불거리, 먹거리, 쉼거리, 체험거리, 놀거리, 살거리, 알거리)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프로그램화를 통한 도농교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8년도 신규마을 39개 추가 선정으로 전국에 총 170개소의 농촌전통테마마을 설치하였다.

운영성과를 분석해 본결과 마을당 평균 방문객 수가 2002년도에 1,800명에서 2008년도 8,300명으로 방문객이 361%가 증가하였고, 사업소득은 마을당 평균 2002년도 사업은 2,100만원에서 2008년도 7,100만원으로 228% 증가하였으며,

또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보급과 지역 어메니티 자원과의 연계사업 추진 등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어업인의 소득 증가로 농촌지역 경제 활력화와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한바, 2007년 재정사업 평가 최우수로 선정, 2006년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와 “국가균형발전사업 사업단위 평가”에서 2005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대내외 평가에서 우수성을 입증하였으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시책인 녹색성장에 이바지할 뿐만아니라, 농촌관광마을 육성사업의 성공 모델로 인정되고 있다. 사업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농촌전통테마마을 포털홈페이지<http://www.go2vil.org>를 구축

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월별 웹진발행, 홈페이지 홍보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하였으며,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내실 있는 사업 전개를 위해 농산어촌에서 휴가보내기 캠페인 전개(7월) 및 홍보책자“ 자연으로 떠나는 맛있는 휴가2”를 공동으로 7만부를 발행하였으며, 체험학습박람회 등 행사 및 책자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생활지도사 김보균)

제9절 농촌 활력 증진 및 생활여건 개선

1. 농촌의 기초생활환경 개선

가.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농어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 분야 지역개발사업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의 농어촌 1,142개 면지역과 광역시내 15개 준농어촌 자치구를 대상으로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동 사업은 크게 마을내·마을간도로, 상·하수도시설, 교량, 주차장 등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하는 마을기반정비 부문, 세천정비, 수변공원화, 소공원, 담장정비(식생담조성 등), 빈집의 철거·정비 등 경관개선부문, 복지회관, 마을회관, 체육공원조성 등 문화·복지부문에 나누어 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551개면(15개 준농어촌 자치구 포함)지역에 국고 3,13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마을내·마을간 도로 1,220km, 상하수도 138개소, 주차장 등 교통시설 37개소, 교량 64개소, 마을회관, 공원 및 휴게소 등 문화·복지시설 174개소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면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시켰다.

(지역개발과 기술서기관 김동권)

나. 전원마을 조성사업

1990년 이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농촌의 정주여건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함에 따라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농촌인구는 1990년 25.6%에서 2000년에는 20%, 2005년에는 18.5%로 감소하였다. 2005년도의 농촌지역의 노령인구 비율은 도시지역의 7.2%를 크게 상회하는 18.7%를 나타내고 있으며, 86개 군 중에서 57개 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농촌의 생태적·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과 삶의 질이 중시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도시민의 전원생활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러한 도시민의 농촌이주 수요와 농촌의 도시민 유치 수요를 연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원마을조성사업은 그 중 핵심 시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전원마을조성사업은 20호 이상의 가구가 농촌지역에 전원마을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에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등 마을기반시설을 정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지원 대상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면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마을의 규모에 따라 정부에서 10~30억원(국고 80%, 지방비 20%)을 보조 지원하고 주택건축비에 대해서는 호당 4,000만원 한도 내에서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저리(농업인 3%, 일반인 4%) 융자지원도 하고 있다.

2007년 3월에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촌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동으로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2007년 6월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자체적으로 운용하던 「농림정책 리모델링 위원회」가 전원마을조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시 기반조성에서 주택건축까지 책임지고 일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에 민간을 추가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 농림수산식품부 및

한국농촌공사 합동으로 “전원마을조성 제도개선 작업반”을 구성·운영하여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중심으로 한 전원마을조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2008년에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하는등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정비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원마을조성사업시행자를 시장·군수에서 마을정비조합 등 민간에까지 확대하고 사업시행계획 승인권한을 시·도에서 시장·군수로 이양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구역내 토지수용시기를 앞당겨 시행하도록 하였다. 전원마을조성사업은 2004년도에 2지구 시범착수 후 2008년도까지 총 92지구를 착수하였고 앞으로도 사업을 확대하여 농어촌지역의 인구유지와 지역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지역개발과 기술서기관 김동권)

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면단위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2007년말 현재 45.2% 수준으로 도시지역 98.5%에 비하여 상당히 열악한 형편이며, 아직도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농촌지역은 우물·계곡수 등 자연수에 의존하여 생활용수를 해결 의존하고 있으나, 우물·계곡수 등은 가뭄시 쉽게 건천화되고, 생활오수·축산폐수·기타 오염물질 유입으로 수질이 악화되어 양질의 용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표 2-2-37>

상수도 보급현황

구 분		총대상인구(명)	급수인구(명)	보급률(%)	
전 국		50,034	46,057	92.1	
도시	특광역시	23,284	23,081	99.1	98.5
	시지역	17,672	17,256	97.6	
농촌	읍지역	3,938	3,395	86.2	63.0
	면지역	5,140	2,325	45.2	

자료 : 환경부 상수도통계(2007)

이에 따라, 면단위 농어촌지역 자연마을에 암반지하수를 개발하여 생활용수를 공급하면서 가뭄시 농업용수와 농산물세척용수까지 병행하여 공급하는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을 1994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389억원(국고 309, 지방비 80)을 지원하여 226개소를 개발함으로써, 2008년까지 5,842개소를 완공, 1,151천명에게 생활,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또한, 농업용수 23,726ha에 공급할 예비 수자원을 확보하여 가뭄시 한해 대책용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관 임명근)

라.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지원

1976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낡고 불량한 농어촌 주택의 개량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 농어촌 주민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2007년부터는 농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부처간 업무조정예의해 당초 행정안전부의 사업으로 추진되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으로 이관되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도에는 기존에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세부내역으로 추진하던 「농촌주택정비사업」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이관 받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합하여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운영하였다. 2008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필요한 자금(융자금)을 2,400억원 조성하여 총 6,000동의 농어촌 주택개량을 지원하였다. 농어촌 주택개량을 위해서 지원된 자금은 연리 3%의 5년 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세대당 최대 4천만원까지 공급되었다.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관 김학조)

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최근 들어 소득증가, 주5일근무제 시행 등 여건변화로 농촌을 단순 식량 생산공간이 아닌 전원주거·휴양·전통문화 등 기능을 갖춘 쾌적하고 농촌다움을 지닌 미래형 복합 생활공간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농촌개발수요에 대응하여 농촌어메니티 자원과 지역개발을 연계시켜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농가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종합개발사업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지방화·분권화시대에 맞게 주민·지자체가 스스로 지역발전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강화차원에서 실천을 통한 학습형 지역개발 추진 방식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따라 2004년부터 상향식의 주민참여형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는 동일한 생활권·영농권 등으로 동질성을 가지며, 발전잠재력이 있는 수개의 마을을 소권역으로 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권역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초생활환경정비, 경관개선, 소득기반시설확충,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사업대상지 선정시부터 지역주민이 스스로 해당지역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 공무원, 지역내 전문가 등이 파트너십(Partnership)을 형성하여 지역발전을 주도함으로써 소권역별 잠재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유형의 농촌공간을 정비하고자 한다. 지원금액은 권역당 3~5년간 40~70억원(국고 80%, 지방비 20%) 범위 내에서 권역의 크기, 가구수 등 권역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계획수립 시 단계별로 전문가의 평가·자문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8년까지 총 3,949억원(국고 3,210, 지방비 739)을 투입하여 136개 권역에 대하여는 사업을 추진하고, 40개 권역은 2009년도 사업착수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2-2-38>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단위 : 권역, 억원)

구 분		합 계	2006까지	2007	2008
사업비계		3,949	1,412	898	1,639
기본계획수립	사업량	176	96	40	40
	사업비	256	134	62	60
사업시행	사업량	136	56	96	136
	사업비	3,693	1,278	836	1,579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별로 잠재자원을 발굴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한국농촌공사가 민간전문가 또는 민간기관과 컨소시엄 및 위탁방식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권역개발 및 사업추진 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권역별로 현장에서 자문회를 개최하였으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농촌마을개발 발전방향을 재정립하고, 사업 활성화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 토론회, 사업참여자 연찬회 등을 실시하여 사업의 발전방향을 토론하여 계획에 반영하였다.

2008년도는 2006년도에 착수하여 1단계(1~3년차) 사업이 마무리되는 20개 권역에 대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하였다.

중간평가결과 상향식 사업을 통해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열정적인 마을 리더 등장과 쇠퇴하였던 지역공동체가 부활하고, 새로운 스타권역 등장과 소규모 상향식 사업 추진 경험을 인근 마을로 확산하는 분위기 조성과 지역을 아름답게 가꾸어 방문객 및 인구증가로 권역이 활성화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주민 참여형 상향식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이해부족과 경험부족 등으로 성과가 미흡한 지역도 다수 있어 사업참여주체의 지속적인 역량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중간평가를 통하여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여 지역간 경쟁력을 유도하여 사업시행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관 임명근)

3. 농촌 교육·의료 등 생활여건 개선

가. 농업인 복지지원 개선

정부는 2004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농촌의 사회보장 수준을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2008년에는 2004년 이후 추진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의 경감 확대 및 농업인 안전공제의 보상수준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촌 복지지원을 강화하였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는 2003년까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납입보험료의 22%를 경감하여 왔으나, 2004년부터는 우리부에서 국고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국고지원율은 2004년에는 8%, 2005년에는 18%, 2006년부터는 28%를 지원하여, 보건복지부에 감면하는 부분과 합치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의 총 50%를 경감 지원하고 있다. 2008년도에 우리부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484천 세대, 지원액은 1,559억원에 달하였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2007년에 우리부로 사업이 이관되어 2008년에는 소득이 620,000인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50%를(9,900~23,400원), 620,000을 초과하는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27,900원(월)을 지원하여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 농어업인은 279천명에 달하였다.

농기계 사고 등 농작업 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 안전공제의 사망공제금 보상수준을 2006년 2,500만원에서 2007년에는 3,500만원, 2008년에는 4,50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농촌사회과 서기관 박성우)

나.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UR 타결이후 어려움을 겪게 된 농어업인의 후생복지 증진과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2008년 한해 동안 농어촌출신 대학생 26,721명을 대상으로 81,578백만원의 학자금을 무이자 용자지원하였으며, 사업을 시작한 1994년 이후 지금까지 303,699명에 대해 537,342백만원을 용자하였다

정부는 용자재원 확충을 위해 2008년도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사업시행주체인 한국학술진흥재단에 41,260백만원을 출연하였으며, 현재까지 출연액은 총 310,828백만원에 달하였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 자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였으며, 등록금내에서 신청액 전액을 용자지원하였다.

(농촌사회과 서기관 박성우)

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추진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은 농촌내 취약한 농가에 대해 영농활동이 어려운 경우 영농도우미를 지원하고, 가사활동이 어려운 경우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농도우미의 경우 영농도우미 인건비의 70%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고 30%는 해당 농가에서 부담한다. 또한 가사도우미의 경우 가사도우미 실비(1만원)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7천원을, 농협에서 3천원을 부담한다.

2006년에 전국 8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작한 취약농가 인

력지원사업 중 영농도우미 지원의 경우 2008년에는 지원사유를 종전의 2주 이상 상해진단에서 2주 이상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도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영농도우미 1회당 지원한도는 10일로 명확하게 하였다.

2008년 사업실적을 보면 영농도우미는 13,328농가, 가사도우미는 16,048농가를 지원하였다.

<표 2-2-39>

< 취약농가 인력지원실적 >

(단위 : 백만원, 호)

구 분		2006	2007	2008
영농도우미	지원금액	760	2,710	4,732
	지원농가	2,180	7,905	13,328
가사도우미	지원금액	693	1,060	1,060
	지원농가	12,308	15,505	16,048

* 지원금액은 국고보조금 기준임

(농촌사회과 서기관 박성우)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확대

가.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 구축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AgriX)은 농림사업의 신청·집행·사후관리를 온라인으로 처리하여 업무 효율화 및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으로 2008년까지 4차에 걸쳐 40여개의 농림사업에 대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2008년에는 원예·농촌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11개 농림사업에 대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특히, 국무조정실(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한 “정보시스템 구축·활용 효과에 관한 조사” 결과 투자대비 5배의 수익 효과를 발생한 것으로 조사(ROI=528%)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농촌공사 등에서 운영중인 DB를 연계하여 농림사업간 정책자금의 중복지원을 차단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의 AgriX 활용도 제고를 위해 연중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였다.

(정보화담당관실 전산사무관 박태철)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컨텐츠 확충

농림수산식품부는 '99년부터 농업·농촌 정보화 촉진 및 도·농간 정보 격차 해소 등을 위해 농림수산정보망(아피스넷, www.affis.net)을 구축·운영해 오고 있다. 전국 농수산물 가격유통정보, 시황·전망정보, 뉴스, 검색 등을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게 제공하여 농업경영 효율화 및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도·농간 정보교류를 촉진하였다

아피스넷은 '99년 구축된 이래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08년말 현재 회원수 257천명, 일평균 방문자수 19천여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73개 기관의 농어업·농어촌 정보와 65개 유관기관의 one-stop 통합검색을 제공하며, 농업인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도농교류를 위한 410여개의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500여명의 명예기자단을 운영하여 우리 농어촌의 생생한 뉴스를 전달하고 있으며, 농민신문사 등 5개 농업언론의 통합뉴스 제공창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표 2-2-40>

농림수산물정보망 이용현황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회원수	120,424	168,517	196,198	218,323	239,726	257,646
일평균 이용자수	8,389	5,148	8,000	11,364	18,055	19,917
일평균 페이지뷰수	27,143	73,234	84,980	101,760	213,847	373,980

아프스넷은 농업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농업·농촌 대표 웹사이트(웹 분석사이트 랭키닷컴, www.rankey.com, 농학분야 1위, 2008년말 기준)로 인정받음으로써 우리 농어업·농어촌 대표 웹사이트로 자리매김하였고, 초등학교 교과서(5학년 2학기 사회과 탐구, 68쪽)에도 농업정보 제공 웹사이트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정보화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유재철)

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강화

도·농간 또는 산업간 상대적으로 정보이용수단이 열악한 농업인에게 정보 활용기회를 제공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식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디지털 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는 '98년부터 '08년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읍·면 지역농협, 농업계 대학 등 농업관련 기관을 통해 총 65만명의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다.

'08년도에는 정보화에 무관심한 농업인에 대해 인터넷뱅킹, 온라인쇼핑, 휴대폰·디지털카메라 사용법, 전자 민원서비스 등 정보화시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활 밀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일손부족 등으로 집합교육 참여가 어렵거나 심화·반복학습이 필요한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정보화선도자, 농업계대학 119서비스 요원이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인터넷 활용능력이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

밀착형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소득창출과 연계되는 전문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아울러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전담제 (e-Tutor)를 시범 도입하고 헬프데스크, 원격지원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2008년까지의 농업인 정보화교육 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2-2-41>

정보화교육 실적(1998~2008)

(단위 : 명)

분 류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 계	13,074	39,131	33,161	75,738	80,257	71,734	77,352	67,112	63,724	66,252	64,465
기초교육 (생활밀착형)	7,759	7,331	8,157	38,437	35,912	20,126	20,445	7,144	7,047	5,289	6,901
중급교육	-	-	-	14,351	14,161	12,843	13,182	6,607	4,008	4,019	-
중기교육 (영농밀착형)	-	-	-	-	-	-	-	1,766	2,139	2,591	2,795
중기 공모과정	-	-	-	-	-	-	-	-	-	312	445
고급 공모과정	3,544	3,931	1,479	1,093	1,646	2,379	2,039	1,056	359	292	306
농업정보 119 서비스	600	2,188	10,109	15,077	15,126	13,098	13,190	12,074	10,044	10,044	10,836
정보화선도자	-	-	-	-	1,374	9,897	16,292	23,944	29,858	32,608	35,068
정보화 공공근로사업	-	23,640	9,120	-	-	-	-	-	-	-	-
이동버스 정보화교육	-	-	998	2,102	2,288	2,090	1,230	570	512	542	255
자체교육	1,171	2,041	3,298	4,678	9,750	10,838	6,821	8,069	2,915	2,741	-
온라인교육 (원격포함)	-	-	-	-	-	463	4,153	5,882	6,842	7,814	7,859

(정보화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유재철)

제10절 농정제도 개혁

1. 농지제도 개선

농업시장 개방 확대, 농산물 소비감소, 농가인구 감소 등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6월 5일자로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농업진흥지역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능한 시설의 면적제한을 완화하는 등 농지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농업진흥지역 해제 시 그에 상응하는 지역을 새로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였다. 이는 종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시 대체농지를 지정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해당 시·군의 진흥지역 지정비율이 전국 평균(50%) 이상이거나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 등은 대체지정 의무를 면제하고 있었으나,

대부분 대체지정 면제사유에 해당되어 동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불가피하게 농업진흥지역을 개발용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대체지정이 어려워 개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부지의 면적을 3천㎡ 미만에서 1만㎡ 미만으로 확대하여 시설규모화를 꾀하고, 농업생산자단체등이 설치하는 농기계 보관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농업보호구역에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의 편의증진 및 소득증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농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거쳐 지정된 지구·단지 등 안에서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장관의 별도 승인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토계획법상 개발예비용 토지의 성격을 갖는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3만㎡ 이상 농지의 전용허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모두 위임하여 농지전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중복되는 절차를 합리화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출자·임대하는 방식으로 체육시설의 개발 사업에 참여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이 유휴 농지 등을 출자하여 개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지과 사무관 박은엽)

2. 농지은행제도 정착 촉진

쌀 소비감소, 시장개방 확대 등 여건변화에 따른 농지시장 불안을 사전 대비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통한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농지은행 제도를 도입하였다.

농지은행사업의 법적 근거는 농지법 개정(2005.7.21)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2005.12.29)을 통해 마련하였다.

농지은행의 주요기능으로는 농지유통화정보제공, 농지임대·매도수탁사업,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농지시장안정 매입·비축사업이 있으며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08년말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개정하여 영농규모화사업을 농지은행사업으로 통합하였다.

①농지유통화정보제공 : 2005.7월부터 농지은행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농지매물·거래동향·시세 등 농지정보를 제공하고, '06년 1월부터는 농어촌 종합정보포털과 연계하여 농촌주택, 귀농, 농산어촌 문화체험 등 다양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 '08년말 : 회원수 184천명, 접속 3,434천건(2,792회/일)

②농지임대수탁사업 : 농지소유자가 자경이 어려운 소유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를 수탁하여 전업농 등에 장기임대하여 규모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2005.10.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나 개발 예정지역안의 농지 등은 수탁대상에서 제외하여 투기목적 농지취득을 차단하고, 임차인의 영농안정을 위

해 5년 이상의 수탁기간 설정과 계약 기간 내 해지시 계약 잔여기간 총 임차료의 20% 수준을 위약금으로 징수토록 하였다.

* 사업 실적: '05년-111ha, '06년-3,373ha, '07년-4,274ha, '08년-5,164ha

③농지매도수탁사업 : 농지소유자가 농지의 매도를 위탁하는 경우 이를 농지은행이 수탁하여 전업농·창업농 등에게 매도하는 사업으로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하여 농지 매도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08년까지 2.7ha)

④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자연 재해, 부채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당해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하고, 농업인은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다음 환매권을 보장하여 경영회생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하여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회생을 돕는 데 기여 하고 있다.

특히, 2008년에는 보다 많은 경영위기 농가 지원을 위해 당초 예산 1,000억 원외에 195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1,195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2-42>

(단위 : 명, ha, 억원)

연 도	신 청 실 적			지 원 실 적		
	인 원	면 적	금 액	인 원	면 적	금 액
2006	378	554	942	183	311	422
2007	671	915	1,714	444	629	953
2008	842	1,266	2,349	490	696	1,195
계	1,891	2,735	5,005	1,117	1,636	2,570

*신청금액은 매도희망가격으로 실제 매입가격(감정평가액) 보다 많음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⑤농지매입·비축사업 :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하여 비축한 후, 농업인 등에게 매도 또는 임대하는 사업으로 아직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농지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를 대비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지수급 불안에 사전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농지과 사무관 정수경)

제11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통상대응과 남북협력 추진

1. WTO/DDA 협상 대응

가. DDA 농산물협상 동향

2008년 WTO/DDA 협상은 2007년에 이어 활발히 전개되어 그룹내 협상 및 주요국 고위급협상(약 30여개국)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특히 2008년 협상은 관세상한, 민감품목, 특별품목, 개도국특별긴급관세 등 이견 대립이 큰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약 10여개국 관련 이해당사국이 참여하여 집중적인 협상을 하는 소그룹회의(Walk in the Woods)가 진행되고 있는 바, 이를 통해 각 이슈별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일부 의견접근을 이루는 등 논의의 진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반영한 세부원칙 수정안이 2월, 5월에 제시되었으며, 연내 협상 타결을 위해 상반기 중에 각료회의를 개최하자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Lamy WTO 사무총장은 7월 비공식 소규모 각료회의 개최하여 농업 및 비농산물 협상그룹별로 주요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일부 잔여쟁점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 이견 대립으로 세부원칙 타결에 실패하였다.

이후 7월 각료회의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팔코너 농업의장은 12월에 4차 수정안을 배포하고 비공식 각료회의를 추진하였으나, 개최 날짜가 시기상 연도말이고 미국 등 주요국들의 국내 일정상 참여가 불가능하여 개최되지 못했다.

DDA협상은 2007년 이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어 3차례 세부원칙안이 제시되는 등 상당부분 논의의 진전을 이루었지만, 아직까지 주요 쟁점들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 이견차이가 크기 때문에 협상 타결에 대해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DDA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WTO 다자체제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우려의 시각 속에서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이며, 그간 논의가 상당부분 진전되어 기술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정리가 되어 논의가 단순화

되었는바,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 등 주요 수치들에 대한 주요국들의 정치적 결정만 있다면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자협상협력과 사무관 정용호)

나. DDA 비농산물협상 동향

2003년 9월 제5차 WTO 각료회의(칸쿤)가 결렬된 이후 소강상태에 빠져 있던 도하개발아젠더(DDA) 협상은 2004년 4월 들어 재개하였으며, 2004년 7월에 DDA 협상 전반에 대한 기본원칙을 담은 기본골격(Framework)을 합의하였다. 하지만 2005년 12월 홍콩각료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으로 관세감축에 대한 세부원칙(Modality) 타결에는 실패하고 2006년 4월 세부원칙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2006년 말까지 협상을 타결한다는 일정에만 합의를 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각 진영간의 의견의 차이가 지속되어 2006년 7월 Lamy WTO 사무총장은 DDA 협상중단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2006년 11월 WTO 비공식 무역협상그룹(TNC) 회의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협상 재개에 합의하여 2007년 1월말 다보스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협상전면 재개를 공식 선언하였다.

그 후 협상이 가속화되어 2007년 7월 세부원칙 초안이 회람된 이후 의장이 3차례에 걸쳐(2008년 2월, 5월, 7월) 1, 2, 3차 수정안을 순차적으로 제시하였고, 농업 및 NAMA 분야 세부원칙 타결을 위한 각료회의를 개최('08.7) 하는 등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주요 핵심쟁점에 대한 잠정타협안 도출 이후,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되었고, G-20 정상회담 선언을 계기로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이 제시('08. 12)되는 등 연말 각료회의 개최가 추진되었으나, 분야별 자유화(Sectoral) 관련 주요국간 이견 대립 등으로 각료회의 개최가 무산되는 등 협상 타결에 난항을 겪었다.

비농산물시장접근(Non Agriculture Market Access; NAMA) 협상은 농산물을 제외한 공산품, 수산물(Fish and Fish products), 임산물 등을 그

대상으로 하며 비농산물의 관세 감축의 방법과 감축정도를 결정하게 된다. 농산물의 관세인하와 보조금 감축을 함께 다루는 농업협상과 달리 관세 인하 측면만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금 감축문제는 규범협상에서 다루고 있다.

비농산물 협상 세부원칙에 따르면 관세인하는 비선형(Non-linear) 방식으로 하되, 이중계수 구조의 스위스 공식에 따르게 된다. 스위스 공식에 따르면 현재 관세가 높을수록 더 큰 감축률이 적용되며 감축후의 관세는 계수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관세 상한을 설정한다.

의장 4차 수정안에 따르면 스위스 공식에 적용될 조정계수의 경우, 선진국은 8, 개도국은 부가 조건(신축성 적용 범위)에 따라 20, 22, 25 중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개도국에 대해서는 일부 품목에 한해 스위스 공식에 따른 관세 감축의무를 면제받거나 50% 수준의 감축의무만 부담할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해 준다.

그리고 회원국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여 일정 분야의 참여국간의 교역에 무세(혹은 아주 낮은 관세-5% 이하 수준)를 적용하는 분야별 자유화(Sectoral)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총 14개 분야(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보석, 의약품·의료기기, 임산물, 수산물, 자전거, 스포츠용품, 공구 등)에서 주요 관심국 주도하에 제안서가 제출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분야별 자유화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역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나, 중국 등 주요국들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하지 않아 협상 진전이 느린 상황이다.

그밖에도 관세이외의 무역장벽을 규제하여 상품 교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수입허가제, 라벨링 등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을 규율하는 규범을 만들기 위해 각 회원국들이 제안서를 제출하고 있고 그에 기반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중 우리와 관련이 있는 분야로는 회원국간 분쟁 발생시 일정 절차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하여 보고 이에 실패할 경우 정식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는 내용의 신속해결 매커니즘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자협상협력과 사무관 임선정)

다. DDA 농산물협상 대응

정부는 그간 DDA 협상에 있어서 취약한 농수산물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원칙 협상에서 우리의 실익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주요국 고위급 및 실무급협의 등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특히 농산물수입국그룹인 G10의 일원으로서 시장접근분야에서 관세상한 도입을 저지하고 관세감축률을 최소화하면서 민감품목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집중하는 한편, G33(개도국 그룹)으로서는 개도국의 특별품목과 개도국 특별긴급관세제도 확보 등에 중점을 두어 대응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미국 및 G20(수출개도국 그룹)들이 강하게 주장하였던 관세상한에 있어 명시적 도입이 배제되었으며 관세감축률 및 민감품목에 있어서는 중간적 수준의 입장이 제시되는 등 G20이나 미국 등의 강한 주장을 완화시킨 성과가 있었으며 수입국 및 개도국의 입장도 일부 반영되도록 하였다.

정부는 장기간의 협상 기간 동안 대외적으로 WTO 농업협상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이해관계국 들을 대상으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내적으로 농업협상에 대한 농민들의 이해와 합의를 유도하고 각계의 의견을 협상에 반영하기 위해 협상동향에 대한 대국민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협상과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기 위하여 주요 협상단계마다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및 E-mailing 서비스 등을 통해 알리며 각종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협상동향을 알리고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통상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농업 및 통상 전문가가 참여하는 DDA 연구포럼 등을 운영하고 국내외 통상전문변호사를 자문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다자협상협력과 사무관 정용호)

라. DDA 비농산물협상 대응

우리나라는 DDA 협상으로 인한 국내충격을 최소화하고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협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는 비농산물 분야에서는 개도국 계수를 낮추도록 주장하여 전체적인 시장개방 수준을 높이는 한편, 수산물 등 민감한 일부 품목은 개도국 신축성을 활용하여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본적으로 개도국이나 협상 기여를 위해 선진국 계수를 사용할 것이지만 수산물 등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개도국 신축성을 사용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전기·전자 등 수출우위품목의 분야별 자유화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Anti-Concentration 등 개도국 신축성 관련 조항이 수산물의 개도국 신축성 활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

또한, 비관세장벽(NTBs)과 관련하여 신속해결매커니즘이 농업, SPS 조치 등에도 적용 가능한 현재의 문안을 수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우리와 관련성이 높은 제안서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자협상협력과 사무관 임선정)

2. FTA 농업협상 대책

가. 한·미 FTA 협상분야

1) 개요

2006년 2월 협상 개시 후 2006년에는 5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하였으며, 2007년에는 3차례의 공식협상(제6차~제8차 협상) 및 2차례의 농업분야 고위급협상이 있었으며 협상타결을 위한 최종 장관급협상이 개최되었다. 2007년 4월 2일 정부간 협상을 종료되었고 6월 30일 공식 서명되었다.

한·미 FTA 협상은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국익차원의 결단에 의해 추진되었으나,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분야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었기 때

문에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동시에 국내 보완대책도 충실히 마련한다는 정부 전체의 공감대 하에서 협상이 이루어졌다.

농업분야를 포함한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2007년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간 이해단체, 관련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내보완대책을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07년 6월 28일 발표하였다. 또한 특히 피해가 예상이 되는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07년 11월 6일 추가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2) 국회비준

한미 FTA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양국 의회의 비준과 협정이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령을 제·개정한 후 양국간 FTA 이행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을 교환해야 한다. 양국간 확인서한을 교환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 된 후 FTA가 실제 발효된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 국회 비준안을 2007년 9월 7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비준동의안은 2008년 2월 13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절차에 들어갔으며 국회 통외통위는 한미 FTA 찬반양측 전문가들과 통외통위 위원들이 참여한 “한미 FTA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청회”를 2월 15일 개최하였다. 비준 동의안을 17대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국회차원에서 농어촌 지원대책을 추가 논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FTA농어촌지원 대책특위”를 출범(2월 19일)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한미간 쇠고기 협상, 미국의 비준현황, 4월 총선 등의 영향으로 17대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못했다.

비준동의안이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어 18개국회로 넘어감에 따라 정부 내 입법 절차 및 국회 비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정부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정부 내 입법절차를 마친 후 2008년 7월 1일 국무회의 통과, 7월 3일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2008년 10월 8일 18대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의장은 비준동의안을 10월

10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하여 국회 내 비준 절차를 진행하였다.

한편, 한미 FTA 이행에 관련된 24개 법률에 대해 제·개정을 병행 추진하고 있는데 17대 국회에서 이미 2개 법률이 처리되었고 농식품부 소관 법률인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을 포함한 19개 법률에 대해서는 18대 국회에서 제·개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방송법 등 3개 법률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후 개정 추진 예정이다.

(지역무역협정과 사무관 박정훈)

나. 한·EU FTA 협상분야

한-EU FTA는 협상출범 이후('07.5.6) '07년에는 총 5차례 협상을 개최하였다. 제1차 협상(5.7~11, 서울)은 협상일정, 협정문 작성방안, 양허방식 등 협상의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제2차 협상(7.16~20, 브뤼셀)부터 양허안, 원산지, 지식재산권, 위생·검역(SPS)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하였다. 제3차 협상(9.17~21, 브뤼셀)에서는 우리측이 수정양허안을 제시하고 EU측과의 품목별 협상을 시도했으며 우리 농산물 민감품목에 대한 농산물세이프가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제4차 협상(10.15~19, 서울)에서는 민감품목에 대한 품목별 기술협의를 우리측이 국내적으로 민감하게 다루는 이유를 EU측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EU측 수출보조 지급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제5차 협상(11.19~23, 브뤼셀)에서는 자동차 표준과 공산품 원산지 문제도 양국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부각되었다. 농산물 수정양허안은 전체 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과 당초 전망보다 다소 지연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조건부 일괄타결안(package)으로 작성하여 EU측에 제시하였다.

'08년 제6차 협상(1.28~2.1, 서울)에서는 상품양허, 자동차 기술표준 협상은 진행하지 않고 주로 협정문과 공산품 원산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EU측 요청으로 개최된 비공식 회의에서 EU측은 민감품목의 예외적 조치, 농산물 세이프가드, 수입쿼타 등에 대해 대부분 수용 가능 입장을 표명하였다. 반면, EU측은 감귤, 감자, 설탕 등 관심품목은 추가적인 양허개선을 요구하였다.

제7차 협상(5.12~5.15, 브뤼셀) 상품 협상은 개최되지 않아 농수산물 양허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타 농수산업 관련 분야에서는 위생·검역(SPS), 품목별 원산지기준 및 지리적표시 등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위생·검역(SPS) 분야에서는 지역화 인정절차, 작업장 승인 절차 등을 주로 논의했으며, 우리측은 주로 수입국의 입장에 있는 만큼 상기 절차에 있어 수입국의 검역권한이 침해받지 않도록 문안을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EU측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양측은 이러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문안을 정리해나가기로 했다.

별다른 입장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 협상에서는 지난번에 비해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 우리측은 지난 협상에서 이미 제시한 내용인 제3국산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의 원산지 기준 작성 배경을 재차 설명했다. EU측은 우리측 입장을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회원국들과의 입장 조율을 거쳐 협의에 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지리적표시 분야 협상에서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수준, 지리적 표시와 상표와의 관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양측 문안을 접근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측 대표는 조기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통상장관회의, 수석대표 협의 그리고 분야별 회기간 회의를 6월 이후에 계속 집중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에서 개최될 제8차 협상은 협상 타결을 위한 최종 협상이 되도록 한다는데 합의하고, 8차 협상의 개최시기 등 구체적인 일정은 분야별 회기간 협의 등의 진전 상황을 감안하여 추후 협의하여 정하기로 했다.

(지역무역협정과 사무관 박정훈)

다. 한·아세안 FTA 협상대응

2003년 8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ASEAN을 단기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하였으며, 2004년 12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2년내 타결을 목표로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아세안은 우리의 5위 수출시장이며 한·아세안 FTA 진행은 한-칠레 FTA 이후 처음 거대 경제권과의 FTA 협상이라는 의미를 가진 협상이다.

본협상 단계로서 2005년 2월~2006년 11월간 총 15차례의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기본협정, 분쟁해결제도 협정 서명, 상품협정 본문 및 상품자유화 방식에 합의하였다. 상품자유화 방식으로서 현행관세 유지, 관세의 일부 감축 등 관세철폐로부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초민감품목 200개(HS 6단위)를 확보하였다. 양측은 2006년 4월 11차 협상에서 상품 양허안에 타결하였으며, 2006년 8월 한·아세안 경제장관 회의시 상품협정에 서명하였다.

양허협상 결과 농산물은 현행관세 유지 71개, 향후 10년간 현행관세 유지 377개 등 448개의 민감 품목을 설정하였다. 원산지 규정은 우회수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신선농산물의 경우 역내에서 태어나서 자란 동물이나 재배 후 수확된 식물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인정해 주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출시 정부기관 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중국, 인도, 호주 등 제3국산 농산물이 아세안을 경유하여 우회 수입되는 경우 관세 감축이나 관세철폐의 이득을 누릴 수 없도록 하였다.

상품협정 서명 이후 서비스·투자 협상 논의가 진행 중이며, 서비스 분야의 경우 개방분야의 목록화 방식을 채택하기로 상호 합의 하였으며 투자 분야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농림 서비스, 투자 분야의 경우 개방영역과 비개방영역을 구분하여 목록을 제시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아세안 FTA는 이미 상품 협정이 종료되었으나, 그 후속 작업으로서 다양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각 아세안 회원국들의 TRQ 증량 요청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대내적으로는 대아세안 TRQ 관리 및 2007 HS 코드 개정으로 인한 혼란 발생을 방지하는 등 순조로운 발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상품협정문 서명에 참여하지 못한 태국과의 양자회의가 진행 중에 있다.

(지역무역협정과 사무관 이덕민)

라. 한·캐나다 FTA 협상대응

한·캐나다 FTA협상은 협상자체가 4년 가까이 지속되었으나, '08년 정례협상이 개최된 이후 중단된 상황이다

한·미FTA 타결이후 캐나다측이 한·미 FTA 협상결과를 기준으로 삼아 특히 상품 양허안 분야에서 한·미안보다 덜 주고 더 받겠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최종타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측은 우리측 최대관심품목인 승용차 관세가 6.2%로 단기 관세철폐시 승용차 관세가 2.5%인 미국과 대비하여 한국이 향유할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주장하는 등 최소 한·미안과 동일한 수준의 양허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측은 한·미 FTA 협상타결이후 악화된 국내 여론을 감안하여 한·미 FTA협상결과와 지나치게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양국간 교역현황 등을 감안하여 최종 양허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상품분야 양허협상의 진행은 비농산물 양허안은 상품분과, 농산물 양허안은 농업소분과에서 이루어졌다. 농산물 양허협상의 경우 양측은 쇠고기, 돼지고기, 보리류 등 민감품목은 나중으로 미루고 입장 차이가 적거나 합의가 가능한 품목을 우선 협의를 진행하였다.

현재 농산물 중 미합의 품목은 우리나라의 주요 민감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보리류, 대두, 천연꿀, 감자 등으로서 캐나다측이 이들 품목에 대해서 한·미안과 유사한 양허수준을 요구하고 있어 양측간 입장 차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 한편, 쌀,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대부분의 낙농품 및 가금육 등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현행관세유지를 확보하였다.

(지역무역협정과 행정사무관 김성원)

마. 한·인도 CEPA 협상대응

2008년도 한·인도 CEPA협상에 있어 농수산분야는 인도측이 상품분야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분야가 농수산물 등 1차산업 관련품목 외에는 많지 않으므로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양허개선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협상 타결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도측의 기대수준을 가능한 한 낮춘다는 것을 목표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2008년도에는 실무회의 2차례를 포함하여 모두 5차례의 협상을 진행하여 9월에 개최된 제12차 협상(차관급 협상)에서 상품양허 등 협상 핵심 잔여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타결이 되었다.

제12차 협상에서 양국은 협정문 및 상품양허안 등 협상결과를 실무적으로 최종 확정된 이후 협상결과를 발표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농수산물 분야의 구체적인 협상결과 역시 실무 확정 이후 발표될 예정이나 협상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대부분의 우리 민감 농수산물을 양허제외 유형에 포함시킴으로써 당초 목표한 바와 같이 협상 타결로 인한 우리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으로서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기술 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지역무역협정과 농업사무관 이덕민)

3.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및 보완

가. 추진경과

2007년 4월 3일, 한·미 FTA 협상타결에 따라 정부는 주요협상결과발표와 함께,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 수립방향을 발표했다.

4월까지 영향분석을 마무리하고 6월까지 전문가·농업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한·미 FTA 영향분석 결과(4.30발표)를 토대로 농업인단체 등 이해관계

자,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07년 6월 28일에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국내보완대책에서는 한국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입급증으로 인한 단기적 피해보전장치를 마련하고 둘째, 품목별 특성에 따라 생산·가공·유통 단계별 취약부분을 보완하는 경쟁력 향상을 추진하며 셋째, 농업구조 개선을 통한 농업체질을 강화하고, 넷째 농촌을 농업 외 다양한 산업공간과 국민 생활공간으로 조성하여 농촌 활력을 증진한다. 또한 국내보완대책 추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향후 10년간(2008~2017)의 재정지원방안을 별도 마련키로 하였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등 농업인단체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국내보완대책이 미흡하다며 추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추가 요구사항 중에는 새롭게 요구하는 사항도 있었으나, 대부분 6월 28일에 발표한 국내보완대책에 포함된 내용 중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추가요구사항의 주요내용은, 한우 소비홍보 확대, 쇠고기 이력추적업무 대행기관 지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확대, 채소·인삼 전업농가 육성지원, 농업회의소 설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등이었다. 한농연의 요구사항들의 대부분은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반영하였다.

재정지원방안을 포함하는 한미FTA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을 정부안으로 확정하여 2007년 11월 16일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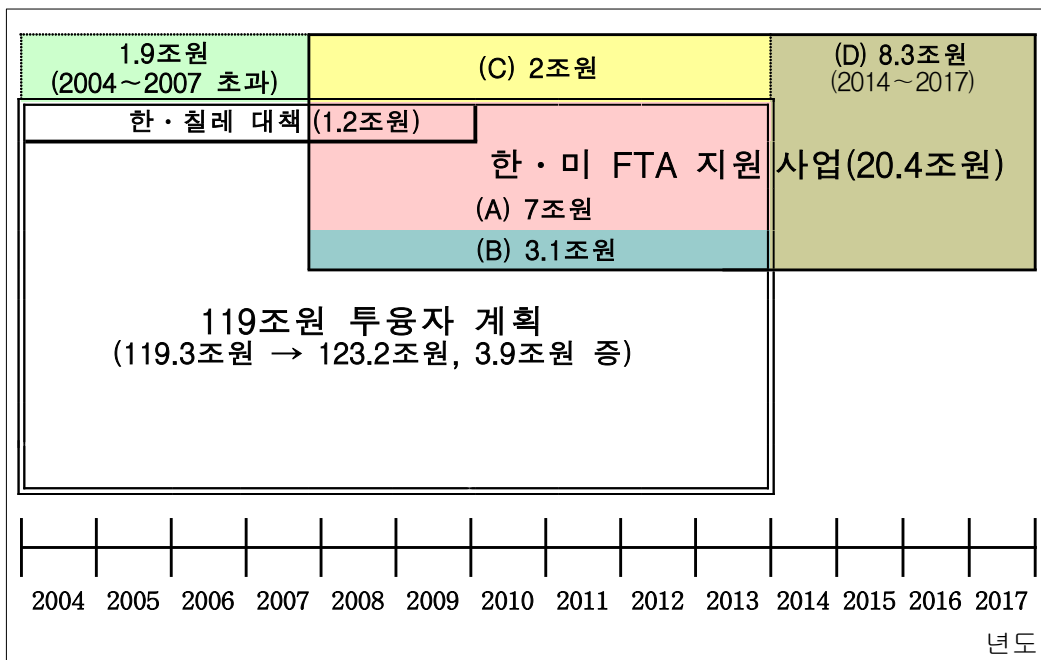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6월 28일에 발표한 국내보완대책으로 중점 추진할 61개 사업을 선정하여, 2008년부터 10년(2008~2017)간 투융자 소요를 산출하였으며, 61개 사업의 투융자 규모를 총 20조 3,607억 원으로 확정하였다. 투융자 지원방향은 경쟁력 강화와 소득기반 확충에 집중하면서 수입급증으로 인한 피해보전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4조원 중 경쟁력 강화 분야에 19.2조원(94%) 지원한다.

아울러, 농업·농촌분야의 중장기 투융자 계획(2004~2013)인 「119조원

투융자 계획」은 당초 119.3조원에서 123.2조원으로 조정(3.9조원 증액)하였다. 123.2조원은 그 동안 투융자 실적분석 결과와 한·미 FTA 대책사업 소요를 반영하여 산출한 것이다.

119조원 투융자 계획의 증액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증액된 3.9조원은 119조원 투융자 계획 초기 4년(2004~2007)에 1.9조원 초과 반영하였으며, 한미FTA 투융자 계획과 겹치는 6년간(2008~2013)에 2조원 증액하게 된다. 한미FTA 대책추진을 위한 61개 사업의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투융자 규모는 12.1조원이며, 119조원 투융자 계획 조정규모(123.2조원)에 반영되어 있다.

한·미 FTA 대책사업과 119조원 투융자 조정과의 관계



- * (A) 7조원 : 2008~2013간 119조원 계획에 기 포함된 한미FTA 대책사업 규모
- * (B) 3.1조원 : 2008~2013간 기존 119조원 사업 중 투융자 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감액하고 한미FTA 대책사업을 증액한 규모
- * (C) 2조원 : 2008~2013간 119조원 계획 증액
- * (D) 8.3조원 : 119조원 계획 종료 이후 한미FTA 투융자 지원 규모
- * (A)+(B)+(C)+(D) : 20.4조원(한미FTA 투융자사업 규모)

나. 대책의 보완

2008년에는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가경영안정 대책이 보완되었다. 사료자금 1.5조원(연리 1%), 화학비료 상승분 80%(정부40+업계40)를 지원하고, 쌀 목표가격(170,083원/80kg)을 5년간('08~'12) 유지하였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관련 축산업대책을 수립하였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및 원산지 표시제 확대 등 제도 개선, 송아지 기준가격 인상(130만원→165), 품질 고급화 장려금 신규 지원, 조사료 재배면적을 '12년까지 37만ha로 확대('07. 16만ha)하는 등 기존 한미 FTA대책을 보강하거나 새로운 대책을 추가하였다.

당초의 보완대책을 재정리하여 먼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쇠고기, 돼지고기, 감귤, 포도)에 대해 생산·가공·유통·안전성·수출 등 단계별로 지원을 집중하여 품목 경쟁력을 제고하고, 향후 타결 예정인 한·EU FTA 영향까지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농업의 체질강화를 위하여 경영체를 주업농, 고령농, 취미농으로 구분하여 주업농은 소득안정 및 경영규모 확대를 지원하여 미래 경영주체로 육성하고, 고령농에 대해서는 경영이양유도 및 복지확충을 통하여 노후생활을 안정화하며, 취미농은 농업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미래 농업 주체를 키우기는 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농업분야 신성장동력 확충 분야에서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한식세계화 등을 통한 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전문 생산단지,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100억불 달성, 저비용 고효율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 등 R&D확충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관 김종필)

4. 남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협력

북한에 대한 지원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정신과 북한주민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는 ‘동포애’ 정신을 구현한다는 당위적 측면과 남북화해 협력의 실현이라는 실용적 측면을 동시에 지닌다. 대북지원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북한 주민의 생활고를 덜어주고 우리 동포애를 전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한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인도적 지원은 국제적으로도 지원대상국의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는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 범위내에서 성의껏 돕는다는 입장에서 북한의 식량사정, 남북관계 상황, 국제사회의 지원동향 등을 고려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북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가. 정부부문

정부차원의 지원액은 2008년 현재 총 13억 6,808만달러로 전체 대북지원액의 66.0%를 차지한다. 1995년 쌀 15만톤 무상지원을 시작으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220만톤을 차관형식으로 지원하였고, 2006년에는 북한의 수해복구를 위해 쌀 10만톤을 무상지원하였다. 2007년에는 쌀 40만톤을 차관형식으로 지원하였으나, 2008년에는 쌀지원 실적이 없었다. 1999년부터 비료 11.5만톤을 당국차원의 지원으로 시작하여 매년 20~35만톤씩 2007년까지 총 255.5만톤(8,144억원)을 무상지원 하였으며, 2008년에는 비료지원 실적이 없었다. 북한의 2008년도 곡물생산량은 전년 401만톤에 비해 7.7% 증가한 431만톤이며, 북핵 문제로 인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식량지원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나. 민간부문

1995년부터 시작된 민간의 대북지원은 초기에는 대한적십자사가 국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기탁받은 물품을 국제적십자연맹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졌으나, 1999년 2월 10일 대북지원 창구 다원화 조치에 따라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민간단체도 독자창구로서 지원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1995년부터 2007년까지 7,160억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 725억원을 지원하여 2008년까지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총규모는 7,885억원이다. 2008년도에는 남북관계가 조정국면에 접어들면서 당국간 대화가 단절되고, 북한의 통행인원 제한조치로 예년에 비해 지원사업의 환경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차원의 지원은 꾸준히 계속되었다.

정부는 보건의료, 어린이 등 취약계층 지원 및 농업개발 분야 등의 지원 활성화를 위해 2000년부터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대북지원사업 중 지원의 시급성, 북측 수혜대상과 분배지역, 분배투명성 확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대북지원 사업내용도 기존의 긴급구호나 일회성 지원, 단순물품 지원에서 벗어나 북한에 기술 전수가 가능하거나 자립·자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성 사업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지원분야도 농업개발, 보건의료,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다양하게 확장·전문화되고 있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관 이동홍)

제 3 편

2009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시책

- 제 1 장 2009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시책방향
- 제 2 장 2009년도 주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시책

제1장 2009년도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시책방향

제1절 2009년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목표

우리나라 농어업·농어촌은 대외적으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적 실물경기 침체와 한·미 FTA, 한·EU FTA, 한·캐나다 쇠고기 협상, WTO/DDA 협상 진전 등으로 농어업분야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국제 원자재 값은 하락추세이나 원화가치 하락으로 인해 사료, 비료 등 농자재 가격의 불안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환율 인상, 한식에 대한 관심 증대로 농식품 수출에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경기침체로 인한 대외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이다.

대내적으로는 농수산물의 과잉생산 추세에도 경기 불황에 따라 소비위축 등 농림수산식품 연관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멜라민 사태 등을 겪으면서 식품구입시 안전성과 품질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등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IMF 이후 조기퇴직 등으로 인해 귀농·귀향 인구가 증가하고, 환율강세로 해외 관광수요가 감소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농산어촌 체험관광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 여건 변화가 우리나라 농정에 미치는 영향에 적절히 대응하고, 우리 농어업·농어촌을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기를 넘어 새로운 농식품의 시대로'라는 비전으로, '농정변화와 개혁, 농어업 역량 강화, 농수산식품 수요창출, 농어촌 삶의질 향상'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한다.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 주원철)

제2절 2009년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시책방향

2009년도에는 농정비전과 4대 목표를 바탕으로 특히, 다음 8대 핵심과제와 아울러 ‘위기극복 및 경제살리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 첫째, 협동조합 및 공공기관 개혁
- 둘째, 농식품 R&D 개편 및 녹색성장 기반조성
- 셋째, 유통구조 개혁
- 넷째, 농식품 수출 확대
- 다섯째, 해외농림어업 개발 및 자원 확보
- 여섯째, 식품산업 육성
- 일곱째, 농어가 경영안정
- 여덟째, 농어촌 생활 및 복지여건 개선
- 아홉째, 위기극복 및 경제살리기

1. 협동조합 및 공공기관 개혁

정부는 우선 농협을 농업인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회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용사업의 수익은 농기계 은행 운영 등 농업인에게 이익을 돌려 주는데 집중하도록 할 것이며, 일선조합은 광역화와 경쟁축진을 통해서 농업인의 이익을 최대한 배려하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다.

수협·산림조합도 경영효율화 및 지배구조개편에 중점을 두어 개혁해 나가게 된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해당기관의 기능을 명확히 정립하고,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과감한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마사회 등도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인력과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2. 농식품 R&D 개편 및 녹색성장 기반조성

정부는 연구와 정책과 현장이 서로 연결되도록 하여, 실용성·생산성이 향상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여, 생산중심의 연구에서 식품가공·저장·유통·상품화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며,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외부기관이 철저히 평가·환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지역별로 산재되고 품목별로 중복된 연구기관들이 특성화될 수 있도록 “1품목 1연구기관” 원칙하에 통합 및 전문화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녹색성장 기반조성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작물이나 어종의 변화 등으로 농어업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현재 목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이오매스의 에너지화를 앞으로 가축분뇨까지 확대해 나가고, 산림가꾸기 확대, 바다숲 조성을 통해 탄소흡수 역량을 키우고 해조류 등 바다자원이 에탄올, 펄프 등으로 산업화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3. 유통구조 개혁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혁하여 농어업인은 제 값 받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군단위 유통회사를 설립하여 산지의 규모화·전문화를 촉진하게 되며, 농수산물 사이버 거래소 설립 등 직거래 방식을 다양화하고,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4. 농식품 수출 확대

정부는 '09년도 수출목표를 '08년보다 18% 증가한 53억불로 설정하고, 국산 식재료 수출을 본격 추진하여 국내 농어가와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해외시장개척활동을 강화하고, 통관·검역 등 수출과정의 장애요인도 적극 발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5. 해외농림어업 개발 및 자원 확보

정부는 해외 농림어업개발을 통해 부족한 국내 농림수산물 자원을 보충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곡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08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09년에 지원대상 민간업체 선정 및 필요한 생산·유통시설 비용 등의 지원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노후어선 대체 등 원양산업을 육성하여 수산자원을 확보해 나갈 것이며, 해외 조림 확대를 통해 목재 수급을 원활하게 할 것이다.

6. 식품산업 육성

정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동북아 식품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100개의 식품기업과 10개 연구소 유치를 목표로 적극적인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농어가와 농식품기업이 공동 투자하여 산지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향토자원을 활용한 지역 식품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국내의 우수한 한식조리인력과 한식당을 육성하고 이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등 한식세계화를 통해 해외 수요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세계 김치연구소를 '09년에 설계하여 '10년에 완공하고, 세계 김치협회 창설을 추진하며, 천일염 산업화를 위해 위생적인 저장·생산시설을 설치한다. 고추장, 된장 등도 기호식품으로 가공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시설현대화를 지원하는 등 김치 등 6대 전통·발효식품의 세계 명품화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농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쇠고기이력추적제, 원산지표시제를 확대하는 한편, 농식품안전 관련기관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7. 농어가 경영안정

정부는 농어가의 경영안정도 확고히 할 것이다. 만성적인 부채부담을 줄

이고, 영농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시작된 농기계 은행사업은 농협이 내년 상반기까지 3천억원을 투입하여 717개소 농기계은행에서 중고농기계 매입을 완료토록 할 계획이다. 비료, 사료 등 농자재 가격 안정 대책도 보다 강화하여 추진한다.

DD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12년에 시행예정인 농어가단위의 소득안정제도 현재 농가의 영농면적, 재배품목 등 경영정보를 등록 중이며, '09년 하반기까지 완료토록 하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

채무상환이 어려운 농어가는 농지은행에 농지나 농업용시설을 매도하여 빚을 갚도록 하고, 매도한 농지에서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별로 각기 운용되던 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보험으로 통합하고, 대상품목도 벼를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8. 농어촌 생활 및 복지여건 개선

정부는 젊은 귀농인력이 일정지역에 모여 살 수 있도록 농어촌뉴타운 5개소를 시범조성하며, 교육, 문화, 교통 등 관련시설이 집적된 전원형 주택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농어촌 주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학자금 무이자 융자 및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땀감을 제공하고 정부 쌀 할인 공급을 추진한다.

9. 위기극복 및 경제살리기

정부는 청년층, 전문가, 저소득층 등 계층별로 일자리를 구분하여 채용하는 등 32천여개의 신규일 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대졸 미취업자의 실업난 해소를 위해 '농어촌 e-서포터즈'를 설립하여, 농어촌 IT도우미, 쇠고기 이력추적 등 업무에 활용할 것이다. 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해 공공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고,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민간기업의 참여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어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를 활성화할 것이다. 대규모 유리온실단지 조성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지원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재원마련을 위한 투자펀드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아가는 한편, 농식품분야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특히, 농식품부 예산 중 지역 건설 경기와 관련성이 깊은 농업 SOC관련 예산의 조기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재해예방시설은 저수지, 양·배수장 등 핵심시설 위주로 조기 완공하기 위해 1조2천억원 중 64%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함과 아울러 '09년 내에 내부개발 착수를 추진할 것이다. 동절기에 공사가 가능한 경지정리 등 사업은 상반기 중 84%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4대강 인근지역의 농어촌 마을정비와 향토자원 상품화사업을 4대강 하천경관, 강변도로 개설과 연계하여 농산어촌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고,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용수공급이 확대되도록 저수지 등 농업용 시설을 정비하는 등 농어촌 활성화의 기회로 삼을 것이다.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 주원철)

제3절 2009년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부문 예산규모

1. 2009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부문 예산편성 방향

2009년도 농수산물예산은 한·미 FTA 등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경쟁력있는 농수산업 육성과 살기 좋은 농어촌 실현에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및 지역개발, 친환경·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유통개선 촉진을 위한 지원도 확대 하였다.

또한, 신정부 출범과 함께 금년부터 농림수산물식품부로 일원화된 수산

분야, 식품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이외에도 한미 쇠고기 협상 후속대책으로 확정 발표된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및 축산업 발전 대책’ 추진에 필요한 소요와 한미 FTA 보완대책 소요를 별도로 확보하여 개방확대에 따른 농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주안점을 두었다.

농수산물분야 예산편성 내역의 주요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림어업분야의 GDP가 24조원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술개발(R&D) 및 수출지원을 확대하고, FTA협상에 대비해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08년보다 3,513억원(9.7%) 증가한 3조 9,683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농수산물식품 산업을 기술주도형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R&D 관련 예산을 239억원(12.6%)을 증액한 2,188억원 투입하기로 했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 및 원예산업의 체질강화를 위해 과수·축사 시설현대화 및 브랜드 육성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금년 대비 7.4%(965억원) 증가한 1조3,943억원으로 편성했다.

둘째,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1,102억원(7.8%)을 늘려 1조 5,184억원을 반영했다. 기존에 산지유통을 담당하는 농협 등 생산자단체의 직거래 유통 지원을 촉진하고, 소비지 대형 유통업체의 직접구매자금도 지원한다. 농수산물 거래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사이버 거래소 설립(3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생산물의 1/3 이상을 수집·유통·판매할 수 있는 시·군 단위 유통회사 6개소 신규 설립에 필요한 40억원을 지원한다.

셋째,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융·복합화로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해 식품산업을 중점 육성키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08년보다 1,043억원(17.7%) 증액된 6,954억원을 반영했다. 농어업인이 출자하는 식품제조업체에 경영안정자금(100억원)과 국내산 농수산물의 식재료 사용촉진을 위해 식재료의 가공처리 및 공동조리 시설비(72억원)를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식의 세계 5대 음식화를 목표로 시장개척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세계수준의 한식조리아카데미 운영지원 등 소요사업비를

30억원에서 246억원으로 크게 확대했다.

넷째, 새정부 출범과 함께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된 수산분야는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수산자원 조성 및 회복에 필요한 어장관리 강화와 안정적인 어가경영 지원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324척을 폐선(1,299억원)하도록 지원하고, 백화현상으로 황폐해가는 해역(33천ha)의 수산생태계 보존을 위해 바다숲 조성사업도 신규로 추진(100억원)한다.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어선 및 어선원 보험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양식수산물 재해재보험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438억원).

다섯째,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재정적으로 적극 뒷받침(3,127→4,072억원)할 계획이다. 축산분뇨로 인한 메탄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설치지원을 확대하고, 우수 난방기·농기계와 유류절감형 어선장비 보급 등을 통해 에너지 절감을 확산시킨다. 한편, 2013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을 10%로 확대하기 위해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등 생산 및 유통 인프라 확충도 적극 지원한다.

이외에도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예산 확대와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한 예산을 지속 지원한다(3조3,405억원). 특화품목이나 향토자원 등을 활용한 복합 산업화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6,44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2. 2009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분야 예산규모

2009년도 농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총 14조 5,161억원으로 2008년 보다 4.0%(5,612억원) 증가했다. 부문별 재정배분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3-1-1>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 부문별 규모(2개 외청 포함)

(단위 : 억원)

구 분	2008 (A)	2009 (B)	증△감	
			(B-A)	%
◇ 농림수산식품 분야 총지출	159,821	167,798	7,977	5.0
《농림수산식품부》	139,549	145,161	5,612	4.0
▶ 예산 일반지출	89,083	96,076	6,993	7.8
▶ 기금 일반지출	50,466	49,085	△1,381	△2.7
<농업·농촌>				
○ 농업체질강화	22,628	25,140	2,512	11.1
○ 농가소득·경영안정	31,306	26,763	△4,543	△14.5
○ 농촌개발·복지증진	13,121	14,174	1,053	8.0
○ 양곡관리·농산물유통	30,124	32,363	2,239	7.4
○ 농업생산기반	19,491	21,924	2,433	12.5
<수산업·어촌>	14,139	14,984	845	6.0
<식품업>	3,757	4,739	982	26.1
《산림청》	13,322	15,602	2,280	17.1
《농진청》	5,509	6,315	806	14.6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 서준한)

제4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시책 추진체계 개선

1. 농업·농촌 및 식품사업 사업투·융자 평가 및 효율성 제고

가.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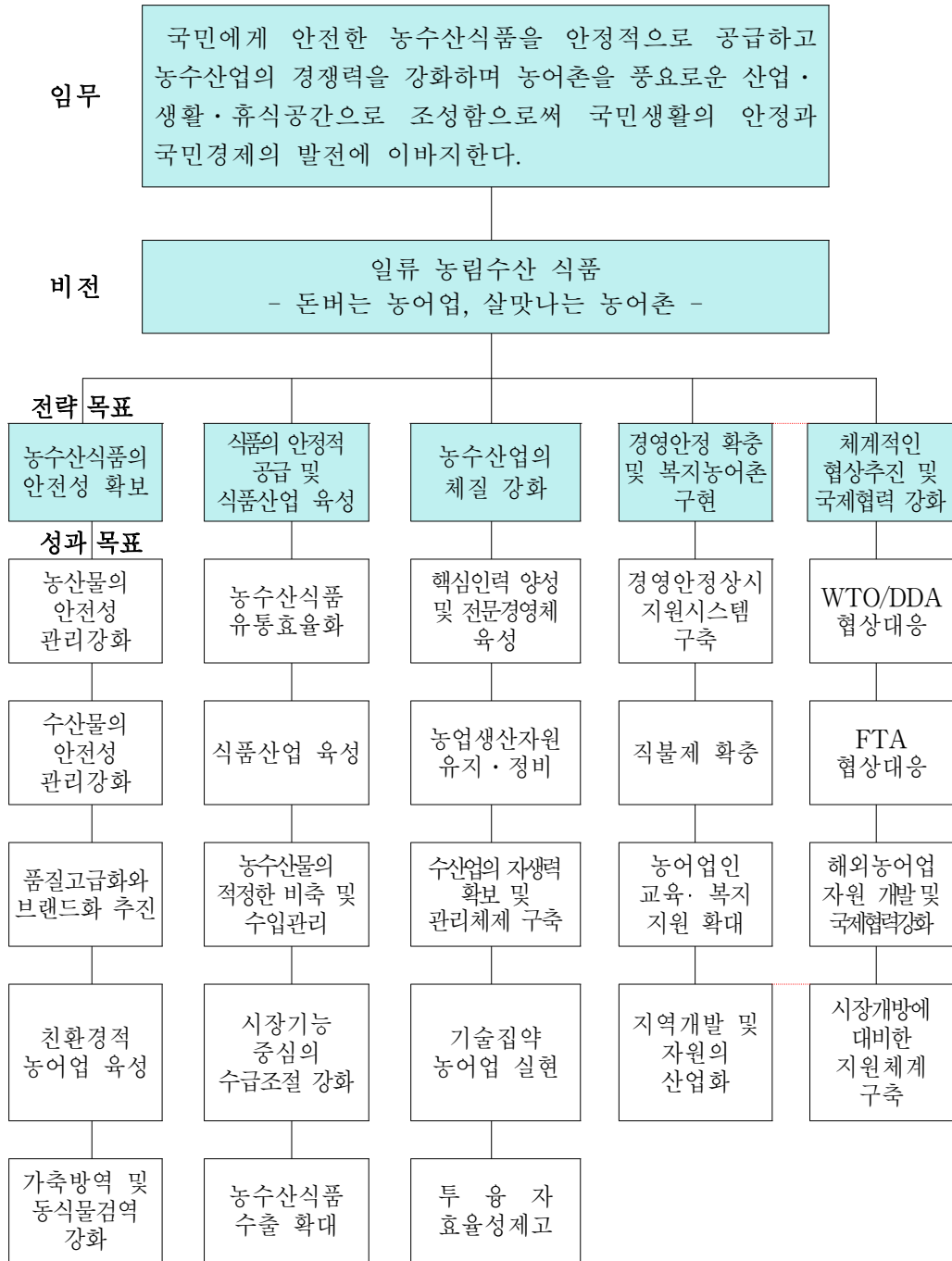
정부는 2006년 3월, 기존 정부업무평가를 체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자율적 평가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각 중앙행정기관의 국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정책의 수립·시행·평가·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제정하여 제5조 및 6조에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2007년부터 의무화하고 국회상임위에 보고를 명문화하였다.

“성과관리 전략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5년) 계획으로 기관의 임무·전략목표 등을 설정하고 다른 법령에 의한 중·장기 계획 및 재정 운영계획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최소 3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해야 한다.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동 시행계획에는 당해연도의 성과목표·성과지표 및 재정부문의 과거 3년간 성과결과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1) 성과관리전략계획 수립

2008년 2월 농림부와 해양수산부가 농림수산물식품부로 통합됨에 따라 농림수산물식품부의 임무(Mission)와 비전(Vision)을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농어촌을 풍요로운 산업·생활·휴식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와 “일류 농림수산물 식품, 돈버는 농업·살맛나는 농어촌”으로 각각 정하고 동 임무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5개와 성과목표 23개로 하는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2월 국무총리실에 제출하였다.

성과관리 전략계획 체계도(2009~2013)



2)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

성과관리시행계획은 성과관리전략계획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작성하여 2009년 2월 국무총리실에 제출하였다.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임무·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는 성과관리 전략계획을 그대로 인용하여, 전략목표 5개와 성과목표 23개로 구성하였다.

성과목표내 관리과제는 255개로 주요정책과제 91, 재정성과 144, R&D 6, 정보화 1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관리과제는 프로그램예산체계상 단위사업중심으로 반영하고 관리과제별 성과지표가 중복사용을 되지 않도록 하며,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제도 개선('08.5월)에 따라 인사, 조직분야는 제외하고 있다.

아울러 예산편성시 제출토록 되어 있는 국가재정법의 '성과계획서'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분리하여 '10년 성과계획서는 재정사업만을 대상으로 작성하며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거쳐 2009년 9월말에 국회에 제출하였고, '10년 성과관리시행계획은 재정사업에 정책과제를 포함하여 2010년 1월중에 수립할 예정이다.

(정책평가담당관실 농업사무관 하혜경)

나. 농림수산사업 성과평가 추진

1) 2008년 성과평가 결과

2007년 주요 53개 재정사업 평가에 이어 2008년에도 77개의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대상사업은 평가결과의 활용 및 일 줄이기 정책 등을 고려하여 '09년 재정성과 자율평가 대상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2005년부터는 기획재정부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체도를 도입함에 따라 투융자관리계획의 작성과 평가부서의 총괄평가는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사업담당부서의 자체평가를 기획재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재정

사업자율평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평가의 통일성 및 사업담당부서의 평가업무 부담을 경감 시킨것이다.

농림수산사업 성과평가는 사업담당부서가 사업별로 사업수행 당해년도에 평가지표와 목표달성 전략을 수립하고, 익년도에 사업담당부서의 자체평가와 평가부서의 총괄평가를 실시한 후, 학계·생산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식품업무자체평가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사업별로 조직목표, 상위 정책과의 연계성,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상충성, 목표달성도, 프로세스(의견수렴, 현장점검, 정책홍보 등) 관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한다.

2008년도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는 예산편성방향을 증액 또는 현수준 유지, 현수준유지, 현수준유지 또는 감액, 감액, 통합·폐지·사업종료 등으로 구분 제시하고, 제시된 예산편성방향에 따라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였다. 또한 사업별로 제시된 제도개선 사항은 법령정비, 사업지침의 수정 등을 통해 개선하였으며 일부는 검토 중에 있다.

<표 3-1-2>

2008년도 농림수산사업 성과평가 결과

(단위 : 개)

예산편성 평가의견	2007년 사업	2008년 사업	2008-2007 (%포인트)
계	53(100%)	77(100%)	
증액 또는 현수준 유지	22(41%)	11(14%)	△27
현수준 유지	4(8%)	32(42%)	34
현수준유지 또는 감액	18(34%)	11(14%)	△20
감 액	5(9%)	9(12%)	4
통합·폐지·사업종료	4(8%)	14(18%)	10

평가결과를 요약하면 i)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창업후계농어업인 육성, 도농교류활성화, 해외시장개척지원 등 11개 사업은 예산을 증액 또는 현수준 유지, ii) 농어업농어촌가치및소비촉진홍보, 농업벤처육성, 농업인교

육훈련(농특,군특), 배수개선 등 32개 사업은 현수준 유지, iii) 농어업경영 컨설팅, 농촌마을종합개발, 브랜드경영체종합지원, 수협경영정상화지원 등 11개 사업은 현수준유지 또는 감액, iv) 발기반정비사업(농특,군특), 농산물 브랜드육성(밭작물,원예), 폐업지원, 마필육성사업 등 9개 사업은 감액, v) 농지매매사업, 농지임대차사업, 농지교환분합사업, 어망생산운영자금 등 14개 사업은 통합·폐지·사업종료를 제시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도 농림수산사업 성과평가를 통한 “선택과 집중”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농수산업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는 한편, 선진국의 사례분석, 외부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사업평가제도를 지속 개선하여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2) 2009년 농림수산사업 성과평가 계획

2006년, 2007년, 2008년에 이어 2009년 농림수산사업 성과평가도 계획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과정을 이행 중에 있다.

2008년 농림수산사업 성과평가는 77개 주요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평가 체계의 확립 및 평가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아직도 일부사업의 경우 투입 또는 산출지표를 평가지표로 제시하고 목표치도 보수적으로 설정하여 평가의 질적인 면에서는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2009년도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성과지표에 대하여 계속 수정·보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성과지표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가) 2009년도 성과평가 대상사업

평가 대상사업으로는 i) 정상적인 행정경비, 행사성사업비, 정부내지출, ii) 2009년 종료사업, 2010부터 통합되는 사업 등을 제외한 평가의 실익이 있는 주요 재정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나) 평가방법 및 절차

각 사업부서는 소관사업의 평가지표·목표치·사업추진 프로세스 관리계

획을 담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작성한 다음 사업종료 후 사업담당부서는 재정사업자율평가 체크리스트에 따른 자체평가결과를 평가전담부서에 제출(2010년 3~4월)한다. 평가부서에서는 사업부서 자체평가결과, 성과달성 실적, 프로세스 관리결과 등을 기초로 i) 예산편성방향 ii) 제도개선사항 iii) 개인 성과등급을 제시하는 총괄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농식품업무자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 평가방법

사업의 목표, 추진체계, 지원조건 등을 적극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예산편성방향은 증액 또는 현수준유지, 현수준 유지, 현수준 유지 또는 감액, 감액, 통합·폐지의 i)증액 ii)현수준유지 iii)감액 iv)통합 v)중단의 다섯가지를 기본유형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혼합유형을 제시하여 전년에 비해 예산편성 방향을 더욱 명확히 제시할 계획이다.

(정책평가담당관실 농업사무관 하혜경)

다. 지방자치단체 농정업무평가 시책

2009년도 지자체 농정업무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거 평가 결과의 객관성 및 공정성제고, 부처담당자 등 내·외부 전문가 참여강화, 평가시책 및 대상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체계 운영 등의 기본방향하에 행안부 주관으로 합동평가를 실시하였다.

합동평가는 VPS(온라인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를 활용 On-Line 방식으로 평가하고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적 증빙자료 확인 및 현지검증을 병행 실시하였다. 평가결과는 공통평가인 가축방역시책의 경우 시부(市部)와 도부(道部)로 구분하여 분야별로 등급화(3개)하였으며, 부분평가인 지자체 농정업무 시책은 도별로 평가점수를 등급화(3개) 하였다.

그러나 가축방역시책은 보건위생분야에 포함되어 행안부의 합동평가 점수에 반영된 반면, 지자체 농정업무 평가시책은 부분평가로 합동평가 점수에

미 반영되어 지자체 공무원들의 불만을 초래하였다.

앞으로도 농수산 여건변화에 부응하고 지자체의 농정업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표를 개발 및 수정·보완하고 지자체 농정업무 평가가 공통 평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평가담당관실 농업사무관 김해녕)

2. 농식품행정 효율성 제고 및 규제개혁

가. 농식품행정 효율성 제고

농림수산식품 행정업무를 수요자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불필요한 관행과 절차를 없애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변화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국민이 만족하는 실질적 성과창출, 현장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하는 실용적 행정문화 정착, 미래를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을 목표로 세부적인 실천과제를 마련하였다.

조직활력과 高成果 창출을 위하여 ‘신나는 일터’를 만들고자 펀(Fun)강좌 개설, 임산부 출산휴가시 ‘업무 대행자’ 수당 지급, 샌드위치데이 휴가나누기, 농림수산식품분야 기관(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간 현장방문을 통해 일하는 방식과 수행업무 이해제고를 통해 상호소통을 강화하고자 기관 간 방문행사(Office Visiting)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업무 효율화와 창조적 조직문화 형성을 통한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GWP(훌륭한 일터) 만들기’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장관과 직원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7.13일부터 17일까지 1주일간 계장급의 장관 대면결재를 실시하였으며, 대면결재에 참여한 계장급 대부분이 최종결재권자인 장관님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추후에도 업무형편 등을 감안하여 특정기간을 정하여 계장급들의 장관 대면결재를 실시 할 계획이다.

상시 학습문화 분위기를 조성하여 구성원의 창의역량을 강화하고 성과창출을 유도하고자 액션러닝 교육을 내실화하고 현안맞춤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이고 자기 주도적 변화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애니메이션기법을 활용한 에듀라마(Edurama) 교육을 도입 운영하였으며, ‘학습동아리’를 활성화시키고 성과창출을 위해 업무와 연관된 학습동아리(44개)와 기관(부서)별 업무프로세스개선 자율과제(29개)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각 부서에서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연2회(상·하반기) 자체제안심사회의를 개최하여 창안등급을 심사하고 우수제안자에 대하여는 시상(상반기 5건)과 함께 중앙우수제안으로 추천하고 있다.

아울러 불합리한 행정내부 제도개선·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정책추진과 국민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선과제를 발굴(6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하는 절차와 방식 개선을 통한 업무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위임전결권 확대, 긴급현안 발생 시 ‘先조치 後보고’, 각종 회의·행사 관련 참고자료는 ‘Talking Point’ 중심으로 간략히 하는 등으로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내부제도 개선 우수사례와 우리 부와 양청(농진청, 산림청)간 협력을 통해 제도개선한 우수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농림수산식품 기관 성과 공유회를 12월 초에 농촌진흥청에서 개최 할 계획이다.

종합적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에 반영하여 정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대한 부내만족도를 조사하여 내부 서비스를 향상하는 등 행정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림수산식품 정책의 품질 향상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계획이다.

(행정관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박원태)

나. 농림수산식품행정 규제완화

2008년말 기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행정규제는 416개이다. 2009년도 규

제의 정비방향은 정부의 경제살리기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바탕으로 전 정부적으로 규제개혁에 높은 국정 우선순위 부여하고, 투자 활성화 및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의 추진과 국민생활 편의 제고 및 서민보호를 위한 규제개혁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점을 적극 감안하여

농어업 성장동력 확충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완화,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육성발전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또한 무분별한 규제신설의 남용을 방지하고 규제의 신설·강화시 실시하는 규제영향분석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개정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08.12월)에 따른 규제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규제정비 과제발굴을 위해서는 규제과제 발굴을 종전의 전경련 등 경제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에만 국한하지 않고 농어업 현장으로부터의 각종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한 소비자 및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규제개혁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금년도에는 규제정비 대상과제로 61건을 선정하여 연말까지 이를 정비할 계획이며,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가 발견되면 규제개혁 과제로 추가 선정하는 등 규제정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정비대상과제의 주요내용은 주요 분야별로는 농지이용 효율화 및 농촌지역개발 제도개선, 협동조합 자율성 제고, 농축산물 가공·유통 활성화, 농자재산업 자율성, 농식품 인증제도 개선, 어업제도 합리화 및 자율성 제고 등이다.

비농업인도 소유할 수 있도록 평균 경사율 15% 이상인 한계농지의 범위를 설정하여 농지에 대한 개발효율성을 증대시켜 농어촌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수도권산업단지 농지보전부담금을 완화하는 등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생활환경 정비사업시행계획 승인권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

청장으로 각각 위임을 확대하도록 한 기준을 20만㎡로 정하도록 농어촌정비법시행령에서 개정하는 등 행정절차 단계 축소에 따른 사업시행자 편의 제고와 사업 추진기간 단축으로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어촌생활환경마을정비사업의 시행자를 민간에 개방한 것과 관련하여 마을정비조합의 구성원의 자격기준, 운영관리, 주택소유자의 구성요건 등 민간 참여 범위를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농협개혁과 관련해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조합을 선택, 가입할 수 있도록 조합원에게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조합선택권을 읍·면단위에서 시·도까지 확대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권익향상 및 조합 규모화를 촉진하고, 일선조합의 사업규모화를 위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출자자 범위를 조합외에 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존 조합에만 한정하던 따른 자금부족, 낮은 경영수준 등 법인운영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일선조합의 사업을 규모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축산자재 및 가공·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농약에 대한 품목등록 사항 중 포장단위 등 경미한 사항은 품목변경신고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농업기계 사후봉사업자는 규모에 따라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시설 설치기준을 농가에 설치 사용하는 농기계의 경우에는 옥내 작업장 확보기준을 완화하도록 하여 옥내작업장 확보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료제조업 등록시 불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승인토록 한 권한을 지자체장에 위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등 농축산 자재산업 및 농축산물 가공·유통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업경쟁력 강화와 어업인 부담경감을 위하여 수산 관련법령에 따라 현재 양식어업 면허를 제한하고 있는 대기업 및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도 양식어업의 규모화·기업화를 위해 양식어업에 참여를 허용하도록 하여 양식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업종별 허가가 필요한 정치성 구획어업 등 연근해 어업의 유사업종을 현행 13종에서 5종으로 통합하여 어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하고, 어선의 출·입항 시마다 신고

하는 불편해소를 위해 서면신고 제외 어선의 범위를 현행 2톤에서 5톤까지 확대하고, 신고도 전화 또는 통신망 등의 신고로 대체하는 등 연근해어선(63천여척)중 15천여척이 추가로 신고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2009년은 규제개혁이 새 정부 국정 최고과제의 추진되는 두 번째 해를 맞이하는 만큼 규제개혁에 대한 의식기반이 더욱 공고히 구축되도록 규제개혁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의식고취 등 개혁마인드 제고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기관 이호재)

3. 농림수산식품부 조직 및 직제제정 추진

금년 4월 대국대과제를 적용한 효율적인 기능조정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직제 개정을 추진하였다.

첫째, 공통부서의 인력 9명을 정책·사업부서로 전환 재배치

둘째, 부서별로 분리되었던 동일 기능을 통합

- 국제협상·협력 창구의 일원화(국제협력국)
- 기술정책 관련업무의 통합(과학기술정책과)
- 검역·검사 업무의 통합(표시검역과)
- 농촌사회, 복지, 문화 관련업무의 통합(농촌사회여성팀)

셋째, 녹색성장정책관을 신설하여 녹색성장, 미래전략 관련조직 보강

넷째, 국민의 농식품 안전관련 수요를 감안하여 소비안전정책관 신설

또한, 농수축산물의 검역·검사 업무 강화를 위해 관련 인력 49명을 증원(검역원 6, 식검 6, 종자원 4, 검사원 33) 하였고, 국립수산과학원의 기능을 조정하여 본부 5명, 수산물검역인력 8명, 어업현장의 안전지도요원 19명 등 32명을 전환 재배치하였으며, 한국농수산대학의 소속을 농촌진흥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고 소속기관장 직급을 일부상향조정(4급→3·4급)하며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66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등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일부 개정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21453호, 2009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21753호, 2009년 9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68호, 2009년 4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령 제84호, 2009년 10월 1일)>

앞으로 농수축산물 검역·검사체계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관련 소속기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일원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을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산업이 강한 부처, 강한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 및 인력증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관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이종태)

제2장 2009년도 주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시책

제1절 쌀산업 구조 개편

1. 새로운 양정제도의 정착

국내생산량의 30% 수준에 달했던 정부수매량이 1995년 WTO체제출범 이후 지속적인 수매보조금 감축(매년 750억원)으로 생산량의 15%수준까지 줄어들어 추곡수매제 본래의 소득지지기능과 물량흡수기능이 축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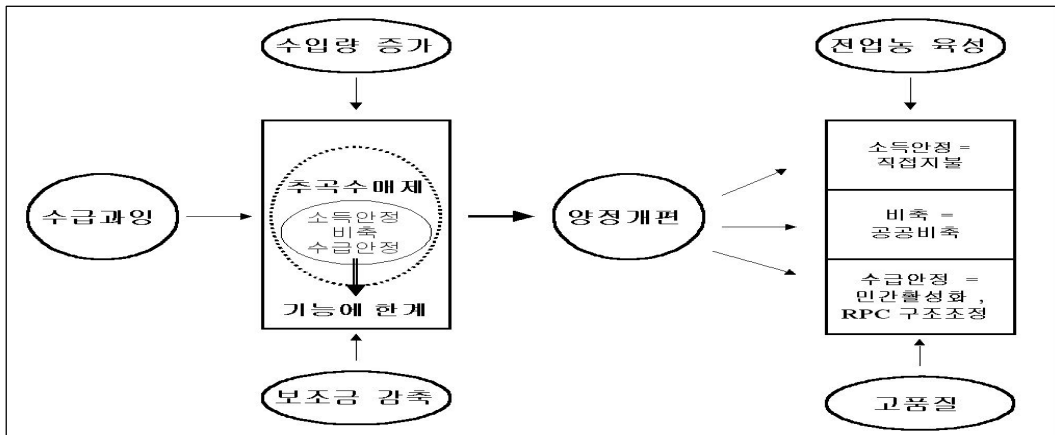
향후 DDA협상 이후 추가적인 보조금 감축이 이루어질 경우 수매제도 유지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오던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양정제도를 개편하였으며 변화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중에 있다.

또한, '04년 쌀 관세화 유예 협상으로 의무수입물량이 증가되어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관세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 향후 농업인 등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관세화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식량정책과 서기관 박선우)

<양정제도 개편>

- ◇ 쌀농가의 소득안정, 식량안보목적의 비축, 수급조절 기능을 추곡수매제도가 담당해왔으나,
- ◇ 앞으로는,
 - ① 소득보전방안을 통한 직접지불로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 ② 식량안보목적의 비축은 공공비축제로,
 - ③ 수급조절은 민간 수급조절기능 활성화로 달성
- ◇ 전업농 규모화와 고품질화로 쌀산업 경쟁력을 확보



가. 공공비축제

공공비축제 도입당시 향후 쌀 소비량 등을 감안하여 매입물량을 3년뒤에 재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2008년 7월에 2008년 이후 공공비축 규모를 결정하였다.

식량소비량을 기준으로 재검토 한 결과 비축규모는 72만톤, 연간매입량은 36만톤으로 하되 연차별로 감축하기로 하였다. 연차별 매입규모는 2008년에 40만톤, 2009년에 37만톤, 2010년에 34만톤이다.

2009년 매입계획량은 37만톤으로 그 중에 포대벼는 33만톤(톤백사업은

본사업 실시), 산물벼는 4만톤을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2008년 및 2009년 연속적인 대풍으로 2009년 수확기 쌀값이 크게 하락하여 공공비축미곡 매입량(37만톤)과는 별도로 수확기 쌀시장 안정을 위해 평년작 이상 생산량인 34만톤을 추가 매입하기로 하는 등 총 71만톤을 매입하였다.

우선지급금은 2008년도와 마찬가지로 1등급(40kg)을 기준으로 49,02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7년도에 처음 실시한 톤백벼 매입은 대농가로부터 호응이 좋아 2008년에는 4만톤을 매입하였고, 2009년부터는 농가가 출하방식을 선택 가능토록 본 사업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2010년부터는 벼 검사규격 중 ‘수분’ 항목 최저기준을 설정으로 과잉건조로 인한 중량 감소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 방지 및 정부 쌀 품위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양곡 매입·포장단위 규격에 대형포장(800kg)을 추가하여 출하 농민 및 수요업체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식량정책과 농업사무관 이재갑)

나.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

정부는 하락시에 쌀생산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를 2005년부터 도입하면서 쌀 80Kg 가마당 목표가격을 170,083원으로 설정하고 3년마다 변경하도록 하였으나, 2008년 3월 법령개정(의원입법)으로 기존의 목표가격을 2012년산까지 연장하고, 5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 법률개정시 직불금 대상농지를 1998~2000년 사이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하던 것을 “동 기간 동안 경지정리, 자연재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도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직불금 신청한도 “2월말”에서 “장관이 정하는 날”로 변경되었다.

고정직불금은 쌀값과 상관없이ha당 평균 70만원(농업진흥지역 안 746천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597천원)을 지급하고,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그 동안 고정직불금은 10월에, 변동직접직불금은 익년 3월에 지급하여 왔으나, 2008년도에는 등록신청자의 실제 경작 여부를 일제 재조사한 후, 같은 해 12월에 지급하였으며, 2008년산 쌀의 변동직접지불금은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이 162, 307원(쌀 80Kg)으로 높게 형성되어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표 3-2-1>

구분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총지금액
	농가수 (천호)	면적 (천ha)	금액 (억원)	농가수 (천호)	면적 (천ha)	금액 (억원)	고정+변동 (억원)
2008년산	1,097	1,013	7,118	-	-	-	7,118
2007년산	1,077	1,018	7,120	1,020	933	2,792	9,912
2006년산	1,050	1,024	7,168	1,000	951	4,371	11,539
2005년산	1,033	1,007	6,638	984	940	9,007	15,045

한편 정부에서는 ‘05년부터’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채 지주 등이 논농업에 실제 종사하지 않으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다는 여론이 있어 ‘05년부터’ 08년 기간 중에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한 사람들 모두에 대해 실경작 여부 등에 대한 특별조사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농가소득안정추진단 행정사무관 변동주)

2. 쌀 전업농 육성

쌀전업농 육성사업은 한국농업의 근본 문제중의 하나인 규모의 영세성을 탈피하고, 쌀산업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UR 협상이 타결된 직

후인 1995년부터 본격 추진되었다. 본 사업은 WTO 체제 출범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우리 쌀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 기본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책임질 수 있는 규모화·전문화된 효율적 경영체를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의 사업추진 결과 1995년에는 14천호의 쌀 전업농이 선정되었고 이들에 대해서는 농지규모화사업의 농지매매사업, 농지임대차사업, 교환분합사업을 통해 경영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농지 집단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농지매매·임대차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비농업인, 고령농가, 은퇴농가의 농지를 매입·임차하여 논·밭의 경영규모를 확대하려는 쌀 전업농에게 매도·임대하는 사업이다. 농지매매사업을 통해 농지를 지원받은 농가는 2006년부터 연리 2.0%를 적용하여 연령에 따라 최장 30년에서 15년까지 균등분할 등의 조건으로 농지매입대금을 상환하고, 임대차 사업을 통해 농지를 임차한 농가는 계약기간(5년 이상)동안 무이자로 매년 임차료를 상환토록 하고 있다.

농지규모화사업이 본격 추진된 1995년 이후 2008년까지 4조 6천억원의 투·융자를 통해 51.7천호의 쌀 전업농에게 122천ha(매매 43천ha, 임대 78천ha, 교환분합 1천ha) 논을 유동화하였다. 그 결과, 지원받은 쌀 전업농의 논 경영규모가 호당 2.6ha에서 2008년에는 5.1ha로 2.5ha가 증가하였으며, 이들 쌀 전업농이 담당하는 경영면적도 1995년에는 전국 벼 재배면적의 3%에 불과하던 것이 2008년도에는 36%로 확대되었으며, 이들의 72.7%가 40~50대의 청·장년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욱이 쌀 전업농들은 보유한 농기계를 활용하여 인근 지역의 소규모 농가의 농작업을 대부분 대행하고 있는 등 지역농업을 실질적으로 유지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경영체가 다수 출현하여 시장 지향적인 경영마인드를 갖고 우리나라 쌀생산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향후 쌀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우리 쌀농업의 체질 강화와 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해 「쌀 전업농 육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해오고 있다. 본 대책의 목표 및 비전은 2013년까지 지대별 여건 등을 감안, 호당 경영규모 6ha 수준의 쌀 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여 이들이

2013년 예상 벼 재배면적의 절반 수준인 420천ha를 경영토록 하고,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과 대등한 소득수준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주요정책내용은 ① 쌀 전업농의 규모화, 정예화로 쌀산업 핵심 주체로 육성, ② 쌀 전업농 경쟁력 강화기반 조성, ③ 소득 및 경영안정장치 마련으로 경영내실화, ④ 지역 쌀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에는 쌀 전업농 육성사업을 농지규모 확대를 위한 물량지원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고, 양정여건의 변화와 쌀 전업농의 역량강화 등에 대한 다양한 접근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으나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맞춰 쌀 전업농 육성을 위한 농지규모화사업의 지원방식 등을 개편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상농지는 논 중심에서 밭까지 확대하고, 농지매매사업 지원단가(논 30천원/3.3m², 밭 35천원)에 포함된 10% 자부담을 폐지(인상효과 11%)하며, 농가당 매매지원 상한면적을 20ha에서 10ha로 축소하여 경쟁 가능한 지원 규모로 조정하였다. 또한 쌀 전업농 선정·관리를 시·군에서 사업시행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로 일원화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농산경영과 농업사무관 장대수)

3. 쌀종합처리장(RPC) 경영혁신

정부는 양정제도 전환 및 수입쌀 소비자 시판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쌀 산업의 안정적인 기반 구축을 위하여 “RPC 경영개선 종합대책”을 2006년도에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 RPC 경쟁체제 도입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 및 지역기준에 충

족하고 벼 매입실적이 우수한 업체는 RPC 신규진입을 허용”하는 등 RPC 경쟁체제를 도입한 결과, 2009년도 말까지 농협 1개소, 민간 5개소가 신규 RPC로 인정되어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RPC 경영평가 결과 부진업체(F등급) 13개소는 자금지원이 중단되는 등 구조조정이 촉진되었다.

나. RPC 건조·저장시설 확충

RPC의 부족한 건조·저장시설을 지속 지원하여 수확기 물량흡수 및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유통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2008~2013년까지 건조·저장시설 1,190개소를 추가 지원하여 유통량 대비 저장능력을 70%까지 확충하고 특히,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유통 기반 구축을 위해 저온저장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009년도 RPC 건조·저장시설 사업은 전체 104개소(통합 10, 증설 64, 저온창고 28, 방폐장 유치지역 2개소)에 국고 237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다. RPC의 부족한 건조·저장시설 확충으로 야적문제가 해소되고 품질별 구분저장이 가능하여 고품질쌀 유통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쌀 수탁판매사업 추진

RPC가 수확기에 예상판매 가격의 일정비율을 선도금으로 농가에 지불하고 판매가 완료된 후에 정산해 주는 수탁판매제를 시범사업(2006~2007)으로 추진하였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수탁판매제를 희망하는 RPC와 농가를 대상으로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수탁판매 참여 RPC에게는 정부 재정에서 수탁선도금을 지원했다.

수탁판매제가 활성화되면, 농가는 수확기에 기존의 공공비축, RPC 산물 판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한편, RPC에서 판매가격으로 정산하게 되면 농가는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고품질쌀을 생산하게 되는 동기가 되고,

RPC는 수확기 자금집중 부담과 가격하락 위험부담이 완화되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었다.

라.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쌀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우리쌀의 품질경쟁력을 높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을 2007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3년까지 쌀 주산지 시·군을 위주로 규모화된 대표브랜드 100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8년도 8개소, 이어 2009년도에도 10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선도적인 모델로 육성하였다.

2009년도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을 위해 확보된 예산 88억원(브랜드경영체의 시설현대화 지원 80억원, 교육·홍보, 컨설팅 비용 8억원)을 지원하여 시·군 대표브랜드 육성을 차질없이 추진하였다.

시·군단위 대표브랜드 육성 정책에 따라 2009년 쌀 브랜드 수는 1,650개로 2006년 보다 223개 감소(△11.9%)하여 브랜드 난립에 따른 소비자 신뢰도 하락을 방지하였다.

(농산경영과 농업사무관 홍인기)

4.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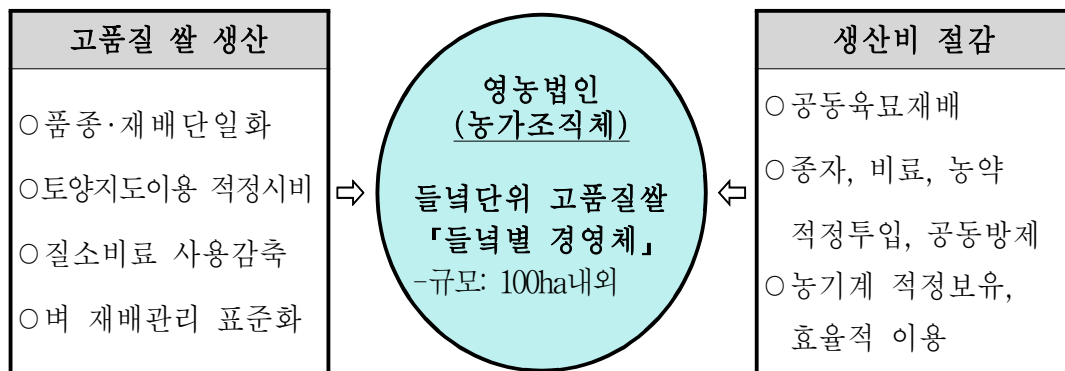
2010년도에는 쌀 전업농 중심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경영개선 기반조성을 위해 100ha내외의 면적으로 규모화·조직화하는 고품질 쌀 들녘별 경영체 모델 육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2009년도 시범사업(12개소) 추진 결과 들녘별 경영체 육성을 통해 공동육묘재배, 종자, 비료·농약 적정투입, 공동방제, 농기계 적정보유 및 효율적 이용 등으로 쌀 생산비는 22%, 경영비는 30% 수준 절감효과를 얻었으며,

1ha 재배농가 소득은 22%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동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여건에 적합한 들녘별경영체 육성모델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고품질쌀 생산·유통대책을 추진한 결과 우리쌀의 품질경쟁력이 높아져 소비자의 신뢰확보는 물론 해외수출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경영측면에서는 쌀농가의 생산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점을 감안 정부에서는 2010년부터는 쌀농사 경영비 절감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품질쌀 들녘별경영체 육성 추진전략



(농산경영과 농업사무관 장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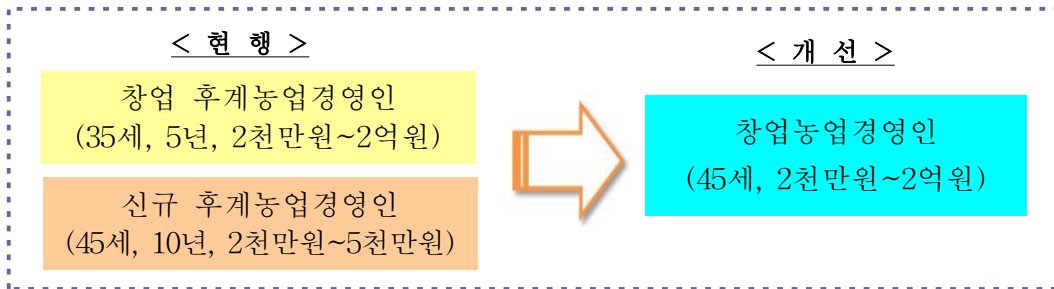
제2절 농업·농촌 전문인력 양성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개방화 시대를 대비하고 농촌인력의 급감과 고령화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고 유능한 전문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2008년까지는 창업농과 신규후계농으로 이원화되어 지원대상자 선발 및 단가책정, 사후관리 등이 복잡하였다. 선정기준도 창업농은 35세 미만·영농경력 5년 미만인 반면 신규후계농은 45세 미만·영농경력 10년 미만으로 각각 달리 제한하고 있어서, 창업농의 경우 선정기준이 농업분야 조기진입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는 35세와 45세로 구분했던 선발조건을 연령에 따른 차별을 폐지하기 위해 45세로 단일화하고, 5년과 10년으로 제한했던 농업경력 요건도 폐지하여 농업분야 조기진입자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할 계획이다.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자금지원은 현재 연리 3%,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잠재농업인력확보를 통해 후계인력의 원활한 유입을 위해 2005년부터 실시하였던 농업인턴제, 창업농후견인제 사업들도 계속 지원하고 있다. 또한, 후계농업인 선정 후 일년간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일정금액을 2~3년에 걸쳐 분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3년자금대출제(후계농업인이 일차년도에 배정금액의 40%이상을 대출하면, 나머지 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3년안에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를 시행하여, 불필요한 대출과 자금 확보를 위한 무리한 대출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다.

한편, 기존 후계농업인 지원사업이 1회성 지원으로 이후에는 경쟁력 있는 농업인에 대한 농업종합자금 등의 지원만 있을 뿐 그 외 일반 후계농업인에 대한 마땅한 추가 지원책이 없었다. 따라서, 2006년부터 후계농업인 선정 후 5년이 경과한 농업인 중 평가를 거쳐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최고

8천만원까지 지원하는 후계농업인 추가지원 사업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2009년에는 지원대상자로 1,328명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이들에게 금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후계농업경영인이 전업농·신지식농업인으로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자금뿐만 아니라 교육과 컨설팅도 수요자 중심의 지원이자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해외의 영농기술과 경영기법 등의 연수를 통해 국제적 감각과 수출농산물 품목 개발능력을 갖춘 우수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해외농업인턴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것이다.

(경영조직과 행정사무관 하경희)

2. 제2차 농업경영체 활성화방안

2006년 5월 19일 관련업계, 농업인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법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한 제2차 농업경영체 활성화방안에 따라 농업법인의 성장을 위해 전문인력 지원, 투자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강구하였다.

가. 성장단계별 농업법인 양성 인프라 구축

농업법인이 세제혜택, 농지소유 허용 등 많은 정책 지원을 받고 있으나 실태 파악이 불가능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부는 건전한 농업법인의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기적인 농업법인 조사를 통해 유명무실한 법인을 정리하고 설립과정에서 농업인 확인과정 등을 보다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의 농업법인이 창업보육 혜택을 받는데 있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를 권역별로 확충(2009년 9개소 완료)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제도'에 농

업분야 평가지표를 신설하여 선도 농업법인이 인증받고 정책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확립하였다.

나. 농업법인 투자 유치 및 자금 지원 개선

농업법인의 담보문제 및 회계투명성의 부족, 소극적 대출 경향 등으로 인해 정책자금을 배정받아도 대출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정책자금 취급기관을 농협위주에서 시중은행으로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농업회계기준 정착 및 농업법인 신용평가 모형개발 등을 통하여 농업법인에 자금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Inno-biz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신보 보증한도를 확대(15억원→30)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농업법인 등에 대한 투자를 위해 운영해 온 농업전문투자펀드(당초 2011년까지 누적규모 1,000억 조성 예정)의 경우, 2010년부터 첨단농업, 녹색성장산업 및 식품산업 등 새로운 투자 수요에 맞춰(가칭)‘농식품모태(母胎)펀드’을 조성할 계획이며, 관련 근거 법률도 제정·추진하고 있다.

다. 우수 인적 자원 양성 및 유입 촉진

농산물시장의 위험은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법인의 경영 역량은 부족하고 전문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기업 연수기관에 위탁하는 등 농가조직화·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는 다양한 교육방식을 도입하고, 우수 농업법인이 회계·경영·전산전문가를 채용할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2007년에 도입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농업분야 외국 인력 활용도 확대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경영조직과 농업사무관 황규광)

3.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해양수산부와의 통합으로 2009년 사업부터 어선어업, 양식어업, 종묘생산업, 수산물 유통·가공업체, 어촌계를 사업대상자에 추가하고 어업분야 컨설팅을 담당할 컨설팅업체 인증을 통해 어업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어선어업은 10톤 이상, 정치망어업 10h이상 등, 양식어업은 육상수조식 중 어류 등은 250평, 패류는 200평이상 육상축제식은 2ha이상 등, 종묘생산업은 육상수조식은 어류250평, 패류 200평 등에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중규모이상으로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농업분야와 규모를 맞출 계획이다.

더불어 소규모농가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내 분야별 농업지도사들이 기술진단 및 상담을 하는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사업을 받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컨설팅업체의 인증기간은 2년으로 하고, 2년 경과후 인증기준 준수여부 현지점검 및 사업수행 상황 설문조사 등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재인증 여부를 결정하여 업체간 경쟁 및 컨설팅 질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재인증 평가결과 탈락하지 않더라도 평가가 하위 20%에 속하고 실적이 연간 6개 농어가 미만인 업체는 1년 후 재평가를 실시하고,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았거나 실적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 인증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컨설팅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계약기간을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가계약서에 계약금액 및 기간, 컨설팅사업 후 기대효과에 대한 약정, 기대효과의 달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계약쌍방간 상호검증의 방법, 월별 정기·부정기 방문회수, 컨설팅 비용 지급방법, 분쟁해결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하여 계약이행을 더욱 충실하게 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컨설팅업체 관계자 및 컨설턴트, 사업대상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다음연도 사업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일부서식 및 별표를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등재하여 지침을

간소화하고 Agrix운영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Agrix에 올려진 컨설팅결과보고서를 분석하여 사업대상 농업경영체의 20%를 선정하고 컨설팅 전후 매출액, 소득증가율, 부채 등 재무적 관점, 고객관계 방법변화, 상품개발 여부, 생산성변화, 마케팅추진·업무추진변화 등 업무프로세스 관점, 중장기목표 설정, 컨설팅결과 활용도 등 학습과 성장 관점에서 성과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영조직과 전산사무관 이천순)

4. 농업벤처 육성

고부가가치 농업의 육성, 농업의 고도화·첨단화를 위해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특수농법, IT·BT 등 관련 기술을 활용하는 벤처농업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2006년까지 선정된 9개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는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2005, 2006년에 이어 충청, 강원,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공모하여 4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2009년부터 권역별 특성화된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9개소)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

2009년 농안기금 예산으로 확보한 90억원 및 민자 유치를 통해 200억원 규모의 농업전문투자조합(6호 조합)을 결성, 농업분야벤처기업에 투자해 나갈 계획이며, 농업분야 우수아이템에 대해 발굴·시상하는 창업경연대회와 농업벤처투자박람회를 개최하여 농업벤처를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로 개척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경영조직과 농업사무관 황규광)

5. 농업교육훈련

가. 추진방향

기존의 농업교육은 이론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어 현장에 직접 적용가능한 실용적인 교육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실습교육 확대를 위해 2008년 6월 신농업교육체제 구축방안 마련하였으며, 2009년도부터 동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중심의 실습교육을 위해 전국대표실습장,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 실습전문강사 양성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품목전문대학을 설립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재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농업교육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평가와 인증시스템을 강화하여 교육기관간의 경쟁을 도모하고 교육내용의 품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농과계 학교교육은 농업인턴, 멘토링 등을 통해 현장 실습중심의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나. 주요정책 내용

'08년도에는 실습중심의 현장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신농업교육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농업마이스터대학 설립, 전국대표실습장 및 품목별 현장실습장을 지정하는 등 실습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09년 예산을 364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농업교육 추진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농업인·지자체의 교육운영 역량을 확충하고, 지역농업교육협력체의 교육기관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참여 확대 및 조정역할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통합 농업교육정보시스템 확충 및 교육모니터링 평가 강화를 통해 교육정보 수집부터 평가까지 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농업인단체 및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지원은 전년도 교육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수준을 결정하며, 일부 교육프로그램은 공모를 통해 교

육기관 간 경쟁을 유발하여 교육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09년부터 각 도별로 총 9개의 농업마이스터대학을 설립, 현장중심의 실습위주 교육을 통해 기술과 이론을 겸비한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할 수 있는 장기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습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대표실습장과 품목별 현장실습장 40개소를 지정하고 실습 전문강사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농업의 발전 목표와 특성에 맞는 농업경영 및 기술향상 교육, 브랜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역농업 조직화 교육을 '06년 6개도 4개 시·군에서 '07년에는 전국 9개도, 3개 시·군으로 확대하였고, '08년에는 9개도, 6개 시·군에 실시하였으며, '09년도에는 7개도 18개 시·군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기관별 유사 중복 교육과정을 축소하고, 수준별·분야별 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해 지역단위 통합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산재해 있는 재원과 인력, 시설 등을 통합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농업인에 대한 해외연수제도는 전면 개선하여 연수 프로그램 및 대상자를 공모를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연수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연수기관간 경쟁을 유도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상자 공모를 통해 공정한 선발과 연수 참여기회의 폭을 확대하고자 한다.

귀농단계별 최적의 교육방법을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단계별 귀농교육을 운영하려고 한다. 귀농정보 탐색 그룹인 귀농을 준비하는 도시민을 위하여 온라인 귀농 콘텐츠 “한결이네 귀농일기/15분 34차시”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격적 귀농 준비 그룹 대상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3개 교육기관(한국농업대학, 천안연암대학, 여주농업전문학교)에서 3~4개월 코스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현장중심형 교육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 중 또는 수료 후 영농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생의 각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e-tutor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 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 인력 확보를 위한 농과계 학교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0개 농고 및 11개 농대에 대한 현장체험 등 영농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습중심의 실용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업인턴제, 멘토링 교육 등을 통해 현장중심의 실습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업인에게 농업교육기관의 모든 정보와 농업인의 교육이력정보를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운영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고도화 및 기능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한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농협, 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일정기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한 정보는 수료자의 동의하에 교육결과가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에 통합되고, 교육이력조회가 가능하도록 정보를 통합·구축할 계획이다.

(경영조직과 행정사무관 박영근)

6. 여성농업인 육성

가.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촉진

1)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의 인정

여성농업인은 농가인구의 5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성농업인의 영농기여도에 관한 설문에서도 농작업의 절반이상을 담당하고 있다는 의견이 75.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지나 농산물 판매통장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기 어려우며 농업 종사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일반적으로 농업인이 아닌 무보수 가족 종사자로 간주되고 있을 뿐 실질적 농업 경영주로서의 지위는 불명확한 실정이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을 농업경영의 파트너로서 기여도에 적합한 직업적 지위를 확보토록 함으로써 공동 경영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고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농업경영체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여성농업인이 직업인으로서 법적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농

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2008.6.20)과,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농림수산식품부 고시로 제정('09.1.1)하였으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공동경영주 개념 및 기준 설정 도입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 경영주와 경영에 참여하는 가족원간에 농업경영에 따른 역할과 의무, 보수 등을 문서로 명확히 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농업 경영 참여에 대한 성취감과 만족감을 고취시키는 '농가경영협약' 제도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2009년에는 80농가를 대상으로 22백만원의 '농가경영협약' 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2) 여성농업인의 정책결정과정 및 생산자 조직 참여확대

농림수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 농정관련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결정단계에서부터 여성농업인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 및 작목반 등의 농업생산자 조직에서도 여성농업인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협동조합의 경우는 여성 조합원 비율을 농협은 30%, 수협은 26.2% 이상, 여성 조합원의 대의원 비율을 농협은 14%, 수협은 3.7% 이상, 임원 비율을 농협은 4%, 수협은 0.6% 이상을 목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작목반의 경우는 여성 친화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토록 지도해 나갈 것으로서 여성의 참여를 유인해 나가고자 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 활동 지원

중앙과 지역의 농정 파트너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여성농업인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 리더십 향상, 농업정책 이해, 농촌 복지실천 자원봉사자 양성 등 단체 주관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사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여성농업인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주관하는 연구활동 및 도농교류사업에 대하여도 국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농업인의 날' 및 여성농업인단체 행사를 계기로 우수 여성농업인

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고취해 나갈 계획이다.

나.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1)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능력 및 리더십 향상

9개도별 핵심(전략) 품목위주로 87개 품목학과를 개설·운영하는 농업마이스터대학에 여성농업인이 2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지역발전의 혁신주체로서 소수정예 여성농업인 CEO를 육성하기 위하여 2006년도부터 추진한 ‘여성농업인 혁신인재 비즈니스 아카데미’ 교육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2009년에는 ‘제4기 여성농업인 혁신인재 비즈니스 아카데미’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정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농업인정보화교육에 여성농업인을 50%이상 참여토록 하여 전문화·차별화된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추진하고,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여성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며, 농업연수원에서는 여성농업인의 리더십 향상을 목표로 전문강사 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 심화과정’ 개설하여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 과정의 수료생을 대상으로 기획력 및 리더십의 재학습을 통해 관련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2) 후계 여성농업인력 육성기반 확충

정부는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예농업 인력육성 종합대책(2005.1)을 마련하고, 20만호의 정예인력 육성방안을 구체화한 바 있으며,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도 농업구조의 선진화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견인하는 주요 인력으로 육성하고자 여러 가지 정책을 펼 계획이다.

우선 후계농 지원사업, 농업인턴제, 창업농 후견인제, 대학생 창업연수제 등의 후계인력 육성사업 시행 시 20% 범위 내에서 여성농업인을 우선 선정토록 함으로써 젊고 유능한 여성농업인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쌀 전업농 선정 시에도 일정요건을 갖춘 여성농업인에게 우선순위를 부

여하며, 부부가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자금 신청시 주 사업 품목이 다를 경우 각각 지원 가능토록 사업시행지침을 개선하여, 부부창업농·부부후계농 우선 선발 및 우대지원제도에 대하여도 검토할 계획이다.

3) 여성농업인 노동생산성 향상과 노동부담의 완화

최근 영농형태가 벼농사 위주에서 원예·화훼 등 발작물의 비중이 커지면서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참여도가 점차 증가되고 있으나, 현재 보급되고 있는 농기계는 대부분 남성의 체형에 맞춰 개발되어 여성이 운전·조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선 여성농업인의 참여도가 높은 농작업에 대한 기계장치 개발을 강화하고, 여성농업인이 취급하기 쉬운 작고 가벼운 농기계를 개발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노동부담을 경감하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4) 여성농어업인 창업활동 지원

여성 특유의 보유기술 및 지역의 부존자원을 이용한 일감 발굴, 창업지원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 기술보유자를 중심으로 작업장 설치 및 시설 설치, 생산원료의 확보, 포장지 디자인 등에 대하여 지원하고, 경쟁력 제고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품목부터 우선 육성하고 연차적으로 다양화 해 나갈 것이다. 또한 창업여성농업인-여성기업인 MOU 체결로 인적네트웍을 구축하고, 상호 교류 협력하여 경영컨설팅, 기술, 특허 등 특정분야 교육, 브랜드 마케팅 기법 전수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여 여성농업인의 창업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5) 농촌개발 리더로서의 여성농업인 전문화

농어촌지역개발 및 농어촌관광 분야는 여성의 참여 없이는 활성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여성농어업인의 역량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농어촌지역개발 리더 교육과정에 여성인력 참가 희망자를 우선

선발하고 교육과정에 ‘농어촌 지역개발 여성리더’ 과정을 운영하여 여성농촌체험교사 및 어촌관광가이드 등을 양성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

1) 농어가 인력지원 확충

여성농어업인의 출산에 따른 산전·산후 건강 및 모성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사고발생시 영농대행을 통해 지속 영농 및 안정적인 농어가소득 제고를 위하여 현재 지자체단위로 지원하고 있는 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을 확충하도록 유도할 것이며, 69세 이하·농지소유 5ha미만의 사고·질병농가에 대한 영농인력을 지원하고 65세 이상 농촌 고령 및 취약농가에 대하여 가사도우미를 파견하여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농촌생활의 유지를 도모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육아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농어가소득 제고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2)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확충 및 내실화 유도

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2005년부터 지방사업으로 이행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대하여도 해당 지역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를 유도해 나갈 것이며, 사업내용 측면에서도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고, 여성농어업인센터 기능개편을 위한 표준지침안을 마련하는 등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나갈 것이다.

3) 여성농업인의 육아부담 경감 추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농촌의 고령화·과소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업인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젊은층의 농촌거주 유도 및 농어촌지역사회 활력유지를 위해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 자격(조건)확인 후 농업인 계

좌에 직접 지급하는 일종의 직불형태의 지원사업이다.

2008년도에는 사업지침을 개정하여 지원대상을 호적상 부모가 없는 조손 가정에서 부모중 1인이 없는 조손가정까지 확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007년까지 시설미이용 아동에게 별도로 지원되던 ‘여성일손돕기 지원사업’이 2008년부터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으로 통합되어 지방비를 포함하여 총 822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지원대상은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5ha미만 전업농어업인의 자녀에 대하여 지원하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하여는 아동별로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70%,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는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35%을 연령별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그 밖에 농어촌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지정 및 지원확대 등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라. 여성농업인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1) 여성농업인정책 2009년 시행계획 수립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여성농어업인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에 2006년도에 수립한 ‘제2차 여성농어업인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여성농어업인정책 2009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다.

여성농어업인정책 2009년 시행계획’에는 기본계획에 따른 2008년도의 추진계획을 총괄적으로 평가하였고, 2009년 여성농어업인정책의 주요정책과제를 로드맵으로 담아 추진하고 있다.

2)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제도 실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정책의 수립·시행과정에서 여성의 권익과 사회

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는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제도는 2004년 농업인력육성정책, 2005년 농업종합자금지원제도에 대하여 평가를 완료한데 이어 2006년부터는 모든 농림사업을 잠재적인 평가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주요 관심영역, 정책의 사회적 파급효과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세웠다.

2007년에는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을 포함한 5개의 사업을 자체평가 사업으로 지정하여 평가하였고, 2008년에는 창업어가후견인제·수산업인턴제 사업을 자체평가 사업으로 지정하여 평가하였으며, 2009년에는 2008년까지 평가를 완료한 사업과 평가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 사업을 제외하고 대상 후보사업을 선별하여, 담당부서에서 평가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자체평가대상을 수산분야의 어업인정책보험사업, 어촌·어항 관광 조성사업의 2개사업으로 결정하여 평가할 계획이다. 성별영향평가제도는 사업의 평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해당 사업부서에 통보하여 양성평등 관점이 지속적으로 반영되도록 농림사업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각종 농수산업정책 추진시 여성농어업인관련자료 통계를 생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통계생산과 활용을 유도할 것이며, 2009년에는 여성농어업인정책에 필요한 여성농어업인의 실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기초자료를 생산(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의거 매5년마다 실시)하여,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현황 및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현장감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농촌사회과 사무관 김일상)

마. 농촌여성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1) 다문화가정 변화 추이

국제결혼 건수는 1990년 4,710건에서 2008년 36,204건으로 급증하였다.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은 1990년 619건에서 2008년 28,163건으로 급증한 것에 비해,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의 결혼은 1990년 4,091건

에서 2008년 8,041건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2008년에 혼인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자 6,459명 중 38.3%에 해당하는 2,472명이 외국여자와 결혼하였으며,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남자와 혼인한 외국여자의 국적별 혼인건수는 베트남(52.2%), 중국(27.2%), 필리핀(8.4%) 순으로 나타났다.

2) 농촌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2007년에는 농촌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에 대한 언어교육, 문화교육 및 가족관계 증진교육 등을 실시하여 신속한 적응 지원이 필요한 결혼초기 가정에 대하여 교육도우미 300명을 통하여 1,800여 농촌의 이주여성을 방문하여 우리말 교육과 상담을 실시한 바 있다.

2008년에는 한국어 교육, 문화교육 등 초기적응 교육을 받은 자중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고 영농정착 및 실천의지가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각도별 36명 총 324명에게 농업일반, 기초영농교육, 농기계사용법, 현장체험, 소양교육 등에 대한 집합교육을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 바 있다.

2009년에는 농업 종사를 희망하는 농촌 결혼이민자에게 전문여성농업인(후견인) 628쌍을 연계하여 1:1 맞춤형 영농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 농촌의 젊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농업인력으로 자원화 해 나갈 계획이다.

3) 향후 과제

최근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 가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농어촌에 결혼이민자 가족의 유입으로 농촌인구 등 농어촌사회 내부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주여성농업인들은 이미 농어촌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역할 범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농가인구의 고령화 등 농업·농촌의 여건변화에 따른 농촌지역의 다문화세대원을 후계농업인력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주여성농업인에 대한 단계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농어촌정착의지 창출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인적D/B구축 및 영농학사 관리, 영농교육 지원, 영농기반구축 지원, 다문화 영농테마사업 육성, 다문화 자녀 영농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나갈 것이다.

(농촌사회과 사무관 김일상)

제3절 소비자 지향의 고품질·안전 농식품 공급

1. 농산물 안전성 제고

가. 우수농산물관리(GAP)제도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조기 정착유도

선진적인 안전성 관리제도인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와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의 조기정착을 위해 금년도에는 GAP참여 농가를 30천명까지, GAP인증품 생산량을 과실·채소 생산량 대비 3%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GAP 민간인증기관으로 43개 기관을 지정하고, 사후관리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 운영비 지원하며 향후 이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인증업무 전담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GAP참여농가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토양·수질 및 생산물의 잔류농약 등을 검사하는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수확 후 농산물 처리를 위생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설기준을 보완하고, GAP시설보완사업비를 지자체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09.11월 현재 수확 후 관리시설은 469개소를 지정하였고, GAP 대상품목을 105개에서 국내에서 식용으로 재배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였다.

농산물생산자와 유통자 그리고 판매자가 농산물이력정보시스템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이력정보시스템의 소비자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해 농산물·수산물·축산물이력정보 서비스를 통합(www.farm2table.kr)운영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에게 GAP 및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새기술실용화교육과정”에 GAP·이력추적관리제도를 필수교과목으로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

나.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로 부적합품 시장유통 방지

부적합품의 시장유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지속·추진한다. 안전성 조사 건수(정밀분석)는 전년대비 15.6% 증가한 57천 건 계획하고 있으며, '09년부터 간이분석은 폐지하고 농식품 안전성조사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정밀분석 위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 9개지원(시·도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정밀분석실을 거점 지역 출장소까지 확대해 나가, 늘어나는 분석수요에 대비한다.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15개 출장소에 설치하였고 2008년에도 24개분석실의 증축 및 시설보완을 통하여 안전성조사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였고, 또한 안전성조사 인프라 확충 및 분석의 신뢰제고를 위해 HPLC/MS/MS 등 극미량 분석장비 확보 및 분석실 KOLAS 인정 취득확대('08년도 3개소에서 '09년도 7개소)를 추진하였다

안전성 조사 범위를 농산물 중 농약, 중금속 중심에서 병원성 미생물, 생산환경(토양·수질·자재)으로 확대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한다. 2009년도에는 병원성미생물 300건, 재배환경 400건을 조사할 계획이며, 조사결과는 향후 기준설정 및 관리기준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안전위생과 사무관 도현미)

다. 농림수산물 LMO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

2008년에 수립된 ‘제1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을 바탕으로 농림

수산물 LMO 안전관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물 LMO의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사료용 LMO의 국내 비의도적 환경방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항구, 사료공장 주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LMO 표시대상품목에 대한 LMO 표시 이행 여부도 중점 조사하겠다.

(표시검역과 행정사무관 이정길)

2. 축산물 위생·안전성 관리 강화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2009년도에도 가축 사육단계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 위생·안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육단계에서는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이 축산물에 잔류하는 것을 방지하고 항생제 내성균의 내성률 감소를 위해 항생제 사용과 관련한 축산농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사료첨가용 동물약품을 기존 25종에서 18종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사육단계 HACCP 제도 적용을 위해 돼지, 소, 닭에 이어 오리에 적용할 HACCP 지침 및 모델을 개발하고 평가기준도 제정하여 주요 가축에 대한 사육단계 HACCP 적용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도축단계에서는 2003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HACCP 적용 의무화에 따라 도축장의 HACCP 운용여부를 점검하여 그 운용이 미흡하거나 운용하지 않는 도축장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 단체가 주관하는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축장 운영자금의 차등지원을 실시하는 등 도축장의 HACCP 제도 정착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립불능 상태의 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BSE 우려를 감안하여 부상 등 식품안전과 무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도축을 제한하고, BSE 검사후 사체는 폐기하고 소유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가공단계에서도 HACCP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 등에게 HACCP 적용 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도축·가공단계의 위생수준을 제고와 위해요소 제거를 위하여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과 미생물 검사를 지속 실시해 나갈 것이다. 검사물량은 잔류물질 120천건, 미생물 120천건을 실시하며, 특히 잔류물질 검사의 경우 과거 잔류위반 농가나 긴급도축, 주사자국, 화농자국이 있는 등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검사비율을 2008년 16.3%에서 2009년 18.8%이상으로 높여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06년부터 시행된 식용란에 대한 미생물과 잔류물질 검사 역시 검사건수 증가 등을 통해 식용란의 위생관리도 강화해갈 계획이다.

축산물 유통단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HACCP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재래시장 등 축산물 위생 취약지역에 대해서 위생감시 및 수거 검사를 확대하는 등 점검을 강화할 것이다.

사전 위해요소 관리를 위해 도입한 HACCP 제도의 지정과 지정 작업장에 대한 관리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2008년 법정법인으로 출범하여 HACCP 지정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축산물HACCP기준원의 인력을 48명에서 68명으로 보강하여 공공성이 강한 HACCP의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추진이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위생과 수의사무관 강대진)

3.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

쇠고기 이력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가공·판매단계에 이르는 전과정의 이력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 규명과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둔갑 판매방지 등으로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를 확대하고 종축 개량 등을 위한 정보통합관리 등으로 한우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고 조기에 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2004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신고 절차, 귀표부착, 거래실적 기록 및 전산시스템 운영 등 시범사업을 통해 이력제도 도입준비를 통해 2008년 12월 22일부터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쇠고기 이력제는 2004년 10월부터 9개 우수 브랜드경영체를 시작으로 시·군 및 전국으로 확대하여 소 귀표체계 개편, 유통단계 사업장 확대 등 개선하여왔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 차원에서 의원 입법을 통해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을 2007년 11월 21일 제정하였고, 2007년 12월 21일 공포하여 제도적인 기반이 갖추어졌다.

2008년도는 12월 22일 법 시행에 대비하여 참여대상을 대폭 확대, 전국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소의 소유자 등의 신고 접수와 귀표 부착, 정보 전산입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귀표를 구매하여 전국 위탁기관에 직접 공급하고 있으며,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는 전산시스템 관리, 이력지원실 운영 등을 지원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하도록 운영체계를 정비하였다. 아울러 2008년도에는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문제점 등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지난 3년여 시범사업 기간동안 이력제 전반에 대한 정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 등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년도에는 6월 22일부터의 유통단계 법 시행에 대비하여,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출생 등 신고접수와 귀표 부착지원을 위한 위탁기관을 135개소 지정·고시하여 사전에 준비토록 하여, 법 시행시 귀표 부착 등에 대한 혼란이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6월까지 모든 소의 이력제 등록 및 귀표부착을 완료하여, 현재 소 전체 343만두가 이력시스템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6월 22일 이후에는 전국의 모든 도축장, 가공장, 판매장에서도 쇠고기 이력제를 시행하여 유통단계에서 소비자들이 소의 사육지 확인 등 구입할 쇠고기의 이력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2009년도에는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문제점 등을 발굴하고, 전산시스템 보완·개선, 쇠고기 이력제의 사후검증 수단인 DNA 동일성검사 방안 정립 및 단속 활용, 이력지원실 운영을 통한 제도 대상자 및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실무협의회를 통해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오류, 제도 보완 등에 대해 현황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협의 등을 거쳐 개선·보완 작업을 해나가고 있다.

금년도 사업 시행에 대한 시도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0월 5일부터 11월 13일 까지 시·도 평가작업을 실시하여 평가결과 우수 기관에 대하여는 포상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12월10~11일에는 시·도, 관련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연찬회를 실시하여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점검 해나가고 있다.

이력제 시행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사육단계에서는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소 사육농가 전체에 대한 일제조사를 2010년 실시하여 등록정보의 정확도 제고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고, 유통업소에 대하여는 대형 판매장 위주의 단속에서 영세업소 등 이력관리 취약업소 중심으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력제 관계자와 단계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하도록 업무편람을 보완하고,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산프로그램 등을 보완하여 업무 효율성 등을 제고하는 등 이력관리 업무에 따른 부담 경감방안을 강구하고, 제도의 문제점 등을 사전 발굴하여 전문가협의회 등을 통해 해결하여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동물방역과 사무관 유영수)

4. 가축방역·검역 강화

구제역 방역대책 기본방향은 발생 위험성이 높은 3~5월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강도 높은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을 추진하고, 특별대책기간 종료 후에는 평시 방역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국경검역은 수입건초는 소독 및 검사후 합격품만 반입하였고, 해외여행객 신발소독은 공·항만 입국장의 발판소독조를 운영하여 모든 입국자의 신발소독을 실시하였다. 휴대축산물에 발생국 여행객을 중심으로 탐지견 및 현장검역관 기동배치 등을 통해 검색하고 있다. 또한 휴대축산물의 반입신고 및 자제를 위해 재외공관을 통해 검역안내서를 배포하였고 검역전용전광판 제작·설치 선·기내방송·리후렛 배포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국내방역은 우선 예찰요원을 동원하여 농장예찰 및 혈청검사 실시로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를 확립하였고, 가축질병신고전화(1588~4060) 및 특별대책기간중 상황실을 운영하였다. 또한, 매주 수요일 “전국일제소독의날”을 운영하면서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규모 농가에 대해 소독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축산관련 외국인 연수생에 대하여는 농협에서 명단을 관리하고 지자체 및 검역원에서는 해당농장을 방문하여 방역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지자체는 초동능력 향상을 위해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였고 정기적인 방역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즉, 휴대축산물의 검색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방역상황 점검으로 취약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보완 조치하였으며, 지자체 초동대응능력 향상 등을 통해 2002년 6월 이후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다만, 지자체·농가·축산시설 경영자의 능동적인 방역활동과 지자체의 방역인력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고, 또한 해외여행객 입국자의 편의를 감안하였기에 휴대축산물 검색에 한계가 있었다.

소 브루셀라병 방역대책은 2013년 근절을 목표로 가축시장·도축장 및 문전거래되는 모든 한육우 암소에 대한 검사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하였으며, 1세 이상 모든 암소(연1회)와 수집상·중개상(연4회)이 사육하는 소, 자연

교배 수소(연4회)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가축 및 사람 브루셀라병 예방을 위해 홍보리후렛을 제작·배포, 전문지 광고 등 예방수칙을 홍보·교육토록 하였다.

한육우 브루셀라병 발생이 지속적인 방역대책 추진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어 2013년까지 근절목표를 달성하는데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소 브루셀라병 발생 확산방지를 위해서 현재와 같이 지속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돼지열병은 2003년 72건 발생 이후 2004년 9건, 2005년 5건, 2006년 2건이 발생하여 발생건수가 급속도로 감소하였다.

<표 3-2-2>

돼지열병 발생 현황

(단위 : 두수(건))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돼지열병	406 (13)	5,866 (72)	779 (9)	811 (5)	1,074 (2)	58 (2)

앞으로 돼지열병 발생 최소화 및 청정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예방접종명령 위반농가(면역형성률 80%미만)는 과태료 처분과 혈청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항체가가 높은 모돈(감염 의심축)은 조기도태 유도로 감염원을 차단하고, 발생농장에 대하여는 살처분 보상금 차등지급으로 농가의 자율 방역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고, 청정화에 대한 단계적 기반조성을 위하여 밀집지역 농가분산, 친환경 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방역과 수의서기관 김대균)

5. 가축개량 추진

우리 축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FTA 체결과 DDA 타결 후 시장개방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 또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축산업은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식품을 생산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지속 가능한 생명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국내 사육 환경에 적합한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가축의 생산능력이 높아질 때, 사육 마리수와 분뇨 발생량이 줄어 환경 친화적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축개량은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저비용·고효율의 가축개량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가축개량 목표를 보완하고 혈통등록과 능력검정을 점차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가축의 유전 평가 신뢰도를 높여 능력이 우수한 개체를 선발, 계획 교배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가. 한우개량

한우개량은 고급육을 선호하는 추세에 맞추어 육질 중심의 개량체계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공수정용 보증씨수소 선발을 위한 능력검정두수를 확대하여 선발 강도를 강화하고, 수소 중심의 개량에서 암·수 동시개량으로 개량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우량 수정란 공급을 위한 암소개량센터를 조성·운영할 계획이다.

나. 젓소개량

젓소개량은 산유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유우군 능력검정 참여율을 2010년까지 연차별 계획하에 60%로 높여 나가되, 검정비용의 지원율은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11년까지

규모화된 청정 육종농가 20호를 선정하여 고능력 수정란(200~300개/년)을 이식하고, 생산된 송아지중 암소는 후보송아지 생산기반으로 활용하고 수송아지는 능력검정을 통하여 보증씨수소로 선발·활용할 계획이다.

다. 돼지개량

돼지개량의 경우는 청정화된 종돈장을 대상으로 종돈장별 최우수 종돈을 선발하고, 정액을 여러 농장과 공유 및 평가하여 우량 종돈을 생산하기 위해 돼지개량 Network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종돈장 종합평가제를 도입하여 종돈장간 자율 경쟁유도 및 양돈농가에 종돈 선택지표 제공할 계획이며, 우수 종돈장으로 선정된 종돈장에 대해서는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라. 닭개량 등

닭 개량은 종계 대부분을 외국의 대규모 종계회사로부터 수입하여 생산하는 실정으로 국산 종계 개발과 능력검정에 대한 투자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닭의 경제능력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계농가에 우량 종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종축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종돈·종계·종오리업 농가를 대상으로 “종축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밖에 국내·외 축산 관련 기자재와 우수 종축의 비교 전시 등을 통해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2009년 10월 “국제축산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축산정책과 사무관 서재호)

6. 가축방역·검역 강화

지난 2000년 이후 국내에서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축산농가 등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미국·일본 등에 광우병 확산으로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악성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축종별 질병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 3-2-3>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구 분	국 내	외 국	비 고
구제역	2000.3 발생 (2001.9.19 청정국) 2002.5월 발생 (2002.11.29 청정국)	중국, 홍콩, 러시아, 몽골 등(20개국)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상재
BSE	미발생	2003년 캐나다, 미국 발생으로 총25개국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2003.12~2004.3(19건 발생) 2006.11~2007.3(7건 발생) 2008.4.1~2008.5.12(33건 발생)	2003.12~2008.12(태국, 베트남, 중국, 북한,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터키,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우크라이나 등 50여 개국	동남아 상재
돼지열병	2004년 9건 2005년 5건 2006년 2건 2007년 5건	독일, 이탈리아, 브라질 등	동남아 상재

본 대책은 주로 광우병·소 브루셀라병과 AI 등 인수공통전염병의 사전 차단 및 발생시 신속대응, 건강한 가축사육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 활발한 국제교류에 따른 국경검역 강화, 일선 방역인력 확충 등에 역점을 두었다.

①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는 2003년 말부터 태국·베트남 및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현재까지 아시아·북미·아프리카, 유럽 등 52개국)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말과 2006년말, 2008년 4월에 발생하였으며, 발생 원인 등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에서는 그 동안 매년 유입 가능성이 높은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하여 AI 유입 방역에 역점을 두었으나, 2008.4.1~5.12 까지 전국적으로 AI가 발생된 것을 계기로 다각적으로 원인을 분석하여 「2008 AI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7.22)하게 되었다.

2008년 고병원성 AI발생의 특징은 발생 초기 중·대형 가금농장에서 시작하여 소규모 육용오리 및 토종닭 사육농가 등 가내 사육 형태의 농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중반기에 강력한 방역정책과 농가, 업계, 관련협회·단체, 지자체 등의 자구노력에 힘입어 예전 100여 일의 발생기간을 감안해볼 때 42일간이라는 단시일 내에 질병근절에 성공하여 UN에서는 우리나라를 AI 방역 대처에 성공한 AI 방역 모범 국가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H5NI 바이러스에 의한 고병원성 AI가 전세계적으로 연중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 인근 국가에 토착화되어 있으며, 철새와 교역 등에 의한 재유입 위험성이 상존하는 실정이므로 정부는 상시방역체계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2008 AI 재발방지 종합대책」 수립 등 정책 개선을 통해 강력한 예찰체계를 구축하여 재유입 즉시 조기 검색과 진단에 의한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고병원성 AI 발생위험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09년에는 발생하고 있지 않다.

② BSE 예방을 위하여 BSE 발생국(25)과 위험국(9) 등 34개 국산 BSE 관련제품 수입금지와 함께 BSE 관련제품(HS code 680개)을 세관장 확인 품목으로 지정하고 발생국가산 제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1996년부터 국내산 소에 대하여 BSE 검사를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BSE 검사물량을 증가시켰다.

2007년부터는 OIE(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따라 BSE 위험소별 점수제

로 바꾸고 2008. 5월부터 도축되는 모든 기립불능소에 대하여 BSE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2009년 2월 OIE에 평가를 받기위한 30만점을 달성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BSE 지위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해 2010년 1월 OIE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2009년 11월부터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하여 기립불능소에 대한 도축을 금지하여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표 3-2-4>

BSE 검사현황

년도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9	계
검사접수	5,516	10,708	5,852	3,814	50,587	163,525	181,000	421,000

2000.12월부터 반추동물용 사료에 반추동물 유래 동물성단백질의 사용을 금지하였고,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반추 동물사료와 비반추 동물사료의 생산라인을 분리하여 사료내 육골분 혼입여부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 12월 사료관리법을 개정하여 모든 동물성단백질사료를 반추동물에게 급여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였다.

앞으로 동물성사료 원료의 반추가축 사료사용금지 규정 이행실태 지속점검, 동물성사료 혼입여부검사 강화 및 모든 동물성 단백질을 반추동물 사료에 금지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며, 모든 사료공장에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제도를 2012년까지 도입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할 계획이다.

BSE발생에 대비하여 도축장에서 신경증상 소를 진단하고 BSE 검사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검사보조원 150명을 배치하였고(2008), 특정위험물질(SRM)처리를 목적으로 2010년까지 LPC 등 10개 도축장에 SRM 제거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③ 소 브루셀라병의 경우 2003년부터 감염농장 색출검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2006년까지 발생이 증가하였으나, 그동안 감염농장 색출검사 및 농가 예방노력 확립 등 다양한 방역대책을 추진한 결과 금년들어 브루셀라병 발생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발생률 '08년 0.86%, '09년 0.47%) 하는 등 방역추진 성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5>

연도별 발생동향

년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9	
전체	건수	172	711	2,590	4,498	2,333	1,826	935
	두수	1,088	5,383	17,690	25,454	11,547	8,409	5,535
젖소(건두)	110/498	116/1,282	141/2,166	177/2,314	84/1001	78/691	40/569	
한우(건두)	62/590	595/4,101	2,449/1,5524	4,321/23,140	2,249/8,220	1,748/7,718	895/4,966	

④ 또한 정부는 밀집사육으로 인해 가축이 질병에 취약해지고 있다는 인식하에 건강한 가축사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5년 말까지 가축사육업의 등록 완료, 친환경축산 직불제사업 활성화 등을 통하여 단위면적당 사육밀도를 완화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 가축방역에 취약하거나 밀집사육으로 환경부하가 큰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밀도 완화, 축사 신·증축 억제 의무부여 등을 특별관리 해 나갈 예정이다.

⑤ 동북아 등 가축방역 여건이 열악한 국가들과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경검역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위험국가(중국·몽골 등) 중심으로 병원체 유입경로 차단을 위하여 건조소독, 실험실 검사 후 반입, 남은음식물 처리 업체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휴대육류 신고·반입자제 등 교육·홍

보를 실시, 발생지역 여행자를 대상으로 검역탐지견을 집중투입하고 신발 소독 실시, 외국인 연수생 및 해외 축산행사 참석자에 대한 방역교육을 실시하였다.

앞으로 검역탐지견 투입을 늘려 공·항만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고, 외국 방문시 축산농가 출입자제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며, 각국의 언론보도 내용을 수시로 검색, 신속하게 발생 정보를 입수하여 복지부·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입위험분석 실시로 통상마찰을 최소화하면서 동물 및 축산물의 수입으로 인한 악성가축질병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하여 2008.8월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요령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투명한 수입 위험분석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⑥ 최근 동·축산물 교역 증가 등으로 해외 악성 가축질병 유입 가능성이 증대되는 등 가축방역대책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나 현장 방역인력이 현격히 부족함에 따라 2007년부터 공익수의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익수의사제도는 수의학 과정을 졸업한 수의사가 3년간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경우 병역의무를 대체해주는 제도로써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2006년 3월 24일) 및 하위법령(2006년 8월 29일)이 제정되어, 현재 406명('07년 123명, '08년 132명, '09 151명)의 공익수의사가 시·군, 검역원,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등 일선 방역기관에 배치하여 방역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앞으로 매년 150명의 공익수의사를 배치하여 연간 최대 450명의 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다.

(동물방역과 서기관 김대균, 오순민, 수의사무관 홍기성)

7. 우유 수급안정 대책

미국·EU 등 낙농 선진국과의 FTA 추진으로 인한 개방화의 가속화 등 대내외적인 우유시장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산 원유의 생산·공급체제 구축, 생산비절감과 생산성향상, 원유 유통비용의 절감, 자급사료 기반 확충, 낙농경영의 체질 강화, 위생·안전성 확보 등 낙농구조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우유수급관리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방안의 주요골자는 시장 수요에 맞는 계획생산으로 전국적인 우유수급 조절이 가능하도록 전국단위 쿼터관리제 시행, 전국적인 우유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관리기구(중앙낙농위원회) 설치, 우유의 특성상 계절적 수급편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잉여원유에 대하여 가공원료유 지원방안 도입, 낙농진흥회 소속 낙농가의 단계적 직결전환, 소비자 기호변화에 부응하고, 젓소 경제수명 연장을 위한 우유가격산정체계 개선, 후계낙농가 육성을 위한 쿼터뱅크제 도입, 쿼터조사 관리체계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같은 우유수급관리제도의 개편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개혁의 당사자인 생산자, 유업체 등이 개편되는 수급관리제도에 대하여 서로 공감하고 협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공동의 접점을 도출해 나갈 것이다.

또한 낙농산업의 안정 성장을 위해서는 우유 소비기반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2006년도부터 의무화된 낙농자조금을 활용하여 우유 소비·홍보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이와 함께 자조금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분석 및 대 농가 홍보를 강화하여 낙농자조금사업의 조기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우유 급식사업 대상과 급식인원 확대, 우유의 우수성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활용 등을 통해 우유소비 저변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한편 생산자 자율에 의한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과 ‘착유실 청결유지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토록 하고, 집유장·유가공공장에 대한 상시 위생 관리 강화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원유의 품질 및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산원유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 나가면서, 젖소 산유능력 검정 참여율 확대 등 젖소 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경영과 행정사무관 이성주)

8. 친환경농업 육성

환경보전 및 농업생산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농산물 안전을 중시하는 소비자 경향과 DDA, FTA 등 개방확대의 국제무역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더욱 지원·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제2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2006~2010년)」 및 「농업·농촌 종합대책(2004~2013년)」에 따라 2013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을 10%(저농약제외)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2007년 : 9.7%(2006년 : 6.2%)수준으로 확대). 또한, 화학비료·합성농약 사용량을 1999~2003년 평균사용량 대비 40% 절감토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먼저,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05년부터 시·군단위의 1,000ha규모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2006년 3개소(완주, 순천, 울진)를 선정하는데 이어, 2007년에 6개소(양구, 옥천, 익산, 장흥, 성주, 산청)를 신규 지정하고 개소당 100억원(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을 지원하여 단지를 조성하였으며, 마을단위의 10ha이상규모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2007년에 신규로 59개소를 조성(누계 879개소)하고, 2008년에는 69개소를 조성하였다.

또한, 토양의 지력증진과 화학비료·합성농약 절감을 위한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2008년부터는 공급주기를 현행 4년 1회 공급에서 3년 1회 공급으로 단축하는 한편 공급방식을 현행 일괄지급방식에서 농경지의 산성도를 반영한 농가신청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2008년에 491천톤(404억원), 2009년에 600천톤(651억원)을 공급하였다. 또한, 농가의 살포편의를 위해 전량 입상으로 전환하였다. 겨울철 유희농경지에 녹비작물(자운영, 호밀 등)을 재배하는 「푸른들가꾸기」 사업은 2009년에 135천ha에 걸쳐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녹비작물 종자(호밀)의 국산 녹체보리 대체연구(2007~2009년, 농촌진흥청)를 통해 국산화를 도모하여 '10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2008년부터 예산집행체제를 농협중앙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여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있으며, 화학비료 가격 상승에 따라 2008년에 200만톤(1,160억원)을 공급하고 있다. 생물학적 병해충 방제사업 중 “친적방제” 지원사업은 2008년부터 대상작목을 수박과 참외로 확대하고(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오이, 메론, 포도 등 9개 작목 대상), 대상면적을 2,500ha(37억원)로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에 처음 시작된 “미생물제제” 지원사업의 경우 딸기, 토마토, 고추, 오이 등 10개 품목에 1,000ha(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2009년에 90천ha에 대해 345억원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논밭의 지원단가를 통일하고 지급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2010년부터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중 저농약 신규인증을 폐지할 계획이다(다만, 기존 저농약 인증농가는 2015년까지 유예).

(친환경농업과 과장 신현관)

9. 동물보호·복지대책 추진

동물보호법령 시행으로 드러난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지자체, 동물보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물등록번호 체계 운영 규정(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동물유기방지 등을 위해 동물등록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부산과 제주에서 본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인천과 경기에서는 시범사업을 수행토록 하여 '10년도에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물보호의 강화를 위해 동물판매업 등록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동물보호명예감시관 위촉, 광역유기동물보호시설 설치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복지정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TV 프로그램 제작·방영하고, 2009 동물보호 문화·산업대전 개최('09.5월)하는 등 홍보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동물판매업자(장묘업)에 대한 교육, 동물보호감시관 교육 등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물등록제,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수행하여 시스템 문제점을 발굴·보완 하고 일반국민과 지자체 공무원 등의 시스템 활용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동물방역과 사무관 손경자)

제4절 선진국형 농산물 유통혁신

1. 마케팅지향형 산지유통 주체 육성

안정된 판로, 규모화된 출하조직, 전문경영인 책임경영 등 혁신요소를 고루

갖춘 기업형 공동마케팅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2007년 4개 조직에 1,433억원, 2008년도에는 13개 조직에 2,04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에 9개 조직에 1,62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0년도 사업자는 2009년 12월중에 공모 후 접수, 평가, 심사과정을 거쳐 2010년 1월 선정할 예정이며, 2007년도 선정조직 4개소에 대해서도 재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광역화·전문화를 유도하여 브랜드경영체로 육성하고 농가조직화, D/B구축, 생산지도(생산이력관리)부터 마케팅까지 일괄 관리하는 명실상부한 차세대 기업형 마케팅조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공동마케팅조직 시범사업 조직

선정연도	합계	거점산지조직형(6)	사업연합형(14)	전문마케팅법인형(12)
2007	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감귤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창(농협연합) ▪ 진주(농협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후레쉬영농조합
2008	1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천농협(합병조합) ▪ 대관령원예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성(조합법인) ▪ 나주(조합법인) ▪ 합천(유통회사) ▪ 햇사레(조합법인) ▪ 경기농협(농협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회사 판손 ▪ 농업회사 농산무역 ▪ 얼음골유통영농조합 ▪ 참다래유통영농조합 ▪ 농업회사 매봉 ▪ 신미네영농조합
2009	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주원예농협 ▪ 충북원예농협 ▪ 남원원예농협 ▪ 대구경북능금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조합법인) ▪ 부여(조합법인) ▪ 경주(농협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풀빛영농조합 ▪ 태영영농조합

2009년 공동마케팅 9개 조직의 연락처를 유도하기 위해 유통정책자금(1,210억원), 무이자인센티브자금(410억원), 마케팅·홍보비용(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공동마케팅 및 전문조직 품질관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135억원)를 지원하여 인력육성 및 사기진작을 유도할 계획이다.

2005년부터 산지유통종합평가제도를 도입하여 2006년 1월부터 평가결과에 따라 매년 조직별 1~3%의 차등금리를 적용중이다. 2009년에도 산지조직과 시설에 대한 경영평가를 위한 연구용역 및 종합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며 산지유통조직과 시설이 공동적으로 추구할 목표(규모화·부가가치·공공성)인 3개 핵심분야를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운영금리와 규모를 차등화하고 무이자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책과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산지유통활성화를 위해 1992년부터 산지유통센터지원, 2000년부터 산지유통전문조직 육성, 1995년·2001년부터 각각 채소·과실수급안정사업 지원을 통해 산지유통시설 기반조성, 생산자 조직의 규모화, 수급조절 등에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산지유통지원사업이 각각의 정책목표를 추구함에 따라 각종 유통지원자금이 조합단위로 유사한 목표를 갖고 통합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업으로 분산되어 정책자금의 효율성, 정책간의 연계성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산지에 지원되는 유사사업에 대한 통합을 통한 정책자금의 효율적 집행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그동안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통합방안을 도출하였다.

2007년부터 산지에 분산되어 지원하던 산지유통자금을 유통종합자금지원 방식으로 개편하였고, 2008년부터 시설채소, 과실수급안정사업, 산지유통활성화 대상조직을 통합선정 하고 있다.

앞으로 산지조직들의 연착륙을 위해 단계적으로 사업통합을 유도할 계획이며 2007년 1단계(산지유통활성화+시설채소+과실수급 통합)이후 2단계(산지유통활성화+시설채소+과실수급+노지채소)통합도 2009년 이후 추진할 예정이다.

산지유통자금을 종합지원방식으로 전환·일원화함으로써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며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시스템 도입과 평가를 통한 차등지원 및 경쟁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유통효율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산지유통의 핵심체로 육성할 계획이다.

(유통정책과 행정사무관 고경만)

2. 소비자 물류혁신 및 도매시장 운영효율화

최근 농수산물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에게 품질이 높은 안전한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산물농수산물도매시장의 안전성 검사를 2009. 1. 1부터 도입 하였다. 도매시장 안전성검사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검사체계, 검사시기와 주기, 검사품목, 수거시료 및 기준미달품의 관리방법 등을 포함한 안전성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매시장 안전성검사를 결과 기준 미달품으로 판정되면 출하를 제한하고 있으며도매시장의 안전성 검사를 위반한 자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년부터 출하자 신고를 의무화 하였다.

우리부에서는 금년 6월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및 도매시장 공판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도매시장 안전성검사, 출하자 신고, 전자거래 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금년부터 추진 중인 도매시장 안전성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개설자가 전국 33개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속성검사 13만건, 정밀검사 1만건 총14만건 ('09년 9월말 기준)을 검사하여 도입 초기 임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정착되어 가고 있다. 또한, 출하자 신고는 약 30만명의 대상자 중 24만명('09.9월말 기준)정도가 신고 완료하여 금년말까지는 대부분의 농어업인 등이 출하자 신고를 완료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매시장의 거래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부터 일정기준 이상의 시설에 보관 중인 농수산물에는 대해서는 견본만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07년부터 도입된 전자거래와 함께 농수산물의 물류효율화를 제고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농산물 상품성 향상을 위해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생산자 등에게 포장재비를 지원하고, 산지에서 농산물의 균질화·규모화를 통한 물류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지유통전문조직 및 공동마케팅 조직의 표준규격으로 농산물을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 물량에 대한 공동선별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06년도에 수도권 8개 시장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배

추 포장유통 사업을 2007년 1월부터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으로 확대하여 배추·무의 상품성 향상, 투명한 거래 정착, 도매시장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생산자·출하자의 포장재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8년까지 포장재비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농산물 물류효율화를 위해 지게차,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컨베이어, 광폭차량 등의 물류기기를 지원하며, 특히 2007년부터 농산물 물류의 규모화를 위해서 파렛트 2열 적재가 가능한 광폭차량(냉장·동, 텡바디, 탑차량 포함)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저비용으로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임차료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산지에서 고랭지 배추는 여름철 고온 다습한 기후 조건하에서 그물망 포장시 쉽게 부서지고 짓물러 상품성이 훼손된다는 우려에 가락시장, 구리시장 등 공영도매시장에서 플라스틱 상자 회수·관리 시범사업(2007년 7~9월)을 실시하였다. 그간 그물망을 대체할 포장재로 플라스틱상자가 적합하나 도매시장에서 회수·관리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고랭지 배추 포장유통 활성화에 큰 진전이 없었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유통 주체의 역할을 정립하여 플라스틱상자 회수·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농산물 상품성 유지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25개 농산물에 대해 대학교수, 연구기관·산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수확후 관리기술에 대한 표준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기 제작된 22개 품목에 대한 통합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활용중에 있다.

한편 유통환경 변화와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한편 노후화된 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기 '07년에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계획을 수립하고, '08년 1월 시설현대화가 필요한 11개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 가락시장 등 8개 도매시장이 시설현대화를 신청하였다.

도매시장시설현대화는 성장가능성, 시설의 노후와 정도 및 과부족전망, 지자체의 의지 및 계획의 적정성, 시설정비에 연계한 운영 개선 방안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서울 가락시장, 광주각화시장, 대전오정시장을 '09년도 시설현대화 대상으로 선정 하였으며, '09년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으로 기본설계

비 60억원을 반영하였다. 금년에는 3개 도매시장에 대해 기본설계를 실시 중에 있으며 정부는 중앙도매시장을 우선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고 향후 지방도매시장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 할 계획이다.

(유통정책과 행정사무관 박성기, 채소특작과 농업사무관 안형덕)

3. 농식품 수출확대

FTA 등 개방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농어업에 새로운 희망과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고 농식품 무역수지 개선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농식품 수출확대 정책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2008년에 2012년까지 농식품 수출 100억불 목표를 제시하였고, 농식품 수출확대에 유리한 해외 수출여건을 적극 활용한 결과, 2008년 농식품 수출은 2007년 대비 17.1% 증가한 44억불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2009년은 전 세계 경제 침체의 영향이 농식품 수출 분야에도 본격적으로 미침으로써 전 세계 농식품 교역이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소비 둔화로 수출단가 또한 하락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이 지속됨에 따라 2009년 농식품 수출은 2008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100억불 수출목표 달성 실현을 위한 수출확대 대책을 지속 추진 해 나가고 있으며, 1)선진국형 수출인프라 조성 2)성장동력 확충 및 3)해외 마케팅의 세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 중에 있다.

먼저, 선진국형 수출인프라 조성을 통해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수출업체와 생산농가가 계열화되어 안정적인 수출물량 공급, 품질 고급화를 목표로 2008년 선정된 13개 수출선도조직에 대해 컨설팅,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본격 육성하였다. 식품안전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 증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전지킴이 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수출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하였고, 생산성 및 기술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하

여 선진국 수준의 첨단유리온실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부터 본격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수출 농업 선진국에 교육을 기회를 부여하고 선도농가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여 정보교류, 벤치마킹 등을 통한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식재료 수출을 본격 추진 중에 있다.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해외 병원 및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식재료 수출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 개별 식재료 수출업체를 조직화한 식재료 수출협회 설립을 지원하였고, 국산 식재료 카달로그 제작, 현지 Fair 개최 등을 추진하였다. 수출지향형 검역협상을 전개한 결과 제주산 돼지고기의 대일 수출이 4년만에 재개되었고, 삼계탕, 버섯 등의 검역협상이 완료되어 진출 가능한 시장이 확대되었다. 또한, 중국, 아세안 등의 주요 수출국 검역관을 초청하여 향후 신속한 검역협상 추진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해외마케팅도 보다 효과적이고 공세적으로 추진하였다. 2009년 3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무역협회와 우리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중소기업청 등과도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전 세계 40여 개의 공관을 활용하여 현지 오피니언리더를 대상으로 국산 농식품 및 한식을 홍보하였다. 해외 식품박람회 참가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해외 유통·외식업체와 연계한 홍보·판촉전도 추진하였다.

특히, 한식세계화를 본격 추진함에 따라 막걸리·삼계탕 등 전통식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향후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식품산업진흥과 농업사무관 변상문)

4.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신뢰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20억 원을 조성하여 대중매체 홍보, 판촉행사 및 학교급식확대 등을 추진하고, 초등학교 교장단·영양사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현장체험 및

교육을 실시한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유통활성화의 일환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이 지자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180개 시·군에서 8,400여 학교에 1,028억원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 가공제품 개발을 확대하여 추진한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분기별 1회 이상 유통실태 및 품질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유기재배농가의 생산단계 이력추적관리제 참여를 확대한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의 연중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유통자금 448억원을 지원하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수도권에 친환경농산물 종합유통센터를 조성(총 480억원)하여 유통활성화를 도모한다.

(친환경농업과 행정사무관 류성모)

5. 시·군 유통회사 설립·운영 지원

대형유통업체의 확산 등 소비지의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전문화 등 혁신이 필요하나, 지역농협은 대부분 읍·면 단위의 소규모 조직으로 거래교섭력이 낮고 기업적 경영방식 도입에도 한계가 있으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경영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외부자본 조달의 어려움으로 규모화 수준이 미흡하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폐쇄적 자본구조, CEO의 독립성·전문성 부족 등으로 경영성과가 부진하는 등 영세한 산지유통조직으로는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키 어려워 시·군 단위 이상으로 규모화 된 농수산물 판매 전문회사 설립을 추진하여, 읍면단위의 산지유통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고 매출액 증가 등 시군 단위 산지유통의 성공모델을 시현하고, 산지수집상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농가수취가격을 제고하는 등 시군유통회사 설립을 계기로 산지유

통 혁신운동의 촉발을 도모한다.

기존 조직의 장·단점과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09년부터 시군 유통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시장·군수 워크숍(4월), 유통회사 설립 관계자 워크숍(5·6월 2회) 등을 통해 농어업인 및 관계자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고,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법률·회계 자문단을 구성(7.23), 정관작성 등 회사 설립업무를 지원하였다.

2009년도는 공모를 통해 신청한 조직(16개)에 대해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조직형태 및 의사결정 구조, 지자체의 추진의지 등에 대한 3단계 평가(현장확인·서면심사·공개발표평가)를 실시한 후 성공가능성이 높은 6개 조직을 시군 유통회사로 선정하였다.

시군 유통회사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가 조직화·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3년간 총 20억원 한도내에서 지원(연간 6.6억원)하고, 원물확보 등에 필요한 운영활성화자금을 3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시군 유통회사는 단순 공동판매에서 벗어나 규모화·전문화된 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산지-소비자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담당할 책임 있는 거래 주체로서 우리나라 농업경쟁력과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통정책과 행정사무관 고경만)

6.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가. 추진배경 및 방향

그동안 품목 또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생산자조직과 소비자에게 농수산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조직된 자조금 단체 등이 활동하여 왔으나,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유통환경과 개방화의 확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현행 자조금 단체의 경우 소비촉진 홍보 등 기능이 단순하여 산업전체를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농수협은 여러개의 품목을 종합적으로 취급함에 따라 품목에 대한 전문성·대표성이 취약한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DDA·FTA 등 개방화가 진전될 경우에는 관세 등 규제 제도를 활용한 산업보호 기능이 갈수록 약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약화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조직 육성이 시급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품목별 대표조직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대표조직은 각 품목의 생산에서 유통·소비등에 관여하는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품목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해당 대표조직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스스로 해결하고, 해당품목 발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주요 기능은 초기단계에는 자조금활동 등을 통한 소비 촉진홍보 및 관측정보 교환을 통한 자율적인 출하조절 등을 담당 하도록하고, 조직의 사업수행 능력 등이 어느 정도 확보될 경우에는 품목문제에서 발생하는 애로요인 해소 연구(R&D) 및 능동적 시장대응을 위한 마케팅 사업 등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품목산업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자리 매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조직화 정도에 따라 자조금사업 시행권을 대표조직에 이양하고, 정책수립시 대표조직과 협의를 거치도록하는 등 대표조직의 역할 강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나. 추진여건 조성

품목별 대표조직은 정부주도가 아닌 산업참여형으로 운영될 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인 등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2009년 상반기중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추진방향 설명 및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였다.

먼저, 농수산물중 생산액·수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9개 품목을 선정하여 생산에서 유통·가공·수출·소비단계까지 가치사슬(value chain)분석 및 조직현황·설립여건 등을 검토하여 품목별 생산·유통구조개선대책(시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의견수렴을 위한 워크숍·간담회·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워크숍에서 추진방향 및 선진사례 소개와 품목발전을 위한 토론을 실시한 결과 급속한 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표조직 육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일치되었다.

<표 3-2-6>

29개 품목현황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16	7	6
쌀, 배추, 고추, 마늘, 양파,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 인삼, 버섯, 사과, 배, 포도, 단감, 감귤, 백합	한우, 돼지, 우유, 닭(육계), 계란, 오리, 양봉	오징어, 고등어, 멸치, 넙치, 전복, 김

또한, 대표조직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114명으로 구성된 품목별 전문가 그룹을 편성하여 자문을 실시토록하고,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생산·유통·가공·수출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29개의 품목별연구회를 설립하여 품목별 생산·유통구조개선대책 수립 및 대표조직 발전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도록 하였다.

다. 품목별 대표조직 설립 본격화

2009년 상반기에 실시한 워크숍에서 대표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2009년 하반기부터 대표조직 설립활동을 본격 전개하고 있으며, 11월말까지 12개품목의 대표조직이 설립됨에 따라 년내 29품목의 대표조직 설립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2009년에 대표조직 설립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앞으로는 대표조직의 기구 및 조직정비 등 운영기반을 조기에 구축토록하고, 조직화정도에 따라 정책사업자 추천권을 대표조직에 부여하는 등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정책 수립시 대표조직과 협의를 정례화하는 등 역할을 활성화하여 품목별 대표조직이 해당 품목을 명실상부하게 대표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채소특작과 농업사무관 안형덕)

제5절 식품산업 육성

1. 식품산업육성 기반 마련

신 정부 들어 식품산업과 관련된 가장 큰 정책적 여건의 변화는 기존 규제 중심에서 탈피하여 식품을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식품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산업진흥법’이 2008년 6월 28일 시행되었고, 그 뒤를 이어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한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이 2008년 11월 13일 발표되었다. 또한, 2009년 1월 국가경제의 17대 신성장동력을 확정·발표하였는데, 고부가 식품산업¹⁾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표 3-2-7>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녹색기술산업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첨단융합산업	고부가 식품산업,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가서비스산업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1) 고부가 식품이란 기존 식품의 전통적 개념(영양공급원으로서의 먹을거리)을 뛰어넘어 첨단기술과 다양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고가에 판매가 가능한 식품을 일컫음. 고기능성 식품, 질병예방 식품, 특정성분 강화식품, 유기가공식품, 천연첨가물·소재, 발효기능강화 식품, 나노식품, 우주식품, 레저식품, 실버식품, 편의식품, 대체식품 등 다양

고부가 식품산업이 신성장 동력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기존 식품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수요·시장 창출,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식품산업이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서 기능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 미래 우리 식품산업이 가져야 할 비전과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2008년은 농림수산물식품부 출범, 「식품산업진흥법」 제정,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 수립 등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한 해였다면, 2009년에는 식품산업 진흥기반을 확충과 전략품목의 육성 등 도약을 위한 준비의 해였다.

식품산업을 고부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한식 세계화, 전통발효식품의 명품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고부가 식품의 개발 및 공급 확대를 위해 국내 농수산물 유래 우수소재 발굴·평가 연구와 DB화를 지원함으로써 기능성 식품산업의 육성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또한, 식품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대학·식품기업간 공동 실습프로그램 운영,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관련 정보를 DB화하여 제공하는 등 기초 인프라 강화에도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편, 최근 패스트푸드 위주의 서구식 식생활 및 수입식품의 확산으로 식(食)과 농(農)이 괴리되어 농식품 산업 발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식생활 교육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해 나가고 있다.

‘09.5월 식과 농의 연계를 통한 전통 식생활 계승·발전, 지역 농수산물식품 소비촉진,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교육 전개 등을 골자로 하는 「식생활교육 지원법」이 제정되었으며, 연말까지 녹색 식생활 지침을 개발하고 '10년부터 본격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과 단체, 저명인사 등이 참여하는 민간 중심의 ‘식생활 국민운동 본부’의 설립을 지원하여 민간의 식생활 교육 운동을 자발적으로 주도하게 할 계획이다.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바람직한 식생활의 확산 등을 통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래 2~5항에서는 2009년에 추진하였던 식품산업 주요 정책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다.

(식품산업정책과 기술서기관 전한영)

2. 한식세계화

2008년에는 한미 FTA 국회 비준동의로 묶여 있었던 한식세계화사업이 2009년에는 풀리면서 한식세계화를 위한 정부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2009년 2월에 한식세계화사업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고 ‘한식세계화 인프라 구축’, ‘한식 교육 및 경쟁력 강화’, ‘한식체험 및 홍보강화’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였다. 정부의 본격적인 한식세계화 활동에 맞추어 언론 등에서도 한식세계화 필요성, 가능성 등을 보도하기 시작했으며, 한식세계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08년 12월 수립한 ‘한식세계화 기본계획’에서 한식의 국내 산업화, 추진체계 구축 등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한식세계화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전문가·자문단 회의 등을 거쳐 ‘한식 산업화·세계화 추진계획(안)’을 수립하고 2009년 4월7일 한식세계화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발표하였다. 이후 범부처적, 민간참여적 한식세계화 추진을 위해 문화부, 외교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와 민간 전문가 등 총 36명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의 한식세계화추진단을 구성, 2009년 5월4일 출범회의를 개최하였다. 한식세계화추진단은 한식세계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협의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행정적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의 국장급으로 한식세계화추진 T/F를 구성하였으며, 한식세계화사업 등 시행기구인 사무국 역할을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수행하였다. 2009년 한식세계화는 초기단계로서 홍보 등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였다. 6월2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시 한식 오·만찬 제공을 통해 한식을 해외에 자연스럽게 홍보하였으며, 홍보대사(정지훈)를 선정하고, VANK와 한식홍보 협력 MOU를 체결하여 국내외 미디어와 인터넷 등을 활용한 한식

홍보를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CBS 등 해외 미디어를 통해서도 한식의 우수성 등을 홍보하였다.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미국·일본·중국의 시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지의 한식당 운영현황, 식재료 공급현황, 외국인 한식반응조사, 권역별 유망한식 발굴 및 마케팅 전략, 한식 BI개발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국내 경험 많고 능력 있는 조리사를 스태프로 육성하기 위한 ‘한식 스태프 과정’(2개소 50명)과 지역 향토음식 육성을 위한 ‘향토음식조리사 과정’(5개소 100여명), ‘해외 한식장 종사자 및 재외공관 조리사 교육’(미국·일본·중국·유럽 600여명)을 실시하여 현지 교육생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한식메뉴 124선에 대한 외국어표기안 및 스토리텔링을 3개 국어(영, 일, 중)로 제작·보급하고 한식메뉴 100선의 표준조리법을 4개 국어(영, 일, 중, 불)로 제작·보급하여 외국인들에게 한식을 올바르게 알리고 친밀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2009년 9월 국내 여론조사결과 국민 93%가 한식세계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70%가 실현가능성에 공감하는 등 높은 국민적 관심을 얻었으며, 한식세계화 추진계획 발표 이후 언론의 우호적인 기사가 300건이 넘는 등 평가를 얻었다. 또한 국내 및 일본 등에서 막걸리 열풍이 부는 등 해외진출도 가시화 되었다. CJ가 비빔밥 프랜차이즈를 일본에 이어 LA, 싱가포르, 상해 등 진출을 추진하고, 막걸리, 고추장, 김치 등의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떡볶이 또한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으며 프랜차이즈기업이 확대되는 등 성과가 있었다.

2010년에는 초기 불조성과 기반조성을 바탕으로 한식당의 해외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식당의 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하고, 해외 현지 한식당 협의체를 구축, 협의체를 통한 현지 마케팅 및 공동구매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G-20정상회의, 한국방문의해를 활용하여 한식을 세계인의 음식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간소하고 건강한 식단 개발하고 주요행사의 만찬으로 제공을 통해 한식을 세계인의 웰빙음식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며, 해외 주요 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한식을 홍보할 계획이다.

(한식세계화추진팀 농업사무관 이정삼)

3. 동북아 식품시장 허브 역할,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동북아시아 식품시장의 허브(hub)」라는 비전을 가지고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우리 농어업의 지속적 성장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국내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 올려 국가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프로젝트 사업으로, 2008년까지 입지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였다.

< 그동안 주요 추진경과 >

- 균형발전 정책보고회에서 ‘식품클러스터 조성 방향’ VIP 보고(2007.11.27)
 - 광역 식품클러스터 사업지역 2007년 내 선정(민관 협의체 심의) 보고
- 신규사업 추진에 공모한 지자체(5개)를 심의한 결과, 전북도를 사업대상 지자체로 선정(2007.12.17)
-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 반영
 - 2008년 신규사업으로 예산 확보(국비 20억)
- 농식품부 기본구상안 마련(2008.12)
 - 연구용역(산업연구원 주관) 및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수행
- 입지선정에 공모한 전라북도 6개 시·군(고창, 김제, 남원, 부안, 익산, 정읍·응모)을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익산시 일원을 최종입지로 선정 및 기본계획 발표(2008.12.26)
- 기획재정부에 2009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내년에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여 본격적인 국가 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을 검증하게 되며, 타당성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내년 2월에 타당성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한국개발원에서 조사를 수행하여 4월경 중간보고, 6월경 최종보고를 거쳐 2010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일정으로 추진된다. 다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예비타당

성조사 수행기간은 5~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사업의 성격 등에 따라 기간 연장 또는 단축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에 합의하면 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 예비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을 2009년에는 착수하여, '10년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식품산업진흥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식품산업진흥법에는 식품산업의 집적활성화 조항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직접 관련되는 규정을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할 추진주체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추진방향 등을 심의할 (가칭)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위원회를 민관의 전문가, 관계자를 포함하여 구성하고, 산하에 자문단과 추진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은 하나의 계(系)에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전담할 추진단을 구성하여 전체적인 식품클러스터 추진방향, 산업단지 조성 등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내에 임시 T/F팀을 구성하고,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직제에 반영하는 등 단계적으로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2009년에 반영된 사업비 20억원(국비, 지방비 50% 매칭)은 핵심아이템개발, 교류협력 및 투자유치, 인력양성지원 등 3개 분야에 투입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조성되기 전 사전 기반마련에 사용할 계획이다.

핵심아이템 개발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본계획을 구체화시킨 세부실행계획 및 기업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에 사용할 계획이다. 국가 식품클러스터에 설립되는 클러스터 관리기구인 (가칭)클러스터지원센터, R&D기관과 기업지원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교류협력 및 투자유치 활동은 국내외 기업 및 민간연구소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추진, 식품 박람회 계기 홍보 및 개별기업 방문 등을 추진하고, 해외 우수 식품클러스터·연구소·대학 등과 세미나, 공동연구, 벤치마킹 등 교류

협력 활동이 포함된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현장인력의 양성을 위해 식품 R&D 커리큘럼 운영과 잠재 식품인력에 대해 식품기업 및 식품관련 연구기관 현장연수를 통해 인력양성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은 동북아시아 식품시장의 허브 육성을 위해 국내 식품산업의 집적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 R&D의 상용화를 실현하는 국내 식품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연구소, 기업, 지역농업단체가 네트워킹을 통해 서로의 단점 보완을 통해 각자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전체 식품산업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집적과 네트워킹으로 인한 이점(利點)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활발한 네트워킹을 위해서는 다양한 식품기업의 집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업, 연구소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식품산업정책과 행정사무관 문태섭)

4. 전통·발효식품 산업 육성

가. 전통·발효식품 산업

김치·장류 등 발효식품이 미국 건강잡지 “Health지”에 세계 5대 건강식품에 선정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전통·발효식품은 영양학적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산업 인프라 확충 시 고부가가치 식품으로 수출 확대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어, 전통·발효 식품산업의 육성은 1차 산업에 머물러 있던 우리 농어업을 2·3차 산업으로 성장시켜 농어가 소득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 고용창출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전통발효식품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품질개

선·기능규명·R&D 투자 확대, 안정적인 원료 공급체계 구축, 시설 현대화 등 기초 인프라 확충 및 홍보를 위해 '09년 신규로 116억원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으며, 아울러 김치의 세계화를 위해 김치 R&D 개발, 홍보·마케팅·체험 등의 다목적 기능을 수행하게 될 세계 김치연구소를 11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중이며 연구소 입지는 광주광역시에 연구소 운영은 한국식품연구원 부설연구소로 우선 출범하여 자립화 방안을 마련 후 독립화 할 계획이다.

또한, 장류에 대해서는 고추장 된장의 Codex 채택을 계기로 장류의 건강기능성을 끊임없이 구명하고 발효기술을 응용한 다양한 고부가 식품 생산 확대 및 중소기업체 중심의 전통발효식품 생산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식품산업진흥과 해양수산사무관 박승준)

나. 천일염 산업육성

천일염을 포함한 소금산업 업무가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의 업무이관('09.3.20)을 계기로 천일염을 농림수산식품의 새로운 성장동력화하여 세계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금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친환경적 생산 인프라 구축 등 시설현대화 등에 33억원을 투입하여 세계적 명품 소금산업육성의 토대를 마련 하였다.

또한, 소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해 기존의 염관리법을 소금의 R&D개발, 홍보·마케팅, 전문인력양성 등의 소금산업지원과 품질검사, 표준규격, 이력관리 등의 소금의 품질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금 산업법으로 전부 개정할 계획이다.

(식품산업진흥과 해양수산사무관 박승준)

다. 전통주 산업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문화민족임을 자부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교역국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주류시장에 자랑스럽게 내놓을만한 이렇다할 대표적인 술 하나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0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술 시장 규모는 약 26조원(출고가 기준 8조6천억원)으로 추정되며 전통주의 시장 점유율은 막걸리·약주를 포함해서 4.5%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수출액은 2억3천만불로 소주와 맥주가 72%를 차지하고 있고, 수입액은 6억7천만불로 매년 무역 적자가 확대 추세에 있다.

그래서 정부는 그동안 침체 되었던 우리 술 산업을 활성화하여 한식 세계화와 함께 세계적인 명주로 육성하겠다는 「우리 술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26일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계인이 사랑하는 우리 술’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명주 육성을 목표로 5대 중점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첫째, 품질고급화를 위한 양조 전용 품종개발·보급 등 R&D 강화, 프랑스·일본 등과 같이 원산지표시제, 품질인증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둘째, 우리 술의 다양성 확대를 위해 고문헌에 수록된 전통주의 복원을 추진하여 DB화합은 물론 전문인력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우리 술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 주류 품평회를 개최하여 주종별 대표브랜드를 선정하여 각종 국제행사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배주로 추천하거나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하는 등 집중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각 시·도 예심을 통과한 86개 전통주에 대하여 10월12일 ‘2009 한국 전통주품평회’를 개최하여 5개 부문별(막걸리, 청주·약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기타 전통주)로 입상작을 선정하였다. 넷째, 농업 및 지역발전을 위해 농업인 등으로 한정하여 참여할 수 있는 ‘농민주’ 개념을 ‘지역특산주’ 개념을 도입하여 원료 생산자와 제조자 등을 전문화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농산물의 사용도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로 1개월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전국의 34개 막걸리 제조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2009년산 국내 햅쌀 약 1,211톤을 주원료로 하여 12월10일 ‘2009 햅쌀막걸리’를 출시하여 전국의 대형 유통매장을 통해 판매토록 하였다. 다섯째,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적당한 술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지나친 술은 건강에 해롭다(百藥

之長, 百毒之長)’는 말이 있듯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술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민간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난 6월 10일 ‘막걸리 Transformer展’, 11월 19일 ‘햅쌀(누보) 막걸리 출시’, 11월 19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개최된 ‘2009 막걸리 엑스포’, 11월 26일의 ‘막걸리각테일 바텐더대회’ 등은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는 행사로 정부가 추진한 결과였다.

정부는 올해를 우리 술이 세계적인 명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계기로 우리 술 산업의 패러다임에 일대 전환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스카치위스키, 꼬냑, 사케 등과 같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는 명주육성을 위한 제도정비 및 산업진흥 기반이 마련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0월 14일 (사)한국전통주진흥협회주관으로 ‘전통주 산업진흥 및 명품화 전략을 위한 세미나’, 11월 20일 식품음료신문사 주최의 ‘우리 술 막걸리산업 발전방안 심포지엄 및 토론회’, 12월 7일 ‘전통주 마케팅보드 설치·운영에 관한 공청회’,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전통주 세계화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산관학에 계신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추진하여 왔다. 앞으로 관련제도의 정비와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은 물론, 술을 제조·판매하거나, 연구하거나, 정책을 수행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이 우리 술을 사랑하고 찾을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식품산업진흥과 농업사무관 조성근)

5.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2008.2월 신 정부 출범과 더불어 기존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수산기능, 식품산업 진흥부분을 통합한 농림수산식품부가 출범하였다. 농어업의 문제

를 식품을 매개로 해결해야 하려는 신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과거 생산 중심의 농업정책으로는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제대로 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잡다기한 푸드시스템을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를 통한 동반 성장의 도모는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의 목표이자 7대 정책과제의 하나로써, 식품산업의 중요한 한축을 이루게 되었다.

먼저,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학·연·관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1차 산업인 농어업을 2·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광역클러스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동 사업은 사업계획을 사업단이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지역 별로 특화된 농산업을 중심으로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9년 현재까지 총 54개 사업단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2016년까지 사업단 100개소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농산물 유통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식품·외식·유통업체 등이 국내산 원료를 직거래 할 경우, 원료 구매에 소요되는 자금을 용자지원해주는 산지·소비자 상생협력 사업도 적극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농어업 산지와 실 수요업체들간의 직접적인 교류협력을 유도하여 농어업과 식품산업이 상생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산자와 식품기업이 공동 출자한 융복합형 식품제조기업 육성도 적극 추진 중이다. 동 사업을 통해 생산자에게는 원료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추가 소득 배분, 생산기업에게는 안정적 원료 확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원료 생산자와 기업의 상생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중심의 로컬 푸드(Local Food) 운동이 정착될 경우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09.5월 지역 농수산물 소비 촉진, 친환경 식생활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식(食)과 농(農)의 연계를 통한 전통식생활 계승·발전, 지역농수산물 소비촉진,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교육 전개 등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한편, 2009년 12월 민간 차원의 ‘식생활 국민운동 본부’가 발족을 앞두고 있다. 민간 차원의 식생활 교육 운동이 확산된다면 농어업과 식품산업이 함께 발전해 나가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산업정책과 기술서기관 전한영)

제6절 농가소득 및 농업경영 안정제도 강화

1. 직접지불제 확충

가. 직접지불제 확충 방향

직접지불제는 WTO체제 출범 이후 가격지지 정책보다 소득보전 효과가 크고 시장왜곡 효과가 작은 것으로 평가되어 전 세계적으로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경영이양직접지불제를 도입한 이후 1999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2004년 폐업지원,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2005년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2009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등을 연차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지불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직접지불제가 혼재되어 집행·관리비용이 증가하고, 대부분의 직접지불금이 쌀에 집중되어 품목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며,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가수가 많아 개방확대에 따른 실질적인 소득안정 기능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의 강화,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의 확대 등 현재 운용중인 직접지불제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규모 농가와 규모화된 농가 각각의 상황에 맞는 소득안정망을 확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9개의 직접지불제를 ‘공익형’과 ‘경영안정형’ 2가지 유형으로 통

합하되, 생산왜곡을 피하고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안정을 위해 품목별·가격보전 방식의 직접지불제를 농가별 소득 및 경영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국토 및 환경보전 등 일정한 의무를 준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형 직접지불제를 확충하여 주로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기본적인 소득보전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면서, 주업농을 대상으로 하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를 도입하는 등 경영안정형 직접지불제를 확충하여 경영규모가 큰 농가에 대하여 농업 소득 불안정 등에 따른 경영위험을 완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관 이동홍)

나.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정부는 쌀값 하락시에 쌀생산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를 2005년부터 도입하면서 쌀 80kg 가마당 목표가격을 170,083원으로 설정하고 3년마다 변경하도록 하였으나, 2008년 3월 법령개정(의원입법)으로 기존의 목표가격을 2012년산까지 연장하고, 5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하였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고정직접지불금은 쌀값과 상관없이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는 농지에 대하여 ha당 평균 70만원(농업진흥지역 안 746천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597천원)을 지급하고, 변동직접지불금은 목표가격과 수확기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2008년도 하반기에 전문직 종사자 등 사회지도층 일부가 실제 논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에서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부당수령사건실태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8년도에 국정조사를 실시하였고, 정부에서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여부에 대한 특별조사를 2008년 10월부터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제도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먼저 특별조사 대상은 '05년부터 '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했거나 쌀 직불금을 신청한 1,303천여명, 쌀 직불금을 지급한 농지 총 21,897천필지에 대하여 '08.10월부터 '09.4월까지 실경작 여부 등을 특별조사하여 부당수령자를 확인하였다.

정부에서는 특별조사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국무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쌀소득직불제 관련 대책 T/F”를 구성하여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의 관련 실·국장이 팀원으로 참여하여 제도개선 방안, 특별조사 방법, 부당수령 판정기준, 공직자 조사 및 징계지침 등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제1차관을 실장으로 하는 특별상황실을 설치·운영('08.10.20~'09.1.20)하여 쌀 직불금 제도개선 및 부당신청 접수·처리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하였으며, 전국의 1,820개 읍·면·동에는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위원장 : 읍·면·동장)”설치하고, 해당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농업인 단체, 이장·통장 등 민간이 동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여 특별조사 결과의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였다.

특별조사 절차는 각 읍·면·동에서 조사 대상자를 확정된 후, 농림수산식품부의 Agrix시스템을 통해 비료·농약구입 영수증 등 영농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토록 하여 영농기록 1건 이상(관외 거주자는 2건이상) 확인될 경우에는 실 경작자로 인정하고, 영농기록 확인이 안되는 관내거주자들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할 것을 해당자들에게 통보하고,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 위원들이 현지조사를 하도록 하여 현지조사 결과 및 이의신청 자는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부당수령 여부를 최종 판단토록 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아울러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쌀 직불금을 받은 공

직자들은 각 소속기관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자진 신고하도록 한 후, 각 소속기관에서 소명자료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부당수령여부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에서 취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조사결과와 상호 재확인 절차를 거쳐 억울하게 부당수령자로 판정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공직자) 주관으로 실시한 쌀 직불금 부당수령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 1,303천명 중 부당수령자는 19,242명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에는 공직자(가족 포함)가 2,452명이 포함되었으며, 부당수령금은 143억원으로 확정하여 국무총리실 쌀 직불금 관련 대책 T/F팀의 논의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보고를 거쳐 정부에서는 특별조사 결과를 2009년 5월 1일에 발표하였다.

특별조사 결과 부당수령금은 국고에 반납하도록 조치하고,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3년 이내 범위내에서 등록제한 조치를 하고, 부당수령 공직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징계조치를 한 후 정부 차원의 특별조사를 마무리 지었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07년부터 진행된 제도개선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8년 10월 국회에 제출하고, 이후 2008년 12월말에 법률개정안을 보완하였고,

국회에서도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한나라당 2008.11.20, 민주당 2008.11.24)하여 관련자들로부터 의견수렴과 당정 간담회(2008.12.30)를 통한 의견조율을 통하여 점차 제도개선(안)에 대한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였다.

한편, 한나라당 정해걸의원, 민주당 최규성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 a민주당 유선호의원(법제사법위원회), 자유선진당 김창수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주승용의원(지식경제위원회) 등이 대표발의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정부안과 국회의원 발의(안)에 대한 정부 측의 검토와 국회 농림수산식품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09.3.2일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한나라당 정해걸의원의 제안 설명 및 심사보고로 재적의원 178人 중 178人的 찬성으로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9.3.25일 공포 되어 제도개선도 마무리하게 된다.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한 제도개선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그동안은 신규진입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신설하였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05년부터 '08년까지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로 제한하고, 후계농업경영인 등 “신규진입” 요건을 갖춘 자는 예외를 인정하였다. 다만, 도시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그동안 쌀 직불금을 1회 정당하게 받았을 경우에도 “농업을 주업”으로 해야 지급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강화하여 부재 지주들이 부당하게 쌀 직불금을 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으며,

또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는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쌀생산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는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등 사람에 대한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였다.

둘째는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조정하였다. 대규모 농업경영체에 쌀 직불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인은 30ha, 법인 50ha까지만 쌀 직불금을 지급하는 지급상한 면적을 도입하였으며, 아울러 지금까지는 부당수령한 사람만 등록제한 조치하던 것을 2009년도부터는 부당수령한 사람이 소유한 농지도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지급대상 농지를 조정하였다.

셋째는 실제 논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부당하게 쌀 직불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경작 여부 확인체제를 강화하였다. 우선 쌀 직불금 등록신청 기관을 주소지 읍·면·동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으로 변경하고, 실제 경작여부 확인을 위해 경작사실 확인서(관내는 이장이 확인, 관외는 이장과 마을 주민 3명이 확인) 및 비료·농약구입 영수증 등 영농기록(관내경작자는 1건 이상, 관외경작자는 2건 이상)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아울러 쌀 직불금 등록신청자들의 논농업 종사 여부를 확인을 강

화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농업인단체, 이·통장 등 민간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설치·운영하여 부채 지주들의 부당 수령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넷째는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신청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민간 감시체계를 구축하였다. 논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건당 10만원, 연간 100만원 범위안에서 신고포상금 지급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 쌀 직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을 최대 30일간 공개하도록 하여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다섯째는 부당하게 등록한 자 또는 수령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였다. 부당하게 등록 또는 수령한 자와 허위로 경작사실을 증명해 준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고, 부당하게 쌀 직불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과 그 금액의 2배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고, 만약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9/100까지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부당 등록자 또는 수령자는 종전에 3년간 등록제한 하던 것을 5년간 등록제한 하도록 대폭 강화하였다.

끝으로 종전 행정안전부의 쌀 직불금 농촌행정전산시스템을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 받아 새로운 Agrix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함으로써 시·도 또는 시·군간 중복 신청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대장, 농지원부 등 관련 자료와 일괄 대조함으로써 부당하게 직불금을 신청하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방지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로써 2008년도 하반기부터 불거진 쌀 직불금 부당수령과 관련된 쌀소득직불제 특별조사와 제도개선은 일단락되었으며, 2009년도는 쌀 직불제가 쌀생산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다시 구축한 해로 평가되며,

새 제도에 따라 금년도 등록신청을 접수한 결과 인원은 886천명으로 '08년(1,098천명) 대비 80%, 면적은 903천ha로 '08년(1,012천ha) 대비 89% 수준으로 실제 쌀경작 농업인 위주로 쌀 직불금이 신청된 것으로 분석된다.

(농가소득안정추진단 행정사무관 변동주)

다. 경영이양직불제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를 촉진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동 사업은 한국농촌공사를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한 농업인으로서 연령이 65세 이상 70세 이하인 농업인이 소유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매도·임대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 최장 10년간 ha당 250천원(연 3,000천원)을 매월 분할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 상한은 매도 및 임대 각각 2ha까지로 되어 있다.

특히, '09년도에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농업부분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를 확대·개편하기로 함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진흥지역 논에 한정하던 것을 진흥지역 내 논·밭·과수원, 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된 논·밭·과수원 등으로 확대하고, 신청연령을 63세~69세에서 65~70세로 조정('09년에 한해 74세까지 신청 가능), 지급기간을 75세까지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며, 임대하는 경우에도 매도할 때와 마찬가지로 75세까지 분할지급하고 지급단가를 상향하는 등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하여 2009년 1월부터 확대 시행 중에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행정사무관 홍만의)

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일부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고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의 지급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써 친환경농업 실천기준을 이행하여야 하며, 농가당 0.1ha~5.0ha까지의

지원한도 내에서 3년간만 지원한다.

지급단가는 인증종류와 논·밭으로 구분하여 각각 달리 지원되며, 논인 경우 ha당 유기 392천원, 무농약 307천원, 저농약 217천원이며, 밭의 경우 ha당 유기 794천원, 무농약 674천원, 저농약 524천원을 지원한다.

2008년도에는 319억원(국고 100%)을 투입하여 전국에 걸쳐 72천ha를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는 345억원을 투입하여 90천ha를 대상으로 본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과 행정사무관 류성모)

마.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2005년 기준으로 농어촌 지역(읍면)의 면적은 전국토의 90%에 달하지만 농어촌 거주인구는 전체인구의 18.5%에 불과하며 그 비율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적정 농어촌의 인구 확보 없이는 정주에 필요한 기초서비스 공급은 물론 새로운 경제활동 기회 창출도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어촌의 인구과소화 및 지역사회 붕괴는 많은 농어촌 문제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은 이러한 농어촌의 인구과소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04~'05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06년부터 본사업을 실시하였다.

지원대상이 되는 조건불리지역은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가 14% 이하 경지면적이 50% 이하인 지역을 법정리 단위로 선정하고 있다. 직불금은 조건불리지역이 속한 읍면 또는 해당 법정리에 연접하는 읍면에 실거주하며 농지관리의무를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며, 직불금의 3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2009년에는 기존의 사업대상 법정리 중 현행 조건불리지역 선정기준 적용 시 제외되거나 추가되는 지역이 발생하여 동사업의 대상 법정리를 기존 3,185개에서 3,144개(전국 읍면 지역 15,292개 법정리 중 20.6%)로 조정하였

으며,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297억원(국고기준)의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은 '04년 제도도입 당시의 지급단가가 변동없이 유지되어 그동안 꾸준히 지급단가 인상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도에는 밭 50만원/ha, 초지 25만원/ha로 지급단가를 25% 인상하여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농가소득안정추진단 행정사무관 김형식)

바. 경관보전직불제

2005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관보전직불제는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제고하여 농촌지역사회를 활성화 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09년부터 마을경관보전활동비(30만원/ha)를 지원하여 작물재배와 연계한 마을진입로, 안길 꽃길조성 등 경관보전 활동을 촉진하도록 하였고,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를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로 개편하여 경관보전보조금 신청 대상자 외, 대상 마을주민 및 농어촌 경관 또는 도농 교류의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협약의무사항을 규정하여 협약을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방문객 탐방로 설치, 생육 개화상태 유지 위한 배수로 설치 및 주변환경 관리와 재배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며, 지역축제,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 활성화 프로그램과 연계하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그동안 본사업 추진이후 마을주민의 자발적 경관가꾸기, 마을가꾸기의 발전이 경시되고 농업형직불제 위주의 정부의존형 프로그램으로 퇴색되는 등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다. 특히, '08 제2녹색혁명(겨울철 유희농지 활용) 대책 추진에 따라 사업성격이 변화되었고, 지원단가 조정시 산정기준을 소득차액 손실보전에서 생산비 보전 방식으로 변경하여 경관보전직불제가 소득보전직불 성격으로 변화되었다고 보고 있다.

'08년 동계작물 지원단가 조정시(170만원/ha→100) 유채생산비를 기초로 산정하였고, 품목선정시 '경관가치'의 주관성을 극복하는 객관적 평가절차가

결여되고, 품목선정을 시·군에 일임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고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추진 중인 공익형직불제 도입에 대비하여 경관보전직불제의 직불단가는 소득손실분의 보전에 한정하고, 추가비용(자본적 지출)을 보전하는 직불요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주도형 자발적 마을가꾸기, 경관가꾸기를 기본축으로 하고, 농업형직불제 지원은 보조축이 되도록 하는 정책구조를 전환하는 방안을 전문가 및 농어업인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관 강동민)

사.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도상연습 실시계획 마련

FTA/DDA 추진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농업소득의 불안정성은 증가하나 직불제를 통한 농가소득 지지는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며, 현행 직불금이 쌀에 집중되어 품목간 형평성 문제 등도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품목별 직불제에서 농가단위 직불제로, 가격보전에서 소득보정으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어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를 도입키로 결정하였다.('07.6.28)

도입시기에 대해 관계공무원 및 농업인·학계 등이 참여한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서 논의하였으나, 소득정보 파악 기반이 취약하고 조직과 인력이 구비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경우 현 시점에서 바로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2010년부터 도상연습을 실시하여 문제점 해결 등 여건을 마련한 후 2013년 이후 본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다.(농어업선진화위원회, '09.7.27)

2010년 도상연습은 사업시행주체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도별 1개 읍·면 약 5,000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소득불안정성과 FTA 체결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9개 품목(쌀, 콩, 고추, 사과, 포도, 감귤, 한우, 돼지, 계란)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농가소득안정추진단 기술서기관 조강제)

2. 재난대비 경영안정장치 강화

가.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원리를 이용,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 요소를 해소하여 안정적인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고자 2001년부터 도입한 제도로서 그간 태풍 “루사(2002)” 및 “매미(2003)” 등으로 약 4만 2천여 농가에 3,21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2001년 사과·배 2개 품목으로 시작한 농작물재해보험은 지속적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2009년 현재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뽕은감·밤·참다래·자두·감자·콩·양파·고추·수박·옥수수·고구마·마늘·매실 등 20개 품목에 대해 보험실시 중에 있으며, 매년 제도개선을 통해 대상재해를 확대하고 보상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집중호우 및 나무보상 특약 적용품목을 사과·배에서 과수 전 품목으로 확대하였고 감귤의 태풍에 의한 풍상과 피해 보상을 추가하였으며 봄동상해 특약 보장금액을 주계약 보장금액의 50%에서 100%로 확대하였다. 또한 우박피해 과실의 평가등급을 세분화하여 보상범위를 현실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50%, 운영비의 100%를 지속 지원하고, 보험요율을 2008년 대비 0.61%P 감소한 5.52%로 인하하였다.

이에 2009년도에는 전년대비 7.4% 증가한 32,968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면적도 2008년 24,009ha에서 26,388ha로 늘어 가입률 31.4%를 달성하였다.

<표 3-2-8>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성장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대상품목 ¹⁾		6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	6	7 (뽕은감 추가)	10 (밤·참다래·자두 추가)	15 (콩,감자,고추,양파,수박 추가)
가입 실적	가입농가(호)	23,926	26,335	27,419	29,174	32,538
	가입면적(ha)	17,546	20,301	21,466	23,661	26,037
	가입률(%)	18.2	23.4	24.5	26.5	28.5
지원 규모	순보험료(%)	50	61.2	58.4	55.6	52.8
	운영비(%)	90	100	100	100	100
	국고지원액	37,803	49,371	50,783	49,280	49,063
지급 보험금	지급농가(호)	3,177	5,877	5,171	7,274	3,383
	보험금	13,599	23,871	21,112	61,464	24,932
	손해율(%)	42.3	43.5	36.6	110.4	45.0

주 : 1) 본사업 시작년도 : 사과·배(2003), 복숭아·포도·단감·감귤(2004)
 자료 : 농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윤승우)

나. 재해농가 지원확충

농업분야 재해지원 확충 및 재해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림수산식품부예규 제19호)을 운영중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지원대상 농업재해 기준 설정 및 피해발생 상황보고 및 피해조사요령 등을 제시하여,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였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국가의 보조 지원대상 농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피해복구비를

농어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또한, 2009년도 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양곡대, 콩치, 꽃게, 돛 등 19개 품목을 1.1~92%까지 인상하였고, 종오리사, 분뇨처리(오리), 농업, 전복 등 26개 품목을 신설하였다. 앞으로도 재해농가의 지원확충을 위해 제도개선 및 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인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산경영과 사무관 이상집)

다. 가축공제 운영 내실화

가축공제는 자연재해, 화재 및 질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축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회생을 도모하고자 1997년부터 도입한 제도로서 최근 태풍,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증가하면서 농가의 공제가입건수 및 보험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1997년 “소” 1개 축종으로 시작한 가축공제 사업은 대상축종을 지속 확대하여 2009년에는 “소, 돼지, 닭, 말, 오리, 메추리, 꿩, 사슴, 칠면조, 거위, 타조, 양, 벌” 등 13개 축종에 대해 사업실시 중에 있으며, 매년 제도개선을 통해 대상재해 및 보상수준을 확대하고 있다.

2009년에는 축산농가의 공제료 부담경감을 위해 공제료의 50%를 지속 지원하였고, 무료가축진료사업 추진, 대농업인 공제가입 홍보강화 등으로 공제가입률을 전년 45.4% 대비 2.4P 증가한 47.8%로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가축공제의 “축사보상 특약”의 경우 축사의 겨울철 주요재해인 “설해”를 추가하였고, 공제료 지원율도 가축과 동일하게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민영보험사(LIG 컨소시엄)에서 추진하는 가축보험의 대상축종을 5개에서 12개로 확대하여 축산농가가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2-9>

가축공제 가입률

(단위 :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소	7.2	7.3	7.1	8.3	8.1
돼 지	49.9	57.6	66.7	63.3	65.3
말	1.9	4.9	6.7	8.6	7.9
닭	22.3	32.8	39.3	43.1	45.4

자료 : 농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윤승우)

라. 농업인 안전공제 추진

1) 도입배경

농업은 광업, 건축업 등과 함께 작업상 사고나 질병의 위험이 높은 산업으로 농업인은 항상 농작업 과정에서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농업인의 사고와 질병은 농가의 생활불안정 및 빈곤층 전락을 유발하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농업인 안전공제의 농업인 부담 공제료 50%를 국고보조하고 있다.

2) 추진경과

- 2008년 농업인안전공제의 농작업 중 사망공제금을 2007년 35백만원에서 45백만원으로 강화하는 등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장수준을 확대
- 2009년 농업인안전공제의 농작업 중 사망공제금을 45백만원에서 최고 60백만원(1종:45백만원→3종:40,50,60백만원)으로 강화

3) 추진실적

2008년 농림업 경제활동인구 167만명의 45.7% 수준인 76만명이 가입했으며, 1996년 이후 2008년까지 882만명이 공제료의 50%를 지원받았다.

<표 3-2-10>

농업인 안전공제 추진실적

(단위 : 천건, 억원)

구 분	합 계	2002까지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사업량 (계약건수)	8,822	4,552	705	690	711	658	742	764
사고시 지급공제금	2,197	880	133	165	167	201	284	367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윤승우)

3. 농업경영회생지원제도 구축

가. 농가부채경감대책 추진

최근 농업이 규모화 하면서 시설투자 등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상응하게 자산도 늘어나고 있어 전반적인 부채상환능력(부채/자산비율)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FTA진전, 농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농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일부 농가의 경우 자력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부채구조에 처해 있다.

특히, '09년에는 '04년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2조원) 등 약 3조원의 부채대책자금의 상환기일이 집중 도래하고 있어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04 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5월

27일 공포·시행되었으며, 이에 맞춰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 농어가부채 경감대책 시행지침」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에 따라 '04~'05까지 지원받은 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원금)의 잔액에 대하여 연리 5%로 5년간 분할 상환하게 된다. 둘째, '04년 지원받은 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을 이번 조치에 의해 분할상환하지 않고, 당초 상환기한 내에 정상 상환하는 농어업인은 납부한 이자액(최대 1년분)의 40%를 환급한다. 셋째, '04 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변경한 농어업인이라도 약정 기일보다 1년 이상 조기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 원금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40%를 환급한다. 넷째,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예·적금 등 금융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충분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부부합산 연간 급여총액이 31백만원 이상이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예금 등 금융자산이 총 부채액의 80%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기한부 예·적금이 16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금액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분할상환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09년중 만기가 도래(법시행 전에 만기가 도래한 자금 포함)되는 경우 '09.12.11일까지, '10년중 만기도래분은 '10.6.30일까지 농·수·축·산림조합에 비치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0년중 만기도래분으로서 농어업인이 희망하는 경우 '09년중 신청 및 대출도 가능하며, 2개 이상의 조합에 대출금이 있는 경우 각 대출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동 대책의 시행으로 13만여 농어가에서 향후 5년간 1,300여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동안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추진된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인하 등에 따른 이차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 2,643억원의 부채대책 이차보전 예산을 반영하여 저리자금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해 주고 있다.

(농업금융정책과 서기관 이낙휘)

나.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제도 개선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사업’의 2006년 이후 지원실적이 매우 부진하였다. 이에 따라 ‘07.6월 「농림정책리모델링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의 기준(예시)을 추가하고, 경영평가기준을 단순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데 이어 2008년 12월에 지원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을 한 바 있다.

그 결과 2009년 지원실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년은 당초 지원계획이 200억원이었으나, 100억원을 증액하여 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지원실적 등을 보아가면서 지원조건 완화 등 제도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특정 경영체에 대한 과도한 지원으로 소득분배 왜곡 및 형평성 문제 등이 우려되어 이를 막기 위해 ‘09.9월에 농가당 지원한도를 10억원(농업법인 15억원)으로 설정한바 있다.

(농업금융정책과 서기관 이낙휘)

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추진

농지은행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부채로 농지가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혀있어 경매 등을 통하지 않는 한 매각이 어렵고, 담보농지 경매시 유찰, 저가 낙찰되어 재산상 손실이 불가피한 농가에게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채,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업법인의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은 후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써, 매입농지는 당해 농가에 장기 임대하고, 임대기간중 환매권을 보장한다.

지원대상은 농업재해(피해율 50% 이상) 또는 부채(40백만원 이상)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하고 있으며, 매입대상은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농업용시설(유리온실, 축사, 버섯재배사)로서 매입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있다.

매입농지의 임대기간은 7년(3년 연장가능)이며, 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 이내에서 매입단가에 따라 차등 요율을 적용한다.

원리금 상환유예 및 금리인하 등 현행 금융위주의 지원방식으로는 경영위기 농가의 실질적인 회생에 한계가 있어 농지은행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2006년부터 시행하여 경영위기 농가 등의 경영회생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2009년에는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농가의 부채액 기준을 50백만원 이상에서 40백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매입대상을 농지외에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유리온실, 축사, 버섯재배사)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임대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환매가격은 감정평가액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한 이자율(3%)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중 낮은 가격으로 정하여 환매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신청자가 당초 계획보다 많아 추가 예산 250억원을 확보(총 1,700억원)하여 신청 농가의 70%까지 지원하였다.

경매시 정상가액의 60~70% 수준 낙찰에 따른 농가자산 감소 방지, 높은 연체이자(16%) 대신 낮은 임차료(1%) 지급으로 농가부담이 감소되는 등 경영위기 농가의 경영회생에 기여하고 있다.

(농지과 사무관 정수경)

4. 농업정책금융 지원제도 개선

가. 추진현황

농업분야 금융시장은 상업금융기관이 진출을 꺼리고 농업부문의 낮은

수익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 동안 정책금융은 농업분야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시장기능과 경쟁의 원리를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서 농협을 통하여 주로 지원하여 오던 농업정책자금의 공급방식을 완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시중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정책자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04년 8월부터 축발기금으로 지원되는 일부 사업자금의 취급은행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한 데 이어, 2006년 1월부터 축발기금의 모든 용자사업과 미곡종합처리장운영자금, 농기계구입자금, 2008년 1월부터 농기계사후관리, 신규 후계농, 창업농, 후계농 추가지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자금을 시중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자금으로 추가 확대하였고, 시중은행도 농업정책자금에 한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한편, 2004년 5월에는 재단법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신설하여 농특회계 용자금 관리의 전문성 제고, 농특회계용자금에 대한 상시 검사체계를 확립하는 등 농업정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기존의 26개 개별사업을 농업종합자금으로 통합하여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의 타당성·경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대출하도록 하였고, 기존에는 지역별·품목별·용도별로 구분하여 자금을 운용하였으나 종합자금제도는 전국적으로 하나의 자금풀(Pool)로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여 지원규모도 1999년 145억원에서 2007년 10,000억원으로 점차적으로 증대 지원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한편,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원활한 생산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설치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을 확대하고 건전운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5년 8월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출연을 확대(2005년 4,000억원→2006년 5,780억원→2007년 7,357억원)하는 한편, 농·수협중앙회의 출연요율 인상(0.2%→0.3%) 및 일선조합의 신규출연, 위탁보증수수료 인하(15%→10%), 부분보증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나. 추진계획

앞으로 농업정책자금의 공급방식을 완전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등 시장 지향적 개편을 통해 농업인의 대출편익과 금융서비스의 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정책자금 취급 권한을 시중은행에 지속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한편,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시 영농규모에 상응한 적정규모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 신청할 경우 소요경영비를 보다 엄격하게 심사한 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소요경영비 심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동 자금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지원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정책자금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 사업타당성 있는 우수 농업경영체의 신용대출 기회 확대, 농축산경영자금 건전성 강화, 금융컨설팅 지원강화 등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원활한 보증지원을 위해서 정부출연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기금을 정상화하여, 농어업인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한 담보력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정책자금(융자금)의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의 검사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등 농업정책자금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최봉순)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부문 세제지원

가. 추진현황

조세제도는 법과 제도, 공공인프라, 재정·금융지원과 더불어 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개인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핵심적 정책 수단이다. 우리나라에서 농업분야에 대한 조세정책은 다수의 조세감면으로 농업생산을 장려하고, 농업 종사자의 소득을 지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전체적인 조세지원 중에서 농업인 관련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2008년 농어민지원 16.0%)이 높은 편이며, 직접적 재정지출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농업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업인 관련 조세경감은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거래과세(취득, 등록세) 등에 걸쳐 폭넓게 시행되고 있다. 먼저 직접세의 경우를 살펴보면, 소득세의 경우 전담임대소득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 이자소득세 감면이 있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있으며, 증여세의 경우 영농 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등이 있다.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감면 등 법인세에 대한 감면도 다양하며, 농협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준비금 제도도 있다.

다음으로 간접세에 대해 살펴보면, 부가가치세의 경우 농축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감면되고 있으며 인지세의 경우에는 농협 조합원 예적금 증서, 용자서류에 대해 인지세가 면제되고 있다. 이밖에 미가공 농산물에 대한 면세 등 다양한 조세감면이 행해지고 있다.

농어업부문의 조세감면 규모는 2008년 기준 연간 4조 7,651억원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 등 국세부문(30개 항목)이 4조 6,061억원 (96.7%)이고,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부문(21개 항목)은 1,590억원(3.3%)이다. 국세부문 조세감면액 4조 7,651억원 중 농업부문은 3조 8,859억원, 수산부문은 7,305억원인데, 농어업 부문 모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농어업용 석유류 면세이고, 차 순위가 농축어업용 기자재 영세율이다.

농어업부문의 연도별 조세감면 규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2-11>

농어업부문 조세감면 규모 세부현황

(단위 : 억원)

연도	2005	2006	2007	2008
총 감면액	41,142	43,938	47,457	46,164
■ 농어업용 면세유	19,001	20,115	21,722	17,351
■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8,029	8,185	9,665	11,202
■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사후환급	747	829	917	1,105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4,448	7,737	7,737	9,915

<표 3-2-12>

농업부문 조세감면 규모 세부현황

(단위 : 억원)

연도	2005	2006	2007	2008
총 감면액	33,373	35,692	38,560	38,859
■ 농업용 면세유	12,437	13,119	14,180	11,535
■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7,609	7,752	9,228	10,793
■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사후환급	662	727	802	957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4,448	7,737	7,737	9,915

<표 3-2-13>

어업부문 조세감면 규모 세부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2005	2006	2007	2008
총 감면액	7,769	8,246	8,897	7,305
■ 어업용 면세유	6,564	6,996	7,542	5,816
■ 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420	433	427	409
■ 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사후환급	85	102	115	148
■ 수협 예탁금이자·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출자배당금이자 소득세 면제	255	228	243	224

석유류 면세는 1972년도에 어업분야에서 최초로 시행되었고, 농기계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86년 3월부터이다. 가장 최근에 농업용 무인 헬리콥터가 추가되어 현재 면세유 공급대상은 총 37종이며, 면세유류 공급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자세한 농어업용 면세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2-14>

농어업용 면세유 현황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공급물량 (천kl)	농업	2,690	2,596	2,474	2,478	1,976
	어업	1,401	1,278	1,264	1,253	969
	소계	4,091	3,874	3,738	3,731	2,945
공급액 (억원)	농업	13,170	14,743	15,651	16,694	18,337
	어업	5,288	5,862	6,416	6,355	7,269
	소계	18,458	20,605	22,067	23,049	25,606
감면세액 (억원)	농업	11,451	12,437	13,119	14,180	11,535
	어업	6,326	6,564	7,092	7,542	5,816
	소계	17,777	19,001	20,211	21,722	17,351

* 2008년 농가당 평균 면세액 : 1,432천원(2008년말 농가수 1,212천호 기준)

농축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1989년도에 최초 도입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현행 적용품목으로는 비료, 농약, 농기계 33종, 사료, 축산기자재 39종, 임업용기자재 15종, 친환경농업용 기자재, 어업용 38종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은 2001년도에 최초 도입되어 현재 농업용 필름 등 28종, 어업용 18종에 적용되고 있다. 농축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사후환급 조세감면 규모는 다음과 같다.

<표 3-2-15>

농축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감면현황

구 분(억원)		2004	2005	2006	2007	2008
영세율	농업	6,809	7,609	7,752	9,228	10,793
	어업	421	473	433	426	409
	합계	7,230	8,082	8,185	9,654	11,202
사후환급	농업	643	662	727	802	957
	어업	84	85	102	115	148
	합계	727	747	829	917	1,105

나. 추진계획

최근 국제 유가·곡물 등 수입원자재 가격 급등의 여파로 농업용 기자재 가격이 약 123%나 인상되는 등 농가 생산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은 농어가 소득 증대 및 농어업 생산성 향상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세제지원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정부는 현장의 농어업인 및 관련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9년도 농어업부문 조세감면 평가서 및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주요 평가 및 건의 내용으로는 2009년 12월에 만료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자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을 비롯하여, 면세유 적용대상 농기계 확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품목 유지, 농·수·산림조합 법인세 저율과세 유지 등이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은 부처협의 등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반영될 예정이다.

지방세 부문도 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토론회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농어업인을 위한 조세감면이 확대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세 부문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시 취득·등록세 감면, 농·수·산림·엽연초생산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등록·재산세 면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등이 있다.

또한, 식품분야 업무영역의 확대 및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증가 등 농어업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유통·가공분야의 세제지원 확대,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확대, 농어업부문에의 외부 자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감세 추진 및 신규 항목 발굴 등 조세 지원정책의 틀과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경영조직과 농업사무관 황규광)

제7절 농촌 복지 및 지역개발 본격 추진

1.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추진

1) 제1차 기본계획 추진

정부는 DDA·FTA 등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소득감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낙후된 농어촌의 지역개발을 위하여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04.3월 공포) 하였다.

이에 따라 삶의 질 향상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설치하고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기본계획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법정·종합계획이며 부처별 시행계획 및 지자체별 계획의 지침 역할을 하였다.

정부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였다. 그 결과 '05년~'09년 동안 22.3조원을 투융자하여 당초 계획(20.3조원)대비 109.9% 달성이 전망된다.

제1차 삶의 질 향상기본계획의 주요 성과로는 기초생활환경 및 사회안전망 확충, 농어촌산업화 촉진을 통한 소득원 다양화, 지역개발 주민참여 경험 축적 등을 들 수 있다.

* 면단위 상수도 보급률: ('04)36.2% → ('08)56.8 , 1인당 건강보험료 경감액 : ('04) 210천원/연 → ('06~'09) 404 , 비농업소득 비중(%): ('00) 52.8 → ('08)68.4

하지만 생활·산업·복지여건이 도시에 비해 전반적으로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접근성 등을 고려한 효과적인 생활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이 미흡하고, 보건·의료인프라 및 고령·영세농 복지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향토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지역특성, 주민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주도의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다.

2)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올해로 제1차 기본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08), 1차 기본계획 평가결과,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 지자체·전문가 워크숍, 농업인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제2차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실무위원회(12.11) 및 본위원회(12.17)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은 기초생활 인프라와 복지기반이 갖추어지고,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며, 누구나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삶터·쉼터·일터가 조화된 행복한 농어촌 구현을 달성한다는 비전에 따라, 1차 기본계획의 4대 분야를 7대 분야로 확대하여 핵심 목표를 설정하였고, 1차 기본계획 투융자 실적(잠정) 대비 55% 수준 증가한 34조 5천억원 규모를 투융자 할 계획이다.

* ① 보건·복지 증진, ② 교육여건 개선, ③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④ 경제활동 다각화 → (추가) ⑤ 문화·여가여건 개선, ⑥ 환경·경관 개선,

⑦ 지역발전역량강화

특히 제2차 기본계획에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관리를 위해 2대 선진제도(농어촌서비스기준, 농어촌 영향관리 가이드라인)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지역의 자율과 창의, 민간참여 확대 등 지속가능한 발전체계가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농촌정책과 기술서기관 최정록)

2.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 시책 추진

가. 도 입

도시화·산업화·개방화의 진전과 불균형 성장정책의 결과 최근에는 도시화율이 90%선에 도달한 반면, 농촌은 정주여건의 상대적 악화로 인해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되고 있다. 1980년 42.7%이던 농촌인구는 1990년 25.6%, 2000년 20.3%, 2005년에는 18.5%로 감소되었고, 젊은 층의 이촌향도형 인구유출이 주도한 농촌인구 감소는 고령화와도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1,208개 면(面)중 82%인 991개 면(面)이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현상은 지역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지역사회 유지를 어렵게 함은 물론 우리 농촌이 지니고 있는 귀중한 전통문화가 사라지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회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룬 결과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농촌의 생태적·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과 삶의 질이 중시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도시민의 전원생활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2005년 도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도시민 중 56.1%가 농촌에 이주할 의향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10년 내에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10.9%에 이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준비중인 도시민도 30~4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도시민의 농촌이주 수요가 현실화된다면, 도시의 과밀문제와 농촌의 인구과소화 문제가 완화되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도시민의 농촌유치를 통해 농촌의 활력을 높이고자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지원을 중심으로 한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2005년 12월 21일)을 마련하였으며 관련 시책사업으로 전원마을조성사업,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농촌경관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관 허훈)

나. 전원마을조성사업

2009년도에는 국고 212억원의 예산으로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인구 유지, 지역활성화를 위한 전원마을계속사업 58지구와 신규착수 16지구를 포함한 74지구에 대한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전원마을조성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강화 할 계획이다. 입주예정자들이 사업을 제안 할 경우에는 전원마을조성 추진위원회 구성을 의무화 하고 종전에 20가구이상 49호이하까지 추진 할 수 있던 것을 2009년 신규사업지구 부터 주택을 일괄 건축하고 주택건축 관리, 시공회상의 사업이행 보험가입 등 사업의 안정성 담보계획을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50호이상도 가능하도록 하고 마을기반조성과 주택건축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입주자가 계획가구수의 2/3이상 확보된 이후에 마을조성공사를 착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8년부터 추진하던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의 주요내용은 전원마을조성사업시행자를 시장·군수에서 마을정비조합 등 민간에까지 확대하고 사업시행계획 승인권한을 시·도에서 시장·군수로 이양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구역내 토지수용시기를 앞당겨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원마을조성사업은 2004년도에 2지구 시범착수 후 2009년도까지 총 108지구를 착수하고 앞으로도 사업을 확대하여 농

촌에서 전원생활을 원하는 도시민등을 적극 유인하여 농촌지역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지역개발과 기술서기관 김동권)

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은 정부가 인구감소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 도시민 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귀농·귀촌 의향이 있는 도시민과 출향인사 등을 대상으로 농촌에 이주·정착하는데 필요한 정보제공, 예비귀촌인 농사체험 및 귀농자의 안정적 정착률 유도 등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경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07년 시범적으로 10개 시·군을 선정하여 2009년까지 3년간 개소당 10억원(국고 5, 지방비 5)씩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의 지원범위는 도시민 유치를 위한 홍보, 컨설팅, 교육, 행사, 일자리 알선, 출향인사 파악·관리, 빈집 등 주거정보 제공, 이주예정 도시민과의 교류·초청행사 등 소프트웨어 부문과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하드웨어 부문 등이다.

2009년말로 시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시범사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하여 사업내용을 보완하고 2010년부터 본사업화하여 계속 추진키로 하였다. 본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총사업비 규모를 조정하고 3년 1주기 사업을 최대 2주기(6년)까지 지원하며 매년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예산을 차등지원키로 했으며, 2010년부터 3년간 22개 시·군에 5~6억원(국고 50%, 지방비 50%)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사회과 행정사무관 이명남)

라. 농어촌뉴타운 조성 시범사업 실시

농어촌뉴타운조성은 도시 거주 30~40대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유치하여

지역 농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토록 지원하는 인력육성 종합 프로그램으로서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영농어 기술교육과 자금을 지원하며, 양질의 자녀교육 및 복지여건 개선 등을 종합 지원한다.

현재 우리 농업이 고령·영세 농어업인에 의해 유지되고 있고, 향후 영농어 승계인력도 부족하여 농어업 경쟁력 제고에 한계에 도달하고 있고,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해 창업후계농 육성을 추진 중이나, 지역연고와 경영기반이 취약하여 정착에 애로를 겪고 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교육·복지 및 문화여건이 도시에 비해 열악하여 도시거주 젊은 인력의 농어촌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을 타개하기 위해 도시의 젊은 인력을 농어촌에 유치하여 지역 농산업의 핵심 주체로 양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 지원 시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아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을 시행한다.

지난 2008년 연두업무계획 보고서 30~40대 농어업 인력 확보대책 일환으로 농어촌 뉴타운 조성방안을 대통령께 보고('08.3.18)하여, 새정부 국정과제 및 농정 5대 미래전략과제에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다. 2008년부터 실무 작업단 구성, 내부 토론회, 지자체·전문가 의견수렴, 시·군 수요조사 등을 거쳐 농어촌 뉴타운 조성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09년부터 '11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 5개소를 추진하고 있다.

'08.10월부터 농어촌 뉴타운 조성 시범사업을 공모한 결과 14개 시·군에서 농어촌 뉴타운 조성 시범사업 신청하였고, 현지실사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09.1월 대상지 5개소를 선정하였다.

* 충북 단양, 전북 장수·고창, 전남 장성·화순 등 70세대 규모

농어촌뉴타운의 조성규모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개소당 100 ~ 200세대 규모로서 주택의 형태는 전원형 단독주택 또는 복층형 타운하우스 형태로서 분양 또는 임대로 구분하여 추진 중이다.

기숙형 공립고 등 교육여건 개선, 영농기술 및 자금지원 등 연계 추진 중이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세부설계를 거쳐 '10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11년말에 입주할 계획이다. 입주자격은 일정수준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었거나 경영승계 등을 통해 갖출 것이 예상되는 30~40대 젊은

세대이며, '09~'11년까지의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한 후 지역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본사업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관 강동민)

3. 농촌형 복지시책 확충

가. 사회안전망 확충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농촌특성에 맞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연금·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및 농작업 재해지원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는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50%를 경감지원하고 있다. 다만, 고소득자에 대한 일률적인 50% 경감지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감사원 및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하기 위해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2007년 1월 1일부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우리부로 이관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농어업인의 월 소득 73만원 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73만원을 초과하는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32,850(월)을 지원하여 1인당 최대 연간 394,2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대상 농어업인 발굴 및 부적격자 지원배제를 위하여 상반기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기계 사고 등 농작업 재해 증가에 대응하여 농업인들이 가입하는 농업인 안전공제의 경우 2009년에는 사망공제금의 보상수준을 최대 6,000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어업인(어선원 및 어선원 재해보험가입 대상 또는 가입자 제외)을 보호하기 위해 수산인 안전공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농촌사회과 서기관 박성우)

나.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정부는 농어촌출신 대학생을 위한 학자금 용자재원 확충을 위해 2009년도에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전년보다 15% 증가한 47,500백만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2009년도에는 직전학기 성적을 반영하여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대학생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연동되도록 하였다. 또한 장학금과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협복지재단, 농촌희망재단의 장학금 지원대상자 명단과 대사작업을 하기로 하는 등 중복수급 방지하기로 하였다.

한편 사업수행기관이 학술진흥재단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농어촌출신 대학생에게 학자금 지원 업무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사회과 서기관 박성우)

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2009년도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비는 5,992백만원으로 영농도우미는 13,000농가 가사도우미는 18,000회 지원할 계획이다.

영농도우미의 경우 지원 상한연령을 69세에서 70세까지로 연장하고, 지역농협이 산정하여 통보한 자부담액을 지역농협에 선납하도록 하며 가사도우미는 한 농가당 연간 10회 지원하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성의 제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촌사회과 서기관 박성우)

라.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정

정부는 농어촌의 기초 생활여건을 점검하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영국 등 선진국들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공공서비스의 최소한 공급목표인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제정하고 있다.

농어촌 서비스기준(RSS: Rural Services Standard)이란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 영위하는데 필요한 공공 서비스의 항목과 목표 수준으로, 농어촌 주민 입장에서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교통, 의료, 교육 등에 대한 구체적인 농어촌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공공기관의 관련 정책 수립시 감안하는 가이드라인이다.(별첨자료 참조)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농어촌 지역의 교통, 의료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 서비스기준」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 2월에 관계부처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 추진단(단장: 농식품부 제1차관)」과 실무위원회를 발족('09.2)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해왔다.

* 제정추진단 : 농식품부, 재정부, 복지부, 교과부, 행안부, 문화부, 여성부, 지정부, 환경부, 국토부,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농진청, 방송통신위원회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정을 위해 일상생활과 관련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농어촌 주민의 접근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주민의 요구가 높은 것을 중심으로 마련하였다.

* 주민들이 크게 불편을 느끼는 분야는, 상하수도, 교통, 응급의료서비스, 자녀 교육분야, 의료서비스 등임

농어촌 서비스기준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위원회”의 「제2차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10~'14)」에 반영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삶의질 위원회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과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게 된다.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특별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법개정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농촌사회과 서기관 이은정)

마.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 추진

정부는 인적자원이 부족하고 외부접근도 곤란한 농어촌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농어촌 공동체회사」 설립을 지원하여 농어촌 주민들이 자립적·능동적으로 자신들의 복지를 실현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귀농·귀촌인사를 포함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농어촌 공동체회사는 로컬푸드사업 운영, 도농교류 등 농산물과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하거나, 취약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 사회서비스 :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의 분야에서 개인 및 사회전체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등 단계적으로 세부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어촌 공동체회사를 통해 귀농·귀촌인들은 농촌 정착기 동안 안정된 소득확보가 가능하고, 농어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로 지역사회의 활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농촌사회과 서기관 이은정)

4.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

농촌체험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농가소득증대 등 농촌지역 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도농교류 활성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농촌체험·휴양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의 인적역량 강

화를 위해 중장기 인력육성대책에 따라 전문교육 등을 추진하며, 농촌체험 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도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농촌체험 휴양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을 2009년 78개 마을을 확대 조성하고 있다(총442개소).

또한, 농산어촌체험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간 연계를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도시민의 방문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지원(147개소)하고, 농촌체험관광 우수마을을 발굴·홍보하기 위한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13개 마을 시상).

상향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의 인적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 실시(2009년 5,940명 계획)하는 한편, 관련 지원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상향식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식 확산을 위한 관련 교재를 개발하여 농촌마을 등에 보급하였다.

또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촉진을 위해 마을에서 농촌체험관광 사업추진과정에서 전문가로부터 수시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1인1촌 전문가 지원시스템' 운영(50개 마을)과 농촌체험관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마을사무장 운영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였다(275개 마을).

또한 체험마을에서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체험·휴양의 기반이 되는 체험마을의 인프라, 서비스 수준 등의 평가를 통하여 도시민들의 체험마을을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 농어촌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09년부터 '농어촌 여름휴가 캠페인'과 '도농교류엑스포'를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로 통합하였고, 7.2~4일까지 4일간 aT센터에서 행사를 개최하여 도시민 91천명이 방문하였다.

또한, 「도농교류협력사업」은 도시소비자 및 청소년들에게 농어촌의 가

치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 동안 추진해 온 「농·소·정 사업」을 보완하여 2008년부터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분야는 기존의 3개 분야(농업·농촌 체험사업, 농업·농촌 함께 지키기, 농업·농촌 바로 알리기)에 “농촌 폐교 공간 활용사업”을 추가하여 보다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체험장소도 녹색농촌체험마을과 1사1촌 마을로 정하여 체험마을을 방문하는 실질적인 체험행사가 되도록 하였다. 엄격한 공모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2008년은 42개 민간단체를 지원하여 여기에 194천명의 도시민이 참여하였고, 2009년에는 40개 민간단체를 선정·지원하고 있다.

초·중·고·대학생,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농어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이끌어 내고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나의 농어촌 이야기’를 공모하였다.

도농교류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제고 및 수요 창출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TV, 신문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웰촌포털(www.welchon.com) 운영을 통해 도시민들에게 체험관광, 정주정보 등 다양한 도농교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사1촌 운동 등을 통해 도농교류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기업,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긍심을 고취하고 도농교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04년부터 도농교류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09년부터는 교류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 등에게 사회공헌인증(주관: 농촌사랑범운동국민본부, 한국표준협회)을 통한 기업의 위상을 제고하여 주고 있다.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농촌 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근거가 되는 도농교류 촉진법을 체험·휴양마을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사회과 행정사무관 하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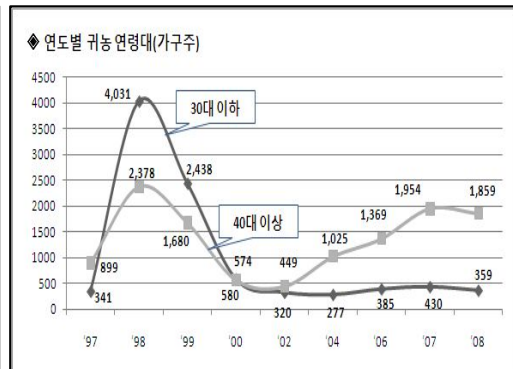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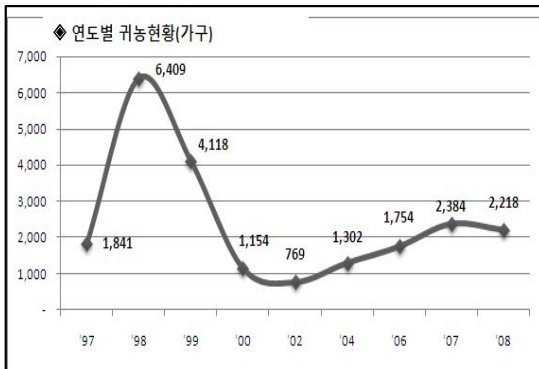
5. 귀농·귀촌 종합대책 추진

가. 개요

1) 귀농동향

60년대와 70년대 근대화과 산업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대규모 이동한 반면,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부터 도시거주자들이 다시 농촌으로 귀향하기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귀농이란 농촌으로 귀향 하여 농업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유형별로 농촌출신의 귀농(U-turn), 농촌출신이 연고가 없는 타 지역으로 귀농(J-turn), 농촌생활 경험이 없는 도시 출신의 귀농(I-turn)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990년 이후 2008년까지 총 귀농가구수는 30,299가구로서, 시기별로 외환위기 직후 연 6천가구 이상으로 증가 하였다가 2002년 750가구 수준으로 감소한 후 2006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2008년 2,218가구에 이르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북 6,559가구, 경남 4,986가구, 전남 4,643가구 순이다. 귀농 연령은 30대가 36.4%, 40대가 28.3%, 50대가 18.7%등으로 주로 30대와 40대의 귀농이 활발한 실정이다.



연령대별 주된 귀농사유는 20대는 농과대학 졸업후 농업에 대한 꿈과 희망을 현장에서 직접 실천해 보고자 함이며, 30대와 40대에서는 타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농업에 접목하여 새로운 인생 설계를 농촌에서 그려 나가고자 한다. 또한 50대와 60대는 은퇴형 실버 귀농으로 인생을 후반을 자연과 생명체가 함께하는 농촌에서 보내기 위해서 귀농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2) 귀농귀촌 종합대책 추진배경

정부는 국내 경제위기 탈출구를 제시하고 농촌에 새로운 인력 영입등 경제, 사회적으로 다양한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지난 4월 발표하고 총19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그간의 귀농사례에서 나타난 경험을 바탕으로 귀농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농업과 농촌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교육에서 창업자금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정부는 금번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통하여 조기퇴직, 은퇴 등 새로운 직업을 찾는 도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식품산업차원에서는 타 산업 경험 인력의 유입으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농촌지역 관점에서 주민확보는 물론 문화, 관광·서비스 분야의 활력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한다.

정부 대책안은 무엇보다 귀농 귀촌 희망자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귀농 정보 알선, 상담, 창업컨설팅등 귀농자가 사전에 면밀한 준비와 신중한 결정을 도우면서 정부지원에 의존해 귀농하겠다는 안일한 인식을 불식하고 자립적인 귀농자의 창업, 정착 계획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세부 추진대책

먼저 농협에 귀농·귀촌 종합센터 및 전용상담전화(1577-9597)를 설치하여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준비부터 정착까지 상근인력을 배치하여 전문가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정책, 지원사업, 교육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합제공하도록 귀농·귀촌 통합정보 시스템(www.returnfarm.net) 구축하였다. 귀농자가 귀농을 구상하는 단계에 있어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귀농가정이 경험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실용적인 귀농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한결이네 귀농일기, 창업농업 길라잡이 등 온라인 교육과 천안연암대(채소), 한국농업대(버섯), 여주농전(과수)등 실습전문 합숙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귀농학교, 농업학교 출신, 제대 후 구직자등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등 선도농가 등에 인턴으로 채용하여 농업현장에서 재배기술, 경영능력 함양함으로써 젊고 우수한 인력의 귀농을 촉진해 나가면서 성공적인 농촌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가족단위의 귀농의 제일 큰 애로사항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시군별로 귀농인의 집을 마련, 귀농희망자가 일시 거주하면서 영농기술을 습득, 주택과 농지등을 준비하도록 귀농인의 집을 개소당 3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정착을 위해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는 구입자금을 2천만원 이내에서 융자하고 수리비는 5백만원까지 보조하고 있다.

귀농자들이 현장 창업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농지, 축사 구입등 지원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귀농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업계획 검토 후 영농정착자금을 1인당 1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저리(3%)로 융자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담보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귀농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90%까지 농신보에서 보증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금년도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를 통해서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각 시도에 귀농 귀촌 담당자를 지정하여 귀농자에 대한 지역별 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귀농희망자에 대한 상담등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경영조직과 행정사무관 하경희)

6. 쾌적한 친환경적 농촌개발

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04년 신규사업으로 지역주민, 지자체 및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상향식 추진 등 새로운 방식의 지역개발모델을 창출하기 위하여 관계자간에 능동적인 참여와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하다.

계획수립시 다양한 형태의 농촌지역 활성화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잠재자원을 최대한 살려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유도하고, 사업권역별 지자체와 전문가,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마을개발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방향 점검 등을 통해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역개발을 이끌어 나갈 리더 등 주체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마을지도자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2009년에는 총 2,457억원(국고 1,740, 지방비 717)을 투자하여 136개 권역의 계속시행과 2008년도에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한 40개 권역에 대한 세부설계를 수립한 후 착공하고 2010년 사업착수를 위하여 45개 권역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거점공간인 면소재지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및 서비스 기능의 향상을 도모하고 도시 및 소도읍과 농어촌마을을 연계할 수 있는 중간 거점공간으로서의 면소재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까지 200개면을 개발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으로 2008년에 4개 권역을 우선 사업착수하고, 2009년도 4개 권역을 사업착수하였다.

그리고, 2007년에 착공하여 1단계(1~3년차) 사업이 마무리되는 40개 권역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권역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였다.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관 임명근)

나.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농어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 분야 지역개발사업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의 농어촌 1,142개 면지역과 광역시내 15개 준농어촌 자치구를 대상으로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동 사업은 크게 마을내·마을간도로, 상·하수도시설, 교량, 주차장 등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하는 마을기반정비 부문, 세천정비, 수변공원화, 소공원, 담장정비(식생담조성 등), 빈집의 철거·정비 등 경관개선부문, 복지회관, 마을회관, 체육공원조성 등 문화·복지부문에 나누어 시행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550개면(15개 준농어촌 자치구 포함)지역에 국고 3,149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마을내·마을간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교통시설, 교량, 마을회관, 공원 및 휴게소 등 문화·복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면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지역개발과 기술서기관 김동권)

다.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주5일근무제 정착, 소득증대 등 생활수준 향상 등의 영향으로 국내관광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관광유형도 보고 듣는 수동형 관광에서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능동형 관광으로 변화해가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 도시와 차별화된 농어촌 특유의 자연·문화·향토·사회자원을 주제로 한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농촌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레저·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농교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2007년도부터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은 2009년까지는 시·군에서 제출한 예비계획서에 대한 사업목적의 부합성, 투자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전

문가의 사업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성이 우수한 지구를 선정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추진되므로 기본계획수립, 사전환경성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11년도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선정된 테마공원에는 진입도로·상하수도·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과 지역특유의 체험시설 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4년에 걸쳐 100억원(국고 50%, 지방비 50%)까지 지원하게 된다.

지역특산물과 자연환경을 테마로 2007년에 착수한 경기 안성, 충북 음성, 충남 서천, 전남 영광 등 4지구는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2008년에 착수하여 현재 공사진행 중으로 2010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며, 2008년에는 경기 이천, 충북 보은, 충남 금산, 전북 김제, 전남 구례, 경북 상주·울진, 경남 사천 등 8지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 또는 공사 중에 있다. 또한, 2009년에는 인천 강화, 경기 여주, 강원 양구, 충북 진천, 충남 예산, 전북 완주, 전남 진도·화순, 경북 봉화, 경남 함안 등 10지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 중에 있어 2010년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이로써 2010년에는 2007년 착수 4지구, 2008년 착수 8지구, 2009년 착수 10지구와 2010년에 신규 착수하는 14지구를 포함하여 총 36지구가 추진될 예정이다.

(농촌사회과 행정사무관 이명남)

라.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2004년까지 50호 이상의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제1단계(1994~2004)사업으로 4,751개소를 추진한 바 있으며, 2005년부터는 1단계 사업에서 소외된 20호 이상의 소규모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2012년까지 2,309개소를 추가로 개발하는 제2단계(2005~2012) 사업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 자연마을 총 7,060개소의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367억원(국고 294, 지방비 73)을 투자하여 219개소를 개발할 계획이다.

<표 3-2-16>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계획

구 분	추진목표	2008까지	2009계획	2010이후
사업량(개소)	7,060	5,842	219	999
사업비(억원)	12,257	9,692	367	2,198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관 임명근)

마.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지원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2009년에는 총 7,000동(사업비 2,800억원)의 농어촌주택에 대해 개량자금을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촌 주택개량자금은 전원마을조성 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지역에서 주택개량시 지원되는 농촌주택정비자금과 그 외의 지역에서 주택을 개량할 시 지원되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으로 구분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공급하는 자금의 종류에 관계없이 농어촌의 노후·불량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경우에는 세대당 4,000만원 이내, 부분적으로 개량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2,000만원 이내의 자금을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연리 3%로 융자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 지역에서 주택을 신축할 때 설계비용을 절감하고, 건축기간 단축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12종(24유형)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는 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요인을 분석하여 농어촌의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향후 농어촌 주택개량 지원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세대당 지원되는 융자금 한도액도 건축비 상승요인 등과 연계하여 상향조정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관 김학조)

7. 농어촌자원의 산업화

가. 농어촌산업육성 방향

정부는 시장개방 등으로 인한 농어업위축 → 일자리축소 → 농어촌활력 저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농어촌자원의 산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어촌지역에는 정부정책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간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고 지역의 혁신역량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접근도 미흡한 상황이다.

2008년부터 신활력사업과 유사한 향토산업·특화품목육성 사업을 묶어 시·군단위 「농어촌활력증진계획」(2008~2010년)을 수립하였고, 2009년 2차 연도 계획에 맞춰 시·군의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사업을 통해 구축된 지역혁신체계와 역량을 바탕으로 성과실현에 중점을 둔 목표관리방식의 사업추진체계로 142개 시·군이 참여,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 산·학·연 네트워크, 선도산업 마케팅, H/W보완 투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모니터링,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시·군의 자율성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향토·특화자원 개발, 지역문화·관광개발 등 1·2·3차 산업의 융·복합을 통하여 농어촌지역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관 허훈)

나.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

FTA 등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확충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관련 사업인 신활력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특화 품목육성사업을 2008년부터 “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 통합·체계화하였으며, 재원·인력 등 관련 자원을 목표달성을 위해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목표지향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2009년(2차연도) 사업 시행을 위해 142개 2009년도 시·군의 「활력증진계획」을 2008년 12월말까지 승인하고, 2009년 1월부터 조기에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 승인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 농촌활력증진사업예산(2009년) : 3,441억원(신활력 1,882, 향토 286, 특화 1,273)

또한, 효율적인 농촌활력증진계획 수립·지원을 위하여 자문위원회에서 시·군을 분담하여 컨설팅 등 시·군의 농촌활력증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2008년도 사업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 시·군을 선정하여 인센티브 202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시·군의 공동홍보 및 판매 등을 위하여 제1회 농어촌산업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에 대한 서면모니터링,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점 및 사업추진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관 허훈)

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2009년에는 53개소에 598억원(국고)을 투자하여 10개소를 완료할 계획이며, 농어촌지역 향토자원, 특산물 가공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기업의 입주 촉진 등 농공단지조성 활성화를 위해 지정면적 제한 및 입지 선정기준 완화, 노후농공단지 정비 등 통합지침 규제완화로 인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표 3-2-17>

농공단지조성 추진현황

구 분	추진목표	2007까지	2008년	2009년계획	2010이후
사 업 량(개소)	400	324	369	330	70
사업비(국고, 억원)	10,961	6,935	428	598	3,000

주 : 사업량은 조성(완공)지구 기준임.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관 김일환)

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확대

가.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 구축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AgriX)은 농수산사업의 신청·집행·사후관리를 온라인에서 처리하여 업무 효율화 및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다. 2008년까지 4차에 걸쳐 40여개의 농림사업에 대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다.

2009년에는 맞춤형농정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관리시스템을 비롯한 식량·농촌관련분야 12개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사업신청 농업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해킹차단 솔루션 및 DB암호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국토해양부의 지적정보, 행정안전부의 주민정보, 농협의 농자재 구매정보, 농촌공사의 농지정보를 연계하여 관련정보의 공동 활용에 따른 공무원의 행정업무 편의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모바일기기(휴대폰, PDA 등)를 통해 정책정보 및 쇠고기 이력, 반려동물 관리정보 등을 서비스하여 민원업무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농가기본DB를 활용하여 과거 자금집행실적, 교육이력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등 농가유형별 맞춤형농정 추진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보화담당관실 전산사무관 박태철)

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보컨텐츠 확충

농어업인 소득향상, 농어업인 정보이용 활성화, 도·농 정보교류 확산을 위해 아피스넷을 통하여 가격유통 서비스, 농업종합 뉴스, 커뮤니티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One-stop, Single-window 서비스를 지향하는 농림지식검색시스템(그린넷, green.daum.net)은 수산정보까지 포함한 모든 농어업 관련 정보를 하나의 검색창에서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전체국민 평균 대비 정보활용 능력이 낮은 농어업인들이 정보탐색의 기회비용 및 검색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09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민간포털과 정보연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이용자별, 지역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농수축산물 시계열 분석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정확한 농축산물 분석정보 제공하고, 수산도매법인 정산정보 및 통계정보를 확충하여 수산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경영 전문인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맞춤형 전문정보를 제공하고, 분야별 온라인 컨설팅 전문가를 지속·발굴하여 이용자의 선택 폭을 확대하며, 현장 중심의 유통, 마케팅, 현장애로 등의 지식 확산을 위한 '농업경영 지식나눔터'를 확대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명예기자단 및 UCC 제공을 통한 생생한 뉴스 서비스를 추진하고 농어업인 편익을 위하여 농어업전문지 One-Stop 서비스를 확대하고 도시소비자를 위한 콘텐츠를 강화하여 도농교류 커뮤니티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3년 디지털 방송전환에 대비하여 IPTV 공공서비스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HD 방송 콘텐츠 제작 기반을 마련하고 TV 기반 양방향 서비스 콘텐츠를 제작·보급하여 농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정보화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유재철)

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강화

지식정보사회를 이끌어갈 디지털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농가소득창출로 연결 가능한 교과목 위주의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교육대상자에 대한 분석·관리 기능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계대학 및 정보화선도자에 의존한 단발적인 농가 방문교육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경영효율화와 소득창출로 연결되는 영농중심의 교육 강화 및 정보화 리더, 작목반, 경영체 등을 지원하는 양성교육을 신설할 계획이다.

둘째, 일손부족 등으로 집합교육 참여가 어렵거나 심화·반복학습이 필요한 농업인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교육 내실화를 위해 전담강사제(e-Tutor)를 운영하고, T-Learning 기반의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셋째, 교육시행 전 체계적인 수요조사와 교육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대상자에 대한 분석·관리를 강화하고 수준별 정보화교육을 위한 농업인 ICT리터러시(역량진단시스템)를 개발·도입할 계획이다. 넷째, 사례 중심의 실용적 내용으로 알게 쉽게 표준교재를 구성하여 배포하고, 제작된 교재는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www.eduaffis.net)에 전자북으로 제공할 것이다.

<표 3-2-18>

'09년 농업인 정보화 교육 계획

(단위 : 명)

구분	교육과정	교육기관	교육시간	교육횟수	교육인원
합 계					54,300
집합 교육	생활밀착형과정	농업기술센터	18	200	3,000
	영농밀착형과정	농업기술센터	30	250	3,750
	농업경영정보화	공모기관	60	10	250
	정보화리더 교육	농업계대학	30	20	400
	맞춤지원 교육	공모기관	18	40	400
방문 교육	농업정보119 방문교육	농업계대학	4		3,500
	정보화선도자 선정 및 활용교육	지방자치단체	2		34,000
온라인 교육	온라인강좌	정보센터	과정별		5,370
	원격지원서비스	농업계대학, 지자체	15~30분		3,230
	T-Learning	정보센터	20		400

(정보화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유재철)

9. 농업생산기반 확충

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과거에 경지정리를 하였으나 필지규모가 작거나 용·배수로, 농로 등 기반시설이 미흡한 지역 170천ha를 대상으로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여 2008년까지 109천ha를 시행하였고, 2009년에는 국고 735억원과 지방비 184억원 등 총 919억원을 지원하여 2008년 가을에 착수한 3.7천ha를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고 새로이 4.0천ha를 착수하였다. 앞으로도 대형농기계를 이용한 영농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표 3-2-19>

연차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

(단위 : 천ha)

구 분	목 표	2008까지	2009계획	2010이후
사 업 량	170	108.8	3.7	57.5

주 : 봄마무리 기준. 목표면적 조정(2009.7) : 151천ha → 170천ha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업기반과 시설사무관 유재중)

나. 밭기반정비사업

밭작물 상습가뭄지역을 해소하고 기계화영농기반을 구축하며,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전체 밭면적 712천ha 중 채소류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 110천ha(15.4%)를 1단계 정비목표(총목표 180천ha)로 용수개발, 농로정비 등 밭기반정비사업을 1994년부터 추진중에 있다.

1994~2008년까지 19,011억원(국고 15,009억원, 지방비 4,002억원)을 투입하여 81.9천ha를 정비하였으며, 이는 전체 밭면적 712천ha의 11.5%, 1단계 목표면적의 74.4%수준이다. 2009년에는 990억원(국고 795억원, 지방비 195억원)을 투자하여 3.6천ha를 정비하였다.

<표 3-2-20>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천ha, 억원)

구 분	목 표	2008까지	2009계획	2010이후
사 업 량	110	81.9	3.6	24.5
사 업 비	25,794	19,011	990	5,793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업기반과 시설사무관 유재중)

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경지정리 지구내 주요 농로와 농산물의 생산지, 가동, 유통시설간 미포장 농로 35천km를 대상으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을 추진하여 2008년까지 20.1천km를 확장 또는 포장을 하였고, 2009년에는 국비 914억원, 지방비 229억원 등 총 1,143억원을 지원하여 비포장 농로 1.1천km를 정비하였으며, 농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농기계 보급으로 영농작업의 기계화율이 높아지고 있고 농산물의 품질제고를 위한 운반·포장 등의 기법이 발달하고 있으나, 영농작업의 근간인 경작도로가 포장이 되지 않아 불편함에 따라 1995년부터 사업을 시행한 결과 영농시간 단축, 농산물 운반용이, 농촌 생활환경개선, 영농작업 기계화 촉진 등 사업효과가 높아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사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표 3-2-21>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계획

(단위 : 천km, 억원)

구 분	총 계 획	2008까지	2009계획	2010이후
사 업 량	35	20.1	1.1	13.8
사 업 비	37,071	20,656	1,143	15,272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업기반과 시설사무관 유재중)

라. 수리시설 개·보수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13,145개소의 수리시설 중 30년 이상된 시설이 7,245개소로 55%에 달하고 특히,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3,326개소 중

87%인 2,896개소가 30년 이상 경과되는 등 노후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용·배수로의 경우도 간지선 47천km중 53%인 22천km가 흠수로로 되어 있어 누수손실이 많고 유지관리가 어려워 시설의 현대화 등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후·파손으로 기능이 저하되고 재해에 취약한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및 용수로 등 8,769지구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08년까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한국농촌공사 관리 수리시설 5,808 지구에 총 44,301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09년에는 수리시설 82지구에 대한 개보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표 3-2-22>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계획 >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개·보수 대상		2008 까지		2009 계획		2010 이후	
	대 상	%	개 소	%	개 소	%	개 소	%
○ 사업 량	8,769	100	5,808	66.2	82	0.9	2,879	32.9
○ 사업 비	110,518	100	44,301	40.0	4,670	4.2	61,547	55.8

(농업기반과 기술서기관 전경구)

마. 배수개선 사업 등 기타 기반정비사업

배수개선사업은 농경지 침수방지로 안정영농을 도모하고, 농지이용률을 높이는 한편, 영농기계화를 촉진하여 노동력 절감, 단위 생산량 증가로 인한 소득증대 등에서 효과가 크다. 앞으로 상습침수 농경지 232천ha에 대한 방재시설을 완비할 계획이며, 2009년에는 국고 2,135억원을 지원하여 119지구(31천ha)에 대한 배수개선을 추진하였고 이중 17지구(4.1천ha)를 준공할 계획이다.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은 농경지의 용수공급 및 배수를 위하여 유지관리인 또는 수로감시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수리시설물을 조작하던 것을 용수절약, 유지관리비 절감, 재해 등에 신속히 대처하는 등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하여 중앙관리소에서 광대한 지역에 산재된 다수의 수리시설물상태 및 용수수급상황 등을 실시간 측정·감시·분석할 수 있도록 시설자동화 및 원격조정장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09년에는 국고 100억원을 투입하여 13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여 5지구를 완료하였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국가관리방조제 108개소, 지방관리방조제 1,490개소 등 전국 1,598개소의 방조제·배수갑문 등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꾸준한 투자로 많은 노후시설을 개량하여 재해에 대비하고 있으나 오래된 시설은 외측보호 사석의 유실, 배수갑문 콘크리트 구체 및 철재 문짝의 부식 등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일 발생시 시설붕괴 및 해수유입에 의한 농작물의 염해피해 등 재해예방을 위한 개·보수 사업의 확대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었으며 2009년에 1,003억원을 투입하여 145개소를 시행, 그중 75개소의 방조제에 대한 개·보수를 완료하였다.

(농업기반과 기술서기관 전경구, 시설사무관 유재중)

바. 농촌용수개발사업

농촌용수개발은 영농에 기본이 되는 물을 확보·공급하는 사업으로서 필요성이 매우 높으며 농업인의 열망도 높은 사업이다. 그러나, 연간 예산지원규모가 실제 소요보다 크게 부족하여 준공이 지연되고 사업효율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어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시행중인 지구의 준공위주로 사업비를 지원하며 예산규모 확대 등 동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8년에는 중규모 용수개발사업 83개 지구에 2,000억원을 투입하여 10개 지구 2,150ha를 준공하고, 지표수보강사업으로 1,064ha,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 335ha를 준공하여 물부족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2009

년도에는 중규모용수개발사업 80개 지구에 3,098억원(추경 798억원 증액 포함)을 투입 5,309ha 준공, 지표수보강개발사업으로 1,381ha 등을 준공함으로써, 농업용수 부족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표 3-2-23>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계획

(단위 : 천ha)

구 분	총 계 획	2008까지	2009계획	2010이후
대 · 중규모	118.8	67.1	5.3	46.4
소규모	11.0	0.9	-	10.1
지표수 보강	31.9	25.1	1.4	5.4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업기반과 시설사무관 신동원, 시설사무관 유재중)

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및 간척사업

하천등 대규모 수계를 중심으로 농업용수 공급,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 등 각종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은 2009년에 금강Ⅱ지구 등 10지구 13만4천ha에 대해 국고(농특회계) 1,240억원, 농지관리기금 4,757억원 등 총 5,997억원을 투입될 계획이다.

정부는 시행중이거나 완공후 매각전인 영산강Ⅲ지구 등 10지구에 대하여 농업중심의 다양한 용도의 토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전문기관 연구용역, 농민단체·자치단체 등 의견수렴을 통해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만금지구도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2008년에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새만금사업은 2006년 4월 21일 방조제 최종 연결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이후, 현재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흙쌓기, 돌붙임 등 방조제 단면완

성을 위한 보강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부개발은 2010년 상반기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부개발 종합실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2010년 방수제공사 착공을 목표로 2009년에는 입찰, 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원, 삼산지구등 2개지구의 간척농지개발사업을 금년도에 준공할 계획이다.

<표 3-2-24>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및 간척사업 추진계획

(단위 : ha, 억원)

지 구 명	개발면적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규모		
			2008까지	2009계획	2009이후
합 계	133,918	75,708	52,250	5,497	17,961
금 강Ⅱ	43,000	7,216	5,233	440	1,543
미호천Ⅱ	4,430	3,095	2,600	180	315
홍 보	8,100	4,234	3,265	260	709
영산강Ⅲ-1	13,160	4,732	3,731	100	901
영산강Ⅲ-2	7,840	4,016	2,342	350	1,324
영산강Ⅳ	16,730	7,536	1,030	360	6,146
새만금(외곽시설)	28,300	29,490	25,084	3,236	1,170
화 용	6,212	8,251	4,534	270	3,447
시 화	4,396	4,215	1,595	214	2,406
이 원	1,352	1,532	1,517	15	-
삼 산	398	1,391	1,319	72	-

※ 대단위 15지구, 서남해안간척 12지구 준공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녹색성장정책관

(농업기반과 시설사무관 이형주, 4대강새만금과 시설사무관 한준희)

제8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제도 개혁

1. 농지제도 개선

세계적 이상 기후, 중국·인도 등 신흥공업국가들의 축산물 소비확대로 인한 사료곡물의 수요 급증, 곡물의 바이오 에너지원화 등으로 인해 국제적 식량수급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국내 생산기반을 위한 적정한 면적의 농지 보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유휴지 증가, 농어촌 관광 등 농지의 다목적 활용 수요 증가, 농촌경제 다원화 등 최근 급변하는 농정여건을 반영하여 농지 이용을 보다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농지제도를 개선할 필요성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농지에 모든 종류의 식물 재배 허용, 양어장과 양식장 설치제한 완화, 수도권 산업단지에 대한 한시적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선, 그 동안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로 제한해 온 다년생식물의 범위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모든 식물로 확대되어, 농업인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지에 다양한 식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농업인들이 농지에 부레옥잠, 창포, 갈대 등 수질정화 식물이나 황칠나무와 같이 도료원료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식물 등의 재배를 통해 소득을 올리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농지에 양어장과 양식장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제도를 개선하여 경지 정리된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사용 기간도 6년(연장 포함)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수도권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여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였고, 택지개발사업자가 택지를

조성하면서 의무적으로 무상 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학교용지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무상공급시 : 전액감면, 조성원가의 50% 및 70% 공급시 : 50%)하도록 하여 학교 설치시 부담을 완화하였다.

이 밖에도 시장·군수가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읍·면 지역의 농지 중에서 영농여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영농여건불리농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정하도록 하였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소유제한이 완화되어 비농업인도 소유하여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농지전용시 허가대신 신고로 가능하게 된다.

이번 농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농지이용의 효율성과 더불어 농업인의 소득이 증대되며 기업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과 사무관 박은엽)

2. 농지은행 활성화 추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지원대상 농가의 부채액 기준을 호당 50백만원이상에서 40백만원이상으로 완화하고, 농업용시설(유리온실, 축사, 버섯재배사)도 매입대상에 포함하였다. 아울러, 임대기간을 연장(5년→7년)하고, 환매가격 개선²⁾으로 지원 농가의 환매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당초 계획(1,450억원)보다 25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신청 농가 70%까지 지원하였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임대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농지의 범위에 ‘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내 농지를 포함하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수탁규모를 1,500㎡이상에서 1,000㎡이상으로 조정하여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의 수탁규모와 동일하게 하였다. 아울러, 직접 방문하여 사업신청시에는 신분증만 지

2) 환매가격 개선 : ‘감정평가금액’에서 ‘감정평가금액과 농지매입가격에 환매일까지 농업정책자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장관이 정한 정책자금 이자율(3%)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변경(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6)

침하면 되도록 하는 등 농지은행사업의 서류 간소화로 이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하였다.

(농지과 사무관 정수경)

3. 협동조합 개혁

가. 농협개혁 추진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등 농협의 사업이 부문별 전문성 및 투명성을 갖추고 책임경영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신용사업 건전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교육지원 및 경제사업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제사업 중심의 전략수립 및 투자 확대 등 농협 본연의 역할인 경제사업 활성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농협의 운영구조 개선』 및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등 2단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로, 농협중앙회장의 선거제도 개편 및 이사회의 실질적 의결 기구화, 조합원의 조합선택권 도입 등 일선조합 광역화를 유도하기 위한 여건 조성 등 농협의 운영구조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을 2009년 상반기 내 완료할 것이며, 2단계로 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사업구조개편 기본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2009년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농협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학계(2), 농업계(3), 연구계(2), 농협(3) 등이 참여한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각계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농협개혁위원회 건의안을 기초로 농민단체 주관의 전국 순회 지역설명회를 실시하여 농업계 의견을 추가로 검토하고, 농협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의견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농업금융정책과 행정사무관 송태복, 행정사무관 변혜중)

나. 일선조합 구조조정 추진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8.1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일선조합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부실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2005년도 일선조합의 구조개선 추진목표를 조합의 부실정리 및 경영진전성 제고를 통한 조합원·예금자 보호역량 강화로 정하고, 경영부실 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개선 관련 고시와 훈령을 개정하여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경영개선요구 대상조합은 순자본비율 -7%미만에서 0%미만으로, 경영개선명령 대상조합은 순자본비율 -20%미만에서 -7%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순자본비율 산정시 경제사업부문의 대손충당금과 부실채권을 포함되도록 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6년부터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순자본비율 4%로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적기시정조치 대상조합이 편법으로 우선출자금을 조성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농협구조개선업무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앞으로도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엄격하게 운용하고, 경영진단을 통해 조합의 경영상태를 실사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부실확대 등으로 퇴출이 불가피한 경우 부실이 건전조합에 전가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계약이전·파산을 통해 정리하되, 합병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기회를 부여하는 등 경영상황을 감안한 구조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경영약체조합에 대해 사전부실예방조치를 강화하고, 경영정상화 가능조합에 대하여는 구조개선 지원을 강화하되, 경영개선계획을 불이행한 조합에 대하여는 임직원 징계요구, 임원 직무정지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부실을 철저히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미 구조조정을 완료했거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의 부실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실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조속히 부실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의 구조개선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하

여 부실조사 대상조합에 대하여 대부분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조사결과 부실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채권보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통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고 조합 임원의 경영 책임을 강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조합의 부실발생 사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농협중앙회에서 연구용역을 거쳐 부실사전예방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완료하여 업무수행을 준비하고 있고, 그 운영을 위해 관련규정을 제정하여 2010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에 있다.

(농업금융정책과 행정사무관 박중신)

4. 광역클러스터³⁾ 사업추진

FTA/DDA 등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른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농업경영체 및 지역농산업의 잠재력, 내생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한 평균적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지역에 특화된 농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시스템농업의 구축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성이 제기되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농림수산식품부(당시 농림부)의 중장기 농업·농촌 발전계획에 따라 새로운 농업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2004년에 『농업·농촌 종합대책』 수립 시 지역농업 발전계획의 하나로 지역농업클러스터를 포함하였고

지역농업클러스터 추진계획을 그해 3월 지역의 가용자원을 통합적·유기적으로 결집한 지역농업클러스터 계획을 대통령께 보고한 이후 지역 전문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사업추진계획을

3) 개념 : 일정지역의 특화된 농산업과 관련된 주체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가용자원의 최적 이용을 통해 지역농업을 혁신하는 농산업 결집체

수립하여 2005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시범사업 첫해인 2005년도는 20개 시범사업단을 선정하여 2007년까지 3년간 지원한 결과 지역경제와 농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평가됨에 따라 그동안의 추진상의 문제점을 개선한 본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2008년에 22개 본 사업단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단위의 분산·중복투자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광역경제권단위의 연계를 통하여 사업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단위 클러스터는 향토산업육성사업에서 추진하고 둘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만 사업명을 광역클러스터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역할을 정립하여 2009년에 12개 사업단⁴⁾을 선정하였다.

동 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클러스터사업의 자립도를 완성시키는 패키지형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분야는 ①산·학·연·관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②생산기반 조성, ③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로 구분하여 지원 중에 있다.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크게 5개가지 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지자체는 지역의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평가함으로써 지역 자율의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실천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는 지자체 책임운영 체계 도입되어 산·학·연의 상품화 기술개발 등으로 시범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기업의 매출액이 사업추진 첫해인 2005년 매출액에 5,705억원이던 것이 작년 말 기준으로 34%증가한 7,645억원으로 조사되어 참여 농기업체 및 생산자의 소득이 크게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둘째, 생산위주의 농산업 정책에서 벗어나 농산업과 지역의 문화·관광산업 연계 발전시켰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예를 들면 영동포도 클러스터 사업단의 경우 가공업체 시설현대화, 포도가공벤처플랜트 설립을

4) 12개사업단 : 팔당클린 농식품, 산우리 재래돼지, 육품정 육우, 서부충남 고품질 양돈, 청보리를 활용한 참예우, 청보리 녹색산업, 녹색한우 명품화, 전남 딸기신산업, 감 고부가가치, 청정 약용작물, 제주 넘치, 우리밀 산업화

통해 포도가공 산업 전략적 육성하고 포도산업을 관광 산업과 연계하여 먹는 포도(1차 산업)에서 마시는 포도(2차 산업), 즐기는 포도(3차 산업)으로 성장시켜 포도축제방문객수가 증가하고 와인트레인 운행횟수와 이용인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 포도축제 방문객수 증가 : ('05) 10만명 → ('06) 35 → ('07) 14 → ('08) 25

* 포도와인 트레인 운행 : ('07) 105회, 9,000명 → ('08) 179회, 15,780명

보성녹차의 경우도 기존의 녹차의 틀에서 벗어나 캔 음료나 장류제품, 국수류, 과자 및 아이스크림류 등의 가공식품과 보성 녹돈과 같은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녹차밭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사업과 녹차체험관광, 다기세트와 같은 녹차관련 관광 산업과의 연계시킨 결과 녹차산업이 활성화 되어 보성지역 녹차 재배면적이 늘고 녹차 가공업체도 크게 증가하였다.

* 녹차 재배면적 : ('05) 886ha → ('07)1,149(증 30%)

* 녹차가공업체 수 : ('06) 57개 → ('08) 72(증 26%)

셋째, 클러스터 사업을 지역 내 타 농림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농업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안성마춤클러스터 사업단은 타 농림사업으로 는 농가지원 및 생산기반정비에 중점 투입하고 클러스터 사업은 공동마케팅 및 지역브랜드 활성화 지원한 결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안성마춤 브랜드가치를 149억원으로 평가하였고 이와는 더불어 안성마춤 클러스터에 참여하고 있는 산업체 매출액도 크게 증가하였다.

* 안성마춤 브랜드 가치 : 149억원('07 한국생산성본부)

넷째, 지역 내 혁신주체들의 네트워킹으로 개별품목을 중심으로 지역의 관련 전문인력 풀이 확보되고 사업체의 실무인력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농업 성장 동력의 추체로 성장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풍기인삼클러스터 사업단의 경우 동양대학교를 중심으로 20분 이동거리 내 인삼재배농가(880호), 가공업체(89개), 유통업체(221개), 인삼시험장, 대학, 영주시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활성화를 꾀한 결과 참여업체의 수출과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 * 참여업체 인삼수출 실적 : ('05) 480백만원 → ('08) 892(증 85%)
- * 참여업체 매출액 : ('05) 95백만원 → ('08) 152(증 60%)

마지막으로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대화채널 마련되었는데 시·군 연합사업단의 경우 사업계획서 및 예산 신청시 시·도의 승인을 받아 요청하게 되므로 사업계획 수립시 지자체간 협의가 필수적이므로 클러스터 사업을 매개로 지방농정 담당자와 농산업 관계자와의 교류가 확대되었다, 특히 강원도의 백두대간사업단의 경우 4개 시·군의 지자체와 15개 지역농협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지역농업의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강원 산간지역의 농업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광역클러스터사업은 정책내용은 매우 혁신적이나 현장정착에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 예서는 클러스터사업을 기존 농림사업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거나 일부 대학·영농조합법인 등이 클러스터 형식만 갖추어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기도 하고 단기간의 사업으로 인해 기반구축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종합적인 브랜드 체계 구축 미흡한 실정으로 사업의 성공을 위 하여는 다소의 시간과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지역 보유 자원과 특성을 극대화하여 시장 경쟁력 있는 지역농수산업 창출 생산위주 농업을 1·2·3차 산업이 연계된 「농산업」으로 전환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농정시스템으로 혁신을 유도하고 새로운 부가가치 및 고용증대 효과 창출을 위하여 ① 시범사업 및 본 사업에서 선정된 시·군 단위의 품목별 클러스터를 포함하여 2016년까지 100개소 육성할 계획이다. ② 이렇게 선정된 클러스터 사업단은 비교우위 지역특산품을 1·2·3차 융·복합 산업화·고도화하여 농산업을 지역 성장 동력으로 견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③ 선정된 클러스터 간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클러스터사업단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생적 역량강화 및 식품산업 활성화 도모하여 産·官·學·研, 생산-유통-가공-판매-소비 등 관련 주체간 네트워크 및 R&D, 마케팅, 컨설팅 등 시너지 효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함은 물론 '09.7월중 (가칭)클러스터사업단협의회를 발족하여 사업단 자율적인 상호 정보교류, 공동 사업 및 홍보 지원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④ 클러스터 사업을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수산업-식품산업의 창의적 연계·상생모델로서 정립하여 규모화, 조직화, 기업화된 융·복합기업과 동반 성장모델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 광역클러스터 육성 3단계 모델 >

	<1단계> 클러스터前단계	<2단계> 클러스터구축단계	<3단계> 클러스터산업화단계
발전단계	<p>지역농업</p>	<p>클러스터 구축</p>	<p>클러스터 發顯</p>
발전목표	지역농업자원 발굴과 차별화 요소의 극대화	지역농업주체간 네트워킹 및 지역협력체계 구축	지역농업클러스터의 산업화 달성과 성과 도출
핵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성화 전략 선택 -생산,특화품목,마케팅,농촌 관광 등 농산업전반에서 특화요소의 전략적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체간 역할분담 -지역농업 코어(Core) 구축, 핵주체 구축 -핵심 인재(人才)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업 확장 (1차+2차+3차+@) -본격적인 지역농업 마케팅 실천 -신사업(新事業)도입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목육성 정책 -마케팅조직육성 정책 -생산유통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클러스터 구축지원 -지역특성화교육 -브랜드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R&D추가 지원 -패키지(Package)지원(생산→마케팅)
지원체계			

(식품산업정책과 농업주사 정병석)

5.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현재의 평균화된 농업지원 정책으로는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정책대상을 개별농가의 경영 여건에 따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정부는 농업의 주업 여부와 성장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농가를 유형화하여 유형별로 지원 프로그램을 차별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취미나 부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는 복지대책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경쟁력 제고와 소득 안정을 도울 예정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개별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의 농업경영정보 등을 모아 통합관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도입을 추진중에 있으며,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은 이미 농업경영체등록제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시행될 농가단위소득안정제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2008년 6월부터 등록받아 2009년 12월 24일 현재 1,149천 농가가 경영정보를 등록하였으며, 근거법률인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0. 2) 및 시행령(10. 8), 시행규칙(12. 9)을 제정·시행하였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등록하는 임의등록 방식이지만, 앞으로 각종 농림정책사업에 참여해 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경영체는 반드시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및 정보관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한다.

2010년에는 등록 방법을 개선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현지조사 및 각종 행정정보와 공공기관의 정보를 연계하여 등록내용의 신뢰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농가소득안정추진단 기술서기관 조강제)

제9절 DDA·FTA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협상대응

1. WTO/DDA 협상 대응

가. DDA 농산물 협상동향 및 대응

2008년 WTO/DDA 협상은 2007년에 이어 활발히 전개되어 그룹내 협상 및 주요국 고위급협상(약 30여개국)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특히 2008년 협상은 관세상한, 민감품목, 특별품목, 개도국특별긴급관세 등 이전 대립이 큰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약 10여개국 관련 이해당사국이 참여하여 집중적인 협상을 하는 소그룹회의(Walk in the Woods)가 진행되고 있는 바, 이를 통해 각 이슈별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일부 의견접근을 이루는 등 논의의 진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반영한 세부원칙 수정안이 2월, 5월에 제시되었으며, 연내 협상 타결을 위해 상반기 중에 각료회의를 개최하자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Lamy WTO 사무총장은 7월 비공식 소규모 각료회의 개최하여 농업 및 비농산물 협상그룹별로 주요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일부 잔여쟁점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 이견 대립으로 세부원칙 타결에 실패하였다.

이후 7월 각료회의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팔코너 농업의장은 12월에 4차수정안을 배포하고 12월 비공식 각료회의를 추진하였으나, 개최 날짜가 시기상 연도말이고 미국 등 주요국들의 국내 일정상 참여가 불가능하여 개최되지 못했다.

2009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주요국 통상장관은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재확인하였으며, 4월 런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도 각국 정상들은 세계 경제회복을 위하여 DDA 협상의 타결에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주요국들은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명 하였을뿐,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되지는 않았다.

미국 오바마 실행정부의 DDA 협상팀 구성이 갖춰지지 않았던 점도 상

반기 협상진전이 없었던 큰 이유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9월초 인도에서 개최된 비공식 통상장관회담에서 주요국들은 하반기 DDA 협상진행과 2010년 협상 타결이라는 목표에 동의하자 WTO 라미 사무총장은 DDA 협상 타결의 목표 달성을 위해 9월말~12월간의 협상계획을 마련하고 세부원칙 잔여쟁점 및 양허표 양식 등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까지 미국이 본격적으로 협상에 참여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나 향후 미국의 입장이 협상 진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각국의 정치적 의지가 협상의 조기 타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DDA협상은 2007년 이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어 3차례 세부원칙안이 제시되는 등 상당부분 논의의 진전을 이루었지만, 아직까지 주요 쟁점들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 이견차이가 크기 때문에 협상 타결에 대해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DDA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WTO 다자체제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우려의 시각 속에서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이며, 그간 논의가 상당부분 진전되어 기술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정리가 되어 논의가 단순화 되었는바,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 등 주요 수치들에 대한 주요국들의 정치적 결정만 있다면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7월 각료회의에 참가하여,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DDA 협상에 최대한 반영하여 우리 농업에 주는 부정적인 외부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협상 목표에 따라 관세상한, 특별품목, 민감품목 등 우리의 핵심 이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유사 입장국들과의 공조를 적극 활용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부원칙 협상 단계뿐만 아니라 세부원칙 타결 이후 이행계획서 검증까지도 염두에 둔 장기적인 안목과 전략을 바탕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다.

한편 우리 농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관세와 보조금을 적게 감축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개도국기준 적용여부가 매우 중요한 문제인 바,

정부는 동 과제를 최선의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비록 고도화된 경제구조, 첨단제품의 공격적인 수출 등 우리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진 결과로 개도국기준 적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이 호의적이지는 않은 형편이지만, 개도국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각국의 자기선언(Self-declaration)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는 UR협상때 개도국 지위를 확보하였으며 DDA 협상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개도국기준 적용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본입장이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러한 개도국기준 적용문제는 현재 진행중인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협상 과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세부원칙이 마련된 후 각국이 C/S(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검증받는 최종단계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현 상황에서는 세부원칙 협상에서 최대한 개도국 우대를 확보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개도국기준 적용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향후 세부원칙이 타결된 후 C/S 검증을 위한 양자협 의과정에서 개도국기준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국농업의 영세성, 개방 이후 악화된 여건 등 개도국기준 적용의 당위성에 대한 논리 보장 및 핵심 이해관계국을 대상으로 실무급·고위급 설득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다자협상협력과 사무관 정용호)

나. DDA 비농산물 협상동향 및 대응

2008년 12월 DDA 협상 진전을 위해 농업 및 비농산물 시장접근 세부원칙에 대한 4차 수정안이 제시된 이후 2009년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DDA의 조기 재개가 논의되었으나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해 DDA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DDA 협상은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는 기존의 제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개도국은 낮은 계수를 사용하는 대신 더 많은 수준의 신축성을 사용하거나, 신축성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관세감축공식 계수를 높일 수 있도록(Sliding Scale) 하고 있다. 의장 4차 수정안에 따르면 스위스 공식에 적용될 조정계수의 경우, 선진국은 8, 개도국은 부가 조건(신축성 적용 범위)에 따라 20, 22, 25 중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분야별 자유화와 관련하여, 자발적인 방식으로 분야별 자유화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는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으나 참여 여부와 관세감축공식 계수를 연계하는 방안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선진국과 개도국간 대립이 큰 상황이다.

그러나 '09. 9월 WTO/DDA 고위급 회의(SOM)에서 '10년 DDA 협상 타결을 목표로 '09년 말까지 각 협상 분야의 작업계획 마련 및 고위급 회의를 통해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기로 합의함에 따라 분야별 자유화 협상에서도 각 분야별 제안국 주도의 양자협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비관세장벽(NTBs) 관련 논의는 세부원칙 타결시까지 포함될 비관세장벽 제안서를 확정하고 타결 후 2~3개월 이내에 제안서 문안을 결정하도록 합의되었다. 그러나 제안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회원국들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DDA 협상은 기본적으로 농업, 비농산물, 규범 등 7개 그룹으로 나누어 이루어지며 모든 협상이 동시에 타결되는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 방식으로 추진된다. 그러므로 향후 비농산물시장접근 협상의 타결 여부는 여타 분야의 협상진전, 특히 농업협상에서의 미국, EU 등 선진국과 인도, 중국 등 개도국간의 대립 해결 여하에 달려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DDA 협상의 '09년 내 가시적 성과 도출을 전망하기는 힘들지만, “WTO 체제하에서의 미국의 약속 준수”⁵⁾ 입장을 밝힌 미 오바마 신행 정부의 DDA 조속 타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Two-track approach) 제안과, '09. 6월 중순 케언즈그룹 각료회의(인도네시아, 발리), OECD 각료

5) 2009 Trade Policy Agenda and 2008 Annual Report, USTR

회의 등을 계기로 주요국 통상장관들 사이에 DDA 재개 및 타결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DDA 협상체계상 수산물 관세는 공산품 관세와 같이 논의된다. DDA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목표는 공산품 수출 확대인데, 이를 위해서는 공격적인 협상을 펼치는 동시에 취약한 수산분야를 보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수출시장을 최대한 확보하면서도 국내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기본 방침하에서 수산물 관세협상에서는 신축성 확보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NAMA 협상그룹 의장과 면담, 주요국과의 양자 협의 등 주요시점마다 민감 수산물에 대해서는 개도국 신축성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NTB협상 중 신속해결 매커니즘과 관련하여, SPS 조치 등은 매우 과학적이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해결 매커니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관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자협상협력과 사무관 임선정)

2. FTA 농업협상 대책

가. 한·미 FTA 협상분야

1) 개 요

2006년 2월 협상 개시 후 2006년에는 5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하였으며, 2007년에는 3차례의 공식협상(제6차~제8차 협상) 및 2차례의 농업분야 고위급협상이 있었으며 협상타결을 위한 최종 장관급협상이 개최되었다. 2007년 4월 2일 정부간 협상을 종료되었고 6월 30일 공식 서명되었다.

한·미 FTA 협상은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국익차원의 결단에 의해 추진되었으나,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분야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동시에

국내 보완대책도 충실히 마련한다는 정부 전체의 공감대 하에서 협상이 이루어졌다.

농업분야를 포함한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2007년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간 이해단체, 관련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내보완대책을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07년 6월 28일 발표하였다. 또한 특히 피해가 예상이 되는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07년 11월 6일 추가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2) 국회비준

한미 FTA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양국 의회의 비준과 협정이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령을 제·개정 후 양국간 FTA 이행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을 교환해야 한다. 양국간 확인서한을 교환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 된 후 FTA가 실제 발효된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 국회 비준안을 2007년 9월 7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비준동의안은 2008년 2월 13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절차에 들어갔으며 국회 통외통위는 한미 FTA 찬반양측 전문가들과 통외통위 위원들이 참여한 “한미 FTA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청회”를 2월 15일 개최하였다. 비준 동의안을 17대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국회차원에서 농어촌 지원대책을 추가 논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FTA농어촌지원 대책특위”를 출범(2월 19일)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한미간 쇠고기 협상, 미국의 비준현황, 4월 총선 등의 영향으로 17대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못했다.

비준동의안이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어 18개국회로 넘어감에 따라 정부 내 입법 절차 및 국회 비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정부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정부 내 입법절차를 마친 후 2008년 7월 1일 국무회의 통과, 7월 3일 대통령 제가를 받은 후 2008년 10월 8일 18대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의장은 비준동의안을 10월 10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하여 국회 내 비준 절차를 진행하였다.

2009.4.22일 민주당, 민노당의 거센 반발 하에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통과 시켰으며 현재 본회의 의결만 남은 상황이다. 또한, 한미 FTA 이행에 관련된 24개 법률에 대해 제·개정을 병행 추진하고 있는데 17대 국회에서 이미 2개 법률이 처리되었고 농식품부 소관 법률인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을 포함한 19개 법률에 대해서는 18대 국회에서 제·개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방송법 등 3개 법률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후 개정 추진 예정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 미 행정부와 의회가 그 동안 최대의 현안으로 집중하고 있던 의료보험 개혁법안의 '09.10.7일 하원에서 통과됨에 따라 한·미 FTA를 포함한 통상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하원법안은 앞으로 상원과 절충을 거친 뒤 다시 양원에서 통과돼야 하는 쉽지 않은 절차가 남아있다. 한편, 내년 하반기 미국 중간선거 등을 감안하면 내년 초까지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상당기간 뒤로 미루어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그간 오바마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친 한·미 정상회담(4.2, 6.16)에서 한·미 FTA를 진전시키기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미 FTA가 두 나라에 상호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미 FTA의 진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하였다.

USTR에서 '09.7~9월중 실시한 한미 FTA 진전을 위해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한미 FTA 찬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의견 수렴결과 찬성이 86%(총 141건중 122건)로 제조 및 서비스업, 농식품, 금융업계 등 산업계 전반의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 일부 농업 부문(쌀, 양파, 마늘협회) 등은 한국정부의 특정산업 보조금 지원,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FTA 반대 또는 재협상 요구하였다. 론 커크 USTR 대표는 의견수렴 완료 후 “ 제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의회, 이해관계자, 상대국과의 협의 하에 FTA 진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 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언급하였다.

최근, 그동안 다소 소극적인 미행정부의 태도가 좀더 진전된 태도를 보

이고 있다. 결정적으로 한·EU FTA 타결('09.7.13일 실질적 타결, 10.15일 가서명)이 미국이 한국시장에서 EU에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09.11.6일 미국 민주당 애덤 스미스 등 연방 하원의원 88명이 오바마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한미 FTA가 미국이 지난 15년간 동안 협상한 것 중 경제적 이익이 가장 많은 무역협정”이라며 “한미 정상회담(11.18), APEC 정상회담에 앞서 한미 FTA의 의회 검토를 위한 준비에 나서라”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도 한미 FTA 비준 분위기가 성숙되었음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반면, 미 민주당 등 일각에서는 자동차문제에 대해 우려를 적극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장인 샌더레빈(디트로이트) 의원은 자동차 중심지인 미시간주를 지역구로 둔 상·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론 커크 USTR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한미 FTA의 수정을 촉구한 '07.3월의 오토 코커스(자동차 문제를 협의하는 의회대 초당적 모임)제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에 앞서 USTR 웬디 커틀러 대표보(10.15)는 “자동차에 대해서 미국기업과 근로자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 받을 후 있도록 추가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역무역협정과 사무관 박정훈)

나. 한·EU FTA 협상분야

한-EU FTA는 협상출범 이후('07.5.6) '07년에는 총 5차례 협상을 개최하였다. 제1차 협상('07.5.7~11, 서울)은 협상일정, 협정문 작성방안, 양허방식 등 협상의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제2차 협상('07.7.16~20, 브뤼셀)부터 양허안, 원산지, 지식재산권, 위생·검역(SPS)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하였다. 제3차 협상('07.9.17~21, 브뤼셀)에서는 우리측이 수정양허안을 제시하고 EU측과의 품목별 협상을 시도했으며 우리

농산물 민감품목에 대한 농산물세이프가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제4차 협상('07.10.15~19, 서울)에서는 민감품목에 대한 품목별 기술협의를 우리측이 국내적으로 민감하게 다루는 이유를 EU측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EU측 수출보조 지급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제5차 협상('07.11.19~23, 브뤼셀)에서는 자동차 표준과 공산품 원산지 문제도 양국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부각되었다. 농산물 수정양허안은 전체 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과 당초 전망보다 다소 지연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조건부 일괄타결안(package)으로 작성하여 EU측에 제시하였다.

제6차 협상('08.1.28~2.1, 서울)에서는 상품양허, 자동차 기술표준 협상은 진행하지 않고 주로 협정문과 공산품 원산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EU측 요청으로 개최된 비공식 회의에서 EU측은 민감품목의 예외적 조치, 농산물 세이프가드, 수입쿼타 등에 대해 대부분 수용 가능 입장을 표명하였다. 반면, EU측은 감귤, 감자, 설탕 등 관심품목은 추가적인 양허개선을 요구하였다.

제7차 협상('08.5.12~5.15, 브뤼셀) 상품 협상은 개최되지 않아 농수산물 양허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타 농수산업 관련 분야에서는 위생·검역(SPS), 품목별 원산지기준 및 지리적표시 등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제7차 협상에서는 '08년 내 협상을 타결하기로 하고, 통상장관·수석대표간 협의 등 고위급 접촉을 집중하기로 합의하였다.

제2차 확대수석대표회담('08. 12.15~18, 비엔나)에서 공산품 양허를 포함한 주요 협상분야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었고 농산물 양허협상에서는 우리측 수정 양허안에 대한 양측 평가와 잔여쟁점 품목에 대한 세부적 논의 및 TRQ, ASG 관련 기술적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후 통상장관회담('09. 1.19~20, 서울)을 개최하여 대부분의 잔여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를 상당히 좁혔으며, 양측 통상장관은 제8차 회의(3월 초)에서 최종 타결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통상장관회담과 병행해 개최된 실무협약에서는 돼지고기, 낙농품 등의 양허안 및 TRQ, ASG 관련 기술적 협의도 진행하여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루었다.

최종 제8차협상('09.3.23~24, 서울)에서는 관세환급, 농산물양허, 원산지 등 일부 잔여쟁점 외 대부분 분야에서 합의를 도출하였다. 양측은 '09.4.2일

런던에서 개최된 통상장관회담('09.4.2, 런던)에서 미합의 쟁점의 타결을 시도했으나 관세환급에 대한 EU내 회원국간 이견으로 결렬되었다. 이후 수차례의 통상장관회담을 통해(5.23, 6.26)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대통령 유럽 순방('09.7.7~14)을 계기로 폴란드(7.8), 이탈리아(7.9)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소극적 회원국에게 합의안에 수용하도록 유도했으며, 한편 EU측은 EU 내 133조 위원회(7.10)에서 협상 종료를 설명하고 대다수의 지지를 도출하였다. 7.13일 EU의 의장국인 스웨덴과의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실질적 최종합의안을 마련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가서명을 추진키로 발표되었다. 이후, 양측 통상장관간에 10.15, 브뤼셀에서 가서명이 이루어졌다.

최종합의안에 농림수산물 분야는 양허제외, 현행관세 유지, 관세 존속 기간 장기화 등 예외적 취급을 확보했고, 즉시철폐 대상은 교역비중이 적은 품목이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중에서 선별했다. 참고로 공산품은은 기본적으로 협정 발효 후 7년 이내에 모든 관세를 폐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외교통상부에 의하면 가서명 이후 협정문 공개, 23개국 언어로 번역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정식 서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식 서명 후 양측이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상호 통보한 날로 부터 60일 경과 후 또는 양측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될 전망이다.

《 농림수산물 양허 최종결과 》

농산물 양허 최종 합의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총 1,449개 농산물 품목(HSK 기준) 중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였으며, 고추(270%), 마늘(360%), 양파(135%), 대두(487%), 보리(324~299.7%), 감자(304%), 인삼(754%~222.8%), 제주산 감귤(온주 밀감)(144%), 흑설탕(40%) 9개 품목은 현행관세가 유지된다. 이들 10개 품목은 HSK 세번 기준 약 42개에 해당되며, 이들 품목의 국내생산액은 '07년 국내생산액의 33.5%에 해당한다.

냉동삼겹살(25%), 사과(45%), 배(45%), 쇠고기(40%), 맨더린(감귤류)(144%) 등 458개 품목은 관세 존속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장기화(HSK 기준 458개(31.2%), 對 EU 수입액 비중 30.5%)했으며, 분유(176~89%)는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치즈(36%) 등 일부 낙농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10년

이상에 걸쳐 폐지하면서 무관세 물량(TRQ ; Tariff Rate Quota)을 배정기로 했다. 특히, 오렌지(50%), 포도(45%) 등에 대해서는 같은 북반구 국가로서 생산·유통 기간이 비슷한 점을 감안, 우리의 성출하기에는 현행관세를 유지하거나 관세를 장기간 완만하게 감축기로 하는데 합의했다. 한국이 7년 이내에 관세를 폐지하는 농산물 품목은 966개(HSK 기준 : 품목비중 65.9%)이며, 이 가운데 스카치위스키(20%), 꼬냑(15%), 마가린(8%), 커피(8%), 초코렛(8%), 밀가루(4.2%) 등은 3~5년간 균등하게 관세가 감축되고, 홍차(40%), 커피원두(2%), 포도주스(45%) 등은 관세가 즉시 폐지(HSK 기준 613개(41.8%), 對 EU 수입액('06~'08) 비중 약 19.3%)된다. 보리(맥주맥(513%)·맥아(269%)), 감자전분(455%), 변성전분(385.7%), 냉장 돼지고기(22.5%), 사과(45%), 인삼(754.3%), 쇠고기(40%), 발효주정(270%)에는 농산물 세이프가드(Agricultural Safeguard)를 설정해 수입량이 급증하는 경우, 관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EU는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5년 이내에 폐지하기로 했으며, 對 EU 주요 수출품목인 라면(6.4%+24.6/100kg, €), 면류(6.4%+9.7/100kg, €), 비스킷(9%), 간장(7.7%), 난초(6.5%), 음료(9.6%) 등에 대해서 EU측은 관세를 즉시 폐지(EU 세번 기준 약 1,896개 품목(92%), 對 EU 수출액 기준 86%)하기로 했다.

수산물 양허 최종 합의내용을 보면 냉동 오징어(24%), 냉동 민어(57%), 냉동 명태(30%)에 대해서 현행 관세를 유지기로 했으며, 냉동 고등어(12년)(10%), 냉동볼락(10%) 등은 관세 양허기간을 10년 이상, 골뱅이는 5년에 걸쳐 관세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EU는 우리의 주 수출 품목인 다랑어류(22~20%), 오징어(6%), 조제 수산물(22%)에 대한 관세를 3년 이내에 폐지하도록 합의했다.

임산물의 경우 우리는 목재류 227개 품목(12~8%) 에 대해서는 5~7년간 관세를 폐지하기로 했으며, 밤(219.4%), 잣(566.8%), 대추(611.5%) 등 주요 임산물에 대해서는 15년 이내에 관세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EU는 합판 등 목재류 41개 품목(10~6%)은 3년간 폐지하고 나머지 임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즉시 폐지기로 했다.

<표 3-2-25>

우리측 농산물 양허안 총괄

양허유형	품목수		수입액 (06~08평균)		주요 품목	
	개	%	천\$	%		
일반철폐 유형	0	613	41.81	322,384	19.27	토마토 조제품, 홍차, 동물, 수목, 화훼, 사료, 종자, 중유, 종돈, 원피, 양모, 면, 라임, 밀, 커피원두, 라면, 포도주, 포도주스, 소주 등
	2	3	0.20	9	0.00	에버카도우(신선), 레몬, 자두(건조)
	3	13	0.88	277,490	16.59	스카치위스키, 버본위스키, 개, 닭, 마가린, 밀가루, 오렌지주스 등
	5	287	19.58	489,326	29.25	돼지고기 기타, 올리브유, 카세인, 커피, 유채유, 간장, 김치, 배추, 꼬냑, 파인애플, 초코렛 등
	6	3	0.20	12,381	0.74	돼지고기(냉동족, 밀폐용기제품), 호도(탈각)
	7	47	3.21	58,553	3.50	돼지고기(냉장식용설육), 토마토, 아이스크림,
	소계	966	65.88	1,160,143	69.35	
장기철폐 유형	10	274	18.69	361,935	21.64	돼지고기(냉동삼겹살, 냉장삼겹살, 냉장목살), 삼계탕, 닭고기(냉장가슴, 냉동닭다리), 감귤주스, 딸기주스, 된장, 망고, 인삼차, 인삼가공, 인조꿀, 혼합분유 등
	12	16	1.09	300	0.02	닭고기(냉장), 혼합주스(포도), 조제분유, 수박
	13	27	1.84	15,567	0.93	닭고기(냉동날개, 냉동가슴), 오리고기, 대추(냉동), 고구마, 인삼가공품(백삼) 등
	15	92	6.28	24,906	1.49	쇠고기, 전분, 사료용근채류, 조란, 녹각, 키위, 혼합조미료, 맨더린, 대추, 밀크와 크림, 매니옥, 잣 등
	16	1	0.07	240	0.01	백설탕
	18	7	0.48	18	0.00	녹차, 생강, 참깨, 땅콩, 참기름
	20	2	0.14	-	0.00	후지사과, 동양배(그 외 사과, 배는 10년)
	10+TRQ	11	0.75	19,870	1.19	유장, 버터, 조제분유
	12+TRQ	8	0.55	51,167	3.06	보조사료, 사료용조제품(기타), 변성전분
	15+TRQ	6	0.41	30,752	1.84	치즈, 보리(맥주맥·맥아)
	소계	444	30.3	504,755	30.18	
관세철폐 소계						
예외적 유형	계절관세	1	0.07	-	0.00	포도(5월~10.15: 17년, 10.16~4월: 5년)
	계절+TRQ	1	0.07	620	0.04	오렌지(9월~2: 현행+TRQ, 3월~8: 7년)
	현행+TRQ	12	0.82	4,012	0.24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 천연꿀
	현행관세	26	1.77	44	0.00	대두, 보리, 감자, 운주밀감, 고추, 마늘, 양파, 인삼, 흑설탕
	양허제외	16	1.09	3,016	0.19	쌀 및 관련 세 번(16개)
예외적유형 소계						
총 합계		1,466	100.0	1,672,590	100.0	

<표 3-2-26>

EU측 농산물 양허안 총괄

양허 유형	품목수		수입액 ('06~'08평균)		주요 품목
	개	%	천\$	%	
0	1,896	91.86	60,449	86.29	면류, 위스키(현행 0%),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대두, 보리, 참깨, 인삼(현행 0%), 옥수수, 아이스크림, 맥주, 인조꿀, 조란, 생강, 잣, 녹차, 사료용 근채류, 장미, 카네이션, 난초, 국화, 글라디올러스, 절화, 햇감자, 배, 딸기, 오이, 체리, 비스킷, 포도주, 포도주스, 음료, 간장, 등
3	10	0.48	1,018	1.45	꽃양배추, 뿌리샐러리, 완두, 콩, 담배
5	119	5.77	8,174	11.67	쇠고기, 밀크와크림, 천연꿀, 양파, 마늘, 고추류(공업용제외), 땅콩, 전분, 변성전분, 복숭아, 키위, 레몬, 오렌지, 감귤류, 포도, 토마토, 사과 등
양허 제외	39	1.89	413	0.59	쌀 및 쌀 관련 세번(39개 세번)
합계	2,064	100	70,054	100	

《 농수산물 원산지 》

신선 농산물은 제3국산의 우회 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생산기준’을 적용기로 했다. 예컨대, 채소, 과일, 화훼 등 경종 작물은 당사국이나 EU 역내에서 재배하여 수확한 작물에 대해서만 원산지 특혜 관세가 인정된다. 축산물도 역내에서 출생, 사육된 경우에만 원산지 특혜 관세가 인정되며, 역외국에서 수입하여 도축한 경우에는 인용되지 않는다. 라면, 비스킷, 장류, 생선묵 등 가공 농수산물은 기준을 완화해 제3국산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원산지 특혜관세를 적용기로 합의했다.

《 위생·검역 》

위생 및 검역 분야는 WTO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상의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최종 합의했으며, 세부적으로는 수입요건 부과, 병해충 무발생·저발생 지역 개념을 인정하는 절차적인 내용을 포함하였다. 양측은 수입국의 일반적인 수입요건(The general import requirements)에 대해 수출국의 영역 전체에 걸쳐 적용하고, WTO/SPS 협정 등의 국제기준에 따라 수출 국가별 또는 지역별 동·식물 위생상황을 수입국이 결정하고, 그 위생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특정수입요건(Additional specific import requirements)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한편, 병해충 무발생·저발생 지역을 인정하는 ‘지역화(Regionalization)’ 개념을 인정하고, 지역화를 인정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상호 지역화 인정제도 및 절차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신뢰 구축 활동을 약 2년간 하기로 했다.

《 서비스 》

농축수산업과 관련, 수의서비스(현지주재 필요), 자문서비스, 가금감별서비스 등을 양허하였다. 농축산물에 관한 유통 서비스는 농산물 및 산동물 등 위탁, 곡물·홍삼 도매, 쌀·홍삼·담배 소매, 곡물·홍삼·쌀·담배 프랜차이즈, 공영도매시장, 공판장, 가축시장은 제외하고 양허하였다.

《 지리적표시(GI) 》

농식품 관련 GI 보호를 WTO/TRIPs(지재권 협정) 상의 포도주·증류주 보호수준으로 강화(CH.10 지재권내 GI 9개조항 18조~26조)하였으며, 보호대상을 부속서에 목록화하고, FTA 발효전에 출원, 등록 및 사용되어온 선행상표는 계속 사용가능(예 : “오스카 샴펜”)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하였다. EU측 보호 GI 품목수는 162개(와인 80, 증류주 22, 치즈 19 등)이고, 우리측 보호 GI 품목수는 64개가 해당된다.

<표 3-2-27>

한·EU FTA 지리적 표시(GI) 목록

□ EU측 GI 보호목록

품 목	주요 GI
와인(80)	○ 메독, 생페밀리옹, 보르도, 보졸레, 브르고뉴, 샤블리, 마고(프랑스) ○ 키안티, 토스카나, 캄파니아(이태리) ○ 미틸라인, 라인헤센, 라인가우, 모젤(독일)
증류주(22)	○ 아이리쉬 위스키(위스키, 아일랜드) ○ 우조(그리스) ○ 코냑, 아르마냑(브랜드, 프랑스)
치즈(19)	○ 까망베르 드 노르망디(프랑스) ○ 에멘탈 드 사부아(프랑스) ○ 모차렐라 디 부팔라 캄파나(이태리)
육류가공품(14)	○ 잠봉 드 바이욘(햄, 프랑스) ○ 잠포네 모데나(돼지 앞발, 이태리) ○ 프로슈트 디 파르마(생햄, 이태리), 프로슈트 드 토스카나(생햄, 이태리)
오일(10)	○ 아쎬이떼 델 바호 아라곤 (바호 아라곤산 기름, 스페인) ○ 월 에쌍시엘 드 라병드 드 오뜨 프로방스(프랑스)
맥주(6)	○ 뮌헨어 비어, 바이어리첸스(독일),
채소조제품(4)	○ 엘리아 깔라마따스(올리브 조제품, 그리스)
제과류(2)	○ 히호나(너겟, 스페인)
술제품(1)	○ 위트르 드 마렌느 올레통(프랑스)
기타(4)	○ 마스티하 허우(쥬잉검, 그리스) ○ 아싸프란 데 라만차(사프란, 스페인)
합 계	162개

□ 우리측 GI 보호목록

품 목	주요 GI
채소(9)	○ 서산마늘, 의성마늘, 남해마늘, 단양마늘, 괴산고추, 청양고추, 해남겨울 배추, 창녕양파, 무안양파
과일(7)	○ 성주참외, 충주사과, 밀양얼음골사과, 함안수박, 고흥유자, 영암무화과, 청송사과
인삼류(6)	○ 고려수삼, 고려홍삼, 고려백삼, 고려태극삼, 고려인삼제품, 고려홍삼제품
쌀·맥류(4)	○ 이천쌀, 철원쌀, 여주쌀, 군산찰보리쌀
차(4)	○ 보성녹차, 하동녹차, 제주녹차, 무안백련차
잡곡·서류(4)	○ 홍천찰옥수수, 정선찰옥수수, 여주고구마, 해남고구마
조제품(4)	○ 순창고추장, 괴산고춧가루, 청양고춧가루, 영양고춧가루
특용작물(5)	○ 고창복분자, 광양매실, 정선황기, 진부당귀, 강화약쑥
축산물(3)	○ 횡성한우고기, 홍천한우, 제주돼지고기
주류(2)	○ 고창복분자주, 진도홍주(증류주)
임산물(16)	○ 양양송이버섯, 장흥표고버섯, 산청꽃감, 정안밤, 울릉도삼나무, 울릉도미역취, 울릉도 참고비, 울릉도부지깻이, 경산대추, 봉화송이, 청양구기자, 상주곶감, 남해장선고사리, 영덕송이, 구례산수유, 광양백운산고로쇠
합 계	64개

《 영향분석 》

농촌경제연구원(KREI)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는 최종 협상결과가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농수산업 생산 감소액이 매년 조금씩 커져서 대부분 관세가 폐지되는 15년차에는 2,481억원/3,172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발효 15년차에 관세가 완전철폐 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농산물 생산감소액은(KREI)은 2,369/3,06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5년차 생산감소액 : 999~1,127억원 수준). 한미 FTA 이행을 가정할 경우 15년차 농산물 생산감소액은 2,369억원, 한미 FTA 이행을 가정하지 않을 경우 15년차 농산물 생산감소액은 3,060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농산물 생산감소액 중 돼지고기, 낙농품, 양돈, 쇠고기 등 축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94%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수산물의 경우 생산감소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112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산물의 경우 한미 FTA 이행 여부와는 무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대책 및 향후계획 》

농식품부는 지난 7.14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자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EU FTA 대책 T/F(팀장 제2차관)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공동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해왔다. 국내 양돈·낙농·양계·한육우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경쟁력제고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생산자단체, 품목별연구회 등에서 제시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9차례 T/F 대책반 실무협의회, 6차례 낙농대책 실무회의 및 전문가 자문 회의를 개최하여 보완대책(안)을 마련하였다.

이중, 한·EU FTA 발효에 대비하기 위해 시급하게 시행이 필요한 사업 예산 958억원을 '10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주요 지원사업으로 학교우유 급식 지원대상 확대, 무병·우수 종축 공급을 위한 원종돈 및 모돈전문농장

육성 지원,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한 소모성질환백신 지원 등이 해당된다.

양돈은 축사시설 현대화, 돼지 소모성질환 근절, 무병·우수종돈 공급 확대 등을 통해 네덜란드나 덴마크 수준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돼지열병 청정화로 돼지고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돼지열병 항원·항체검사 확대, 농가별 고유번호 부여 및 고유번호 문신 의무화를 통해 방역에 대한 농가의 관심을 높이고, 야생 멧돼지 예찰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낙농산업의 장기적인 수급안정 기반구축을 위해 전국 귀타제를 도입하고, 국산유제품에 대한 안정적 내수기반 확대를 위해 신규 유제품 개발, 학교우유급식 확대, 낙농체험 관광사업 및 목장형 유가공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한편,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젖소개량, 시설 현대화,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이용 확대, 젖소의 경제수명 연장 등을 위한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등을 추진 추진한다. 양계는 2kg 이상의 대형닭 생산 확대 및 폐사율 감축을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 종계장·부화장의 난계대 전염병(가금티푸스, 추백리 등) 및 뉴캐슬병을 조기에 근절하고, 닭고기 수출 확대를 위해 도계장·가공장의 위생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육우는 생산비 및 유통비를 절감을 위해 '08년에 수립한 한우산업발전대책 및 육우산업발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육우고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육우 명칭을 바꾸는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분야 경쟁력제고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입 증가로 피해를보는 품목에 대해서는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수산물식품부는 12월말까지 한·EU FTA 대책T/F 회의를 개최하여 기 마련한 경쟁력 제고 대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생산자단체·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한·EU FTA 보완대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마무리된 보완대책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확정되고, '10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한·EU FTA 협정문 정식 서명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될 계획이다.

(지역무역협정과 사무관 박정훈)

다. 한·아세안 FTA 협상분야

2005년 2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5차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2006년 4월 11차 협상에서 FTA의 가장 핵심이 되는 상품부문 협정을 타결하였다. 본 상품협정문은 2007년 4월 국회비준을 통과하였고 2007년 6월부터 발효되었다.

서비스 분야는 양측이 개방 분야의 목록화(Positive System) 방식을 채택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는 개방할 부분에 대해서만 양허안에 표시함으로써, 양허안에 미표시된 부분은 자동적으로 개방되지 않는 방식이다. 동 분야는 2007년 10월 20차 협상에서 타결되어 양측은 한-아세안 정상회의(2007년 11월 21일)시 서비스 협정문에 서명하였으며, 2009년 5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한편 투자 분야는 2006년 2월 제9차 협상부터 개시되었으며, 2009년 6월 2일 제주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직후 각국 통상장관들은 협정서명식을 갖고 한-아세안 투자협정에 서명하였다. 동 투자협정은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보호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부여해야 한다는 '투자의 일반적 대우' 규정과 투명성 제고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양측은 분야별 자유화 계획(유보안)에 대한 논의는 협정발효 후 5년 이내에 완료키로 합의하였으며, 현재 한-아세안 투자협정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지역무역협정과 농업사무관 이덕민)

라. 한·캐나다 FTA 협상분야

2008년 한차례 정례협상과 회기간 협상이 개최된 이후, 한·캐나다 FTA 협상은 진전이 크게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협상 전반적으로 볼 때, 2005년 협상개시 이래 오랜 기간 협상을 진행하여 음에 따라 일부 핵심사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쟁점이 해소되

었다. 다만, 농업분야는 잔여쟁점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농산물 양허분야에 있어서 식용감자 및 오렌지를 양허제외 한다는데 합의하는 등 진전이 있었으나 캐나다측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쇠고기, 돼지고기, 대두 등 품목에 있어서는 양측 입장만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농산물 세이프가드 및 할당관세 대상품목 관리방안에 대하여도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캐나다측은 한·미FTA와 동일한 수준의 상세한 규범을 요구하였으며, 우리측은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현재 협상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에 따라 타결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으며, 우리측은 농업분야 양허이익의 불균형을 강조하는 한편,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계속 주지시키면서 캐나다측의 기대수준을 낮추기 위하여 다각적 접근과 전략으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과 행정사무관 김성원)

마. 한·인도 CEPA 협상분야

한·인도 CEPA협상은 2006년 2월 양국정상이 서울에서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래 3차례 실무협의를 포함해 총 12차례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2008년 9월에 개최된 제12차 협상(차관급 협상)에서 상품양허 등 핵심 잔여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

이후 2009년 2월 9일 인도 뉴델리에서 양국 수석대표가 가서명을 한 후, 같은 해 8월 7일 서울에서 우리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 상공장관이 정식서명을 하였으며, 협정문과 상품양허안도 정식서명에 맞춰 공개되었다.

또한 인도는 2009년 7월 2일 CEPA 협정에 대한 내각 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협정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모두 종료하였다.

우리는 2009년 8월 26일 한·인도 CEP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한 달여 뒤인 9월 28일 외교통상위원회에서 가결된 후, 11월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전체 197명의 의원 중 192명의 찬성으로 국회비준이

완료되었으며, 이에 따라 동 협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 * 한·인도 CEPA 협정은 양국이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서로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부터 발효 가능

《 주요 협상결과 》

한·인도 CEPA협정은 우리가 기 체결한 여타 FTA에 비해 낮은 개방수준으로 타결되어 국내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산물 양허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전체 농산물 1,451개 품목(HS 10단위 기준) 중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사과, 배 등 총 44.8%에 상당하는 650개 품목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망고, 후추 등 299개 품목은 민감유형으로 분류하여 8년간 관세의 50%를 낮추기로 하는 등 다양한 예외를 확보하였다.

또한 대두박, 사료용 종자 등 국내 수입이 불가피하거나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품목은 단기간 관세 폐지 또는 즉시 양허 유형에 분류하였으며 특히, 2008년을 기준으로 국내 생산액 비중이 96.3%인 50대 농산물 가운데 관세가 감축되는 대상은 조제 오이, 채유용 대두, 산양(염소) 3개 품목에 불과한 수준이다.

수산물은 냉동갈치, 냉동꽃게, 냉동새우 등 인도로부터 들어오는 주요 수입품목(총 407개 중 80개 품목, 19.7%) 대부분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이들 양허제외 품목의 수입 비중은 인도로부터 들어오는 수산물 수입액의 약 82.9%에 해당한다.

인도 역시 대부분의 농림수산물을 낮은 수준으로 개방하였다. 전체 농산물 1,460개 품목(HS 8단위 기준) 중 식용 유지류 및 다른 나라들로부터 수입이 많은 캐슈넛, 완두콩 등 40.3%를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수산물에 대해서는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거나, 8년에 걸쳐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하였다.

한편, 위생 및 검역 분야는 WTO ‘동·식물 위생 검역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상의 회원국

의 권리 및 의무를 기초로 양국간 정보교환 등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하였다.

특혜관세 원산지와 관련하여 신선 농산물에 대해서는 ‘완전생산기준’을 적용, 제3국산 농산물의 우회수입을 차단하였고, 배타적 경제수역(EEZ) 및 공해에서 획득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기국주의’ 적용에 합의하였다.

(지역무역협정과 농업사무관 이덕민)

바. 한·GCC FTA 협상분야

GCC란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의 약자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으로 이루어진 중동지역의 경제협력을 위한 지역협력기구를 말한다.

GCC 국가들로부터의 원유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고, 성장하고 있는 이들 국가 내의 건설시장 진출과 여타 경쟁국에 의한 우리의 수출시장 잠식을 막기 위해 GCC와의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

2007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의 중동방문 시 한·GCC FTA의 추진 필요성에 양 측이 공감하였고 2007년 11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의 예비협약과 2008년 1월 한·GCC FTA 추진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거쳐 2008년 1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협상 출범을 공식 의결하게 되었다.

양 측은 가급적 2009년 말까지 협상을 타결한다는 원칙 하에 2008년 7월 협상 개시 후 '09년 12월 현재 3차례 본 협상과 1차례의 회기간 협상을 개최하였다. 또한, 협상은 상품, 서비스·투자, 원산지·통관, 정부조달, 규범 등 5개 분야로 진행되고 있으며 상품분과의 경우 1차 협상 후 양허안을 교환, 2차 협상부터 본격적인 양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협상 전반적으로 분과별 양측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 연도내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 간의 다른 국가들과의 FTA와 달리 GCC와의 FTA에서는 농업분야의

민감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 오히려 GCC와의 FTA는 이들 국가 내의 고소득층을 향해 우리 농식품의 수출확대를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무역협정과 주무관 이은경)

사. 한·호주 FTA 협상분야

한-호주 FTA는 '08년에 산관학 공동연구를 마무리하고, '09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09. 5월 이뤄진 1차 협상에서는 상품, SPS, 원산지 등 각 분야 별로 우리측이 제시한 협정문을 기초로 논의하였다.

'09. 8월 이뤄진 2차 협상에서는 양측이 상품 양허 초안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고, 3차 협상에서 양측 관심품목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호주측은 우리 양허안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하였으나, 우리측은 양측의 관세구조의 차이, 교역구조, 산업구조 등을 고려시 양국의 양허안이 동일할 수 없고, 향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원산지와 관련하여서는 호주는 연안국주의, 우리는 기국주의를 주장하여 입장차이를 보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 호주와의 FTA에서 우리는 전체 협상의 균형을 위하여 농업 협력 분야를 신설, 우리측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호주는 우리나라에 비하여 평균관세율이 낮아 관세철폐로 인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농산물에 치우친 교역구조로 인해 농업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 농림수산 분야에서 기술 및 인력 교류 등의 호주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한-호주 FTA가 우리 농림수산업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지역무역협정과 행정사무관 김성원)

아. 한·뉴질랜드 FTA 협상분야

2009년도 한·뉴질랜드 FTA 협상은 농업 강국인 뉴질랜드가 높은 수준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측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관세 및 교역 구조의 비대칭성에 따른 불균형 해소하는 한편, 농림수산분야 협력 분야에서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에 주력함으로써 우리측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2008년도에 예비협약 2차례와 2009년도 3차례('09. 12월 3차협상 예정)의 협상을 포함하여 모두 5차례의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뉴질랜드 측은 농수산 분야에서 한-미 수준의 양허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측은 민감 품목에 대한 보호 수준을 최대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농림수산분야의 협상 진행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한·뉴질랜드간 교역 구조상 낙농품과 쇠고기, 키위 등 소수 품목에 집중되어 있고 이에 대한 양국간 입장 차이가 커 쟁점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일부 분과(환경, 경쟁 등)의 경우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농수산분야와 관련된 상품, 원산지, 무역구제, SPS, 농림수산분야 협력 등에서는 상당한 의견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협상 추진이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무역협정과 해양수산사무관 김종모)

3. OECD 활동계획

2009년 농업위원회 및 산하작업반의 활동은 3개 작업분야(농정시장, 농업무역, 농업환경)에서 이루어졌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정시장 분야에서 ① 회원국 농업정책 점검·평가, ② 비회원국 검토와 정책평가, ③ 농식품 경제에 관한 종합보고서, ④ 농업정책이 농촌지역 복

지에 미치는 영향, ⑤ 효율적 식품·농업정책 방안, 농업무역 분야에서, ⑥ 농식품분야 비관세 조치 평가 ⑦ 지역주의와 농업시장에 미치는 영향 ⑧ 가공품 무역의 변화 형태 농업환경 분야에서 ⑨ 농업환경 이슈관련 정책조치 실적 평가, ⑩ 농업정책과 환경효과의 연계성 분석등 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회원국 농정평가는 2009년도 2월 제 48차 농정시장 작업반회의에서 일본의 농정개혁평가보고서가, 2009년 5월 EU의 농정개혁평가보고서가 채택 되었다. 특히 2009 농정시장 작업반에서는 PSE 구성분석, PSE품목 특정성 지표, PSE 계산의 대상(축산물, 신용양여)등을 논의하여 우리나라는 내년도 PSE계산부터 우리의 PSE 계산방식과 관련하여 쇠고기 MPS는 관세차를 통해 이를 측정하기로 함으로서, 그동안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던 우리나라의 PSE 수준을 낮추는 데 계기를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이 국제기구를 통해 인정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한국의 PSE 측정상 불합리한 부분을 더욱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금년도 농정시장 작업반에서는 바이오 에너지 접근정책과 시장등에 대하여 회원국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금년 10월 제 50차 농정시장 작업반에서는 바이오열, 바이오 전력, 그리고 바이오 가스등을 중심으로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 하였다. 농업무역합동 작업반에서는 금년 10월 제 62차회의에서 비관세장벽의 비용편익 사례로서 치즈, 새우, 절화등을 가지고 비관세 장벽에 대한 효과등을 논의하고 가공품무역의 변화하는 형태에 대해서 연구계획서를 발표하였다. 농업환경합동작업에서는 금년 7월과 12월 2차례 회원국간 회의를 가지고 기후변화와 농업, 온실가스 완화, 시장에서 탄소계산등 농업과 환경간 정책이슈를 가지고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2010년에 이 논의를 회원국의 의견과 논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도 152차 농업위원회는 금융과 경제위기에 대한 OECD의 전략적 대응이라는 세계적 이슈를 가지고 농업분야에서 논의를 하였으며 제 153차 농업위원회에서는 칠레와 이스라엘의 회원국 가입을 검토하여 칠레에 대하여 내년 1월부터 정식회원국으로 승인하였다. 특히 153차 농업위원회에서는 내년도 2월 농업각료회의 대하여 의제, 이슈보고서, 배경문서,

의전등에 대하여 참가국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 확정하여 각료회의에 대한 노력과 관심을 보여주었다. 1998년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OECD농업각료회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농식품정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30년까지 농업과 식품분야에 있어 OECD의 개혁 방향을 논의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OECD는 현재의 기후변화, 식량위기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여 세계농식품시스템이 예상되는 기회와 도전에 대응하여 회원국과 OECD의 역할을 집중 논의 할 것으로서 우리 정부도 이에 대응 의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다.

(국제협력총괄과 기술서기관 서은수)

4. FAO 활동

가. 개 요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모든 국민의 영양상태 및 생활수준의 향상, 식량(농산물)의 생산 및 분배능력 증진, 영양·식량·농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보급 및 국제활동의 촉진과 권고를 목적으로 1946년 12월 14일 UN 최초의 상설전문기구로 설립되었다.

기구 소재지는 이태리 로마로 2010년 현재 191개 회원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매 홀수년도에 각 회원국 각료급 대표가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한다. 49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이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8개 위원회로 구성되며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 국제미곡위원회 등 산하기구와 보조기구를 두고 있다. 사무국은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및 국제공무원으로 구성되며 2010년도 현재 3,8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FAO의 재정은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충당되는데 회원국 분담금 규모는 자국의 인구, 소득 등을 감안하여 UN이 결정한 UN 분담금 비율을 기준으로 총회에서 결정한다. 2009년도의 예산규모는 약 10억 달러 수준이며 2010년의 경우 약 11억달러에 이른다.

나. 주요 활동

FAO의 기본적인 기능은 필요시 식량 및 농산물의 생산, 분배 및 소비에 관하여 회원국에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고 권고하며, 적절한 기술협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FAO 사업은 FAO 회원국들의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규사업(Regular Programmes)과 UNDP, WFP, UNICEF, FFHC, 신탁기금 등 관련 국제기구나 각국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조성되는 재원을 바탕으로 실시하는 기타사업(Other Programmes)이 있다.

FAO는 창설 이래 농업, 수산, 임업 및 영양분야에서 유일한 국제정보센터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전 세계에 걸친 수백 가지 상품에 대한 생산, 소비 및 교역에 관한 통계를 수집하여 이를 연감과 통계자료로 발간하고 식품 수급표를 발간하여 세계 식량의 수급현황을 제시하는 동시에 세계의 영양사정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세계 식량 및 농업개발에 큰 기여를 해왔다.

FAO는 농업, 수산 및 임업용 기자재 목록의 간행과 심지어는 동식물 질병의 통보 등 식량, 수산, 임업 및 영양분야에 대한 광범위하고 유익한 각종 기술정보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어분으로부터 생사에 이르는 각종 상품에 대한 경제적 관측연구를 실시하여 왔다.

FAO는 이와 같은 정보자료의 제공에 만족치 않고 세계식량농업개발의 장기적인 전략과 방향을 제시한 방대한 장기계획 지침서로서 “세계식량농업개발계획지표(Indicative World Plan for Agricultural Development)”를 주기적으로 발간하였고 그 외에도 “2015년의 세계농업(Agriculture Toward 2015)”, “2030년의 세계농업(Agriculture Toward 2030)” 등 각종 중장기 농업예측전망자료를 발간하며, 또한 매10년마다 실시되는 “세계농업센서스(World Census of Agriculture)”를 주도하여 각 회원국들이 실시하는 방대한 조사사업에 대하여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기술적인 면에서 적극 지원하여 왔다.

최근 FAO는 효율적인 국제기구로 거듭나기 위하여 본부의 조직을 축소하고 지역사무소의 기능강화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혁안이 2005년 11월 제

33차 총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본부의 조직개편과 함께 기존의 지역사무소에 소지역사무소를 추가(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유럽, 남미)하고 아랍에미리트에 하부지역사무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각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는 농업·산림·수산분야의 바이오에너지 생산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다수의 회원국들이 바이오에너지개발에 따른 사회·경제·환경 및 식량안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논의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지구촌의 환경문제를 반영한 물 부족, 생물다양성, 농업·산림·수산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또한, 동 기구의 한정된 재원의 배분경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객관적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6~2007년 기간 중 독립외부평가(IEE)를 추진하여 동 기구 조직, 기능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개선안 도출 후 2007년 11월 제34차 총회에 “성장을 동반한 개혁”이라는 핵심적 결론과, 109개 권고사항과, 300여개의 구체적 조치계획을 보고하였으며 이의 이행을 위한 즉각 행동계획의 세부일정을 2008년도 특별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후 2009년 11월 제36차 총회와 세계식량안보정상회의에서 그간 추진된 독립외부평가의 성과(행정절차 간소화, 관리급 감축, 분권화 추진 등)를 제시하고, 향후 지속적인 개혁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우리나라와의 관계

우리나라는 1945년 11월 제5차 총회시 가입하여 활동 중이며 1966년 아태 지역총회를 개최하였고, 9회에 걸쳐 이사국으로 피선되어 FAO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제36차 총회에서 2009년 11월~2012년 12월까지 이사국 피선)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회원 분담금 규모는 약 11백만불 수준이고 191개 회원국 중 11위이다.

2009년 11월 18일~23일 기간 중에 약 190개 회원국, 관련국제기구, NGO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제36차 총회가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통상정책관을 수석대표로 동 회의에 참가하여 총회기조연설을 통해 빈곤퇴치와 식

량안보의 중요성, G8 정상회의 해결방안에 기초한 문제의 접근을 강조하였으며, 캐나다 수석대표와 면담을 통해 FAO 개혁에 대한 회원국간 컨센서를 마련하여 개혁에 대한 공동대응이 필요함을 상호 재확인하였다.

총회에 앞서 11월 16일~18일 개최된 세계 식량안보 정상회의에는 농식품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참가하여 기조연설과 FAO 사무총장, 호주농업부장관 등 각 회원국 수석대표와 양자면담을 실시하였다.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세계 식량문제는 G8라퀼라 정상회의 연장선 상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논의하자는 제안과 주곡자급문제를 해결한 한국의 경험을 전수할 용의가 있음을 언급하고, 지난 7월 G8라퀼라 정상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곡물가격 변동요인 국제 공동연구’를 재차 제안하였다.

사무총장과의 면담시 농식품부 장관은 한국인의 FAO 진출확대에 대한 의견교환과 함께 2010년 경주 개최예정인 제30차 아태 지역총회에 대한 사무총장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호주·뉴질랜드·칠레·노르웨이 농업부 장관과 실시한 양자면담에서는 각 농어업 통상현안을 조율하고 DDA 협상공조를 유도하였다.

금번 총회에서는 2010~2011 기간 FAO 예산 및 분담비율을 결정한 바, 2010~2011년 FAO 예산은 약 10억불(2년)로 결정하였다. 이는 FAO 개혁과제 수행을 위한 비용 증가(약 4천만불) 등이 예산증액의 주요원인으로, 전기 이월분(2.5백만불)과 기타수입을 제외 시 회원국의 순수 분담금은 993백만불이며 이는 전기(2008~2009) 대비 약 8.4% 증액된 규모이다.

분담금 비율은 UN 총회 분담비율 준용(우리나라 : 2.184%)하여 지난 기간과 변동이 없으며, 우리나라 분담금은 연간 약 10.8백만불(2009년 현재, 10백만불)이 된다.

우리나라는 금번 총회를 통해 '09.11월~'12.6월(2년 6개월) 임기의 이사국으로 피선되었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89년 이후 8회 연속 이사국으로 진출하였으며, 이사국 수행은 1965년~1967년 임기 포함 총 9회에 이르게 되었다.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항구국 조치 협정 또한 금번 총회에서 승인되어,

국제기구가 선정한 IUU(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목록에 등재된 선박과 기타 IUU에 가담한 선박이 입항할 경우 항구국은 입항 금지, 항구서비스(양륙, 환적, 연료 공급 등) 사용 거부, 검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FAO 헌장 및 규정의 개정에서는 사무총장의 최초 임기를 4년으로 조정(현행 6년)하고,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특별총회는 임기 종료일로부터 120일 전(현행 90일 전) 개최하기로 변경하였으며, 식량안보위원회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여 식량안보위원회의 사업·예산 검토결과를 FAO 총회와 UN 총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개정(현행, 이사회 심의를 거친 후 FAO 총회에 보고)하였다. 또한, 위원회를 WFP와 IFAD 등 관련 국제기구도 참가 가능토록하여 FAO와 UN 회원국으로 한정되었던 위원회 구성을 보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분담금 인센티브 분담금 납부를 촉진하기 위해 당년 3.31까지 완납한 경우 할인율 적용 인센티브 제도 도입하여, 달러화는 0.03%, 유로화는 0.43%의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정규 총회 개최시기를 매년 6월로 조정(차기 총회는 2011년 6월 25일~7월 2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사회 역할 강화를 위해 이사회 내 session을 현행 3개에서 5개로 늘리고, session 별 활동 기간을 현행 최소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여 업무의 신속을 기하는 한편, 이사회 소집 요구를 위한 최소 정족수는 현행 5개국에서 15개국으로 증가시켰다.

제34차 총회에서 채택된 독립외부평가(IEE) 보고서는 “성장을 동반한 개혁(Reform With Growth)”과 이를 위한 109개 권고사항과 300여개의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안한 바, FAO는 동 권고안 이행을 위해 2008년도 하반기에 특별총회를 개최하고 매 기간 FAO 개혁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한 바, 그 성과로 행정절차 간소화, 관리급 감축, 분권화 추진 등을 제시하고 향후 지속적인 개혁작업 수행을 약속했다.

(국제협력총괄과 주무관 전지수)

5. ASEAN+3 농림장관회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과 한·중·일 3개국 간 농업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 2001년부터 매년 하반기 「ASEAN+3 농림장관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 회의에 매년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농업발전 경험을 소개하고 대아세안 협력사업을 제안함으로써 역내 개발격차의 해소 및 통합에 기여하고 아국의 위상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협력사업들은 아세안 회원국들의 많은 환영을 받고 있으며, 아세안 회원국들은 한국의 협력활동이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지속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협력사업 제안 및 이행이 본격화된 것은 2003년부터였다. 2003년 8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3차 회의에는 허상만 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농업금융에 관한 워크숍’ 개최를 제안하였다.

2004년 10월 미얀마 양곤 개최된 제4차 회의에는 박해상 농림부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제2차 회의에서 ASEAN 회원국가를 대상으로 제안된 「미곡증산」과 「가축 인공수정」 연수생 초청사업의 2003년 추진상황을 설명하였으며, 제3차 회의에서 제안한 ‘농업금융에 관한 워크숍’의 개최계획을 설명하였다. 또한, 제4차 회의에서는 아세안 회원국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우리나라의 ‘벼농사 물관리 자동화 기법 및 농업용수관리 기술에 관한 연수과정’을 제안하였다.

2005년 필리핀 따가이파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농림장관회의에는 이명수 농림부 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기초연설을 통해 농업이 갖는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과 농업 비중이 높은 아시아 지역에서 농업·농촌 분야의 발전이 역내 빈곤경감, 기아감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하고 지난 4년 동안 아세안국가와 한·중·일 간의 농업협력 사업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 내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였고,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정체, 자연재해 및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등 많은 도전과제와 어려움에 있는 만큼 이러한 여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

하기 위해서는 국가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동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아세안 지하수개발 및 관리’, ‘아세안식량안보정보시스템 훈련과정’ 및 ‘아세안 식물검역 전문가 초청 연수’ 총 3개 협력사업을 제안하였다.

2006년에는 제5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에서 제안하였던 3개 협력사업을 시행하였다. 먼저 6월에는 한국 농촌공사는 ‘아세안 지하수개발 및 관리에 관한 훈련과정’을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주관하여 아세안 10개 회원국 중 7개국 13명이 참가하였다. 8월에는 농림부 통계기획담당관실에서 아세안 프로젝트인 ‘아세안 식량안보정보시스템(AFSIS)’의 우리나라 기여 활동의 일환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아세안식량안보정보시스템 훈련과정’을 KOICA와 함께 주관하여 2주 동안 약 20명의 참가자가 참석하였다. 그리고 9월에는 ‘아세안 식물검역 전문가 초청 연수’를 식물검역소와 함께 주관하여 10개국 19명의 참가자가 참석하여 2주 동안의 훈련과정을 마쳤다.

제6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는 2006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실시하였던 ‘아세안 지하수개발 및 관리’, ‘아세안식량안보정보시스템 훈련과정’, ‘아세안 식물검역전문가 초청 연수’를 2006년에도 이어 실시하고, 새롭게 ‘조류인플루엔자 진단기술 연수 및 진단키트 제공’, ‘서울국제농기계박람회 및 국제농기계학술대회 초청’ 사업을 제안하였다. 동 회의 직후 2006년 11월 하순 서울 삼성 KOEX에서 개최된 서울국제농기계박람회 및 국제농기계박람회에는 농기계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4개국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제6차 회의 시 우리나라의 제안에 따라, 2007년 실시한 4개 연수에 대한 아세안회원국의 참석은 매우 뜨거웠다. 2007년 5월 2주간 한국농촌공사에서 실시하였던 ‘아세안 지하수개발 및 관리’에는 7개국 13명이 참석하였고, 같은 달 1주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실시하였던 ‘조류인플루엔자 진단기술 연수’에는 9개국 19명이 참석하였다. ‘조류인플루엔자 진단기술 연수’는 당초 2006년 12월 중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2006년 겨울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병으로 일정을 늦추어 2007년 5월에 실시하였다. 연수 일정의 변경 등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의 관심과 연수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으며, 참석했던 9개국에는 우리나라 기술진이 개발한 ‘조류인플루엔자 신속진단키트’ 각 600여 개가 제공되었다. 2007년 6월 초 2주간 국립식물검역소에서 실시하였던 ‘제2차 아세안 식물검역전문가 초청 연수’에는 2006년과 마찬가지로 10개국 20명이 참석, 100% 참여율을 보였다. 8월 말 9월 초 10일간 실시하였던 ‘제3차 아세안식량안보정보시스템 훈련과정’에도 9개국 24명이 참석, 제1차 및 제2차 연수와 마찬가지로 높은 참석률을 보였고, 농업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등에 관한 유용한 훈련을 받았다.

제7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는 2007년 11월 2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5개 협력사업을 실시하기로 제안하고 2008년도에 추진하였다. 먼저 6월에 2주간 실시된 제3차 식물검역전문가 초청 연수사업에는 아세안 등 14개국 22명이 참가하였으며, 국립식물검역원에서 식물검역 검사방법 관련기술 등을 전수하였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10월에 3주간 실시한 제2차 가축전염병 방역기술연수사업에는 8개국 18명이 참가하였으며, 국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경험과 방역시스템에 관한 소개, AI 진단기술 전수 등을 통하여 아세안국가의 AI 방역기술 향상 및 질병근절에 기여하였다. 농촌진흥청에서 10월에 3주간 실시한 농촌개발과 기술보급훈련에는 8개국 16명이 참가하였으며, 우리의 지도사업 소개를 통한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지도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정보화지원팀 주관으로 11월에 2주간 실시한 제4차 농업통계 정보 분석 및 제공 훈련에는 9개국 19명이 참가하였으며, 실무자들의 정보화 및 자료 분석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였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 11월말 1주일간 실시한 농업부문 중소기업을 위한 수확 후 관리기술 지원사업에는 5개국 21명이 참가하였으며, 참가국의 농산물 유통산업 관련 종사자의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제8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는 2008.11.24.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5개 협력사업을 실시하기로 제안하였다. 추진실적

으로는, 먼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5월에 2주간 실시한 제3차 가축전염병 방역기술연수사업에는 7개국 12명이 참가하였으며, 국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경험과 가축방역대책 교육 등을 통하여 아세안국가의 AI 방역기술 향상 및 질병근절에 기여하였다. 6월에 2주간 실시된 제4차 식물검역 전문가 초청연수사업에는 아세안 등 13개국 20명이 참가하였으며, 국립식물검역원에서 목재포장재 관련 국제워크숍을 개최하고 식물검역 검사방법 관련기술 등을 전수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정보화지원팀 주관으로 8월에 2주간 실시한 제5차 농업통계 정보 분석 및 제공 훈련에는 8개국 18명이 참가하였으며, 아세안 각국의 통계현황 발표 및 토의 등을 통하여 실무자들의 능력을 높이도록 하였다. 농촌진흥청에서 10월에 2주간 실시한 제2차 농촌개발과 기술보급훈련에는 6개국 18명이 참가하였으며, 우리의 농촌지도 정책, 지도사업전략과 방법 등을 통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의 경제협력 연수사업 참가자들은 연수과정에 만족하면서 향후에도 계속되기를 희망하였다. '09.12월 현재, 한국식품연구원에서 '10.2월에 1주일간 실시예정인 제2차 농업부문 중소기업을 위한 수확 후 관리기술 지원사업에는 10개국 21명 참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참가자의 농산물 유통산업과 관련된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 국가간의 관계가 긴밀화 되어감에 따라 농업분야 협력도 앞으로 더욱 확대·강화될 전망이다. 향후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에서는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그간의 협력사업에 대하여 되돌아보고 상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농수산업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할 예정이다.

(국제협력총괄과 농업사무관 한철수)

6. 기타 농업관련 국제기구

가.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은

2009년 2월 18일~19일 기간 중 이태리소재 본부에서 165개 회원국, 관련 국제기구, NGO등이 참가한 가운데 제32차 총회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를 포함, 약46개국 대표들은 IFAD의 더 강화된 파트너쉽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IFAD의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지속적 개혁을 요청하였다.

우리나라는 통상협력관을 수석대표로 동 총회에 참가하여 IFAD의 효율성 제고와 기아, 빈곤 극복을 위해 노력한 현 총재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새로 선출된 후임 Nwanze 총재에게 리더쉽을 발휘해 주길 요청하였다. 또한 IFAD가 추구해온 농촌빈곤 퇴치와 기아근절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제8차 IFAD 기금조성 증액목표 수준에 맞추어 우리의 기여수준도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요지의 기조연설을 하였다.

제8차(2010-2012년) 기금조성에서는 제7차 기금조성 대비 증액 목표(12억불, 7차 대비 67% 증액) 수준에 합의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후임 총재로 1차 투표시 과반수 득표한 Kanayo F. Nwanze를 선출하였다.

2009-2011 이사국 선출에서는 우리나라를 교체이사국(2009)으로 선임하였고, 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의 가입을 승인하고 제7차 기금조성 상황보고, 제8차 기금조성협의 최종결과 보고, 2007 재무감사보고 등 9개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였다.

최근 소농이 직면한 위기 극복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원탁 토론 회의를 개최하여 ① 근래의 예측 불가능한 시장과 가격 변동에 대한 소농의 대처방안, ② 경지수요 증가에 대한 농민의 대처, ③ 급격한 기후와 환경변화에 대응한 연구와 혁신 필요성 등 3개 주제에 대해 패널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제29차 총회시 IFAD의 제7차(2007~2009) 기금조성에 3백만불의 납부서약을 바탕으로 2007년부터 연간 1백만불의 분담금을 기여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합의된 기금조성 증액목표를 반영하여 확대된 규모의 분담금을 납부할 계획이다.

나. 아프리카·아시아농촌개발기구(AARDO)

아프리카·아시아농촌개발기구(Afro-Asia Rural Development Organization)는 2007년 1월 8일~12일 기간 중 회원국에게 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의 빈곤타파를 위한 새로운 농촌개발정책수립과 농촌개발노력을 촉구하기 위하여 농촌개발 연찬회 및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농촌개발에 관한 뉴델리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그 골자는 빈곤타파를 위한 적절한 자원배분, 여성의 권익보호, 빈곤타파를 위한 공동협력활동 약속 등이며, 우리나라는 농촌개발 연찬회에 참가하여 “한국의 농촌개발전망 : 교훈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농촌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발전을 소개하고 1990년대 후반부터 가속되는 세계농업시장개방과 관련된 주요 정책들을 설명하였다.

2009년 11월 12~14일,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개최된 제59차 집행위원회에서는 Ms. S. Bahuguna 사무차장 임기를 1년 연장('10.12만료)하고, 제60차 집행위원회('10)를 오만에서 개최기로 결정하였다.

그 외 우리나라 관련사항으로는 제57차 집행위원회 권고사항인 극동지역 사무소의 “아·태농정포럼” 초청대상을 전회원국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언급하여 회원국들의 긍정적인 참여의사를 이끌어내었다.

한편, AARDO극동지역사무소(우리나라) 주관으로 6월 18일~7월 3일간 농진청에서 ‘지속가능한 농업개발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여 19개국 22명이 이에 참가하였으며, 9월 1일~9월 2일에는 제주대학교에서 제8차 아·태 농정포럼을 개최하여 13개 회원국이 이 포럼에 참석하였다.

(국제협력총괄과 주무관 전지수)

7. 양자 농업협력약정 체결

국제화시대에 농산물 교역·투자가 증가됨에 따라 우리 농업도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해외로 외연을 확대할 필요성이 점차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우리 농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농업분야 인력 및 기술 교류를

통해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대륙별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농업협력약정을 체결하여 해외 각국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기존 농업협력약정 체결국가로는 일본(1968년 한·일 각료회의 후속조치), 중국(1996), 이스라엘(1997), 몽골(2003), 브라질(2004), 알제리(2006) 등 6개국이 있으며 농업협력위원회 개최 및 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해 긴밀한 교류·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07년에는 뉴질랜드(2007년 4월 26일), 프랑스(2007년 11월 21일)와 농업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한-뉴질랜드 농업협력약정에 따라 제1차 한-뉴 농업협력위원회가 2008년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개최되었다. 동 협력위원회에서 양측은 양국의 농업정책 소개, 관심협력 분야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우리측은 우리농업의 취약성 및 개방화에 따른 어려운 여건을 설명하고 상호 보완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뉴측은 보조금 철폐 등을 통한 농업 개혁, 청정뉴질랜드 이미지제고를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동물복지 정책 등을 설명하였다. 양측은 농업협력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정보 교환, 업계간 상호방문 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제1차 한-뉴 농업협력위원회를 통해 상호간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상호보완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외에도 '08년에는 제2차 한-브라질 농업협력위원회, 제3차 한-몽골 농업협력위원회, 제41차 한-일 농업기술협력위원회가 각각 서울, 울란바트라, 도쿄에서 개최되어 상호간 관심사항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09년에는 '08년부터 시작된 자원부국 중앙아시아 국가인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4개국과 신규로 농업협력약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제2차 한-뉴 농업협력위원회, 제11차 한-중 농업협력위원회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양자협상협력과 기술서기관 최현호)

8. 남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협력 활성화

가. 북한의 식량수급 현황

북한농업은 생산체계의 비효율성, 에너지 및 비료, 농약, 종자, 비닐 등 필수농자재의 부족과 자연재해 등이 맞물려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어 오고 있다. 그동안 우리정부의 식량생산을 위한 지속적인 비료 지원과 민간단체의 농업지원으로 2000년 이후 식량 생산이 차츰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도 지속되고 있어 국가 수준의 식량 사정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연간 100만톤 이상의 식량을 외부로부터 조달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식량 소요량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연간 200만톤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북한의 식량생산이 증가한 것은 기상호조, 병해충 발생의 감소, 비료 등 농자재의 안정 공급, 수리시설 개선에 의한 농업용수의 안정 공급, 이모작 확대에 의한 곡물 재배면적의 증가에 기인하며 부분적으로는 생산주체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강화로 생산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국가수준의 식량안보는 호전되었으나 계층간에는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아직도 650만명은 긴급식량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2-28>

북한의 식량수급 현황

(단위: 천톤)

구분	1995/1996	1997/1998	1999/2000	2001/2002	2003/2004	2005/2006	2007/2008	2008/2009
국내생산량	3,451	3,489	4,222	3,946	4,252	4,540	4,010	4,310
최소소요량	5,145	5,206	5,261	5,307	5,388	5,496	5,203	5,504
부족량	1,694	1,717	1,039	1,361	1,136	956	1,193	1,194

주: 1) 국내생산량: 농촌진흥청 발표자료

2) 최소소요량: 식용은 1인 1일 평균 500g기준, 기타 소요량은 식용의 30% 기준

3) 인구규모: 통계청, 2008 북한의 주요통계지표(2007년 북한인구 추정치)

나. 남북 농업교류 및 지원현황

1) 정부차원의 지원현황

북한의 식량난 완화를 위하여 정부는 1995년 쌀 15만톤을 북한에 직접 지원하기 시작하여 1999년 비료 15.5만톤, 2000년 비료 30만톤 이외 차관 형식으로 쌀 30만톤과 옥수수 20만톤, 2001년 비료 20만톤, 2002년 비료 30만톤 이외 차관형식으로 쌀 40만톤, 2003년 비료 30만톤, 차관형식으로 쌀 40만톤을 지원하였다.

2004년 우리나라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30만톤의 비료를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하고 차관형식으로 쌀 40만톤을 제공하였다. 2005년에는 비료 35만톤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차관형식으로 쌀 50만톤을 지원하였다.

2006년에는 비료 35만톤을 2회(1차 15만톤, 2차 20만톤)에 걸쳐 무상으로 지원하고 2006년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정부는 당초 북한에 대한 쌀·비료 지원논의를 유보하기로 하였으나, 미사일 발사 문제와는 별개로 순수 인도적 차원에서 쌀 10만톤 등을 북한에 지원하였다.

2007년에는 비료 30만톤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차관형식으로 쌀 40만톤을 지원하였으나, 2008년에는 남북관계가 조정국면에 접어들면서 북한에 대한 쌀과 비료 지원실적이 없었다.

2) 민간차원의 지원현황

민간차원을 통해서는 1995년부터 2007년 말까지 북한에 총 6억 4,104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창구별 지원액 비중은 국제적십자사 0.8%, 대한적십자사 29.3%, 독자창구 69.9%로 독자창구의 비중이 가장 높다. 대북지원 초기 민간단체는 독자적인 지원창구를 갖지 못하고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원물품을 기탁하면 대한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연맹을 통하여 북한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에 따라 1999년 2월 10일부터 민간단체는 독자적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창구가 다양해졌다.

정부는 민간의 대북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에는 7개 단체(7개 사

업)에 대해 33.8억원의 기금을 지원받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37개 대북지원민간단체가 추진하는 40개 개별사업에 100.6억원을 지원하였고, 3개 이상의 민간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장기적인 개발지원성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인 합동사업에 2개 사업을 선정하여 1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면서 과급효과가 큰 개발지원성 사업 성격인 정책사업에 4개 사업을 선정하여 43.4억원을 지원하는 등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총 162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였다.

농업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에는 남북나눔, 통일농수산, 국제옥수수재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월드비전 등의 민간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은 대규모사업 추진에 한계를 나타내지만 민간차원의 지원이 점차 전문화·조직화되고 있으며 북한도 민간단체의 지원활동에 점차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정부차원의 지원과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한다면 남북한 화해협력의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3-2-29>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현황

기간	정 부 차 원		민 간 차 원		합 계
	1995	23,200만불	(1,854억원)	25만불	
	쌀 15만톤		담요 8천매		(1,856억원)
	직접 지원		국적 경유		
1996	305만불	(24억원)	155만불	(12억원)	460만불
	CSB, 분유, 기상자재		밀가루, 분유, 식용유		(36억원)
	UN기구 경유		국적 경유		
1997	2,667만불	(240억원)	2,056만불	(182억원)	4,723만불
	CSB, 옥수수, 분유, 보건의료 등		옥수수, 밀가루, 감자, 라면 등		(422억원)
	UN기구 경유		국적/남북적십자 경유		
1998	1,100만불	(154억원)	2,085만불	(275억원)	3,185만불
	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		밀가루, 옥수수, 비료, 한우, 비닐, 등		(429억원)
	UN기구 경유		남북적십자 경유		
1999	2,825만불	(339억원)	1,863만불	(223억원)	4,688만불
	비료 11.5만톤		밀가루, 옥수수, 약품, 비료 4만톤 등		(562억원)
	직접지원		한적 / 독자창구(2.10~)		
2000	8,139만불	(978억원)	3,238만불	(387억원)	11,377만불
	비료 30만톤		옥수수, 감귤, 의류, 설탕, 분유 등		(1,365억원)
	직접지원		한적 / 독자창구		
2001	7,522만불	(975억원)	6,017만불	(782억원)	13,539만불
	내의 150만벌, 옥수수 10만톤, 비료 20만톤, 말라리아 방역지원		옥수수, 감귤, 의류, 설탕, 분유 등		(1,757억원)
	직접지원/WFP/WHO경유		한적 / 독자창구		
2002	8,915만불	(1,140억원)	4,577만불	(576억원)	13,492만불
	옥수수10만톤, 비료30만톤, 말라리아방역		농기계, 의류, 의료장비, 씨감자 등		(1,716억원)
	직접지원/WFP/WHO경유		한적 / 독자창구		

기간	정 부 차 원		민 간 차 원		합 계
	단위	금액	단위	금액	
2003	9,377만불	(1,097억원)	6,386만불	(766억원)	15,763만불
	말라리아 방역지원, 취약계층 지원, 비료 30만톤, 옥수수 10만톤		동내의, 아동복, 밀가루, 항생제 등		(1,863억원)
	직접지원/WFP/UNICEF경유		한적/독자창구		
2004	11,541만불	(1,313억원)	13,250만불	(1,558억원)	24,791만불
	의약품, 긴급구호세트, 비료 30만톤 말라리아 방역지원, 옥수수 10만톤		농자재, 피복, 감귤, 의료설비 등		(2,871억원)
	직접지원/WFP/WHO경유		한적/독자창구		
2005	13,588만불	(1,360억원)	7,666만불(779억원)		21,254만불
	말라리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원, 비료 35만톤, 수해응급구호, 취약계층		밀가루, 의료설비, 농업용비닐 등		(2,139억원)
	직접지원/WHO/UNICEF경유		한적/독자창구		
2006	22,740만불	(2,273억원)	7,088만불(709억원)		29,828만불
	비료 35만톤, 수해복구 지원, 말라리아 방제약품, 영유아 지원		밀가루, 의류, 의료설비, 수해복구 등		(2,982억원)
	직접지원/WHO/UNICEF경유		한적/독자창구		
2007	20,893만불	(1,983억원)	9,568만불(909억원)		30,461만불
	비료30만톤, 성홍열, 구제역, 산림병충해 방제품, 수해복구 (의결액 기준, 정산중), 말라리아 방제약품, 영유아, 식량 지원		의류, 의료설비, 연탄, 농자재 수해복구 등		(2,892억원)
	직접지원/WHO/WFP/UNICEF경유		한적/독자창구		
2008	3,996만불	(438억원)	6,460만불(725억원)		10,456만불
	말라리아 방제품, 영유아 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기금지원		의류, 농자재, 연탄, 양묘장 자재 등		(1,163억원)
	직접지원/WHO/WFP/UNICEF경유		한적/독자창구		
합계	136,808만불	(14,168억원)	70,434만불	(7,885억원)	207,242만불 (22,053억원)

자료 : 통일부

※ 민간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지원액 : 정부차원 지원액에 포함.

다. 남북 농업협력 활성화 방안

북한의 농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적·물적 상호교류를 수반한 개발협력 방식으로 전환하여 북한 농업의 근본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07년 12월 14~15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남북농수산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성에서 개최하였다. 남북농수산분과위원회 1차회의에서 남북은 유전자원저장고 건설, 종자정선시설 지원협력, 농업과학 기술분야 협력, 동식물 검역체계 확립 등의 사업 추진에 합의하였으나, 2008년 이후 남북관계 조정국면이 지속됨에 따라 실질적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북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식량난을 완화하고, 북한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남북농업협력의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농업협력을 통해 전반적인 남북경협 활성화에 긍정적 여건을 조성하면서 상호이익의 경협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협력사업에는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사기업, 공기업, 정부 등 다양한 협력주체의 참여가 필요하고 실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농업협력의 형태를 상업적 협력, 농자재지원 및 기술교류, 농업복구 및 개발지원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이 중 민간부문은 다양성과 시범성이라는 장점을 지니며, 상업적 협력, 농자재 지원이나 기술교류 등 소규모의 협력은 가능하지만 농업복구나 개발을 담당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남북한의 농업개발협력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와 민간차원의 역할분담과 상호보완체계를 구축하여, 남북농업협력을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각 주체별 강점을 살려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관 이동홍)

9. 해외농업개발사업

가. 도입 배경 및 필요성

최근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곡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이 현안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해외로부터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 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요 곡물 자급률이 27.2%(쌀 98%, 밀·옥수수·콩 0.2%~7%, 2007년 기준) 수준으로 매년 1,400~1,500만톤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경지면적은 178만ha에 불과하여 유휴지 활용이나 생산성 증대만으로 필요한 식량을 자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구조적인 곡물 수입국이라 할 수 있다.

<표 3-2-30>

2007년 곡물 수급현황

(단위 : 만톤)

	공 급 량			수 요 량			재 고	
	생산	수입	이월	식용	사료	기타		
2,170 (1,594)	532 (64)	1,429 (1,395)	219 (145)	2,169 (1,594)	940 (519)	924 (924)	107 (23)	198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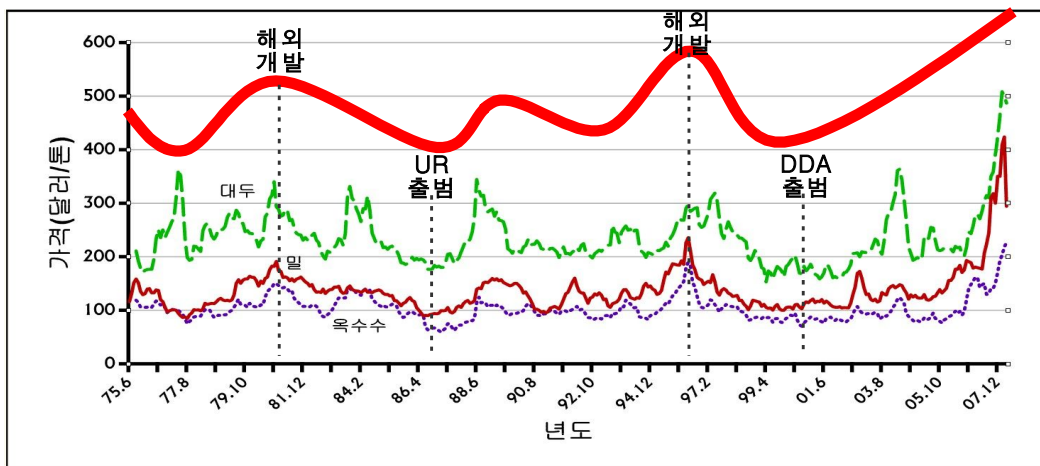
* () 쌀을 제외한 물량

국제 곡물가격은 10년 주기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곡물가격 상승 시 마다 해외농업개발 문제가 제기 되었다가 곧 이은 곡물가격 하락으로 흐지부지 되는 과정을 되풀이해 왔다. 2007년 이후 세계적인 곡물가격 상승은 바이오에너지 사용의 확대, 중국 등 개도국의 경제발전으로 인한 곡물 소비의 확대, 투기자본 등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최근 상승세가 다소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예전의 경우와는 달리 앞으로 상당기간 높은 수준의 가격이 지속 될 것으로 국제기구 등에서 전망하고 있다.

구조적인 식량 수입국가인 우리나라는 주기적인 곡물가 파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격등락에 따른 단기적 대응보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현재의 국제입찰에 의한 곡물확보 방식에서 탈피하여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보다 안정적인 곡물 공급망 확보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제 곡물가격 추이(1975~2007)>



나. 과거 사례분석 및 시사점

1) 정부주도 개발사례

정부는 1960년대 최초로 정부 주도 해외이민을 추진하였다. 1962년 해외이주법을 제정하고 남미농장 5개소를 개발하여 농업이민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970년대 이후에는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해외농업개발을 검토하였으나 곧 이은 곡물가격 하락으로 중단하는 것을 반복하였으며, 현재는 해외환경조사사업만 추진하며 그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2) 민간주도 개발사례

1980년대 이후 민간중심 해외농업개발이 시도되었고, 1990년대는 특히

연해주, 중국 등 지역으로 활발히 진출하였다. 현지 토지를 매매·임차하여 농장개발을 추진하였으나, 대규모 농업 경험부족, 생산물 유통망 확보 실패 등으로 대부분 철수하였거나 수익을 내지 못하고 비효율적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부 실수요자가 진출한 경우 판매망이 확보됨에 따라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일본의 개발사례

일본은 1960년대부터 종합상사 주도로 토지임차 등을 통해 직접 생산하는 방식으로 해외 농업개발을 추진하였다. 인도네시아, 미국, 호주, 태국, 브라질 등에 농장을 개설하였으나 생산성 및 수익성 저하로 대부분 실패하였다. 그 후 1980년대에는 직접개발보다 유통시설에 대한 적극적 투자로 전환하여 생산은 현지에 맡기고, 생산 이후의 구매·저장시설 등의 유통구조 지배를 모색하는 “Post Harvest”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1960~1970년대 일본 민간기업 해외 농장 건설 사례

- ▷ 1968년 종합상사 “미쓰이”: 인도네시아 농장 개설(옥수수, 수수 생산)
- ▷ 1971년 “이토츄”, 1973년 “미쓰비시”도 동일 지역 농장투자 실패
- ▷ 1970년대 중반 : “수미토미”상사 호주에 농장 설립 운영
“유니온 트레이드” 태국에 옥수수 농장 시작
- ▷ 1978년: 일본정부, 브라질에 CAP 농장 개설
“미쓰이” 호주 오드리버 지역에 수수 및 목축 시도 실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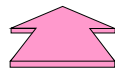
일본 민간기업 유통시설 확보사례

- ▷ 1988년 일본농협중앙회·이토츄가 CGB(Consolidate Grain & Barge)를 공동 인수
- ▷ 1980년 중반 들어서면서부터 일본의 종합상사(주로 미쓰비시, 미쓰이)는 미국 내 곡물저장시설(지방대도시 집산시장의 터미널 엘리베이터, 미시시피, 미주리, 일리노이 등 강변 엘리베이터)에 대한 투자 이루어짐

다. 주요 내용

기본방향

- 민간 주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추진
 - 정부는 기술·정보·교육·금융지원 등 측면지원
- 기업의 해외사업 여건조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 병행



세부추진과제

- 진출 유형별·지역별·품목별 전략 수립
- 지원 체계 구축 및 관련 시스템 정비
 - 민·관 합동의 협력체계 구축 : 해외농업개발협력단 설치
 - ODA사업, 농업협력사업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조
-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기술지원, 정보 교육 등 지원인프라 구축

1) 민간 주도 사업 추진

해외농업개발 후발 주자로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기존 업체들의 영향력이 다소 낮은 틈새를 파고들어 나름대로의 성공모델을 만들어내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선 검토대상 지역으로 지리적으로 가깝고, 기존 곡물메이저들의 영향이 비교적 적으며, 소규모이기는 하나 우리 기업들이 다수 진출하고 있는 틈새 지역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유통망 확보든 직접생산이든 앞서 시사점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철저한 상업적 판단에 따라 지역별 여건 분석 및 대상작물을 선택 한 후, 추진전략 및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유형별로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2)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 수립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09.6)에는 추진목표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조직의 구성, 관련 제도·법령의 정비, 기술·정보 제공, 전문가 양성, 국제협력 방안 등을 망라하는 세부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해외농업개발 추진 절차를 정하여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동 계획은 매년 추진 상황을 평가 분석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3) 진출업체 대한 지원정책 추진

외교부·농림부 등 관계부처, 농진청·농촌공사 등의 기술전문가, 학계, 민간의 해외진출 유경험자가 참여하는 “해외농업개발협력단(단장:제1차관)”을 구성('08.6)하였고, 민간의 해외농업개발 추진 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인력, 제도 및 외교적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 해외농업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초기 투자 리스크를 경감해 주는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09년 신규사업으로 예산 240억원(용자 210, 보조 30)을 확보하였고, 동 사업재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농지관리기금법을 개정('08.12)하였다.

4) 자원외교 강화, 틈새시장 개척

동남아, 몽골, 중앙아 등 자원부국이며 농업개발을 적극 희망하는 국가와 양자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자원개발과 연계한 패키지형태로 농업 진출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협력사업 참여자를 잠재적인 당해 국가 전문가로 육성하여 향후 우리기업 진출 시 전문가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 운영중인 농업협력위를 통해 브라질 등 곡물수출국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해외농업 개발 유망지역과의 신규 MOU(협력약정) 체결을 확대하는 등 우리 기업이 해당국에서 투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교적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5) 지원인프라 구축

2009년도에 해외농업 전문인력 양성교육(44명 대상)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 일본 등 곡물 메이저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개최, 교육 등 해외 연수 프로그램 마련을 하였으며, 해외농업개발 질속적노하우가 있는 전문가를 민간 교육 및 정책 수립 등에 자문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는 해외농업 개발 시 필요한 품종 개발, 재배 및 수확·저장·유통 기술 연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농업환경조사는 그동안 한국농어촌공사 주관 정책조사 위주에서, '09년에는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조사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면서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 부분을 실수요자에게 자부담 시킴으로써 책임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이 있었다. 향후에도 이러한 조사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조사를 보다 내실화하고, 그 조사결과는 D/B화하여 관심기업에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6) 농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우수한 원료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활성화하여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동북아 14억 시장을 겨냥한 식품산업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또한 원예, 축산, 바이오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기술 및 자본을 갖춘 우리 기업의 현지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등 농업관련 전후방 산업체의 현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우리 농산업도 일반 제조업과 같이 활발한 해외진출을 시도하여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업의 활로를 개척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진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제규범과 조화되는 해외농업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국격을 제고하고 국가간 상생하는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조래청, 주무관 김규)

제10절 농식품분야 미래성장동력 확충

1. 농식품부문 저탄소 녹색성장대책 추진

가. 기후변화가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서 가뭄·홍수·폭염·산불·산사태 등 기상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면서 농림어업에도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농작물 재배적지의 변화, 바다 사막화 및 어획량 감소, 동·식물 병충해 확산, 품질저하 및 수량감소 등 농어업 생산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매년 세계 GDP의 5~20%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스턴보고서, 2006).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유가의 변동에 민감한 구조이며, 농림어업의 에너지 소비도 대부분 석유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유가(油價) 불안시 생산비 상승 등 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농림어업의 에너지 소비는 3,256천TOE('06에너지소비통계, 에관공)로 국내 총 에너지소비(173,584천TOE)의 1.8% 수준이나, 탄소집약도(온실가스 배출량)는 2.457로 제조업·건설업(1.599) 보다 높다.

* 탄소집약도 : 에너지 1단위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우리나라 농업은 화학비료, 농약 다량투여 등 高환경 부하형태로 발전하여 왔으며, '90년대 이후 기후변화협약 대응차원에서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친환경 농산물('08 : 3.6%) 생산비중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체계 정비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난 2008년 8월 15일 대통령은 건국 60주년 기념사에서 「녹색성장」을 향후 60년간의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의 체계적이고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09.2.16)시켰다.

이에 맞춰 농림수산식품부도 지난 '09년 4. 30일 조직개편을 통해 국 단위의 「녹색성장정책관」을 신설하고, 녹색성장을 전담하는 녹색미래전략과를 신설하는 등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였다.

또한 농식품부 5명, 유관기관 5명,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농림수산식품분야 녹색성장대책협의회」 구성('08.12.3)하고, 총 3차례('09.1.8, 2.27, 10.16)에 걸쳐 농림식품분야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방향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다. 농림수산식품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

녹색성장대책협의회 및 농촌진흥청·산림청 등 활발한 협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농림수산식품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최종 확정('09.11.5)하였다.

<표 3-2-31>

농림수산식품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 비전체계도

비 전	국민행복과 국가번영을 선도하는 농림어업 · 농산어촌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2 배출량 : ('05) 1,470만톤CO2 → 국가 감축계획에 따라 설정 ▪ 바이오에너지 공급비율 : ('07) 6.6% → ('13) 8.8 → ('20) 15.7 ▪ 친환경농산물 비중 : ('07) 3.0% → ('13) 10.0 → ('20) 15.0 		
3대 전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투입 · 고효율 녹색 산업화 2. 자연자원의 지속가능 이용 · 관리 3. 국민건강 증진과 국격 제고 		
9대 추진과제	전략 1. ①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촉진 ② 녹색기술·장비 보급 확대 ③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전략 2. ④ 농산어촌 활력증진 ⑤ 탄소흡수 녹색공간 확대 ⑥ 고부가 생명산업 육성	전략 3. ⑦ 친환경 농산업 기반 육성 ⑧ 저탄소 국가 식품시스템 구축 ⑨ 녹색생활 실천 확산
실천과제	50개 실천 프로젝트		

자료 : 농림수산식품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 보고서, 2009

농림수산식품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은 크게 3대 전략과 9대 추진과제 및 50개 실천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바이오매스 타운 조성, 녹색기술개발, LED 집어등의 보급 확대하는 등 농림수산식품업을 저투입·고효율화 하는 것이고, 둘째 농산어촌을 녹색공간화하기 위해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등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농산어촌 지역에 신재생 에너지 주택보급을 추진하며, 마지막으로 저탄소형 푸드시스템 기술을 보급하고, 소비자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저탄소 국가 식품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이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감하고, 신재생 에너지 이용을 활성화하여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가적인 녹색성장 추진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농림수산업의 중요성과 가치를 재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녹색미래전략과 사무관 신우식)

2. 농림수산식품 분야 R&D 추진체계 개편

가. 현황 및 문제점

최근 10년간 농업분야 R&D 투자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00년 3,430억원→'09년 7,212억원)되었으나, 농림수산업의 GDP 성장율은 정체되고 있다. 농어업인, 관련업체 및 연구자들까지도 현재의 농림수산식품분야 R&D 투자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며 R&D 추진체계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표 3-2-32>

농림수산업 GDP 및 1인당 부가가치생산액 성장기여도(%)

기간별	GDP 성장율	1인당 부가가치생산액 성장기여도		
		연평균 성장율	자 본	기 술
'81 - '97	3.51	6.8	76.0	27.8
'98 - '07	1.37	5.5	93.4	6.3

(STEPI, '09)

가) 민간 R&D 투자 미흡

그간 농어업의 보호라는 명목으로 농업회사 비농업인 출자한도 제한 및 일부 축산업·어패류 양식에 대기업 참여금지 제도 등으로 농림어업 분야에는 대규모 산업체가 자리 잡기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산업체 주관 R&D 비율은 3.6%이며 이는 국가평균 16.8%보다 1/5수준으로 매우 취약한 수준이었다. 또한 농림어업 현장기술 성과물을 무상 보급하는 공공재로서의 인식도 민간 R&D 투자의 욕을 제한하는 이유로 작용하게 되었다.

나) 분산된 R&D 추진체계

농림수산식품분야 R&D는 농진청, 산림청, 농식품부 각 기관별로 개별 관련법에 근거하여 독립적으로 분산되어 추진되어 왔다. 기술수요조사, 과제 발굴·기획 등 R&D 투자방향과 중점 개발기술에 대한 조정·협의 없이 각 기관 개별적으로 추진되었고, 그 결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감사원, 국회 등에서 농림수산식품분야 R&D의 중복성 및 정책과의 연계성 미흡 등의 문제를 계속 지적하였다. 전략이 부재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은 곧 R&D 예산 확충에 큰 걸림돌이 되어 농림수산식품분야는 국가 R&D의 약 5.8%수준('09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

다) 수요자 중심의 R&D 기획 및 성과확산 미흡

정기·수시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기술분야별 전문 컨설팅 체계는 부족한 실정이며, 기술수요자들은 연구와 현장간의 연계성 확충을 지속 요청하고 있다. 연구성과의 농어업인 지도·보급체계는 구축되었으나, 산업체 대상의 기술이전체계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다.

라) 전문연구관리기구 부재

대부분의 부처는 ‘전문연구관리기구’를 설치하여, R&D 사업의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문기구는 R&D 기획의 Think -Tank 역할을 담당하여 대형 프로젝트 기획 등 국가차원의 연구이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의 전문연구관리기구의 부재는 기획역량부족으로 이어져 국가 R&D 중 농림수산식품 R&D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2-33>

부처별 전문연구관리기구

부 처	지경부	복지부	환경부	교과부
전문관리기구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등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한국연구재단

나. R&D 효율화를 위한 추진체계 개편

최근 10년간 주요 선진국에서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및 미래 산업육성을 위하여 과학기술혁신정책이 주요 국정아젠다로 부상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유럽의 경우 대규모 R&D 사업을 추진하고 최고수준의 정책위원회 설립 및 협력·조정기제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 농림수산식품산업을 지식기반형 일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09년에는 아래와 같이 R&D 추진체계 개편을 완수하였다.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

농림수산식품 R&D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을 '09년 4월 1일에 제정하였고,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여 '09년 10월 2일에 시행하였다. 동 법률 제정을 통해 R&D 총괄·조정기구, 연구관리전문기관 설립, 중장기 마스터플랜인 종합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 개편의 제도기반이 마련되었다.

2) 농림수산식품 R&D 정책의 총괄·조정 기구 설치

분산된 농림수산식품 R&D를 총괄·조정하여 R&D 정책의 Control-Tower 역할을 수행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09년 4월 15일에 설립하였다. 동 위원회는 2인의 공동위원장(정부: 농식품부 차관,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 3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농림수산식품 R&D 평가, 예산투자방향, 성과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며, 관련사안별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4개 분과위원회(정책기획, 녹색성장·신성장동력, 현장실용기술, 기반기술)를 두고 있다. '09년에는 회의를 3차례 개최하였으며, R&D 주요정책 및 제1차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을 심의하였다.

3)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수립

농진청, 산림청 등 각 기관별 분산 추진되는 R&D 중장기 계획을 아우르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5조에 근거하여 5개년 단위의 「제1차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을 '09년 12월 23일 수립하였다. 과학기술정책의 거버넌스 선진화, R&D 투자확대 효율화, 지방 R&D 활성화 및 7대 산업분야 기술개발 중점 추진전략 등을 설정하였다. 동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기관별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될 계획이다.

4) 전문연구관리기구 및 기술산업화 전문기구 설립

연구관리의 공정성·전문성 확보와 전문 R&D 기획·관리·평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09년 10월 2일 설립하였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8조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획·평가기관”을 경영비전으로 하여 R&D 사업기획 및 정책강화, R&D 사업관리의 효율화, R&D 사업 성과확산 강화 및 신뢰확보를 추진전략으로 삼고 있다.

또한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를 위하여 농촌진흥법을 근거로 한 「농업기술 실용화재단」도 '09년 9월 설립하여 R&D 기획 및 성과확산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다. R&D 추진체계 개편의 기대효과

상기의 R&D 추진체계 개편은 정부 재정투자의 공정성 및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와 기술혁신의 선순환으로 건전한 R&D 생태계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조기 극복하여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책과 사무관 송지숙)

3. 농림기술개발사업

가. 사업개요

지금은 지식·정보·기술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성장의 동력이 되는 지식기반 경제 시대이다. 개방화·세계화 시대에 우리 농업이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국제 경쟁력의 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1994년부터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애로기술 및 첨단기술개발 추진을 위해 ‘농림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1998년에는 수산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됨에 따라 ‘농림수산기술개발사업’에서 ‘농림기술개발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06년에는 국내외 환경 및 국가 R&D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산업화·실용화 위주의 기술개발 추진, 기술분류체계 개편 등 사업체계를 개편하였다.

2009년 현재 농림기술개발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첨단 융복합 기술, 농식품 수출증대, 식품 연구개발 분야 등에 중점적으로 R&D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2010년부터는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식품분야의 기초·원천 및 응용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고부가 식품개발사업’을 분리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표 3-2-34>

농림기술개발사업 유형

구 분	기획과제(지정공모형)	일반과제(자유응모형)
내 용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시급히 개발해야 할 기술과제 또는 기술수요가 많고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유망기술 등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사업내용 등을 지정하여 공모하는 과제	농림업관련 첨단기술, 부가가치 제고 기술 및 산업화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연구자가 자유로이 발굴하여 제안토록 공모하는 과제

나. 연구과제 관리현황

농림기술개발사업은 1994년부터 2008년까지 총 4,243과제에 6,537억원을 지원하였다. 이 중 기획과제는 172과제에 1,177억원, 일반과제는 4,071과제에 5,360억원이 지원되었다.

2009년도에는 계속추진과제 251과제에 491억원, 신규선정과제 214과제에 394억원 등 총 478과제에 885억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부터 13개 수출연구사업단에 11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표 3-2-35>

농림기술개발사업 과제관리 현황

(단위 : 과제, 억원)

구 분	1994 ~ 2008		2009			
	과제수	금 액	계속과제	금 액	신규과제	금 액
합 계	4,243	6,537	251	491	227	394
기획과제	172	1,177	65	315	21	102
일반과제	4,071	5,360	186	176	206	291

<표 3-2-36>

'09농림기술개발사업 과제지원 현황

(단위 : 과제, 억원)

구 분	계속지원		신규과제		합계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과제수	산
농림	190	411	169	319	359	730
식품	61	81	58	75	119	155

다. 기술수요조사를 통한 기획과제 발굴

농림기술개발사업은 농산업체, 생산자단체 등이 요구하는 현장수요기술, 산업화·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 등 수요자 중심과제 및 정책적 시급성이 높은 전략과제 발굴을 위해 매년 2회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9년 상반기 농림기술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는 2008년 11~

12월 실시하여 총 333개 과제가 접수되었고, 하반기 사업추진을 위한 기술 수요조사는 금년 7월,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는 금년 12월에 실시할 계획이다.

<표 3-2-37>

2009년 농림기술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 접수결과

구 분	과제수(개)	비 율(%)
저탄소 녹색성장	100	30.0
첨단 융복합 기술	53	16.0
식품 연구개발	99	29.7
농식품 수출증대	26	7.8
기 타	55	16.5
합 계	333	100

접수된 과제들은 정책부합성·과급효과, 시급성, 실효성, 현장수요기술 해결가능성, 수출촉진, 산업화·실용화 등을 기준으로 취합·분류하였으며 분야별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21개의 기획과제가 도출되었다.

라. 완료과제의 성과활용현황

2008년까지 농림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연구개발이 완료된 과제는 2,443개 과제이며, 이 중 307과제(12.6%)가 산업체 및 농가에 기술이전되어 활용되고 있다. 또한 정책활용에 371(15.2%), 기술교육 및 컨설팅에 605(24.8%), 지식기반조성(특허, 논문, 인력양성)에 1,036(42.4%), 타연구활용에 18(0.7%) 과제가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완료과제 대비 95.6%에 해당한다.

<표 3-2-38>

농림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성과활용현황

(단위 : 개)

구분	농산업 기술 사업화	정책 활용	기술교육/ 컨설팅	지식기반 조성	타연구 활용	성과 활용 추진중	성과 미활용	합계
과제수 (%)	307 (12.5)	371 (15.2)	605 (24.8)	1,036 (42.4)	18 (0.7)	31 (1.3)	75 (3.1)	2,443 (100)

(2008년 12월 31일 기준)

(과학기술정책과 사무관 서정아)

4. 농림바이오기술산업화지원사업 추진

농림바이오산업은 ‘농림업에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종육성, 기능성식품 개발, 신물질·소재 생산 등을 하는 산업’으로 바이오경제로 대변되는 21세기 세계경제의 핵심분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의 농림바이오 관련 R&D 지원 사업들은 기초·기반 및 실용화 연구역량 강화 위주로 편성되어 본격적인 산업화·제품화 연구를 지원이 미흡하였고, 이로 인해 완료된 연구 기술들이 후속연구개발 재원 부족으로 사업화단계에서 사멸되는 현상이 빈발하였다.

이에, 기존의 농림바이오분야 연구성과를 활용해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후속 산업화지원 사업으로 2008년부터 신규로 첨단 고부가 농림바이오산업 육성 및 대표제품 개발을 위한 ‘농림바이오기술산업화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08년 6월 연구팀이 선정(17개 연구사업단)되었으나, 2009년 6월 현재 한·미 FTA 비준 지연에 따라 2008년 예산은 불용되었고 2009년 예산은 미집행되어 사업추진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책과 사무관 서정아)

5. 신성장동력 “고부가 식품산업” 추진

가. 추진배경

급속한 세계화 추세와 함께 에너지·환경 문제, 기술혁신 가속화 등 경제발전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국가차원의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과 고부가·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이행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총리실 주관 범부처 차원에서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비전과 발전전략을 발표('09.5.26)하였다. 신성장동력은 ‘시장성’, ‘과급효과’, ‘녹색성장 연관성’을 기준 척도로 선정되었고, 우리부는 첨단융합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고부가 식품산업’ 추진을 담당하게 되었다.

<표 3-2-39>

3대 분야 17대 신성장동력 선정 결과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녹색기술산업 ¹⁾	(6)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첨단융합산업 ²⁾	(6)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³⁾	(5)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 1) 녹색기술산업 : 미래 성장의 바탕이 되고 기후변화·자원위기에 대한 해결능력이 큰 분야
- 2) 첨단융합산업 : 세계시장규모가 크고 우리나라의 기술역량이 높아, 융합을 통해 기존 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
- 3) 고부가서비스산업 :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크고, 기존 서비스업에 경제적 측면을 보장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

나. 세부 추진전략

전 세계적인 고급화, 웰빙·건강, 안전성 중시 등 식품선택 기준의 변화로 유기식품, 기능성식품 등 고부가 식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고부가 식품산업’은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세계일류 식품산업」이라는 비전하에 세부과제로 1) 기술을 접목시킨 차별화된 고부가 전략품목을 개발하고, 2) 식품산업을 선도할 핵심 인프라 조성하며 3) 대내외 수요 창출을 유도를 추진한다.

1) 고부가 전략품목 개발

세계 식품시장의 틈새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미래 유망식품 개발에 필요한 원천·응용기술개발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미래 유망식품·식품소재’, ‘BT·NT 등 신기술 융합’, ‘식품 안전성’과 관련 기술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10년부터는 식품분야에 대해 효율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을 농림기술개발사업 분리하여 추진하며, 「신성장동력 기술로드맵」과 「식품산업 R&D 중장기계획」에 따라 세부기술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세계 5대 건강식품의 대부분이 발효식품인 만큼 우리의 전통·발효식품도 산업인프라 확충을 통해 발효기술을 응용한 다양한 고부가 식품을 생산 및 수출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성분·효능 등에서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산 천일염의 세계 명품화를 위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친환경적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산 천일염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홍보하며, 다양한 가공용 소금, 기능성 소금 개발 및 수출상품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 식품산업 발전을 선도할 핵심 인프라 조성

동북아 식품시장 선점을 위해 식품기업·연구소·대학 등이 집적된 약 400ha 규모의 국가 식품클러스터를 ‘12년까지 전북 익산에 조성한다. 주요

추진전략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R&D 중심지로서 식품 전문 국가 산업 단지 조성, 국가 식품클러스터와 지역 식품클러스터와의 연계 강화이다.

또한, 발효제어, 저장연장 등 김치 관련 핵심기술 및 신개념 김치 개발, 세계 절임류와의 연계 등의 역량을 갖추고 김치 세계화 및 김치산업의 육성·발전을 선도할 세계 김치연구소를 광주에 건립할 계획이다.

건강·웰빙을 지향하는 소비트렌드에 부합하여 유기가공식품의 세계 시장규모가 급성장함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생산기반 확충 및 유기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3) 대내외 수요 창출 확대

한식은 한류열풍에 따른 세계인의 관심 고조와 함께 건강식으로서의 영양학적 우수성, 다양한 식재료와 조리법 등의 특성으로 인해 세계화 가능성이 높은 음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식세계화는 세계인이 즐기는 우리 한식이라는 비전하에 한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국내외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민·관 공동 한식세계화 재단을 구축하고 상품화 품목·메뉴개발 등의 연구개발을 강화하며 조리사 등의 인력 양성 및 식문화 홍보를 병행 추진한다.

(식품산업정책과 농업사무관 강효주)

6. 농어업분야 민간투자 기반 확충

가. 정부차원의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그동안 농업분야는 정부 지원 방식에 치우친 나머지, 외부 민간 자본의 유입에 한계가 있어 왔다. 45조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 119조원 농촌투융자 계획 등으로 대변되는 정부재정투융자는 일면 농업구조개선에 기여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재정 투자의 비효율성, 수혜자들의 도덕적 해이, 민간 투자의 위축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부 자본이 순환적으로 투입되어야 하고 이는 농업도 예외는 아니다. 더욱이 산업이 보다 국제 경쟁력을 가지려면 규모화 되어야 하는데, 이를 재정자금으로만 커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외 민간자본이 농식품산업에 유입될 수 있는 대상 분야와 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그에 따른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

농식품 분야에서 민간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사업으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간척지를 활용한 대규모 농어업회사 설립, 수출전문 첨단 유리온실단지사업, 시군유통회사 등이 있으며, 농업생산 기반 정비·지역향토산업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기존 사업 및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해 왔다.

농식품산업에 민간 투자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다. 첫째, 민간의 다양한 자본이 영농에 투자될 수 있도록 현행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지분(현75%)을 완화(90%)하고, 농산물 유통·가공 관련 사업에 유통·식품업체의 출자를 유도하는 등 농업의 진입규제 완화에 노력해왔다. 둘째, 농어업분야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확대, 농축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범위 상향 조정 등 투자촉진 및 농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하였다. 셋째, 물적담보 없이 시설자금지원이 불가능한 현행 방식을 개편, 사업타당성에 근거한 무담보 신용대출 사업을 추진하였다. 넷째, 농어업 전반에 자본 유입 촉진, 성장잠재력이 높은 농어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농식품 모태펀드 조성을 추진하였다. 이 외에도 ‘농업분야 노동관계법 적용 매뉴얼’ 제작, 농업분야 외국인력 고용제도 개선 등 많은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추가 과제의 발굴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4.29일 코엑스에서 국경위와 공동으로 농식품 투자로드쇼를 최초로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금융투자업계 종사자와 농식품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활성화 관련 정책 방향 소개와 유망 농식품 기업의 투자유치 설명회로 진행되었으며, 미래의 매력적인 녹색성장 투자 대상으로 농식품 산업

이 부각되고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11월에는(11.5~7) 한국거래소 주관 IR EXPO 행사에 농식품관(Green Agri관)을 녹색성장관에 설치,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농업 및 관련산업이 녹색성장의 중심축임을 인식시키고 관련 정책 포럼 등을 시행하였다. 향후에도 농식품 분야의 투자활성화 붐 조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농업정책과 사무관 정경석)

나.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추진

FTA 체결 가속화, WTO 보조금·관세 감축 등 시장의 개방 확대로 농어업분야도 무한경쟁시대를 맞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농가당 경지면적은 1.45ha로 농업선진국인 네덜란드의 1/16 수준이고 근로자 50인 이상은 전체 농업법인의 0.5%로 개방화에 대응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규모화된 농업경영체의 성장은 미흡한 상태이다.⁶⁾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규모화된 농업경영체 육성을 통한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08년 국가소유 대규모 간척지를 활용한 대규모 농어업 육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정과제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가족농 근간인 기존 농정의 틀을 유지하면서 민간의 농어업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통해 개방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수출지향형 농어업회사 설립하고 농어업을 2·3차 산업화 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 재정 투융자에 대한 의존이 민간 자본 투자를 밀어내는 부작용(crowding-out effect)이 있었던 만큼 정부는 대규모의 간척지 장기임대(30年)조건으로 민간 투자를 유치, 최소한의 인프라만 지원하고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 판단을 통해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정부는 사업추진을 위해 농어촌공사에 실무추진단인 기업농육성팀을 조

6) 농업법인의 87%가 자산규모 10억 미만의 소규모 경영

직('08.4)하고 학계, 관련 단체로 구성된 자문·의결 기구인 대규모 농어업 회사 육성추진위원회 구성·운영('08.9)하여 토론회 개최, 지역주민 공청회 등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영산강 산이 2-1공구(713ha), 새만금 광활면(700ha) 2개 지역을 사업대상지로 하는 내용으로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사업」 세부계획을 확정('08.12)했다.

'08년 12월 영산강, 새만금 2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공고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대상자를 공모하였다. 공모결과 총 32개업체(새만금지구 20개, 영산강지구은 12개)가 사업공모를 신청하였다

'09.4월 학계,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지구당 10명)이 수출활성화 방안 등 5개 항목에 대해 서면 및 프리젠테이션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새만금 지구 3개업체, 영산강 지구 4개업체)와 예비후보(새만금지구 2개업체, 영산강 1개업체)를 선정하였다⁷⁾ 선정된 업체는 수출지향형 시설원예, 친환경 축산, 첨단기술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각 업체별 사업신청 규모는 100~700ha였다.

사업자 선정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 사업계획서를 보완('09.4~7)하고 대규모농어업회사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임대료, 사업품목, 기반시설 지원범위 등 협상기준을 마련('09.7)하였다. 특히 사업품목은 수입품목, 수입대체 품목으로 한정하여 수출활성화 및 식량자급률 제고, 내수 시장의 교란 최소화 등의 효과를 도모했다.

'09.10월 영산강 지구 700ha에 대한 사업자 3개업체(한빛들, 장수채, 삼호용양영농조합)을 선정하였다.⁸⁾새만금 지구는 '09년 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10년도에는 '09년 지구별 잔여면적 및 새로운 간척지를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기존 선정 사업자의 사업추진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그 동안 민간투자

7) 평가항목 : 사업계획, 사업성분석, 운영관리계획, 수출활성화 방안, 지역활성화 방안

8) 영산강지구 사업자 사업면적 및 품목 : 한빛들(190ha, 파프리카 등 시설원예), 장수채(140ha, 땅콩나물·새싹채소), 삼호용양영농조합(180ha, 친환경축산, 청보리, 무화과)

새만금지구 우선협상대상자 : 농산무역, 동부컨소시엄, 초록마을

의 사각 지대였던 농어업분야가 새로운 민간 투자 모멘텀이 형성되고 농식품의 수출활성화 등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정책과 사무관 정경석)

제11절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추진

1.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출범 배경

농어업과 농어촌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DDA/FTA 등으로 대외개방이 확대되면서 농수산물 무역장벽도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 교역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시장이 이제 무한경쟁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오는 2015년경에는 동시 다발적인 FTA 체결 등에 따라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농어업은 1995년 WTO체제 출범이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몇 가지 주요지표로 확인이 가능하다. 예컨대, 농어업 생산액은 2000년 이후 정체되고 있으며, 국내 총생산에서 농어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2.5%까지 줄어들었다. 국토면적의 90%를 차지하는 농어촌에는 전체 국민의 18.5%만이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농어업계와 정부는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을 선진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농어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을 위해 민·관이 뜻을 모은 것이다. 농어업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농어업계, 학계, 소비자 대표 및 정부관계자 등 68명의 위원으로 '농어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09년 3월 23일 공식적으로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2. 위원회 구성·운영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간 대표가 공동위원장인 농어업선진화 위원회는 총 6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각계 각층에서 위촉된 68명의 위원중 농어업인 및 단체의 참여비중을 최대한으로 높였다. 농어업 정책에서 농어업인의 의견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전 논의 기구로 5개 분과위원회와 기획위원회도 구성하였다. 분과위원회는 상정안건별 특성을 고려하여 ① 미래성장동력, ②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 ③ 경쟁력강화, ④ 거버넌스 선진화, ⑤ 수산선진화반으로 전문화하여 구성·운영하였다.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분과위원회에서 선진화 과제를 우선 논의하고 의결한다. 이후 기획위원회에서 사전 검토와 조정과정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하는 단계를 거침으로써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3. 위원회 활동성과 및 향후 계획

우리나라 농어업의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잠재력과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인프라 개선으로 선도 농어가의 생산성은 세계 일류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가공까지 효율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경영체가 출현, 일부 품목은 가격과 품질 경쟁력이 확보되면서 수출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 농어업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서는 그동안의 농어업 정책 추진체계와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였다. 위원회가 논의를 통해 도출한 농어업 선진화의 기본적인 정책목표와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개방 확대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어가의 경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소득안정장치를 확충한다. 둘째, 농어촌의 주거, 의료, 보육과 교육 등 기초서비

스를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인다.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농어촌을 활력 있는 공간으로 바꾼다. 셋째,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농어업을 새로운 미래 성장산업으로 키우고, 녹색성장시대에 부응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기반을 마련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정책 방향에 맞게 52개 과제를 논의하였으며, 2009년 7월 27일 다음과 같은 추진계획에 합의하였다.

가. 농어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현재 9개의 직접지불제를 「공익형 직접지불제」와 「경영안정형 직접지불제」로 체계화, 단순화한다. 직접지불제가 시장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한다. 고령농의 소득보전과 전업농의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경영이양지불제를 활성화하고, 농지담보 노후연금제도를 도입한다.

나.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올해 말까지 도입하여 교통, 주거, 교육 등 생활과 밀접한 8개 분야의 공공서비스 목표를 설정한다. 영세농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한다.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농어촌 특례를 농어촌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다.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의 체질강화를 위해 농어업 보조금을 개편한다. 농어업 보조금 총액은 현 수준을 유지한다. 보조금은 공공성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제규범에 저촉되는 보조금은 개선해 나간다. 농어업 체질강화를 위한 보조금과 소득·복지지원을 위한 보조금은 구분하여 상호 효과를 높여 나간다.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분야의 보조금은 확대하고, 정기적으로 보조금의 성과를 평가하여 효율성이 낮거나 정책목표가 달성된 보조금은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기업적 형태로 성장한 경영체에 대해 “보조금 졸업제”를 도입한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을 통폐합하고 보조율을 단순화한다.

라. 농어업을 미래 녹색성장의 기반산업으로 육성한다. 화학비료, 농약, 양식생사료 등의 과다사용으로 토양 및 수질오염이 심각한 우리의 흙·

물·바다를 살리고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지원체계를 바꾸어 나간다. 가축분뇨는 고품질 퇴·액비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성과 품질평가 기준을 설정한다. 목재 펠릿은 농산촌 난방, 시설원예 등의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산림자원의 에너지 활용도를 높인다.

마. 주요 품목별로 선진국과의 경쟁력 격차를 점검하고, 생산에서 소비까지 단계별 비용발생 요인과 부가가치 창출요인을 분석하여 비용은 최소화하고, 부가가치는 극대화해 나간다. 품목별 대표조직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수급조절, 마케팅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주축이 되어 쌀 수탁비율을 확대하는 등 쌀산업 구조를 개편한다.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관리를 강화한다. 종자·종축산업을 미래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바.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고려하는 국가 식품시스템의 관점에서 식량안보와 식품안전 목표를 설정한다. 국내 생산여건과 세계시장의 수급동향 등을 고려하여 주요 품목별로 식량자급율 목표치를 설정·관리한다. 농식품의 위생안전은 「농·어장에서 식탁까지」, 「국경에서 가정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한다. 농식품의 위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식품 위험평가에 대한 기술개발 등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한다.

사. 어업인의 자율을 바탕으로 강한 수산업을 육성한다. 연근해 어업은 구조조정 촉진으로 자원량 대비 최적의 어획능력을 유지한다. 양식 어업은 외해 진출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전환한다. 원양어업은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이 융·복합된 해외식량자원산업으로 육성한다. LED 집어등, 유류절감장치 등 저탄소 녹색 어업기술을 확대·보급하고 수산과 해양환경의 통합 시너지를 강화하여 수산업의 외연을 확대한다.

아. 농정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농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농어업인 단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반영하고, 책임있는 정책파트너로서 정책수립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농정협의체 설립 방안을 계속 논의한다.

자. 쌀 관세화 조기이행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농어업선진화위원회 내에

쌀특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제 쌀 가격 동향, 국내 쌀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한다. 농어업인과 소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한다.

차. 위원회는 그동안 진행과정에서 구축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 농어업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개선, 농어업 금융체계 개편, 부채 농어의 경영회생 방안, R&D 효율화 등 주요과제를 계속 논의한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간다.

정부는 2009년 하반기 2단계 선진화위원회를 출범하였다. 1단계 선진화 위원회에서 논의가 완료되지 않은 12개 과제를 확정하고, 농어업·농어촌 비전 2020 계획을 마련하였다.

4.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출범 의의

농어업선진화위원회의 출범은 농어업인단체가 중심이 되어 농어업 정책 추진 방향과 개선 과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94년 농업발전특별위원회가 학계 등 소수 농업전문가 중심이었다면, 이번 위원회는 생산자가 주체가 되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취합하고 반영하여 대통합 이론, 정부 중심에서 벗어난 자율농정·자율어정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동안 농어업계가 꺼려왔던 쌀 관세화 문제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통해 농어업·농어촌의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였다. 동시에 공론화되지 못했던 과제들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미래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향후 우리 농어업 발전의 초석을 놓았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제 4 편

수산분야 동향과 시책

- 제 1 장 2008년도 수산업 동향
- 제 2 장 2008년도 수산시책 추진실적
- 제 3 장 2009년도 수산시책

제1장 2008년도 수산업 동향

제 1 절 세계 수산업 동향

1. 수산물 생산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의 2007년 수산통계에 의하면 세계 수산물 총 생산량은 156,372천 톤으로, 2006년도의 152,261천 톤보다 4,111천 톤(2.7%)이 증가하였다.

나라별로 보면 중국이 전년보다 3.5% 증가한 56,161천 톤을 생산, 전년에 이어 수산물 생산량 1위를 차지하였고, 인도네시아(Indonesia)는 전년보다 10.3% 증가한 8,064천 톤을 생산하여 2위, 인도(India)는 전년보다 4.2% 증가한 7,308천 톤을 생산하여 3위를 차지하였으며, 뒤이어 페루, 일본, 미국, 칠레, 필리핀, 베트남, 태국의 순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전년의 3,068천 톤보다 207천 톤(6.7%)이 증가한 3,275천 톤을 생산, 세계 수산물 총 생산량의 2.1%를 차지하여 작년에 이어 세계 13위에 머물렀다.

세계 양식생산량은 65,190천 톤으로 세계 수산물생산의 41.7%를 차지하였고, 이중 중국이 41,173천 톤을 생산하여 세계 양식생산량의 63.2%를 점하고 있다. 연간 4백만 톤 이상 생산되는 양식어종은 다시마(Japanese kelp)와 참굴(Pacific cupped oyster)로서, 다시마의 2007년 생산량은 4,613천 톤으로 세계 양식생산량의 7.1%를 차지했다.

(국제기구과 사무관 김기환)

〈표 4-1-1〉

주요 수산물 생산국 현황

(단위 : 천톤, %)

순위	국 가	'04	'05	'06	'07	'07/'06
1	중 국	50,728	52,466	54,265	56,161	103.5
2	인도네시아	6,131	6,841	7,308	8,064	110.3
3	인 도	6,190	6,658	7,014	7,308	104.2
4	페 루	9,634	9,419	7,049	7,261	103.0
5	일 본	5,692	5,750	5,684	5,596	98.5
6	미 국	5,602	5,474	5,377	5,296	98.5
7	칠 레	6,002	5,452	5,303	4,996	94.2
8	필 리 핀	3,931	4,168	4,414	4,717	106.9
9	베 트 남	3,108	3,397	3,664	4,316	117.8
10	태 국	4,100	4,119	4,106	3,859	94.0
:	:					
13	대 한 민 국	2,537	2,714	3,068	3,275	106.7
세계 총 생산량		148,102	151,149	152,261	156,372	102.7
비율	한국 / 세계	1.7%	1.8%	2.0%	2.1%	

자료 : FAO, Fishstat Plus(Total Fishery Production 1950-2007)

2. 수산물 교역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하면 2007년 세계 수산물 수출액은 94,064백만 \$로 2006년도 수출액 86,573백만 \$에 비해 8.7%가 증가하였다. 나라별 수출추이는 중국이 전년에 비하여 3.3% 증가한 9,451백만 \$로 1위, 노르웨이가 6,290백만 \$로 2위, 태국이 5,722백만 \$로 3위이며, 우리나라는 전년도 1,051백만 \$ 보다 12.8%가 증가한 1,186백만 \$로서 25위에 머물렀다.

(국제기구과 사무관 김기환)

<표 4-1-2>

세계 수산물 수출추이

(단위 : 백만 \$, %)

순 위	국 가	'05	'06	'07	'07 / '06
1	중 국	7,674	9,150	9,451	103.3
2	노 르 웨 이	4,922	5,544	6,290	113.5
3	태 국	4,053	5,275	5,722	108.5
4	미 국	4,287	4,190	4,499	107.4
5	덴 마 크	3,695	3,999	4,145	103.7
6	베 트 남	2,765	3,380	3,790	112.1
7	칠 레	3,043	3,639	3,770	103.6
8	캐 나 다	3,615	3,683	3,732	101.3
9	네 델 란 드	2,837	2,827	3,300	116.7
10	스 페 인	2,603	2,872	3,258	113.4
11	러 시 아	1,960	2,129	2,374	111.5
12	독 일	1,518	1,844	2,295	124.5
13	영 국	1,890	1,960	2,190	111.7
14	인도네시아	1,846	2,020	2,171	107.5
15	아이슬란드	1,794	1,823	2,035	111.6
16	페 루	1,636	1,773	1,967	110.9
17	프 랑 스	1,601	1,692	1,953	115.4
18	스 웨 덴	1,221	1,604	1,722	107.4
19	일 본	1,291	1,457	1,704	117.0
20	인 도	1,598	1,769	1,679	94.9
:	:	:	:	:	:
25	대 한 민 국	1,154	1,051	1,186	112.8
총 수출량		79,072	86,573	94,064	108.7
비율	한 국 / 세 계	1.5%	1.2%	1.3%	

자료 : FAO, Fishstat Plus(Commodities Production and Trade 1976-2007)

주 : 수산물 수출순위 21~24위 : 대만(21위), 모로코(22위), 유카도르(23위), 벨기에(24위)

한편, 세계의 수산물 수입액은 99,423백만 \$로서 전년에 비하여 9%가 증가하였다. 나라별로는 미국이 13,756백만 \$로 전년 대비 2.7% 증가하여 1위, 일본이 13,440백만 \$로 2위, 스페인이 7,005백만 \$로 3위를 각각 차지하였다. 우리나라는 전년의 2,791백만 \$에서 2007년에는 3,125백만 \$로 12% 증가하여 세계 9위를 차지하였다.

〈표 4-1-3〉

세계 수산물 수입추이

(단위 : 백만 \$, %)

순 위	국 가	'05	'06	'07	'07 / '06
1	미 국	12,090	13,400	13,756	102.7
2	일 본	14,729	14,259	13,440	94.3
3	스 페 인	5,649	6,378	7,005	109.8
4	프 랑 스	4,604	5,109	5,415	106.0
5	이 탈 리 아	4,250	4,746	5,174	109.0
6	중 국	4,031	4,189	4,587	109.5
7	독 일	3,263	3,779	4,324	114.4
8	영 국	3,209	3,752	4,184	111.5
9	대한민국	2,382	2,768	3,125	112.0
10	덴 마 크	2,627	2,939	3,028	103.0
11	네 델 란 드	2,093	2,297	2,629	114.5
12	스 웨 드	1,600	2,030	2,534	124.8
총 수입량		82,859	91,231	99,423	109.0
비율	한국/세계	2.9%	3.1%	3.1%	

자료 : FAO, Fishstat Plus(Commodities Production and Trade 1976-2007)

(국제기구과 사무관 김기환)

제2절 우리나라 수산업 동향

1. 어업 구조

가. 어가인구

2008년 말 현재 전국의 어가는 71,046호로 2007년도의 73,934호 보다 2,888호 (3.9%)가 감소하였으며, 어가인구 역시 192,341명으로 2007년도의 201,512명 보다 9,171명(4.6%)이 감소하였다.

〈표 4-1-4〉

어가호수와 어가인구

(단위 : 호, 명, %)

구 분	'04	'05	'06	'07	'08	'08/'07
어 가 호 수	72,513	79,942	77,001	73,934	71,046	96.1
어 가 인 구	209,855	221,132	211,610	201,512	192,341	95.4
· 여 성 인 구 (구 성 비)	104,493 (49.8)	110,474 (50.0)	105,270 (49.7)	100,527 (49.9)	96,485 (50.2)	-
호당평균어가인구	2.89	2.77	2.75	2.73	2.71	99.3

자료 : 통계청, 2008 어업기본통계조사(p)

어업종사자는 2007년도에 비해 3.7% 감소된 118,879명으로서 성별로는 남자가 63,037명(53.0%), 여자가 55,843명(47.0%)이며, 어업에 종사한 가구원 중 연령별 분포를 보면 60대 이상이 40.2%, 50대가 32.4%, 40대가 19.9%로 어업에 종사하는 연령이 고령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4-1-5〉

어업종사자 성별·연령별 구성

(단위 : 명, %)

구 분		'04	'05	'06	'07	'08	'08/'07
총 사 자		122,384	130,589	128,048	122,916	118,879	96.7
성 별	남 자	66,380 (54.2)	70,307 (53.8)	68,244 (53.3)	65,520 (53.3)	63,037 (53.0)	96.2 -
	여 자	56,004 (45.8)	60,282 (46.2)	59,803 (46.7)	57,396 (46.7)	55,843 (47.0)	97.3 -
연 령 별	30세 미만	3,313 (2.7)	2,456 (1.9)	3,044 (2.4)	2,407 (2.0)	1,964 (1.7)	81.6 -
	30~39세	10,490 (8.6)	9,684 (7.4)	8,396 (6.6)	7,698 (6.3)	7,010 (5.9)	91.1 -
	40~49세	32,097 (26.2)	31,067 (23.8)	29,250 (22.8)	26,543 (21.6)	23,630 (19.9)	89.2 -
	50~59세	37,171 (30.4)	40,084 (30.7)	40,580 (31.7)	38,877 (31.6)	38,506 (32.4)	99.0 -
	60세 이상	39,312 (32.1)	47,298 (36.2)	46,778 (36.5)	47,393 (38.5)	47,769 (40.2)	100.8 -

자료 : 통계청, 2008 어업기본통계조사(p)

주 : ()내는 구성비임

<표 4-1-6>

전업·겸업별 어업가구

(단위 : 호, %)

구 분	'04	'05	'06	'07	'08	'08/'07
합 계	72,513	79,942	77,001	73,934	71,046	96.1
전 업	23,580 (32.5)	25,342 (31.7)	23,932 (31.1)	22,407 (30.3)	20,938 (29.5)	93.4 -
겸 업	48,933 (67.5)	54,600 (68.3)	53,068 (68.9)	51,527 (69.7)	50,062 (70.5)	97.2 -

자료 : 통계청, 2008 어업기본통계조사(p)

주 : ()내는 구성비임

<표 4-1-7>

어업형태별 어업가구

(단위 : 호, %)

구 분	'04	'05	'06	'07	'08	'08/'07
총어업가구	72,513	79,942	77,001	73,934	71,046	96.1
· 어선사용가구	37,748 (52.1)	36,733 (46.0)	36,088 (46.9)	34,691 (46.9)	32,481 (45.7)	93.6 -
· 어선비사용가구	14,069 (19.4)	19,134 (23.9)	16,924 (22.0)	15,896 (21.5)	16,464 (23.2)	103.6 -
· 양식어업가구	20,696 (28.5)	24,075 (30.1)	23,989 (31.2)	23,356 (31.6)	22,101 (31.1)	94.6 -

자료 : 통계청, 2008 어업기본통계조사(p)

주 : ()내는 구성비임

(수산정책과 사무관 전성래)

나. 어업 총생산

2008년도 어업 총 생산량은 3,363천톤으로 전년 3,275천톤 대비 2.7% 증가하였으며, 어업 총 생산액도 10.5% 증가한 6조 3,550억원으로 나타났다. 어업별 생산량 및 생산액은 <표 4-1-8>과 같다.

한편, 2008년도 어업생산액 6조 3,550억원 중 중간 투입재를 제외한 부가가치는 2조 1740억원으로 이는 국내총생산(GDP) 1,023조 9,380억원의 0.21%, 국내총부가가치(GVA) 920조 3,310억원의 0.24%를 차지하고 있다.

<표 4-1-8>

어업생산 현황

(단위 : 천톤, 억원)

구 분	'07		'08		증 감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합 계	3,275	57,519	3,363	63,550	106	6,031
연 근 해	1,152	29,391	1,286	32,297	134	2,906
양 식	1,386	15,995	1,382	15,225	△4	△770
내 수 면	27	2,231	29	2,753	2	522
원 양	710	9,901	666	13,274	△44	3,373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생산통계

<표 4-1-9>

어업총생산(부가가치) 현황

(단위 : 10억원, %)

구 분	'07	'08(P)	증 감 륜
국내총생산(GDP)	975,013	1,023,938	5.0
국내총부가가치(GVA)	874,782	920,331	5.2
○ 농 립 어 업	25,209	23,441	△9.1
- 어 업	2,097	2,174	3.7
· GDP 구성비	0.21	0.21	-
· GVA 구성비	0.23	0.24	-

자료 : 한국은행

(수산정책과 사무관 전성래)

다. 어선등록 현황

2008년 말 어선등록 현황은 80,766척에 621,337톤으로 2007년 말에 비하여 척수는 4,861척(5.6%)이 감소하였고, 톤수도 42,532톤(6.4%)이 감소하였다. 전체 어선중 동력어선은 78,280척으로 97%, 톤수는 619,098톤으로 9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업별 척수는 연근해어선이 70.8%, 양식어선이 21.1%, 내수면어선이 5.0%, 원양어선이 0.6%, 기타가 2.5%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표 4-1-10〉

어선등록 현황

(단위 : 척, 톤, %)

구 분		'06	'07	'08	'08 / '07
합 계	척 수	86,113	85,627	80,766	94.3
	· 동력	83,358	82,796	78,280	94.5
	· 무동력	2,755	2,831	2,486	87.8
	톤 수	673,719	663,869	621,337	93.6
연 근 해	· 동력	671,299	661,519	619,098	93.6
	· 무동력	2,420	2,350	2,239	95.3
	척 수	63,518	63,100	57,177	90.6
양 식	톤 수	312,580	308,512	280,708	91.0
	척 수	16,337	16,352	17,104	104.5
내 수 면	톤 수	23,955	25,226	28,270	112.0
	척 수	4,150	4,000	4,040	101.0
원 양	톤 수	3,558	3,354	3,728	111.1
	척 수	483	470	448	95.3
기 타	톤 수	258,422	249,952	242,666	97.1
	척 수	1,625	1,705	1,997	117.1
기 타	톤 수	75,204	76,825	65,965	85.8
	척 수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선질별로는 합성수지선(FRP선)이 전체 어선척수의 79.3%, 목선이 18.0%, 강선이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톤수에 있어서는 합성수지선(FRP선)이 31.6%, 목선이 4.8%, 강선이 63.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톤급별로 보면 5톤 미만 어선은 전체 척수의 87.4%로서 전체 톤수의 18.9%를 차지하고 있고, 5톤 이상 50톤 미만 어선은 척수와 톤수가 각각 10.5%, 16.5%를 차지하고 있으며, 50톤 이상의 대형어선은 척수와 톤수가 각각 2.1%, 64.5%를 차지하고 있다.

<표 4-1-11>

선질별 어선등록 현황

(단위 : 척, 톤, %)

구 분		'06	'07	'08	'08/ '07
합 계	척 수	86,113	85,627	80,766	94.3
	톤 수	673,719	663,869	621,337	93.6
목 선	척 수	18,954	17,981	14,565	81.0
	톤 수	40,313	36,606	29,867	81.6
강 선	척 수	2,344	2,392	2,123	88.7
	톤 수	432,664	426,248	394,698	92.6
합성수지선 (FRP선)	척 수	64,815	65,254	64,078	98.2
	톤 수	200,742	201,015	196,772	97.9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표 4-1-12>

톤급별 어선등록 현황

(단위 : 척, 톤, %)

구 분	'06		'07		'08		'08/ '07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합 계	86,113	673,719	85,627	663,869	80,766	621,337	94.3	93.6
1톤 미만	29,753	19,390	28,839	18,873	27,118	17,874	94.0	94.7
1~5톤 미만	44,892	104,709	45,790	105,618	43,484	99,972	94.9	94.6
5~50톤 미만	9,586	114,916	9,141	110,924	8,461	102,865	92.5	92.7
50~100톤 미만	1,012	75,147	991	73,630	900	65,838	90.8	89.4
100~200톤 미만	341	49,914	341	49,848	311	45,347	91.2	91.0
200톤 이상	529	309,643	525	304,976	492	289,441	93.7	94.9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어업정책과 사무관 권용철)

라. 이용어장

1) 연근해어장

수산업법상 우리나라 연근해 어장의 해역범위는 동해·서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 이북, 동경 140도선 이서의 태평양 해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수역을 제외한 수역은 해외어장으로서 원양어선이 조업하는 어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1960년대에 제주도 인근 수역에서 ‘소코트라어장’으로, 1970년대 이후에는 서해, 동중국해 및 동해의 ‘대화퇴 어장’까지 조업어장이 확대되어 왔으며, 이들 어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 발효로 한·중·일 3국이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 EEZ, 이하 EEZ라 함)을 선포함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은 “21세기 신해양질서”에 맞는 새로운 어업 질서의 재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은 1996년 5월 이후 17차에 걸쳐 어업협정 개정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1998년 11월 28일자로 새로운 「한·일 어업협정」에 서명하였고, 다음 해인 1999년 1월 22일 협정을 발효시킴에 따라 양국은 매년 EEZ 어업체제에 의한 상호입어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연근해 수역으로 진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속한 양국간 어업협정 체결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우리 정부의 끈질긴 노력으로 중국정부와 협상한 결과, 2000년 8월 3일 「한·중 어업협정」에 서명하였고, 이어 상호 입어조건에 대한 교섭을 거쳐 2001년 6월30일 동 협정을 정식 발효시키게 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중국어선의 우리 EEZ내 조업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양국은 매년 EEZ 어업체제에 의한 상호입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울러 2005년 6월 30일부터 양국의 과도수역이 각각 EEZ로 편입되어 우리의 배타적 어업수역이 확대되었다.

한편, 중·일간의 어업협정에 있어서도 1997년 11월 11일 서명 이후 담보 상태에 머물다가, 2000년 6월 1일 발효함에 따라, 한·중·일 3국의 주변수역은 완전히 EEZ 어업체제로 전환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연근해어장도 한·중·일 3국의 어업협정 체제에 의한 EEZ와 중간수역, 잠정조치수역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2) 원양어장

원양어업은 1957년 인도양에 참치시험조업 진출을 시발로 1970년대 초반까지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2차에 걸친 석유파동과 1977년부터 미국·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연안국들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함으로써 우리나라 원양어장은 급격히 축소됨은 물론, 연안국의 조업규제 강화로 원양어업은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1988년 미국수역에서 북양트롤어선이 철수하고 1993년 북태평양에서 오징어유자망조업이 중지되었고, 1999년 11월 30일부터 일본 북해도수역에서 조업하던 트롤어선이 전면 철수하였으며, 「유엔 해양법협약」 발효와 1995년 8월 「유엔 공해어족보존협정」의 채택으로 공해조업도 해역 단위별로 공해 자원에 대한 규제강화 및 다국 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지역수산물관리기구가 2008년말 현재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WCPFC) 등 12개가 설립되었고, 남태평양수산물관리기구(SPRFMO) 등 2개가 설립준비 중에 있는 등 공해 수산자원관리가 강화되고 있어 원양어업의 여건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원양정책과 서기관 박성우)

3) 양식어장

가) 해면양식

2008년 말 현재 해면 양식어장 면허면적은 약 13.6만ha이며, 육상수조식 및 축제식양식 등 허가어업은 1.7천ha이다. 이중 어촌계(수협)가 전체 면허어장의 82%인 약 11만2천ha를 소유·경영하고 있다.

〈표 4-1-13〉

품목별·연도별 양식어장 면허면적

(단위 : ha, %)

구 분	'04	'05	'06	'07	'08	'08/'07
합 계	123,169	124,668	130,890	132,416	136,083	103
어 류	2,002 (1.6)	1,822 (1.5)	1,986 (1.5)	1,962 (1.5)	1,988 (1.5)	101
패 류	47,087 (38.2)	48,194 (38.7)	49,550 (37.9)	49,261 (37.2)	49,169 (36.1)	100
해 조 류	69,348 (56.3)	69,502 (55.7)	74,757 (57.1)	76,183 (57.5)	79,504 (58.4)	104
기 타 수산동물	4,732 (3.9)	5,150 (4.1)	4,597 (3.5)	5,010 (3.8)	5,422 (4.0)	108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주 : ()는 구성비임

우리나라의 해면 양식어장 개발은 1960년대에 김, 미역 등 해조류 중심의 양식에서 1970년대에는 굴, 피조개 등 패류양식어업으로 발전되었고, 1980년대부터는 넙치, 방어, 돔 등 어류와 진주조개 등 고소득 어·패류양식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 양식되고 있는 품종은 넙치, 참돔, 조피볼락, 굴, 홍합, 고막, 전복, 김, 미역, 톳, 우렁쟁이, 새우, 해삼 등 약 50여 종이며, 매년 새로운 품종의 적극적인 개발로 양식품종도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표 4-1-14>

종류별·연도별 양식어업 허가면적

(단위 : ha, %)

구 분	'04	'05	'06	'07	'08	'08/'07
합 계	2,162	2,017	1,971	1,735	1,641	94.6
수조식양식 (어류·패류 등)	379 (17.5)	299 (14.8)	268 (13.6)	276 (15.9)	271 (16.5)	98.2
축제식양식 (어류·새우 등)	1,783 (82.5)	1,718 (85.2)	1,703 (86.4)	1,459 (84.1)	1,370 (83.5)	93.9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주 : ()는 구성비임

나) 내수면양식

우리나라 내수면 수면적은 5,751km²로서, 전 국토 99,678km²의 5.8%에 해당되며, 수면별로 보면 강·하천이 2,824km²(2.83%), 댐·호(湖)가 1,131km²(1.13%), 수로가 1,782km²(1.79%), 양식장 14km²(0.01%)로 구성되어 있다.*

내수면양식장은 2,396개소가 개발되었으며 뱀장어·미꾸라지·송어 등 약 25종을 생산하여 국민단백질 공급은 물론 어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국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여가생활 및 정서 함양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 지적통계연보(2008, 행정안전부)

〈표 4-1-15〉

2008년도 내수면 양식장 현황*

(단위 : m²)

구분	합 계		뱀장어		송어류		메기류		기 타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계	2,396	7,675,040	512	2,215,411	224	520,697	309	1,330,360	1,351	3,908,572
서울	-	-	-	-	-	-	-	-	-	-
부산	49	132,568	1	4,950	-	-	2	5,720	46	121,898
대구	4	20,753	-	-	-	-	1	9,000	3	11,753
인천	32	140,777	7	9,740	-	-	10	23,327	15	107,710
광주	3	2,371	-	-	-	-	-	-	3	2,371
대전	2	2,279	-	-	1	682	-	-	1	1,597
울산	11	42,062	1	9,800	-	-	-	-	10	32,262
경기	251	348,347	27	70,825	12	59,103	60	162,608	152	355,811
강원	140	339,666	4	3,944	90	276,744	3	7,108	43	51,870
충북	174	425,012	4	5,795	38	54,891	28	136,436	104	227,890
충남	232	936,950	22	99,875	11	18,298	58	191,692	141	627,085
전북	759	2,596,849	148	592,245	18	40,297	106	587,724	487	1,376,583
전남	443	1,848,994	275	1,302,749	-	-	22	82,906	146	463,339
경북	129	313,132	1	4,686	49	66,572	12	75,929	67	165,945
경남	160	478,982	19	66,900	5	4,110	7	47,910	129	360,062
제주	7	46,298	3	43,902	-	-	-	-	4	2,396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어업정책과 서기관 김태기, 사무관 이세오, 양식산업과 사무관 임남철, 서기관 김동욱)

* 2008년 12월말 신고된 양식장 현황으로 지적통계연보(2008)와 차이가 있음

마. 어업 경영체

1) 연안어업

2008년말 현재 연안어업 경영체 수는 총 178,219개로서 2007년도의 150,365개보다 27,854개가 증가하였다. 이를 어업별로 보면 먼허어업이 3,437개로 47개 증가하고, 신고어업은 전년대비 33,211개가 대폭 증가하면서 100,984개가 되었다. 이는 '07년 12월에 서해에서 유류사고가 발생하면서 피해보상 입증 등과 관련하여 충남지역 28,579개, 전남 3,647개, 인천 578개 등 서해지역에서 신고어업이 급격히 증가한데 원인이 있다.

그러나, 먼허어업이 3,437개로 47개 감소하였으며, 연안허가어업은 어선 감척사업으로 연안자망, 연안복합어업, 연안통발어업 등 전 업종이 감소하여 총 73,798개로 되었다. 연안어업은 대부분이 가족단위로 운영하는 등 소규모 어업으로 겸업이 대부분이며, 1980년대 이후부터 임해공단시설 및 도시의 확장 등에 따른 공장폐수와 도시하수 등의 유입 그리고 대형선박 또는 유조선 등 사고에 의한 유류피해와 서해안 중심의 대단위 매립·간척사업으로 어장축소 등 어장환경이 날로 악화되어 어업자원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

또한, WTO체제 출범과 FTA체결 가속화로 인한 수산물 수입이 증가 경향에 있어 연안어업의 경영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어업정책과 서기관 김태기)

〈표 4-1-16〉

연안어업 경영체 추이

(단위 : 개, %)

구 분	'03	'04	'05	'06	'07	'08	'08/'07	
합 계	151,565	148,232	153,570	150,111	150,365	178,219	118.5	
허 가	소 계	91,466	89,760	88,394	83,334	79,202	73,798	93.2
	연안자망	25,473	25,034	24,825	23,320	22,151	20,629	93.1
	연안복합어 업	43,422	42,263	41,703	39,374	37,161	34,507	92.9
	연 안 통 발	10,344	10,248	10,161	9,436	9,088	8,559	94.2
	구 획 어 업	8,242	8,292	7,876	7,611	7,446	7,138	95.9
	기 타 어 업	3,985	3,923	3,829	3,593	3,356	2,965	88.3
면 허	소 계	3,095	2,926	3,279	3,279	3,390	3,437	101.4
	마 을 어 업	2,539	2,447	2,726	2,726	2,835	2,897	102.2
	정 치 망 어 업	556	479	553	553	555	540	97.3
신 고	소 계	57,004	55,546	61,897	63,498	67,773	100,984	149.0
	맨손어업	51,535	49,954	56,348	57,561	61,631	94,768	153.8
	나잠어업	5,374	5,506	5,507	5,900	6,090	6,144	100.9
	투망어업	95	86	42	37	52	72	138.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2) 근해어업

근해어업 경영체는 2008년도에 3,957개로서, 전년도 4,056개보다 2.5%가 감소(99개)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근해어업이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조정 측면에서 업종별로 허가정수가 설정되어 1992년 9월부터 새로운 허가의 전면 억제, 2003년 및 2007년 근해어업의 전체 업종에 대한 허가정수 재조정, 연 근해어업 구조조정 등에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업종별 경영체를 보면, 근해선망·근해채낚기·근해자망·근해안강망·근해통발·근해형망·근해연승 등은 감소하였고, 대형기저·기선선인망·근해봉수망은 소폭 증가하였다.

(어업정책과 사무관 이세오)

<표 4-1-17>

근해어업 경영체 추이

(단위 : 건, %)

구 분	'05	'06	'07	'08	'08 / '07
합 계	4,360	4,246	4,056	3,957	97.5
대 형 기 저	93	91	83	92	110.8
중 형 기 저	100	96	94	94	-
근 해 트 롤	98	97	99	99	-
근 해 선 망	85	84	82	79	96.3
근해채낚기	1,002	985	915	896	97.9
기선선인망	85	83	79	80	101.2
근 해 자 망	922	912	873	838	95.9
근해안강망	271	274	262	259	98.8
잠 수 기	237	236	236	235	-
근 해 통 발	437	421	401	389	97.0
근 해 형 망	143	136	138	129	93.4
근 해 연 승	809	753	743	709	95.4
근해봉수망	78	78	51	58	113.7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3) 양식어업

2008년 말 양식어업 면허건수는 9,555건이며, 품종별로는 굴 1,211(12.7%), 김 960(10%), 피조개 848(8.9%), 새고막 862(9%), 바지락 606건, 어류 553건, 미역 451건, 우렁챙이·복합양식 기타 4,064건이다.

그리고 허가어업인 해상종묘생산어업이 867건, 육상양식어업 1,624건(육상수조식양식 1,276건, 축제식양식 348건), 육상종묘생산어업 1,273건으로 허가어업의 경우 총 3,764건이다.

〈표 4-1-18〉

양식 면허어업 경영체 추이

(단위 : 개소, %)

구 분	'04	'05	'06	'07	'08	'08/'07
합 계	9,046	9,110	9,297	9,352	9,555	102.2
김	1,159	944	971	948	960	101.3
굴	1,211	1,215	1,186	1,182	1,211	102.5
피 조 개	852	862	868	857	848	98.9
새 고 막	895	876	845	850	862	101.4
바 지 락	607	631	614	633	606	95.7
미 역	547	499	495	455	451	99.1
어 류	596	570	574	560	553	98.8
우 령 쉹 이	488	473	503	494	506	102.4
기 타	2,691	3,040	3,241	3,373	3,558	105.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품종별 경영형태를 보면 어류 및 기타 수산물양식은 개인과 협업경영체

가 주로 경영하고 있으며, 해조류양식은 어촌계의 경영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김, 미역 등 해조류양식의 경우, 양식기술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 자본 또한 적게 들기 때문에 어촌계 위주의 소득원으로 개발되어 저소득 어업인들이 주로 경영하고 있는 반면, 어류와 전복·진주조개·우렁챙이·새우·가리비 양식 등은 많은 자본과 양식기술이 요구되므로 개발능력이 있는 자가 주로 경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4-1-19〉

소유자별·연도별 양식어장 면허면적

(단위 : ha)

구 분	'04	'05	'06	'07	'08	'08/'07
합 계	123,169	124,668	130,890	131,439	136,083	103.5
어촌계 및 수협	98,169	100,208	106,649	108,242	111,800	103.3
개인 및 협업	25,000	24,460	24,241	23,197	24,283	104.7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양식산업과 서기관 김동욱, 서기관 임남철)

4) 내수면어업

2008년 말 내수면 양식어업 경영체 수는 2,396개소로 전년 보다 75개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값싼 수입수산물의 수입증가와 경영비 상승 등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로 자본력과 기술력이 취약한 소규모 양식업체는 감소하는 대신 첨단시설을 갖춘 규모화된 양식장 위주로 경영체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것으로 시료된다.

〈표 4-1-20〉

2008년도 내수면 양식어업 경영체 추이

(단위 : 개, %)

양식어종	'04	'05	'06	'07	'08	'08/'07
합 계	2,923	2,786	2,649	2,471	2,396	97.0
잉 어	317	320	343	229	277	121.0
향 어	140	105	86	74	66	89.2
뱀장어	417	457	480	468	512	109.4
송 어	296	268	250	246	224	91.1
기 타	1,753	1,636	1,490	1,454	1,317	90.6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자연환경과 서기관 김동욱)

5) 원양어업

2008년도 원양어업 경영체는 2007년도 110개사 보다 4개사가 감소한 106개사이며, 업체별 규모를 살펴보면 1~2척의 원양어선을 보유한 업체가 71개사로서, 전체의 67%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원양업체 경영규모가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8년도 현재 원양어선은 전년도 387척보다 7척이 감소한 380척이었으며, 업종별로는 참치선 187척, 오징어선 49척, 트롤선 120척, 기타 24척이었다.

우리나라 원양업체 및 어선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들의 조업규제 강화와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인상 등 어업여건의 악화로 경쟁력이 약화됨으로써 경영체의 부도 등이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표 4-1-21〉

원양업체 경영규모 추이

(단위 : 개사, %)

구 분	'05	'06	'07	'08	'08/'07
합 계	112	109	110	106	96.4%
1척	53	51	52	46	88.5
2척	21	20	22	25	113.6
3~5척	23	24	20	20	100.0
6~10척	6	6	9	8	88.9
11~20척	7	6	5	5	100.0
21척 이상	2	2	2	2	100.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정책과

(어업정책과 서기관 권오덕)

2. 어가 경제

가. 어가소득

2008년 어가의 평균소득은 연간 31,176천원으로 전년(30,668천원)에 비해 1.7%(508천원) 증가하였다. 어업소득은 15.3% 증가하였고, 어업외 소득은 7.8% 감소하였으며, 어가소득 중 어업소득의 비중이 44.3%로 전년에 비해 5.3% 증가하였다. 어가소득은 농가소득의 102.1%, 도시가계 소득의 69.5% 수준이다.

〈표 4-1-22〉

어 가 소 득

(단위 : 천원, %)

구 분	'04	'05	'06	'07	'08	'08/'07
[어 가 소 득]①	26,159	28,028	30,006	30,668	31,176	101.7
경 상 소 득	22,604	23,594	24,692	25,868	26,344	101.8
어업소득	11,959	11,950	11,603	11,975	13,801	115.2
어업외 소득	9,168	9,399	10,361	10,981	10,120	92.2
이전소득	1,477	2,245	2,728	2,913	2,423	83.2
비 경 상 소 득	3,555	4,434	5,315	4,799	4,831	90.3
[농 가 소 득]	29,001	30,503	32,303	31,967	30,523	100.7
[도시가계소득]	37,360	39,010	41,321	44,105	46,737	106.0

자료 : 통계청, 2008 어업기본통계조사

주 : ① 어가소득=경상소득(어업소득+어업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

〈표 4-1-23〉

어 업 소 득

(단위 : 천원, %)

구 분	'04	'05	'06	'07	'08	'08/'07
어 업 소 득	11,959	11,950	11,603	11,975	13,801	115.2
어업총수입	25,144	26,576	25,910	26,535	33,457	126.1
어업경영비	13,185	14,626	14,307	14,560	19,656	135.0

자료 : 통계청, 2008 어업기본통계조사

주 : 어업소득 = 어업총수입 - 어업경영비

<표 4-1-24>

어업외소득

(단위 : 천원, %)

구분	'04	'05	'06	'07	'08	'08/'07
어업외소득	9,168	9,399	10,361	10,981	10,120	106.0
겸업소득	4,350	4,559	5,082	5,689	4,860	111.9
사업외소득	4,817	4,840	5,279	5,292	5,260	100.2

자료 : 통계청, 2008 어업기본통계조사

(수산정책과 사무관 전성래)

나. 어가 가계지출

2008년도 어가가계지출은 25,405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10.6%(2,442천원) 증가하였다. 이중 소비지출이 20,051천원으로 전년(18,263천원)에 비해 9.8% (1,788천원) 증가하였고, 비 소비지출이 5,354천원으로 전년(4,700천원)에 비해 13.9% (654천원) 증가하였다.

<표 4-1-25>

가계지출

(단위 : 천원, %)

구분	'04	'05	'06	'07	'08	'08/'07
가계지출	21,081	22,896	23,885	22,963	25,405	10.6
소비지출	16,602	17,682	18,156	18,263	20,051	9.8
비소비지출	4,479	5,214	5,729	4,700	5,354	13.9

자료 : 통계청, 2008 어업기본통계조사

다. 어가자산

2008년 말 현재 어가의 평균자산은 221,066천원으로 전년(225,992천원)에 비해 2.2%(4,926천원) 감소하였는데, 고정자산은 5.4%(8,237천원) 증가한 반면 유동자산은 전년에 비해 18.2%(13,163천원) 감소하였다.

〈표 4-1-26〉

어 가 자 산

(단위 : 천원)

구 분	'04	'05	'06	'07	'08	'08/'07
어 가 자 산	160,698	183,841	209,644	225,992	221,066	97.8
고정자산① (구 성 비)	111,870 (69.6)	127,397 (69.3)	147,247 (70.2)	153,483 (67.9)	161,720 (73.2)	109.3 -
유동자산② (구 성 비)	48,828 (30.4)	56,443 (30.7)	62,369 (29.8)	72,509 (32.1)	59,346 (26.8)	81.8 -

자료 : 통계청, 2008 어업기본통계조사

주 : ① 토지, 건물 및 구축물, 선박 및 기계·기구·비품, 대동물, 대식물, 무형자산

② 미처분농수산물, 사용중인어업용자재 등 채고자산 및 현금, 예금 등 당좌자산

라. 어가부채

2008년 말 어가부채는 가구당 33,587천원으로 전년(34,407천원)에 비해 820천원 감소하였다. 어업용 부채는 9.1%(1,517천원) 증가한 반면, 어업용 이외 부채가 3.3%(2,336천원) 감소하였으며, 어가의 「단기상환능력」 평가지표인 부채/당좌자산 비율은 63.6%로 전년(53.5%)에 비해 개선(10.1% 하락)되었다.

<표 4-1-27>

어 가 부 채

(단위 : 천원, %)

구 분	'04	'05	'06	'07	'08	'08/'07
어 가 부 채(A)	32,544	34,531	34,422	34,407	33,587	97.6
어 업 용 부 채 (구 성 비)	17,665 (54.3)	18,560 (53.7)	17,275 (50.2)	16,690 (48.5)	18,207 (54.2)	109.1 -
어업용이외 부채 (구 성 비)	14,880 (45.7)	15,971 (46.3)	17,148 (49.8)	17,717 (51.5)	15,380 (45.8)	86.8 -
당 좌 자 산(B)	40,159	47,608	53,865	64,341	52,782	82.0
단기상환능력[(A/B)×100]	81.0	72.5	63.9	53.5	63.6	10.1%p

자료 : 통계청, 2008 어업기본통계조사

주 : 어업용 이외 부채는 가계용+겸업용+기타용 부채임

3. 수산물 생산

가. 생산동향

2008년도 우리나라 수산물 총 생산량은 전년(3,275천톤) 보다 2.6%(86천톤) 증가된 3,361천 톤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근해에서 고등어, 멸치, 꽃게 어획량의 증가와, 전복 양식생산량 등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에 기인된다.

〈표 4-1-28〉

어업생산현황

(단위 : 톤, %)

구분	'04	'05	'06	'07	'08	'08/'07
합계	2,519,101	2,714,034	3,032,116	3,274,823	3,361,255	102.6
연근해어업	1,076,687	1,097,041	1,108,815	1,152,299	1,284,890	111.5
양식어업	917,715	1,041,058	1,259,274	1,385,804	1,381,003	99.7
내수면어업	25,299	23,839	24,843	26,760	29,180	109.0
원양어업	499,400	552,096	639,184	709,960	666,182	93.8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08 어업생산통계

나. 연근해어업

2008년도 연근해어업(일반 해면어업) 생산량은 1,285천톤으로 전년도(1,152천톤)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우리나라 수산물 총생산량 3,361천톤 중 38.2%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근해어업의 생산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영체 수(허가건수)는 2008년도 77,755개로서 전년(83,258개)에 비해 6.6%(5,503개)가 감소되었고, 이중 생산량의 비중이 큰 근해어업의 경영체는 2008년에 3,957개로, 전년(4,056개)에 비해 2.5%(99개)가 어선감척 등으로 감소되었으나, 전체 생산량과 경영체당 생산량은 전년 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업별 구조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져 경영체의 감소율이 높은 업종의 경우는 단위생산성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어패류 및 해조류 등 품종별 생산량 동향은 어류의 생산량이 878천톤으로 전년(761천톤)에 비해 15.4%(117천톤) 증가, 갑각류의 생산량은 88천톤으로 전년(85천톤)에 비해 3.5%(3천톤) 증가, 패류의 생산량은 81천톤으로서 전년

(73천톤)에 비해 20.5%(8천톤) 증가, 연체동물의 생산량은 216천톤으로 전년(205천톤)에 비해 5.4%(11천톤) 증가하였고, 해조류의 경우는 생산량이 14천톤으로서, 전년(18천톤)에 비해 22.2% (4천톤)가 감소하였다

1) 대형선망어업

대형선망어업은 50~130톤급 어선에 의해 남해안을 중심으로 동중국해, 소흑산도, 제주도 및 동해남부해역 등에서 고등어·정어리·전갱이·삼치 등을 주 대상으로 연중 조업이 이루어지는 연근해어업 중 비교적 규모가 큰 업종의 하나이다.

선망어업은 2005년도 이후 실시하고 있는 한달간의 자체휴어기를 2008년에도 4월 중순부터 6월 초순까지 실시하였으며, 주요 대상종인 고등어 어획의 호조로 전년(194,093톤)에 비해 20.8% 증가한 234,525톤에 머물렀다.

2) 대형기선저인망어업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은 60~140톤급 어선 1척이 조업하는 '외끌이어업'과 2척으로 조업하는 '쌍끌이어업'으로 구분되며, 서·남해와 동중국해에서 주로 갈치·가자미·조기류 등을 어획하는 어업이다.

특히, 쌍끌이어업은 갈치·조기류·멸치 등의 어획량 감소로 인하여 2008년 생산량은 65,159톤으로 전년(76,290톤)보다 14.6%가 감소하였다.

3) 중형기선저인망어업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은 20~60톤급 어선으로 동해 일원에서 오징어·가자미·도루묵·새우류 등을 어획하는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과, 서·남해에서 가자미·아귀·강달이·새우·갑오징어 등을 어획하는 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외끌이어업'과 '쌍끌이어업'으로 구분)으로 구분되고 있다.

동 어업의 어획량은 2004년 일시 감소하였다가 2005년도부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8년 생산량은 가자미, 갈치, 밴댕이, 삼치 등 어황의 호조로 전년(28,996톤)보다 20.6% 증가한 34,979톤을 생산하였다.

4)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채낚기어업은 8~90톤급 어선으로 오징어·갈치·복어 등을 주로 어획하는 어업으로서, 주 어획대상이 되고 있는 오징어어장은 어군의 북상기에 따라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형성되고 있다.

여기를 해역별로 보면 남해안에서는 제주도~대마도간 해역을 중심으로 12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서해안에서는 격렬비열도를 중심으로 7~11월, 동해안에서는 동해남부해역으로부터 강원도 및 대화퇴 근해에 걸쳐서 6~12월에 어장이 형성된다. 이중 동해안에서의 어획량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갈치어장은 주로 5~12월에 제주도 주변 및 제주도 동남해역에서 형성되고 있고, 복어어장은 1~4월에 중국과 일본의 어업협정에 의한 “중·일 잠정조치수역” 하단해역과 6~10월의 제주도 서남부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되고 있다.

근해채낚기어업은 오징어의 어획량이 소폭 감소(3,933톤)하여 2008년도에는 61,343톤을 생산하여 전년(62,657톤) 보다 2% 감소하였다.

5) 근해안강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은 8~90톤급 어선으로 서해 및 동중국해에서 갈치·조기·멸치·강달이·아귀·꽃게 등을 어획하고 있으며, 계절과 조류의 흐름에 따라 남북방향으로 어장 분포 범위가 변동한다.

또한, 동중국해에서의 어획대상 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그 간 대폭적인 어선감척으로 생산량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8년 생산량은 갈치, 아귀, 까나리 어황의 호조로 전년(72,553톤)보다 5.1% 증가한 76,278톤을 생산하였다.

6) 기선선인망(권현망)어업

기선선인망어업은 연안에서 조업하는 어업중 규모가 가장 큰 선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0톤급 미만의 본선을 비롯, 가공선·어탐선·운반선이 1개의 선단을 이루어, 남해연안 일대에서 멸치를 주 어획대상으로 조업하고 있다.

멸치는 전형적인 연안 회유성 어종으로 해황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생산량은 해황여건에 따라 크게 변동을 나타내고 있는데, 2008년 생산량은 멸치 어획량이 크게 증가(40,083톤)하여 전년(108,934톤)보다 38.1% 증가한 150,394톤을 생산하였다.

7) 자망어업

자망어업은 동·서·남해에서 조기·멸치·꽁치·꽃게 등을 주 대상으로 조업하고 있으며, 조기는 서해남부해역에 먹이생물이 풍부하여 어장이 형성되면서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도 생산량은 117,473톤으로 전년(114,025톤)보다 3% 증가하였다.

8) 근해트롤어업

근해트롤어업은 70~140톤급 어선으로 서·남해 및 동중국해에서 오징어·갈치·병어·삼치 등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대형트롤어업과 20~60톤급 어선으로 강원, 경북, 울산 등 동해안에서 새우류·가자미·도루묵·청어 등을 어획하는 동해구트롤어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대형트롤어업은 1990년대 초반까지 말쥐치의 대량어획으로 호황을 이루다 이후 대상자원의 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그간 어선감척으로 인해 최근의 단위생산성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해구트롤어업은 처음에는 새우트롤어업으로 변성하여 왔으나, 이후 대상자원의 지속적인 감소로 경영에 애로를 겪어오다가 최근 오징어를 대상으로 조업하는 어선이 늘어 생산량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근해트롤어업의 주 어획대상 어종이 되고 있는 오징어 어획이 크게 증가(15,278톤)하여 2008년 생산량은 106,219톤으로 전년(99,009톤)보다 7.3% 증가하였다.

9) 통발어업

통발어업은 동해, 서해, 남해 및 동중국해 등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어업으로 소형의 연안 어선부터 대형의 근해어선까지 어선규모도 다양하다. 이 어업은 어획대상에 따라 장어통발, 기타통발(어류·게류·고등류), 문어단지로 구분된다.

장어통발어업은 통영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고, 1990년대 들어 자원감소 및 어장축소로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최근 들어 점차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다가 2008도에는 다소 감소추세에 있다.

기타통발 중 대형어선은 양자강 하류의 동중국해에서 꽃게를 대상으로 조업을 하여 왔으나, 한·일, 한·중 어업협정으로 우리 EEZ로 이동 조업을 하게 되어, 자망, 저인망, 연안어업 등 기존어업과 경쟁조업이 불가피한 실정에 놓여 있다. 2008년도에는 68,727톤을 생산하여 전년(75,043톤)보다 8.4% 감소하였다.

10) 연승어업

연승어업은 동해, 서해, 남해 및 동중국해 등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어업으로, 소형의 연안어선에서 대형의 근해어선까지 어선 규모도 다양하다.

주 어획대상으로 갈치·옥돔·아귀·복어·가자미·장어·불락류 등이며, 일반적으로 망어구에 의한 조업이 불가한 암초지역에서 조업이 간단히 이루어져 기업형 보다는 선주 겸 선장 형태의 소규모 형태로 조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갈치, 붕장어 어황의 호조로 전년(16,975톤)보다 44.4% 증가한 24,510톤을 생산하였다.

〈표 4-1-29〉

연근해 어업 업종별 생산현황

(단위 : 톤, %)

구 분	'05	'06	'07	'08	'08/'07
합 계	1,097,041	1,108,815	1,152,299	1,284,890	111.5
대 형 선 망	173,795	146,839	194,093	234,525	120.8
대형기선저인망	86,215	95,971	76,290	65,159	85.4
중 형 기 저	21,718	23,790	28,996	34,979	120.6
근 해 채 낚 기	62,891	66,082	62,657	61,343	97.9
안 강 망	67,691	74,496	72,553	76,278	105.1
권 현 망	132,146	142,618	108,934	150,394	138.1
자 망	99,891	102,874	114,025	117,473	103.0
근 해 트 롤	101,606	108,386	99,009	106,219	107.3
통 발 어 업	60,756	63,533	75,043	68,727	91.6
연 승 어 업	14,830	16,472	16,975	24,510	144.4
마을·구획어업	75,805	77,447	87,470	100,664	115.1
기 타	199,697	199,307	216,254	244,619	113.1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08 어업생산통계

(어업정책과 서기관 김태기, 사무관 이세오)

다. 양식어업

2008년도 천해양식어업은 입식물량의 감소 및 작황부진 등으로 전체 생산량은 전년도에 비해 0.3%가 감소한 1,382천톤으로 나타났다.

어류양식의 경우 넙치·참돔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조기 출하와 고회율에 따른 대일 수출확대 영향으로 생산이 증가하였으나, 조피볼락 등은 지난해

사육량 감소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2008년도에는 전년도 98천톤 보다 1%증가한 99천 톤을 생산하였으며, 주요 생산어종은 넙치·조피볼락·돔·송어·농어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패류양식의 경우, 양식작황 부진으로 굴, 홍합, 고막, 바지락, 키조개 등의 생산 감소로 2008년도 생산량은 전년도 479천톤 보다 28%(134천톤)가 감소한 345천톤을 생산하였다. 품종별로는 굴이 250천톤으로 패류 생산량의 72.5%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외 홍합(68천톤), 바지락(16천톤), 전복(5천톤)의 순을 보였다.

미역과 김·다시마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해조류양식은 전년도(793천톤) 대비 16%(128천톤)가 늘어난 921천 톤을 생산하였다. 그 중 미역이 381천톤으로 41.4%를 차지하였고, 다시마는 31%인 285천톤, 김이 24.3%인 224천톤을 생산하였으며, 기타 톳·파래·청각 등은 전년도 22.9천톤보다 33.4% 증가한 30.5천톤이 생산되었다.

기타 수산동물양식은 우렁챙이·미더덕·새우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우렁챙이의 생산량 증가에 따라 2008년도에는 전년(16.5천톤) 대비 4.4% 증가한 17.3천톤이 생산되었다.

〈표 4-1-30〉

양식어업 품종별 생산현황

(단위 : 톤)

구 분		'05	'06	'07	'08	'08/'07
합 계		1,041,058	1,259,274	1,385,804	1,381,892	99.7
어류	소 계	81,421	91,123	97,663	98,942	101.3
	넙 치	40,059	43,852	41,171	46,329	112.5
	조피볼락	21,297	27,517	35,564	32,977	92.7
	기 타	20,065	19,754	20,928	19,636	93.8
패류	소 계	326,255	391,060	478,646	344,657	72.0
	굴	251,706	283,296	321,276	249,976	77.8
	홍 합	43,953	81,617	98,121	67,666	69.0
	바 지 락	17,401	14,327	18,819	16,268	86.4
	전 복	2,062	3,050	4,350	5,145	118.3
	피 조 개	2,548	2,064	3,015	1,903	63.1
	기 타	10,647	9,756	37,415	3,699	11.2
해조류	소 계	621,156	764,913	792,953	921,024	116.2
	미 역	281,871	322,371	309,097	381,076	123.3
	다 시 마	108,327	201,919	250,049	285,221	114.1
	김	197,610	217,559	210,956	224,242	106.3
	기 타	33,348	23,064	22,851	30,485	133.4
기타수산 동물		12,226	12,178	16,542	17,269	104.4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08 어업생산통계

주 : 기타 수산동물은 대하, 우렁챙이, 미더덕 등

(양식산업과 사무관 임남철)

라. 내수면어업

2008년 내수면어업 생산은 전년도 26.8천톤에 비해 9.0%가 증가한 29.2천톤이었다. 이 중 어로어업 생산량이 11.1천톤 수준으로 전체의 3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식 생산량은 18.1천톤으로 대형화된 고밀도 순환여과식 양식 시설에 대한 지원 등으로 점차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4-1-31〉

내수면 어업 품종별 생산현황

(단위 : 톤, %)

구 분	'04	'05	'06	'07	'08	증감률(%) '08/'07
합 계	25,299	23,839	24,843	26,760	29,178	9.0
어로어업	10,302	7,500	7,139	5,803	11,096	91.2
가 물 치	24	13	14	28	46	64.3
메 기	146	229	214	149	232	55.7
미꾸라지	0	1	0	0	0	0
뱀 장 어	37	35	46	40	96	140
붕 어	1,397	1,145	1,051	1,295	2,447	89.0
송 어 류	0	0	0	0	31	순증
잉 어	1,430	1,211	961	825	1,379	67.2
피 라 미	50	21	46	47	113	140.4
패류(재첩 등)	3,981	1,400	1,171	829	1,066	28.6
기 타	3,237	3,445	3,636	2,590	5,686	119.5
양식어업	14,997	16,339	17,704	20,957	18,082	-13.7
가 물 치	278	252	287	285	187	-34.4
민 물 돔	302	268	272	798	388	-51.4
뱀 장 어	5,168	5,775	7,966	10,557	6,480	-38.7
잉 어	231	429	320	269	492	82.9
향 어	702	973	706	800	1,028	28.5
송 어 류	3502	3320	1,878	2,882	2,780	-3.6
기 타	4814	5322	6,275	5,366	6,727	25.3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08 어업생산통계

(자원환경과 서기관 김동욱)

마. 원양어업

1957년 인도양에 처음 출어한 참치연승어선 지남호가 참치류 223톤을 어획한 이래, 원양어획물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가 1990년 약 1백만톤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2008년 원양어업 생산은 전년도 713천 톤에 비해 6.6%가 감소한 666천 톤이었다. 이 중 참치선망 및 참치연승어선이 어획한 참치류 생산량이 287천 톤 수준으로 전체의 43.1%, 원양오징어 182천 톤으로 27.3%, 꽁치 30천 톤으로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참치류 및 원양오징어 생산이 다소 감소하였고, 명태는 러시아수역 쿼타량에 따라 증가하였다.

<표 4-1-32>

원양어업 어종별 생산현황

(단위 : 톤, %)

구 분	'04	'05	'06	'07	'08	'08/'07
계	499,400	552,096	639,249	712,832	666,182	93.5
참치류	238,624	258,062	295,440	300,268	286,889	95.5
명 태	19,997	26,004	26,269	20,109	27,980	139.1
오징어	69,999	81,172	170,211	223,338	181,780	81.4
꽁 치	22,625	40,509	12,009	16,976	29,591	174.3
기 타	148,155	146,349	135,320	152,141	139,942	92.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08 어업생산통계

(원양정책과 서기관 박성우)

4. 수산물 수출·입

가. 수 출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은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2000년까지 15억 \$ 이상을 유지해 왔으나, 국내외 수출환경의 악화로 2001년도에 12억 \$로 감소한 이래 최근 5년간 11억 \$ ~ 12억 \$ 내외의 정체를 보임에 따라 총 수출액에서 수산물 수출이 점유하는 비율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수산물 생산량 증가 및 주요 수출국인 일본의 엔화 강세 등 환율 영향으로 수산물 수출은 전년 대비 물량은 178천톤 증가(14.5%)하였고, 금액도 51백만 \$ 증가(18.7%)하였다.

〈표 4-1-33〉

수산물 수출현황

(단위 : 백만 \$, %)

구 분	'05	'06	'07	'08	'08/'07
총 수 출	284,419	325,465	371,489	422,007	113.6
수 산 물	1,193	1,089	1,226	1,455	118.7
구 성 비	(0.4)	(0.3)	(0.3)	(0.3)	-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

1) 품목별 수출현황

활어는 2001년 이후 넙치, 붕장어 등의 지속적인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07년 63백만 \$을 수출하였으나, 2008년에는 원화 및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한 65백만 \$을 수출하였다. 프클랜드어장에서 오징어 어획의 호조로 인한 냉동오징어 수출증가로 냉동수출물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2008년도에는 전년대비 17.9%증가한 874백만 \$을 수출하였다.

<표 4-1-34>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톤, 천\$,%)

구 분	'06		'07		'08		'08/'07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 계	367,498	1,088,948	536,009	1,225,832	613,823	1,454,635	114.5	118.7
활 어	6,238	74,712	5,281	62,965	5,961	64,516	112.9	102.4
신선·냉장	21,648	128,473	18,896	111,870	27,139	151,525	143.6	135.4
냉 동	252,891	538,462	419,623	741,135	462,341	873,682	110.2	117.9
기 타	86,721	347,301	92,209	309,862	118,382	364,912	128.4	117.8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08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2) 국가별 수출현황

2008년도 우리나라는 전체 수산물 수출실적의 47.3%를 일본으로 수출하였으며, 수출 상위 10개국 중 중국은 2007년도에 이어 2008년도에 제2위의 수출대상국가로 부상하였으나 미국은 전년도에 비하여 수출이 소폭증가(16.1%) 함에 그쳐 제4위로 한단계 내려 앉았다. 일본, 미국, 중국, 태국, 대만, 캐나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국가로의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뉴질랜드, 스페인, 홍콩, 이탈리아, 러시아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편, 2008년도에 우리나라가 수산물을 수출한 실적이 있는 국가는 106개국이며, 국별 비중은 일본 47.3%, 중국 13.3%, 태국 8.4%, 미국 7.9%, 뉴질랜드 4.2% 등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이 전체 수출의 81.1%를 차지하고 있다.

〈표 4-1-35〉

국가별 수출현황

(단위 : 천 \$, %)

구 분	'05	'06	'07	'08	'08/'07
합 계	1,193,117	1,088,948	1,225,832	1,454,635	118.7
일 본	741,062	659,523	572,908	687,471	120.0
미 국	88,174	95,613	98,876	114,799	116.1
중 국	108,031	75,414	156,565	193,461	123.6
태 국	57,383	61,688	87,678	122,943	140.2
뉴 질 랜 드	60,478	39,383	68,293	60,623	88.8
스 페 인	31,519	28,167	58,655	40,474	69.0
대 만	13,196	18,453	17,540	18,734	106.8
홍 콩	8,895	12,514	11,331	9,546	84.2
이 탈 리 아	11,253	11,620	25,346	25,247	99.6
러 시 아	4,468	8,015	11,072	7,069	63.8
캐 나 다	9,025	7,247	7,065	8,848	125.2
멕 시 코	1,644	6,834	6,336	11,937	188.4
인도네시아	5,869	6,466	9,011	11,080	123.0
베 트 남	4,570	5,194	8,812	19,320	219.2
기 타	47,550	52,817	86,344	123,083	142.5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08년부터 소금이 수산물로 분류됨)

<표 4-1-36>

주요 어종별 수출현황

(단위 : 천 \$, %)

구 분	'05	'06	'07	'08	'08/'07
합 계	1,193,117	1,088,948	1,225,832	1,454,635	118.7
참 치	226,399	227,964	275,153	293,189	106.6
김	54,244	61,730	59,728	75,313	126.1
굴	61,204	55,508	40,145	46,260	15.2
넙 치	63,684	51,969	44,154	43,369	98.2
오 징 어	102,131	47,399	123,768	126,536	102.2
캐비아(대용)	56,741	44,019	13,097	16,691	127.4
붕 장 어	49,161	43,009	37,938	44,168	116.4
계 살	41,163	36,210	32,275	43,484	134.7
툰	23,939	23,773	24,525	36,379	148.3
미 역	29,868	21,761	17,667	20,584	116.5
한 천	15,529	18,535	10,784	10,261	95.2
바 지 락	18,040	17,766	12,662	19,219	151.8
전 복	9,024	17,123	15,040	20,997	139.6
삼 치	21,086	15,535	26,869	45,464	169.2
피 조 개	19,054	14,379	13,998	15,103	107.9
새 우	5,836	14,012	8,340	11,407	136.8
이 빨 고 기	6,607	11,653	13,471	15,808	117.3
전 갱 이	11,848	11,035	12,946	29,242	225.9
돔	9,005	10,940	21,250	14,155	66.6
새 꼬 리 민 태	15,315	9,565	13,281	16,689	125.7
기 타	353,239	335,063	408,741	510,317	124.9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

(원양정책과 사무관 전우진)

나. 수 입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은 국내생산량의 한계 및 수요증가, 1997년도 수입 자유화의 영향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왔다.

2001년도 무역수지 적자 전환 이래 최근 5년간 연평균 167백만\$씩 증가하였으며, 2008년도 수산물 수입은 전년 대비 1.3%(41백만\$) 증가한 3,097백만\$을 보였다.

이렇게 수산물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은 국내 수산물 소비량 증가의 결과이며 <표 4-1-37>에서 보듯이 연도별 총 수입액 대비 수산물 수입 점유비율도 1%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표 4-1-37>

수산물 수입현황

(단위 : 백만 \$, %)

구 분	'05	'06	'07	'08	'08/'07
총 수 입	261,238	309,383	356,846	435,275	122.0
수 산 물	2,384	2,769	3,056	3,097	101.3
구 성 비	(0.9)	(0.9)	(0.9)	(0.7)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

1) 품목별 수입현황

수산물 수입의 약 60%를 점유하는 냉동품이 꾸준한 증가를 보여 왔으며 2008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2.4% 감소한 1,828백만\$의 수입실적을 나타내었으며, 활어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27.0% 증가한 285백만\$을 보인 반면 신선·냉장 수산물은 23.2% 감소하였으며, 기타 수산물은 21.9% 증가하였다. 제품유형별로 볼때 수산물수입은 냉동품(59.0%), 신선·냉장(10.1%), 활어(9.2%), 조제품(8.9%), 기타수산물(8.72%), 건조(2.5%)등의 순이었다.

<표 4-1-38>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천 \$, %)

구 분	'05	'06	'07	'08	'08/'07
합 계	2,383,574	2,769,348	3,056,368	3,097,450	101.3
활 어	176,449	197,501	224,675	285,320	127.0
신선·냉장	330,782	374,837	408,278	313,504	76.8
냉 동	1,406,323	1,660,663	1,872,942	1,827,640	97.6
기 타	470,020	535,135	550,473	670,986	121.9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

가) 국가별 수입현황

2008년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수입의 32.9%를 중국이 점유하고 있으며, 러시아, 일본, 베트남, 미국 순으로 수입이 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인도네시아, 페루, 베트남의 수입이 각각 38.3%, 23.8%, 14.1%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중국, 러시아, 일본 및 태국은 각각 4.8%, 9.2%, 17.7% 및 23.7% 감소하였다.

2008년도 현재 우리나라가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국가는 105개국으로 전년도 107개국에 비해 2개국이 감소하였으며, 국별 수입비중은 중국 32.9%, 러시아 12.4%, 베트남 9.8%, 일본 7.2%, 미국 4.5%로 상위 5개국이 전체 수입의 70.0%를 점유하여 전년도의 71.5%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4-1-39〉

국가별 수입현황

(단위 : 천 \$, %)

구 분	'05	'06	'07	'08	'08/'07
합 계	2,383,574	2,769,348	3,056,368	3,097,450	101.3
중 국	936,351	1,034,192	1,070,862	1,018,678	95.1
러 시 아	277,216	347,079	423,392	384,434	90.8
일 본	173,140	224,311	273,477	224,990	82.3
베 트 남	163,642	206,482	267,964	305,841	114.1
미 국	152,555	150,544	144,242	140,273	97.2
태 국	125,147	144,463	149,270	113,910	76.3
대 만	63,533	85,698	83,342	85,479	102.6
칠 레	57,076	83,513	80,050	77,369	96.7
캐 나 다	42,474	50,157	52,544	46,431	88.4
노 르 웨 이	29,146	41,609	61,615	53,401	86.7
페 루	23,910	36,977	37,416	46,316	123.8
인 도 네 시 아	33,630	35,645	55,280	76,445	138.3
인 디 아	19,981	27,350	21,497	24,524	114.1
필 리 핀	21,800	26,788	21,729	19,429	89.4
영 국	30,182	23,594	21,543	21,705	100.8
기 타	233,791	250,946	292,145	458,225	156.9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

<표 4-1-40>

어종별 수입현황

(단위 : 천 \$, %)

구 분	'05	'06	'07	'08	'08/'07
합 계	2,383,574	2,769,348	3,056,368	3,097,450	101.3
명 태	277,687	289,204	363,836	326,488	89.7
새 우	167,451	219,122	246,759	211,255	85.6
조 기	142,713	147,873	164,644	143,654	87.3
갈 치	100,306	102,892	109,767	89,813	81.8
오징어	64,144	85,971	86,192	75,751	87.9
꽃 계	67,717	82,359	82,249	66,222	80.5
낙 지	67,029	81,993	125,526	128,506	102.4
어 란	53,749	79,405	70,231	49,811	70.9
아 귀	60,101	72,062	77,425	74,740	96.5
새우살	46,553	60,496	83,003	87,033	104.9
참 치	48,333	60,455	93,633	115,294	123.1
돔	41,666	57,941	58,464	66,558	113.8
연 어	36,000	56,853	71,509	63,693	89.1
문 어	43,004	51,775	6,191	4,362	70.5
계	35,533	49,068	49,033	39,243	80.0
캐비아	56,714	43,210	34,483	25,638	74.3
고등어	25,839	42,358	56,609	34,663	61.2
꽂 치	28,344	37,938	36,509	36,517	100.0
퀴 치	27,697	34,778	38,113	37,963	99.6
대 계	31,148	33,782	42,888	33,627	78.4
기 타	961,846	1,079,813	1,159,304	1,386,619	119.6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

(원양정책과 사무관 남현수)

5. 수산물 수급 및 가격

가. 수 급

2008년도 우리나라 수산물 수급 동향은 수입감소로 총 공급량은 전년에 비해 5.2% 감소한 6,115천톤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4,282천톤을 소비하였고, 1,266천톤은 수출하였으며, 나머지 567천톤은 2009년도 재고 물량으로 이월되었다.

공급측면에서는 연근해어업에서 1,286천톤, 천해양식어업 1,386천톤, 원양어업에서 2076천톤 등 3,362천톤이 생산되어, 국내소비는 7.3%로 감소했으며, 공급 부족분은 수입 2,135천톤과 전년도 재고량 618천톤으로 충당하였다.

〈표 4-1-41〉

수산물 수급동향

(단위 : 천톤, %)

구 분		'03	'04	'05	'06	'07	'08
공급	생 산	2,486	2,519	2,714	3,032	3,271	3,362
	수 입	2,268	2,477	2,557	2,646	2,604	2,135
	전년재고	769	573	531	512	575	618
합 계		5,523	5,569	5,802	6,190	6,450	6,115
수요	국내소비	3,578	3,922	4,169	4,568	4,621	4,282
	수 출	1,202	1,116	1,121	1,047	1,211	1,266
	차년이월	743	531	512	575	618	567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나. 소 비

2007년도 기준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55.0kg으로 전년보다 1.5% 증가한 소비형태를 보이고 있다.

<표 4-1-42>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현황

(단위 : kg/연간, %)

구 분	'02	'03	'04	'05	'06	'07
합 계	44.7	44.9	49.0	49.5	54.2	55.0
어 패 류	36.3	38.5	41.1	39.9	41.2	40.6
해 조 류	8.4	6.4	7.9	9.6	13.0	14.4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2007)”

주 : 1인당 소비량은 순식품 기준임

<표 4-1-43>

동물성 단백질 공급현황

(단위 : g/1인당 1일, %)

구 분	'02	'03	'04	'05	'06	'07
합 계	45.85	46.11	46.66	45.43	46.7	47.23
축 산 물	28.06	27.54	26.61	26.29	27.12	28.59
어 패 류 (점 유 율)	17.79 (38.8)	18.57 (40.3)	20.05 (43.0)	19.14 (42.1)	19.58 (41.9)	18.64 (39.5)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2007)”

다. 가 격

2008년도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량은 일반 해면어업 등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와 함께 수산식품의 생산자물가(도매물가)도 안정세를 보였는데, 이는 주요 대중성 해면어종인 오징어 등의 생산량이 증가되어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4〉

소비자 물가동향

(단위 : %)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총 소비자물가	90.8	93.9	97.3	100.0	102.2	104.8	109.7
수 산 식 품	93.6	95.8	98.6	100.0	100.8	100.9	106.4
- 신선어개류	94.9	98.2	101.6	100.0	100.1	100.4	106.7
- 해 조 류	86.2	103.1	100.7	100.0	109.6	110.1	106.8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 조사자료

주 : 기준년도(2005년) 대비 등락률임

2008년도 수산식품의 소비자 물가는 대중성 어종인 명태 등은 가격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갈치와 고등어는 소비량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각각 6.6%, 18.0%가 상승한 반면, 오징어는 과잉생산 등으로 21.6%가 하락 하였다.

(수산정책과 사무관 김경남)

6. 어업 및 어장환경

가. 어 황

1) 해역별

2008년도 동해에서는 봄철 북상하는 꽁치를 대상으로 하는 꽁치유자망어업의 조업이 이루어졌고 난류세역의 강세와 함께 내유량이 증가되어 전년 및 평년 비 순조로운 어황을 나타내었다. 오징어채낚기어업은 8월 이후 본격적인 어기가 시작되면서 강원연안에서 밀도 높은 어장이 형성되어 평년

수준의 어황을 회복하였다. 한편 동해구 중형외끌이어업은 가자미류, 도루묵 등을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졌으며 어황은 전년 및 평년수준을 유지하였다.

남해에서는 멸치어업, 대형선망어업, 기선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의 조업이 활발하였으며, 전체적인 어황은 전년 및 평년수준을 유지하였다. 서해 및 동중국해에서는 근해안강망, 기선저인망, 유자망어업의 조업이 활발하였으며, 강달이류, 갈치, 참조기 등을 대상으로 전년 및 평년수준의 어황을 나타내었다.

2) 어종별

고등어는 대형선망어업에 의해 서해 및 동중국해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되었으며 여름철 이후 난류세력의 강세로 어군의 북상회유가 활발하여 전체적인 어황은 전년 및 평년 비 순조로웠다. 멸치는 기선권현망 및 유자망어업에 의해 남해동부 및 동해남부해역에서 전년 및 평년 비 순조로운 어황을 보였다. 참다랑어는 대형선망어업에 의해 주로 남해동부 및 제주도 주변해역에서 조업이 이루어졌으며 전년 및 평년 비 순조로운 어황을 나타내었다.

기선저인망어업의 주 대상어종인 갈치는 내유량이 감소하였으나 참조기는 내유량의 증가로 밀도 높은 어장이 형성되어 전체적인 어황은 전년 및 평년수준을 유지하였다. 한편 도루묵은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에 의해 동해 연안해역에서 조업이 이루어졌으며 전년 및 평년수준의 어황을 나타내었으나, 명태는 여전히 극히 낮은 수준의 어획량을 나타내었다. 살오징어는 여름철 이후 동해 전 해역에서 조업이 이루어졌으나 어장 형성이 부진하여 평년 비 다소 저조한 어황을 나타내었다. 꽁치는 주로 봄철에 동해 연안해역에서 조업이 이루어졌으며 평년 비 순조로운 어황을 보였다.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사 김정년)

나. 자원동향

1) 연근해 어업자원

연근해 부어 및 저어류에 관한 어획량 변동조사는 대형선망, 대형기선저인망어업 등 8개의 근해어업과 꽃게 연안유자망 등 5개의 연안어업을 대상으로 해구별, 어종별 어획량 및 어획노력량을 조사하여 자원밀도지수와 자원분포역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생물학적 조사는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삼치, 참다랑어, 갈치, 참조기, 말쥐치, 붕장어 등 9개 주요 어종에 대하여 어체 측정과 체장조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재생산력의 변동과 연급군 분석을 통하여 자원수준을 평가하였다.

또한 2008년도 TAC 대상 자원인 고등어와 붉은대게 등 10종과 시범어종인 도루묵과 참홍어에 대한 자원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책 자료로 제공하였다.

붉은대게, 대게, 꽃게의 자원동향은 최근 증가경향에, 개조개, 제주소라의 자원동향은 최근 감소경향에 있었으며, 키조개, 오징어, 도루묵, 참홍어는 평형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어종별 자원수준은 오징어와 대게는 높은 자원수준에, 정어리, 키조개, 개조개, 제주소라, 꽃게, 도루묵, 참홍어는 낮은 자원수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원양 어업자원

원양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효율적인 국제적 어업 관리의 기초를 위해 원양 주요 어업(트롤 등 6개 어업) 및 주요 어종(가다랑어 등 9개 어종)에 대한 생물특성연구 및 자원평가를 실시하여 어업별 해역별 어종별 자원상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이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은 21회에 걸친 국제수산기구 회의에 국별 보고서로 제공되어 원양어장의 지속적 확보에 기여하였다.

2002년부터 국제옵서버 양성사업을 추진하여, 2008년까지 국제옵서버 20명을 양성하였다. 양성된 옵서버는 2008년에는 국제옵서버 승선과학조사는 7개 해역에서 총 13척에 13명이 승선하였으며 이중 의무 승선조사는 남빙

양 저연승 1척, 남빙양 통발 1척, 남동대서양 저연승 2척, 지중해 다랑어 선망 1척, 남동태평양 트롤 1척 등의 조사가 이루어 졌다. 과학 승선조사는 중서부태평양 다랑어선망 2척과 중서부태평양 다랑어연승 3척을 이용하여 각각 인공유목 시험조사와 연승어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그외 남서태평양 및 남서대서양에서 2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여 어획량 통계, 부수어획종 혼획 상태, 어업대상종의 분포 밀도 및 생물학적 특성치 등을 분석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사 이재봉)

다. 연안어장 환경변화

1) 연안어장 오염

해수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기준으로 해역의 상태를 평가하면, 동해의 경우 대부분 해역에서 해역수질기준 I, II등급(2 mg/L 이하) 이내로 양호했다. 남해는 부산신항에서 해역기준 III등급(4 mg/L 이하) 상태였으며, 특히, 환경관리해역인 마산만, 행암만, 진해만에서 불량한 수질 상태를 보였으나, 그 외항만들은 I~II등급으로 양호하였다. 서해의 경우는 목포항, 평택항에서 II등급 상태였으며, 그 외 항만들은 II등급으로 비교적 양호하였고, 환경관리해역인 시화호와 인천연안에서 III등급 상태였고, 그 외 연안에서는 I~II등급으로 양호하였다. 연·근해의 경우 동해와 남해는 I~II등급이었고, 서해연안해역도 III등급이었던 중부와 남부의 군산연안, 고창연안, 목표연안을 제외하고 I~II등급 수준이었다.

해저퇴적물의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부영양화가 진행된 진해만, 마산만, 시화호 등의 해역에서 오염퇴적물 기준(20mg/g.d, 일본 수산자원보호협회)을 초과하였고, 산취발성황화물(AVS) 역시 항만 및 반 폐쇄성만(진해만, 마산항, 시화호 등)에서 높은 농도를 나타냈다.

2) 적조발생

2008년도는 전 연안에서 총 38건의 적조가 발생하였으며, 무해성 10건,

코클로디니움(*Cochlodinium polykrikoides*) 적조 26건, 차토넬라(*Chattonella* spp) 적조 2건이 발생하였다. 코클로디니움 적조는 7월 30일 전남 여수 가막만 하단에서 최초 발생하여 서측으로는 8월 9일 완도해역, 동측으로는 8월 20일 부산연안까지 확산되었고, 8월 23일 울산시 울주군까지 확산된 후 9월 29일 소멸되었다.

2008년도 적조는 낮은 강수량, 냉수대 발달, 수온약층의 발달 등으로 영양염 이 부족하고 식물플랑크톤 여과섭식자이며 그 섭이률이 매우 높은 바다솔통류가 이상 다량으로 출현하므로써 주변 동·식물플랑크톤 출현 및 변동에 크게 영향을 미쳐 소규모 적조가 발생되었고, 종간경쟁 및 수온하강으로 인하여 적조가 소멸되었다.

3) 대형 독성해파리의 대량 출현

대형 독성해파리인 노무라입깃해파리(*Nemopilema nomurai*) 출현 밀도(단위면적 : 10,000m²)는 2008년도 6월 군산해역에서 최대 98.04 개체로 고밀도 관찰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8월에는 황해 중앙부와 제주 남동부에서 평균 9개체, 9월 광역조사 시에 황해 중앙부에서 최대 3개체, 평균 0.3 개체로 조사되었다. 10월 광역조사 시, 황해 남부에서 최대 8.64 개체 출현하였고, 평균 1개체 분포하고 있었다.

해파리 대량출현에 의한 수산업피해(어획량감소, 상품가치하락, 어구파손, 작업지연, 피부손상)는 통발, 정치망, 자망, 안강망, 낭장망, 유자망, 이강망, 닻자망, 새우자망, 멸치망, 채낚기 등의 어업에서 피해가 발생하였다. 자망과 채낚기에서는 어획량감소, 자망, 안강망, 낭장망에서는 상품가치하락이, 통발과 자망, 안강망, 낭장망, 멸치망에서는 어구파손이 심각하였다. 특히 자망과 멸치망에서는 해파리의 유입에 의한 작업시간 지연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8년도 전국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독성해파리 쏘임으로 인한 해수욕객 피해는 전국적으로 약 700여건, 8월 부산해역에서 123건의 피해가 보고되었다.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소 황재동, 윤원득)

제2장 2008년도 수산시책 추진실적

제1절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어업관리체제 구축

1. 자율관리어업

그 동안 정부 주도하의 어업자원관리는 어업인의 정부에 대한 의타심 심화 및 주인의식을 약화시켜 자원남획 및 어업질서 문란을 야기 시키는 등 부정적인 양상으로 나타났고, 정부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WTO체제 출범, UN해양법협약 발효,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체결 등은 국내·외 수산업의 여건을 변화시켰고 이러한 어업환경 악화는 정부주도의 수산자원 관리의 한계를 절감케 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어업인의 주인의식 및 자조·자립심 함양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장 및 자원의 이용주체인 어업인 스스로가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자원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새로운 자율관리체제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자율관리어업은 2001년 2월부터 자율관리공동체 63개소가 신청하여 본격 추진되었으며, 시행 8년차인 2008년에는 참여공동체수가 659개소까지 확대되어 기반조성단계에서 본격적인 확산·심화단계로 도약하였다.

2008년도에는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한 공동체중 추진실적이 우수한 141개소를 선정하여 143억원(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의 육성사업비를 차등 지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자율관리어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율관리어업 확산의 장애요인인 공동체 또는 업종·지역간의 분쟁 및 갈등에 대하여는 민간주도의 자율조정협의회를 운영하여 당사자간 협의와 토론에 의하여 자체 해결토록 유도하고, 참여공동체에 대하여는 수산사무

소의 전담 어촌지도공무원을 지정하여 자율관리공동체에 대한 기술지도 및 조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지도자들로 구성된 전국지도자협의회 활동(2회)을 적극 지원하고, 자율관리어업 추진기관 담당자들의 이해증진을 위한 권역별 광역워크숍(5회), 지방수산사무소 중심의 지역단위 현장집합교육 및 우수공동체 견학 등을 위한 소요예산 108백만원을 지원하고, 미참여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자양성교육을 개최하는 한편 우수공동체 지도자를 대상으로는 수산 선진국(일본)의 어업현장 방문(3회)을 실시하였다.

자율관리어업의 활동이 저조하거나 새롭게 참여한 신규공동체에 대하여는 어촌지도공무원 만의 지도·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어, 수산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춘 민간컨설턴트(4명)로 하여금 공동체 특성에 맞는 1:1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공동체별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내실화를 유도하였다.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 정착과 어업인의 참여의식 고취를 위한 제6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는 2008년 11월 13~14일 강원 속초에서 개최하였고, 우수공동체를 대상으로 사례집 V(34개 공동체)와 영상물(공동체 2개소)을 제작, 배포하는 등의 교육·홍보활동도 강화하였다.

아울러,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70개소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2005~2007년까지 3년간 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의 소득을 조사한 결과 공동체 평균소득이 2005년에는 920백만원, 2006년에는 1,010백만원, 2007년에는 1,094백만원으로 매년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1억원의 예산으로 16개 공동체에 대해 어장의 환경수용력과 관리 대상어종의 자원량을 조사하여 자원관리 권고안을 공동체에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공동체는 자원관리규약에 반영,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자원관리를 하도록 하였다.

한편, 새로운 평가시스템으로 평가한 2008년도 공동체별 등급은 대상 공동체 659개 중 풍요등급 9개소, 모범등급 74개소, 협동등급 496개소로 결정되었으며, 2007년 12월 1일 이후 참여한 공동체 80개소는 참여등급으로 선정하였다.

<표 4-2-1>

2008년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및 지원현황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합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동체수	659	15	29	15	24	47	8	50	41	215	73	100	42	
육성사업	지원수	141	4	4	3	6	11	3	15	13	37	13	23	9
	사업비	143	2.5	4.0	2.5	6.0	11.0	1.5	17.0	13.5	44.5	12.5	21.0	7.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자원환경과 사무관 조성남)

2. 수산자원 조성

가. 인공어초시설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 조성과 수산자원의 증강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1971년부터 추진해 온 인공어초 시설은 적지 306,751ha 중 2008년까지 202,141ha를 시설하여 66%를 달성하였다.

또한, 해역별·어종별 특성에 적합한 어초 다양화를 위해 2008년에는 터널형 어초 등 9종을 일반어초로 선정·시설토록 하였고, 탱크카어초 등을 시험연구 중에 있으며, 어초어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27,745백만 원을 투입 기존 시설된 어초어장에 대한 어초위치, 상태조사 및 폐어망 등을 수거하고, 갯녹음현상 발생어장 521ha에 13,393백만 원을 투입 해중림을 조성하였다.

〈표 4-2-2〉

시·도별 인공어초 시설 실적

(단위 : ha, 백만원,%)

구분	'05		'06		'07		'08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합 계	5,263	42,997	5,450	40,205	4,698	40,335	3,146	40,253
부산	104	990	88	900	88	900	70	840
인천	522	4,047	328	3,938	244	3,750	200	3,750
울산	68	849	64	788	56	750	28	1,223
경기	178	1,415	192	1,501	193	1,250	100	2,363
강원	354	2,494	240	2,250	230	2,250	188	3,000
충남	772	4,404	516	4,050	528	4,423	400	3,750
전북	176	2,184	1,142	5,000	1,022	5,000	900	5,000
전남	1,310	8,832	896	6,750	868	8,716	1,000	8,250
경북	140	3,045	104	2,507	172	3,293	130	2,749
경남	424	7,332	516	5,771	268	3,028	30	3,028
제주	1,215	7,405	1,364	6,750	1,029	6,975	100	6,30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자원환경과 사무관 차태황)

나. 종묘방류

1971년 국립수산과학원 북제주수산종묘배양장 개설을 시작으로 국·도립 수산종묘배양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수산종묘배양장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여 국립수산종묘배양장을 시험장별로 특성화된 전문연구센터로 전환하여 수산종묘생산 기술개발 연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와 별도로 1986년부터 2008년까지 728억원을 투입하여 민간에서 생산된 넙치류, 돔류 등 정착성 고부가가치 품종 105천만 미를 매입·방류하는 등 연안 수산자원을 조성하였다.

〈표 4-2-3〉

어종별 종묘 매입·방류 추진실적

(단위 : 천마리, 백만원)

품종별	'05		'06		'07		'08		'08/'07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87,547	8,165	122,367	9,679	70,881	13,802	80,678	13,201	113.8	95.6
조피 불락	2,787	783	1,586	674	7,701	2,286	3,781	1,020	49.1	44.6
넙 치	4,482	1,608	3,843	1,236	9,622	2,196	5,183	1,613	53.9	73.5
감성돔	2,967	562	2,598	514	5,214	1,202	6,184	1,251	118.6	104.1
돌 돔	1,045	520	2,183	867	2,694	780	2,358	843	87.5	108.1
불 락	920	284	1,887	457	2,771	814	4,247	948	153.3	116.5
해 삼	1,532	358	4,310	997	2,243	558	2,295	887	102.3	159.0
대 하	61,214	205	89,903	379	24,660	125	32,463	188	131.6	150.4
전 북	3,856	2,913	3,516	3,122	5,003	4,111	4,718	3,878	94.3	94.3
내수면	8,744	932	12,541	1,433	10,973	1,730	19,449	2,573	177.2	148.7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표 4-2-4〉

시·도별 종묘 매입·방류 추진현황

(단위 : 천마리, 백만원)

구분	'05		'06		'07		'08		'08/'07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92,267	8,958	128,359	10,642	84,728	15,954	93,711	16,317	110.6	102.3
부산	789	254	1,706	400	804	357	2,968	678	369.2	189.9
인천	3,373	917	4,080	1,094	15,541	2,448	7,642	1,885	49.2	77.0
울산	2,043	600	1,948	536	3,730	518	3,666	905	98.3	174.7
경기	1,829	939	1,913	900	1,080	533	-	-	0.0	0.0
강원	4,454	1,293	6,280	1,531	4,548	1,941	7,334	1,985	161.3	102.3
충북	723	142	1,295	184	974	146	2,025	278	207.9	190.4
충남	24,219	722	43,493	636	26,959	2,702	33,773	2,016	125.3	74.6
전북	410	152	9,603	443	2,201	406	3,471	665	157.7	163.8
전남	46,555	1,002	48,973	908	12,475	1,073	11,909	1,074	95.5	100.1
경북	1,947	611	1,881	814	2,181	1,286	2,216	1,329	101.6	103.3
경남	4,313	862	4,621	950	11,318	2,416	15,899	3,377	140.5	139.8
제주	1,612	1,464	2,566	2,246	2,917	2,128	2,808	2,125	96.3	99.9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자원환경과 사무관 차태황)

다. 바다목장 조성

199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영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2006년도 사업까지 총 2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준공식을 가졌다.

그 동안 통영 바다목장에 조성된 수산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리·이용체계 확립 및 단위사업별 종합 매뉴얼 또는 사업지침서를 마련하는 한편, 조성된 수산자원의 관리·이용을 위한 사후관리방안도 마련하여 타 해역사업에 참고토록 했다.

아울러 그 동안 바다목장개발사업에 대하여 제3의 기관을 통한 경제성 평가를 마치고 사업효과를 객관적, 종합적으로 평가, 분석한 자료를 타 바다목장 사업의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전남(여수) 다도해형 바다목장에 대해서는 2008년도 3단계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연구·조사와 더불어 인공어초, 해중립 등 구조물 설치와 감성돔, 블락류 등 종묘를 방류하는 등 기반조성사업을 수행하였고, 2010년도 사업완료 목표로 시설사업위주의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2007년부터는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사업총괄기관을 변경하여 전년도 사업과 연계하여 시설 및 방류사업을 총사업비 대비 약 80%로 확대하여 실제 조성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2005년에 1단계 최종사업이 마무리되어 기본계획이 수립된 동해(울진), 서해(태안), 제주(북제주) 3개소에 대해서도 2008년부터는 사업비를 75억 원으로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시설사업을 실시하는 등 바다목장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관광시설조성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도 2007년도에는 당초 7개소에서 2008년도 강원(속초), 인천(연평) 2개소를 추가하여 총 9개소로 사업을 확대하였으며 향후 전국연안적지에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자원환경과 사무관 장귀표)

라. 총 허용어획량제도

TAC(Total Allowable Catch ; 총허용어획량)제도란 개별어종(단일어종)에 대한 연간 총허용어획량을 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자원관리제도로, 「유엔해양법협약」 발효에 따른 연안국의 어업자원에 대한 관할권 강화 및 전통적 어업관리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한 제도이다.

정부에서는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그 동안 수산업법(1995년 12월) 및 수산자원보호령(1996년 12월)을 개정하여 시행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TAC 할당, 어획실적보고, 지도·단속 등의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1998년 4월)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한 바 있다.

2008년에는 고등어·정어리·전갱이(대형선망어업), 붉은대게(근해통발어업), 대게(근해자망, 통발), 개조개·키조개(잠수기어업), 제주도소라(마을어업) 및 꽃게(연근해 자망, 통발 : 연평어장과 서해특정해역 한정) 및 오징어(근해채낚기, 대형선망, 대형트롤, 동해구트롤) 등 10개 어종에 대하여 TAC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오징어 자원의 지속적인 자원관리를 위하여 지난 2004년부터 2005년 까지 도상연습을 실시한 후 4개 업종 민간 자율조정협의회를 거쳐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1차년도 오징어 TAC를 실시하였으며, 2009년 TAC의 실시를 위하여 도루묵과 참홍어의 도상연습을 2008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였다.

한편, TAC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TAC할당량에 대한 어획량 관리가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주요 위판장을 중심으로 전국 11개 시·도에 43명의 읍서비요원들을 배치하여 어획량관리, 수산자원의 과학적 자료수집, 관련법령 준수확인 등 적극적인 자원관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표 4-2-5〉

2008년도 어종별 총허용어획량 현황

(단위 : 톤, %)

대상업종	대상어종	TAC(총허용어획량) 현황		
		TAC	소진량	소진율
대형선망	고등어	159,000	147,945	93.0
	전갱이	21,000	10,967	52.2
	정어리	5,000	0	0.0
근해통발	붉은대게	27,700	27,467	99.2
잠수기	개조개	3,200	2,141	66.9
	키조개	3,200	2,898	90.6
마을어업	제주도소라	1,500	1,357	90.5
근해자망통발	대게	1,500	1,120	74.7
연근해자망통발	꽃게	6,890	6,420	93.2
근해채낚기, 대형선망, 대형트롤, 동해구트롤	오징어	250,000	160,014	64.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자원환경과 서기관 박환준)

마. 수산자원관리수면

수산자원관리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위해 2003. 7. 15 시행된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0조에 “인공어초 또는 바다목장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예정인 수면”에 대해 시·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 관리·이용토록 의무화함에 따라 시·도에서 2008년 말 현재까지 59개소 / 6,877ha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동 수면에 대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자원환경과 사무관 차태황)

3. 양식어업 육성

가. 양식어장 개발

2008년도 양식어장개발은 수산업의 대외 개방에 대비하고 양식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발정책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수입이 급증하거나 급증할 우려가 있는 경쟁력 취약품종, 종묘 확보 곤란 및 수급 불균형으로 안정생산이 필요한 품종의 신규어장 개발금지 와 유효기간 만료 후 재개발 시 일정 부분을 축소하도록 하였고, 국가 공익사업이 예정된 수면이나 각종 재해 또는 어장환경 오염 등으로 어업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예상되는 수면에 대하여도 신규 어장개발을 금지하고, 부실관리 또는 생산실적이 부진한 어장은 동일 어장으로 재개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품종개발을 위하여 다랑어, 고등어 또는 외해(수중)가두리양식 및 키조개 살포식 양식어장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시험어업을 거쳐 해당 양식어장으로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해역별 특성, 종묘 수급문제 등을 검토한 후 어장개발을 허용하며, 국가공익사업으로 인한 유희수면에 대한 활용을 위하여 한정어업면허의 개발과 기존어장의 여건변화로 양식이 곤란할 경우 적정품종으로의 대체개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다.

(양식산업과 사무관 임남철, 김종견)

나. 환경친화형 양식기반 시설 확충

최근 양식어업의 국제적 화두는 지속적 양식어업을 위한 책임있는 양식어업, 그리고 환경친화적 양식어업의 실현이다. 지속적 양식어업은 지속적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에서 유래된 것으로, 현재는 양식어업이 지니는 여러 환경생태적 요인을 추가한 환경친화적 양식어업의 개념

으로 확장되어 쓰이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 양식어업의 개념은 주로 자원 보호와 환경친화적인 양식기술의 개발과 친환경적 양식장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환경보전적 저투입 양식어업으로까지 확장되어 발전되고 있다. 양식어업은 여전히 제한된 수역과 한정된 일부 종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물론 양식기술과 과학의 발달에 따라 인류의 어업자원에 대한 인공적 통제범위와 양식종이 늘어나겠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 환경적, 경제적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양식어장의 80% 이상이 남해 연안의 내만에 집중되어 있으며 장기간의 과밀 양식으로 어장이 오염되고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 국제적(FAO 등)으로도 양식어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부에서는 양식장의 환경수용력과 수급변화 등에 유연한 대처를 위해 어장의 적정 이용과 어장관리로 어장환경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양식어업이 향후 경쟁력 있는 양식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친환경양식 제도정착 및 친환경양식기반시설 지원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08년도의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환경친화형 양식어업을 통한 지속적 생산 증대를 위하여 33,720백만원(농특회계 14,800, 균특회계 9,320, 수발기금 9,600)을 투입·지원하였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 7,150백만원, 친환경양식기반시설구축지원 5,800백만원, 김육상채묘및냉동망보관시설 2,750백만원, 양식어장정화사업 5,150백만원, 적조방제사업 570백만원, 양식어업시설지원 9,600백만원이다.

(양식산업과 사무관 김중견)

4. 내수면어업 개발

어류의 원활한 산란을 유도하고 산란한 알을 보호함으로써 내수면 수산 자원 증강을 위해 댐·호수 등에 “내수면 인공산란장” 6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단순 소비(횃감, 매운탕 등) 형태의 민물고기를 국제적 기준(HACCP)에 맞는 제품으로 개발하고 소비시장을 확대하여 내수면어류의 소비확대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송어 가공공장을 강원도 영월군에 건립(총사업비 50억원)중이며, 메기, 자라 등 주요 품목의 가공공장 건립을 계속 확대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동해안의 연어자원 증강을 위하여 1967년부터 2008년까지 304백만 마리를 생산·방류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국립수산과학원, 강원도 내수면개발 시험장 및 경상북도 수산자원개발연구소 등에서 17백만 마리를 인공 부화하여 동해안 17개 하천 및 남해안 섬진강유역에 방류하였으며, 2008년도 포획량은 83천 마리로 전년 보다 9.7% 감소하였는 바, 이는 연어가 소상할 소상시기에 극심한 가뭄으로 하천의 수량이 대폭 감소한 것이 주된 이유로 보인다.

〈표 4-2-6〉

연어방류 및 채포 실적

(단위 : 천마리, %)

구 분	합 계	'67~'04	'05	'06	'07	'08	'08/'07
방류량	303,570	267,838	11,250	7,350	13,790	16,550	120.0
채포량	1,848	1,688	23	45	92	83	△9.7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자원환경과 서기관 김동욱)

5. 어장정화

어장환경의 보전·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식어장 정화사업과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2008년도에 마을어장 및 패류·해조류 어장 등 7,722ha에 대하여 어장정화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어장정화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어장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어장환경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008년도에는 전남 여수시 가막만에 위치한 가두리양식장의 바닥환경개선을 위한 3.6ha의 어류가두리 먼허어장을 대상으로 어장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전국 연안 양식해역의 어장환경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주관으로 남해안의 진해·거제·한산만의 굴·미더덕·우렁챙이 양식어장을 대상으로 어장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어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된 어장관리기본계획(2007~2011)에 따라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어장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어장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원환경과 사무관 이병웅)

6. 적조대책

2008년도 적조는 7월 30일 전남 여수시 가막만 하단 해역에서 최초 발생하여 전남 완도군 연안부터 울산시 울주군 해역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된 후 9.29일까지 장기간 지속되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었으나, 민·관 합동으로 적극적인 방제활동 등 총력 대응으로 '95년 적조발생조사 이후 최초로 수산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적조생물(Cochlodinium)은 일반적으로 연안수와 외양수가 만나는 전선대에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2008년에는 적조발생 초기에 냉수대의 발달과 강한 수온약층 및 강우량 부족에 의한 영양염 공급부족으로 증식 및 확산속도가 지연되었으며, 9월 중순 이후 수온이 점차 하강하여 적조가 소멸되었다.

적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민·관·군·경의 총력대응과 적조발생 초기에 인공위성, 화상통신망, 적조예보 자동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이용한 신속한 적조탐색과 적기예보·전파 등 적절한 대처와 동시에 농림수산식품부, 시·도(시·군), 수협, 해경, 어업인 등이 참여하는 등 총력 방제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2006년 6월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124호)」에 근거, NSC(위기관리센터)와 협의하여 작성된 「적조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시·도/시·군·구), 해양경찰청 등 관련기관이 협력하여 적조발생의 근원적인 예방 및 피해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방제활동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조로 인해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함에 따라 ‘농어업재해대책법’의 규정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어가에 대해 정부지원 등을 통한 복구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4-2-7>

코클로디니움 적조발생시기와 특징

구 분	'04	'05	'06	'07	'08
최초발생일	8. 5	7. 19	8. 6	7. 31	7. 30
소 멸 일	9. 3	9. 14	10. 30	9. 18	9. 29
지 속 기 간	30일	58일	36일	50일	62일
최 초 발 생 지 역	거제 둔덕, 남부 여차	나로도 인근	가막만 하단	나로도 인근	가막만 하단
발 생 범 위	완도~거제	완도~거제	완도~남해	완도~울진	완도~울주
발 생 건 수	65건	39건	28건	33건	38건
최 고 밀 도 (개 체/ml)	6천	25천	22.5천	32.5천	7.3천
수 산 피 해	1.2억원	10.6억원	0.7억원	115억원	-
소 멸 요 인	기상변동, 종간경쟁	태 풍 “나비”	수온하강	태 풍 “나리”	수온하강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양식산업과 사무관 박형구)

7.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산동·식물의 산란·서식환경을 보호하고 수산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해면과 인접 육역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여 왔으며, 현재 천수만, 영광, 완도, 득량만, 여자만, 가막만, 남해·통영 I, 남해·통영 II, 한산만, 진동만 등 10개만(21개 시·군)에 3,868km²(해면부 2,625km², 육지부 1,243km²)가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후 20여년이 지남에 따라 해역이용이나

지역여건 등이 많은 변화가 있었고, 「수산자원보호구역」 주민들이 행위제한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04년 말까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연안육역에 위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조정기준안을 마련(2006. 10. 11)하여 관련 시·군으로 하여금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여, '08.12.31기준 현재 21개시·군 중 16개 시·군의 조정이 완료되어 육지부 1,243km²의 64%인 796km²를 해제하였다.

〈표 4-2-8〉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현황('08년 말)

구역	지정면적(km ²)			조정후(육지)		최초 지정	
	계	육지(A)	해면	면적(B)	비율(A-B)/A		
합계	3,868.08	1,243.03	2,625.05	447.12	64.0%		
충남 (1)	천수만(4개시·군)	213.45	82.67	130.78	46.23	44.1%	'78.11.
전남 (5)	완도, 함평만, 가막만, 여자만, 득량만(11개시·군)	2,164.61	768	1,396.61	241.15	68.6%	'82. 1.
경남 (4)	한산만, 진동만, 남해·통영 I·II(6개시·군)	1,490.02	392.36	1,097.66	159.74	59.3%	'75. 3.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자연환경과

(자원환경과 사무관 차태황)

제2절 신 해양질서에 맞는 연근해어업 재편

1. 어업구조조정 및 재편

우리나라 수산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어획으로 감소 추세에 있던 연근해 어획량이 어선감척, 자원회복정책 등의 영향으로 수산자원량과 연근해 어획량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아직도 어업자원량에 비해 어선세력이 10~37% 과도한 실정이다.

* 자원량 (만톤) : 920('84) → 820('92) → 790('00) → 829('08)

* 어획량 (만톤) : 124('84) → 108('92) → 110('00) → 129('08)

이에 정부에서는 체계적인 자원관리를 위해 어선감척, TAC, 자율관리어업 등을 통해 2015년까지 생태계 보유가능 최적 수산자원 1,000만톤 및 어획량 증대를 목표로 수산자원회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08년도 어업구조조정사업은 고유가로 인한 출어포기 등 어업경영 여건이 악화됨에 따른 '고유가 민생안정 대책'으로 추경예산 2,350억원을 포함, 3,685억원을 투입 연안어선 4,852척, 근해어선 352척을 감척하였다.

그러나 '08년말 이후 유가안정, 어획상황 개선 등으로 감척수요 감소 및 집행이 부진함에 따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참여어업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잔존자 부담, 의무적 감척 등 「어업 구조조정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감척에 따른 실적어선원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바, 전업이나 재취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법령 마련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어업정책과 서기관 박상호)

2. 자원관리형 어업생산구조 정착

가.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추진

현재 어업인이 사용하고 있는 어구는 유실시 해류에 의해 흘러 다니면서 물고기를 얽혀 죽게 하고, 해저 바닥에 쌓여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을 파괴시키며 해저에 쌓인 어구를 인양하기 위해서는 노동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등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시책에 큰 장애가 되고 수산업의 피해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중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생분해성어구 개발을 추진하여 2007년도에는 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북도 대게 자망어업을 대상으로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에 착수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30억원을 지원하여 대게자망, 붕장어통발어업을 대상으로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어업인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생분해성 대게자망 어구의 어획성능은 현재 어업인이 사용하고 있는 나일론자망과 대등하며, 2년 정도 지나면 해양의 미생물에 의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며 분해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은 독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해양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생분해성 대게자망 시범사업은 국내에서 개발된 생분해성 수지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방사, 편망 및 열처리과정을 거쳐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내 제망업계 등 관련산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연근해 오징어채낚기 집어등 광력기준 하향조정

오징어채낚기어업은 집어등을 사용하여 오징어를 유집하는 어법으로 타업종에 비해 유류소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적으로 톤급별 최대전력 집어등을 사용함으로써 어업경영난 악화를 초래되어 어업인간 집어등 광력의 하향조정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자율적 조정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집어등 광력기준을 어업인, 지자체, 국립수산물과학원 등의 의견을 수렴 및 검토를 통해 어업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08.8.1일자로 공포·시행하였다.

집어등 광력기준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연안어선은 1척당 연간 약 775만원, 근해어선은 약 3,5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되어 전체적으로 근해어선 600여척, 연안어선 1,000여척에서 연간 약 280억원의 유류비 절감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집어등 시설 축소에 따른 유지보수비에서 연간 약 29억원(연안 58만원/척, 근해 384만원/척) 절감 예상되어지며, 고광력 집어등에 의한 트롤어선과의 불법공조조업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어업정책과 사무관 이세오)

3. 어업질서확립

가. 연근해어업 여건변화와 신 어업질서 확립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이후 체결된 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으로 당사국들은 각기 상대국 수역에서 조업제한을 받게 되었다. 주변국은 어업협정에 따라 어획할당량 제한, 입어척수 규제, 조업수역을 제한하는 등 자국 수역에서의 자원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EEZ 및 연근해 어장에서의 지속적인 어업생산과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내는 물론 외국적 불법어선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선결과제로 대두되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국내외 어선들에 의해 자행되는 불법어업근절을 위해 해경,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상 및 육상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불법어업 단속과 민간자율 감시기능 강화와 어업인의 준범의식 고양을 위해 TV를 활용한 공익 캠페인, TV다큐멘터리 제작 방영, 담화문 발표

및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선을 확대 지정·운영하였다.

2008년도 한 해 동안 적발된 불법어업 건수는 총 4,449건으로 이를 유형별 살펴보면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어선의 어구위반과 조업구역위반 등이 1,863건, 무허가 등 기타어업이 2,586건이었으며, 업종별로는 기선형망어선 136건, 대형기선저인망 60건, 중형기선저인망 41건이었으나, 소형기선저인망은 18척이었다

한편, 우리수역에서 불법조업행위로 단속된 중국어선은 모두 432건으로 영해침범 조업 및 무허가 79건, 특정금지구역 침범 41건, EEZ 위반조업이 312건이었다.

〈표 4-2-9〉

불법어업 단속실적

(단위 : 건, %)

구 분	'03	'04	'05	'06	'07	'08	'08/'07
합 계	2,067	3,673	4,054	3,015	3,773	4,449	118%
소형기저	882	904	201	61	42	18	43
중형기저	36	40	23	30	7	41	586
대형기저	21	64	70	48	113	60	53
기선형망	46	243	192	194	203	136	67
잡 수 기	26	80	98	73	67	120	18
기 타	1,056	2,342	3,470	2,609	3,341	4,074	122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

나. 안전조업 지도

근해에 출어하는 어선들의 안전조업지도를 위하여 「연근해 어선안전조업 지도대책」을 수립·시달하는 한편, 성어기별 주요 어장에 어업지도선을 배치하여 어로보호 및 조업분쟁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다.

특히 대화퇴·동중국해 등 먼 어장에는 복지모선으로 하여금 조업중인 어선들에 대하여 유류 및 식수 공급과 더불어 긴급환자에게는 치료와 구급약을 제공하는 등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경 등과 협조하여 조난어선 발생시 구조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표 4-2-10〉

어업인 보급지원 및 조난어선 구조 실적

(단위 : 척, 명)

지 원 내 용	'04	'05	'06	'07	'08
식 수 공 급	10	-	10	2	1
유 류 공 급	-	2	18	1	2
의 료 지 원	24	9	20	29	22
조난어선구조	-	13	19	24	1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

또한, 전국 주요 항·포구 15개소의 선박출입항신고소(통제소 및 합동신고소)에 배치된 어선안전점검요원 56명을 통하여 출항어선에 대한 항해·통신장비 점검 및 선원수첩 소지, 어선원 안전조업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게 함으로써 출어선에 대한 월선·피랍사고를 예방하고 해양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였다.

〈표 4-2-11〉

어선원 교육 및 안전점검 실적

(단위 : 명, 척, %)

구 분	'03	'04	'05	'06	'07	'08	'08/'07
어 선 원 교 육	60,450	58,349	56,825	55,964	54,549	49,128	90.6
어선안전점검	57,350	77,636	100,237	117,972	108,633	106,769	98.3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

다. 어업정보통신국 운영

정부에서는 1965년 한·일 어업협정 발효에 따른 협정업무 이행, 연근해 어선 안전조업지도 업무수행 및 EEZ내 입출역선 관리를 위하여 수협중앙회(어업정보통신국)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매일 조업어선의 동태파악, 월선·피납방지, 어업기상예보 방송과 태풍·풍랑 등 기상 악화시 조업어선의 안전한 항·포구 대피지도, 통합방위법에 의한 의사선박 발견시 긴급보고 통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EEZ내 아국 및 인접국 출어선의 위치와 조업실적을 파악 관리하고, 해·어황 예보와 어가유통정보방송을 실시함으로써 연근해 어업인의 안전조업과 생산 활동을 지원도 하고 있다.

어업정보통신국은 전국 36개소(유인국 17, 무인중계소 19)에 17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8년도 어업정보통신국의 주요 운영실적은 교신가입어선 10,979척을 대상으로 2,092천통의 무선전보를 송·수신 처리하였다.

또한 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에 의한 EEZ 출어선에 대한 위치, 어획 실적보고 157천통, 입역 및 출역통보 46천통 등을 수행함으로써 일본 및 중국수역에 출어하는 우리 어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표 4-2-12〉

어업정보통신국 운영지원 실적

(단위 : 백만 원, %)

구 분	'03	'04	'05	'06	'07	'08	'08/'07
합 계	10,928	11,480	12,156	11,837	12,249	12,616	102.9
인건비(운영비)	10,300	10,976	11,305	10,984	11,340	11,423	100.7
시설보강사업비	628	504	851	853	909	1,193	131.2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

라. 어업질서확립 지도·홍보 강화

불법어업의 조기근절은 무엇보다 어업인의 의식전환과 대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므로 어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2009년에 법무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 3부 합동으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대 국민담화문을 발표하였고, 불법어업예방을 위한 TV영상홍보물을 제작하여 공영방송사인 KBS-TV를 통하여 송출 하였으며, TV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영(55분) 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였다. 또한, 불법어업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이 우수한 10개 어촌계를 선정·포상하여 어업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하도록 어촌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어업인 준법의식 확산 등 어업질서의 조기 확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도안전과 사무관 김남웅)

제3절 수산물 유통개혁과 가공산업 육성

1. 수산물 가격안정

가. 정부 비축사업

명태·오징어 등 주요품목을 주 생산 시기에 산지수협을 통해 적정량을 수매하여, 성수기 주요 소비지에 방출함으로써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해 주고, 소비자에게는 가격안정으로 원활한 구매를 지원해 오고 있다.

2008년에는 냉동오징어·냉동고등어·냉동명태 등 3개 품목 6,127톤을 수매할 계획이었으나, 대품규격 냉동고등어 생산량 저하 및 하반기 냉동명태 국내 반입 물량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계획대비 78% 수준인 총 4,838톤(157억원)을 수매하여 수급조절 및 시장 활성화를 기하였다.

〈표 4-2-13〉

2008년도 정부비축사업 실적

(단위 : 톤, 백만원, %)

구 분	계 획 (A)		실 적 (B)		대 비 (B/A)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합 계	6,127	17,500	4,838	15,693	78.9	89.6
냉 동 고 등 어	1,222	5,500	1,215	4,089	99.4	74.3
냉 동 오 징 어	3,500	7,000	2,584	6,993	73.8	99.9
마 른 오 징 어	225	3,000	209	2,995	92.8	99.8
냉 동 명 태	1,180	2,000	830	1,616	70.3	80.8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나. 민간 가격안정사업

2008년도 민간가격 안정사업에 1,365억원을 지원하여 오징어·명태·조기·갈치·김 등 410천톤을 수매하였다.

부문별로는 원료수매 지원사업에 1,069억원을 지원하여 268천톤을 수매하였고, 유통보관 지원사업에 296억원 142천톤을 수매함으로써 가격안정 및 수산물 유통에 크게 기여 하였다.

또한,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산지수협 위판장(공판장 포함)에 출하촉진을 위한 기금 840억원을 지원하여 1,370천톤의 물량을 원활히 유통되도록 하였고, 도매시장의 출하촉진을 위하여 34억원을 지원하는 등 수산물유통증진 및 상품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다. 수급 및 가격관리 강화

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년도 재고 및 2008년도 생산·수입·수출 등 수급동향을 수시로 파악,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등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설날 등 성수기 성수품목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설날대책기간”, “추석대책기간”을 정하여, 명태·고등어 등 수요과다 품목을 중심으로 정부 비축품을 방출하는 동시에, 민간 보유량의 출하도 권고하는 등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물가지도반을 상설 운영하여 재고조사 및 출하독려 등 수급조절기능을 보완하였다.

(수산정책과 사무관 김경남)

2. 유통구조 개선

가. 유통시설 확충

수산물 유통기반 시설확충을 통하여 신속한 양륙과 원활한 공급처리를 위해 2008년도에 33,203백만 원을 투입하여 위판장 5개소, 직매장 11개소,

부산국제 수산물도매시장 건설,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사업 및 수산시장 시설개선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2008년에는 기존의 유통시설 기능인 먹거리 제공과 더불어 볼거리 및 즐길거리 기능이 복합된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4-2-14〉

2008년도 수산물 유통보급시설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물 량	사 업 비				
		계	국 고	용 자	지방비	자 담
합 계	54	57,312	33,203	6,138	9,079	8,892
수 산 물 위 판 장	5	5,530	2,212	-	1,659	1,659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건설	1	22,714	15,900	6,138	676	-
수 산 물 직 매 장	11	4,400	1,320	-	880	2,200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	3	7,000	3,500	-	3,500	-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1	4,286	3,000	-	-	1,286
수 산 물 유통 물 류 센 터	3	6,142	3,071	-	-	3,071
수 산 시 장 시 설 개 선	30	6,676	4,200	-	2,364	676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나. 유통기능 강화

연근해(양식 포함) 수산물 생산량 2,668천톤의 51.8%인 1,382천톤을 산지 수협에서 상장 매매함으로써, 어업인 수취가격 제고 및 어획물의 신속 분산·유통을 촉진하였으며, 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 취급물량은 374천톤으로 국내소비량 4,280천톤의 8.7%를 취급하였고,

이 중 도매시장법인이 262천톤으로 70.1%, 수협공판장에서 102천톤으로 27.3%, 상장이외 물량이 10천톤으로 2.6%를 취급하였다.

그리고 산지위판장(22개소)과 소비지도매시장(8개소)의 시설개선 사업을 위해 4,200백만원을 투입하였고, 신선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을 공급하도록 중도매인 등 유통중사자와 생산 어업인에 대한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수산물의 규격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수산물 33개 품목에 대하여 표준거래단위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표준규격으로 출하시 수발기금에서 150억원을 연 3%의 저리로 생산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수산사업자 등에 지원하였다.

수도권 3대 수산물도매시장의 실질경매제 조기정착 유도 및 출하량 확대를 위해 스티로폼 어상자 425만개의 구입비 80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수산물유통정보의 실시간 제공을 위한 2002년까지 73개 산지수협의 정보화를 추진한 결과, 수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www.infofishnet.co.kr) 구축을 통하여 산지수협의 위판정보(물량, 가격 등)를 어업인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도매시장의 경락정보 제공을 위하여 강동수산 등 11개 도매시장에 경락정보 DB를 구축하였고, 경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강동수산 등 3개소에 전자경매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3년부터 추진한 영어조합법인등 520개 어가의 홈페이지 구축과 이들 어가등이 참여한 수산물 사이버 직거래 쇼핑몰인 인터넷수산시장(www.fishsale.co.kr)의 매출액이 크게 증가(2007년 942백만원 → 2008년 1,068백만원) 하였다.

(수산정책과 사무관 이상영)

〈표 4-2-15〉

수산물 규격출하촉진 지원대상품목과 거래규격

품 목	거래단위	거 래 단 량	포 장 재
마른멸치	봉지, 상자	500g, 1kg, 1.5kg, 2kg	비닐, 골판지
북 어	봉지, 상자	5마리, 10마리	비닐, 골판지
마른오징어	봉지, 상자	5마리, 10마리	비닐, 골판지
굴 비	상 자	5마리, 10마리	골판지
김	봉 지	10장	비닐
마른미역	봉 지	5장	비닐
마른실미역	봉 지	20g, 50g, 100g, 250g	비닐
마른썰은미역	봉 지	20g, 50g	비닐
쥐 치 포	봉 지	200g, 500g, 1kg	비닐
마 른 새 우	상 자	500g, 1kg, 2kg, 3kg	골판지
마른문어	축	5마리, 10마리	비닐, 골판지
뱅 어 포	속	5장, 10장	비닐, 골판지
마른까나리	상자	500g, 1kg, 2kg, 3kg	골판지, 지대
간 미 역	봉지, 상자	200g, 500g, 1kg, 3kg, 5kg, 10kg	PE필름, 골판지
새 우 젓	통, 병	1kg, 3kg, 5kg, 10kg	PE용기, 유리용기
멸 치 젓	"	1kg, 3kg, 5kg, 10kg	P.E용기, 유리용기
어리굴젓	"	200g, 500g, 1kg	유리용기, 합성수지
굴	통, 봉지	200g, 500g, 1kg, 3kg, 10kg	비닐, P.E용기, P.S상자
바 지 락	포 대	500g, 1kg, 3kg, 5kg, 10kg, 20kg	P.E그물망
피 조 개	통	500g, 1kg, 3kg, 5kg, 10kg	합석, 스티로폴
고 막	포 대	500g, 1kg, 3kg, 5kg, 10kg	P.P포대
우렁챙이	통	500g, 1kg, 3kg, 5kg, 10kg	스티로폼
홍 합	포 대	500g, 1kg, 3kg, 5kg, 10kg	면직물, 합성수지
고 동 류	상 자	10kg	골판지
미 더 덕	상 자	1.5kg, 2kg	스티로폴
오만둥이	상 자	1.5kg, 2kg	스티로폴
꽃 게	상 자	3kg, 5kg, 10kg	골판지, PVC
냉동오징어	"	2kg, 4kg, 5kg, 8kg, 10kg, 15kg, 20kg	골판지
명 태	"	1kg, 3kg, 5kg, 10kg, 15kg, 20kg	스티로폴, 골판지
조 기	"	1kg, 3kg, 5kg, 10kg, 15kg, 20kg	스티로폴, 골판지
고 등 어	"	kg,3kg,5kg,8kg,10kg,15kg,16kg,20kg	스티로폴, 골판지
갈 치	"	1kg, 3kg, 5kg, 10kg	스티로폴, 골판지
삼 치	"	1kg, 3kg, 5kg, 10kg	스티로폴, 골판지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김 1매의 크기 : 가로 206mm, 세로 189mm 이상, 마른미역 1장의 규격 : 가로 75cm, 세로 15cm 이상

<표 4-2-16>

수산부류 도매시장 거래물량

(단위 : 톤, %)

구분	시장명	법인명	'03	'04	'05	'06	'07	'08	'08/'07	
중 앙 도 매 시 장	합계(18)	29	379,197	385,851	384,547	382,049	382,373	373,613	△2.3	
	소 계(6)	14	255,835	252,742	247,325	255,457	255,617	249,661	△2.3	
	가 락 동	소계		125,685	123,928	121,152	124,311	122,530	117,781	△3.9
		강동수산		70,407	70,234	66,061	63,626	61,973	59,027	△4.8
		수협공판		25,206	25,860	26,308	29,318	29,252	27,144	△7.2
		서울건해		23,491	20,922	20,684	22,404	22,252	22,775	2.3
		상장예외		6,581	6,912	8,099	8,963	9,053	8,835	△2.4
	노량진	노량진(주)	105,200	102,191	98,102	98,300	101,049	99,336	△1.7	
	부 산	소계		-	-	-	-	-	7,371	-
		감천시장		-	-	-	-	-	1,640	-
		피더블유		-	-	-	-	-	73	-
		수협공판		-	-	-	-	-	5,658	-
	대 전	소계		6,824	6,102	6,269	6,107	7,822	8,185	4.6
		대전수산		6,410	5,627	5,663	5,520			
		한밭건해		414	475	606	587			
	대 구	소계		10,894	13,116	14,815	19,464	16,888	9,533	△43.6
		대구수산		6,740	7,557	8,174	11,466	9,418	4,877	△48.2
		대구종합		4,154	5,559	6,641	7,998	7,470	3,481	△53.4
		신화수산		-	-	-	-	-	1,175	-
	울 산	소계		7,232	7,405	6,987	7,275	7,328	7,455	1.7
중앙수산			3,192	3,215	3,206	3,473	3,285	3,417	4.0	
수협공판			3,183	3,673	3,217	3,098	3,368	3,350	△0.5	
울산건해			857	517	564	704	675	688	1.9	
지 방 도 매 시 장	소계(10)	13	96,178	107,175	109,632	100,063	99,307	96,005	△3.3	
	구 리	소계		58,777	59,847	60,447	55,571	56,151	53,718	△4.3
		강북수산		24,176	22,896	25,289	24,348	25,351	26,243	3.5
		수협공판		34,600	35,394	34,310	30,404	29,799	26,502	△11.1
		상장예외			1,557	848	819	1,001	973	△2.8
	수 원	소계		4,114	5,594	6,292	6,323	8,155	8,445	3.6
		수원수산		1,306	2,446	2,829	3,039	3,913	3,828	△2.2
		수협공판		2,808	3,148	3,463	3,284	4,242	4,617	8.8
	청 주	청주수산		2,948	2,501	2,223	2,183	1,958	2,088	6.6
	안 산	소계		3,667	4,077	4,317	4,582	4,576	4,974	8.7
		안산수산		3,223	4,010	4,242	4,507	4,536	4,974	9.7
		상장예외		444	67	75	75	40	-	-
	진 주	소계		3,620	3,484	3,159	3,686	3,008	3,061	1.8
		진주수산		1,947	1,982	1,801	1,925	1,688	1,761	4.3
		수협공판		1,673	1,502	1,358	1,761	1,320	1,345	1.9
		안양평촌		16,250	18,481	18,878	13,542	12,061	11,166	△7.4
	충 주	충주수산		959	863	861	935	808	728	△9.9
	익 산	이리수산		1,064	1,350	1,307	1,516	1,262	1,276	1.1
	광 주	수협공판			5,893	7,128	6,484	6,461	5,387	△16.6
	포 항	포항수산		4,022	4,516	4,479	4,826	4,764	5,162	8.4
경 주	경주수산		757	569	541	415	103	-	-	
단 독 공 판 장	소계(2)	2	27,185	25,934	27,590	26,529	27,449	27,947	1.8	
	강 서	수협공판		21,678	20,773	22,403	21,694	22,670	23,724	4.6
	대 구	수협공판		5,507	5,161	5,187	4,835	4,779	4,223	△11.6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표 4-2-17>

수산부류 도매시장 거래금액

(단위 : 백만원, %)

구분	시장명	법인명	'03	'04	'05	'06	'07	'08	'08/'07	
중 양 도 매 시 장	합계(18)	29	980,524	1,093,646	1,082,112	1,082,561	1,074,994	1,128,417	5.0	
	소 계(6)	14	714,823	777,167	766,329	785,176	788,347	831,297	5.4	
	가 락 동	소 계		347,838	385,961	392,390	394,242	388,399	404,353	4.1
		강동수산		152,709	179,870	168,481	168,516	159,608	162,154	1.6
		수협공판		67,198	73,901	72,248	73,518	73,485	73,366	△0.2
		서울건해		103,798	108,136	125,936	124,086	119,931	131,000	9.2
		상장예외		24,133	24,054	25,725	28,122	35,375	37,833	6.9
	노량진	노량진(주)	308,595	330,459	310,225	318,138	322,128	331,221	2.8	
	부 산	소 계		-	-	-	-	-	9,357	-
		감천시장		-	-	-	-	-	5,179	-
		피더블유		-	-	-	-	-	317	-
		수협공판		-	-	-	-	-	3,861	-
	대 전	소 계	15,026	15,280	15,260	16,178				
		대전수산	12,814	12,789	11,920	12,749		22,112	28,094	27.1
		한밭건해	2,212	2,491	3,340	3,429				
		소 계	21,781	25,600	27,295	33,428	31,880	31,740	△0.4	
	대 구	대구수산	13,013	14,731	15,846	19,232	18,603	15,872	△14.7	
		대구종합	8,768	10,869	11,449	14,196	13,277	9,075	△31.6	
		신화수산	-	-	-	-	-	6,793	-	
		소 계	21,583	19,867	21,159	23,190	23,828	26,532	11.3	
울 산	중앙수산	9,371	8,174	8,578	9,522	9,468	11,427	20.7		
	수협공판	7,742	8,033	8,332	8,813	9,664	10,451	8.1		
	울산건해	4,470	3,660	4,249	4,855	4,696	4,654	△0.9		
	소 계(10)	13	210,437	254,229	252,734	234,829	226,270	229,631	1.5	
구 리	소 계	118,813	126,250	119,932	114,438	116,611	128,292	10.0		
	강북수산	50,300	46,294	46,310	47,843	49,608	58,038	17.0		
	수협공판	68,512	73,833	67,362	60,258	59,864	63,358	5.8		
	상장예외		6,123	6,260	6,337	7,139	6,896	△3.4		
수 원	소 계	8,996	11,669	12,323	12,703	15,780	18,417	16.7		
	수원수산	3,486	5,886	6,003	6,207	7,685	8,803	14.5		
	수협공판	5,510	5,783	6,320	6,496	8,095	9,614	18.8		
청 주	청주수산	5,445	4,652	4,145	4,515	4,242	4,859	14.5		
안 산	계	7,434	13,145	11,906	11,749	11,174	13,066	16.9		
	안산수산	6,083	11,869	11,719	11,462	10,987	13,066	18.9		
	상장예외	1,351	1,276	187	287	187	-	-		
	소 계	11,672	11,901	11,523	12,352	9,433	11,487	21.8		
전 주	전주수산	5,760	5,885	5,663	5,562	5,162	5,344	3.5		
	수협공판	5,912	6,016	5,860	6,790	4,271	6,143	43.8		
안 양	안양평촌	42,902	50,874	53,081	38,067	28,689	26,931	△6.1		
충 주	충주수산	2,300	2,339	2,124	2,148	1,854	1,880	1.4		
익 산	이리수산	2,644	3,087	3,140	3,550	2,977	3,046	2.3		
광 주	수협공판		19,603	23,921	24,420	25,768	24,384	△5.4		
포 항	포항수산	8,041	9,031	9,004	9,649	9,528	10,325	8.4		
경 주	경주수산	2,190	1,678	1,635	1,238	214	-	-		
단 독 공 판 장	소 계(2)	2	55,265	62,250	63,049	62,556	60,377	67,489	11.8	
	강 서	수협공판	39,206	48,089	48,542	48,693	46,961	53,394	13.7	
	대 구	수협공판	16,059	14,161	14,507	13,863	13,416	14,095	5.1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3. 수산물 검사·검역

가. 수산물검사 강화

WTO체제 및 FTA체결 확산 등 수산물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민 위생안전을 위하여 수입수산물에 대한 위생조건을 강화하고, 다자간 협상보다는 양자간 협상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중국과 「한·중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시행한 이후 베트남(2003년), 인도네시아(2005년)에 이어 2006년도에는 태국과 「한·태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위생약정을 체결한 양국간에 수산물을 수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국 관리기관에 생산·가공시설을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된 시설에서 생산·가공한 수산물에 한하여 수출·입이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수출국의 검사기관에서는 수출 전 위해요소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검사를 실시하고 위생증명서를 발급하며, 상대국에 수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해양오염과 양식산업의 발달로 양식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르플록사신, 오플록사신, 폐플록사신, 린코마이신, 콜리스트린 등 동물용의약품의 기준·규격을 신설하여 정밀 검사 항목을 확대하였으며, 불량수산물의 수입차단을 위해 부적합 빈발품목에 대하여 중점관리 대상품목을 지정·운용하고 국내외 위해정보가 있는 경우 신속한 특별검사 등 검사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따리상의 휴대반입 수산물에 대하여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준·규격 미 설정 위해물질에 대한 기준설정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외 위해정보에 따라 신종 위해물질 및 사용 가능 항생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식약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외국의 수산식품 위해정보를 조기에 입수하여 인체 위해물질이 함유된 불량 수산물의 수입을 사전에 근절시킬 수 있는 검사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수입수산물 검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단체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자도 수입검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세청과 식품검사기관간 수입신고 단일창구를 구축함으로써 민원인이 검사기관 방문을 최소화하여 간편하고 신속한 통관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민서비스도 강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외국과 위생약정 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수출수산물의 생산·가공등록시설에 대한 조사·점검 및 모니터링 등을 강화함으로써 수입국 요구에 부합된 우량 제품의 생산을 유도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국내 생산·출하 전 단계의 수산물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제도를 활성화하여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성 확보로 불량수산물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및 외국으로부터 우리 수산물의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표 4-2-18〉

수산물 수출·입 검사실적

(단위 : 천톤, 백만\$, %)

구 분	2006		2007(A)		2008(B)		대비(B/A)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수 출	143	446	255	501	309	557	121	111
수 입	1,059	2,424	1,082	2,632	935	2,498	86	95

자료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한 공급으로 국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중성 어종과 오염 우려가 높은 해면 및 양식어종 45종 7,849건을 대상으로 항생물질·식중독균·중금속, 말라카이트그린(MG) 등에 대하여 생산·저장·거래 전 단계별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나. 검사기능의 강화

수산물시장의 전면 개방화에 따른 수입증가와 더불어 불량수산물의 반입도 증가하고 있어 수입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검사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으며, 정밀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국제공인시험기관(KORAS) 인정 확대를 추진하여 본원은 화학시험분야인 수은, 납, 카드뮴, 클로람페니콜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ISO/IEC 17025)을 취득하였으며, ISO/IEC 17025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영국의 FAPAS(Food An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가 주관하는 외부숙련도 프로그램에도 매년 참가하여 우수한 기술수준을 인정받고 있어 외국 선진 검사기관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분석 기술수준과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2008년도에는 액체질량분석기 등 첨단 분석검사장비 42종 103대를 확충하여 분석능력을 더욱 확대하였으며, 분석검사관에 대하여는 유기독성·항생물질·중금속 등 관련 10개 분야 33명을 국내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등 분석검사관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다. 수산동물 검역 확대

살아있는 수산동물 수출입 시 수산동물전염병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1.1.1부터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이식용 수산동물을 대상으로 검역을 실시하여 왔으나 수산물의 소비 증가로 중국, 북한, 일본, 러시아 등 50여개 국가로부터 살아있는 수산동물은 매년 15만여 톤이 수입되고 있어 수산동물전염병에 의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과 그 확산을 방지하고 수입되는 수산동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등 수산동물전염병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을 제정 2008.12.22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검역 대상은 종전의 이식용에서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국경검역 업무가 확대됨으로서 2008년도에는 3,788톤(62,774천 \$)의 수산동물 검역을 실시하였다.

〈표 4-2-19〉

수산동물 수출입 검역실적

(단위 : 건, 톤, 천\$)

구분	용도	2006년			2007년			2008년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총계		252	753	19,076	214	910	23,675	729	3,788	62,774
수입	계	237	738	18,997	196	857	22,489	710	3,746	62,499
	이식용	237	738	18,997	196	857	22,489	314	1,318	56,763
	식용	-	-	-	-	-	-	374	2,425	5,698
	관상용	-	-	-	-	-	-	22	3	36
수출	계	15	15	79	18	53	1,186	19	42	275
	이용용	15	15	79	18	53	1,186	19	42	275

자료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라. 수산동물 검역기능 강화

수산동물 국경검역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전국 13개 지원에서 수출입 국경검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에 따라 검역업무량이 증가함으로서 전문인력, 장비 등을 최대한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천, 부산, 통영, 강릉지원 등 4개 지원을 정밀검사 거점지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 김포, 김해 등 7개 국제공항 및 부산, 인천, 군산 등 6개 국제여객터미널 등 총 15개소의 CIQ에서 여행자 휴대물품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표 4-2-20>

지원별 CIQ 운영현황

CIQ 사무실 관장지원	CIQ 사무실 장소	비 고
인천공항지원	인천국제공항 여객청사 A구역, F구역	2개소
인천지원	인천항 국제여객선터미널1, 터미널2	"
서울지원	김포공항	1개소
평택지원	청주공항, 평택항	2개소
장항지원	군산항	1개소
목포지원	무안공항	"
부산지원	김해공항, 부산항	2개소
제주지원	제주공항	1개소
포항지원	대구공항	"
강릉지원	속초항, 동해항	2개소

자료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또한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에서 정한 11개 수산동물전염병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14개 수산동물전염병 등 총 25개 수산동물전염병을 관리하고 있으며, 검역결과 법령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산동물전염병 검출 시 전량 폐기(소각·매몰) 또는 반송 하는 등 외래질병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표 4-2-21〉

법령에서 관리하는 수산동물전염병

분 야	법	시행 규칙
바이러스 (18개질병)	노랑머리병, 돌돔이리도바이러스병, 잉어 봄바이러스병,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신 경괴사증,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전염성췌장괴사증, 타우라증후군, 흰반 점병	유행성조혈기괴사증, 전염성연어빈혈 증, 전복바이러스폐사증, 구상바쿨 로바이러스증, 사면바쿨로바이러스 증, 전염성피하 및 조혈기괴사증, 전염성근괴사증, 흰꼬리병
기 생 충 (4개질병)	-	자일로닥틸루스증(자일로닥틸루스살라 리스), 보나미아감염증(보나미아오스 트레, 보나미아익시티오사), 마르테일 리아감염증(마르테일리아레프리젠스), 퍼킨수스감염증(퍼킨수스마리누스)
진 균 (2개질병)	유행성궤양증후군	가재전염병
세 균 (1개질병)	-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아엔시스감염증

자료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사무관 조종학)

4. 수산물 수출·입 대책

가. 수입 개방에 따른 합리적인 수입 관리대책

우리나라가 1986년부터 3년간 국제무역수지 흑자를 실현함에 따라, 1989년 10월 26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 국제수지(BOP)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대해 “국제수지를 이유로 한 수입제한 허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이후, 정부는 수산물 수입자유화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개방을 실시하여 1997년 7월 수산물 수입을 자유화하였다.

이와 같은 전면적인 수입자유화로 우리 어업인이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저가수산물 수입으로 초래되는 시장질서의 교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수입이 급증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1992년부터 3개 품목에 대한 조정관세 부과를 시작한 이래 연도별로 대상품목 및 조정관세율을 조정·시행해 왔으며 2008년 조정관세적용품목으로 활뱀장어, 활돔, 냉동오징어 등 9개 품목을 지정·운영하였다.

(원양정책과 사무관 남현수)

나. 수산물 수출 진흥대책

우리나라 1차산업 중 유일하게 무역수지 흑자 기초를 유지해 왔던 수산업은 연근해 수산물의 생산 정체와 시장개방 등 국내외 여건 악화로 2001년도에 처음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이래 수출은 정체를 보인 반면 수입은 매년 늘어나 2008년에도 1,507백만\$의 적자를 보였다. 이러한 수입 증가는 국내 수산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수출이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점은 수산물 수출 진흥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진단을 통한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되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산물 수출증대를 통한 잘 사는 수산업·어촌을 실현하고자 2008년도에는 현장 맞춤형 수산물 수출지원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전남해역에서 다량 생산되는 전복의 원활한 유통 및 수출촉진을 위해

저장-선별-포장까지 일관 처리하는 수출용 전복 물류센터(2개소/10억원) 건립을 추진하여 수출증대를 위한 물류비 절감에 기여하였다.

또한 수산물 가공·수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물 수출주력업체 등에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한 우수수산물 수출 지원자금 1,369억원을 융자하고, 수출 주력 상품인 김 품질향상 및 안전성 강화를 통한 수출을 늘리기 위해 김(물김, 마른 김) 이물질 선별기(53대) 및 금속 탐지기(15대) 설치를 지원하고, 수산물수출가공선진화 단지를 부산 감천항에 건립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용역비2억원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해외시장 마케팅 전략 강화를 위하여 13억원을 지원하여 해외박람회 참가 12회 지원과 함께 수산물 Road Show, 판촉전 행사 등 별도의 기획 마케팅 활동을 전개(청도, 일본, 대만, 홍콩)하고, 주요 타깃시장의 바이어 및 소비자들에게 우리의 우수 수산물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2억원을 지원 수출상품 카탈로그(KOREA EXPORT SEAFOOD) 제작·배부(5,000부), 다양한 홍보매체(신문, 공항광고, 기내잡지, 박람회 가이드북 등)를 활용한 직간접 광고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수산물 수출최대시장인 일본에 대한 수출확대 추진과 한·일간 무역현안 해소를 위한 「한·일 무역실무회의」도 2회를 개최하였다.

수산물 수출업체가 필요로 하는 국내 생산량, 수출동향 및 일본·미국·중국 등의 해외시장정보 등을 담은 자료를 작성하여 매월 수산물 수출업체(500여개)에 메일링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수산물 수출증대를 위한 각종지원을 적극 실시하였다.

(원양정책과 사무관 전우진)

5.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가. 가공제품 생산

2008년도 수산물 가공제품 생산량은 1,797천톤으로 전년도 1,384천톤 대비 130%의 수준으로 증가되었으며, 처리 형태별·품종별 생산추이는 <표 4-2-22> 과 같다.

<표 4-2-22>

수산가공품 생산 추이

(단위 : 톤, %)

구 분	'04	'05	'06	'07	'08	'08/'07
합 계	1,528,795	1,559,201	1,546,784	1,384,000	1,797,036	130
○ 고차가공품	348,007	316,029	298,386	283,689	344,619	121
- 동결처리	60,047	57,213	52,102	72,958	57,717	79
- 통 조 립	159,638	138,585	149,487	119,584	73,578	62
- 한 천	458	443	329	171	206	120
- 연 제 품	96,581	88,290	69,350	72,913	107,435	147
- 조미가공품	22,486	19,759	19,500	13,421	96,699	721
- 어 유 분	8,797	11,739	7,618	4,642	8,984	194
○ 단순가공품	1,180,788	1,243,172	1,248,398	1,100,311	1,452,416	132
- 원형동결	993,030	965,868	980,958	992,564	1,100,107	111
- 건 제 품	53,064	58,343	69,259	37,094	68,989	186
- 염신장품	34,626	43,534	42,998	30,991	59,048	191
- 해조제품	71,265	153,597	135,668	13,659	157,779	1,155
- 기 타	28,803	21,830	19,515	26,003	66,493	256

나. 가공산업 지원

수산물 가공제품의 생산증대와 산지특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가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8년도에는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등 시설자금 307억원과 가공업체 운영자금 100억원 등 40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내용은 <표 4-2-23> 과 같다.

이와 별도로, 수산물 유통의 One-Stop 체제 구축과 원양어획물의 가공수출 등 물류센터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수산물종합가공단지 조성사업비 127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4-2-23>

가공업체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05		'06		'07		'08		'08/'07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합 계	37	19,251	45	26,929	53	24,390	64	40,681	167
○ 시설 자금	37	11,251	45	14,929	53	14,390	64	30,681	213
- 냉동냉장시설	4	4,611	3	3,389	4	3,000	9	9,850	328
- 가공시설현대화	3	1,560	4	3,600	6	3,000	5	3,000	100
- 산지가공시설	7	3,700	17	6,680	17	6,070	42	13,530	223
- 거점단지조성	-	-	-	-	-	-	1	1,522	-
- 기 타	23	1,380	21	1,260	26	2,320	7	2,779	120
○ 운영 자금	-	8,000	-	12,000	-	10,000	-	10,000	10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다. 수산물 품질인증제도 추진

수산물 품질인증제도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국가가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증표를 표시하여 시장에 출하하게 함으로써 수산물의 품질향상·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1993년 4월부터 실시된 제도로써 수산전통식품 품질 인증과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품질인증제도로 구분된다.

수산전통식품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 고유식품의 계승 및 육성을 위해 품목을 지정하고, 공장심사 및 품질심사 후 그 품질을 정부가 인증하여 상품에 「물레방아」 마크를 부착하여 출하하는 제도로써, 2008년 말 현재 젓갈류·죽류·게장류 등 5개류 47개 품목을 지정하여 82개 업체에서 인증을 받아 생산·출하하고 있으며, 1999년 최초로 송어 어란 제조 기능 보유자를 수산물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한 바 있다.

〈표 4-2-24〉

수산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분 류	대 상 품 목
젓갈류 (30)	○ 젓갈 : 오징어, 명란, 창난, 조개, 꼴뚜기, 까나리, 어리굴, 소라, 곤쟁이, 멸치, 대구아가미, 명태아가미, 토하, 자리, 새우, 오분자기, 밴댕이, 자하, 우렁챙이(멍게), 청어알, 가리비, 갈치속, 한치, 전복 ○ 액젓 : 멸치, 까나리, 청매실멸치, 새우 ○ 식혜 : 가자미, 명태
죽 류(6)	○ 북어, 대구, 전복, 홍합, 대합, 굴
게장류(3)	○ 꽃게, 민꽃게(돌게), 참게
건제품(2)	○ 굴비, 마른가닥미역
기 타(6)	○ 조미김, 고추장굴비, 채첩국, 양념장어, 부각류(해조류), 어간장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한편,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품질인증제도는 산지특산물을 대상으로 품질심사 후 그 품질을 인증하여 상품에 「品」자 마크를 표시하여 출하하는 제도로써, 인증대상품목은 수산물의 경우 건제품 15, 염장품 3, 해조류 9,

횃감용수산물 23, 냉동수산물 28개 등 78개 품목, 수산특산물은 조미가공품 9, 해조가공품 2개 등 11개 품목으로서 2008년 현재 115개 업체가 인증을 받아 생산·출하하고 있다.

〈표 4-2-25〉

수산물 품질인증 대상품목

분 류	대 상 품 목
건제품 (15)	○ 마른오징어, 덜마른오징어, 마른옥돔, 마른멸치, 마른한치, 마른꽃새우, 황태, 황태포, 황태채, 굴비, 마른홍합, 마른굴, 쫄면과메기, 마른뱅어포, 덜마른한치
염장품(3)	○ 간다시마, 간미역, 간고등어
해조류 (9)	○ 마른김, 마른돌김, 마른가닥미역, 마른썰은미역, 마른실미역, 마른다시마, 마른썰은다시마, 찢툰, 마른김(자반용)
횃감용 수산물 (23)	○ 신선·냉장품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방어, 삼치, 농어, 오징어, 붕장어, 우렁쉥이, 생굴, 홍어, 병어, 전어 ○ 냉동품 : 새조개, 피조개, 새우, 북방대합, 한치, 참치, 학공치, 홍어, 병어, 키조개(개아지살)
냉 동 수산물 (28)	○ 고등어, 갈치, 삼치, 뱀장어, 붕장어, 대구, 꽃게, 가자미, 참조기, 참돔, 눈볼대, 전갱이, 오징어, 문어, 쫄면, 청어, 새우, 옥돔, 굴, 병어, 민어, 홍어, 키조개(개아지살), 전복, 주꾸미, 명태, 붉은대게살(자숙, 각육) 붉은대게살(자숙, 봉육)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표 4-2-26〉

수산 특산물 품질인증 대상품목

분 류	대 상 품 목
조미가공품(9)	○ 조미취치포, 조미개량조개, 조미오징어, 조미썬오징어, 조미늘인오징어, 조미썰은취치포, 조미늘인취치포, 송어(훈제), 산천어(훈제)
해조가공품(2)	○ 다시마환, 다시마과립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또한, 수산식품의 안전성과 Well-being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 충족을 위한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는 친환경수산업 영위를 통해 생산된 수산물을 대상으로 친환경수산물인증 심사 후 그 품질을 인증하여 제품에 「」자 마크를 표시하여 출하하는 제도로서, 인증대상품목은 넙치, 굴, 김 등 7개 품목이지만 2008년도 제도가 처음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을 인증받은 업체는 없다.

〈표 4-2-27〉

친환경수산물인증 대상품목

구 분	수 산 물 명
양식어류(2)	○ 넙치, 무지개송어
양식패류(2)	○ 굴, 홍합
양식해조류(3)	○ 김, 미역, 톳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수산정책과 사무관 박희수)

제4절 지역 특성에 맞는 어촌·어항 개발

1. 어촌개발

가. 어촌종합개발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경제개발정책의 강력한 추진으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룬 반면,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도시 집중, 지역간 또는 도시·어촌 간 불균형, 환경오염 등 개발후유증의 문제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1980년대 중반까지의 수산정책도 증산지향 정책

위주로 추진되어 어촌개발은 투입 우선순위에서 밀려 날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어가 수는 1997년 100천호에서 2008년에는 71천 호로 줄어들었고, 도시가계소득에 대비한 어가소득 또한 1997년 74% 수준에서 2008년에는 67%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그 동안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1988년부터 시범적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어촌계별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어·패류양식 등 소득증대 사업과 도로 등 생산기반시설 및 상·하수도, 어업인복지회관 등 복지시설을 스스로 선택·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상향식 개발방식의 지원이라는 점에서 종전의 정부 사업방식과는 매우 다른 내용의 사업이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전국에 바다와 접하고 있는 연안시·군중에서 사업 대상 연안시·군이 65개임을 고려하여 “1개 시·군에 1개 어촌계씩” 65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하여 1988년부터 1992년까지 5년간 18,742백만원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65개 사업 실시 어촌계 중에서 27개가 연평균 15% 이상의 높은 소득 증가율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촌의 노인·부녀·장년·청년들이 이 사업을 통하여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고 협의하게 됨으로써 어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본 사업을 전국의 모든 어촌으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였다.

1994년부터는 여러 개의 어촌계를 묶어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총 230개 권역: 1단계 160개 권역, 2단계 70개 권역)하고 선정된 권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1994년 7월 농어촌발전특별세의 신설로 투입재원 5,432억 원을 확보한 후, 1995년도부터 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하여 당해연도에는 21개 권역에 525억원을 지원하였고,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2008년도까지 176개 권역에 6,008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4-2-28>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 실적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합계		'88~'92	'94~'06	'07	'08
	사업량	완료	225	65	152	-
계속		20	-	-	8	12
신규		16	-	-	16	-
사업비	619,593		18,742	526,531	35,531	38,7891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 주 : 1. 지원율:(1988~1992년) 국고 70%, 지방비 30%
 (1994~2003년) 국고 50%, 지방비 45%, 자담 5%
 (2004년 신규사업부터) 국고 80%, 지방비 15%, 자담 5%
2. 사업량 중 1988~1992년 기간은 어촌계수이며, 1994년 이후는 권역수임
3. 본 사업은 200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2003년부터는 2개년사업으로 추진
4. 2단계 70개 권역은 어촌계 수를 기준으로 대(50억이하)·중(40억이하)·소(30억이하)로 구분 시행

<표 4-2-29>

시·도별 어촌개발사업 지원실적('08년)

(단위 : 권역, 백만원)

구분	합계	부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권역수 사업비	20 38,789	1 1,750	1 2,000	1 2,125	1 2,125	9 17,655	1 2,125	5 9,500	1 1,509
권역명		기장· 기장	삼척· 원덕	태안· 태안2	고창 남부	여수 여자 고흥 여자남부 고흥 지죽 장흥 남부 완도 약산 완도 금일 진도 관매거차 신안 팔금 신안 장산	울진 죽변	마산 진동만 남해 강진만 사천사천해안 통영통영육지 남해 남면서부	제주 구좌서부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주 : 기본조사용역비는 제외된 수치임

지원규모는 1단계의 경우 권역당 평균 3,500백만원이고, 2단계의 경우 대(50억이하)·중(40억이하)·소권역(30억이하)으로 차등 지원하게 된다. 지원조건은 국고 80%, 지방비 15%, 자담 5%이며, 공공부문은 집행주체인 시·군으로 하여금 부담토록 하여 최대한 어업인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다.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지원하는 주요 내용은 선착장·물량장 등 어선계류시설,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수산특산물 가공·공동작업장 등 수산업관련 육상시설, 낚시터·직판장·관광낚시어선 등 어촌소득기반시설 등이며, 이 사업은 어업소득과 어업 외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와 환경개선을 연계시킴으로써 어촌정주체계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나. 어촌관광 활성화

어장축소와 어업자원의 감소 등 어업여건의 악화에 따른 어촌의 어업외 소득원을 개발하고, WTO/DDA, FTA 협상 등 시장개방 및 보조금 철폐에 따른 새로운 개념의 어촌지원을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민소득 증가 및 '주 40시간 근무제' 확산 등으로 어촌관광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어촌의 소득증대와 도시민의 휴식 공간 제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수립 및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 5월 도시/어촌교류방안등을 담은 「어촌관광진흥 종합대책」을 마련한 후 총사업비 4,732억 원을 투입하여 어촌관광모델 24개소(어촌어항 복합 공간 7개소, 다기능어항 6개소, 어촌관광단지 11개소)에 대한 어촌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는 한편, 어촌계장 등 어촌마을 리더그룹에 대한 어촌관광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어촌관광 마을 운영 컨설팅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1) 어촌관광 인프라 구축

가) 어촌관광모델

어촌관광진흥 종합대책(2004년)에 따라 「가고픈 바다, 살고픈 어촌, 다시 찾는 관광어촌」을 모토로 우선 어촌관광모델 개발을 통한 어촌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표 4-2-30> 과 같이 모델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까지 어촌·어항복합공간 6개소, 다기능어항 6개소, 어촌관광단지 11개소 등 23개소에 대한 기본설계를 마쳤고, 어촌관광단지인 무창포, 전촌항 등 3개소 및 다기능어항인 대포, 격포항 등 4개소에 대한 시설사업이 착수된데 이어, 어촌·어항복합공간인 마량항은 시범사업으로 시행 완료하였다.

2008년도에는 어촌·어항 복합공간 1개소(맥전포항), 다기능어항 2개소(대변, 지세포항), 어촌관광단지 4개소(대항, 초지, 야미도, 학림)에 대한 시설사업을 착수하였다.

특히, 어촌·어항복합공간인 마량항에 대한 어항부문 시설공사가 모델사업 중 최초로 준공됨으로써 본격적인 어촌관광의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표 4-2-30〉

어촌관광 모델개발사업(시범사업)

구 분	I형(복합공간)	II형(다기능어항)	III형(어촌관광단지)
개 념	◦ 기존어항·어촌 + 관광기능 ⇒ 어촌·어항복합공간	◦ 기존어항 + 관광기능 ⇒ 다기능어항	◦ 기존어촌 + 관광기능 ⇒ 어촌관광단지
사업기간	◦ 6개년('04~'13)	◦ 6개년('04~'13)	◦ 6개년('04~'13)
사업주체	◦ 농림수산식품부/지자체	◦ 농림수산식품부	◦ 지자체
사업 대상	◦ 7개소('04.12.15선정) 어유정항(인천시 강화군) 정자항(울산시 북구) 강릉항(강원도 강릉시) 마량항(전남 강진군) 양포항(경북 포항시) 맥전포항(경남 고성군) 모슬포항(제주도 남제주군)	◦ 6개소('04.10.25선정) 대변항(부산시 기장군) 대포항(강원도 속초시) 홍원항(충남 서천군) 국동항(전남 여수시) 격포항(전북 부안군) 지세포항(경남 거제시)	◦ 11개소('04.12.15선정) 대항(부산시 강서구) 초지(인천시 강화군) 대송(울산시 울주군) 전곡(경기도 화성시) 대진(강원도 동해시) 무창포(충남 보령시) 야미도(전북 군산시) 방축(전남 신안군) 전촌(경북 경주시) 학림(경남 통영시) 법환(제주도 서귀포시)
사업 규모	◦ 총 1,079억원 -개소당 150억원 · 어항부문:100억원 · 어촌부문:50억원 ·)국비:25억원 ·)도비:25억원 -기본및실시설계비 29억원	◦ 총 2,957억원 -개소당 500억원 · 국가어항부문:300억원 · 민자유치부문:200억원 * 대포항 372억원 -기본및실시설계비 85억원	◦ 총 696억원 -개소당 60억원 · 어촌부문:60억원 ·)국비:30억원 ·)도비:30억원 -기본설계및홍보비 36억원
주요 시설	◦ Fisherina, 녹지공원 복지회관, 생태체험장	◦ Seafood센터, 마리나 해상위락시설, 관광호텔	◦ 수변공원, 산책로 Seafood센터

※ 국회 등 외부기관의 유사사업 통폐합 지적에 따라 상기사업의 명칭을 통합 운영

- 어촌관광개발 : 어촌체험마을+ I 모델(어촌부분)+III모델(어촌관광단지)
- 다기능어항 : I 모델(어항부분)+II모델(다기능어항)

나) 어촌체험마을 조성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어업체험을 중심으로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 등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어업의 소득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12개 마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8년은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천 중구 무의동 무의도 포내마을 등 8개 마을을 조성하였다.

<표 4-2-31>

시·도별 어촌체험마을 조성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계	95	2	5	9	8	7	4	29	7	18	6
2001	9	1		2	1	1		1	1	1	1
2002	8	-	-	1	1	1	1	1	1	1	1
2003	11	1	1	1	1	-	1	2	1	2	1
2004	12	-	1	1	1	1	1	3	1	2	1
2005	18	-	1	2	1	3	1	5	2	2	1
2006	18	-	1	1	1	1	-	8	1	4	1
2007	11	-	-	-	1	-	-	6	-	4	-
2008	8	-	1	1	1	-	-	3	-	2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표 4-2-32>

연도별 어촌체험마을 투입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02년까지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사업량	112	17	11	12	18	18	11	8	
사업비	합 계	68,222	13,422	5,500	6,000	11,000	13,800	8,100	5,988
	국 비	34,111	6,711	2,750	3,000	5,500	6,900	4,050	2,994
	지방비	30,700	6,040	2,475	2,700	4,950	6,210	3,645	2,695
	자부담	3,411	671	275	300	550	690	405	299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다) 기타시설

1998년부터 “어촌민속전시관건립사업”을 추진하여 전국연안 어촌지역의 사라져 가는 전통 민속 문화를 발굴·보존·전시함으로써 어촌주민의 정신적·문화적 공간 제공과 지역간 균등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어업 발달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친 수산·친 해양교육의 산실을 마련코자 2006년까지 전남 완도(60억원)·경남 거제(60억원)·강원 삼척(60억원), 부산 북구(60억원), 경기 안산(60억원), 경북 영덕(60억원), 제주 북제주(60억원) 등 7개 지역에 420억원(국비 210억원, 지방비 210억원)을 지원하여 지역 관광인프라로 활용하는 등 현재 7개소가 개관하여 어촌과 수산업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어촌관광홍보 및 도시/어촌교류

가) 어촌관광홍보

2008년은 8억6천만의 예산을 투입하여 “아름다운어촌 찾아가기 행사(13회 927명), 여름휴가 어촌에서 보내기 캠페인 등의 추진과 농촌체험수기와 공동으로 어촌체험수기 공모를 실시하는 한편, 언론매체 및 지하철 광고판, 포스터 제작 배포 등 어촌관광 붐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표 4-2-33>

연도별 어촌관광홍보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어촌관광홍보	-	-	-	130	530	580	661	86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나) 도시/어촌교류

어촌인력의 고령화, 부녀화, 공동화의 지속으로 활력을 잃어 가고 있는 어촌을 되살리고자 도시와의 교류의 일환으로 2005년 5월 24일 어촌사랑 선포식과 함께 100개의 기업·단체와 100개의 어촌이 처음으로 자매결연 협약식을 체결하고 교류의 물꼬를 터 2007년까지 총 553개의 기업·단체와 어촌이 자매결연협약을 체결하는 외연확대와 함께 상호 방문 및 다양한 교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2008년에도 109건의 도시·어촌 자매결연을 추진함으로써 도시/어촌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수산개발과 사무관 최덕부)

2. 어항시설 확충

가. 어항개발의 개요

수산업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으로 구분하여 <표 4-2-34 참조> 지정권자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어항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표 4-2-34>

어항지정 현황

(’08.12.31기준)

구분	항수	지정권자	투입재원	비고
법정항	국가어항	110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비 100%
	지방어항	289	시·도지사	국비 80% 지방비 20%
	어촌정주어항	579	시장·군수·구청장	지방비 100%
비법정항	소규모항	1,334	시장·군수·구청장	지방비 10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나. 어항개발 현황

1) 국가어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개발하는 국가어항은 1972년 최초로 62개 항을 지정하여 개발을 착수한 이후 110개 항을 지정하여 개발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36,049억원 중 2008년까지 총사업비의 70.4%에 해당하는 25,375억원을 투입하여 90개 항을 완공하였으며 86.5%의 완공률을 보이고 있다.

〈표 4-2-35〉

시·도별 국가어항 현황

(단위 : 개항)

구분	합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항 수	110	3	5	2	1	14	8	6	31	15	19	6
완공항	90	2	4	2	-	13	5	5	25	14	15	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2008년에는 36개 항에 1,255억 원을 투입하여 계속 투입중인 전남 가거도 등 5개 항을 완공하고, 시범개발중인 전북 격포항 등 10개 다기능어항에 511억 원을 투입하여 울산 정자항을 완료하고 경남 맥전포항 등 5개 항을 개발 착수하였으며, 서망항 등 2개 항에 대한 정비계획도 수립하였다.

2) 지방어항

시·도지사가 지정·개발하는 지방어항은 1972년에 최초로 255개 항을 지정하고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완공율이 저조함에 따라 1994년부터 농특회계 재원을 투입하여 집중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에는 균형개발특별세 재원으로 51개 항에 637억원(국비 510억원, 지방비 127억원)을 투입 14개 항을 완공함으로써, 전체 284개 항 중 145개 항이 완공(완공율 51%)되었다.

<표 4-2-36>

시·도별 지방어항 개발 현황

(단위 : 개항)

구 분	합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항 수	284	13	15	4	5	14	28	12	91	23	61	18
완공항	145	10	10	4	4	5	17	3	36	11	35	1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3) 어촌정주어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개발하는 어촌정주어항은 2002년에 최초로 213개 항을 지정하였으며, 2008년 현재 575개 항이 지정되어 있으나, 지방어항의 완공율이 부진함에 따라 완공위주의 집중 투입을 위하여 어촌정주어항에 대하여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4-2-37>

시·도별 어촌정주어항 개발 현황

(단위 : 개항)

구 분	합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항 수	575	5	31	9	9	24	16	5	79	7	344	46
완공항	142	1	9	7	4	9	-	-	-	-	112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수산개발과 사무관 전충남)

다. 어촌을 살기 좋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개발

어촌은 오랜 생활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는 문화공간으로 사회정책적 차원에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어업 여건의 악화와 어촌 정주환경의 변화 및 관광 패턴의 변화에 따라 어촌 관광은 어촌 소득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촌관광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전문인력을 어촌에 확보하여 어촌의 Amenity를 활용한 다양한 어업외 소득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어촌개발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기 추진 사업들을 통폐합하는 한편, 수산업·어촌에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산업·어촌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유형화하고 이를 어업인 등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양식어업인에 대하여 자연재해에 따른 사업리스크의 최소화를 위해 양식재해보험은 대상품종, 대상재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가능 품종부터 시범사업 도입(2008년)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어업활동에 필요한 어업 경영기반을 지속 확충할 것이다.

(수산개발과 사무관 최덕부)

3. 어선기관 대체 및 장비·설비 현대화

1977년부터 연근해어업진흥계획에 따라 해양사고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원 되었으며 1988년 이후 보조 지원을 중단하고, 수산업발전 기금에 의한 용자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사업에 1,112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에도 60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표 4-2-38>

2008년도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사업 투자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보조	용자	자담	
합 계		750	-	600	150	
기	어선 기관대체	4,000마력	640	-	512	128
금	장비·설비개량	11척	110	-	88	22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어업정책과 사무관 권용철)

제5절 어업협력 강화 및 원양어업 육성

1. 국제 어업협력 강화

가. 연안국과의 어업협력

2008년 기준 주요 연안국 152개국 중 125개국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하고 어업자원의 자국화를 강화하면서 외국 어선에 대한 조업규제도 강화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원양어장도 축소,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연안국 EEZ 입어와 관련하여 정부간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는 13개국이며, 이 중 일본과 중국과는 상대방 국가의 EEZ에 상호 입어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있지만 나머지 11개국과는 상대방 국가의 EEZ에 일방 입어하는 입어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또한 민간업계는 국가간 입어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연안국에 별도의 입어료를 지불하고 입어하고 있으며, 2008년도의 경우 우리나라는 연안국에 총입어척수 572척에 66,671천\$의 입어료를 지불하였다.

우리나라 어선이 연안국에 입어하는 조건 즉, 조업수역 및 척수, 어획 할당량, 입어료 등은 매년 정기적으로 어업회담을 개최하여 결정된다. 특히, 어업자원을 활용한 연안국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단순 입어방

식에서 합작투자, 수산가공공장 등 인프라 확충 등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어선의 원활한 입어를 위해서는 연안국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가 필수적이며, 특히 연안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경제협력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연안국 물자공여사업을 시작하여, 2008년에는 태평양 도서국(키리바시, 솔로몬, 투발루) 및 아프리카 연안국(기니, 기니비사우, 앙골라)에 컴퓨터 및 통신기기 등 4억원 상당의 물자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병원, 체육관 건설 등 대규모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 중국 등 조업경쟁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물자지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한 연수생 초청 등 소규모 기술지원에 그쳐 향후 연안개도국의 경제협력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4-2-39〉

양국간 어업협정 체결현황

국가별	체결일	발효일	비 고
합 계			13개국
중 국	'00. 8. 3	'01. 6.30	12개월전 통보시 종료
일 본	'98.11.28	'99. 1.22	6개월전 통보로 종료
파푸아뉴기니	'92. 1.25	'92. 4.15	12개월전 통보시 종료
러 시 아	'91. 9.16	'91.10.22	6개월전 폐기통보 없을시 매 1년씩 연장
모 리 타 니 아	'84. 1. 7	'84. 1. 8	6개월전 통보시 종료
에 쿠 아 도 르	'84. 5.22	'84. 9.19	6개월전 통보시 종료
호 주	'83.11.23	'83.11.24	12개월전 통보시 종료
투 발 루	'80. 6.18	'80. 6.18	6개월전 통보시 종료
국 아 일 랜 드	'80. 8.25	'80. 8.25	3개월전 통보시 종료
솔 로 몬	'80.12.12	'80.12.12	12개월전 통보시 종료
키 리 바 시	'80.12.18	'80.12.18	6개월전 통보시 종료
프 랑 스	'80. 9.19	'80.12.19	3개월전 통보시 종료
이 란	'77. 5.11	'78. 4. 1	6개월전 통보시 종료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기구과

아울러 노르웨이 등 5개국과 양자간 수산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바 있으며, 2008년도에는 우루과이 농축수산부와 양국간 수산분야 정보교환, 자원조사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등 협력사항을 포함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우리어선 입어 외에 인적교류, 정보교환 등 여타 협력실적은 아직 까지 미미한 실정이다.

〈표 4-2-40〉

양국간 수산협력약정 체결현황

국가별	체결 부처	체결(발효)	비 고
합 계			6개국
노 르 웨 이	수산부	'02. 1.24	2년마다 정례회의 개최 등
베 트 남	수산부	'02. 4.23	양국 EEZ내 어업활동 상호 지원 등
아르헨티나	경제생산부 농축수산식품처	'03. 9.1	수산·양식 기술의 공동개발 등
알 제 리	수산어로자원부	'07. 10.22	수산·양식업의 공동개발 등
우 루 과 이	농축수산부	'08.9.2	수산분야 정보교환 등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지구과

(국제지구과 사무관 장모인)

1) 한·일 어업협정

한·일 양국은 2007년 12월 13일 한국에서 「제10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2008년도 양국 EEZ내 상호 입어규모를 1,000척, 60,000톤으로 합의하고, 각 업종별 조업조건 등을 결정하였다.

2008년도 총 어획할당량은 양국이 각각 지난 해 보다 500톤씩 감소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주력업종인 연승, 중형기선저인망, 선망, 오징어채낚기, 풍치붕수망어업은 전년수준을 유지하거나 약간 축소로 조정하고, 반면 비주력 업종인 대형기저, 외줄낚시, 복어채낚기 등을 축소 조정하여 우리의 실익을 도모하였다.

협상과정에서 일본은 조업금지기간 및 조업금지수역 확대와 어구부설규제 도입 등 우리나라 어선의 조업을 규제하는 내용을 다수 제안하였으나,

새로운 조업규제의 추가 도입에 강력 반대하여 전년과 동일한 조업조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관철시켰으며, 연말에서 연초에 걸쳐 계속 조업하는 어선의 조업실태를 감안하여 2008년 2월 15일까지는 2007년도 조업일지를 계속 사용토록 하여 2008년도 조업일지 사용을 위해 조업중 귀항하거나 조업중인 어선에 2008년도 조업일지를 전달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다.

또한,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내의 해양생물자원 중 2009년도 어획할당과 관련한 어종의 어획동향자료, 자원상태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한·일 해양생물자원전문가 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양국 어선간 안전 조업질서 유지 및 해상에서의 어선사고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민간어업자 단체에 대한 적절한 지도·지원 등을 통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2008년도 한·일 양국 EEZ내 조업실적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어획량은 우리나라가 14,419톤으로 할당량 대비 24.0%, 일본은 26,684톤으로 할당량 대비 44.5%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약 1.6배 더 어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에 이어 다량 어획되는 고등어의 어황이 우리나라 EEZ내에서 좋아 일본어선의 어획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조업척수는 우리나라가 602척으로 입어척수 대비 60.2%, 일본은 133척으로 입어척수 대비 13.3%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약 4.5배 더 조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어선은 다양한 업종에서 다양한 어종을 어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4-2-41>

2008년 한·일 EEZ 입어실적 비교(총괄)

구 분	합 의 사 항		실 적		대 비(%)	
	할당량(A)	입어척수(B)	어획량(C)	조업척수(D)	C/A	D/B
한 국(a)	60,000톤	1,000척	14,419톤	602척	24.0	60.2
일 본(b)	60,000톤	1,000척	26,684톤	133척	44.5	13.3
대 비 %(a/b)	100	100	54.0	452.6	-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교섭과

어종별 조업실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다양한 어종들을 어획하고 있으나 일본은 고등어류가 23,626톤으로 전체 어획량의 88.5%를 차지하였다.

〈표 4-2-42〉

2008년 한·일 EEZ 어종별 어획실적 비교

(단위 : 톤)

구 분	계	꽂 치	전갱이	고등어류	살오징어	가자미류	참 돔	갈 치	붕장어	기 타
한국(A) (%)	14,419 (100)	6,679.7 (46.3)	409.7 (2.8)	1,694.5 (11.8)	1,605.8 (11.1)	976.4 (6.8)	2.9 (0.0)	1,601.4 (11.1)	175.9 (1.2)	1,272.7 (8.9)
일본(B) (%)	26,684 (100)	-	573.7 (2.1)	23,626.4 (88.5)	295.9 (1.1)	20.8 (0.1)	54.2 (0.2)	4.7 (0.0)	13.5 (0.1)	2,094.8 (7.9)
A - B	-12,265	6,679.7	-164	-21,931.9	1,309.9	955.6	-51.3	1,596.7	162.4	-822.1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교섭과

(어업교섭과 사무관 김옥식)

2) 한·중 어업협정

한·중 양국은 2008년 12월 4일 중국에서 「제8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년도 양국 EEZ내 상호 입어규모 및 조업조건 등을 협의한 결과, 우리어선의 중국 EEZ 입어규모는 1,600척 68,000톤으로 전년수준을 유지하였고, 중국어선은 금년보다 59척 1,000톤이 감축된 1,800척 70,000톤으로 결정하였다.

중국의 감축대상 어선 59척중 어획강도가 큰 타망어선 44척을 감축한 것은 중국어선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우리 수역의 어족자원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리고 어족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보호를 위하여 2010년부터 선망어업의 고등어에 대해 시범적으로 어종별 할당제를 실시하고 실시 상황과 효과에 대하여 평가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은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자원관리를 위해 2010년도에 자원조사를 독자적으로 추진하되, 상대국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공동 자원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어업인 편의 도모 및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해 허가증 기재내용 변경신청서 및 분기별 조업보고서 제출방식을 편리하게 개선하고, 어획보고 대상어종을 현실에 맞게 관리하기 위해 타망류의 일일 어획보고 대상어종을 확대하는 등 입어절차규칙을 개정하였다.

또한, 서해특정금지구역에서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으로써 동 수역에 대한 불법어업 실태를 새롭게 인식시키고 적극적인 단속의지를 유도하였다. 양국간 어업분야의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촉진하기로 하고 양국어업지도단속공무원의 상호승선 교류 및 어업지도단속 공무원의 상호방문을 통해 조업질서 확립방안을 마련하였다.

2008년도 한·중 양국EEZ내 조업실태를 살펴보면, 우리어선의 입어규모는 1,600척, 68,000톤 중 167척이 입어하여 4,219톤(6.2%)를 어획한 반면, 중국어선의 입어규모는 1,859척, 71,000톤 중 1,794척이 입어하여 55,571톤(78.3%)을 어획함에 따라 양국어선의 입어불균형 문제가 심화되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양국어선의 등량·등척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표 4-2-43〉

2008년 한·중 양국 EEZ 입어동향

(2008년 12월 말 기준)

구 분	합 의 사 항		실 적		
	척수(척)	할당량(톤)	척수(척)	어획량(톤)	소진율(%)
한국어선	1,600	68,000	167	4,219	6.2
중국어선	1,859	71,000	1,794	55,571	78.3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교섭과

(어업교섭과 사무관 김학기)

3) 한·러 어업협정

1991년 9월 체결된 한·러 어업협정에 따라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한·러 어업위원회」를 개최하여 러시아수역의 입어쿼터와 입어조건 등 협의하고 있다.

러시아 수역은 다른 원양수역과는 달리 우리 바다와 연결해 있어 어장간 거리가 짧아 어업경비 소요가 적고 조업관리도 용이(러시아 15일, 남미·대서양 60일, 인도양 45일)하는 등 장점이 많으며,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3대 어종인 명태의 총 생산량 중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어장이다.

특히, 새로운 한·일 어업협정 이후 북해도 수역 명태트롤어선이 철수함에 따라 북양트롤어선은 대체어장이 전무한 상태로 현재 러시아어장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동 어장은 명태 외에도 청어·대구·꽂치·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의 자원량이 풍부하여 수산물 소비확대에 따른 자원확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어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4-2-44〉

명태생산 추이

(단위 : 톤)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합 계	63,761	168,213	128,792	165,416	156,925	214,737	194,121	
원양	소 계	63,546	167,971	128,728	165,391	156,865	214,702	194,121
	정부쿼터	24,952	21,975	19,997	26,004	26,248	20,200	28,186
	합 작	38,594	145,996	108,731	139,387	130,617	194,502	165,935
연 근 해	215	242	64	25	60	35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정책과

러시아 수역에서의 어획쿼터는 1991년 9월 체결된 한·러 어업협정에 따라 매년 양국간 교대로 개최되는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정부간 쿼터가 결정되고 있으며, 어선별 배정은 정부간 쿼터가 확정된 이후 한국원양산업협회 “북양트롤위원회”에서 어선별 톤급과 마력을 기준으로 하여 비율에 따라 배정하며, 어획쿼터 배정이 확정되면 러시아연방 “수산청”로 부터 어업허가를 받아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게 된다.

러시아측은 제17차 한·러 어업위원회의(‘07.12월) 결정에 따라 배정된 34,115톤 중 명태 20,500톤, 대구 2,650톤, 청어 250톤, 가오리 800톤, 가자미 300톤, 꽁치 2,500톤, 오징어 7,000톤, 복어 115톤의 정부간 어획쿼터를 할당하였고, 한국측은 정부간 어획쿼터 34,115톤중 총31,146톤(91.3%)을 소진하였으며, 어종별로 명태 20,200톤, 오징어4,632톤, 대구2,644톤, 가오리 797톤, 청어79톤, 꽁치 2,494톤, 가자미 300톤, 복어0.15톤을 소진하였다.

그리고 2008년도 러시아수역 정부간 쿼터는 명태 28,500톤 대구 2,690톤 꽁치 5,000톤 오징어 7,000톤 등 총 44,955톤을 할당 받았다.

<표 4-2-45>

연도별 한·러 어획쿼터 및 조업실적

(단위 : 톤)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59,300 (33,839)	51,800 (31,244)	32,050 (25,339)	38,250 (34,250)	38,825 (36,205)	34,115 (31,146)	44,955 (39,323)
○ 명태	25,000 (24,952)	22,000 (21,975)	20,000 (19,997)	26,500 (26,004)	26,250 (26,248)	20,500 (20,200)	28,500 (28,186)
- 정부	25,000 (24,952)	22,000 (21,975)	20,000 (19,997)	26,500 (26,004)	26,250 (26,248)	20,500 (20,200)	28,500 (28,186)
· 오호츠크	- (-)	- (-)	- (-)	- (-)	- (-)	- (-)	- (-)
· 베링	22,000 (21,954)	22,000 (21,975)	20,000 (1,997)	26,500 (26,004)	26,250 (26,248)	20,500 (20,200)	28,500 (28,186)
· 남쿠릴	3,000 (2,998)	-	-	-	-	-	-
○ 청어	- (-)	-	- (-)	-	325 (31)	250 (79)	450 (45.1)
- 정부	- (-)	-	- (-)	- (-)	325 (31)	250 (79)	450 (45.1)
- 민간	- (-)	-	- (-)	- (-)	- (-)	- (-)	- (-)
○ 대구	7,000 (5,332)	2,500 (2,499)	2,650 (2,648)	2,650 (2,644)	2,650 (2,649)	2,650 (2,644)	2,690 (2,682)
- 정부	2,500 (2,497)	2,500 (2,499)	2,650 (2,648)	2,650 (2,644)	2,650 (2,649)	2,650 (2,644)	2,690 (2,682)
- 민간	4,500 (2,835)	-	- (-)	- (-)	- (-)	- (-)	- (-)
○ 오징어	7,300 (2,259)	7,300 (2,586)	4,000 (2,294)	6,000 (2,517)	6,300 (4,840)	7,000 (4,632)	7,000 (2,780)
○ 꽁치	20,000 (1,296)	20,000 (4,184)	5,000 (-)	2,500 (2,489)	2,500 (1,839)	2,500 (2,494)	5,000 (4,528)
○ 가오리	- (-)	- (-)	400 (400)	600 (596)	600 (598)	800 (797)	800 (800)
○ 기타	- (-)	-	- (-)	-	(복어)20 0	(복어) 0.15	(115) 2.4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정책과 / () 소진실적

(원양정책과 서기관 박성우)

나. 국제 수산기구와의 협력

1) 국제 어업 변화 동향

1982년의 유엔해양법협약의 채택(발효 1994년 11월), 1995년의 유엔공해 어업협정의 채택(발효 2001년 12월) 및 1995년 FAO의 책임 수산업 규범 채택 등으로 국제수산자원관리에 있어 지역수산관리기구를 통한 국가간 협력과 책임있는 어업이 강조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주요 상업어종에 대한 남획이 증가함으로써 자원남획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수산기구의 노력이 강화되었다.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지속수산업에 관한 결의」는 해산(海山) 등에서 행해지는 공해상 저층어업으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8년말까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 및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UN, FAO 및 각 지역수산관리기구를 통하여 그리고 지역 수산관리기구가 없는 수역에서는 각 국가간 협력을 통하여 저층어업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또한 각 지역수산관리기구별로 해산 등에서 저층어업활동이 해양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전세계의 참치자원은 5개의 지역수산관리기구인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인도양참치위원회(IOTC)가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이 5개 기구에 다 가입되어 있다.

참치는 고가 상업어종이라는 특성 때문에 집중적으로 어획이 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남획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참다랑어는 더욱 집중적으로 남획이 되고 있어 어획쿼터량 축소, 어업세력 감소 등 참치자원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규제 강화방안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등 기존 기구에서도 “어종별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선박감시체제(VMS)” 및 “어획증명제도” 도입 등 자원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조치들을 도입하거나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신 국제어업질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우리 원

양어업의 지속적·안정적 조업 보장과 책임 있는 원양조업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기존에 설립되었거나 설립중인 지역수산물관리기구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새롭게 채택된 국제어업규범의 이행을 위해 국내적으로 어업관련 법규 정비 및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였다.

2) 신설 또는 미 가입된 국제기구에의 참여 및 가입 추진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어업규제 강화와 지역수산물관리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앞으로 지역수산물관리에 참여하지 않고는 공해조업이 곤란해지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신설 또는 미 가입된 국제기구의 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설립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가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남동대서양 공해상의 어류, 연체류, 갑각류 및 정착성 어류 자원 관리를 위해 2001년 설립된 남동대서양수산물관리기구(SEAFO : South East Atlantic Fisheries Organization)와, 남인도양 공해상의 비참치어업을 대상으로 하는 저연승 및 트롤어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2006년 채택된 남인도양수산물협정(SIOFA : Southern Indian Ocean Fisheries Agreement)의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태평양 공해상의 비참치어종, 특히, 전갱이 자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중인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 설립협상과, 북서태평양의 저층어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중인 북서태평양저층어업관리기구(NWPRFMO ; North Western Pacific Regional Fishery Management Organization) 설립협상에도 적극 참여하였으며, 동 기구설립협상 제2차 회의를 2007년 1월 부산에서 개최한 바 있다.

또한 그동안 비준을 미루어온 유엔공해어업협정을 2008년 2월 1일자로 비준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3) 국제수산기구에서의 주요활동 상황

우리나라는 그 동안 기 가입한 16개 수산기구 뿐만 아니라, 현재 가입 추진 중이거나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수산관련 국제기구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 어선의 안정적인 조업도모는 물론, 장기적인 어장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8년도에는 7개 지역수산관리기구(5개 참치관리기구,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관리기구 및 북서대서양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전체 원양생산량 665천톤의 49%인 323천톤을 어획하였으며, 이중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가 관리하는 수역에서는 참치 275천톤(원양생산량의 41%, 참치생산량 287천톤의 96%)을 어획하였다.

특히, 2008.12월 부산에서 제5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연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기구에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참석 국가와의 양자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참치어장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국제수산기구 중 우리나라와 관계가 있는 주요 기구의 활동 상황을 살펴보면 <표 4-2-46> 와 같다.

<표 4-2-46>

우리나라의 국제수산기구 활동현황

(2008년 12월 기준)

번호	기구명	본부 (설립일)	가입일	회원국	주요활동
1	FAO 수산위원회	로마 (1965. 5)	1965.12	일본, 미국 등 190개국	세계 수산업 발전을 위한 회원국간 협력방안 논의
2	OECD 수산위원회	파리 (1961. 9)	1996.12	OECD 가입 30개국	회원국 수산전반에 관한 정보교환
3	APEC 수산실무그룹	싱가포르 (1991. 3)	1991. 3	APEC 회원국 21개국	역내 수산자원관리 기술이전 등
4	국제포경위원회(IWC)	케임브리지 (1946.12)	1978.12	일본, 미국 등 81개국	고래자원의 보존 및 관리
5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 위원회(CCAMLR)	호주 (1982.4)	1985. 4	칠레, 아르헨티나 등 25개국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 이용
6	중부베링해명태자원 보존관리협약(CBSPC)	시애틀 (1995.12)	1995.12	미국, 러시아 등 6개국	중부베링해 명태자원보존
7	북서대서양수산위원회 (NAFO)	캐나다 (1979. 1)	1993.12	캐나다, 러시아 등 12개국	북서대서양 수역 수산 자원 보존 관리 및 이용
8	중동대서양수산위원회 (CECAF)	로마 (1967. 9)	1968. 1	미국, 일본 등 34개국	중동대서양 수역 수산 자원 보존 관리 및 개발
9	중서대서양수산위원회 (WECAFC)	로마 (1973.11)	1974. 1	이태리, 스페인 등 35개국	중서대서양 수역 수산 자원 보존 관리 및 개발
10	아시아·태평양 수산위원회(APFIC)	방콕 (1948.11)	1950. 1	일본, 베트남 등 20개국	회원국의 합리적 수산정책 수립 지원
11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 (ICCAT)	스페인 (1969. 3)	1970. 8	스페인 등 43개국	대서양 다랑어 자원 보존 및 이용
12	인도양다랑어위원회 (IOTC)	세이셸 (1996. 3)	1996. 3	호주, 인도 등 24개국	인도양 다랑어자원 보존이용
13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CCSBT)	호주 (1994. 5)	2001.10	일본, 호주 등 6개국	남방참다랑어 자원 보존관리
14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WCPFC)	마이크로네 시아 (2004. 6)	2004.10	호주, 뉴질랜드 등 25개국	태평양 수역 고도회유성 어종 보존관리
15	북태평양소하성 어족위원회(NPAFC)	벤쿠버 (1993. 2)	2003. 5	캐나다 등 5개국	연어자원의 보존관리
16	남동대서양수산기구 (SEAFO)	나미비아 (2003. 4)	가입 추진중	앙골라 등 4개국	남동대서양 수산자원 최적이용
17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 (IATTC)	미국, 라호아 (1950.3)	2005.12	미국, 일본 등 16개국	동부태평양 수역 다랑어자원 보존관리

번호	기구명	분부 (설립일)	가입일	회원국	주요활동
18	아·태지역 양식기구 (NACA)	방콕 (1990. 1)	미가입	북한, 중국 등 14개국	양식기술 정보교환 등
19	태평양공동체사무국 (SPC)	뉴칼레도니아 (1947. 2)	"	프랑스 등 27개국	다랑어관련 자료수집, 과학조사
20	남인도양수산약정 (SIOFA)	미정 설립준비	가입 추진중	호주, 뉴질랜드 등	남인도양 수산자원의 보존관리
21	북서태평양저층어업관리기구 (NWPRFMO)	일본(임) 설립준비	가입 추진중	러시아, 일본, 미국 등	북서태평양 저층생태계 관리 등
22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SPRFMO)	뉴지(임) 설립준비	가입 추진중	EC, 중국 등 약 25개국	남태평양 비참치어종관리 및 잠정조치 채택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기구과

(국제기구과 사무관 김기환, 안치국, 최국일)

4) 책임 있는 어업의 이행 및 기타 사항

책임있는 원양 조업국으로서 국제기구에서 채택한 각종 국제어업규범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어업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지역수산기구를 비롯하여 각 연안국에서는 관할 수역내 조업어선들의 불법조업 방지를 위해 어선위치 확인 등 인공위성을 통한 선박감시체제(VMS)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어선들의 안정적인 조업을 도모하고 조업 위반여부와 관련한 분쟁발생시 명확한 증빙자료 확보와 선박조난 발생시 수색구조 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9년에 VMS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여 2008년 원양어선 382척 및 러시아수역에 입어하는 근해채낚기 어선 38척 등 총 420척의 어선의 위치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표 4-2-47>

선박자동위치감시시스템(VMS) 설치 실적

(2008년 12월 기준)

구분	계	북양 트롤	꽁치 붕수망	원양 선망	저연승	참치 승	해외 트롤	원양 오징어 채낚기
어선척수	382	7	20	28	20	169	119	29
설치현황	382	7	20	28	9	169	119	29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정책과

특히, 지역수산기구에서는 규제조치 준수여부 감독 및 자원관리에 필요한 생물학적 정보 수집을 위해 조업어선에 오퍼서 승선을 의무화하는 추세에 따라 외국인 오퍼서 승선에 따른 우리 어선의 조업불편을 최소화하고 책임 있는 원양 조업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2002년에 국제오퍼서 양성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까지 국제오퍼서 20명을 양성하였다. 양성된 오퍼서는 2008년에는 국제오퍼서 승선과학조사는 7개 해역에서 총 13척에 13명이 승선하여 과학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한편, 급변하는 국제어업 동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의 필요성과 국제회의에서 논의되는 전문적인 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1년부터는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국제기구별로 지정된 민간전문가와 함께 국제회의에 참석함으로써, 국제회의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제에 대해 사전에 심도 있는 분석 및 회의 참석시 대표단 자문 등으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회의 참석 후에도 결과 보고서를 통한 feedback으로 향후 정책방향에 반영토록 하였다.

(원양정책과 서기관 박성우)

다. 남북수산협력 추진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북한의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차 남북국방장관급회담('07.11.27~29, 평양) 및 제7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07.12.12~14, 판문점)을 개최하였으나, 북한이 현재의 서해북방한계선(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제1차 서해 평화특별지대추진위원회('07.12.28~29, 개성)의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함에 따라 공동어로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제1차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07.12.14~15, 개성)에서는 남북수산협력사업으로 ① 남측어선의 북측 동해수역 입어협력, ② 수산물 생산·가공·우량품종개발·양식분야 협력, ③ 수산물 유통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동해수역 입어는 '08년 중에 실시하고 기타 분야에 대해서는 2008년 상반기 내에 현지조사 실시 및 협력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2008년도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기합의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2008년도에는 남북해양수산협력시범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작한 북측 동해수역에 대한 남측어선의 입어사업에 관한 남북합의서 대응방안, 한반도 해양포유류 보존과 관리를 위한 남북합의서 대응방안, 동해 종묘배양장 건립 시범사업 추진방안 연구, 서해 어패류가공공장 건립 시범사업 추진방안 연구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북측 동해수역 입어사업 추진에 대비한 어업인과의 간담회 개최, 관계기관·단체 및 전문가, 업계 등과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향후 남북관계 개선시 남북당국간 기 합의사항 이행준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표 4-2-48>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이후 남북협력사업 추진현황

일 자	회 담	주요 회담내용 및 결과
2006. 3. 2 ~ 3. 3	제3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북측이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의 근본적인 재설정을 주장하여 서해공동어로 및 바다목장 사업 등이 논의되지 못함
2006. 3. 15	남북수산실무 회담 개최제의	군사회담과는 별개로 동해공동어를 위한 수산 실무회담 (실무접촉포함)을 제의하였으나 북측은 군사회담과 서해공 동어로의 선행을 주장하며 거부
2006. 4. 22 ~ 4. 24	제18차 남북 장관급 회담	서해공동어로 등 군사적 긴장완화를 촉진하는 실천적인 대책을 취해나가는데 인식을 같이함
2006. 5. 16 ~ 5. 18	제4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제3차 군사회담과 동일하게 서해해상군사분계선 문제를 먼 저 해결하지 않으면 서해공동어를 비롯한 남북경제협력 사업이 논의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여 회담이 결렬
2006. 6. 3 ~ 6. 6	제12차 남북 경제협력추진 위원회	남북은 수산협력실무협의회 실무접촉 일정을 문서 교환방 식으로 협의·확정하기로 합의했으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으로 개최 지연
2007. 2. 27 ~ 3. 2	제20차 남북 장관급 회담	북핵 6자회담 타결로 남북장관급회담이 재개되었 으며, 남 북은 4.18~21일까지 평양에서 제13차 남북경추위를 개최하 기로 합의
2007. 4. 18 ~ 4. 22	제13차 남북 경제협력추진 위 원 회	남북 수산협력 실무접촉 일정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확정하기로 합의
2007. 5. 8 ~ 5. 10	제5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서해 공동어를 실현하기로 하고 공동어로 수역설정 등과 관련한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함
2007. 7. 24 ~ 7. 26	제6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공동어로 수역에 대한 별다른 합의 도출 없이 종료 · 남측은 NLL기준으로 동일 면적에서 시범적 설정 주장 · 북측은 NLL이남 수역에 설정 주장
2007. 10. 2 ~ 10. 4	제2차 남북 정상회담	6.15 공동선언의 적극 구현,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추진, 남북경제협력사업 적극 활성화 등 2007남북정상선언문 채택
2007. 12. 4 ~ 12. 6	제1차 남북경제 협력공동위원회	북측 동해의 일정한 수역에서 입어 및 어로, 수산물 가공 및 우량품종 개발, 양식협력사업 등을 협의 추진
2007. 12. 14 ~ 12. 15	제1차 남북농수산 협력분과위원회	'08년중 북측 동해수역 입어 추진, 수산물 생산·가공·우량 품종 개발, 양식분야협력을 위해 '08년 상반기 내에 현지조 사 합의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교섭과

(어업교섭과 사무관 정상윤)

2. 해외어장의 지속적 확보 및 경쟁력 제고

가. 기존 어장의 확보

1) 참치어업

우리나라 참치어업은 1957년 지남호(230톤급)가 인도양에서 시험조업으로 출어한 이래 괄목할 만한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여 오늘날에는 세계의 참치 주 조업국으로 성장하였다.

참치어업의 주 어장은 연승어업의 경우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의 중위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키리바시, 솔로몬 등에서 주로 조업하고 있으며, 선망어업은 태평양의 파푸아뉴기니아, 마이크로네시아 수역 등에서 주로 조업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연승어업은 158척이 출어하여 38천 톤을 어획하였으며, 선망어업은 29척이 출어하여 249천 톤을 어획하였다.

2) 오징어어업

우리나라 오징어어업은 1985년 남서대서양(포클랜드)어장이 개발되면서 채낚기어업이 발전하기 시작하여 1993년 페루어장 진출, 1995년 알젠틴 관할 수역내에 용선형태의 입어, 1997년 우루과이 어장 진출 등으로 해외어장을 확대하였다.

1997년도에 오징어 과잉생산으로 어가 폭락과 더불어 1998년도에 불어 닥친 IMF 영향에 따른 출어척수 감소로 어획량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으나, 1999년도에는 포클랜드 어장의 어획 호조로 309천 톤의 어획량을 보임에 따라 재고누적으로 업계 자율적인 어획량 감축을 실시하여 2000년에는 178천 톤을 어획하고, 2001년도에는 이보다 15천 톤이 감소된 163천 톤을 어획하였다.

하지만 2002년도에는 엘리뇨 현상에 따른 포클랜드 어장의 어획 저조로 전년대비 13% 감소한 141천 톤을 어획한 후, 2004년도에는 극심한 어획부진에 따라 포클랜드 정부의 조업 조기종료 선언으로 경영난에 봉착한 오징

어채낚기 업체의 건의로 정부에서는 구조조정 사업을 추진하여 19척을 감척하기에 이르렀다.

2006년도부터 포클랜드 원양오징어 어장의 어획량이 회복되기 시작하여 88천 톤을 어획한 이후, 2007년도 118천 톤, 2008년도에는 109천 톤을 생산하였다.

3) 트롤어업

가) 북양 트롤

북양트롤어업은 1966년 국립수산진흥원(현, 국립수산과학원)과 부산수산대학(현, 부경대학교)의 베링해 공동시험조업 실시를 효시로, 1967년 삼양수산(주) 등 민간업체들에 의한 상업조업 개시로 본격화되었으나 1977년 3월 “미·소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를 계기로 소련의 감차카 근해 및 미국수역에 출어 중이던 북양트롤 어선들이 전면 철수하게 되었으며, 이중 일부 미국수역에 남아 쿼터조업과 공동어로사업으로 조업하던 어선마저도 쿼터조업은 1987년에, 공동어로사업은 1991년을 끝으로 완전히 철수하였다.

1987년부터 시작된 베링공해조업도 1992년 8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5차 베링공해관련국제회의” 결과에 따라 1993년부터 2개년 간 잠정적으로 조업중단이 이루어졌고, 1994년 6월 서명한 “중부베링해명태자원의보호및 관리에관한협약”에 따라 명태 자원 량이 167만 톤이 될 때까지 조업을 계속 중단하기로 하였다.

또한, 오호츠크공해에 대하여도 1993년 11월 15일 한·러 어업위원회시 양국간 합의사항이 원만히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오호츠크공해 조업을 자제키로 함에 따라, 1993년 4월 25일 이후 실시된 조업중단이 지속되고 있다.

1990년 한·러 국교 수교에 따라 민간쿼터를 이용하여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기 시작한 북양트롤어업은, 1991년 9월 한·러 어업협정 체결에 따라 본격적으로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게 됨에 따라 매년 한·러 어업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쿼터를 확보하고 있다.

한편, 미·러 수역에서 철수한 북양트롤어선들은 일본 북해도 영해 외측에서 조업하여 오다가 신 한·일 어업협정 체결에 따라 1999년 11월 전면 철수하게 되었다.

러시아측은 2002년부터는 오호츠크해에 대하여 외국어선의 조업을 전면 금지하고, 민간쿼터가 국제입찰로 제도가 변경되어 자국민에게 우선 입찰을 실시하고 잔여량이 발생할 경우 외국인에게 입찰을 허용하고 있어,

2002년도 민간쿼터 명태 입찰에서 전량 러시아 자국민이 낙찰 받음으로써 우리나라는 민간쿼터를 확보할 수 없게 되어 불가피 22척은 러시아 합작사업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나머지 5척은 우리국적을 유지하면서 정부간 명태쿼터 조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2007년도 20,500톤중 20,200톤을 소진하였으며, 2008년도 명태 러시아수역 명태쿼터는 28,500톤이다

나) 태평양 트롤

1977년 미·러의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에 따라 동 수역에서 조업하던 트롤선 일부가 뉴질랜드 수역으로 어장을 이동하였으며, 1978년에는 양국간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쿼터조업을 하여 왔다. 그러나 뉴질랜드정부의 자원자국화 정책에 따라 외국에 대한 쿼터량이 계속 감소되다가 1992년부터는 정부쿼터가 종식되고 현재는 민간 개별협력에 의해 쿼터량을 확보하여 조업중에 있다.

또한 1986년부터 진출한 인도네시아수역 등은 최근 외국어선의 과당 경쟁으로 자원이 감소됨에 따라 연안국들이 자원자국화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날로 어업여건이 어려워져 기존 어장의 지속적인 확보와 병행하여 새로운 어장의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2007년도는 해외트롤어업 생산량(246천 톤) 중 태평양 수역에서 85천 톤을 생산하고 2008년도에는 해외트롤 생산량(202천 톤) 중 동 수역에서 73천톤을 생산하였다.

다) 대서양 트롤

1966년부터 진출한 대서양트롤어업은 이후 꾸준히 발전하여 1970년대에는 100여척으로 출어척수가 증가하였으나, 1980년대에는 중서대서양의 자

원감소에 따라 출어척수가 감소되자 어선들은 남서대서양을 비롯하여 NAFO수역, 인도네시아 등 신 어장으로 진출하여 다소 활기를 찾았다.

그러나 NAFO수역에서도 캐나다 정부가 가자미 등 경계왕래어족자원의 보호조치를 취함에 따라 1993년 4월 29일 동 수역에서 조업하던 3척이 완전 철수하였다.

이후 우리나라 대서양 트롤어선은 기니수역을 중심으로 한 서부아프리카 수역과 앙골라수역 및 남서대서양 공해수역 등 어장에 출어하여 조기, 민어, 오징어 등을 주 포획 대상으로 조업하고 있으나, 주 어장인 기니 꼬나끄리 수역의 경우 외국어선의 과당 경쟁으로 어장이 황폐화됨으로써 어업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도 생산량은 전년도 64천 톤보다 31% 증가한 84천 톤을 생산하였다.

라) 인도양 트롤

1970년대 중반에 새로운 어장확보 차원에서 진출한 인도양어장에서는 그동안 관련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민간교섭에 의해 지속적으로 조업을 유지하여 왔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 인도양에 출어하는 우리 원양어선 세력의 증가가 둔화되어, 현재는 오만, 소말리아 등에 진출하여 새우, 갑오징어, 한치 등을 주 포획 대상으로 조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오만 등 연안국 정부의 조업규제 강화와 과도한 단속으로 동 수역의 조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2008년도에는 전년도 12천 톤과 비슷한 11천 톤을 생산하였다.

마) 칠레인근 공해 전갱이 트롤

2003년 정부는 새로운 해외어장 개발을 위하여 남태평양 동부 공해어장인 칠레 인근 공해 어장에 대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선 탐구호외 민간조업선 2척을 투입하여 전갱이 자원조사를 실시하였다.

정부는 국제수산기구의 공해조업 규제와 연안국들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선포 등으로 조업어장이 축소됨에 따라 원양업계가 어려움을 겪게되자 해외어장 개발차원에서 2001년부터 인도양 서남부 수역 자원조사, 북태

평양 서부해역 자원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4~6월 북태평양 동부해역의 푹치어장조사를 실시하여 어장성이 매우 높은 수역을 확인한바 있으며, 금년들어 두 번째로 남태평양 동부 공해에 대한 자원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2008년 칠레인근공해에 동원산업(동산호), 인성실업(인성호, 광자호)의 조업선은 전갱이, 고등어 등 총 3척이 출어하여 13,916톤을 어획하였으며 전갱이 가격상승 등으로 조업에 활기를 찾고 있다.

현재 칠레인근 공해는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SPRFMO) 설립이 추진 중에 있어 앞으로 우리조업선의 조업척수 및 어획량 제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동안의 조업실적 구축 등 우리조업선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협상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원양정책과 서기관 박성우)

나.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1957년에 처음으로 인도양에 진출한 이후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2008년 말 현재 우리나라 총 수산물 생산량 330만 톤의 약 20%인 67만 톤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가운데 61%를 국내에 공급하는 중요한 식량산업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1994년 11월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된 이후 주요 연안국들이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 및 자원자국화정책 강화로 해외어장이 축소되고, 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UNFSA) 및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등 국제수산기구에 의한 조업규제 강화로 조업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또한 WTO/DDA 및 FTA협상과 관련 수산보조금의 제한 및 관세인하가 추진됨에 따라 조정관세 등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주요 원양업종의 경쟁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원양업체의 영세성과 자본구조의 취약성, 원양어선의 노후

화 가속 등으로 원양업체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어, 새로운 국제어업질서에 대응하여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안정적인 산업기반을 확보·유지하기 위해서 2003년 12월 31일 「원양어업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한편, 2006년 8월 9일에는 원양어업의 원양산업화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경영구조개선 추진, 신상품 개발 및 해외투자 활성화를 통한 원양산업화 기반 구축,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어장의 지속적 확보, 국제어업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 및 선원수급 안정화 등이다.

(원양정책과 사무관 임태훈)

다. 해외 신어장 개발

최근 연안국의 자원자국화 정책과 공해조업규제 강화 등 국제적인 어업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원양어업 유지를 위하여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와의 어업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어구·어법의 시험과 국제관리수역에서의 우리나라 어획쿼터 확보에 노력하였다.

정부는 1999년도부터 근해어선 해외어장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해외수역에 대한 정보부족 및 어획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귀항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2001년도부터 정부에서 직접 해외수역에 대한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어업인에게 제공하여 해외수역 진출이 활성화되도록 사업추진방향을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1~2002년까지 2개년에 걸쳐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2,550톤급 시험조사선 탐구1호를 인도양에 투입하여 서남부 심해어장에 서식하는 ‘오렌지 라피(Orange roughy)’ 등을 대상으로 자원조사를 실시하였고, 2002년에는 ‘꽁치’어장확보를 위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소속 360톤급 실습선인 갈매기 2호를 임차 투입하여 북태평양공해 자원조사를 실시하였고, 425톤급 갈매기호에 과학자를 승선시켜 러시아 남쿠릴북부수역 ‘꽁치’

자원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사수역의 쾡치 자원분포를 확인하는 성과를 올렸다.

2003년에도 갈매기호를 이용한 ‘쾡치’어장 자원조사를 북태평양동부수역으로 변경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상업조업이 가능한 자원량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쾡치조업 어장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어기가 길어지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2,550톤급 시험조사선 탐구1호와 민간조업선 2척을 남태평양동부수역의 부어 자원을 대상으로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예상보다 자원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상업조업과 연계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04년도에도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탐구1호와 민간조업선 1척을 투입하여 북태평양중부수역 ‘돔’어장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북양명태트롤어장과 연계 조업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5년도 1척(사조산업, 503오룡호)이 진출하여 약 690톤을 어획하는 실적을 거뒀다.

2005년도에는 원양오징어채낚기(인성실업, 701인성호) 및 근해어선 6척(쌍끌이 2통, 근해오징어채낚기 2척) 등 7척을 투입하여 북태평양빨강오징어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풍부한 자원량을 확인하였으며, 2006년도에 근해채낚기 5~6척이 자체적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2006년에는 한·중·일 어업협정으로 근해통발어장이 축소됨에 따라 새로운 대체어장 확보를 위해 근해통발어선(제318 성덕호, 제101 광민호)을 투입하여 마샬수역에 대한 시험조사를 추진하였으나, 해저지형이 산호초로 구성되어 있고 환초에서 조금만 멀어도 수심이 깊고 해저의 굴곡이 심하여 조업시 많은 통발을 투망할 어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와 병행하여 남빙양수역과 연계한 남동대서양 이빨고기 어장개발을 위해 FAO 47 해구에 대한 시험조사를 실시하였다.

2007년에는 한국 참치연승어선의 주조업 수역인 태평양 중서부 어장의 수익성 한계 및 지구 온난화에 따른 어장 이동 가능성에 대비하는 등 새로운 참치어장 개발을 위하여 미드웨이 참치어장에 조업선 3척을 투입하여 자원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부가가치의 눈다랑어를 어획하는 등 상업조업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아울러 '09년초 중부베링 공해의 경쟁조업으로 '93년부터 조업이 중단됨에 따라 북양트롤의 조업어장 부재 등 대체어장 개발을 위하여 중부베링 공해에 2척의 명태트롤어선을 투입하여 시험조업을 실시하였으나, 광범위한 어장, 단기간 조업에 따른 한계성 등으로 어장을 개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향후 명태어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자원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에는 포클랜드 및 알젠틴 정부의 신어업 정책에 의한 입어료 상승, 입어일수 축소, 입어 시 감시활동 강화 등으로 어업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알젠틴 인근 공해수역인 FAO 41해구에 대한 자원조사 사업과 오만, 인도네시아 조업선의 대체어장 개발을 위하여 베트남수역에 대한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양정책과 사무관 임태훈)

라. 연료비 절감을 위한 모델시스템 연구개발

2005년도 연료비 절감을 위한 모델시스템 연구개발 결과에 따라 중·고속 사용 엔진 원양어선, 근해어선 등까지 사용 확대를 위하여 추가로 어선 연료비 절감을 위한 저급유 사용시스템 표준화 연구를 추진중에 있다.

동 연구는 원양어선 등에서 연료비 절감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혼합유의 규모별(마력, 엔진 연료 소모량 등)로 더욱 저급한 혼합유의 사용 한계치와 절감장치 시스템의 표준화 연구를 위해 2006. 8월부터 2008. 12월까지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과제(3억원)로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수행하였으며, 원양트롤어선을 위주로 보급하였다.

(원양정책과 서기관 박성우)

제6절 어업인력 육성과 수산기술의 개발·보급

1. 어업인력 육성

어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FTA협상에 따른 대외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어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층에게 경영기술지도 및 사업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하여 미래의 수산업을 이끌어갈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어업인후계자는 국립수산과학원(수산사무소)으로부터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기술지도와 자문을 받아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사업성이 있는 업종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에 착수한 어업인후계자에 대해서는 경영기술지도·교육 및 각종 수산관계 정보 보급 등을 통하여 단계적(일반후계자 → 전업경영인 → 선도우수경영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전담 지도공무원을 배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업 추진시에는 장기저리의 육성자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사업 계획에 따라 일반후계자의 경우 1인당 ~40백만원, 전업경영인의 경우 1인당 ~50백만원, 선도우수경영인의 경우 1인당 ~100백만원을 지원하여 1981년부터 2008년까지 17,804명에게 총 425,799백만원이 지원되었다.

특히,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2005년도부터 어업인후계자 선정제도를 선정 후 지원체제로 바꾸어 융자금 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선정과 동시에 어업인후계자로 관리하도록 제도를 개선 운영하고 있다.

<표 4-2-49>

어업인후계자 육성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07까지		'08 지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 계	17,804	425,799	17,380	410,100	424	15,699
○ 일반후계자('81부터)	15,179	287,275	14,829	275,526	350	11,749
○ 전업경영인('92부터)	2,559	132,799	2,490	129,349	69	3,450
○ 선도경영인('95부터)	66	5,725	61	5,225	5	50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수산개발과 사무관 정동기)

2. 어업인 정보화교육 및 어촌정보화 인프라 구축

어업인들이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동시에 어촌지역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생업에 정보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2008년도에 8,316명에 대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어촌지역의 정보화 촉진을 위해 어업인, 어촌청소년을 대상으로 「제5회 전국 어업인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어업인의 정보화마인드 확산에 기여하였다.

또한 어업인들이 컴퓨터를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어촌지역 493개소에 “어촌정보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업특성상 어업인들이 조업현장을 비우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어업인들이 원격으로 수산기술상담 및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31개소 수산사무소에서 「원격영상교육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원격영상시스템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및 정보화 업무담당자 혁신마인드 고취를 위해 어촌정보화사업 워크숍(1회)을 개최하였다.

이러한 정부와 어업인들의 노력으로 어촌지역 컴퓨터 보급률은 39.2%,

인터넷 이용률은 33.4%, 어업인 정보화 수준은 54.6%로 해마다 꾸준히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개발과 사무관 김병욱)

3. 어촌지역 개발 전문인력 양성

어촌의 국내외 여건변화는 어촌주민의 생산의욕과 생활의욕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도시보다 빠른 어촌인구의 노령화는 어촌의 활력 저하와 어촌지역 혁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촌주민에게 어촌 비전을 제시하고 어촌주민이 지역혁신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어촌지역 리더를 육성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하여 「어촌지역리더 육성과 지원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어촌개발리더의 육성실태 및 문제점, 국내외 지역리더 육성사례와 시사점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후 어촌개발리더 육성방안을 마련하였다

2008년에는 지역개발리더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시켜 낙후된 어촌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어촌지역 개발리더 과정을 신설하였으며, 자조조직인 어촌사랑주부모임을 활성화시켜 사회·문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여성어업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권익신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수산인력개발원에 농어촌여성지도자양성과정을 운영(14명 수료)하였고 여성어업인의 정책결정 참여를 위해 지자체 수산관련위원회 여성위촉('07. 11.1 → '08. 15.0%) 및 수협 대의원 등 임원비율(3.5%)을 확대하였다.

(수산개발과 사무관 정동기)

4.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로드맵 마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법”(’04.6 시행)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기본계획”(’05.4 수립)에 따라 수립된 2008년도 수산분야 7개 과제 대부분이 당초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수산분야 7개 과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어촌복지기반 확충을 위한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지원사업은 ’08년도 어선원보험 가입율이 전년 76%보다 2% 상향 달성하였고, 어촌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어촌종합개발사업, 소형어선(다목적)인양기 설치, 양식어장 정화사업, 디지털 어촌구축사업 등을 실시하여 현장의 수요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였으며, 어촌관광을 통한 어촌지역 부가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어촌체험마을 조성 및 어촌관광활성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다.

사 업 명	성과지표	’08목표	실 적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보험가입률	78%	78%
어촌종합개발사업	소득증가율	3.3%	7.4%
소형어선(다목적) 인양기 설치	설치대수	88대	87대
양식어장 정화사업	사업추진 진척도	6,730ha	7,722ha
디지털어촌 구축사업	어업인 정보화교육	7,000명	10,373명
어촌체험마을 조성	마을조성수	8개	8개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	사업비 지원액	110억원	110억원

(수산개발과 사무관 김병욱)

5. 해양환경 연구

가. 해양변동 연구

1) 해양조사 및 예측

미국의 해양대기청(NOAA) 열감지 위성으로부터 매일 4~6회 위성수온 자료를 수신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각종 어종별 수협 등에 즉시 “해양자료속보(168회 발간)”로 FAX 및 E-mail 전송(6천여회)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수색(ocean color) 위성(SeaWiFS, MODIS)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 연근해역의 기초먹이생물 분포를 정량화하는 등, 해수색 정보를 획득하였다.

그리고 동중국해, 동해, 서해, 남해의 196개 정점에서 분기별 및 격월로 실시한 정선해양관측 자료와 연안 32개 관측점에서 측정된 연안수온, 기상 자료와 위성이 관측한 광역 수온분포 자료를 활용하여 주간 및 월간 해양변동을 64회 예측하여 “주간 해황예보”, “월간 해황정보”로 배포하고,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였다. 또한 전국 연안 25개소에 실시간 연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어장환경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였으며, 이상해황에 의한 수산생물 폐사 원인 규명 등에 활용하였다.

2) 해양자료 관리 및 서비스

한국해양자료센터(KODC)는 국제기구인 정부간 해양과학위원회(IOC)가 공인한 국가해양자료센터(NODC)와 정부 지정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차원의 해양과학 정보관리 체제 구축과 해양관련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7개년(1999년~2005년)에 걸쳐 해양과학정보시스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국가해양조사계획(NOP), 해양조사요약보고(CSR/ ROSCOP), 해양조사자료(TESAC)를 수집하여 국제해양자료정보교환시스템(IODE)을 통해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사 황재동)

나. 해양환경 오염 연구

1) 국가해양환경측정망 운영

국가해양환경측정망은 한반도 연·근해, 총 109개 해역 363개 정점에서 표·저층 해수, 해양생물 및 해저퇴적물 조사를 수행하였다. 해수는 15개 일반 항목에 대해 4회 조사, 8개 미량금속 항목에 대해 2회 조사하였으며, 지속성 유기오염물질은 4개 항목을 1회 조사하였다.

해양생물은 클로로필-a, 총 대장균 군, 동·식물 플랑크톤을 4회 (2, 5, 8, 11월) 조사, 지표생물에 대한 미량금속 7개 항목과 지속성 유기오염물질 4개 항목에 대해 1회 조사하였다. 해저퇴적물은 일반항목 4개, 미량금속 7개 항목과 지속성 유기오염물질 3개 항목에 대해 1회 조사하였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일반 수질지표 성분을 연 4회 조사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사 최옥인, 홍석진)

다. 적조대책 연구

1) 적조예찰 및 예보연구

적조감시체제의 일환으로 90개 정점에 대해 3월부터 10월까지 적조예찰을 실시하였고, 적조 발생의 조기 예측을 위해 남해연안에서 광역조사를 실시하여 코클로디니움 유영세포 출현을 확인하였다.

2) 적조생물의 생리·생태 특성 연구

한국과 일본의 어류폐사종인 차토넬라와 코클로디니움 적조발생원인의 하나인 활성산소는 야간에는 감소하고, 주간에는 증가하는 일변화를 보여 기존 연구된 일주적 미세구조와의 밀접한 관계를 알 수 있으며, 차토넬라의 경우, 코클로디니움과는 달리 초음파처리에 의해 활성산소가 증가되어 외부로 분비됨에 따라 외부자극에 의해 수산생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차토넬라는 기존의 적조특보기준의 검토가 필요하나, 금

년에는 서해안에서 소규모 저밀도로 발생하였고, 2007년 실내실험결과, 대량배양의 경우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현장과는 다른 세포상태를 보였다. 따라서 적조생물에 민감종인 담셀피시를 이용하여 적조생물이 어류의 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분자생물학을 이용한 적조생물탐색 연구로는 코클로디니움과 어류폐사종인 칼로디니움과 피스테리아 검출을 위한 실시간유전자증폭(real-time PCR)을 개발하여 한국연안 분포조사에 적용하였다. 적조생물 종보존으로 총 56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규조류 중 15종 편모조류 중 1종 등 모두 16종을 분리하였다.

3) 적조피해 경감대책 연구

저층수 및 벤츄리시스템에 의한 적조피해방지를 위해서는 기존 사용하는 방법에서 노즐이 상층으로 향해야 하며, 저층수의 분사에 필요한 출력보강이 필요로 한다.

황토살포가 수산생물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굴유생의 경우 실내실험에서 황토첨가 및 비첨가 시험구간에 생존율과 부착율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황토에 노출된 후 먹이 섭취율도 큰 변동이 없었다. 또한 황토살포가 퇴적층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내시험결과 황토첨가는 환원환경조성을 억제함을 알 수 있었고, 현장조사에서 거제 장목의 저질환경에서 산화환원전위값은 명확한 양상은 보여주지 않았으나 휘발성 황화물은 황토 미살포해역에서 다소 높았다. 한편 남해 미조와 거제장목 해역에서 황토살포와 비살포구역간의 저서생물상은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사 강양순)

라. 해파리 대량발생 연구

1) 해파리 광역 모니터링 및 지역 모니터링

한국연근해 출현 해파리의 종조성 및 시공간 분포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동·서·남해 및 동중국해에서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2003년도부터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대량출현하고 있는 노무라입깃해파리는 2003, 2005, 2007년 대량출현 하였으나, 2008년에는 소량 출현하였다. 서해의 노무라입깃해파리의 표층 출현 밀도(단위면적 : 10,000m²)는 2005년 8월 162개체, 2006년 8월에는 13개체, 2007년 8월 45개체, 2008년 8월 1개체 출현하였다.

한국연안에서 출현하는 독성해파리는 노무라입깃해파리, 커튼원양해파리, 유령해파리, 꽃모자갈퀴손해파리, 라스톤입방해파리, 꽃우산해파리, 야광원양해파리, 작은부레관해파리 등 8종이 출현하였다.

2) 해파리 생리 생태 특성 연구

노무라입깃해파리의 성적 성숙단계를 암컷의 경우 7단계, 수컷의 경우 3단계로 구분하였다. 암컷의 경우, 난황형성 전기(난황 없음), 초기 난황형성 단계(난황과립 약간 보임), 중기 난황형성 단계(난황과립 난모세포 도처에 보이나 축적되어 있지 않음), 후기 난황형성 단계(많은 양의 난황 축적되어 있으며, 짙은 붉은색을 띠고, 푸른색 부분은 찾아볼 수 없음), 난모세포가 생식공쪽으로 이동 중, 생식공 내에 난모세포가 존재하였다. 수컷의 경우, 정포낭 내에 정자 존재하지 않음, 정포낭 내에 정자 존재, 정자가 생식공 쪽으로 방출되는 단계로 구분 가능하다. 성숙 단계와 환경요인과의 관계에서는 수온이 성숙 단계와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일의 크기와는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3) 해파리 독성 연구

노무라입깃해파리, 유령해파리, 보름달물해파리의 독성을 분석하였으며, 독성 성분은 100개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매우 복잡한 혼합물로 나타났고,

실험 대상생물(쥐 1종, 개 3종)에 따라 매우 다양한 쏙임 현상이 관찰되었다.

4) 해파리 모니터링체제 구축 및 운용

대량출현 해파리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2005년부터 해파리 정보센터를 운영하였다. 해파리모니터링 체제는 266명의 어민과 11개 지자체 및 12개 지자체공무원을 해파리 모니터링 요원으로 지정하여, 해파리 출현정보를 제공받고 해파리 정보센터에서 출현 자료를 취합, 분석하여 5월 16일 이후 매주 인터넷으로 정보를 대국민들에게 제공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사 윤원득)

6. 어업자원 조사연구

가. 연근해 어업자원 조사연구

대형선망, 대형기선저인망어업 등 8개의 근해어업과 꽃게 연안유자망 등 4개의 연안어업을 대상으로 해구별, 어종별 어획량 및 어획노력량을 간접자원조사 방법으로 실시하여 자원밀도지수와 자원분포역의 변동을 분석하였으며, EEZ해역 내 75개 해구에 대한 저층트롤조사 및 과학어탐조사를 실시하여 직접자원조사에 의한 자원밀도 변동을 분석하였다.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삼치, 참다랑어, 갈치, 참조기, 말쥐치, 붕장어 등 9개 어종에 대하여 어체 측정과 체장조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재생산력의 변동과 연급군 분석을 통하여 자원수준을 평가하였다. 또한 2008년도 TAC 대상 자원인 고등어와 붉은대게 등 10종과 추가종인 도루묵, 홍어에 대한 자원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책 자료로 제공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사 최정화)

나. 원양 어업자원 조사연구

원양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효율적인 국제적 어업 관리의 기초를 위해 원양 주요 어업(트롤 등 6개 어업) 및 주요 어종(가다랑어 등 9개 어종)에 대한 생물특성연구 및 자원평가를 실시하여 어업별 해역별 어종별 자원상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이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은 21회에 걸친 국제수산기구 회의에 국별 보고서로 제공되어 원양어장의 지속적 확보에 기여하였다.

2002년부터 국제옵서버 양성사업을 추진하여, 2008년까지 국제옵서버 20명을 양성하였다. 양성된 옵서버는 2008년에는 국제옵서버 승선과학조사는 7개 해역에서 총 13척에 13명이 승선하였으며 이중 의무 승선조사는 남빙양 저연승 1척, 남빙양 통발 1척, 남동대서양 저연승 2척, 지중해 다랑어선망 1척, 남동태평양 트롤 1척 등의 조사가 이루어 졌다. 과학 승선조사는 중서부태평양 다랑어선망 2척과 중서부태평양 다랑어연승 3척을 이용하여 각각 인공유목 시험조사와 연승어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그외 남서태평양 및 남서대서양에서 2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여 어획량 통계, 부수어획종 혼획 상태, 어업대상종의 분포 밀도 및 생물학적 특성치 등을 분석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사 김두남)

7. 수산공학기술 개발

가. 환경친화적 어구·어법 개발

어류 자망용 생분해성 그물실의 강도와 유연도를 개선하기 위해 2종의 PBS 수지를 중합하여 시험한 결과에 의하면 절대강도는 같으나 상대강도와 유연도는 개선되었다. 또한 해중에서 16개월 경과한 생분해성 그물실의 강도와 신장률은 각각 15%, 2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분해성 대게 및 참조기 자망은 지속적으로 편망공정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생분해

성 문어단지는 처음 압출 제작되었으나, 어획성능은 기존 문어단지에 비해 약간 낮게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 생분해성 임연수어 자망을 제작하여 동해안에서 시험한 결과, 생분해성 자망에는 소형개체보다 대형개체가 주로 어획되어 이에 대한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 생분해성 꽃게 자망을 제작하여 서해안에서 시험한 결과, 망목크기 152mm 이상의 자망은 기존 나일론 자망과 어획성능이 비슷하였으나, 그 이하의 망목크기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생분해성 로프는 일반 폴리프로필렌(PP)로프와 비교하여 미역, 감태의 생산량이나 성장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PP로프 대체용으로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며, 해중립 조성용 로프의 굵기는 해조류 부착기의 안정적인 착생을 고려 할 때 10mm 이하가 좋으나, 내구성 개선이 필요하다.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사 김성훈)

나. 자원관리형 어업기술 개발

해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혼획·투기를 감소시키는 새우조망 어구 개발을 목적으로 시험 어구를 제작하여 시험조업을 수행한 결과, 새우조망이 해저면에 가하는 물리적 압력은 빔 양쪽에 집중되어 있어 해저에 해조류가 없는 경우에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새우조망에 혼획되는 부수어획물을 감소시키기 위해 한국형 새우조망용 혼획저감장치(BRD, Bycatch Reduction Device)를 개발하여 특허출원하고, 기존 어구와 어획성능을 비교하는 시험을 실시하였다. 비교어획시험을 통하여 혼획률과 새우어획량을 비교한 결과, BRD를 장착하면 기존 어구에 비해 혼획이 50%가량 저감되고 새우의 어획량은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우조망의 끝자루를 통과한 생물의 피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BRD를 설치한 경우가 BRD를 설치하지 않은 기존 어구에 비하여 피해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근해 어업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어업별 어획성능정량화 연구

에서는 1단계 사업으로 자원회복 주요 대상종인 도루묵, 꽃게, 낙지를 대상으로 하는 주요어구에 대한 어획성능 및 어획능력을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낙지통발어업의 적정침지일수 7~11일, 최적톤수는 4톤으로 나타났으며 초과어획능력은 9%로 평가되었다. 또한, 낙지연승의 초과어획능력은 17%, 대게자망 28%, 도루묵자망 25%로 평가되었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대게자망과 낙지통발의 적정어구사용량은 현 수준의 약 13%정도 낮게 추정되었다.

한편, 동해안에 분포하는 대게의 평균분포밀도는 25.0(inds./1,000m²)이었으며, 자원조사용 트롤어구(탐구8호)의 어획효율은 0.36으로 추정되어 자원산정에 필요한 평가지수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서해안의 주요 어종인 문치가자미의 합리적 이용과 관련하여 조업실태를 조사하고 망목크기가 다른 자망을 설계 제작하여 시험조업을 수행하였다. 시험조업 결과에 의하면 망목크기가 증가하면 소형개체의 어획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합섬유 어구에 비하여 단일섬유 어구의 어획량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후, 자망어구에 대한 문치가자미의 망목선택성 추정 등을 통하여 문치가자미의 지속적 이용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사 김성훈)

다. 어업자동화 시스템 기술 개발

어선의 조업경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약형 고성능 저비용 집어등 개발을 위하여 공랭식과 수랭식 LED 집어등을 설계, 제작하고 조업선에 설치하여 어획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두 시스템 모두 9.77톤의 오징어, 갈치 채낚기 어선에 각각 설치하였으며, 사용전력은 8kW(80W×100개)이다. LED 집어등을 설치한 조업선의 어획성능 시험결과, 갈치 채낚기 어선의 경우, LED 집어등을 사용한 시험선이 기존 메탈헬라이드 집어등을 사용한 기타 조업선의 평균보다 어획상자수는 24.5%, 위판액은 4.5% 더 많았으며

86.7%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징어 채낚기 어선의 경우에는 LED 집어등을 사용한 시험선이 동일 항구의 비교 선박 1척보다 어획상자수는 41.6%, 위판액은 45.8% 더 많았으며 40.1%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사 김성훈)

라. 인공어초에 관한 종합연구

우리나라 동·서·남해 및 제주 해역에 시설된 연구어초에 대한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어류의 군집, 어획량 및 해중립 조성 등의 생물적 특성과 어초의 규모와 시설방법 등의 수산공학적 특성 등을 조사·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어초시설 기준, 친환경소재 개발 및 시공 방법에 적용하여 연안 어초어장의 생산력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1) 굴패각연구어초의 효과조사 및 유체역학적 특성

굴패각연구어초는 부착생물 개체수, 총중량 및 플랑크톤 발생량이 대조구인 자연암반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삼중자망에 의한 어획조사 결과에서는 자연암반 어장의 18종에 비해 다소 적은 14종이 출현하였으나 어초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굴패각연구어초에 대한 유체역학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리 모형 안정성 실험을 한 결과, 고정상에서는 수심 10, 15, 20m에 대해서 어초의 설계유속에 대한 활동 및 전도는 주어진 실험조건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동상에서는 파동장에서의 활동은 없었으나 사련의 발달로 인해 수심 15m 조건에서 4-6cm 침하량이 측정되었다. 따라서 굴패각연구어초를 적지에 시설한다면 안정성있는 어초장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2) 동해안 연구어초 효과조사

동해해역에 시설된 팔각반구형인공어초 효과 조사결과, 춘계인 5월에 출현종과 어획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하계인 8월에 가장 적었다. 부착해조류는 5월에 현존량이 가장 높았고, 10월에 가장 낮았으며, 출현종은 8월에 11종으로 가장 많이 출현하였다. 부착동물은 5월과 8월은 비슷하였으나, 10월에는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인공어초 소재별 생물 친화성을 조사한 결과, 부착규조 외에 다른 생물의 출현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부착규조의 부착량 또한 어초재료 간에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3) 서해안 연구어초 효과조사

흙자망에 의한 어획조사 결과, 강제어초에서 18종으로 가장 많이 어획되었고, 대형전주 14종, 사각형어초에서 15종, 잠보형어초에서 11종, 대조구인 자연어초에서 10종이 출현하였다. 시설된 상태는 자갈 및 사니질 지역에 시설된 대형전주어초와 자갈 및 모래 지역에 시설된 잠보형어초의 시설상태는 양호하였으나, 사니질에 시설된 사각형어초에서는 세굴과 매몰의 일부가 확인되었다.

4) 남해안 연구어초 효과조사

잠수조사에 의한 위집어종 조사 결과, 어초의 상단부에 돌돔, 범돔, 부시리, 능성어 등이 관찰되었고, 중·하 단부에서는 미역치, 쥐노래미, 볼락, 능성어, 붉바리 등이 위집되었으며, 각 규모별 어초의 하단은 주축성(I형), 상단은 보목표성 어종(II형)이 위집됨이 확인되었다. 어초의 규모별 어획조사 결과, 800m³와 1600m³에서 18종으로 가장 높았고, 2400m³의 것에서 14종, 400m³의 것에서 13종으로 나타났다. 어초 보존상태 조사결과, 규모별 어초 시설지의 저질은 사패질로 구성되었으며, 시설된 어초의 매몰, 침하, 세굴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규모별 시설지에 대한 어초 간의 간섭영향도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연구어초의 안정성은 조사시간 동안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5) 제주해역에 시설된 인공어초에 대한 연구

성산해역과 외도해역에 시설된 교체블록식 인공어초와 다공간생물육성초의 효과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도해역이 성산해역보다 다양한 저서동물이 출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공어초 보존상태를 조사한 결과, 소형 블록을 교체할 수 있도록 고안된 교체블록식인공어초의 파손이 관찰되었다. 다공간생물육성초는 사질대에 시설된 외도해역에서 하부 약 20~30 cm의 매몰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파손이나 전도된 어초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인공어초의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연승시설에 감태를 이식했을 때 약 2년경과 후 최대 부착밀도를 나타내었으며, 이후 태풍 등의 강한 외력이나 외부 환경요인에 의해 점차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유기물질을 이용한 친환경 인공어초를 개발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패널에 유기물질을 도포하여 실험한 결과, 감태 분말을 이용한 시험편에서 가장 높은 생물량을 나타냈고 검둥감태, 석회조류분말을 이용한 시험편이 그 뒤를 이어 높은 생물량을 보였다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사 이승주)

8. 양식기술 개발 연구

가. 양식기술 및 관리시스템 개발

양식산업 표준화 연구를 통해 뱀장어의 양식 경제성 분석 보고서와 양식 표준 지침서를 발간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익성 제고 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지자체, 어업인, 학계 등에 양식기술 및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정립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양식산업의 제반 여건과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극복 방안과 국내외적 수산동향에 따른 국내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국

내외 양식산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양식산업의 모니터링과 이를 바탕으로 한 탄력적 연구개발 방향을 도출하였다.

고등어의 번식 내분비 조절에 있어서 중요한 난황단백전구체(vitellogenin)의 동태를 파악하여 양질의 고등어 수정란 확보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자바리의 정자 냉동보존을 위해 자바리의 정장을 분석하여 인공정장을 제조하였고, 동해방지제로 글리세롤을 사용하여 보존효율을 향상시켰다.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사 김종현)

나. 해역별 양식어장의 지속적 이용 및 관리기술 연구

동해안의 참가리비 폐사원인을 구명하기 위해 질병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세균성상 조사와 아울러 국산, 중국산 및 이식 모패간 유전형질 차이를 분석하였다. 서해안 일대 바지락 양식장에서 폐사율이 2007년 9.2%로부터 2008년 22.4%로 크게 증가하여 대량폐사 원인을 조사한 결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오염사고에 의해 폐사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안의 피조개 양식산업의 복원을 목적으로 폐사원인 구명과 양식 생산성 향상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치패의 환경조건별 생리학적 실험, 저질개선제별 성장 실험 및 고수온 내성 유전자 분석을 수행하였다. 멧게 양식산업의 안정화 연구를 위하여 멧게의 대량폐사를 유발하는 물렁증 발생시기를 조사하였고, 물렁증이 발생하는 요인으로서 양식환경 생리학적, 병리학적 및 유전학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멧게의 물렁증은 양식어장 환경 변동이 생물학적 요인과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가 오염도가 높은 어류 가두리 양식장의 생산성 향상과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양식어장의 수질과 저질의 오염상태 조사와 양식생물 대사생리 특성을 조사하였다. 환경친화성 양식방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도회유성 어종인 고등어를 대상으로 외해가두리 사육시험을 실시하여 외해가두리에서 양호한 성장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외해가두리

양식이 연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양식장의 퇴적물 특성을 조사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사 김종현)

다. 고부가 양식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연구

해역 특성에 맞는 양식어류의 기초생물학적 연구와 인공종묘생산에 의한 산업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강도다리(동해), 참조기(서해), 고등어(남해)를 대상으로 양식기술 개발시험을 수행하였다. 패류양식 품종의 생산성 향상, 질적 개선 및 우량종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키조개 양식기술 개발, 백합 종묘생산기술 개발, 민들조개 양식기술 개발 등 양식패류 산업화 연구를 추진하였다. 신품종 흰다리새우의 고밀도 육상수조 양식기술 및 친환경 고생산성 신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서해연안의 자연산 대하의 바이러스 감염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역별 대하 어미계열 및 1세대 무병계열을 확립하였다. 양식고밀도 해조류 양식기술 개발을 위하여 김 우량품종 탐색 및 선발육종 연구, 미역 선발육종 연구, 감태 양식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김 육종을 위한 고변이 유전자 마커로서 14개 미세위성(microsatellite; MS) DNA 마커의 특성을 분석하여 국제 유전자은행에 등록하였다. 수출 전략품종으로 육성이 가능한 해삼의 양식기술 개발을 위하여 어린 해삼의 중간육성 기술 개발, 육상수조를 이용한 해삼+전복 복합양식 시험, 해상에서의 전복+해삼 복합양식의 효율성을 조사하였다. 우리나라 생물자원의 부가가치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관상생물 양식기술 개발연구에서 파랑돔류의 해수관상어와 묵납자루와 잔가시고기와 같은 토종 관상어의 인공번식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저고리파랑돔, 파랑점자돔, 노랑꼬리파랑돔의 3종의 파랑돔에 대해 인공번식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다.

넙치 및 조피볼락 배합사료 개발을 위해 미량영양소 연구, 사료원료 이용성 연구, 영양기준 연구 및 배합사료 품질 연구를 통해 배합사료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을 강화하였다. 육종, 예방백신 및 배합사료 기술을 통합 적

용한 현장 실증시험에서 상품크기까지 배합사료와 습사료의 사육성적이 비슷하여 상품크기까지 산업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양식시설 자동화 연구를 위해 순환여과 양식 시스템에 적용이 간편한 수류 전환막을 가진 유동상 여과조를 개발하여 특허 출원하였으며, 전산유체학적 해석방법에 의해 대형와류로 인한 정체현상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사 김종현)

라. 양식생물 질병방제기술 개발

수산동물 주요 질병의 정확한 진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동물 질병 발생 역학연구, 수산동물 질병 진단기술개발 연구를 하고 수산동물병원체 보존을 위한 수산동물 균주은행실을 운영하였다. 어류 7종 및 갑각류 2종에 대한 수산동물 질병 발생 역학연구를 실시한 결과 기생충 12종과 세균 8속이 검출되었다. 또한 연근해산 어류 35종에서는 병원체가 48% 검출되었으며, 하천 서식어류 2종에서 6종의 병원체와 패류 3종에서 3종의 기생충이 검출되었다.

수산동물의 신속·정확한 질병진단을 위하여 수산동물 주요 전염병인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바이러스(viral hemorrhagic septicaemia virus; VHVS)와 잉어봄바이러스병바이러스(spring viremia carp virus; SVCV)에 대한 특이항체를 제작하고 이들에 대한 특이항체를 검출할 수 있는 검출법을 확립하였다. 또한 수산동물 균주은행실을 운영하여 10종 159균주를 추가 확보하고 대학 및 연구소 등에 8회 분양을 실시하였다.

수산 양식생물의 난치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어류 비브리오 하베이 백신, 어류 노다바이러스 백신 및 어류 연쇄구균 혼합백신 개발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비브리오 하베이에서 면역원성이 높은 유전자를 확인하였으며, 노다바이러스에서는 백신개발을 위한 최적 발현조건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요 세균성 질병인 연쇄구균병, 비브리오병 및 에드워드병을 예방하기 위한 3종 혼합백신 개발의 가능성도 확인하였다.

어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천연식물자원인 황금, 고삼, 금은화, 굴피, 자소염 및 동과자의 약리학적 효능을 탐색한 결과, 고삼을 넙치에 투여 시 질병 예방효과를 나타내었다. 퀴놀론계 항균제의 수온에 따른 넙치 체내에서의 약물동태학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저수온에 비하여 고수온에 배설이 빠르게 일어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휴약기간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및 어업인들의 수산용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안내지침서에도 활용하여 제작·배포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사 권문경)

마. 첨단 생물공학기술의 양식 실용화

넙치의 내병성 관련 유전자의 대량 확보 및 분석을 위하여 바이러스성 출혈성 패혈증(viral hemorrhagic septicemia; VHS) 바이러스와 에드워드균을 인위적으로 감염시킨 넙치의 주요 조직으로부터 19,000여개의 발현유전자를 확보하였으며, 그 중 반복되지 않은 13,000여개의 발현유전자로 이루어진 유전자 칩을 제작하여 바이러스 및 병원균 감염 시 반응하는 유전자의 발현 양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참굴의 발생단계별과 병원성 물질 자극에 의한 발현유전자의 대량분석을 통하여 총 5,760개의 발현유전자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참굴 유전자 칩(4.5K)을 제작하였다. 대량으로 분석된 넙치와 참굴의 발현유전자정보의 효율적 분석 및 활용을 위하여 생물정보 프로그램을 이용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넙치 유래 항균성 단백질과 저산소증 관련 유전자 등의 구조 및 기능연구를 수행하여 유용 경제형질 마커 후보유전자를 선별하였으며 10개의 넙치 발현유전자로부터 183개의 단일염기서열변이(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를 발굴하였다. 해양생물유래 유용단백질로서는 분비증강자에 의한 수용성 재조합단백질 생산 방법을 이용하여 항균성 펩타이드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법을 개발하였으며, 그 생산기술을 국내외에 특허출원 하였다.

주요 수산생물자원의 유전적 종판별 및 분류학적 관계 재정립을 위하여

미꾸라지를 비롯한 43종의 국제적으로 공인된 DNA 바코드를 분석하고 유전정보를 국내외 유전자은행에 등록하였으며 자체 데이터베이스인 유전자은행(<http://portal.nfrdi.re.kr/external/biotech/mgrbd>)에는 본 연구에서 금년 분석된 43종을 포함, 약 120여종에 대하여 일반 생태정보 및 유전자 염기서열, 개발된 고변이반복유전자(micro satellite; MS 및 SNP 프라이머 정보 등 총 1,500여개의 유전정보가 입력되어 있다. 대구, 키조개, 김, 해삼, 바지락, 조피볼락, 고등어 및 볼락의 8종에 대하여 계군구조 및 유전자 다양성을 조사·분석하였으며 또한 종 특이적인 MS 및 SNP 마커를 개발하여 민어, 말쥐치, 오징어, 오분자기, 김, 홍게등의 유전적 특성 및 집단구조를 확인하였다.

육종넙치 제2세대의 유전능력을 평가하여 성장은 11.3%, 체형의 경우 4.6%의 개량효과를 확인하였으며, 내성성 품종의 현장 사육시험에서 육종넙치의 생존율이 일반넙치에 비해 48% 향상되어 넙치 질병내성 품종의 개발 및 산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제1세대 육종전복의 육종가와 유전학적 유연관계를 근거로 교배지침을 작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제2세대 육종전복 핵집단을 생산하였으며, 이들의 성장 예측치를 추정한 결과, 암컷 26.8%, 수컷 30.3%로 평균 27.6%의 유전적 개량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넙치의 육종연구를 위한 넙치 연관 유전자 지도 작성에 사용된 총 마커 수는 230개였으며, 유전자 지도는 총 24개의 연관군으로 분리되었고, 넙치 게놈 크기는 1,022.5 cM 으로 추정되면서 마커간 평균 거리 4.4 cM으로 비교적 상세한 유전자 지도가 작성되었다. 이 유전자 지도를 바탕으로 성장(체중, 전장)에 관한 총 8개 이상의 형질관련 영역을 관찰하였다. 강도다리의 육종을 위해서도 총 56개 MS 마커를 개발하여 넙치에 적용한 결과 13개가 활용 가능하였으며, 이전에 개발된 넙치 240개 MS 마커 중에서 78개는 강도다리에 적용 가능하였다.

대하의 우량품종을 개발하기위해 각 지역 모하의 형질특성 조사 결과, 모든 양적형질에서 나로도산이 범성포산과 채석포산에 비해 우량하였으나,

평균 대립유전자수 및 다양성지수에 의한 각 지역 모하 차이는 없었다. 12개 MS 마커를 이용한 유전적 거리를 추정한 결과, 나로도산에 비해 법성포산과 채석포산 간의 유전적 거리가 가깝게 나타났다. 육종가계 생산을 위해 나로도산 모하 26마리를 이용하여 26가계를 생산하였으며 법성포산 모하 22마리를 이용하여 22가계를 생산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로부터 위임·위탁 받은 사무인 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와 관련된 환경위해성 심사 및 평가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유전자변형 수산생물 바이오안전성 정보자료집'을 기획 발간하고 있으며(2004, 2005 및 2007년), 2008년에는 '호주의 LMO 위해성분석 가이드'를 발간하였으며 온라인상의 웹페이지 (해양수산 LMO 안전성센터, <http://biosafety.nfrdi.go.kr>)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수산물고부가가치 산업화연구에서는, 전국에서 채취한 100종의 생물시료에 함유되어있는 생리활성을 암세포세포독성, 혈압조절, 대사계조절, 면역계조절, 항산화 활성 그리고 항균활성의 6개 항목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는 2008년도까지 303종의 생물시료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http://portal.nfrdi.re.kr/mbrbd>)화하여 생리활성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해조류로부터 기능성 소재 개발 응용연구를 추진하였는데 톳으로부터 추출한 항노화 활성 후보물질은 높은 항노화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인체 피부에 대한 독성도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모자반 등에서 해충 기피제 후보 소재 1종을 발굴하였으며 패류독소 분획 3종에서 항암 후보물질 1종(S4)을 발굴하였다. '한국수산물 성분표'의 증보발간을 위해 미수록 수산물 20여종을 수거하여 일반성분 및 당류분석을 행하였으며 기능성 다당류인 푸코이단의 함량도 분석하였고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해파리의 이용에 대한 연구도 실시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사 이정호)

바. 친환경적 내수면 양식기술개발 및 관리기술 개발

춘천호를 대상으로 유용수산자원과 환경을 조사하여 우점종이 누치, 아우점종이 피라미로 나타나 춘천호의 생태적 지위가 매우 낮은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금강수계의 유용 담수패류 현황 및 멸종위기 동식물 1급종에 대한 서식지 특성과 외래도입종의 우리나라 수서생태계에 적응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인공산란장을 만들거나 쏘가리와 같은 국내 서식 어식성 어류를 이용하여 배스, 블루길 등 위해 외래종의 구제 및 관리가 검토되었다. 멸종위기 담수어 보존 및 복원을 위해 꼬치동자개, 잔가시고기, 묵납자루, 임실납자루 및 감돌고기의 14계군 7,697마리를 원종 보존용으로 사육하였으며, 원종보존 5종 8계군을 대상으로 12,599마리를 생산하였다.

우리나라 담수어 실태 파악 및 관리대책 마련을 위해 정수성 어종 생태 조사와 담수 서식지 변화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낙동강 하구둑 계열별 어도 어류 이동 효과 조사 및 유용 수산자원 유영과 소화능력 시험을 추진하였으며, 금강 하구둑에서 상류수역인 충남 청양, 부여군에서 참게 회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어린 게의 성장을 위한 소상이 불가능하여 참게 복원효과가 제한적임을 확인하였다. 연어 및 시마연어 자원증강을 위하여 어미 9,834마리로부터 채란, 12,000천마리의 치어를 생산하여 남대천 외 8개 하천에 방류하였다. 중부 및 남부지역 내수면 수산자원보전지역을 대상으로 기초 육수학적 요인 조사 외에 어류상 조사를 병행하여 효율적인 수산자원보전지역 관리 및 정책자료 제공을 위하여 17개 수면과 4개 하천의 수질, 퇴적물 및 생물상 조사를 수행하였다.

지속가능한 내수면 양식 산업의 기반 확립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고부가 신품종 양식기술 개발, 양식 시스템 개발, 메기류 배합사료 개발, 다슬기 양식기술 개발, 무지개송어 전 암컷 생산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무지개송어 해수사육 시험시 크기가 큰 어류에서 양호한 생존율을 나타내었다. 내수면 자원조성을 위해 2008년산 잉어 250천마리, 붕어 250천마리, 다슬기 400천개, 2007년산 잉어 20천마리, 다슬기 100천개를 북한강 등에 방류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소 이완옥)

9. 수산식품 위생관리기술 개발

가.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위생조사

수산물에 대한 국민보건위생 안전확보 및 미국·EU·일본 등과 체결한 수출 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협정 이행을 위하여, 지정해역 7개소 (조사면적 63,800 ha, 지정면적 34,385 ha) 및 주변 육상 오염원에 대한 위생조사를 매월 1회씩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현재 설정되어 있는 지정해역 내 해수와 패류의 위생상태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기준에 부합하였고, 주변 오염원도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확대와 수출품종 다양화를 위하여 2003년부터 경남 통영시 용남·광도의 굴 생산해역(5,000 ha), 2004년부터 충남 서천군 비인만 해역(10,000 ha)에 대한 위생조사를 각각 실시하고 있다.

나. 수산식품 위생안전 위해관리 연구

1) 생물학적 위생안전 위해관리 연구

남해안 주요 어류양식장 및 패류양식장을 대상으로 항생제 내성 정도를 조사하여 해양상재 세균의 잠재적 위해발생 가능성을 파악하고 해역으로 유입되는 인체병원성 육상유래 세균, 위생지표세균의 항생제 내성정도를 조사하여 연안해역 내성유전자 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양식어류 및 양식굴에서 분리된 비브리오와 같은 해양상재세균은 대장균(*E. coli*) 및 장구균(*Enterococcus*) 속과 같은 육상유래세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항균제 내성의 정도는 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어류 양식장에서 어류질병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 중인 항생제는 어패류 중에 상재하는 세균의 항생제 내성에 유의할만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시스템의 전기분해 해수 및 자외선 살균장치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오염시킨 패류에 대한 정화 효과를 비교한 결과, 양 시스템 모두에서 안정적인 정화효과가 확인되었다.

2) 이·화학적 위생안전 위해관리 연구

외국과 체결한 위생협정에 따라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관리를 위하여 동 해역에서 생산되는 패류에 대한 잔류 항생물질(테트라사이클린계 4종), 유기염소계 농약(17종), 다환방향족 탄화수소(16종) 및 다이옥신 모니터링을 각각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전 잔류화학물질은 거의 검출되지 않았거나 일부 검출된 경우에도 국내외의 기준치에 미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수산물에 대한 효율적인 항생제 관리를 위하여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LC-MS/MS)를 이용한 마이크로라이드계 항생제 7종에 대한 동시 분석법을 확립하였다.

3) 독물학적 위생안전 위해관리 연구

연안에 서식하는 패류에 대한 마비성패류독소, 설사성패류독소 및 기억상실성패류독소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마비성패류독소는 3월 중순 마산만에서 처음 발생하여 3월 하순에 진해만 일부해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후 4월 중순에서 5월 초순에는 진해만 전 해역, 거제시 동부해역 그리고 부산연안까지 확대되었다. 이후 점차 감소하여 5월 하순에 모든 해역에서 기준치 이하로 감소된 후 거의 대부분의 해역에서 소멸되었으나, 일부 해역에서는 6월과 7월에도 산발적으로 발생하였다. 설사성패류독소와 기억상실성패류독소는 일부 해역에서 산발적으로 미량 검출되었다.

마우스를 사용하는 설사성패류독소의 분석법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기기를 이용한 분석법 확립을 위하여 LC-MS/MS를 이용한 신속·정밀분석조건을 확립하여 모니터링에 활용하였다. 또한 LC-MS/MS를 이용한 테트라민 분석법 개발을 위한 최적 분석조건을 확립하였다.

다. 수산물 고부가가치 산업화 연구

수산물 고부가가치 산업화 연구에서는, 100종의 해양생물소재를 대상으

로 생리활성물질을 추출하여 암세포독성, 혈압조절, 대사계조절, 면역계조절, 항산화 활성 및 항균활성의 6개 항목을 평가하였다. 한편, 수산생물활성소재 DB (MBRBD, <http://portal.nfrdi.re.kr/mbrbd>)를 통하여 총 308종의 생물에 대한 생리활성 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약 200여종의 생물시료에 대해서는 기초연구를 위한 소재 분양 기반 조성 중에 있다.

또한 해조류인 톳으로부터 항노화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하고, 해조류 7종 추출물(파래, 잘피, 김, 미역, 다시마, 모자반, 감태)을 활용하여 유기농 약 소재 개발 및 패류독소의 항암 효과를 검증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관 송기철)

10. 수산기술 지도·보급

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기술 보급

1) 수산기술 개발 보급

국립수산과학원에 배치된 어촌지도·수산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국 1,969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실용기술 중점 보급을 통해 활력 있는 어촌개발과 어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하였다.

먼저, 참조기 종묘생산 및 육상수조식 양식시험 등 총 25개 과제를 연구·교습어장으로 운영하면서 해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기술개발과 함께 지역어업인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였으며, 수산사무소별 “지역 으뜸 품종(상품)”을 개발·육성함으로써 고소득품종 보급 확대 및 지역특산품 발굴에 기여하였다.

또한 굴·피조개·가리비·새고막 유생조사(108개 지점)를 통한 채묘 적기예보를 통하여 어촌지역에서 「최신수산기술개발보급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해역별 주요 양식단지에 대하여는 어장환경과 품종별 작황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과학적인 어장관리를 도모하였고, 4월~11월 사이 적조 발생 우려해역 135개 지점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순회예찰을

실시하는 등 적조피해를 최소화 시키는데 기여 하였다.

또한 전국에 29개의 「어병예찰진단반」을 연중 설치·운영하여 증상별 원인·치료대책을 강구하였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지도를 통해 어병 확산방지와 어병에 대한 각종 기술상담·정보제공 등 지도기관으로서 대어업인 이미지를 향상시켰다.

2) 어업인 교육 및 홍보

해역별 주요 어업시기에 어업인 8천여 명 대상으로 수산기술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양식품종의 신기술보급과 수산자원회복관리, 수산물안전성 확보, 해양수산시책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홍보하였다.

나. 선진어업경영기반 구축

어업인들에게 기존의 관행적인 어업경영방식을 탈피하여 시장경쟁체제에 알맞은 과학적인 경영기법을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선진어업인력 양성을 위해 신지식어업인을 10명을(기존 121명) 선정하고 이들의 우수한 경영사례를 지역에 보급하기 위해 신지식어업인 전국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신지식인 단체 활성화를 위한 국내 수산물박람회 참석 등 사업을 지원하였다.

(수산개발과 사무관 정동기)

11. 수산특정연구개발

수산기술개발사업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의거 농어촌개발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시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다.

동 사업은 “수산특정연구개발”, “수산정책연구개발사업”과 “수산중소·벤

처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구 해양수산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공립연구기관, 학계, 산업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수산업 발전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8년도 수산기술개발사업은 “연료비 절감을 위한 소형전기어선 추진시스템 개발” 등 총 69개 과제(신규사업 35과제, 계속사업 34과제)를 선정하여 8,000백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였고,

이러한 수산기술개발사업은 2008년도 말까지 총 614개 과제에 대하여 95,372백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였는데, 이 가운데 545개 과제가 연구 완료되었고, 나머지 70개 과제는 계속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 동안 수산기술개발사업으로 연구 개발된 기술에 대하여는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토록 하고, 특허출원 및 수산시책사업에 반영하여 어업현장에서 어업인들이 직접 활용토록 하는 한편,

수산업종사자 교육 등에도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과제는 현재 연구기관 및 업계에서 활용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 정부조직 개편으로 '08년부터 수산분야만 지원

<표 4-2-50>

수산기술개발 추진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08/'07
합 계	과제수	113	98	94	92	86	81	67	17.3
	금 액	7,636	7,048	6,800	5,905	6,150	7,150	8,000	△11.9
수산특정	과제수	77	63	69	73	73	63	53	▽15.9
	금 액	5,351	4,634	5,350	5,155	5,650	5,650	5,500	▽2.7
수산중소벤처	과제수	22	21	11	5	13	18	14	▽32.4
	금 액	1,500	1,700	700	0	500	1,500	2,500	▽66.7
수산정책	과제수	14	14	14	14	-	-	-	'06년 사업종료
	금 액	785	714	750	750	-	-	-	

자료 : 농림수산식품 수산개발과

<표 4-2-51>

수산기술개발 주요성과

○ 산업재산권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수산특정	수산중소벤처	수산정책
국제특허	출 원	26	15	11	-
	등 록	10	10	0	-
국내특허	출 원	250	216	23	11
	등 록	176	149	17	10
실용신안	출 원	22	21	-	1
	등 록	18	17	-	1
저작권	출 원	9	8	-	1
	등 록	9	8	-	1
상표	출 원	9	7	-	2
	등 록	9	7	-	2
의장	출 원	3	3	-	-
	등 록	3	3	-	-
S/W		2	2	-	-

○ 국내외 논문 및 학술회의 발표 실적(국제 768건, 국내 2,654건)
(단위 : 건)

구분	합계	'97까지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국제	SCI	152	0	0	3	5	13	12	15	23	14	14	23	30
	일반	53	0	1	0	2	7	1	1	7	9	1	2	22
	학술회의	563	36	26	33	29	53	59	50	90	63	49	49	26
국내	SCI	29	0	1	1	1	2	1	2	5	8	1	4	3
	일반	1,017	95	106	127	96	90	91	91	62	93	59	38	69
	학술회의	1,608	151	127	160	142	170	159	170	130	136	126	103	34

* SCI(science citation index) : 과학기술논문(미국) 색인검색

○ 경제적 성과

구분	합계	'97까지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기술이전(건)	44	-	5	8	7	6	4	3	1	2	4	3	1
매출액(억원)	2,792	70	26	57	181	291	333	1,001	508	139	186	-	-
수출액(억원)	165	-	-	-	6	27	29	63	40	-	-	-	-
고용창출(명)	2,028	6	1	10	12	41	37	799	485	479	158	-	-

○ 어업인 등 지도교육 활용 및 정책활용 실적
(단위 : 건)

구분	합계	'97까지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지도교육	593	37	43	68	62	44	61	57	61	42	42	59	17
정책활용	113	8	3	9	16	11	24	15	21	2	4	-	-

(수산개발과 사무관 양진문)

제7절 어업인 지원 강화

1. 수산자금 공급 확대

가. 영어자금

영어자금은 수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어업활동에 필요로 하는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자금으로 안정적 어업경영을 위해 지원하는 대표적 수산정책자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영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허가어업·면허어업·신고어업을 대상으로 매년 영어자금 소요액을 조사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 조사한 영어자금 소요액은 원양어업을 포함하여 4조 1,685억원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 영어자금 총 공급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규모인 1조 5,050억원으로 연근해어업 분야에 1조 4,250억원, 원양어업 분야에 800억원을 공급하였다. 이 영어자금 공급액 1조 5,050억원은 영어자금 총소요액인 4조 1,685억원의 36.1%에 달하는 금액이다. 한편 연근해어업 분야의 공급액은 소요액인 3조 9,210억원의 38.4%에 이르는 규모이며, 원양어업 분야의 공급액은 소요액인 5,017억원의 15.9%에 달하는 금액이다. 영어자금 공급액 중 2008년말 현재 어업인들이 실제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영어자금은 연근해어업 분야에 1조 3,431억원, 원양어업 분야에 785억원으로 총 1조 4,216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공급액 대비 약 94.5%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러한 영어자금은 어업인에게 연리 3%로 대출하고, 상환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씩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어자금 상환연장은 수산물 위판실적, 연체여부, 원금상환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융자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영어자금 운용의 건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말 영어자금 연체율은 전년에 비해 0.99%p 낮아진 7.6%로 호전되었다.

영어자금 운용규모인 1조 5,050억원 중 500억원은 재해 등 특수한 상황 발생시 신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특별영어자금으로 운용하였다. 이 특별 영어자금 중 178억원은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어 어업 경영자금 확보 및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위해서 배정 및 집행 하였다.

〈표 4-2-52〉

영어자금 공급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05	'06	'07	'08	'08/'07
소 요 액		38,920	41,199	41,299	41,685	100.9
공 급 액		14,050	15,050	15,050	15,050	100.0
(공 급 율)		(36%)	(37%)	(36)	(36)	-
조 달	재 정 자 금	5,636	5,636	5,636	5,636	100.0
	수협신용자금	3,933	4,433	4,433	4,433	100.0
	수협상호자금	4,481	4,981	4,981	4,981	100.0
운 용	연근해어업	13,400	14,250	14,250	14,250	100.0
	원 양 어 업	650	800	800	800	100.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나. 수협 자체자금

수협은 2008년 국내 최고 수준의 신용평가 등급을 바탕으로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영업마케팅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자체자금 등 총 19조 8,569억원을 조달하여 영어자금 등 수산정책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보다 2조 51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그 내역을 보면 수산금융채권 발행을 통해 2,959억원, 고객 예수금이 9,769억원 증가하였다.

<표 4-2-53>

국내·외 신용평가 등급

구 분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국내 신용평가기관	
	Moody's	S&P	한국신용정보(주)	한국기업평가(주)
신용평가등급	A2(S)	A-(S)	AAA(S)	AAA(S)

註) Positive는 등급의 상향 조정 가능성 있음. Stable는 등급의 변동 가능성 없음.

<표 4-2-54>

수협 자체자금 조성 및 운용

(단위 : 억원)

구 분	'07년		'08년		증감률 (%)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조 달	○ 자 체 자 금	139,687	78.4	153,569	77.3	109.9
	- 예 수 금	105,809	59.4	115,578	58.2	109.2
	- 특별회계자금	6,331	3.6	7,485	3.8	118.2
	- 수산금융채권	27,547	15.5	30,506	15.4	110.7
	○ 차 입 금	14,097	7.9	13,929	7.0	98.8
	- 한 은	312	0.2	363	0.2	116.3
	- 재 정 자 금	6,121	3.4	5,813	2.9	95.0
	- 제 기 금	7,664	4.3	7,753	3.9	101.2
	○ 기 타	24,275	13.6	31,071	15.6	128.0
합 계	178,059	100.0	198,569	100.0	111.5	
운 용	○ 원 화 대 출 금	121,605	68.3	127,893	64.4	105.2
	- 금 용	108,450	60.9	114,701	57.8	105.8
	- 재 정	13,155	7.4	13,192	6.6	100.3
	○ 타 사업 자금	1,384	0.8	1,085	0.5	78.4
	○ 기 타	55,070	30.9	69,591	35.0	126.4

자료 : 수협중앙회 금융기획부 (주 : 상호금융, 신탁, 공제적립금 제외)

2. 어업인 부담 경감

가. 어가부채경감대책 추진

2001년 1월 8일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에 따라 매년 어가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어가부채경감대책은 어업인이 사용하고 있는 정책자금에 대한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원방식은 대출기관인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에서 어업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어가부채경감대책에 해당되는 자금에 대해서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조치 등을 실시하고, 정부에서는 대출기관의 이자손실에 대해 이차보전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어업인에게 지원되는 자금의 대출조건은 자금의 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보통 연리 1.5~5.0%로서 5~20년간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어업인에게 지원된 어가부채경감대책자금의 대출잔액은 2008년말 현재 약 5,75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년말 6,970억원에 비해 상환등으로 1,220억원이 감소한 규모이다. 이 자금의 대출잔액을 각 대책별로 보면, 2000년 이전의 대책에 의해 지원된 자금의 잔액이 448억원이며, 2001년 대책에 의한 잔액이 744억원, 2004년 대책에 의한 잔액은 3,743억원에 달해 전체 대출잔액의 약 65.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6년 대책으로서 2008년말 까지 지원된 자금의 잔액은 815억원에 이르고 있다.

어가부채경감대책 추진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취급시 취한 담보형식을 보면, 2008년말 현재 기준으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한 대출잔액이 전체 어가부채경감대책자금 대출잔액의 약 62.7%를 점유하는 3,605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부동산 담보취급은 9.8%인 561억원에 불과하고 이어서 신용대출 9.3%, 선박담보 8.0%, 양식장 담보 7.5% 등이다.

나. 각종 이차보전

각종 수산정책자금은 수협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정책자금의 재원을 재정자금과 수협의 금융자금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이들 자금의 조달금리가 실수요자인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대출금리 보다 높아 이 자금을 취급하는 수협에 대해 금리차이의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가 이차보전 사업이다.

1) 영어자금 이차보전

영어자금의 대출금리를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연근해와 원양으로 구분하지 않고 연리 3.0%(종전 4.0~4.5%)로 2004년 3월 1일부터 인하·적용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2008년도에 1조 5,050억원의 영어자금을 저리로 지원함에 따른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와의 금리차액에 대해 수협에 약 52,970백만원의 이차보전금을 교부함으로써 어업인들이 영어자금을 저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2) 수산피해복구 이차보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를 입은 수산시설의 원상복구를 위한 복구용 융자금은 수협중앙회의 예수금으로 조달하여 연리 1.5%(2006년 1월 1일부터, 종전 4.0%)의 저리로 지원함에 따라 2008년에 2,088백만원의 이차보전금을 교부하여 어업인들의 이자부담경감에 기여하였다.

또한, 2006년도 3월에 발생한 풍랑피해와 7월의 태풍 ‘에위니아’ 및 10월 호우 및 강풍·풍랑 등의 피해발생 당시 피해어가에서 이미 대출받아 사용 중인 영어자금에 대해 피해정도에 따라 상환기한을 1~2년간 연장하고, 연리 3%인 이자도 같은 기간동안 2,083백만원을 면제토록 함에 따라 수협에 대한 이차보전으로 어업인의 금융비용을 덜어 주었다.

3) 어가부채경감대책 이차보전

「2000년 어가부채경감대책」, 「2001년도 어가부채경감대책」, 「2004년도 어가부채경감대책」 및 「2006년도 어가부채경감대책」으로 지원한 중장기 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금리인하,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수산업경영개선자금, 연대보증피해특별자금 등에 대한 수협외 이차수입 손실 등에 대해 18,463백만원의 이차보전금을 교부함으로써 어업인들도 같은 규모에 해당하는 금융비용 부담을 덜게 하였다.

4) 원양어업경영자금 이차보전

「2000년 어가부채경감대책」에 따라 원양어업경영자금 중 1995년 이전 재특회계 융자금의 금리가 연 8%에서 7%로 인하되면서, 최초로 이차보전예산 9억 원이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되었다.

2008년도에는 원양어업경영자금 1,480억 원을 연리 3%로 원양업체에 저리 지원함으로써 연간 4,590백만원의 금융부담 경감 효과가 있었다.

다.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

건설하게 수산업을 영위하다가 자연재해, 적조, 가격폭락, 어·패류 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전업어가 또는 어업용 부채가 2,500만원 이상인 수산업 경영체(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중에서 각 수협에 설치된 “어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평가를 거쳐 회생이 가능한 경영체의 경영자 또는 회생이 불가능한 경영체를 인수하고자 하는 어업인에 대해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에서 정하는 수산업경영회생자금(재원 : 수협자금)을 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4,807백만원을 지원하였다.

3. 수산 관련 세제 개선

가. 수산세제 지원 연장

정부가 어업인들의 어업생산 활동지원 및 소득보전을 위해 어업용 면세유 공급을 비롯한 세제감면제도를 시행으로 2008년도 기준으로 수산분야에는 연간 약 7,305여억원의 세제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다.

특히 세제지원효과가 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 등은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일몰제로 운영되어 있는 바, 2008년 12월까지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2009년부터는 전액 과세되도록 하고 있었다.

최근의 어려운 어업여건을 감안하여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추진한 결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과 어업인이 수입하는 어업용기자재에 대하여 2011년 12월까지 영세율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였다.

나. 수산세제 지원대상 확대

2008년도 어업용 면세유 공급은 총 499만 드럼으로서 어업인들의 면세 혜택금액은 6,021억원이며, 공급대상은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나잠어업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양식어업용 시설 및 수산종묘생산시설,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 등이다.

어업인 세제지원을 강화하고자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확대를 추진한 결과, 2008년 2월부터는 어선 및 어망용 방오도료, 양식장용 사료살포기,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해졌다.

〈표 4-2-55〉

2008년도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실적

(단위 : 천 드림, %)

구 분	'06	'07	'08	'08/'07
합 계	6,318	6,266	4,991	80.9
경 유	5,184	5,206	4,068	78.1
중 유	421	365	291	79.7
M F - 3 0	49	55	35	63.6
회 발 유	634	605	561	92.7
운 활 유	30	35	36	102.8
면세액(억원)	7,092	7,542	6,021	79.8

※ 수협중앙회 공급분

(수산정책과 사무관 전길권)

4. 수산발전기금 조성·운용

수산발전기금은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체결을 비롯한 국제 어업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수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고자 설치한 수산 분야의 유일한 기금으로 2001년 7월부터 운용을 개시하였다.

수산발전기금 설치당시에는 자체재원의 확보가 여의치 않아 재원의 대부분을 정부출연금에 의존하였지만, 2005년 1월 농림부에서 운용하던 농수산 물가격안정기금중 수산부문사업(3,694억원)을 이관하고, 공유수면점·사용료 편입('06), 수산물공매납입금('07) 및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신규 확보('08) 등 자체재원 확충을 통해 2008년 말 현재 7,852억원을 조성하였다.

<표 4-2-56>

수산발전기금 조성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실 적		
	2007까지	2008	누 계
순조성액(A-B)	749,577	35,641	785,218
총조성액(A)	910,116	82,900	993,016
○ 출연금(정부, 민간출연금)	267,000	-	267,000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90,751	21,486	112,237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1,073	8,640	9,713
○ 수산물공매납입금	4,123	6,262	10,385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67	67
○ 공유수면점·사용료	21,431	9,853	31,284
○ 수산물판매대금	63,680	14,121	77,801
○ 이자수입	68,393	18,719	87,112
○ 농안기금이관	369,378	-	369,378
○ 기타수입 등	24,287	3,752	28,039
사용액(B) (경상지출 등)	160,539	47,259	207,798

2008년도 수산발전기금 운용 실적은 총 5,910억원으로서 법정부담금 및 융자원금회수 등 증가와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신규 부과 하였으나, 수산물판매수입과 공유수면점사용료 감소 등으로 인해 운용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2.3% 감소하였다.

사업별로는 경상, 융자사업을 포함 19개 사업에 5,270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4-2-57〉

2008년 수산발전기금 조달 및 운용계획 대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획(A)	실 적(B)	비율(B/A)
조 달	【자체수입】	494,552	507,345	102.6
	○ 융자금이자수입	13,771	13,357	97.0
	○ 여유자금이자수입	3,632	5,700	156.9
	○ 법정부담금	24,823	32,241	129.9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17,725	21,591	121.8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1,098	4,321	393.5
	- 수산물공매납입금	6,000	6,262	104.4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67	순증
	○ 공유수면점·사용료	13,445	7,209	53.6
	○ 재고자산매각대	16,250	14,121	86.9
	○ 융자금회수	422,631	431,319	102.1
	○ 기 타		3,398	순증
	【일반회계전입금】	20,000	-	-
	【여유자금회수】	85,241	83,648	98.1
합 계		599,793	590,993	98.5
운 용	○ 기금관리비	432	385	89.1
	○ 사업운영비	1,017	921	90.6
	○ 경상사업비	60,196	41,673	69.2
	○ 융자사업비	487,713	485,347	99.5
	○ 여유자금운용 등	50,435	62,667	124.3

<표 4-2-58>

2008년 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 및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당초계획 (A)	수정계획 (B)	실 적 (C)	증△감	
				C-A	%
계	599,793	599,793	590,993	△8,800	△1.5
1. 기금운영비	1,449	1,449	1,306	△143	△9.9
o 기금관리비	432	432	385	△47	△10.9
o 사업운영비	1,017	1,017	921	△96	△9.4
- 해양환경개선부담금징수비용	729	729	691	△38	△5.2
- 수산물도매시장평가	40	40	40	-	-
- 우수수산물대축제	48	48	48	-	-
- 기금연구용역비	50	50	38	△12	△24.0
- 수산물공매납입금징수비용	150	150	104	△46	△30.7
2. 사업비	547,909	547,909	527,020	△20,889	△3.8
가. 정상사업	60,196	56,766	41,673	△18,523	△30.8
o 해양환경개선(기금)	18,476	17,546	17,480	△996	△5.4
- 폐기물해양배출종합관리시스템구축	2,300	2,300	2,266	△34	△1.5
- 해양폐기물정화산업(민간보조)	9,800	9,800	9,788	△12	△.1
- 해양폐기물정화산업(자치단체보조)	2,400	2,400	2,391	△9	△.4
- 해양환경개선부담금부과연구	100	100	90	△10	△10.0
- 폐기물해양배출총계통발어업피해지원	3,876	2,946	2,945	△931	△24.0
o 수산물가격안정(기금)	28,500	26,000	24,193	△4,307	△15.1
- 비축사업	25,000	17,500	15,693	△9,307	△37.2
- 출하조절사업	3,500	8,500	8,500	5,000	142.9
o 품목별경쟁력강화사업	120	120	0	△120	△100.0
- 활어수출확대를위한특수차량등구입	120	120	0	△120	△100.0
o 직접피해지원	13,100	13,100	0	△13,100	△100.0
- 소득보전직불금	5,100	5,100	0	△5,100	△100.0

구 분	당초계획 (A)	수정계획 (B)	실 적 (C)	증△감	
				C-A	%
- 폐업지원금	8,000	8,000	0	△8,000	△100.0
나. 용자사업	487,713	491,143	485,347	△2,366	△.5
o 어업경영자금지원(기금)	57,700	54,952	55,864	△1,836	△3.2
- TAC참여어업인경영개선자금	15,000	14,142	13,965	△1,035	△6.9
- 양식어업지원	13,300	12,510	12,047	△1,253	△9.4
- 어망생산운영및어구제작비지원	700	600	600	△100	△14.3
- 어선기관및장비개량	600	600	600	-	-
- 어업인후계자육성	15,700	14,700	14,700	△1,000	△6.4
- 노후원양어선신조대체	2,400	2,400	3,952	1,552	64.7
- 어업인정책보험지원	10,000	10,000	10,000	-	-
o 품목별경쟁력강화사업	6,700	6,700	0	△6,700	△100.0
- 관리회사제도도입	5,000	5,000	0	△5,000	△100.0
- 원양어선설비현대화	1,000	1,000	0	△1,000	△100.0
- 순환여과식양식시설지원	700	700	0	△700	△100.0
o 수산물가격안정(기금·용자)	270,600	277,100	277,100	6,500	2.4
- 수산물수매지원	134,000	136,500	136,500	2,500	1.9
- 우수수산물지원	136,600	140,600	140,600	4,000	2.9
o 유통·가공시설지원(기금)	31,824	31,502	31,494	△330	△1.0
- 가공시설및운영지원	25,686	25,364	25,356	△330	△1.3
- 감천항공영수산물도매시장건설	6,138	6,138	6,138	-	-
o 수산물유통개선(기금)	120,889	120,889	120,889	-	-
- 산지및소비자유통자금	120,889	120,889	120,889	-	-
3. 여유자금운용	50,435	50,435	62,667	12,232	24.3

(수산정책과 사무관 전성래)

5. 어업인정책보험 운영

연근해 어선원 및 어선이 재해발생시 신속·공정한 보상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보험법」을 2003년 3월 19일 제정(법률 제6866호)하고 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협중앙회에 위탁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2008년도에는 어선원 보험에 가입한 37,116명(2007년 대비 3.5% 증가)의 어선원과 어선보험에 가입한 5,704척의 어선에 대하여 26,54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표 4-2-59〉

어선원 및 어선 보험료 국고보조금 지원실적

(단위 : 명, 척, 백만원, %)

구 분	'04	'05	'06	'07	'08	'08/'07
○ 어선원보험료						
- 인 원	35,658	36,431	36,846	35,815	37,116	104%
- 보 조 액	6,546	7,958	8,573	9,829	11,968	122%
○ 어선보험료						
- 척 수	2,753	4,925	5,015	5,397	5,704	106%
- 보 조 액	2,058	1,491	2,007	2,615	3,897	149%
○ 위탁운영사업비						
보 조 액	5,241	5,502	7,420	7,683	10,675	139%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한편, 2008년도에는 어업인 정책보험사업 시행 6차년도로서 신속한 재해 보상 및 어업경영의 안정에 역점을 두었다. 먼저 2008년 11월 28일~11월 29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와 수협이 합동으로 정책보험 실태조사를 위해 어촌현장방문을 실시하였고, 업종별 할인·할증요율 개정, 특례요율의 단계적 할증 적용 등의 제도개선을 실시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합리성과 형평성

을 제고하는 한편, 정책보험 담당직원의 직무능력 함양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책보험 실무교본 500부를 제작·배부하고 연수원집합교육, 위성방송교육, 이재조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보험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어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어선원·어선주 대표 및 공익대표 등 15인)를 개최(1회)하여 보험제도의 개선과 적용보험요율을 결정하였으며, 보험급여에 불복이 있는 자의 재심사를 위한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어선원·어선주 대표 및 보험전문가 등 15인)를 개최(8회, 11건)하여 어업인의 보험급여 관련 불만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정책보험활성화를 위한 보험사업 이해관계자간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보험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재해보상보험 안내장, 포스터, 플래카드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였고,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어업무선방송을 연중(495회) 실시하였으며, 어선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2008년 3월부터 전국 주요 항·포구에서 기관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보험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정상납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체납어선(6,543건)을 대상으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이와 병행하여 미납자에 대해서도 조건부 압류해제 방안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어업경영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수산개발과 사무관 양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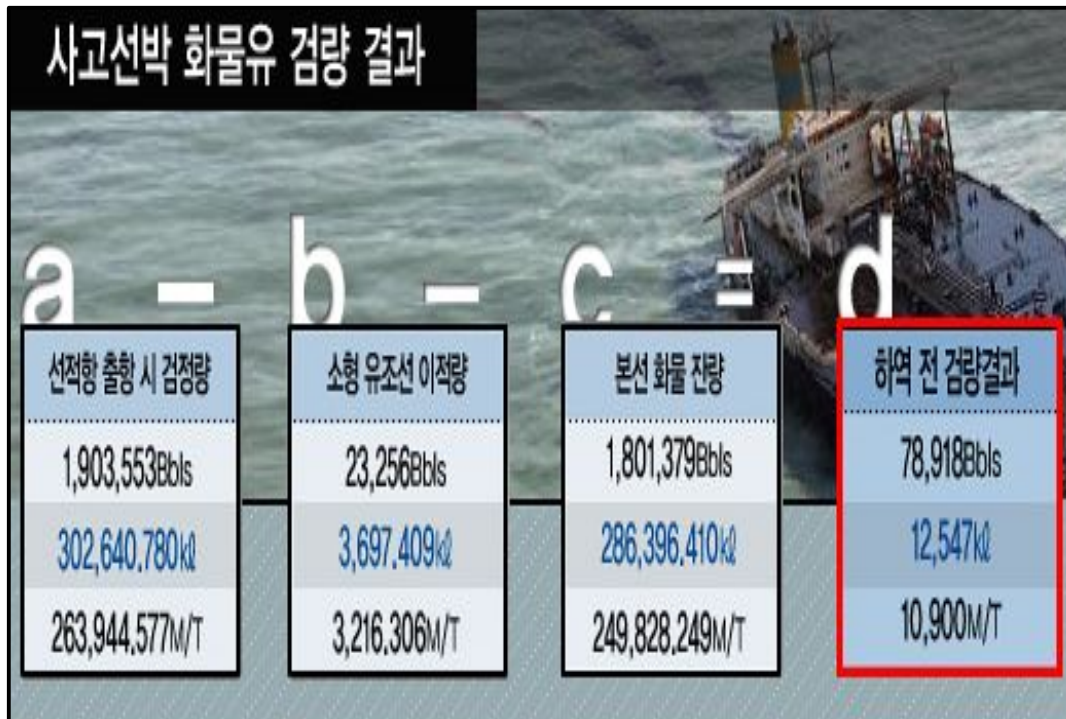
6. 허베이 스피리트 피해어업인 지원단 운영

가. 유류오염사고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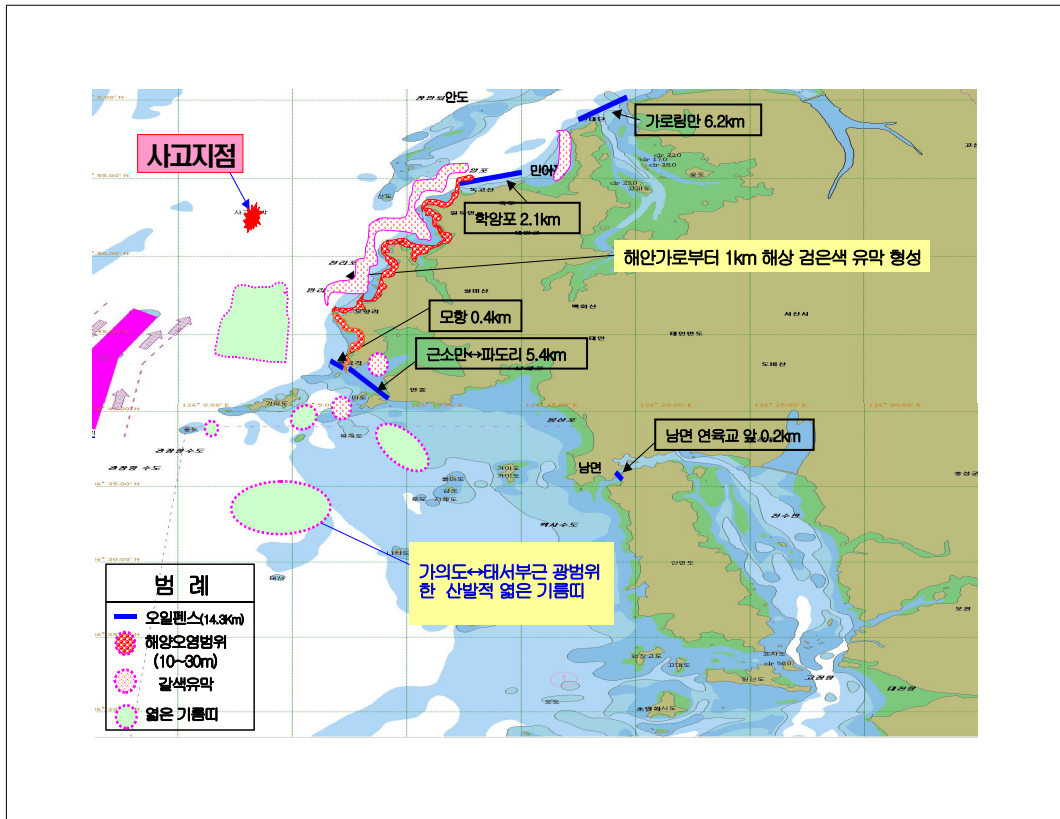
‘07. 12. 7(금) 07:06 경 충남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 북서방 5마일 해상에서 발생한 유류 유출사고는 삼성중공업 소속 예인선(삼성 T-5호, 삼호 T-3호)이 3천 톤급 해상크레인을 적재한 부선(삼성1호)을 병렬로 연결하여 항해 중 좌측 예인선(삼성T-5호)의 예인줄 절단으로 크레인 부선이 밀리면서 대산

항으로 입항 대기 중인 유조선(Hebei Spirit호)과 충돌하여 유조선 원유탱크(좌현 1, 3, 5번 화물창)가 파공되어 원유 12,547kl(10,900톤)를 유출, 3개도(11개 시·군)에 걸쳐 해안선 280.3km(충남 167, 전남 113.3), 도서 101개(충남 59, 전남·북 42), 양식장 34천ha, 해수욕장 15개소 등 광범위하게 유류오염피해가 발생하였다.

- * 유조선 : 「HEBEI SPIRIT호」 (146,848톤 / 홍콩 선적 / 선령 14년)
- * 예인선 : 「삼성 T-5호」 (292톤)
- * 부 선 : 「삼성 1호」 (11,828톤 / 3,000톤급 해상크레인 적재)



< 유류 유출사고 위치도 >



나. 정부 조치 및 지원

1)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긴급 생계안정자금 지원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충남 6개 시·군(태안, 보령, 서산, 홍성, 당진, 서천)관내 유류유출사고 피해발생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 공고 제204호, '07.12.11)하였으며, 전남 3개 군(신안, 영광, 무안)을 추가 지정(대통령 공고 제207호, '08.1.18)하는 한편, 「허베이 지원 특별법」*에 의거 전북 군산시와 부안군의 피해발생지역도 제1차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지정지역'으로

*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의결하였다.

정부는 유류오염사고 발생일('07.12.7)에 동 사고로 인해 오염된 양식 수산물의 채취 및 유통을 통제토록 하여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출어자제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피해지역 어업인 등에 대한 생계안정과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긴급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였다.

<표 4-2-60>

특별재난지역 긴급 생계안정자금 지원내역

(단위 : 백만 원)

구분	교부금				집행실적				집행잔액				지급 세대
	계	국고	지방비	성금	계	국고	지방비	성금	계	국고	지방비	성금	
총계	117,169	76,800	15,000	25,369	117,150	76,800	14,981	25,369	19	-	19	-	77,413
총남	99,330	60,000	15,000	24,330	99,311	60,000	14,981	24,330	19	-	19	-	67,575
보령	14,330	5,430	7,000	1,900	14,329	5,430	6,999	1,900	1	-	1	-	13,357
서산	10,708	4,548	4,500	1,660	10,705	4,548	4,497	1,660	3	-	3	-	4,377
서천	7,636	4,410	2,100	1,126	7,634	4,410	2,098	1,126	2	-	2	-	9,373
홍성	3,081	2,248	200	633	3,068	2,248	187	633	13	-	13	-	2,053
태안	60,774	42,042	-	18,732	60,774	42,042	-	18,732	-	-	-	-	34,250
당진	2,801	1,322	1,200	279	2,801	1,322	1,200	279	-	-	-	-	4,165
전남	17,839	16,800	-	1,039	17,839	16,800	-	1,039	-	-	-	-	9,838
무안	2,504	2,307	-	197	2,504	2,307	-	197	-	-	-	-	1,090
영광	6,084	5,730	-	354	6,084	5,730	-	354	-	-	-	-	3,246
신안	9,251	8,763	-	488	9,251	8,763	-	488	-	-	-	-	5,502

2) 피해지역 특별영어자금 등 지원

유류 오염사고 피해지역의 피해어업인에 대해 특별영어자금 250억원을 배정하여 '08년말까지 17,846백만원을 공급(연리 3%, 1년, 1년 범위 내 연장 가능) 하고, 피해발생일 현재 사용 중인 영어자금 66,350백만원에 대해 최장 2년간 상환연장 및 이자감면(연리 3%)하였으며, 수산업경영회생자금 2,187백만원을 지원(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하였다. 지원범위는 특별재난지역(충남·전남) 및 특별법에 의한 지정지역(전북)의 유류피해 어업인이 해당된다.

3) 수산물 안전성 조사

유류 오염사고지역의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유류의 발암성 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오염여부 검사를 통해 식품으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조사결과 태안 일부지역의 패류(굴 등)를 제외한 나머지 어종은 인체에 위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조업재개 조치

'08.2월말 어업인들이 조업재개를 요청해 음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등 연구기관의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거쳐 조업재개 여부를 검토·추진하였다. 조업재개 추진절차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의뢰해 오면 국립수산식품부는 계획을 수립하여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성을 조사토록 한 후 안전성이 확인되면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에서 '08.4.18부터 '08.9.3 사이에 지역별·어업별로 단계적으로 조업을 재개하였다.

5) 맨손어업 피해 배(보)상 지원

유류오염에 의한 피해 배(보)상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원칙(1992년 유류오염손해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기금 보상청구 매뉴얼)에 따라, 실제 피해를 입었으나 어업신고필증 미소지 등으로 다수의 맨손어업자가 배(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배(보)상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피해발생일 이전부터 신고필증을 보유하고 있는 31,145명을 비롯해 맨손어업 신고필증을 가지고 있지 않던 어업인일지라도 어촌계 업무구역 내에 거주하던 19,479명에 대하여 우선 조사 대상으로 구분하여 총 50,624명에 대해 사전 인터뷰를 통해 피해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국제기금측과 협의하였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전 인터뷰 그룹에 속하지 못한 실제 맨손어업 피해어업인도 피해사실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피해어업인과 동일하게 맨손어업자에 대해서도 정당한 배(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국제기금과 협의하였다.

6) 기타 지원사항

충남지역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을 354척(15,154백만원)으로 확대 지원하였고, 홍성 해변관광 승마타운 조성에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375백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유류 오염피해가 우심한 태안지역의 43ha(126억 원)의 굴양식장시설 철거비 지원과 태안어장 정밀조사·복원사업을 위한 연구용역(499백만원, '08.5)을 하였으며, 수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수산물 대축제와 체험행사(50백만원, '08.8)지원, 양식장 전기 인입시설('08.5)지원 및 중앙부처 공무원 낚시대회('08.6)와 휴가철 태안찾기 캠페인('08.7~8)을 실시하였다.

다. IOPC Fund측과의 업무추진 현황*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제41차 IOPC Fund 집행이사회('08.6.23~6.27)와 제13차 IOPC 총회 및 제42차 집행이사회('08.10.13~10.17)에 참여하여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한국정부 조치·지원사항을 보고하였으며, 공식 및 비

* IOPC Fund :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The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

공식 실무협의를 통하여 유류 오염피해 어업인의 신속하고 정당한 배(보)상을 위해 회원국을 대상으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피해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제41차 IOPC Fund 집행이사회 기간 중 비공식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기금측간의 정례회의 개최에 대해 합의함에 따라 '08. 12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IOPC Fund와 피해민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였다

라. 국제협약과 국내법에 의한 보상체계

IOPC Fund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직후 처음 열린 제40차 집행이사회에서부터 '08.10 열린 IOPC Fund 제13차 총회 및 제42차 집행이사회까지 매 회의 때마다 사고 추정 피해액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추정 피해액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4-2-61〉

국제기금측에서 추정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피해액

(단위 : 억원)

구 분	'08. 3. 14	'08. 6. 27	'08. 10. 17
방 제 비	1,100	1,345	1,623
어업 및 양식	1,900	2,060	2,060
관 광	720~1,240	1,980~2,330	1,980~2,330
총 계 (초기 보상율)	3,720~4,240 (60%)	5,385~5,735 (35%)	5,663~6,013 (35%)

유조선과 관련된 유류사고가 발생하면 유조선 선주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국제협약과 국내법에 따라 1차적으로 최대 8,977만SDR*(약 1,422억원)까지 손해배상을 하며, 유조선 선주 배상책임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국제

* SDR : IMF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08.3.13기준 1SDR=1,584원

기금에서 11,323만SDR(약1,794억원)까지 추가 보상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유조선선주 보험사와 국제기금의 배(보)상 한도액은 203백만SDR(약 3,216억원) 이다.

실질적 피해가 있었음에도 선주 보험사와 국제기금의 배(보)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허베이 지원 특별법’에 의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허베이 지원 특별법’은 신속한 사고 수습과 정부의 지원의지 표명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의원입법으로 제정되어 ‘08. 6. 15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 및 제6조에서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는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기관·단체장 등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지정·손해보전의 지원사항 심의 등을 수행한다. 대책위원회 아래 조정위원회를 두어 실무적인 협의·조정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된다.

제8조는 대지급금 및 대부금과 관련하여 손해 배(보)상 청구 후 6개월 이내에 국제기금으로부터 손해 사정 통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대부금을 지원하고, 사정액 범위 내에서 정부가 대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9조에서는 국제기금 보상한도 초과 시 보상특례를 두고 피해가 국제기금 보상한도를 초과하면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총 사정액의 범위 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상한도 초과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는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 및 복원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을 지정하고 해양환경복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1조에서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정부는 농·어업인과 중

소기업의 운전자금의 우선 용자, 상환유예 등의 지원 및 그 밖에 유류오염 사고와 관련된 피해주민 중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제12조는 유류오염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와 이미지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허베이 스피리트 피해어업인 지원단 사무관 김봉현)

제8절 수산업협동조합 개혁 추진

1. 일선수협 구조조정

가. 일선수협 경영평가 실시

94개 일선수협에 대하여 2007년 12월말 기준으로 3개월간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순 자본비율 산출 등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이행여부 평가 및 적기 시정조치 이행점검 등 전반적인 경영평가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영상태평가 결과를 감안한 종합평가결과 41개 조합을 부실우려조합(경영개선권고/요구)으로, 7개 조합에 대해서는 부실조합(경영개선명령)으로 지정하고 임직원 제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목표 등 적기 시정조치를 시달하여 일선수협 경영정상화를 지속 추진하였다.

나. 부실수협 구조조정

2008년 7월 31 일 개최한 「상호금융 예금자보호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7개 부실조합 중 완도군수협은 순자본비율과 이월결손금의 지속적 악화로 조합의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고 2007년도 경영개선명령을 불이행 하여 계약이전을 추진하고, 나머지 6개조합중 흑산도, 장흥군수협은 2007년도말 경영평가 결과 2002년 9월 대비 순자본비율과 이월

결손금이 악화되어 조건부합병 및 자구노력 목표를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동해시수협 등 2개 조합은 이월결손금과 순자본비율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경영개선 정도가 미미하고,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은 상호금융사업 미취급으로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자체 경영정상화가 곤란함에 따라 조건부합병 및 자구노력 목표를 부여하여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2008년말 기준 경영평가결과 순자본비율 등 MOU목표 미달시 합병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다. 일선수협 경영개선자금 지원

일선수협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2007년말 기준으로 경영평가 결과 부실조합 등 37개 조합과 MOU를 체결하여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였다.

2008년 말 현재 37개 조합 6,360억원의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여 총 459억원의 경영개선자금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지속적 경영 정상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라. 부실책임조사 실시

일선수협의 부실 책임이 있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엄격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을 통하여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조합의 손실보전과 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목적으로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조합(조사대상 : 50개 조합)을 대상으로 부실원인을 분석하고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 귀책사유를 규명하는 등 부실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9개 조합 임직원 71명 (17건, 부실책임액 26,311백만원)에 대하여는 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손해배상청구를 추진함으로써 일선수협의 조기 경영정상화와 책임경영체제를 더욱 공고히 확립하였다.

2. 수협중앙회 경영정상화 추진

가. 수협중앙회 경영개선자금 지원

2001년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공적자금 투입시 지도사업의 결손금(475억원)과 경제사업의 자본잠식액(943억원)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으로 이를 보전해 줌으로써 어업인 교육지원과 원활한 유통사업 추진 등 지도사업과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이에 경제사업부문 자본잠식액(943억원)은 2003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하여 2007년까지 전액을 지원하여 경제사업부문 유동성 부족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여 자립경영기반을 구축하여 원활한 유통사업 추진을 통한 어업인 지원기능 및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고, 지도사업부문 손실금은 2004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하여 2008년까지 165억원을 지원하여 수협의 기본임무인 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 및 교육훈련 등 지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수협중앙회 및 일선수협은 금융시장 개방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경영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선진 금융기법의 최신 전산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한데도 일선수협은 부실로 인하여 전산분야에 신규 투자가 곤란하고, 중앙회는 공적자금을 지원으로 일선수협 지원에 제약이 있는 점을 고려, '04년부터 정부가 예산을 일부 지원하여 단위수협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까지 60억원을 지원하여 여신종합관리 시스템, 재해복구센터, 전략정보계시스템, 전산경영시스템 개선을 위한 IT 투자 및 조합감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일선수협의 급유시설 노후화로 인한 유류누출 위험 방지를 위하여 유류탱크 개보수 자금을 2008년까지 15억원을 지원하였다.

나. 신용사업부문의 「BLUE I 0708」 2차년도 운동 전개

신용사업부문은 2001년 「New Start 180운동」, 2002년 「Jump 2&2운동」, 2003년 「DASH-3M운동」, 2004년 「NICE 2004운동」 및 2005년~2006년

「OK ACE 0506운동」의 성공적 결실을 바탕으로, 2007년~2008년에 걸쳐 「BLUE I 0708 운동」을 계획하였으며 2007년 1차년도 운동의 성공적인 운동추진에 이어 2008년 「BLUE I 0708 운동」 2차년도 운동을 전개하였다.

「BLUE I 0708운동」은 일류해양수산은행 비전 달성을 위해 개척해야 할 'Blue Ocean'과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나(I)로부터의 Innovation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차별화된 수협은행만의 경영혁신을 의미하고 있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첫째, 초심으로 돌아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은행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Basic Innovation, 둘째, 고객이 믿을 수 있는 은행,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은행을 건설하며 직원이 보람을 느끼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직장문화 창출을 목표로 한 Love Innovation, 셋째, 해양·수산금융에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타행보다 한발 앞서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Unique Innovation, 넷째,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산출하며 영업 및 업무효율 극대화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 Efficient Innovation이 있다.

한편, 「BLUE I 0708 운동」 2차년도 주요 추진 사항으로서 영업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실시, 재무건전성 확보 및 강화, 비이자이익 증대 및 성과주의 문화 확산, 금융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마케팅 지원확대 및 업무 역량 강화, 수산금융 전담은행으로서의 위상 제고, 혁신 마인드 유지를 위한 변화관리 활동 등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당기순이익 862억원, 예수금 10조 6,758억원, 일반대출금 10조 3,214억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3. 수협 혁신방안 수립 추진

수협은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지도사업, 경제사업 및 신용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지난 2001년 공적자금 투입으로 자주적인 조직체로서의 위상이 크게 손상 되었

으며, 공적자금 상환 전까지는 수협의 기능 및 역할 수행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수협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경쟁력이 확보된 일류 협동조합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획기적인 조직 혁신방안 수립의 필요성을 임직원 스스로 인식·공감 하여 2004년 7월부터 T/F팀을 본격 가동하고, 혁신방안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4년 9월 (주)능률협회 컨설팅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2005년 4월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함과 동시에 “수산의 푸른 미래 창조”라는 수협의 원대한 비전을 새롭게 설정하였다.

수협은 이에 따라 용역결과 보고서와 수협이 자체적으로 의견수렴한 제안내용 등을 토대로 수협정체성 정립 및 의식개혁, 지도사업 활성화 등 총 6개 부문 35건의 혁신과제로 이루어진 전사 차원의 수협혁신방안을 마련해 효과적으로 추진해 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수협 정체성 정립 및 임직원 의식개혁을 위하여 윤리 경영 및 클린카드제를 도입하고, 회장 선거 임후보 자격 및 당선인 결정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수요포럼 개최를 정례화 하였으며,

조직혁신을 통한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사업부문간 신입직원 동시채용 및 승진고시 관리를 일원화하고, 비전 및 전략과 연계한 성과관리시스템(BSC)을 도입하였으며, 전산사무용품 등 소모성 자재(MRO)의 온라인 통합구매를 통한 경비절감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에 주력하였다.

또한, 수협은 어업인을 위한 어업인의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난 97년부터 어민사랑예금 이자의 일정액을 기금으로 조성해 어업인 법률구조사업을 꾸준히 전개하였으며,

상호금융사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2012년까지 예금 14조원, 대출 10조원 달성을 위한 「1410 운동」을 전개하여 초년도인 2008년말 예금 10조원, 대출 7조원을 달성하였으며, 자본시장통합법 관련 대응방안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상호금융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신사업추진팀 신설, 금융관련 1인 1자격증 취득, 시군금고 유치, 고객 맞춤형 수신상품 개발 등

총34건의 장·단기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시행중에 있다.

경제사업부문은 사업자간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수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어업인의 수취가격 제고를 위하여 2004년부터 추진해온 B2B 온라인 도매시장사업(www.kfb2b.com)이 3년여간의 준비를 거쳐 2007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국내산 우수수산물의 해외판로 확대를 위하여 “바다爰찬” 브랜드제품의 미주 및 호주시장 수출을 시작하였다.

수산업의 미래전략사업으로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 수산물 유통혁신을 위해 HACCP시설을 갖춘 인천 수산물가공물류센터 건립하는 등 식품안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와 어촌의 상생기반 구축과 교류활동을 선도할 목적으로 어촌어린이 도시문화체험, 도시어린이 어촌체험캠프, 대학생 어촌봉사단을 운영하고, 어촌과 도시 기업체 간 실질적인 교류활성화를 위해 어촌자매결연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어업인 실질 소득증대에 앞장서가고 있다.

(수산정책과 사무관 김평전)

제3장 2009년도 수산시책

제1절 기본방향

1. 수산업의 여건변화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1950년대에 수산업 성장의 기초가 마련된 이후, 1970~1980년대까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세계 선진수산국으로 도약하면서, 국민 식량공급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주요 수출품목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국제적으로 WTO 체제의 출범과 수산물의 전면 수입개방, 「유엔 해양법협약」의 발효(1996년 11월)에 따른 새로운 「한·일 어업협정」체결(1998년 11월) 등으로 우리나라의 수산물 교역여건과 공해조업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고, 연근해어장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한, 한·중간에도 2000년 8월 「한·중 어업협정」이 체결 되어 2001년 6월 발효되었고, 러시아가 자국의 EEZ 내 어업자원 보호를 명분으로 명태 등의 어획쿼터를 점차 줄여 나가는 등 우리나라 주변수역은 본격적인 EEZ가 적용되는 신 해양질서체제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수산물의 국내 수요증가와 우리 수산물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우리나라가 수산물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되는 등 대내·외적인 여건이 크게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1년 11월 출범한 WTO/DDA 협상에서는 면세유 등 수산보조금을 대폭 금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현실화 될 경우 우리나라 수산업에 큰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 17% 수준인 우리나라 수산물 관세도 DDA 협상결과 약 6%로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미국, EU, 페루, 호주, 뉴질랜드 등 전 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FTA와 맞물려 수산물 관세는 더욱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

및 일본과의 FTA가 체결될 경우 동북아 수산물 교역구도에 근본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탄소배출 경감에 대한 국제적 압력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부터 적용되는 포스트 교토 프로토콜에서는 우리나라에도 탄소 감축 의무가 지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산업은 어선을 사용하는 산업 특성상 유류소비자가 많아 탄소경감 압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제 유가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수산업 경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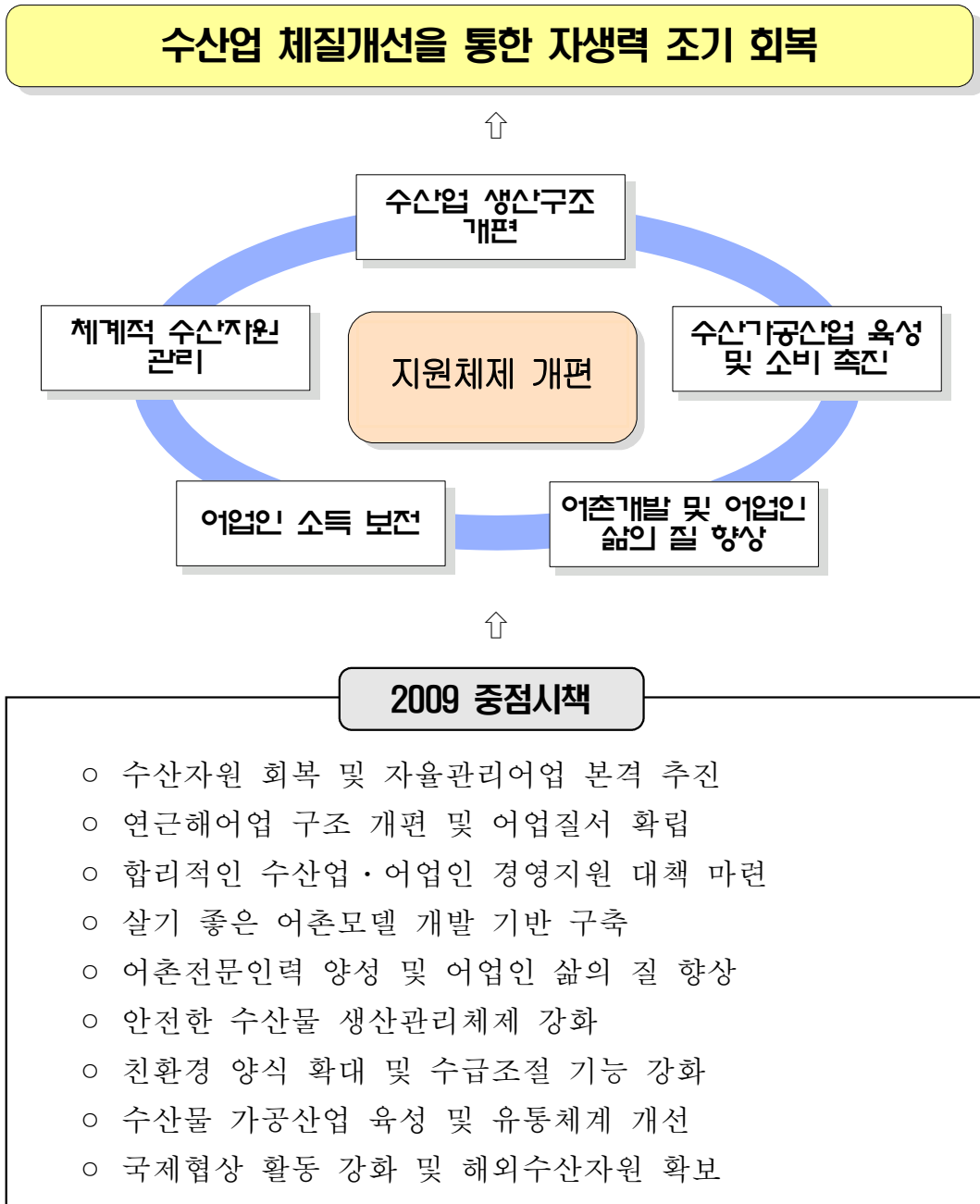
아울러, 국내적으로도 그 간 매립·간척에 의한 연안어장의 축소와 산업화에 따른 연안오염의 심화, 수산자원의 남획 등으로 수산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으나, 수산자원의 적극적인 조성과 불법어업의 집중 단속 등에 힘입어 2007년도의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1,152천 톤으로 전년 1,109천 톤 대비 약 3.9%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세계적인 지구온난화로 어장환경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어종의 변화와 어획량의 증감 등 어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데, 수온상승에 따른 해파리 출현과 갯녹음, 고수온 피해 등으로 수산업에 위협이 되고 있는 반면 참다랑어 등 고가의 아열대성 어종이 출현하고 있어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국·내외의 급격한 여건변화로 수산업 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우리나라 수산업은 수산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소득·고용기회의 제공, 해양환경 보전, 어촌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어려운 어업현실과 환경변화를 슬기롭게 대처·극복하고 21세기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다각적인 대응방안 강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수산정책과 서기관 조일환)

2. 중점 추진시책



2008년도는 WTO/FTA 등 국제 어업질서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연근해 어선세력의 구조조정, 자율관리어업 정착 및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등을 중점 추진하여 시장개방 확대와 자원고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의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08년 수산정책 기본방향에 따른 중점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6년도에 수립된 「수산자원회복 세부 실천계획」의 조기정착과 자원회복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현행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개선하여 자원회복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는 한편 수산자원회복계획에 따라 연차적인 자원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지역실정에 맞게 자원을 관리하는 자율관리어업의 내실화를 위해 어업인 중심의 자율관리어업 정책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자원량 감소 및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어업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자원남획형 불법어업으로 수산자원관리정책의 효과가 저감되고 있음에 따라 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연근해 어선세력을 축소하고, 자원관리형 어업생산구조 정착을 통해 어획노력량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한·미 FTA 등 수산시장 개방협상 확대에 따라 국내 수산업의 경영 불안정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산업·어업인 경영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장개방에 대비한 수산업·어업인지원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영어자금, 수산발전기금 등 정책자금의 지원,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전업 및 선도경영인 지속 육성과 어업인이 자연재해로부터 스스로 위험관리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험」 지원 확대 및 「양식재해보험」 도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수협중앙회 및 일선조합(94개)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어업인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어업여건의 전반적 악화로 인해 어업생산 활동 지원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어촌지역 공동화를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어촌의 다원적 면을 활용하여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은 새로운 차원의 어촌지역 개

발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탈어업, 탈어촌, 고령화 현상 등에 어촌지역의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음에 따라 청·장년층의 어촌 인구 유입을 위해 종래 어업인 후계자 선정을 확대하는 한편 어업인턴제와 창업어가 후견인제를 적극 추진 하는 등 수산경영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여섯째, 안전한 수산물 생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해지는 추세를 감안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밀검사 비율 상향조정과 과거 부적합 이력이 많은 품목을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국내 생산·출하 전 단계의 수산물에 대한 HACCP 제도를 활성화하여 생산단계에서부터 불량 수산물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여 우리 수산물의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일곱째, 친환경 양식생산 기반을 확대하여 양식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급조절 기능 강화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권역별 외해수중가두리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전하고 고품질의 배합사료 개발로 양식어가의 배합사료 사용율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여덟째, 종래 생산위주의 어업정책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수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유통 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첨단 수산물 가공산업과 수산벤처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연안 시·군 명품 수산물을 우수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통한 유통 단계 및 유통마진 축소를 위해 직매장 설치, 인터넷 수산시장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홉째, WTO/DDA 수산분야 협상으로 인한 충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수산보조금은 금지대상 보조금의 범위가 최소화 되고 유예기간 및 단계적 이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하는 한편, 수산물관세는 수산물이 무세화(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고 민감 품목에 대한 신축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협상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FTA는 협상의 전 단계인 산·관·학 공동연구회도 적극 참여하여 FTA 체결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 등을 미리 발굴하고, 자료조사 및 연구용역 실시 등을 통해 협상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원양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종별·지역별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원양어업의 경영여건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3. 新수산 정책 추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08.2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통합부처 출범을 계기로 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수산분야의 제도, 시스템을 개선하고 선진화된 제반 인프라 구축을 위해 “新 수산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즉, 수산이 정책의 기본방향과 수단이 유사한 농업과 통합되고 식품산업도 보장되어 농림수산식품부가 발족함으로써 국민의 먹을거리를 총괄하는 통합부처의 시너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산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농업과 잘 조화되고 식품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차원의 수산발전 전략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특히, 그간의 수산정책이 어업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여 어업인의 고질적인 민원제기가 반복되는 등 어업인의 눈높이와 정서에 맞는 수산행정이 미흡한 데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어업현장의 어려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실용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어업인을 위한 실사구시의 수산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新수산 정책”은 기존의 수산정책에 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

첫째, 자율·자립·자강이라는 3대 정책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어업인에 의한, 어업인을 위한 정책으로서 자율과 어업인, 어촌경영체 및 수협이 자립능력 강화를 위한 자립과 수산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자강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다. 즉 정부의 지원은 한계가 있으며 아무리 지원을

해도 어업인의 희망과 의지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어촌과 수산업의 발전이나 장기적인 비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철저한 현장 위주의 정책이다. 어업현장에서 어업인들이 느끼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불합리한 제도는 없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셋째, 구체적 실천방안으로서 6대 전략과제 및 30개의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신수산 30대 프로젝트”로 명명하고 각각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정책 포럼과 전문가 미팅 등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신수산 정책”의 핵심인 “30대 프로젝트”의 내용을 개략하면 다음과 같다.

6대 전략	30대 프로젝트	주요 내용
1. 연근해어업 정비 및 재편	1)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체계 개편	특별법 제정으로 어업구조조정 시스템 체계화, 단체협약에 의한 감척시스템 도입, 폐업지원금 탄력적용 및 실직어선원 지원 등
	2) 지역별 해역별 맞춤형 자원관리	해역별 업조정위원회 설치, 맞춤형 연안어업 관리를 위해 지자체로 권한위임 추진 및 어업자 협약에 의한 자원관리 활성화 등
	3) TAC 제도 발전	한국형 TAC 제도 모색, 소진율 파악시스템 등 현행제도 개선 추진
	4) 고래자원 활용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고래자원의 합리적 이용 체계 구축, 고래포획금지고시 등 관련제도 개선 및 고래관광산업 진흥 등
	5) 기후변화대응 어업규제 완화	금어기, 산란기, 조업기간 등 조업규제 완화 기후변화에 따른 타 어업과의 영향 고려
	6) 동해 북한수역 입어 추진	남북관계 진전에 맞추어 입어방안 마련, 북한·러시아수역 연계 조업으로 활성화 등
	7) 어업허가 일제 정비	어업허가 일제갱신제도 도입 검토 등
2. 친환경 녹색 양식	8) 친환경 어업 육성	친환경 어구어법 인증제 검토, 주요품목별 친환경대책 마련 및 「친환경양식어업 육성법」 제정 검토 등
	9) 외해양식 발전	참치치어 이식방안, 가두리 개발 및 참치 부어초 개발, 외해양식 면허절차 제도 개선 등
	10) 어장환경관리시스템 개선	어장환경평가제 도입, 휴어·휴식 등 환경보전직불제 도입검토, 어장환경정화사업 시행 등
	11) 유휴 갯벌어장 활용관리제도	갯벌 양식어업단지 지정 육성 세발낙지, 바지락 등 전략품목 개발 등
	12) 내수면어업 진흥	4대강사업과 연계한 내수면어업 진흥방안 어도살리기 사업추진 및 논생태양식 지원 등
	13) 불법양식어업 정비체계 개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업무협조체계 개선 등

3. 해외어업 진출 확대	14) 해외수산자원 개발	연해주 지역 수산가공업 진출, 동남아지역 해외양식어업 개발 및 아프리카지역 어패류 양식기술 이전 등 협력강화
	15) 어선건조시스템 개발	원양어선 신규 건조, 선망어선 등 연근해어선 신조 추진 등
	16) 수산분야 전략적 ODA 확대	한-PNA 8개국간 경제협력 약정체결 추진 ECCF활용 해외어장 건설 및 물자공여 확대
4 수산식품 개발 및 유통 개선	17) 수산식품산업 진흥	수산물 인증제도 및 브랜드화 촉진 가능성 수산가공제품 개발 확대 및 수산식품 안정성 제고 등
	18) 산지위판제도 개선	의무상장제의 장점을 보완하여 임의상장 제도개선방안 마련 추진
	19) 공동어시장 및 국제수산물 도매시장 발전	부산공동어시장 시설개선 및 운영 현대화 국제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20) 소금산업 연구지원시스템	염전환경을 어장관리 차원에서 관리 육성 소금연구소설립, 소금성분분석 연구기반 구축 등
5. 어촌활력 증진	21) 어촌계 선진화	어촌 신규진입장벽 완화, 어촌계 지원 사업 개선 및 어촌계 운영상 제도개선 추진
	22) 수산분야 직불제 도입	조건불리, 자원보호 등 공익형 직불제 우선검토 및 경영안정 직불제도 장기검토 등
	23) 어촌관광 활성화	어촌의 브랜드화, 어촌관광 디자인 및 컨설팅 추진, 어촌관광업 제도 도입 등
	24) 어업인 교육문화복지재단 설립	지식기반 어촌사회 구축, 문화체험, 건강관리 지원 등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안전조업 지원 등
	25) 어업인력 육성 활성화	규우수인력 진입 촉진, 현장밀착형 단기교육과정 육성 및 여성인력 육성 등
6. 수산 거버넌스 개편	26) 수산자원조성 전문법인 설립	종묘방류, 인공어초 등 전담조직 신설 추진
	27) 수산업 지도단속체계 개편	지도사무소 개편 및 어업조정기능 강화 등 대어민 서비스 강화
	28) 수산보조금 개편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에 대응하여 보조금 체계 전면 개편
	29) 어업정책보험 효율화	보험확대 및 내실화를 위한 민간참여 검토 보험재정 건전화, 소형어선 가입률 제고 등
	30) 자율관리어업 선진화	자율관리협의체를 자율경영협의체로 확대 어업외소득원 개발, 자율관리 인센티브 개선 등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을 위해 매 5년마다 수산진흥 종합대책을 수립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 (‘10-’14)』에 “30대 프로젝트”를 반영함으로써 新수산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농어업 농어촌 비전 2020』과 연계하여 수산분야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수산정책과 서기관 조일환)

제2절 수산자원 회복 및 자율관리어업 본격 추진

1. 수산자원회복 계획

가. 수산자원회복계획 단계별 이행

수산자원회복계획은 해역별·어종별 과학적인 조사·평가를 실시하여 명확한 회복목표를 설정한 후, 정부·지자체·어업인·학계 등 관계자가 공동 참여하여 회복수산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체계적인 자원회복방안 마련을 위하여 개별정책들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그 결과를 다시 자원회복계획에 수정·반영하여 조치하는 체계적·종합적인 자원관리계획이다.

동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수산자원회복계획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수산자원회복 세부실적계획을 2005년 12월에 마련하고 수산자원회복 사업을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2006년부터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조기정착과 자원회복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역별로 꽃게(서특), 도루묵(동해), 낙지(남해-무안), 오분자기(제주-성산)를 대상으로 자원회복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참홍어(서해), 참조기(서남해), 대구(동남해) 등 3개 어종을 추가하고 2008년에는 말쥐치(남해), 기름가자미(동해), 개조개(남해) 등 3종을 추가하여 총 10종으로 자원회복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수산자원관리 정책별 목표 설정 후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연차별 개선·발전 방안을 도출, 개별 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각 정책별 심사·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다시 자원회복계획에 수정·반영하여 추진할 것이다.

앞으로 수산자원회복계획의 단계별 실행전략의 이행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회복대상어종을 추가하여 2010년까지 12종, 2015년까지 20종으로 회복사업을 확대하여 최적의 자원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시범실시 대상어종 특징

어종명	꽃게	도루묵	낙지	오분자기
해역	서해(연평)	동해	남해(무안)	제주(성산)
관리주체	우리부	우리부	지자체	지자체
어종	갑각류	어류	두족류	패류
업종	연안자망, 근해자망, 연안통발, 개량안강망	동해구기저, 연안자망, 동해구트롤 등	연안연승, 연안통발, 외끌이서남해기저	나잠어업
어종특성	회유성	국제적 관리	연안정착성	연안정착성
어업특징	어선어업	어선어업	어선어업	마을어업
추진방향	광역자율관리 제도권 수용을 통한 광역해양관리	산란장 주변보호를 통한 일반어업관리	자율어업관리 제도권 수용을 통한 소해역 특화관리	마을어장 생태계복원을 통한 회복
주요내용	금지체장 상향조정, 산란장 보호	산란장(해조장)보호 및 복원, 광역자율관리 유도	산란장, 산란기보호	재생산관리

한편, 동 계획의 성패는 어업인 등 관계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므로 분야별 관계전문가를 어종별 수산자원관리위원회로 구성·활용하는

한편, 설명회,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산과학위원회(수산과학원)에서 제시된 권고안(관리방안)을 기초로 어종별 자원회복계획을 발전·보완하여 나갈 계획이다.

나. 총 허용어획량제도 확대

총 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 TAC) 제도는 개별어종에 대한 연간 총 허용어획량을 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어업자원 관리제도로써 어획량을 규제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 총 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정착시키고, 어업여건 및 주변상황 등을 고려하여 TAC제도 실시대상 업종 및 어종을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2009년도 TAC 사업은 고등어·전갱이·붉은대게·개조개·키조개·제주소라·대게·꽃게·오징어·도루묵·참홍어 등 11개 어종을 대상으로 405천 톤의 TAC를 정하여 12개 업종에 약 1,500여척(통), 100개 어촌계가 참여하여 실시한다.

그리고 도루묵, 참홍어 등은 TAC 도상연습을 거쳐 2009년부터 TAC를 실시할 계획이다.

어종별 TAC 산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자원평가 결과를 기초로,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총허용어획량심의위원회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였으며, 할당량의 배분은 과거 조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에서 어선별로 할당·배분하도록 하였다.

또한, TAC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09년까지 판매장소를 118개소로 확대하였고 TAC 제도가 시·도 및 시·군·구를 중심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TAC 제도에 참여하는 어업인과 시·도에는 TAC경영개선자금과 연근해침적폐기물 수거사업 예산의 지원 등을 통하여 TAC 제도의 정착과 어업인의 참여의식이 고취되도록 도모할 계획이다.

〈표 4-3-1〉

2009년도 어종별 총허용어획량

(단위 : 톤)

대상업종	대상어종	TAC	비 고
합 계		407,600	
대 형 선 망	고 등 어	159,000	'09. 1. 1~'09. 12. 31
	전 갱 이	18,000	"
	정 어 리	0	
근 해 통 발	붉은대게	29,000	"
근해통발·근해자망	대 계	1,400	'08. 11.01~'09. 5. 31
잠 수 기 어 업	개 조 개	1,700	'09. 1. 1~'09. 12. 31
	키 조 개	3,100	"
마 을 어 업	제주도소라	1,320	'08. 9. 1~'09. 5. 31.
연근해자망 및 통발	꽃 계	7,380	'09. 1. 1~'09. 12. 31
대형선망·동해구트를 대형트롤·근해채낚기	오 징 어	185,000	'08. 7. 1~'09. 6. 30
근해연승 및 연안복합	참 흥 어	1,500	'09. 1. 1~'09. 12. 31
동해구기저·동해구트를	도 루 목	200	'09. 1. 1~'09. 12. 31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자원환경과 서기관 박환준)

다. 인공어초 시설

수산자원을 증강시켜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1971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인공어초사업은 어초시설의 지속적인 확대와 건설시공의 정착, 해역별·어종별·기능별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어초의

개발과 시설, 어초어장의 시설보전과 기능제고를 위한 사후관리강화, 갯녹음(백화)현상이 발생한 어장의 생태계 복원을 위한 해중림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표 4-3-2〉

시·도별 인공어초 시설

(단위 : ha)

구 분	기 시설(1971~2008)	2009년	누 계
합 계	202,141	4,398	206,539
부 산	2,562	70	2,632
인 천	10,059	200	10,259
울 산	2,310	20	2,330
경 기	4,293	170	4,463
강 원	22,880	188	23,068
충 남	16,783	400	17,183
전 북	13,869	800	14,669
전 남	41,842	900	42,742
경 북	22,996	150	23,146
경 남	35,722	300	36,022
체 주	28,825	1,200	30,02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이를 위해 2009년에도 사업비 41,065백만원을 투입하여 약 4,398ha에 인공어초를 시설하고, 3,976백만원의 사업비로 약 12,350ha의 어초어장에 대한 위치·상태 확인 및 폐 그물 수거, 어초어장도 작성 등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가며, 4,938백만원의 사업비로 갯녹음(백화) 발생어장 146ha에 대해 해중림 조성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라. 종묘방류 어종의 다양화

방류어류의 생존율 향상 등 종묘방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류어 크기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의 수산종묘를 방류토록 하여 어업생산성을 제고하며, 가급적 야성화 훈련이 실시된 종묘를 매입·방류할 계획이며, 방류어종의 다양화를 기해 2008년 41종에서 2009년에는 44종(해면33종, 내수면 11종)으로 품종을 확대하여 방류할 계획이다.

수산종묘방류 총사업비의 5%를 방류효과조사 사업비로 편성하여 체계적인 효과조사를 실시하고, 방류대상 품종에 대한 질병유무확인 등을 실시토록 하여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한 종묘가 방류되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수산종묘방류사업에 대한 민간 감시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방류어종 검수 및 방류시 종묘생산자 등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 어업질서의 재편에 따른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도립수산종묘배양장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고, 물량 위주의 방류보다는 해역별 환경 및 어장특성에 적합한 특화품종과 우량품종을 지정 하는 등 품종의 다양성 유지를 위한 방류종묘 생산시스템을 마련하여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자원환경과 사무관 차태황)

마. 바다목장 조성

1998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통영 바다목장 조성사업이 2006년까지 총 2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7년도에 완공됐다.

이어 2001년 시작한 전남(여수) 다도해형 바다목장은 2010년까지 총 3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2008년도에 48억원, 2009년도에 27억원의 투입하는 등 2010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2006년부터 본격적인 시설사업이 시작된 동해(울진), 서해(태안), 제주(북제주) 3개소에 대하여 2008년도에 사업비를 84억원 편성하여 시설 사업을 확대하였으며 2009년에는 10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관광형 바다목장으로 조성되는 동해와 제주 바다목장은 2009년부터 체험관 건립, 수중데마공원 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도 2008년까지 9개소에서 2009년에는 부산(기장), 전남(신안) 및 제주(강정) 3개소를 추가하여 총 12개소로 사업을 확대하여 연안해역에서 효율적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원환경과 사무관 장귀표)

2. 자율관리어업

자율관리어업은 정부주도의 수산자원 관리방식에서 탈피하여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어장관리, 자원관리, 경영개선 및 질서유지에 참여토록 하여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실천적 새 어촌 운동이자 어촌 의식개혁 운동으로서, 자율관리 공동체 운영 및 참여확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발전시켜 전국적으로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2009년도에는 어업인에 대한 교육·홍보를 체계적으로 더욱 강화하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2008년 말 현재 659개소에서 750개소까지 확대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다른 유형보다 자원관리의 효과가 큰 어선·복합어업 및 광역공동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적극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는 분위기를 확산하여 불법 어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범규준수 등 수동적 자원관리에서 종묘방류, 어장휴식년제 실시, 조업금지기간 연장, 채포금지체장 및 그물코확대 등 능동적 자원조성 활동으로 어촌사회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공동체에서 관리하는 주요 대상어종에 대하여 국립수산과

학원의 자원평가(16개소)를 통해 대상어종의 자원 수준을 고려한 자원관리로 자율관리어업의 질적 향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 공동체중 자율관리어업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선정된 우수 공동체에 대하여는 육성사업비를 지원(242개소, 230억원)하여 자율관리어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자율관리어업 민간컨설턴트를 4인에서 10인으로 늘려 지역 여건 및 공동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지도’를 실시하여 공동체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자율관리공동체를 어촌사회를 선도하는 중심체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관리어업 활성화에 공로가 큰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공동체간 성공사례 정보 교환을 위한 제7회 자율관리어업전국대회(11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한 광역단위 워크숍(5회), 미 참여지도자 및 수협담당자에 대한 자율관리어업 이해 증진교육(1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자율관리어업 성공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참여의식을 고취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 공동체에게는 성공할 수 있다는 의지를, 미참여 공동체에게는 가업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공동체를 대상으로 영상홍보물을 제작하고, 우수사례집 및 지정패를 제작하여 해당 공동체에 배포할 계획이며, 자율관리어업 소식지를 발간하는 등 대어업인·대국민 홍보활동도 중점 추진하고, 우수공동체에 대한 현장견학 및 선진수산국 해외연수 실시(3회)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자율관리어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참여공동체가 늘어나면서 정부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정부와 어업인을 연결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주도 자율조정협의회 기능의 활성화, 공동체별 등급결정을 위한 자율평가위원회 사무국 운영,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자율관리어업 지도자협의회가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여 자율관리어업을 적극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자원환경과 사무관 조성남)

3. 낚시 관리 및 육성

국민소득 향상과 주 5일 근무가 정착되면서 가족단위의 여가생활 수요가 증가하면서 낚시인구는 현재 573만명(민물낚시 378만명, 바다낚시 195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4-3-3〉

출조빈도에 따른 낚시인구

(단위 : 천명)

구분	계	잠재낚시인구	일반낚시인구	전문낚시인구
계	5,730	3,222	2,097	411

자료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낚시면허제 모델개발 및 시행방안(한국수산회, 2005)

낚시활동 지역으로 내수면에서는 하천, 댐·호소, 저수지 등이 낚시장소이며, 이 중 저수지가 약 7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바다낚시는 갯바위, 방파제, 선상 등에서 이루어지고 이 중 약 80%가 갯바위를 선호하고 있다.

최근에는 낚시동호회 및 가족단위로 낚시를 즐기는 등 저변이 확대되고 있으나, 무인도서나 갯바위 등 수심이 깊고 위험한 지역에서 낚시인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부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과 수산자원의 감소가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낚시를 건전한 레저문화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표 4-3-4〉

유어행위에 의한 조획량과 상업적 어업의 어획량 비교

(단위 : 천MT, %)

구 분	조획량(A)	어획량(B)	비교(A/B)
계	300	1,909	15.72
바 다	116	1,142	10.16
내수면	184	767	23.99

자료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낚시면허제 모델개발 및 시행방안(한국수산회, 2005)

따라서 낚시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여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 및 낚시인의 안전문제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낚시를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육성하여 이를 어촌의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양식업, 농어촌관광업, 수산물 판매업 등 유관산업의 공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낚시 관리 및 육성법(가칭)」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회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자원환경과 사무관 강거영)

제3절 연근해 어업 구조개편 및 어업질서확립

1.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가. 연근해어선 감척

1980년대 이후 과잉어획에 따른 연근해 어업자원 감소, 어업 자재비, 인건비, 유류비 등 출어경비 상승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연근해어업의 지속적 발전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악화된 연근해어업 경영수지 개선과 감소추세에 있는 연근해 어업자원의 회복을 위해

1994년부터 어업구조조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수산동·식물의 주산란·서식지 보호와 연안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94년부터 '08년까지 3,906억원을 투입 11,280척을 감척하였고, 향후 연안감척 재추진 여부는 '연안어선 감척사업 투자효과 분석' 연구용역과 어업인의 감척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근해어선은 WTO/FTA에 대비하고 자원회복과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근해어선에 대하여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근해어선의 약 35%인 1,280척을 감척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근해어선 352척을 감척하고, 2009년에는 399척을 감척할 계획이다.

〈표 4-3-5〉

2009년도 업종별 근해어선 감척계획

(단위 : 척)

대상어업	척수	대상어업	척수
기 선 권 현 망	65	대 형 선 망	6
근 해 통 발 (장 어)	6	근 해 자 망	46
근 해 연 승	66	근 해 채 낚 기	78
대 형 트 롤	11	서남해구기선저인망(외끌이)	2
대형기선저인망(쌍끌이)	14	서남해구기선저인망(쌍끌이)	4
동 해 구 기 선 저 인 망	41	근 해 형 망	10
대형기선저인망(외끌이)	2	잠 수 기 (제 1 ~ 제 5 구)	3
근 해 안 강 망	15	소 형 선 망	15
동 해 구 트 롤	2	근 해 통 발 (문 어 단 지)	2
근 해 통 발 (기 타)	8	어 획 물 운 반 선	3

(어업정책과 서기관 박상호)

나. 연근해어업의 통·폐합 등

지역의 특성이나 해·어황에 따라 어업인이 어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사 어구의 통폐합 등 어구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사용자 중심의 어업을 실현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와 편익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타 어업과의 분쟁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이동성 구획어업은 현행을 유지할 계획이다.

수산업법시행령과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에서 혼합하여 사용되고 있는 어업의 종류와 명칭을 어업의 종류로 일원화하는 등 이원화된 어업분류의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치망어구의 발달과정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은 어구의 명칭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 어구의 명칭으로 재조정하여 체계적인 어업관리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어업정책과 서기관 김태기, 이영직, 사무관 이세오)

2. 자원관리형 어업생산구조 정착

가.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추진

해양생태계 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육성을 위한 친환경어업 실현을 위하여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을 경북 울진군 대게자망 어업인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추진중에 있다.

생분해성 어구시범사업은 기술개발이 완료되는 어구를 대상으로 지자체 및 어업인 참여의지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07년 처음으로 경북도 대게 자망어업을 대상으로 사업에 착수하여 어업인의 호응을 받고 있어, 2008년에 이어 2009년도에는 28억원의 사업비로 250척의 어선에 생분해성 어구를 시범적으로 보급하여 자망어업뿐만 아니라 통발어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어업정책과 사무관 이세오)

나. 연근해어업 체질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국내의 어업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어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의 어업구조를 과감하게 개편해야할 필요성 제기됨에 따라 「연근해어업 체질개선을 위한 핵심전략과제 연구조사」를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총 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근해어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치어·혼획을 저감을 위한 어구·어법을 개발하고, 어구·어법 규제방식에서 어종별 자율관리방식으로 전환을 모색한다.

(어업정책과 서기관 김태기)

다. 연근해어업 총조사 실시

변화하는 어업여건에 대해 진단하고, 미래지향적인 연근해어업 발전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개년간 23억 원을 투입하여 「연근해어업 총조사」를 실시한다. 동 조사에서는 시도별·어선규모별·어업별 어획실태, 어장이용 수준 및 어기별 어획상황에 대한 조사와 어종별 주 조업어장, 어업별 사용어구 규모, 어구·어법 변화상황, 어획물 체장조성, 생식소 숙도지수, 생물학적 허용어획량 추정(ABC) 등의 어업전반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한다.

연근해어업 총조사가 완료되면, 연근해어업 허가정수 조정, TAC(총허용어획량) 실시, 어업구조 개선(감척사업 등) 등 중요 정책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며, 주요 어종별 어획강도 및 어획수준에 따라 허가정수를 재설정하고, 동 조사의 자원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TAC 산정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어구·어법의 발달에 따른 관련제도를 보완하고, 어업현안 발생(자원량 증감 논란 등)시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한·일, 한·중 어업협정, FTA/DDA 체결 등 국제 어업관련 협상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등 어업정책방향 설정의 근간 자료로 활용된다.

(어업정책과 서기관 김태기)

라. 어구와 어법에 대한 기준 마련

그간 어구나 어법에 대한 법제화 없이 전통적·관행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어구와 어법에 대한 분쟁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고, 어장축소, 자원감소 등으로 자원선점을 목적으로 어구나 어법을 임의 변형하여 자원 남획은 물론 업종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어업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관행적이고 전통적인 어업방식을 탈피하고, 시대의 변화와 합리적 기준에 의한 어업방식으로의 전환과 업종간 분쟁예방, 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하여 어구와 어법에 대한 “가칭 「연근해어업의 표준어구와 어법에 관한 고시」 제정”하여 법제화를 추진한다.

46개 업종별 어구와 어법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비를 해소하고 그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대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고, 포획·채취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어구와 어법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 어업별 표준 어구와 어법을 제시하며, 어구겨냥도, 조업모식도, 어구설계도를 부도로 첨부하여 국민적 이해를 높이는 한편, 업종간 시비가 되는 부분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어구형태와 조업방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추가로 어구를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감시키는 한편 어업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불법어구 사용으로 인한 업종간 갈등을 해소하고 불법어업 예방을 통한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어업질서를 조기에 확립시켜 나갈 계획이다.

(어업정책과 사무관 이세오)

마. 해역별 어업조정제도 마련

한정된 어장에서 다양한 업종 및 많은 어선이 경쟁적으로 조업함으로 어장 및 자원 선점 등 업종간 갈등과 분쟁이 심하며 어업분쟁은 대부분 해역

별 어업여건과 특성에 따라 발생되고 있으나, 해역과 어업여건의 특성을 감안한 어업조정기구가 없는 실정이다.

2004. 8월 이후 한국수산회에 민간“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해 왔으나, 이는 순수 민간위원회로 어업분쟁 당사자간 합의 및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해역별 어선어업의 특성을 반영, 분쟁조정을 위해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를 동·서 어업지도사무소에 설치함으로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해역위원회 설치·운영으로 어선어업의 업종간, 지역간, 업종·지역간의 조업 및 어구·어법에 관한 다툼과 어선어업과 다른 어업과의 다툼 등의 분쟁을 조정할 계획이다.

(어업정책과 서기관 김태기, 이영직, 사무관 이세오)

바. 어업허가 신청시기 일실한 자 구제제도 마련

현행 어업허가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 허가는 소멸되므로 5년마다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하지만 어업인 상당수 도서벽지 등에 거주하고, 바다에서 장기간(1~2개월) 조업하는 경우가 많아 어업허가 신청시기를 일실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자의 구제를 위해 어업허가를 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행정관청 직권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허가를 신청하여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는 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바다에서 장기간 어업활동을 하는 다수의 어업인의 경우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새로운 허가신청의 불편과 어업활동 상실 등의 피해발생이 해소됨으로서 어업인들의 선의의 피해 방지 및 지속적인 어업경영 유지가 기대된다.

(어업정책과 서기관 이영직)

사. 한시어업 제도 도입

1990년도 중반 이후 연근해어선감척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어업허가가 일절 금지됨에 따라 최근 수온상승 등 해양환경의 변화 등으로 특정한 해역에 자원이 일시적으로 다량 출현하는 경우 어업인들의 이용에 한계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한 해역에 특정한 자원이 일시적으로 다량 출현하는 경우 자원평가를 토대로 총허용어획량(TAC)을 정하고 다른 어업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한 수 있는 한시적 어업허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수산자원의 적정·고도이용이 가능하여 관련 어업인의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어업정책과 서기관 이영직)

아. 수산업법 위반시 양벌규정 완화

수산업은 특성상 어로행위가 대부분 바다에서 선장 등 어업종사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불법어업으로 인한 처벌은 행위자와 법인 또는 사업주(선주)가 함께 처벌되어 전과자가 양산되며 어업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법인 또는 사업주가 어업종사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이는 법인 또는 사업주의 면책조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범법자 감소 및 수산업의 경영활동 촉진이 기대된다.

자. 허가어선의 정기적 정비제도 마련

일부 어업인들이 휴업, 어선의 노후 등으로 어업을 계속할 수 없음에도 정부의 어선감척사업 및 매립 등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등을 목적으로 허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어업질서문란, 연안오염 심화, 어선감척

및 공익사업시행 등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 5년마다 기간을 정하여 어업허가의 일제정비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며, 이는 정기적인 어업허가 정비로 어업질서유지, 연안오염원 제거, 감척 및 공익사업 시행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된다.

차. 어업허가 지위승계시 행정처분 승계 근거 마련

어업허가는 허가대상인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이 양도·임대 또는 상속된 경우 양수인 등에게 새로운 허가를 처분토록 함에 따라 어업허가 등을 받은 자가 불법어업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어업허가의 정지 등)이 누적된 경우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어선 등을 양도 및 임대를 반복하는 등 어업질서가 문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대상인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양도·임대 또는 상속한 때에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및 행정처분 효과가 양수인, 임차인 또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며, 이는 불법어업 방지를 통한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업정책과 서기관 이영직)

3. 불법어업 근절

가. 어업질서의 선진화 구현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단속체계를 구축하여 자원에 미치는 영향과 업종간 분쟁 등 사회적 과장이 큰 자원남획형, 분쟁야기형, 불법어업조장형 등 3대 불법유형을 중점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지원으로 퇴출된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의 재진입 방지를 위해 주력하는 한편 소형기선저인망어

업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불법어업 신고포상도 지속 병행 실시하여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5월 어패류 산란기 3부 합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10월 어패류 성육기 TV캠페인 및 불법어업 예방 TV다큐멘터리를 제작·방영함으로써 대국민에게 자원관리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어업인의 의식을 높이는 계기를 제공하며,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선의 자율적인 감시활동을 활성화 하는 등 단속과 함께 예방·홍보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나. 첨단 어업지도선 및 장비 확충

한·일/한·중 어업협정발효(1999년 1월 22일/2001년 6년 30일)로 우리 관할수역이 약 4배 확대됨에 따라 부족한 국가 어업지도선을 확충하기 위해 2002년~2008년까지 38척으로 증척계획에 따라 그 동안 국가 어업지도선 확충을 추진하였으나 정부의 예산 사정상으로 2006년까지 33척을 건조하였으며, 2009년도에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선 1척(2,180톤)을 이관받아 현재 34척의 국가 어업지도선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족한 국가 어업지도선의 확충이 지연됨에 따라 기존 어업지도선이 노후되어 해난사고 및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선령 25년 이상 노후 지도선을 우선 대체건조할 계획이며 2009년도에는 499톤급 1척 및 연근해 전담 150톤급 2척을 착공하여 2010년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 불법어선의 지도·단속 장비현대화를 위해 실시간 타깃 추적이 가능한 첨단 알파레이더와 단속용 쾌속보트 및 전자해도시스템 등을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다. 어업지도단속체제 개편 및 역량 강화

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출동예정 해역의 어·해황, 어선분포 등의 종합적 분석을 통한 거점(point) 중심의 현장단속 실시로 행정효율을 제고할 예정이며, 불법어업 의심선박 등에 대한 승선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어업감독공무원의 수사실무 등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범무원수원 등 외부 위탁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연말에는 어업질서확립 우수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어장확보 경쟁심화 및 조업갈등 다양화 등 국내외 어업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와 EEZ 중국어선 및 중간(잠정조치)수역에 대한 관리강화, (구)수산사무소의 지자체 이관 등에 따른 수산행정 지원기능 보완을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동·서해어업지도사무소를 동·서·남해 3개 권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권위적이고 단속중심의 명칭에서 탈피, 대국민 서비스 중심의 기관명칭을 제정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라.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선 확대 등 어업인 참여 유도

민간자율에 의한 불법어업 감시기능 강화 등 선진어업질서 정착을 위하여 운영중인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 업무를 어업지도사무소에 이관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불법어업 없는 우수단체 및 어촌계 선정 및 포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어촌사회에 준법어업의식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산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대상 불법어업의 유형을 확대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규정의 보완 및 대어업인 홍보를 강화하여 동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기반 마련과 더불어 어업인들의 신고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지도안전과 사무관 김남웅)

제4절 합리적인 수산업·어업인 경영지원 대책 마련

1. 시장개방 피해 특별대책 마련

그간 정부는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한·칠레 FTA가 발효된 2004년 이후 2013년까지 10년간 수산분야에 12.4조원을 투융자 하는 내용의 「수산업·어촌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다.

반면, 한·미 FTA 추진 등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수산정책의 방향과 패러다임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한편, 현장 어업인 중심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수산업·어촌 종합대책」 투융자계획 12.4조원을 수정·보완하여 시장개방에 따른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 및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가. 수산업 구조조정 본격화

수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어장 여건이나 수산자원의 변화에 탄력성 있게 대처하지 못한 채 과도한 노력량을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WTO/DDA 협상을 비롯한 무역자유화 조치가 진행될수록 어려움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이 낮은 업종이나 경영체를 정리하고 잔존 경영체들은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생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연안어업 중심의 수산업 구조조정 범위를 근해어업까지 확대하여 적정 어업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구조조정에 따른 퇴출 어업인 전업지원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 어업인 및 어업 종사자의 전업·전직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토록 할 것이다.

(어업정책과 서기관 박상호)

나.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

수산업은 안정된 수산자원을 기반으로 성립하는 산업으로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한 자원량은 수산업의 존립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즉, 수산자원 없이는 수산업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자원 회복을 통한 어업생산성 확대가 중요하므로 수산업 자생력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간 130만톤(2008년 128만톤) 이상의 안정적인 어업 생산량 달성을 목표로 어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원회복계획을 2005년에 마련하였다. 이의 차질 없는 실천을 위해 2015년까지 상업성이 큰 20개(2008년 10개) 어종에 대한 자원회복 세부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자원환경과 서기관 박환준)

다. 수산가공·유통산업의 육성

21세기는 감성적이고 개성적인 소비자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사회이다.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들의 입맛이 세계화 되면서 수산식품에 대한 시장 수요도 탈지역화, 탈계절화 되고 있고 그들의 구매 파워가 수산물 가공·유통산업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수산식품은 소비자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소비자 수산물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안전한 식량산업으로 인식되도록 소비자 중심의 생산·가공·유통 관리체제 구축토록 할 것이다. 우선, 소비자들의 건강과 영양을 최우선으로 하고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된 믿을 수 있는 수산물을 공급을 위해 ‘바다에서 밥상까지’ 철저한 위생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미래 수산업은 전통적인 수산업의 영역인 식량 공급 차원을 넘어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바이오 수산자원 이용이 그것이다. 이러한 요구를

십분 활용하기 위하여 수산 생물로부터의 신물질 개발, 생명공학을 응용한 양식기술개발 등 혁신기술을 보유한 수산벤처사업 지원 확대하는 등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할 것이다.

(수산정책과 사무관 박희수)

라. 어촌을 살기 좋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개발

어촌은 오랜 생활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는 문화공간으로 사회정책적 차원에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어업 여건의 악화와 어촌 정주환경의 변화 및 관광 패턴의 변화에 따라 어촌 관광은 어촌 소득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촌관광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전문인력을 어촌에 확보하여 어촌의 Amenity를 활용한 다양한 어업외 소득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어촌개발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기 추진 사업들을 통폐합하는 한편, 수산업·어촌에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산업·어촌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유형화하고 이를 어업인 등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양식어업인에 대하여 자연재해에 따른 사업리스크의 최소화를 위해 양식재해보험은 대상품종, 대상재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가능 품종부터 시범사업 도입(2008년)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어업활동에 필요한 어업 경영기반을 지속 확충할 것이다.

(수산개발과 사무관 최덕부)

마. 수산보전제도 도입

농업분야 직불제 본격 도입('97) 이후 어업인 소득보전 대책으로 수산직불제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 가시화 등으로 어업인들의 직불제에 대한 요구는 강해지고 있으나, WTO/DDA 보조금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수산분야 금지보조금 범위 확대 논의가 진행되는 등 직불제 확대를 위한 대외 여건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WTO체제하에서도 지원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어가소득 보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농업 등 타 분야에서 시행하는 직불제를 수정·보완한 수산보전제도를 개발하여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수산보전제도는 정부가 예산(국고 보조)을 어항정비, 유통시설 확충, 기반정비 등에 투입해도 어업인의 직접적 소득 증대와 연결되지 않는 점을 보완하고, WTO/DDA 체제하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보조금을 발굴하기 위해 수립한 정책으로, 추후, 시장개방 체제에서 국제적으로 인정 가능한 '허용성' 보조금을 수산보전제도 형태로 개발하되 시혜적이고 무조건적인 직불금 지급은 지양하고, 수산업 자생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자원관리형, 환경친화형, 공익기능 유지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향후 친환경 기자재(부표) 사용 보전제, 조건불리 지역 보전제를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시범사업을 통해 본 사업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유가에 따른 어업인 지원대책과 연계하여 유류 의존도가 높은 근해어업에 대해 금어기와는 다른 형태의 소형어 출현시기에 일시로 조업중지하는 어선에 대한 자원보호형 휴어보전제(어린고기 보호 직불제)를 우선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중인 해양폐기물 정화사업(폐어구 수거), 친환경 배합사료 사업, 생분해성 어구지원 등 수산보전제도와 유사한 성격의 사업은 수산보전제로 통합하여 수산보전제의 실효성과 시너지효과를 제고해 나갈 것이다.

(어업교섭과 사무관 최창석)

2. 수산업 경영자금 지원 확대

가. 영어자금 공급 및 어업인 금융부담 완화

1) 영어자금의 안정적 공급

2009년도 영어자금은 대 정부 상환분 510억원 신규 투입 및 수협 신용자금 4,000억원을 신규로 투입하여 2008년에 비해 4,000억원 증액된 1조 9,050억원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중 연근해 어업분야에 1조 4,250억원, 원양어업 분야에 800억원이 공급되고 있다.

〈표 4-3-6〉

2009년 영어자금 공급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소 요 액 공 급 액 공 급 율	소 요 액	38,920	41,199	41,299	41,685	44,223
	공 급 액	14,050	15,050	15,050	15,050	19,050
	공 급 율	(36)	(37)	(37)	(36)	(43)
연근해	소 요 액	33,854	36,088	36,364	36,668	39,210
	공 급 액	13,400	14,250	14,250	14,250	17,850
	공급율	(40)	(40)	(39)	(39)	(46)
원 양	소 요 액	5,066	5,111	4,935	5,017	5,013
	공 급 액	650	800	800	800	1,200
	공급율	(13)	(16)	(16)	(16)	(23.9)
재 원 별	재정자금	5,636	5,636	5,636	5,636	5,636
	수협자금	3,933	4,433	4,433	4,433	8,433
	상호금융	4,481	4,981	4,981	4,981	4,981

전체 공급자금 1조 9,050억원 중 1,000억원은 어선조난, 흉어, 재해, 기타 특수한 상황 발생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영어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특히, 특별영어자금 1,000억원 중 250억원은 2007년 12월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어업경영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다.

한편, 2009년도 영어자금 공급재원별로는 정부의 재정자금(공공자금관리 기금)에서 5,636억원, 수협중앙회의 신용자금에서 8,433억원, 수협중앙회 회원조합의 상호금융자금에서 4,981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며, 영어자금의 안정적인 공급과 더불어 대출된 자금에 대한 연체감소 등을 통해 자금운용에 있어서도 내실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 어업인 금융부담 완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의한 각종 수산정책자금을 어업인에게 저리로 공급하고, 기존의 대출금에 대해 금리인하,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면제를 위해 2009년에 약 1,051억원에 달하는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여 어가의 금융비용 및 부채상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이차보전금을 종류별로 구분하면, 어업인에게 연리 3%로 대출하는 영어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792억원,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연리 1.5~5%로 지원하는 어가부채경감대책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185억원, 각종 재해발생시 피해복구용으로 어업인에게 대출된 자금 등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8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4-3-7〉

2009년 어업경영자금이차보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예산(A)	2009예산(B)	증 감(B-A)	B/A(%)
어업경영자금이차보전	75,604	94,293	29,535	124.7
· 영어자금이차보전	52,970	79,202	26,232	149.5
· 피해복구이차보전	4,171	8,560	4,389	205.2
· 어가부채경감이차보전	18,463	17,377	-1,086	△5.9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수산정책과 사무관 전길권)

나. 수산발전기금의 생산적 운용

2009년도 수산발전기금의 운용규모는 5,880억원으로서 전년도 운용계획 5,998억원 대비 2.0% 감소하였다.

조달계획을 보면 '04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된 장기 융자사업의 거치기간 종료로 정기상환 융자원금이 일부 회수되면서 융자원금 회수액 증가하고 법정부담금, 이자수입 등으로 자체수입이 확대 편성되었으나, '08년도 사업비가 확대 지원되면서 여유자금 회수액이 축소편성 되었다. 또한, 정부 내부 수입(정부출연금)은 FTA피해 지원을 위해 200억원, 해양환경개선사업 지원을 위해 191억원으로 총 391억원 편성되었다.

자체재원 확대를 위해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07.8.3)·시행('08.2.3)됨에 따라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 기금의 재원으로 편입되어 계획에 반영 되었다.

운용계획은 크게 기금운영비, 사업비, 여유자금 운용으로 분류되며 가장 비중이 큰 사업비의 규모는 전년도 계획 5,479억원 보다 다소 증가한 5,617억원으로 융자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의 87.3%를 차지하고 있다.

기금의 사업비는 해양환경개선추진, 정부가격안정, 자원관리형어업육성

및 어업경영지원, 품목별경쟁력강화 및 직접피해지원, 민간가격안정, 유통 가공시설개선, 산지 및 소비자유통개선 등의 분야에 지원하고 있다.

또한, WTO/DDA 협상, FTA체결로 피해가 우려되는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수단으로서의 기금의 지원역할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수산정책과 사무관 전성래)

3. 수산경영구조 선진화

가. 일선수협 의 지속적인 경영정상화 추진

1) 일선수협 경영평가

일선수협의 순 자본 비율 및 경영상태평가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부실 조합 등에 대해 지정·해제 및 강력한 적기 시정조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일선수협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경영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선수협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적기 시정조치를 취하고, 분기마다 적기 시정조치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미 이행 시 다각적인 제재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의 체결로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일선수협에 대해서는 반기마다 MOU 이행사항을 점검, 미 이행시기 지원된 자금에 대한 회수는 물론 임직원에게 대한 신분상 제재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등 경영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2) 경영개선자금 추가지원 및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갱신

2002년 9월말 일선수협 경영진단시 매각대상 고정자산이 아니었으나, 이후 MOU 약정체결에서 매각대상 고정자산에 추가되어 매각손실이 예상되는 18개 조합에 총 194억원을 2006년부터 융자 지원하여 이에 대한 경영개선자금 이자를 2010년까지 연간 14억원씩 5년간 총 70억원을 지원할 예정

이며, 2009년 중 MOU를 체결한 31개 조합에 대하여 총 342억원의 경영개선자금 이자(MOU 관리 비용 7억 원 포함)를 지급하는 등 지속적 경영정상화를 수행할 계획이다.

3) 부실수협 구조조정

2009년 상반기 중 「상호금융 예금자보호 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2008년말 경영평가 결과 2002년 9월 대비 순자본비율과 이월결손금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자체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한 흑산도수협에 대하여는 2009년중 관리인 선임 및 합병을 추진토록 하고, 동해시수협 외 4개 부실조합에 대하여는 조건부 합병명령 및 구조조정 추진시까지 부실우려조합에 준하는 최소이행목표 등 자구노력 목표를 부여하여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가능성평가 용역을 실시하여 자체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한 조합에 대해서는 정부예산 확보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조조정 추진 등 추가 조치 계획이다.

4) 부실조사 및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일선수협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조합의 손실보전과 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부실조사 및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2009년도 중 계약이전 예정인 완도군수협에 대해서는 엄격한 민형사상 책임추궁 등 강도 높은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나. 수협중앙회의 지속적인 경영정상화 추진

1) 수협중앙회 경영개선자금 지원

2001년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지도사업 및 경제사업 부문의 경영개선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제사업부문 자본잠식액(943억원)은 2007년까지 943억원을 모두 지원함은 물론 분할 지원에 따른 167억원의 이자발생 비용도 2008년 지원하여 경제사업부문의 유동성 부족 사태를 미연에 방지 자립경영기반을 확고히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도사업부문 손실금(475억원)은 2009년까지 205억원을 지원함은 물론 지원 잔액(270억원)에 대해서도 조속히 지원을 마무리하여 수협이 기본업무인 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 및 교육훈련 등 지도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09년에는 조합경영개선자금 지원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08년부터 지원중인 회원조합 감사업무 수행비 5억원, 일선수협의 전산화를 위하여 15억원, 일선수협 유류탱크 교체지원을 위해 17억을 지원할 계획이다.

2) 경제사업구조의 저비용·고효율화 추진

경제사업부문은 경제사업의 저비용·고효율화를 위하여 강도 높은 사업 구조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바다마트 사업장에 대한 자체경영진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경영부진 사업장에 대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바다마트 및 바다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자회사화 등 사업전반에 대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또한 성장이 부진한 가맹사업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장 한계사업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인천 수산물가공물류센터 건립 등 수산물 유통기반시설 구축과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하여 급식사업 전국확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가공사업 확대, 수산식품 안전성 확보 및 브랜드가치 제고를 2009년도 중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3) 신용사업의 「WIN START 2009 운동」 전개

2007~2008년에 추진된 「BLUE I 0708운동」이 종료됨에 따라 임직원 혁신의지 재결집을 통한 성공적인 사업완수를 위해 새로운 경영혁신운동의 전개가 요망되고 새로운 경영진 출범에 따라 금융위기를 조기 극복하여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에 대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기 위해 2009년에는 「WIN START 2009」 운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WIN START 2009 운동」은 제 3기 대표이사 체제 출범에 따라 끊임 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조기극복하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승리자가 되자는 의미와 일류 해양수산은행으로서 성공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인적조직인 협동조합의 자본구조 개선과 IB 영역 확대 및 자산운용업 진출을 통한 미래 新 성장동력 확보, 저원가성 예금 증대 및 고비용 시장성 예금 감축을 통한 예수금 조달 구조 개선, 적극적 프로모션을 통한 비이사 사업이익 증대, 고객관리시스템(CRM)의 업무활용도 증가 및 고객유치 프로모션을 통한 고객관리 역량 제고, 자산건전성 제고를 통한 선제적 위험 관리 강화를 5대 핵심전략으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 수협 선진화 추진

지난 2008년 12월 수협이 협동조합으로서 본연의 기능회복과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더욱 강도 높은 개혁이 요구되자, 정부와 수협, 학계 및 연구소 위원 등으로 구성된 ‘수협 개혁위원회’에서는 총 7차례의 회의를 거쳐 ‘수협개혁 및 발전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 제안에 따라 수협의 경영구조 등을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맞게 개편하여 수협이 진정한 어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협법 개정을 추진하고, 정부와 수협이 공동으로 ‘수협 선진화 TF’팀을 구성하여, 인적쇄신 등 대과제 10개와 인력 10% 감축 등 소과제 32개로 세부실천 과제로 선정하고, 어업인을 위한 건전한 협동조직으로 수협 개혁 달성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수협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전에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지역별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수협법 개정 및 선진화 추진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일선수협 구조조정을 위해 완도군수협 계약이전과 MOU 체결수협에 대한 출자금 증대 및 무자격 조합원 정비를 추진하고,

중앙회 구조조정을 위해 경상경비 20% 이상 감축과 동시에 공적자금 자

체재원 마련을 위한 임원보수 10% 반납과 선진화 과제인 임금동결 및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서 직원 임금반납도 단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협은 고정자산 매각, 경제사업 판매기능 자회사 이관, 공적자금 상환 및 자체재원 마련 등 ‘수협 선진화 TF’의 세부실천과제 성실히 이행하여 나갈 계획이다.

(수산정책과 사무관 김평전)

4. 어업보험 확충

가. 어업인 정책보험 확대

2009년도에는 정책보험 도입 6차년도로서 신속한 재해보상과 어업경영의 안정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09년도에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재해보상이 가능하게 하는 한편,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보험사업의 문제점 및 체도를 개선함으로써 어업인이 보험제도 이용에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건비 상승등에 따른 보험료 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국고 보조율 상향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표 4-3-8〉

어선규모별 보험료 지원율

(단위 : %)

구 분	어선원 보험료					어선 보험료		
	10톤 미만	30톤 미만	50톤 미만	100톤 미만	100톤 이상	10톤 미만	20톤 미만	20톤 이상
2007	62.0	54.0	30.0	22.0	14.0	62.0	54.0	14.0
2008	62.0	54.0	30.0	22.0	14.0	62.0	54.0	14.0
2009	70.0	62.0	38.0	30.0	14.0	70.0	62.0	14.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사업 확대

2009년말까지 육상수조식 넙치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은 보험도입 2년차로써 보험사업의 조기정착 및 보험대상 품목확대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양식보험의 보험대상 품목을 육상수조식 넙치를 포함하여 2013년까지 전복, 조피볼락 등 총 5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아래 이중 2010년부터 전복에 대해 보험사업을 추가 실시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품목 개발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실시기간동안 나타난 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양식어업 현실에 부합하도록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양식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하여 보험가입을 확대함으로써 보험사업이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산개발과 사무관 양진문)

5.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피해어업인 지원

가. 유류오염사고 현황

'07. 12. 7(금) 충남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 북서방 5마일 해상에서 대규모 유류오염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제작업에 전력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함으로써, 해상('08. 1. 8), 해안('08. 7. 7) 및 도서지역('08. 10. 10)에 대한 기본방제가 종료됨에 따라 모든 유류 오염피해지역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또한, 범정부적 차원에서 유류 오염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피해민들의 원활한 배(보)상을 위해 「허베이 스피리트 피해어업인 지원단」*을 앞으로도 운영할 계획이다.

나. 정부 조치 및 지원계획

1) 태안어장 정밀조사 및 복원사업과 유류 오염피해어장 환경개선사업

정부는 '08년 499백만원으로 「태안어장 정밀조사 및 복원사업」을 통해 유류유출사고로 인한 서해 연안의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태안 인근의 주요 양식장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09년도에도 약 5억 원으로 피해지역의 어장환경 및 복원사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09년 추가 경정예산을 확보하여 유류사고로 인해 오염되거나 훼손된 어장의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해 피해 어업인의 생업안정과 지속적인 수산물 생산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 유류 오염피해어장 환경복원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유류오염피해어장 복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이를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에 반영,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어장환경 복원은 '10년부터 '19년까지 총 3,800여억원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투입하여

* 농림수산식품부 허베이 스피리트 피해어업인 지원단 : 9명(별도정원 5, 비별도 파견 및 지원 4)

피해어장 복원프로그램 개발과 어장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유류오염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및 홍보 지원

유류 오염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이미지 개선사업 관련하여 각 지자체에서 요구·희망하는 사업 중 유류 오염피해지역의 복구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이 있는 사업 위주로 추진할 계획이다.

4) 피해지역 특별영어자금 등 간접 지원

유류 오염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07.12월부터 지원된 특별영어자금(연리 3%, 2년 상환)의 지원을 늘리고, 이미 사용 중인 영어자금 상환연장 및 이자감면(2년간, 연리 3%)과 피해어업인에 대한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을 지속할 예정이다.

다. IOPC Fund측과의 협의추진*

정부는 유류오염사고에 관한 IOPC Fund(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측과 각종 회의를 통해 신속하고 정당한 배(보)상을 추구하고, 정부는 모든 피해지역 피해민의 배(보)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피해어업인에게 원활한 배(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직·간접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다.

1) IOPC Fund 총회 및 집행이사회

IOPC Fund에서는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유류사고에 대한 보상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집행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한다. '09년에도 3월, 6월, 10월에 개최될 예정이며, 우리 정부도 회의에 참여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

* IOPC Fund :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The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

사고의 신속한 보상을 촉구할 계획이며, 정부대표 및 국제기금의 회원국으로서 타 회원국과의 외교 활동을 통해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의 피해 배(보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IOPC Fund 총회 및 집행이사회 회의에 피해민 대표 등도 참여토록 하여 피해보상 활동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정부의 지원활동과의지, 방향에 대한 공감의 자리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2) HSC*(IOPC Fund 서울사무소)와 정례회의

사고 발생 후 매 3주마다 개최하는 정례회의를 통해 IOPC Fund측과의 보상관련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신속·정당한 배(보)상을 위하여 피해민 요구 및 정부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며, 또한 IOPC Fund측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허베이 스피리트 피해어업인 지원단 사무관 김봉현)

제5절 살기 좋은 어촌모델 개발 기반 구축

1. 어촌종합개발사업체계 개편

낙후된 어촌지역의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소득원을 개발함으로써 지역간, 계층간 소득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개발 잠재력과 협업능력이 있고, 개발 후 인근 어촌에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수 개의 어촌계를 대상으로 권역을 정하여 개발하며, 대상사업은 어선계류시설·어업지원 등 생산 기반시설과 어촌환경시설 및 어촌소득기반시설 중에서 어업인이 선택하였다.

권역당 2~3개년간 사업비로 30~5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국고 지원을

* HSC :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Hebei Spirit Centre)

은 2004년 이전 사업은 50%, 2004년 이후 사업은 80%, 2009년 이후 사업은 70%로 2009년도에는 18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3개 권역에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 동안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지역숙원사항 위주로 분산 추진되고, 정형화된 사업계획이 하향식으로 시행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어촌개발여지가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사업추진 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다.

주요 개편내용은 사업 대상권역별 투자방식·투자규모·대상권역 규모 등의 변경과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지자체에서 직접 수립토록하고 기본계획이 확정된 지역에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즉, 어촌의 역사, 문화, 자연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별 특화개발과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중심으로 권역별 사업비의 차등지원 방식 등이 도입 되었다.

2. 어촌관광 S/W지원 강화

국민들의 소득 및 주 40시간 근무확대에 따른 여가시간 증대, 교통여건 개선 등으로 증가하는 관광수요를 어촌으로 흡수하여 어업인에게는 어업의 소득증대와 도시민에게는 새로운 휴식 공간을 제공 하고자 어촌관광활성화를 추진하였으나 관광기반시설 조성에 치중되어 국내 관광수요를 어촌관광으로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촌체험마을 중 30개 마을을 선정 사무장 보수를 지원(100만원 한도, 국비 50%)하고 체험마을 운영 컨설팅(20개소)을 확대 실시하여 어업인의 역량강화 및 S/W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컨설팅은 1지역 1전문가를 매칭하여 지역별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차별화된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2008년도에 운영중인 어촌체험마을중 30개 마을을 선정 「어촌체험마을 홈페이지(www.seantour.org) 구축(정비)」 사업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도 28개 마을을 선정·지원함으로써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양관광포털(www.seantour.com)과 연계하여 도시민에게 one-stop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는 등 S/W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 (연간 18회/1,440명 이상)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어촌관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여름휴가 어촌에서 보내기 캠페인, 각종 박람회 등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협외 어촌지원 TF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자매결연 사업 등 도시/어촌 교류사업의 양적확대는 물론, 내실 있는 교류활동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 지원할 계획이며 총 600사 600촌 자매결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수산개발과 사무관 최덕부)

3. 어항시설 확충

가. 국가어항

2009년도 국가어항투자 방향은 완공위주의 집중 투입으로 완공시기를 단축하고 재해방지를 위해 긴요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유지보수사업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투자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에 따라 37개 항에 1,526억원을 투입하여 인천 선진포항을 완공하고 강원 아야진항 등을 관광어항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특히, 이중 시범개발중인 대포항 등 8개 다기능어항 개발에 332억원을 투입하여 어촌어항 관광개발 사업이 2013년 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2009년에는 부족한 어항시설의 확충을 위해 2008년에 신규로 국가어항으로 지정한 부산 가덕도 천성항 등 6개 항에 20억원을 투입하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착수하였으며, 2011년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를 거쳐 이르면 2012년부터 시설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나.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

지방어항은 완공 위주의 집중 투자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신규지정 억제를 통하여 완공율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09년에는 균형개발특별세 재원으로 41개항에 587억원(국비 469억원, 지방비 118억원)을 투입하여 10개항을 완공함으로써, 전체 284개항 중 155개항을 완공(완공률 55% 달성)할 계획이다.

어촌정주어항은 지방어항의 완공율이 부진함에 따라 완공위주의 집중 투입을 위하여 국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지역균형개발 측면을 고려하여, 어촌정주어항개발을 위한 국비지원을 적극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수산개발과 사무관 전충남)

4. 어촌어항 관광개발

가. 어촌어항관광 조성사업

국민들의 소득 및 여가시간 증가와 ‘주 40시간 근무제’ 확산 등으로 증가하는 어촌관광 수요에 대비하여 어촌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 어업자원, 역사·문화·생활방식 등의 고유한 특성과 기존 어항시설을 연계하여 어촌을 생산·주거·관광이 어우러진 종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어촌관광진흥 종합대책”을 수립 하여, 어촌·어항 복합 공간, 다기능어항, 어촌관광단지 등 3종의 어촌·어항개발 통합모델을 개발한 데 이어,

2005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08년까지 기본설계 23개소, 실시설계 20개소를 실시하고 2009년도에는 강원도 속초시 대포항 외 15개소에 대한 시설사업을 시행하고, 정자항(울산 동구)을 완공할 계획이다.

나. 어촌체험마을 조성

2001년부터 체험활동이 가능한 어촌마을에 어촌관광체험 기반시설비를 지원하여 어촌체험마을 조성하고 있으며, 2009년은 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강원도 속초시 외옹치 마을 등 7개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어촌체험마을사업이 기반시설 지원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운영이 활성화되어 실질적인 어업의 소득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체험마을 운영 컨설팅 등 S/W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며, 하반기에 제4회 어촌체험마을 성공사례발표회를 개최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경쟁을 통한 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수산개발과 사무관 최덕부)

제6절 어촌전문인력 양성 및 어업인 삶의 질 향상

1. 수산경영 전문인력 양성

가. 어업인후계자 육성

어업인력 육성을 위해 2009년도에 200억원(442명)을 5년 거치 10년 균분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전년도 12월 말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1월에 선정하며, 선정된 사람은 용자금 대출여부와 상관없이 어업인후계자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업에 의욕이 있는 자를 선도우수경영인 사업장에 인턴으로 고용하는 수산업인턴제와 수산신지식인 등 수산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창업어가 후견인제를 두어 어업인후계자의 지속적인 확보와 안정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4-3-9〉

어업인 후계자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81~'09		'09(p)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합 계	18,246	445,799	17,804	425,799	442	20,000
일 반 후 계 자	15,413	294,875	15,179	287,275	234	7,600
진 업 경 영 인	2,727	141,199	2,559	132,799	168	8,400
선도우수경영인	106	9,725	66	5,725	40	4,000

나. 수산계고교 특성화 사업 지원

수산전문 신규진입인력 양성 및 전문계고교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수산계 고등학교(9개교)에 취업·창업과 연계한 현장중심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별 추진이 어려운 해기사양성과정인 종합승선실습훈련을 통해 5급 항해사 및 기관사를 양성하여 인력난으로 어려운 원양업계의 3등 항해사 및 기관사로 취업·연계될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 한국농수산대학 내 수산양식학과 설치 운영

수산전문인력 양성체제 확립을 위해 기존 한국농업대학의 교명을 한국농수산대학으로 개정, 교육의 범위를 농어업으로 확대하여 30명 정원의 수산양식학과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수산분야의 창업중심의 전문화된 정예 후계인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10년 학과개설을 위해 수산부문 전문가 2명을 파견, 교원(교수 2, 조교 1) 및 예산확보와 대대적인 홍보를 통한 신입생 모집에 주력하고 '10년도 학과운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마련 중에 있다.

(수산개발과 사무관 정동기)

2. 어촌지역 개발 전문인력 양성

최근 어촌은 어업생산 활동의 전초기지 차원을 넘어 어촌관광, 해양레저, 휴양·정주 등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추세이며, 새로운 차원의 어촌모델 개발이 조기에 성공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어촌개발리더 양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2009년도에도 「어촌지역개발 리더 양성」 사업을 추진하여, 어촌지역단위의 정부시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어촌계장, 마을이장 등 기존 지역리더에게 사업기획 및 추진능력 등을 강화시켜 상향식 어촌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년 수산인력개발원에 「어촌관광가이드」 및 「어촌종합개발사업」 2개 과정의 전문인력 양성반을 개설하여 지역 어업인 및 어촌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촌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질 개발을 위해 교육훈련 및 활동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여성어업인의 자조조직인 어촌사랑주부모임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사회·문화에 대한 교육 강화로 여성어업인의 위상제고와 권익신장을 위한 지원도 할 계획이다.

어촌개발 전문인력 육성은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의 역량과 의견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창의적인 모델로 효율적인 어촌지역개발이 가능하고, 어촌개발과 개발 후 시설운영 과정에서도 살기 좋은 어촌 만들기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유도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개발과 사무관 정동기)

3.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로드맵 마련

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의료, 교육, 문화 등 사회서비스 기능이 미약하고, 어가소득은 전국가구소득의 77.1% 수준으로 젊은 층의 탈 어업, 탈 어촌으로 인한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 2008년 기준 어가소득은 31,176천원 ↔ 전국가구소득 40,436천원

* 어가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 : (2003년) 16% → (2008년) 22.7%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시행(‘04.3.5 공포, 6.6 시행)하여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해온 관련 정책을 종합·체계화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따라 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05~’09)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5년간 총 20.3조원(국비 11.6조, 지방비 8.2, 기타 0.5) 투입자 계획으로 4대 분야 133개 과제를 소관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09년도에는 농식품부 소관 42개 과제중 수산분야는 7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산분야 과제에서는 어촌지역 공동화 심화를 예방하고, 젊은 어촌을 만들기 위하여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을 통한 어촌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자영 수산계교 급식비 지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양식어장 정화사업, 디지털 어촌 구축 등 어촌 기초생활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어촌체험마을 조성, 관광센터 설치 등 어촌체험·휴양 기반 구축 및 활성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어업인 삶의 질 향상 관련 사업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받음으로써, 사업추진 효과를 제고하고 어촌지역공동체 유지·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개발과 사무관 김병욱)

4. 수산직불제 도입기반 마련

WTO/DDA 협상결과 수산물 시장개방과 수산보조금 일부감축 또는 폐지에 따른 어가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직불제 도입에 대한 어업인들의 요구는 강해지고 있으나 2005년 11월 홍콩각료회의에서 “과잉어획능력 및 과잉어획물유발 수산보조금을 금지” 하도록 결의함에 따라 쌀 직불금과 같이

모든 어업인에게 골고루 수산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오히려 자원 남획형 직불금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수산분야는 WTO 일반보조금 협정에 포함되어 있어 공산품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반면, 농업분야는 농산물만 협상대상으로 하고 있어 WTO 출범이후 1997년부터 경영이양, 쌀 직불제등을 도입하였고 직불제간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어 현재 공익형과 경영안정형의 2개 유형으로 통합·개편 추진 중에 있다.

정부에서는 2007년 어업인 소득보전대책으로 수산직불제를 수산보전제로 바꿔 ① ('99)해양폐기물 정화(폐어구 수거) 지원, ② ('04)친환경배합사료 지원, ③ ('07)생분해성어구 지원, ④ ('09)친환경부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이는 보조금 성격의 기타 직불성 사업으로 어가단위소득안정을 위한 수산직불제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수산분야도 2011년 공익형 직불제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도입을 목표로 현재 352개 어촌계 2만3천 가구에 대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개년에 걸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연구용역(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수산직불제는 자원을 남획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우선 시행하고 '어가단위소득안정제'는 농가단위소득안정제에 맞춰 도입할 계획이며, '어가단위소득안정제 도입 선행조건인 어업경영체 등록추진에 필요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09.4.1)과 시행령('09.10.8)을 제정하였고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수산개발과 사무관 김병욱)

제7절 안전한 수산물 생산관리체제 강화

1. 국내 수산물 위생관리기반 구축

국민 소득향상 및 웰빙문화 확산으로 수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국내 생산량 감소로 수산물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중국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양식품종 다양화와 대량생산 등으로 인한 전염병 예방을 위해 항생제 등 약품사용이 증가하고, 말라카이트그린과 같은 금지약품을 사용하는 등 수산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증가되는 실정으로 세계 각국은 안전관리 강화와 더불어 자국의 위생조치에 의한 무역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WTO/SPS 등 국제규범의 적용이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어장에서부터 비위생적인 수산물의 생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주요 수산물 생산해역에 대한 위생조사·평가를 실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공급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국제적 위생관리기준인 HACCP 적용 양식장과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안전관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의 확대와 함께 유해 수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성조사를 7,300건으로 강화하고 생산업계의 위생안전 교육 확대 및 효과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외국과 위생협약 사항에 부합되는 위생관리를 위해 EU, 미국 등의 수출 수산물 생산·가공시설에 대한 위생 점검 및 모니터링 등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제품의 생산유도를 통해 수출증대를 도모함은 물론, 국내 생산·출하 전 단계의 수산물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제도를 활성화하여 생산단계에서부터 불량 수산물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및 외국으로부터 우리 수산물의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양식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산용 의약품은 수산동물의 질병 치료 및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피하지만 수산 식품의 안전성을 위하여 용법·용량 및 휴약기간 준수가 필수적이다.

특히, 양식 어류의 경우 제한된 공간에서 활동하므로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성 세균에 대한 생물자체의 저항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하에서 질병치료용으로 항생제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승인된 항생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어업인에 대한 안전사용지도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양식 어류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개발 및 공급 확대를 통하여 항생제 사용량의 자연 감축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내 양식 수산동물이 질병에 의한 폐사로 인하여 어업인들의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최근 수입수산물 증가로 외래 질병의 유입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7.12.21일 제정된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이 2008.12.22일 시행됨에 따라 금년도는 국내양식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수산동물질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국내방역조치와 외국산 수입수산물에 의한 병원균 유입의 차단을 위해 검역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실질적인 원년이 되어 국가단위의 수산동물전염병관리체계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양식산업과 사무관 민병주, 조성대, 방종화, 표시검역과 사무관 주두만)

2.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 강화

수산물 수입의 완전 자유화로 국가간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초래되는 저질·위해 수산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국내 수계 보호를 위한 검사·검역기능의 강화가 더욱 요구됨에 따라, 2009년도에는 액체질량분석기(LC/MS/MS) 등 41종 106대의 최신 정밀분석 장비를 확보하는 한편, 수산물 정밀검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유기독성·항생물질·어류질병 등 14개 분야 56명을 국내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자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정밀분석검사원간의 신뢰성 오차범위 축소와 본원·지원간의 표준화 유지를 위해 중금속, 항생물질 등 5개 분야 17개 항목에 대한 정기숙련도 향상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써 인정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함은 물론 국제공인시험기관(KORAS) 인정을 지원까지 확대(부산지원 2009년, 인천지원 2011년 등)하여, 국제수준의 시험기술 능력향상 등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국제수준의 시험기관으로서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08년 현재 30개 항목인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검사를 2010년까지 44개 항목까지 확대하고, 과거 부적합 이력이 많은 품목을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매진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국내·외에서 문제가 제기된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기관과 수산물 안전관련 협의회를 통해 기준·규격 설정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신속한 검사를 실시하여 국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아갈 계획이다.

더불어 새로운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검사항목의 기준설정을 위하여 항생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유해정보, 기타 문제제기 인체유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주요 수산교역 국가(러시아, 대만 등)와의 위생약정 체결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위생약정 체결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점검을 강화하여 불량수입수산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세청과 불법유통, 위장수입 등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입수산물 부정통관을 방지하며 수입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부정유통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원산지 판별 DB구축을 추진하여 국내 유통 투명성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양식산업과 사무관 방종화)

3. 수출·입 수산동식물 검역기반 구축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고자 수입되는 수산동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등 수산동물질병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동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이 제정 시행(2008.12.22)되었고, 이에 따른 수산동식물 검역대상은 종전의 이식용에서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국경검역 업무수행을 위하여 2009년 검역예산 총 3,473백만원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2009년도에는 유전자분석장비 등 24종 79대의 최신 검역장비를 구입하여 인천, 부산, 통영, 강릉지원에 추가로 설치하고 국경검역 업무의 조기 정착을 위해 대국민 홍보비 217백만원을 확보하여 공중과 대중매체인 TV, 인터넷과 지하철, 버스 등 다양한 매체로 영상물 송출 및 포스터, 리플렛 등을 제작하여 국제공항, 항만의 여행객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동물검역관으로서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수산동물검역관 7명을 미국, 프랑스, 호주 등 국제수역사무국(OIE) 표준실험실에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수산동물 검역전문인력 33명을 확보하여 최소한의 검역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수산물검역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및 관세청과의 정보연계를 통해 민원신청부터 검역결과 통보까지 온라인화하여 대민서비스에 기여하는 등 보다 빠른 민원행정처리를 위해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표시검역과 사무관 주두만)

제8절 친환경 양식 확대 및 수급조절 기능 강화

1. 친환경 양식 생산

국내 양식어업은 연안 양식어장의 오염이 심화되고 적조와 태풍과 같은 재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양식어업의 자연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수산물 교역 확대에 따라 치열한 국제 경쟁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안 어장의 불리한 자연적 조건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외해가두리 양식이 유력한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양식어업의 조류가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개발, 생태계 기반 양식어장 관리로 바뀌면서 연안의 소규모 양식어업이 쇠퇴하고 외해의 대규모 양식을 육성하는 추세로, 우리나라의 경우 내만의 가두리양식장을 외해로 이동한 새로운 양식기술을 적용하여 연안어장의 환경개선과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현재 외해(수중)가두리 양식개발사업은 제주도(2005년부터)와 경남도(2006년부터), 전남도(2007년부터), 강원도(2008년부터), 경북도(2009년부터)에서 시험어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 시험어업의 중복투자 방지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해양식 관계자인 지자체 및 전문가 등과 수차례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외해(수중)가두리양식 시험어업계획의 기본지침(2008년)」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시달하였다.

기본지침에는 2009년까지 해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도별 2개소 이내의 외해양식 시험어업을 추진하고, 이러한 시험어업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 및 수급상황 등을 종합분석 한 후 2010년부터 본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동 시험어업의 추진방법은 정부(지자체 포함), 어업인,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시험대상 품종은 참치, 대구 등과 같은 신품종 또는 가급적 기존 양식어종과 경합되지 않은 돌돔, 능성어, 참돔 등 수입대체 품종으로 하며. 시험어업 장소는 수심 35m이상, 해안선에서 3km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행 수산양식 관련 법·제도들은 내만양식 활동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수산업법에서 외해가두리 양식업을 내만 양식업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외해양식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1단계로 현행 수산업법에 의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내용을 개정해 2010년부터 외해양식 시험어업 종료자, 참다랑어 양식 신청자에게 본 사업 일부를 허용할 계획이며,

2단계로 전반적인 관련 법령 마련 및 수산업법 및 하위법령 등을 개정하여 외해양식의 본 사업을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외해 가두리 양식어장 개발에 3개년(‘10~12) 동안에 15개소를 확대 추진하고 2010년도부터 참다랑어 양식 연구개발을 통해 우리의 실정에 맞는 양식산업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수산과학원, 지자체, 어업인 등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인공종묘생산기술, 배합사료, 양식장 적지선정 등을 현장중심으로 집중 연구하여 본격적인 외해양식 시대를 열어나갈 계획이다.

향후 내만과 외해양식의 차별화를 통한 원-원 전략으로 내만은 친환경적으로 해조류, 패류 위주의 양식과 천혜의 해양레저 공간으로 활용하고 외해는 고부가가치 참다랑어 등 어류를 양식하는 수면으로 활용함으로써 WTO, DD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국내 핵심전략 산업으로 육성·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친환경 양식산업을 육성하여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사료 사용 등으로 야기되는 연안 양식어장의 환경 악화 방지 및 연근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2009년도에 37,567백만원(농특회계 19,413, 균특회계 9,245, 수발기금 8,909)을 투입, 지원할 계획이다.

농특회계 사업내용은 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 14,313백만원, 친환경양식 기반시설구축지원 5,100백만원이다.

균특회계 사업내용은 김육상채묘및냉동망보관시설 1,000백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 6,019백만원, 웰빙표고넙치브랜드개발지원 550백만원, 고효율어류 사료생산공장건립 600백만원, 친환경양식기반조성사업 626백만원, 환경친화

형배합사료지원(제주) 450백만원이다.

수발기금 사업내용은 양식어업시설지원 8,105백만원, 생계소득및안정자금 99백만원, 수산동물질병관리 705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양식산업과 사무관 임남철, 김종건)

2. 수급조절 강화

2004년부터 시작된 양식수산물 자율 수급조절사업은 WTO/DDA 및 FTA 등 시장개방화에 대비, 정부주도의 수산물 수급조절 정책에서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수산물 수급조절 정책의 필요에 따라 농안법 및 어업인 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수산업발전기금으로 수산업관측사업, 유통협약사업, 자조금지원사업 등 3개 사업으로 나누어 지원되고 있다.

수산업관측사업은 수산물 생산 및 유통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생산자, 유통인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적정생산 및 적정가격을 유도하고, 유통협약·자조금사업은 수산물 수급동향을 고려한 적정 생산 및 출하를 통하여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 유도 및 수산물 판로확대, 소비촉진 및 시장개척 활동 등을 통한 생산자단체의 시장 교섭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양식수산물 자율 수급조절사업은 주요 양식품목(김, 미역, 넙치, 조피볼락, 전복, 송어, 굴 등)을 중심으로 매월 관측정보를 어업인, 유통인,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양식어업의 합리적인 경영과 소비안정을 도모하여 왔으며, 생산 어업인 단체에 대한 유통협약·자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양식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한 어업인의 자율적인 대응능력을 배양하여 왔다.

앞으로, 자율 수급조절사업인 수산업관측 및 유통협약·자조금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산업관측사업은 2011년까지 육상수조식, 가두리식, 축제식양식업 주요품목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관측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관측자료 관리 및 정확한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정보시스템(DB, DW) 구축, 수산물 수급 조기경보체제 구축, 수산물 수급전망모형 구축,

수산물 수출입관측 및 해외동향조사를 강화하여 관측 기능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통협약 및 자조금 지원사업은 사업내실화 및 사업성과 도출을 위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어업인 단체에 대해 사업비 지원규모를 상향 조정해 나가고, 기존 시·군 단위에서 업종별 수협 및 품종별 생산자 협회 중심으로 2010년까지 광역화·전국화하여 자율적 수급조절기능을 높여 나가도록 하여 양식수산물에 대한 민간주도의 시장지향적 자율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양식수산물의 적정량 수급조절을 위한 양식장 불법양식시설 정비 단속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김, 어류, 전복 양식장의 불법시설과 축제식양식장의 허가사항중 양식물의 종류가 잘못 기재된 양식장, 기타 양식시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불법시설임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양식시설 등 각종 불법양식 시설에 대한 정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양식어장 인공위성 판독결과에 따른 불법 김, 어류, 전복 양식시설에 대한 정비단속, 전남(완도)지역의 불법 전복줄가두리식 양식시설의 단계별 정비단속 계획 수립·추진, 어업권 주요품종별 실태조사, 축제식양식장의 불법양식 정비단속 계획, 흥합, 미더덕 등 기타 불법양식시설에 대한 양식장 불법양식시설에 대한 정비단속이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하반기 양식장 불법시설 일제정비 및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무면허, 어장이탈, 무기산 사용, 불법 한정면허 등 「양식장 4대 병폐」에 대하여 법질서 차원의 집중단속 실시로 양식어업 풍토 조성 및 건전한 양식업 발전을 도모하였음

정부의 불법시설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지와 방침에 일선의 자치기관과 어업인들의 인식이 전환되면서 자율적인 노력이 돋보이며, 특히, 인공위성 촬영영상사진을 이용한 김 양식장의 정비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났으며 전남 완도지역의 불법 전복줄가두리 및 신안군지역의 어류가두리 불법 양식시설 철거 추진 등 기타 불법양식시설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하고 점검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불법양식시설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적법한 양식시설에서 적정량의 양식수산물이 생산됨으로써 양식수산물의 수급조절 기능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련 기관 행정선의 GPS(위성항법장치)에 양식장 면허현황을 입력하여 불법양식시설을 확인하고 정비단속을 함으로서 불법양식시설이 점차 사라져 적정량의 양식수산물이 공급되면 생산가격이 안정되어 어가의 소득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어 양식장의 불법양식시설 정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양식산업과 사무관 박형구)

3. 어장환경 개선

2009년도 연안어장 정화사업은 장기간 양식 등으로 어장이 노후되어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양식어장, 마을어장 등을 대상으로 어장정화사업에 61억 원을 투입하여 5,761ha에 대해 퇴적물 수거·처리, 바닥갈이, 해적생물 구제 등 정화·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연안 양식어장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09년도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주관으로 남해안의 고성·자란·가막·여자만의 굴·홍합·새고막 양식어장을 대상으로 어장환경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어장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식어장 등에 설치되는 부표를 규격제품으로 교체하는 고밀도부표 보급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남해안의 굴 수하식양식 과정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굴 패각폐기물을 친환경처리하여 굴 패각 비료·사료·공업료원료 등으로 자원화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연안어장오염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자원환경과 사무관 이병웅)

4. 내수면 어업 육성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패류 채취용 어구(숨틀방류, 잠수기)를 명확히 하고, 잠수기로 채취할 수 있는 지역을 고시하여 지역간, 어업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사유수면에서의 양식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현황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하여 내수면어업의 체계적 관리 및 수산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댐·호수 등에 인공산란시설을 설치하여 붕어·잉어 등 민물어류의 원활한 산란과 치어의 생존을 향상할 도모하여 수산자원을 증강시키고, 유어객들이 많이 찾는 강·하천에는 내수면 생태정보 알림판을 설치하여 무분별한 어획 방지는 물론 토속어류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건전한 유어질서 정착을 유도하는 등 내수면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이용·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내수면어종의 소비확대를 위해 회·매운탕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내수면 수산식품의 소비시장을 새로운 기능성 가공식품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송어훈제가공공장 건립사업(강원 영월, 50억)을 완공하여 소비부진 등에 따른 물량을 해소시켜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도립 내수면연구소 및 지자체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정부와 지자체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중복사업 방지 등 내수면 관련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섬진강 토속어류생태관에 이어 남한강 토속어류생태관(충청북도 단양군) 건립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내수면 수산자원이 먹거리로 뿐 만 아니라 강과 하천 등 내수면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원환경과 서기관 김동욱)

제9절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체계 개선

1.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국민소득 증대와 웰빙문화 확산에 따라 수산물의 소비가 증가하고 고품질 수산가공품 등으로 소비패턴이 고급화 추세이며 품질인증 대상품목이 확대되고 품질기준이 일부 강화되었으나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수준의 수산물 품질 향상을 요구하는 실정에 있어 가공산업 활성화 및 고품질 수산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수산물품질인증 품목, 친환경수산물인증 품목 및 지리적표시등록 수산물 확대 등을 통해 수산식품의 기준 강화 및 품질 향상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음식문화의 국제화 추세 등으로 가공품에 대한 소비 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수산물가공품 생산에 있어서도 소비자 요구 및 소비추세를 반영하여 간편화·다양화·고급화 전략과 함께 국민보건 위생에 적합한 가공품 생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2009년도는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Cold Chain System을 구축하여 동북아 수산물류 거점 확보를 위한 수산물종합가공단지 지원 및 어촌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물의 산지가공시설 지원 사업을 내실화하고 특히 부가가치가 큰 지역특산품 중심으로 산지가공시설 선별 지원(39개소, 137억원), 수산물처리·저장시설(7개소, 105억원), 젓갈타운 조성(3개소, 20억원), 김 가공공장 현대화(14개소, 12억원) 및 전북진주 산업센터(1개소 4억원)를 중점 지원하여 수산물 가공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수수산물 확대보급을 위한 친환경수산물인증 대상품목을 10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경제발전과 식생활 향상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에서 명성이 높고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수산물 및 수

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함께 이를 지역 특화사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수산물지리적표시 등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수산물 가공산업을 수산업의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고소득 창출과 어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체계 구축 및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수요개발, 우수브랜드 육성·지원으로 경쟁력을 제고 하는 등 고품질의 안전한 수산물생산 및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수산정책과 사무관 박희수)

2.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지의 위판장과 지방자치단체가 개설·운영하는 도매시장이 주도해 온 수산물 유통체계가 강제 상장제에서 임의상장제로 전환된 1995년을 기점으로 복합적 기능의 종합유통센터 같은 새로운 모델이 출현하는 등 다양화 되었고, 공공유통 기능의 비중이 감소되고 있는 등 최근 수산물의 유통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 할인매장의 증가 및 전자상거래 확산 등 급변하는 수산물의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과거의 생산자위주 수산정책을 소비자 위주로 재편하여 생산어민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유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수산물유통체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폐류 및 선어 실질경매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산지 출하자가 수산물 표준규격으로 도매시장법인에 직 수탁하는 물량의 어상자 구입비용을 지원하며,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출하촉진자금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04년 1월부터 수도권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출하자 정보를 표시함으로써 출하자의 책임의식 고취와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생산지 등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제공을 위해 「수산물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2002년부터 도매시장 상장경매 정착 유도를 위하여 출하자들에게 매년 스티로폼 어상자 구입비 일부를 보조하여 왔으나, 도매시장의 상장경매가 정착단계에 돌입 하였으므로 2009년부터 지원을 중단하였다.

한편, 농수산물안정기금에서 분리하여 2005년 1월 1일부로 수산발전기금의 설치에 따른 자율성을 강화함에 따라 산지 및 소비자유통자금 확대, 수산물의 민간저장기능 강화 등을 통해 수산물이 적정가격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통한 유통단계 및 유통마진 축소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win-win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136억 원을 들여 직매장 4개소, 위판장 10개소, 유통물류센터 1개소, 해양수산복합공간 3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중심의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어업인 및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수산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 6개소, 위판장 9개소, 공판장 1개소에 56억 원을 투자하여 수산시장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1C 신 해양시대 동북아 최대의 수산물류·무역 중심기능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추진 중인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건설 사업이 2009년도에 준공 및 개장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산물 전문 도매시장인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은 건립한 지 38년이 지나 노후화됨에 따라 현대화 사업을 통해 국제적인 수산물 관광명소로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수산물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 정보제공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모든 식용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한 지도단속과 대국민 홍보할

등을 전개하고 있으나, 수입수산물의 급증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허위표시방법이 날로 전문화·조직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원산지표시 업무를 전담하는 기동단속반을 설치하여,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한 집중단속과 수산물 유통경로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원산지판별 유전자기법 개발 등 과학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원산지 단속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생산자 및 판매업체들의 자율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협약체결, 민간명예감시원 확대 등 자율적 감시체제 확산을 통해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의 정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수산정책과 사무관 이상영)

3. 수산물 가격안정

수산부분의 기금이 2005년 1월 1일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수산물 발전기금」으로 전환 되었는데, 수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2,799억원이 투입되며, 이 중 250억원을 정부비축사업에, 1,340억원을 민간 가격안정사업에, 1,209억원을 유통개선사업으로 각각 운용될 계획이다.

가. 가격안정사업

생산자 수취가격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발기금 120억원을 지원하여 냉동명태·냉동오징어 등 3개 품목 4,670톤을 정부에서 직접 비축·방출함으로써 원활한 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4-3-10〉

2009년도 정부비축사업계획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수매물량	기금지원	수매시기
합 계	4,670	12,000	
냉 동 오 징 어	2,040	6,000	5 ~ 11월
냉 동 고 등 어	1,280	4,000	8 ~ 12월
냉 동 명 태	1,350	2,000	6 ~ 12월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주 : 수매 물량 및 사업 시기는 생산 및 가격동향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실시

나. 수급 및 가격관리 강화

수산물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연근해 및 해외어장 생산증대를 도모하고, 주요품목에 대하여는 어황 및 가격동향에 따라 정부비축물량 방출을 탄력적으로 실시하며, 국내생산으로 공급에 한계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비축사업으로 수입을 추진하는 한편, 외국과의 공동·합작사업으로 어획물 국내반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연중으로 물가관리 비상체제를 가동하여 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관리를 점검해 나가면서, 특히 명태·오징어·고등어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상황을 특별히 관리하는 한편, 설날·추석 등 성수기에는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성수품의 수급 원활과 가격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수산정책과 사무관 김경남)

제10절 국제협상 활동 강화 및 해외수산자원 확보

1. WTO-DDA 및 FTA 수산분야 협상대응

가. WTO-DDA 수산분야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

1) 협상동향

2001년 11월 출범한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 Doha Development Agenda)는 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 규범***, 서비스 등 9개 협상분야에 걸친 다자간무역협상으로 2003년 칸쿤 각료회의 결렬, 2006년 협상중단 등의 사례에서 보듯 각국의 참여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어려운 협상과정을 거쳐 왔다.

2008년 7월에는 제네바에서 소규모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핵심 분야인 농업과 비농산물시장접근의 협상세부원칙 타결을 시도하였으나 개도국 특별 긴급관세(SSM), 미국의 면화보조금 및 분야별 자유화 등 민감한 쟁점을 둘러싸고 입장대립이 계속되어 결국 실패하였고,

2009년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DDA의 조기 재개가 논의되었으나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해 DDA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DDA 협상은 현재까지 큰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2008년 12월 DDA 협상 진전을 위해 농업 및 비농산물 시장접근 세부원칙에 대한 4차 수정안이 제시된 이후, “WTO 체제하에서의 미국의 약속 준수”** 입장을 밝힌 미 오바마 신행정부의 DDA 조속 타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Two-track approach) 제안과, '09. 6월 중순 케언즈그룹 각료회의(인도네시아, 발리), OECD 각료회의 계기로 주요국 통상장관들 사이에 DDA 재개 및 타결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 공산품, 임산물, 수산물 등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상품의 관세인하를 논의하는 협상분야

** 보조금협정과 반덤핑협정의 개정을 주로 논의하며 수산보조금협상도 규범 분야에서 논의

*** 2009 Trade Policy Agenda and 2008 Annual Report, USTR

가) 수산보조금

수산보조금 협상은 2001년 11월 DDA 출범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05년 12월 홍콩각료회의에서 과잉어획능력 및 과도어획을 야기하는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7년 11월 규범 협상분야의 Valles Galmes 의장은 어선건조, 어항시설, 면세유 등 우리나라 수산보조금의 대부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장안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미국·호주·뉴질랜드 등 수산자원 보호 주장국들과 중국·인도 중심의 개도국들이 수산보조금의 광범위한 금지를 주장한 반면, 우리나라·일본·대만·EU 등은 보조금의 광범위한 금지에 반대함에 따라 의장은 2008년 12월 의장안 초안을 일단 유보하고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하기 위하여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2009년도에는 6차례의 수산보조금 협상이 진행되어 의장 로드맵에 대한 논의는 거의 종료되었으나, 회원국간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2009년 12월 이후부터는 회원국의 제안서를 제출받아 논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EU, 일본, 대만 등 일부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공조하여 금지보조금의 범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상에 대응하여 왔으며, 특히 엄격한 자원관리시스템(Fisheries Management System, FMS)을 전제로 금지보조금의 예외 인정을 주장하고 있다.

나) 수산물 관세

수산물 관세감축은 공산품 관세감축과 같이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협상분야에서 논의된다. NAMA의 주요 쟁점은 크게 관세감축공식, 개도국 신축성 및 분야별 무세화이다. 관세감축 공식은 흔히 스위스공식이라 불리는 것으로 관세감축 계수 이하로 최종관세가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있다. 2008년 12월 의장 4차 수정안에 따르면 스위스 공식에 적용될 조정계수의 경우, 선진국은 8, 개도국은 부가 조건(신축성 적용 범위)에 따라 20, 22, 25 중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도국 신축성 적용문제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

이다. 만약 선진국 계수 8을 적용할 경우 최종관세는 8% 이하로 떨어진다. 개도국은 관세인하 신축성(관세감축폭의 50%만 적용 또는 관세감축 면제)을 사용할 수 있는데 계수 20을 사용할 경우 제일 높은 수준의 신축성이 부여되고 계수 25를 사용하면 신축성을 사용할 수 없다. 개도국 신축성은 또한 특정 HS chapter에서 일정 부분에 사용할 수 없는 등 신축성 제한요건(ACC : Anti- Concentration) 적용을 받는다.

분야별 무세화는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보석, 화학약품, 수산물 등 14개 분야가 제안되었다. 수산물 무세화는 뉴질랜드, 아이슬랜드, 태국, 중국 등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우리나라와 EU, 일본 등은 이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2008년 7월 소규모 각료회의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들이 분야별 무세화 참여를 강조함에 따라 중국 등 개도국과 심각한 대립이 있었다. 그러나 '09. 9월 WTO/DDA 고위급 회의(SOM)에서 '10년 DDA 협상 타결을 목표로 '09년 말까지 각 협상분야의 작업계획 마련 및 고위급 회의를 통해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함에 따라 분야별 자유화 협상에서는 각 분야별 제안국 주도의 양자협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2) 대응방안

정부는 DDA 협상결과로 인한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외협상과 국내 보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수산업계, 연구기관 및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WTO/DDA 협상대책단”^{*}을 지난 1999년부터 운영하면서 협상전략의 투명성과 적시성을 제고하여 왔으며, 농림수산식품부로 직제개편후에는 WTO/FTA 협상포럼을 통해 협상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수산통상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자문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해 오고 있다.

수산보조금은 금지대상 보조금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유예기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DDA 타결 충격이 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할 계획이다. 이

^{*} 이후 FTA 추진이 본격화 됨에 따라 “WTO/FTA 협상대책단”으로 강화

를 위해 EU, 일본, 대만 등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국가와 긴밀히 공조하는 것 외에도 공조세력을 다변화하여 협상력을 제고하고, 미국, 호주 등 입장이 반대되는 국가는 개별 양자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이 협상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협상 진전상황을 보아가며 수산보조금 지원의 틀을 WTO 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어업구조조정, 고효율 연료장비 개발 등을 통하여 우리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 할 계획이다.

수산물 관세협상에서는 신축성 확보에 전력할 계획이다. DDA 협상체계상 수산물 관세는 공산품 관세와 같이 논의된다. DDA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목표는 공산품 수출 확대인데, 이를 위해서는 공격적인 협상을 펼쳐는 동시에 취약한 수산분야를 보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우리나라는 일부 민감한 수산물에는 신축성(낮은 수준의 관세감축을 적용)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일부 민감한 수산물에 신축성이 부여될 경우 관세감축 폭이 작아져 시장개방으로 인한 충격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들이 주장하는 수산물 무세화에는 불참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할 예정이다.

(다자협상협력과 사무관 권현욱, 임선정)

나. FTA 수산분야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

1) FTA 추진동향

WTO-DDA 타결이 지연되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는 지속적인 확산추세이다. 2008년도 기준으로 약 230여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 및 발효된 것으로 WTO에 통보되었고, 이중 절반 이상이 WTO 출범(1985년) 이후 체결되었으며, 세계 총 무역 중 지역 협정 내 무역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추세에 맞추어 세계 각 국과의 FTA 체결을 적

극 추진하고 있다. 2009년 10월 현재 한·EU FTA 타결로 미국, 아세안, 싱가포르 등 FTA 발효 또는 타결중인 국가가 45개국이다. 칠레, 싱가포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ASEAN과의 FTA 협정이 발효되었고 금년 11월 인도와의 포괄적 경제동반협정(CEPA*)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2010년 1월 발효될 예정이다. 한·미 FTA는 국회비준을 기다리고 있으며, 한·EU FTA는 내년 상반기 정식서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또한 현재 페루, 호주, 뉴질랜드, GCC(걸프협력회의), 콜롬비아 등 자원부국 및 주요 거점 경제권 중심의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과는 농수산물 개방수준 등 상호간의 입장차이로 협상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한편 중국과는 산관학 공동연구가 진행중이며, 터키 메르쿠스(MERCOSUR), 러시아 등과는 협상 준비 중에 있다.

2) 한-미 FTA

한·미 FTA는 2006년 6월 협상이 시작되어 8차례의 실무협상과 2차례의 고위급 회담을 거쳐 2007년 4월 최종 타결되었다. 수산분야 협상에서는 명태, 민어, 고등어 등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하여 최장 15년까지 이행기간 부여와 TRQ 도입을 통해 민감성을 반영하였고, 미국의 고관세 품목인 참치 통조림(35%)에 대한 단계적인 관세철폐와 양식산 활넙치 체장제한을 해제하는 등 향후 수출 확대의 길을 열었다.

3) 한-EU FTA

한·EU FTA는 2007년 5월 협상 출범 이후 8차례의 협상을 거쳐 2009년 10월 15일 브뤼셀에서 가서명이 이루어졌으며 내년 상반기 정식서명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 수산분야 협상은 우리측의 민감품목 보호에 중점을 두되, 우리 수산업의 수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였다. 오징어, 민어, 명태, 고등어 등 생산자가 많거나 대 EU 수입이 많은 품목은 현행관세 유지 또는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도록 하였다. 한편, 우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자유 무역협정(FTA)의 일종으로서 상품·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

리축 수출이 많은 다랑어류, 대구, 바지락 등 대 EU 수출액의 95%에 대해서는 EU측 관세(11%)를 3년내 조기철폐토록 함으로써 유럽대륙에 우리수산물의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다.

4) 한-인도 CEPA

한·인도 CEPA는 2006년 2월 협상개시 이후 2008년 9월 실질적 타결을 이루었으며 2009년 2. 9일 인도 뉴델리에서 가서명이 이루어졌다. 인도와의 협상은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냉동갈치, 냉동꽃게, 냉동새우 등 대인도 주요 수입품목 대부분(수입액 기준 82.9%)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한·인도 CEPA는 우리나라가 기존에 체결한 여타 FTA에 비해 낮은 개방수준으로 타결되어 국내 농수산업에 미치는 충격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5) FTA 대응방안

FTA를 통해 관세가 인하되면 외국산 수산물의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수산업은 최근 고유가 및 자원고갈 등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수산물 수입이 증가할 경우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정부는 수입 증가시 국내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들은 관세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인하하는 등 보호장치를 강구하고 있다.

FTA는 또한 수산물 수출 확대의 기회도 제공한다. 현재 협상이 중단된 일본은 우리 수산물 수출시장의 60%를 점유하는데 FTA 협상이 재개될 경우 수입쿼타(IQ) 및 과도한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을 완화하여 우리 수산물 수출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지역무역협정과 윤상린, 박정훈, 이덕민 사무관)

2. 국제 수산기구 및 양국간 협력 강화

가. 국제수산기구 협력

2009년도에는 해외식량자원의 지속적 확보차원에서 수산자원외교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리어선이 조업하고 있는 수역을 관할하고 있는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남태평양과 북태평양에서 신규로 설립중인 지역수산관리기구의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UN 및 FAO 등의 어업관련 국제규범 논의에도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지역수산관리기구를 통한 자원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는 유엔 공해어업협정에 2008년 3월 2일자로 가입함에 따라 미가입기구인 남동대서양수산기구 및 남인도양수산협정의 조속한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최대 참치어장인 중서부태평양에서 지속적인 참치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불령 폴리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제6차 연례회의에서 우리나라 업계의 이해를 반영하는 자원보존 관리조치가 채택될 수 있도록 민·관·학계가 참여하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협상대책단을 중심으로 관련 조업국 및 연안국과 적극적인 교섭을 할 계획이다.

또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에 중서부태평양 참치자원보호를 위한 연구기금을 2009년도부터 5개년간 10억 원을 기여함으로써 책임있는 어업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UN, FAO 및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의 불법어업 및 저층어업관련 규제논의에 적극 대처하여 기존 조업중인 우리나라 어선이 계속 조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국제수산기구회의를 국내에 유치하여 우리나라의 수산외교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기여하는 어업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나갈 계획이며, 2009년도에는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북서태평양저층어업관리회의, 아시아태평양수산위원회 집행이사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국제기구과 사무관 김기환, 안치국, 최국일)

나. 양국간 어업협력 강화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연근해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조업활동 지원을 위해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수산협력을 강화하고, 원양어선의 조업수역 확보를 위한 대외 어업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일, 한·중, 한·러 어업협정의 안정적인 이행을 통해 적정한 어획할당량을 확보함과 아울러 조업수역 등 조업조건을 개선할 것을 적극 추진하고, 한·중·일 3국간 자원조성 및 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원양어선의 주요 입어국인 러시아, 중서부태평양 제도서국, 서부 아프리카 연안국 등에 대해서는 고위급 수산당국자의 초청, 수산과학·기술 전문가의 상호교류를 통해 전통적인 어업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고 아울러, 연안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양수산분야에 특화된 경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도에 태평양 도서국 및 아프리카 연안국에 대해 400백만 원 상당의 물자를 공여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 참치어업의 주요 어장인 중서부태평양 도서국의 경제협력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PNA(Parties to the Nauru Agreement, 나우루협정당사국) 8개국(파푸아뉴기니, 마이크로네시아, 키리바시, 마셜군도, 나우루, 솔로몬 아일랜드, 투발루, 팔라우)과의 경제협력 협의회를 개최하여 양·다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참치자원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 해양대기청과의 수산해양과학기술협력 사업을 통해 수산자원관리, 양식기술 및 해양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국제기구과 사무관 장묘인)

1) 한·일 어업협정

한·일 양국은 2009년 2월 20일 일본에서 「제11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년도 양국 EEZ내 상대국 어선의 입어규모를 940척, 60,000톤으로 합의하고, 각 업종별 조업조건 등을 결정하였다.

2009년도 총 어획할당량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으나 입어 척수는 양국이 각각 지난해보다 60척 6%가 감소한 수준으로 감척계획이 확정된 연승어업과 외줄낚시, 오징어채낚기 등 조업실적이 없는 업종을 위주로 축소 조정하여 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한편, 풍치붕수망은 조업기간을 연장(40일간)하여 러시아 수역과 일본수역에서 어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업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일본 EEZ에서의 조업이 활발한 갈치 연승어업은 갈치할당량을 전년 수준인 2,080톤으로 3년간 유지하되 어기를 3.1~익년 2.28로 조정하고 향후 3년간 안정적 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GPS 항적기록 보존이행은 당초 2009년 실시 예정이었으나, 3단계 [(‘09년에 선의의 피해방지 등을 위한 실시요령 마련, ’10년에는 모든 업종 시범실시(위반시 경고 및 계몽), ’11년에는 전업종 본격실시(위반시 나포)] 로 실시키로 함에 따라 우리 어업인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내의 해양생물자원 중 2010년의 어획할당과 관련한 어종의 어획동향자료, 자원상태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한·일 해양생물자원전문가 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양국 어선간 안전 조업질서 유지 및 해상에서의 어선사고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민간어업자 단체에 대한 적절한 지도·지원 등을 통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향후 어업교섭 대책으로는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어획할당 대상어종이 과도하게 세분화되지 않도록 하고, 어업별 조업실태 조사결과와 관련 어업인·업계·전문가 등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력업종(어종) 위주의 입어교섭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표 4-3-11〉

2009년 한·일 양국 EEZ 입어동향

(단위 : 척, 톤, %, 2009년 10월 말 기준)

구 분	합 의 사 항		어 획 실 적		
	척 수	할당량	척 수	어획량	소진율
한국어선	940	60,000	411	9,904	16.5
일본어선	940	60,000	105	6,688	11.1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교섭과

(어업교섭과 사무관 김옥식)

2) 한·중 어업협정

한·중 양국은 2009.11.6 중국에서 『제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입어규모 및 조업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양국은 현재의 입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까지 한국과 중국의 입어규모와 어획할당량을 각각 1,600척, 6만톤으로 하는데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2010년도 상호 입어규모 감축계획을 보면 중국은 금년보다 50척, 2,500톤을 감축한 입어어선 1,750척, 어획할당량 67,500톤으로 확정하고 한국은 어획할당량만 2,000톤 감축한 입어어선 1,600척, 어획할당량 66,000톤으로 확정하였다.

또한 양국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EEZ에서의 중국어선에 의한 불법어업이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내년부터 어획물운반선 관리감독강화 및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새로운 조치사항에 대해 협의 추진키로 하였다

그리고 어획량 허위보고시 처벌 대상자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선장이 직접 일일어획실적을 보고토록 개선하고 오징어채낚기어업의 집어등 광력을 현행 180kw에서 141kw이하로 제한하여 어획강도를 완화토록 입어절차규칙을 개선키로 하였다

또한 해양생물자원분과위에 어종별 어획할당제 확대방안 논의를 위임하여 우리수역에서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원관리와 중국어선에 대한 어획할

당량을 어종별 자원수준에 맞게 제한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였다.

〈표 4-3-12〉

2009년 한·중 양국 EEZ 입어규모

(단위 : 척, 톤, %, 2009년 9월 말 기준)

구 분	합 의 사 항		어 획 실 적		
	척 수	할당량	척 수	어획량	소진율
한국어선	1,600	68,000	167	2,508	3.7
중국어선	1,800	70,000	1,361	7,932	11.3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교섭과

(어업교섭과 사무관 김학기)

3) 한·러 어업협정

2008년 9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한·러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에게 러시아수역 명태쿼터를 과거 4만 톤 수준으로 증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한·러 IUU 어업방지 협정 조기체결과 연계하여 우리측 요구사항 수락의사 표명하였다.

2008년 10월 러시아연방 정부는 당초 제17차 한·러어업위원회에서 합의된 명태쿼터 20,500톤에 추가로 8,000톤을 배정하므로써 총 28,500톤의 명태쿼터를 확보하였으며, 해외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정상외교의 결실로 평가되고 있다.

러시아연방 정부의 관심사항인 한·러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방지 협정체결에 대하여 우리정부는 러측에 협력하면서 러시아수역의 명태 등 어획쿼터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09년 1/4분기에 한·러 IUU어업방지 협정 서명을 위한 추가 실무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2009년 중 서울에서 개최예정인 제19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내년도 어획쿼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며, 민간차원의 어업협력 사업도 더욱 활성화 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표 4-3-13〉

2009년 러시아 EEZ 조업 계획

(단위 : 톤, 척)

어종별	조업수역	쿼터	조업기간	조업척수	어구
합계		55,473		84척	
명태	북서베링해	39,000	1. 1~2. 28, 5. 16~12. 31	12척	중층트롤
대구		119			
청어		736			
대구	북서베링해	2,575	4. 10~11. 30	4척	저연승
가오리		800			
가자미		300			
꽂치	남쿠릴	7,393	7. 15~10. 20	18척	붕수망
오징어	연해주	4,500	5. 1~10. 31	50척	채낚기
복어		50			
		55,473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정책과

(원양정책과 서기관 박성우)

3. 남북수산협력 사업 추진

남북수산협력사업은 2005년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개최시 서해 공동어로 등 5개 항목에 합의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서해 NLL 문제 및 북핵문제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거두지는 못하고, 2007 남북정상선언('07.10.4, 평양)으로 그동안 남과 북이 추진하여온 다양한 남북수산협력사업이 실현 가능한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

2007 정상회담 이후 제1차 남북총리회담('07.11.14~16, 서울), 제1차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07.12.4~6, 서울), 제1차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07.12.14~15, 개성)를 연이어 개최하여 2008년 중에 북측 동해수역 남측어선 입어추진과 수산물 생산·가공·우량품종 개발, 양식분야 등 수산협

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08년 접어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남북수산협력사업이 여전히 진전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 남북 당국간 기 합의사항인 서해 공동어로 및 우리어선의 북측 동해수역 입어, 수산물 유통·가공 및 기술협력 등 남북수산협력 전반에 관하여 이행준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관계기관·단체 및 전문가, 업계 등과 세미나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NGO 등 국제기구를 통한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등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남북수산협력사업은 남북관계 상황, 북측 수용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남북협력사업 추진 여건이 마련될 경우 호혜적인 남북수산협력사업으로서 남북 상호간 실질적 효과가 있는 실용적 남북수산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남북어업인들의 공동이익을 실현하여 나갈 계획이다.

(어업교섭과 사무관 정상윤)

4. 원양어업 육성

가. 원양어업의 경쟁력 강화

2009년도에는 원양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수산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원양산업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어업인프라 확대를 통해 매년 70만톤 이상의 원양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남태평양, 아프리카 등 연안국과 정기협의회를 개최하여 연안국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등 맞춤형 자원외교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어장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원양어업에서 원양산업으로 외연을 확대하여 해외식량자원 거점 확보를 위한 해외수산시설 투자를 실시하고, 원양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요 연안국에서 원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지교민을 명예수산물관으로 위촉하여 연안국의 각종 수산정책 및 투자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원양정책과 사무관 임태훈)

나. 해외어장의 지속적 확보

1) 북양트롤

명태를 어획할 수 있는 유일한 어장인 러시아수역 명태쿼터 확보를 위하여 양국 고위급 회담을 통한 수산외교를 강화하여 어업협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2009년 12월 제19차 한·러 어업위원회를 통하여 우리어선의 안정적인 조업에 필요한 정부쿼터를 확보하는 한편, 러시아와 외국과의 협상결과에 따라 쿼터잔량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 교섭할 계획이다.

또한 합작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러시아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고, 러시아의 일방적 조업규제에 대한 우리 조업선 보호를 위해 조업규제 소위원회에서 조업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며, 민간협력사업 및 수산과학기술 분야 교류확대 등 양국의 어업협력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러측의 관심사항인 한러 IUU 어업방지 협정체결 추진 및 수산물가공공장, 어선조선소 진출에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2) 해외트롤어업

뉴질랜드수역과 인도네시아수역을 중심으로 조업중인 태평양 트롤어업은 최근 연안국의 자원 자국화 정책에 따라 어업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기존어장의 지속적 유지확보와 병행하여 남태평양 동부 공해 “전갱이” 어장 개발 등 새로운 어장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서부아프리카 및 앙골라수역, 남서대서양공해 및 포클랜드수역에 조업중인 대서양 트롤어업은 연안국의 조업규제 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

고 있으나, 어업협정 체결 등을 통한 해외어장의 안정적 확보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원양정책과 서기관 박성우)

다. 원양업체 경영 지원

해외 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원양어업의 경영안정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74년부터 원양 출어경비 일부를 영어자금에서 공급하기 시작하였으며, 1992년부터는 연근해어업과 달리 원양어업에서만 특별히 소요되는 입어료, 항만 제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융자금인 ‘해외자원생산지원자금(2004년 ‘원양어업경영자금’으로 명칭 변경)’을 신설하였으며,

원양어업 출어자금 운용규모는 2008년도에는 2,280억원(원양어업경영자금 1,480, 영어자금 800)이었으나, 2009년에는 400억원 증가한 2,680억원(원양어업경영자금 1,480, 영어자금 1,200)을 원양어업 출어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원양정책과 사무관 권오덕)

라. 노후 원양어선 신조 대체

2007년 말 현재 우리나라 원양어선 387척 중 21년 이상 노후선이 263척으로 노후선 비중이 68%에 이르고 있고, 선박 노후화는 경영비 상승은 물론 냉동능력 저하에 따른 어획물의 품질하락으로 이어져 제품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원양어업중 참치어업은 횡감용 및 가공용 참치를 주로 태평양 중서부수역에서 연간 약 30만여 톤을 생산하여 원양어획물 수출액의 51%를 점하고 있는 수출주력업종이며, 또한 참치류의 자원은 대체로 안정상태를 유지하는

등 조업여건이 타 업종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다.

위와 같이 원양어업 중 경쟁력이 있고 수출전략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참치어업을 주력업종으로 육성하고,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수산발전기금에서 노후원양어선 신조대체 사업비를 반영하여 2004년도에는 115억원 사업비로 선망어선 1척을 건조하고 2006년도에는 2개년 사업으로 사업비 149억원을 확보하여 선망어선 1척을 건조하였다.

동 사업의 추진으로 향후 WTO/DDA 협상결과에 따라 어선 건조에 대한 보조금의 감축 및 폐지 이전에 생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2008년도에는 저선령 중고선 3척(24억원)을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엔화가치 상승 및 일본 참치연승어선의 까다로운 수출허가 절차로 1척만 도입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참치선망어선 1척(1차년 소요예산 24억원)의 신조자금과 저선령 참치연승어선 2척(16억원)의 도입자금을 융자 지원 할 계획이다.

(원양정책과 서기관 박성우)

마. 해외 신 어장 개발

최근 연안국의 자원 자국화 정책과 공해 조업규제 등 국제 어업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특히 21세기 들어 공해 수산자원 관리는 공해자유의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나 지역 수산기구의 분할 관리시대로 정착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정세에서 지속적인 원양어업을 유지하고, 공해어장에 대한 장기적인 이용을 위하여 해외어장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국제질서에 부합된 환경친화적인 어구·어법개발, 첨단장비를 통한 정확한 자원량 파악 등 종합적인 자원조사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2009년도 자원조사는 3개 수역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대상 수역에 대해서는 경제성 분석 및 예비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자원조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현지 공관을 통한 주요연안국과 입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

진하고, 새로운 어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사전 어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해외어장 진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원양정책과 서기관 박성우)

5. 수산물 수출 진흥 및 수입관리

가. 수산물 수출 진흥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은 1988년 약 20억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하여 국가 전체수출 금액의 3%를 차지하는 국가 중요 수출 품목이었다. 그러나 1988년을 정점으로 감소를 시작해 2000년 까지 15억달러 전·후의 수출로 국가 전체수출 금액의 0.9%를 유지해 왔으나, 국가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국가 수출증대와 중국, 태국 등 신흥 수산물 수출국가의 출현과 어업생산 기반 약화 등 국내외 수출환경 악화로 2001년도에 12억달러대로 감소한 이래 매년 11억\$~12억\$ 내외의 정체를 보이고 있으며 총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수산물 수출 비율도 2006년 이후 0.3%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으나, 2008년 수산물수출실적은 14억55백만불로 2007년 12억26백만불에 비해 18.7% 증가하여 2000년 이후 최고 실적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9년 9월까지의 수출실적은 1,017백만달러로 2008년도 동기의 1,046백만달러에 비해 2.8%나 소폭 감소하였다. 이렇게 수산물 수출이 감소한 이유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소비감소와 환율하락, 원양 수산물의 생산감소와 어가하락에 기인하고 있다. 주요어종별로는 고등어 생산증가와 전복, 넙치 등 수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참치, 오징어 등은 수출이 감소하였다.

수산물 수출은 WTO협상의 진전과 함께 각국과의 FTA협정 체결 등 국제무역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수출용 원자재의 부족, 수산인력의 감소 및 인건비 상승, 국내수산물 소비의 증가 등 국내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하고 있고, 최근에는 유가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및 동남아국가와 일본의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우리의 수산물 수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 되는 가운데 2009년도 수산물 수출 진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가공형 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수출 수산물 원료 구매 지원, 수출 전문 클러스터화 및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가공·유통업이 통합된 안전하고 연속적인 수출여건을 마련하여 추진코자 한다.

국내 공급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 우수수산물 수출을 위한 수산물 생산, 가공을 하나로 연결하는 지역별 소규모 수출단지 육성 및 동북아 수산물류무역 중심기능 선점을 위하여 '09~'12년까지 1,372억원을 투자목표로 '09년에는 기본설계비 등 30억원을 지원하여 부산 수산물류기지내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 단지” 사업을 착수하고, 수출 수산물에 대한 원료구매 및 시설현대화 자금 1,400억원을 저리 융자지원하는 우수수산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원초김, 가공김의 이물질제거로 김품질 향상을 통한 수출인프라 구축을 위해 6억원을 지원 68대의 기기를 업체에 지원코자 한다.

둘째 해외 마케팅 다변화를 위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현지 주류층을 타겟으로 지역 축제 등과 연계한 한국식품 로드쇼를 개최하여 수출증대와 연계시키고 수출시장 다변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수산박람회 등의 참가를 위해 13억원을 지원하여 국제수산 전문 박람회 8회, 로드쇼 및 판촉전 5회를 통하여 수출 확대를 모색하는 한편, 해외 우수바이어 초청지원 강화를 통한 수출업체 생산현장 견학 및 수출 상담회 개최도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우수수산물에 대한 해외홍보사업을 위해 3억원을 지원하여 재외공관 및 수입바이어에 대한 수출카탈로그 송부, 해외수산전문지, 공항광고 등을 통한 우리수산물 이미지 제고와 수출여건을 조성하고, 수출업자에게 해외시장 정보 조사·제공을 위해 1억원을 지원하여 수출에 유리한 핵심전략

품목 정보조사, 해외정보 심층조사, 월간 수출입·가격 동향 등 주요 이슈를 E-mail, 홈페이지 및 책자배부 등을 통해 관련 업체에 매일 제공할 예정이다.

넷째 상호 정보교환을 위한 수출 주력품목 및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상호 수출정보 교환 및 수출정책 의견 수렴을 위한 품목별 수출정책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수출촉진 방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각종 지원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섯째, 일본의 수산물 수입할당(IQ, Import Quota) 제도에 대하여 한·일 무역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수요자 할당 김에 대한 수입대행사 제도와 보증금 폐지, 다시마 조제품의 쿼터량 소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등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통상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원양정책과 사무관 전우진)

나. 합리적인 수입수산물 관리

한-아세안 FTA 체결에 따른 새우류, 갑오징어 등 5개 품목, 9,300톤에 대한 관세율할당(TRQ : Tariff Rate Quota) 제도 이행을 위해 2009년도 한-아세안 관세율할당물량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TRQ물량의 수입권공매 절차를 통하여 공매납입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TRQ 품목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관리·운영함으로써 교역당사국간의 안정적인 수산물 통상협력을 원활히 할 계획이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을 기초로 우리나라에서 수출·입되는 수산품목에 대한 품목분류(HSK)를 정비하고, 수입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에 대비하여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도입된 조정관세 품목의 적절한 운용으로 국제교역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계획이다.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 및 유관 관련자에게 수출입통계를 월별로 제공하여 수산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수산통계행정 구현을

통한 수산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수산물은 신선도와 품질 및 생산시기 등에 의하여 가격 차이가 다양하여 실제 수입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사례가 있음에 따라, 수산물의 품명 규격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여 2005년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 활홍민어·북어·조미오징어 등 45개 수산물 품목에 대한 품명규격 표준화 작업을 완료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09년도에는 수입수산물의 저가신고 근절을 위해 저가신고 우려가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주요 도매시장과 수입국 현지 가격정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공조체제 유지를 통해 투명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원양정책과 사무관 남현수)

2009년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9년 12월 일 인쇄
2009년 12월 일 발행



발행·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편집·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인쇄·거 성 출 판
☎ (031) 421-6063

<비매품>

